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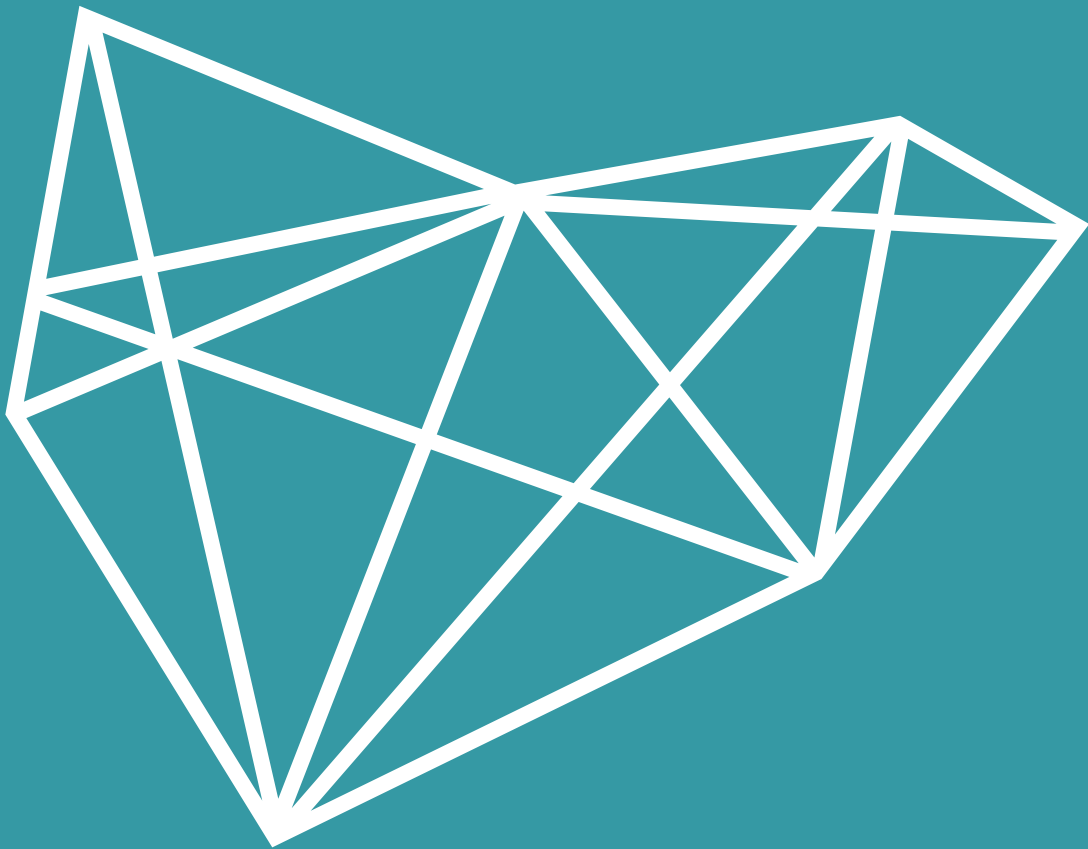
발간 번호

76-6480000-000313-01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2021~2040



경상남도
GYEONGNAM

CONTENTS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초

10	제1장 계획의 개요
10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5	제3절 계획의 추진체계 및 일정
20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20	제1절 지역의 기초현황
35	제2절 경남의 여건 변화
47	제3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66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제2편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94	제1장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94	제1절 비전 및 목표 수립 방향
98	제2절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104	제2장 경남미래2040 계획지표
104	제1절 핵심지표
105	제2절 부문별 지표

제3편 경남미래2040 전략 계획

112	제1장 공간구조 전략
112	제1절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120	제2절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128	제2장 미래 지향 혁신사회
128	제1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135	제2절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142	제3절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152	제3장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152	제1절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157	제2절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162	제2-1절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168	제3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176	제4장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176	제1절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183	제2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192	제5장 생명 존중 안전사회
192	제1절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198	제2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CONTENTS

제4편 경남미래2040 부문별 계획

208	제1장 지역 산업	430	제5장 생활환경
208	제1절 농업(농산촌)	430	제1절 주거
235	제2절 어업(어촌)	447	제2절 도시재생
246	제3절 지역 산업	464	제3절 스마트시티
257	제4절 과학기술	478	제4절 상하수도
279	제5절 산업단지	486	제5절 보건의료
		501	제6절 사회복지
294	제2장 민생경제·일자리	515	제7절 인구정책
294	제1절 민생경제	527	제8절 여성가족
320	제2절 일자리	539	제9절 교육
		554	제10절 체육
334	제3장 관광·문화	568	제6장 지역자원
334	제1절 관광	568	제1절 수자원
348	제2절 문화	574	제2절 토지이용
		585	제3절 에너지·자원
370	제4장 교통·물류	600	제7장 환경보전·관리
370	제1절 교통망	600	제1절 환경문제·관리
390	제2절 항만·물류	611	제2절 경관계획
415	제3절 스마트·정보인프라	620	제8장 안전·방재
		620	제1절 안전·방재
		634	제9장 남북외교
		634	제1절 남북외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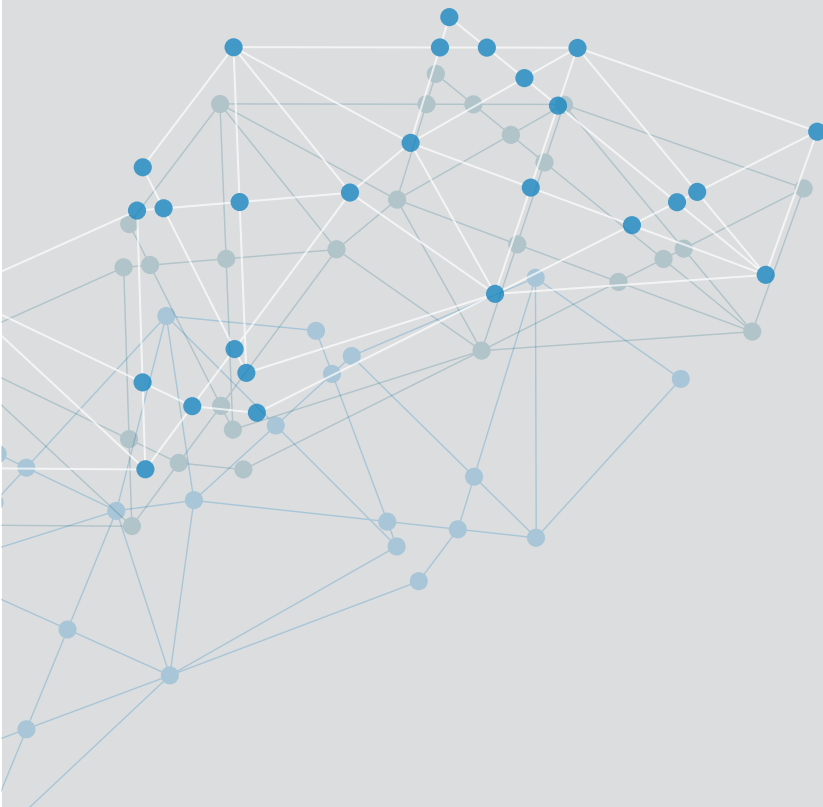
제5편 계획의 집행 및 관리

648	제1장 행정계획
660	제2장 재정계획
676	제3장 투자·재원조달

제6편 시·군 발전 방향

686	제1장 서북부권	722	제3장 동북부권
686	제1절 합천군	722	제1절 김해시
689	제2절 산청군	727	제2절 밀양시
693	제3절 함양군	732	제3절 양산시
697	제4절 거창군	736	제4절 의령군
		739	제5절 창녕군
702	제2장 서부권	746	제4장 동부권
702	제1절 진주시	746	제1절 창원시
707	제2절 사천시	750	제2절 통영시
711	제3절 남해군	754	제3절 거제시
714	제4절 하동군	757	제4절 함안군
		762	제5절 고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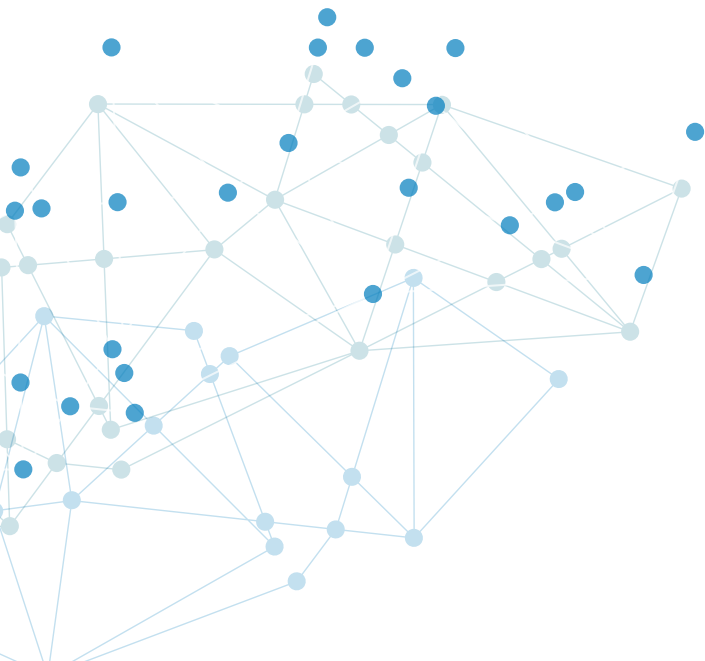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편

계획 수립의 배경 및 기초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계획의 개요

-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 제3절 계획의 추진체계 및 일정

제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수립의 배경

1) 국토의 지속가능성 향상

● 국토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필요성

- 미래 20년간 국토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관리를 위한 비전 및 목표 수립이 필요하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구체적인 기조와 방향성 제시
 -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국토의 백년대계 실현을 지향하며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를 비전으로 6개의 핵심전략 제시¹⁾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종합계획 필요
- 인류의 보편적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발전 추구
 -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정비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또한 UN 등의 세계기구에서 제시하는 인류의 보편적 평화와 안전을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적 책무가 존재

● 미래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한 선제적 국토관리 정책 구상

- 세계 글로벌 경쟁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국토관리의 변화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단위의 공간 수립 필요
 - 세계 글로벌 경쟁 체제가 과거 국가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계획 수립 필요
 - 인구감소, 저성장 등의 국가적·세계적 미래변화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변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기후변화, 감염병 등 미래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하고 국민에 안전한 국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국토관리 정책 구상 및 광역지자체의 종합계획 필요
 -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차원의 역량 강화 마련이 필요하며, 정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 체계 마련 필요

1) 국토교통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2) 경상남도의 목표 및 전략의 필요성

● 경남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비전 제시

-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경남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은 경남도의 책무에 해당
 -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정·비법정계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함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미래 20년의 경상남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남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 최근의 장기발전계획은 과거와 같이 관 주도의 비전 수립에서 벗어나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역할로 변화하고 있음
 - 도민의 바람과 요구를 바탕으로 경남도의 여건 변화, 국가적·세계적 발전 방향성에 부합하는 경남도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필요

●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경남의 지향점 제시

- 국가적·세계적 트렌드에 따른 경남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남의 비전 및 목표 수립 필요
 - 전 세계가 새로운 글로벌 경쟁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경남이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마련 필요
 - 국내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에 부합하고 경남의 강점을 강화하기 위한 장기발전전략 수립 필요

● 뉴노멀 시대²⁾에 경남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남 맞춤형 전략 수립 필요
 - 경남은 2017년 인구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 특히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경남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제시가 필요한 시점
- 저성장시대에 대한 대비 전략 수립 필요
 - 200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국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
 - 2010년대 국내 경제 침체가 본격화되고 조선업 및 자동차·기계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경남산업구조에 충격이 가속화되고 있음
 -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성장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남 경제·산업의 전환이 시급함

2)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기준 또는 표준.

2. 계획의 목적 및 수립 방향

-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2040 경상남도 비전 제시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은 과거 종합계획과 달리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수립하고자 함
 - 과거 종합계획 분석과 상위 비전 및 목표를 근간으로 실천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
 -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경남의 미래 변화, 국가적·세계적 미래 메가트렌드를 반영한 2040년도 경남 미래비전 수립

〈그림 1-1-1〉

2040 경상남도
미래비전 수립 방향



- 경남만의 새로운 핵심 가치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분야별 과제 마련
 -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래 공간구조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장기종합계획 마련
 - 부문별(경제, 산업, 사회, 관광, 도시, 환경 등)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를 통해 계획의 실행력 강화
-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18개 시·군의 발전 방향 제시를 통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정합성 확보 및 추진 동력 강화
 - 18개 시·군과 경남의 비전과 가치, 추진전략을 공유하여 시·군의 장기발전계획의 정합성 및 연속성 확보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계획의 성격 및 법적 근거

● 국토기본법에 따른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상남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국토기본법」 제6조 및 제1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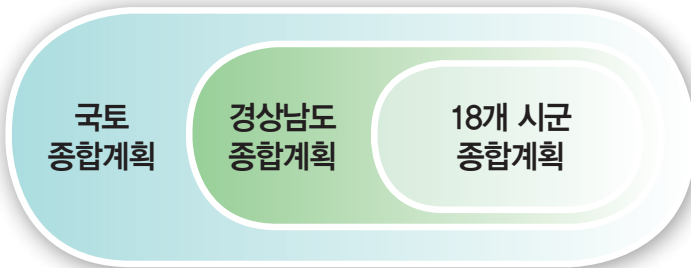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 ① 이 법에서 “국토계획”이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할 때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제13조(도종합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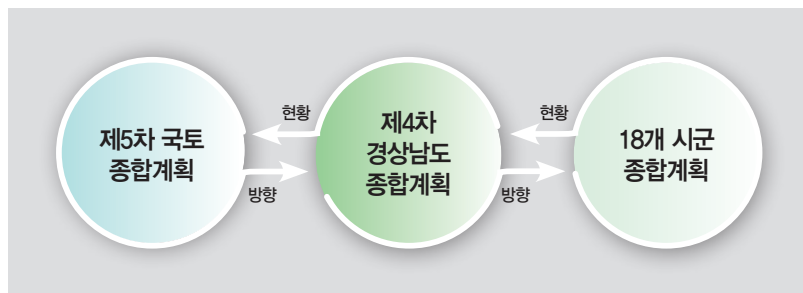
- ① 도지사(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기간 도래에 따라 법정계획 의무사항 준수



● 경상남도 미래비전 및 체계적인 공간구조 수립

-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국토 발전 방향을 반영하고 시군의 지침서 역할로서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립
- 경남의 2040년 미래비전 수립을 통해 경남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미래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제시 필요



2. 계획의 범위

- 계획연도 : 2021~2040년
 - 계획 기간의 비전 설정 및 부문별 대응 전략 수립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필요 시 광역권으로 범위 확장)

〈그림 1-1-2〉
경상남도 지도



- 내용적 범위
 - 경남 미래비전 및 핵심 가치 발굴
 - 경상남도 공간구조계획 수립
 - 분야별 중장기계획 분석
 - 경남지역 특화자원 및 발전기반 분석
 - 선도 분야, 신개척 분야 선정
 - 전략 분야별 사업 아이템 발굴 제시
 - 분야별 핵심 아젠다 및 국토 이슈를 반영한 중점과제 발굴

제3절

계획의 추진체계 및 일정

<그림 1-1-3>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추진체계

1. 계획의 추진체계

- 경상남도 & 경남연구원
 - 도종합계획 수립 주체 : 경상남도 및 18개 시·군, 경남연구원
- 도민 및 전문가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경남도민, 도내외 전문가, 민간사회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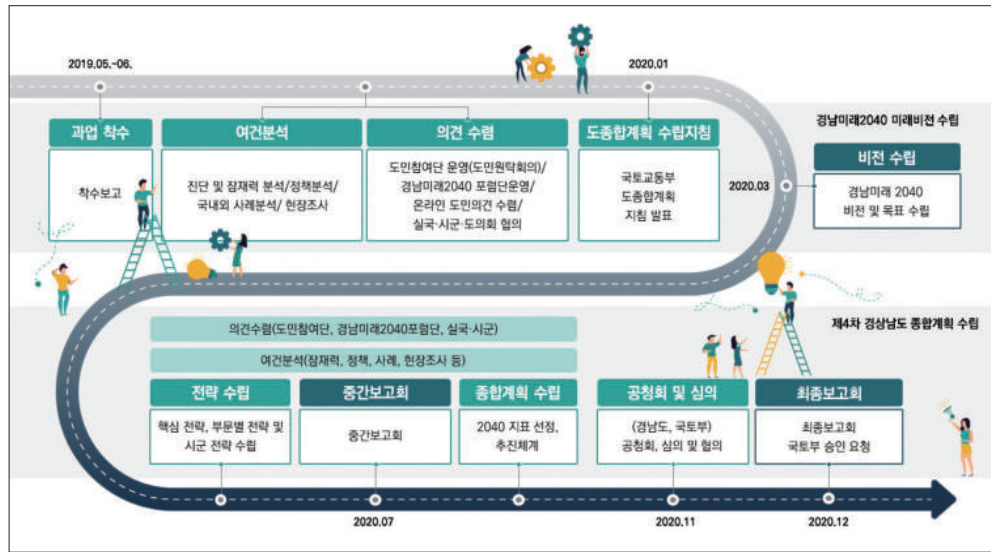


2. 계획의 추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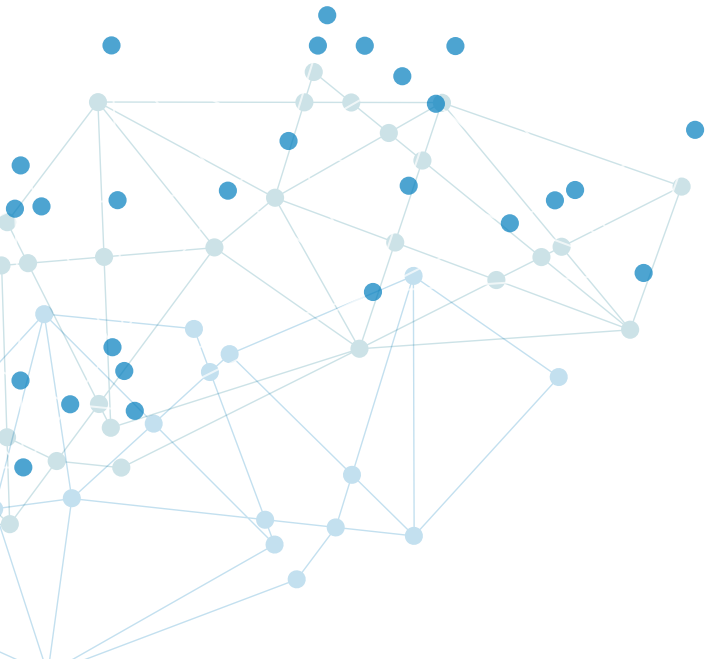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착수보고회: '19. 06. 03.
- 도민참여단 구성·운영(279명), 도민원탁회의 개최: '19. 06/10월
- 경남미래2040 포럼 구성·운영(108명), 발대식·분과회의 개최: '19. 09. 04.
- 경남도민 설문조사(1,000여명), 제2차 포럼 분과회의 개최: '19. 11. 26.~27.
-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19. 12. 12.
- 제3, 4차 경남미래2040 포럼 회의: '20. 03월
- '전략 및 부문별 계획분야' 실·국별 의견 청취: '20. 07. 21.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중간보고회 : '20. 07. 31.
- 국토계획평가협의회 회의: '20. 10. 19.~27.
- 경상남도 계획수립협의회 회의: '20. 11. 03.~13.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온라인): '20. 11. 17.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20. 12. 03.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최종보고회 : '20. 12. 16.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안) 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토계획평가분과) : '21.05.04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안)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전체회의) : '21.07.06.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안) 고시 : '21.08.

〈그림 1-1-4〉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추진 일정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 제1절 지역의 기초현황
- 제2절 경남의 여건 변화
- 제3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 내용
-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제2장

지역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지역의 기초현황

〈표 1-2-1〉 경상남도 위치

1. 지리적 여건 및 자연환경

1) 지리적 여건

- 한반도 동남단에 위치, 동쪽으로 부산·울산광역시, 남쪽으로 남해, 북쪽으로 대구광역시의 달성, 경북의 청도, 고령, 성주, 김천, 서쪽으로 전라북도의 무주, 장수, 남원, 전라남도의 구례, 광양과 접함
- 지리적 좌표는 북위 34도 29분에서 35도 54분, 동경 127도 34분에서 129도 13분에 걸쳐 있음

구분	경도 및 위도의 극점			연장거리
	방위	지명	극점	
위치	극동	양산시 웅상읍 용당리 산66	동경 129도 13분, 북위 35도 24분	동서 150km 남북 158km
	극서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산372	동경 127도 34분, 북위 35도 18분	
	극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442	동경 128도 05분, 북위 34도 29분	
	극북	거창군 고제면 봉계리 산17	동경 127도 53분, 북위 35도 54분	

자료 : 경상남도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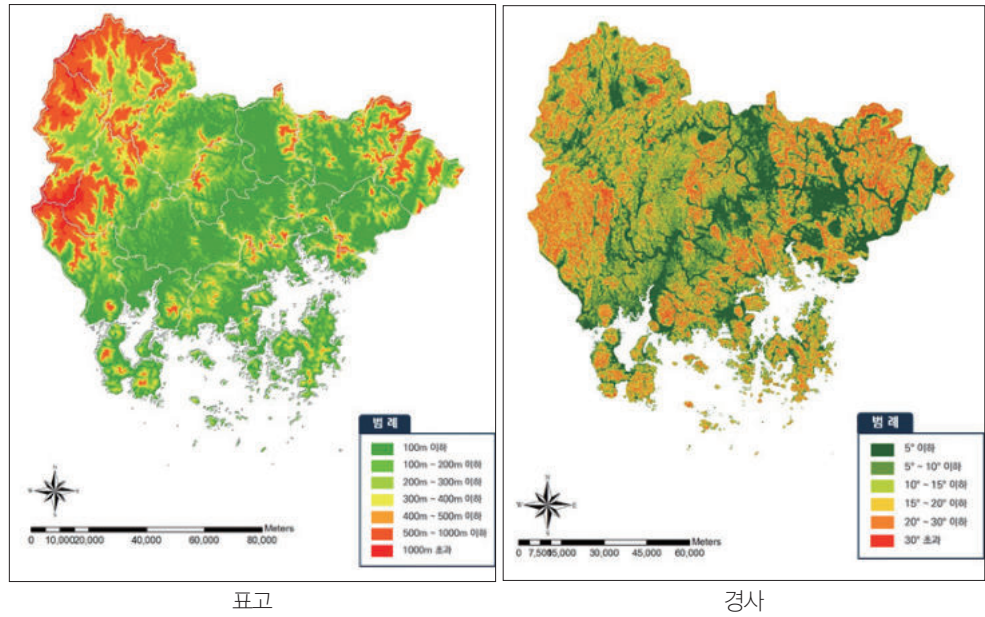
2) 자연환경

(1) 지형·지세

- 경상남도의 동쪽에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이 뻗어 있고, 중앙부에는 낙동강이 흐르며, 서쪽에는 비교적 험준한 소백산맥이 호남지방과 경계를 이루고 있음
- 지대는 표고(標高) 100m 이하의 저지대가 37%, 100~500m 지대가 49%, 500~1,000m의 지대가 12%, 1,000m 이상의 고지대는 2%에 불과하고, 동부 산악 지대는 태백산맥의 여맥(餘脈)인 천황산(1,189m), 신불산(1,209m) 등 산악들이 발달해 있음
- 중앙 저지대는 낙동강 강변 지대로 낙동강은 본도에 들어와서 각 지류를 합하여 남해로 유입됨. 하류의 김해 지방에서 삼각주 평야를 이루고 있으며, 서부 산간지대는 경남에서 가장 험준한 지역으로 소백산맥의 지리산(1,915m), 덕유산(1,614m), 백운산(1,279m) 등 고봉(高峯)이 이어 있으며, 특히 지리산 주변이 가장 험준함

〈그림 1-2-1〉

경상남도 표고 및 경사



(2) 해안 및 하천

- 수심이 깊고 출입이 심한 만입과 크고 작은 섬이 산재하는 다도해를 이룸. 총 도서는 2017년 통계 기준으로 865개로 통영시가 570개로 가장 많은 도서가 존재함

〈표 1-2-2〉

해안선 및 도서 현황 (2017년 기준)

구분	해안선(km) (도서 포함)	도서 현황				
		계(개)	유인도(개)	무인도(개)	면적(km ²)	인구(명)
창원시	324	39	5	34	2.97	416
통영시	761	570	41	529	91.39	6,681
사천시	200	43	10	33	4.84	1,064
거제시	443	73	10	63	22.08	2,981
고성군	229	28	2	26	0.60	33
남해군	358	82	3	79	1.20	130
하동군	75	30	1	29	1.50	91
소계	2,390	865	72	793	124.56	11,396

자료 : 경상남도 통계, 2017.

- 경상남도는 10개소의 국가하천과 671개소의 지방하천 등 총 681개의 하천이 입지함. 총 유로 연장은 4,178.5km로 전국 하천 30,197.6km의 13.8%를 차지함
- 지방하천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합천군이 77개, 총연장 431.8km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다음으로 진주시가 53개소, 305.6km의 연장을 차지함. 창원시는 진주와 같이 53개소의 하천을 가졌으며 연장은 246.4km로 7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km, %)

〈표 1-2-3〉

수계별 하천 현황

구분	하천 수	총연장	요개수 연장	기개수 연장	미개수 연장	개수율	
합계	681	4,178.5	4,481.8	1,919.1	2,562.8	42.8	
국가	소계	10	440.3	408.0	348.7	59.3	85.5
지방	소계	671	3,738.2	4,073.9	1,570.4	2,503.5	38.6
	창원시	53	246.4	361.2	172.1	189.2	47.6
	진주시	53	305.6	339.4	89.9	249.5	26.5
	통영시	8	24.4	33.7	4.8	28.8	14.4
	사천시	28	154.7	165.0	44.9	120.1	27.2
	김해시	28	158.9	256.6	123.9	132.7	48.3
	밀양시	46	259.9	249.6	120.6	128.9	48.3
	거제시	17	64.0	94.0	37.2	56.8	39.6
	양산시	31	151.9	125.3	71.3	54.0	56.9
	의령군	38	213.4	230.6	79.4	151.2	34.4
	함안군	28	164.1	202.7	85.7	117.0	42.3
	창녕군	33	233.7	289.2	87.0	202.2	30.1
	고성군	39	181.2	317.1	132.4	184.7	41.8
	남해군	26	72.4	99.5	20.1	79.4	20.2
	하동군	40	231.9	293.4	84.0	209.4	28.6
	산청군	46	287.4	172.2	39.6	132.6	23.0
	함양군	39	260.5	230.4	83.9	146.6	36.4
거창군	41	296.0	270.6	179.7	90.9	66.4	
합천군	77	431.8	343.6	114.0	229.5	33.2	

자료 : 경상남도 통계 2017.

2. 인구 현황

1) 총인구 및 인구변화(주민등록인구 기준)

(1) 총인구

- 경남 총인구는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2019년 3,362,553명이며, 전국 6.4%를 차지함
- 경남의 연평균 증가율은 05~10년, 10~15년 구간에서 전국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최근 15~19년은 경남의 증가율이 소폭(0.02%) 감소함
 - 05~10년도 : (전국) 0.70% (경남) 0.81% 10~15년도 : (전국) 0.40% (경남) 0.45%
 - 15~19년도 : (전국) 0.16% (경남) -0.63% 05~19년도 : (전국) 0.44% (경남) 0.44%

(단위 : 명, %)

〈표 1-2-4〉

전국 대비
경남 인구 비중 추이
(2005~2019)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05~'10	'10~'15	'15~'19	'05~'19
전국 인구	48,782,274	50,515,666	51,529,338	51,849,861	0.70	0.40	0.16	0.44
경남 인구 (전국 대비 비중)	3,160,431 (6.5)	3,290,536 (6.5)	3,364,702 (6.5)	3,362,553 (6.4)	0.81	0.45	-0.02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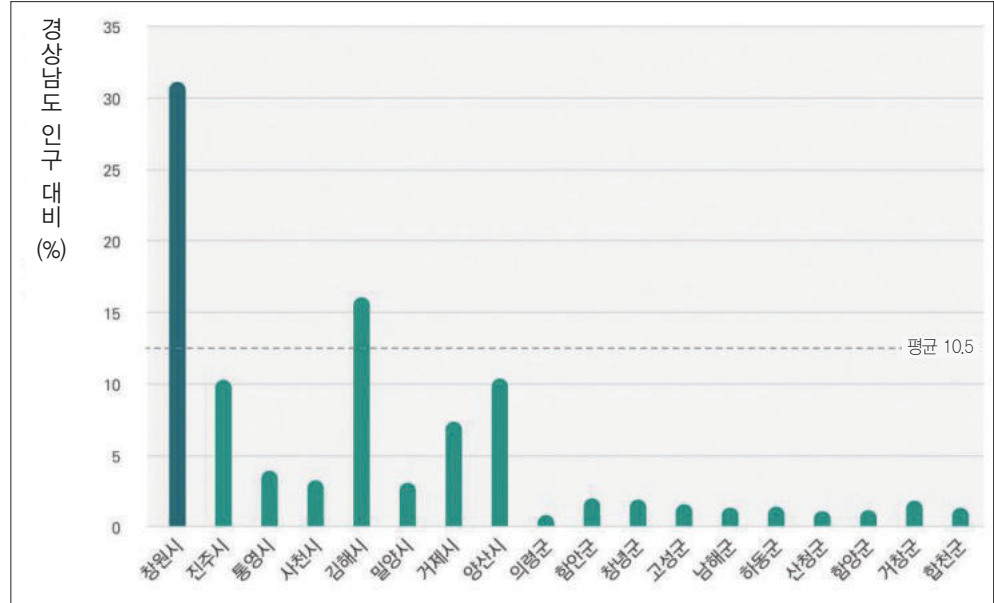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2) 시군별 인구

- 2019년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 인구의 비는 창원시(31.1%), 김해시(16.1%), 진주시(10.3%)의 순으로 나타남. 인구가 낮은 순서는 의령군(0.8%), 산청군(1.1%), 함양군(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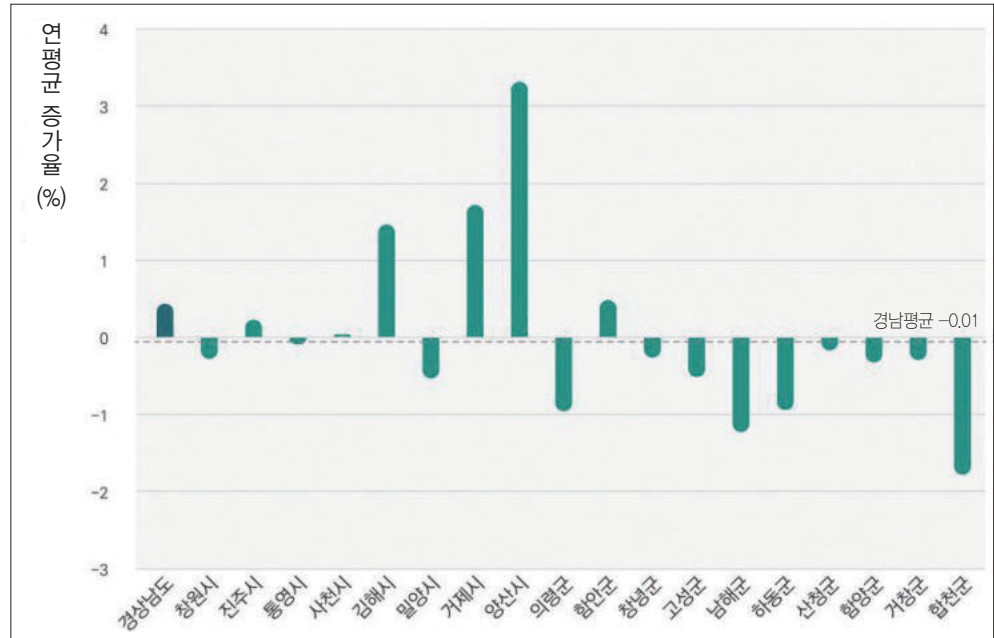
〈그림 1-2-2〉

경상남도 대비
시군별 인구비율
(2019)



〈그림 1-2-3〉

시군별
연평균 인구성장률
(2005~2019)



(단위 : 명, %)

〈표 1-2-5〉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
(2005~2019)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전체	비중	'05~'10	'10~'15	'15~'19	'05~'19
경남	3,160,431	100.0	3,290,536	100.0	3,364,702	100.0	3,362,553	100.0	0.81	0.45	-0.02	0.44
창원시	1,086,530	34.4	1,090,181	33.1	1,070,064	31.8	1,044,740	31.1	0.07	-0.37	-0.60	-0.28
진주시	336,234	10.6	335,037	10.2	344,426	10.2	347,334	10.3	-0.07	0.55	0.21	0.23
통영시	132,795	4.2	140,297	4.3	139,168	4.1	131,404	3.9	1.11	-0.16	-1.42	-0.08
사천시	111,293	3.5	114,148	3.5	115,452	3.4	111,925	3.3	0.51	0.23	-0.77	0.04
김해시	443,017	14.0	503,348	15.3	528,865	15.7	542,455	16.1	2.59	0.99	0.64	1.46
밀양시	113,636	3.6	110,479	3.4	107,896	3.2	105,552	3.1	-0.56	-0.47	-0.55	-0.53
거제시	195,609	6.2	228,355	6.9	255,828	7.6	248,276	7.4	3.14	2.30	-0.75	1.72
양산시	222,299	7.0	260,239	7.9	301,291	9.0	350,759	10.4	3.20	2.97	3.87	3.31
의령군	31,099	1.0	30,162	0.9	28,544	0.8	27,168	0.8	-0.61	-1.10	-1.23	-0.96
함안군	61,376	1.9	67,207	2.0	69,156	2.1	65,700	2.0	1.83	0.57	-1.27	0.49
창녕군	64,672	2.0	61,714	1.9	63,817	1.9	62,331	1.9	-0.93	0.67	-0.59	-0.26
고성군	56,189	1.8	57,231	1.7	55,284	1.6	52,276	1.6	0.37	-0.69	-1.39	-0.51
남해군	51,825	1.6	49,328	1.5	45,865	1.4	43,622	1.3	-0.98	-1.45	-1.25	-1.22
하동군	53,131	1.7	51,509	1.6	50,259	1.5	46,574	1.4	-0.62	-0.49	-1.89	-0.94
산청군	36,294	1.1	35,591	1.1	36,071	1.1	35,417	1.1	-0.39	0.27	-0.46	-0.17
함양군	41,535	1.3	41,197	1.3	40,339	1.2	39,637	1.2	-0.16	-0.42	-0.44	-0.33
거창군	64,735	2.0	63,421	1.9	63,232	1.9	62,179	1.8	-0.41	-0.06	-0.42	-0.29
합천군	58,162	1.8	51,092	1.6	49,145	1.5	45,204	1.3	-2.56	-0.77	-2.07	-1.78

주 : 비중은 경남 전체 인구 대비 비중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 2005~2019년 경남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0.444%로 동 기간 전국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0.437%)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2005~2019년 기간 경남도에서 인구 성장이 높은 지역은 양산시(3.31%), 거제시(1.72%), 김해시(1.46%) 등으로 나타남

(3) 도시인구

- 경상남도의 최근 10년간 도시인구와 도시화율이 함께 증가하고 있음. 반면 증가 추세는 둔화함
 - 2005년 84.4%, 2010년 84.5%, 2015년 84.8%로 지속해서 도시화율이 증가함
 - 2005~2010년 연평균 증가율은 0.83%로 나타났으나, 2010~2015년 기간에는 0.52%로 둔화함
- 비도시지역의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도는 둔화함
 - 2005년 492,480명, 2010년 540,226명, 2015년 510,908명으로 소폭 증가함
 - 반면, 연평균 증가율은 2005~2010년 0.71%로, 2010~2015년 기간에는 연평균 0.03%로 증가 속도 감소

〈표 1-2-6〉
도시인구
변화추이
(2005~2015)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05~'10	'10~'15	'15~'18	'05~'18
경남	3,160,431	3,290,536	3,364,702	3,373,988	0.81	0.45	0.09	0.50
도시인구	2,667,951	2,780,310	2,853,794	2,894,899	0.83	0.52	0.48	0.63
비도시인구	492,480	510,226	510,908	479,089	0.71	0.03	-2.12	-0.21
도시화율	84.4	84.5	84.8	85.8	0.02	0.08	0.38	0.12

주 : 도시지역은 행정구역상 도시가 아닌 국토계획법상 4개 용도지역 중 하나를 의미함. 도시인구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의미함.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각연도).

2) 인구구조

- 2019년 기준 경상남도 15세 미만의 인구는 13.2%로 전국 평균(12.5%)보다 조금 높지만, 15~64세의 인구는 70.5%로 전국 평균(73.1%)보다 낮고, 65세 이상 인구는 16.3%로 전국 평균(15.5%)보다 높음
- 15세 미만 인구는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인 15~64세 인구가 전국 평균에 비해 낮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표 1-2-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200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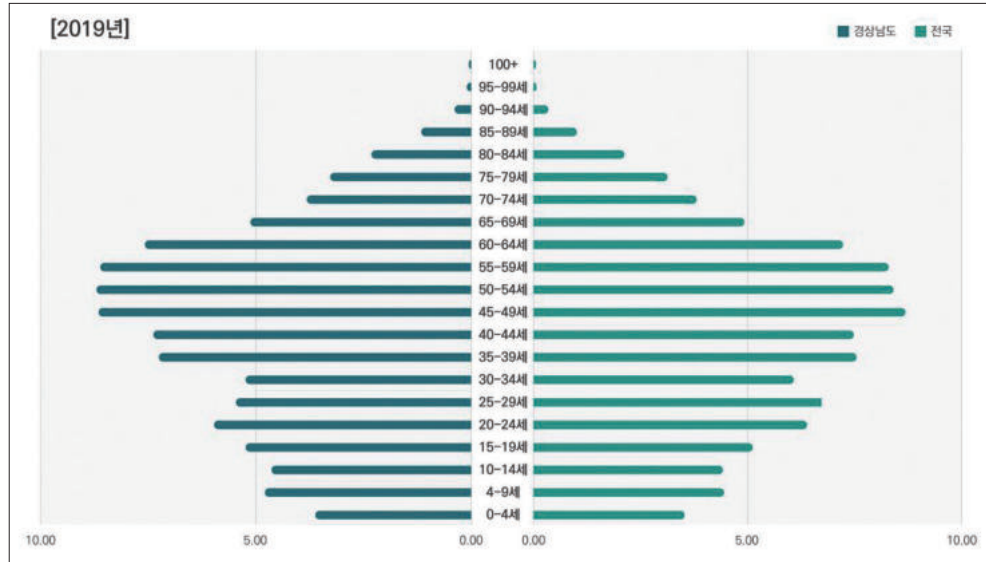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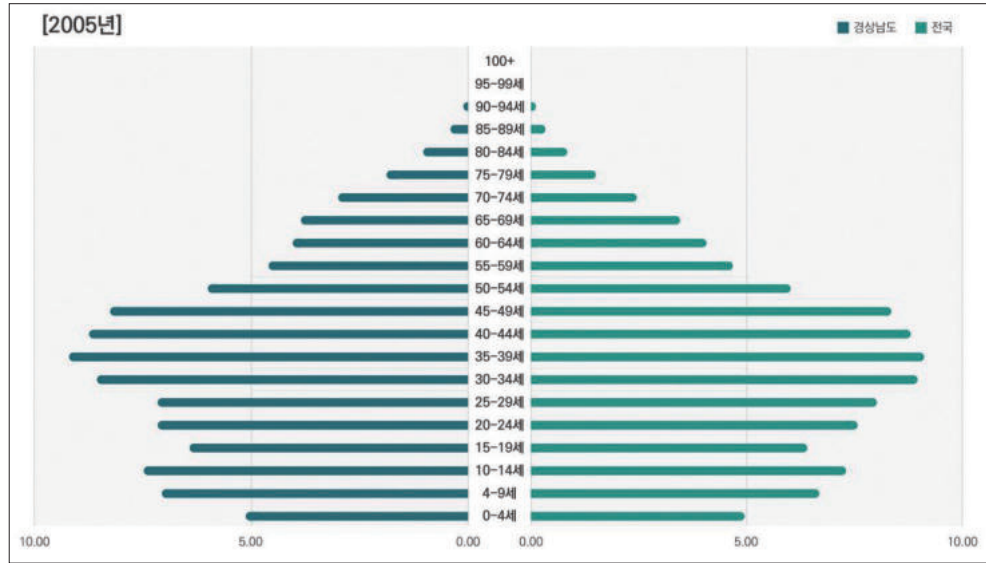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9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체 (비중)	48,782,274 (100.0)	3,160,431 (100.0)	50,515,666 (100.0)	3,290,536 (100.0)	51,529,338 (100.0)	3,364,702 (100.0)	51,849,861 (100.0)	3,362,553 (100.0)
15세 미만 (비중)	9,257,949 (19.0)	622,109 (19.7)	8,019,969 (15.9)	547,606 (16.6)	7,061,513 (13.7)	482,785 (14.4)	6,466,872 (12.5)	442,744 (13.2)
15~64세 (비중)	35,199,801 (72.2)	2,214,424 (70.1)	36,989,345 (73.2)	2,354,282 (71.6)	37,692,724 (73.2)	2,417,898 (71.9)	37,356,074 (72.1)	2,371,552 (70.5)
65세 이상 (비중)	4,324,524 (8.9)	323,898 (10.3)	5,506,352 (10.9)	388,648 (11.8)	6,775,101 (13.2)	464,019 (13.8)	8,026,915 (15.5)	548,257 (16.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그림 1-2-4〉

전국 대비
경남의 연령별 인구비율
피라미드



- 2019년 경남 시·군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15세 미만 인구에서 거제시(17.2%), 양산시(15.1%), 김해시(15.1%)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합천군(6.4%), 남해군(6.8%), 의령군(6.8%) 등 군 지역에서 낮은 비율로 조사됨
- 15~64세 생산인구는 김해시(74.3%), 창원시(73.6%), 거제시(72.7%)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합천군(55.5%), 남해군(56.6%), 의령군(57.5%) 등이 낮은 비율의 생산인구가 도출됨
- 고령인구인 65세 이상 인구는 합천군(38.2%), 남해군(36.7%), 의령군(35.7%)이 높게 도출되며, 거제시(10.0%), 김해시(10.6%), 양산시(12.7%) 등이 낮게 나타남
- 사천시, 밀양시와 모든 군 지역에서 초고령 사회³⁾에 진입

3) 초고령 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가 20% 이상.

〈표 1-2-8〉

시군별
연령별 인구
(2019)

(단위 : 명, %)

구분	15세 미만		15~64세		65세 이상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경남	442,744	13.2	2,371,552	70.5	548,257	16.3
창원시	135,929	13.0	768,660	73.6	140,151	13.4
진주시	46,407	13.5	245,028	70.6	55,899	16.1
통영시	17,346	13.2	90,163	68.6	23,895	18.2
사천시	13,937	12.5	74,560	66.6	23,428	20.9
김해시	81,955	15.1	402,968	74.3	57,532	10.6
밀양시	9,658	9.2	67,345	63.8	28,549	27.1
거제시	42,808	17.2	180,576	72.7	24,892	10.0
양산시	53,109	15.1	253,019	72.1	44,631	12.7
의령군	1,850	6.8	15,629	57.5	9,689	35.7
함안군	7,644	11.6	42,702	65.0	15,354	23.4
창녕군	5,461	8.8	38,444	61.7	18,426	29.6
고성군	4,771	9.1	31,928	61.1	15,577	29.8
남해군	2,951	6.8	24,684	56.6	15,987	36.7
하동군	3,532	7.6	27,922	60.0	15,120	32.5
산청군	2,558	7.2	20,415	57.6	12,444	35.1
함양군	3,340	8.4	23,461	59.2	12,836	32.4
거창군	6,595	10.6	38,981	62.7	16,603	26.7
합천군	2,893	6.4	25,067	55.5	17,244	38.2

주 : 비중은 전체 인구 대비 연령인구임.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각연도).

3. 지역경제 현황

1) 지역 내 총생산(GRDP)

- 전국 대비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을 기준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
- 전국 대비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비율 : 10년 6.8%, 15년 6.4%, 18년 5.8%
- 경남 지역 내 총생산(GRDP)은 명목가격 기준으로 2010년 90.2조원에서 2015년 106.6조원, 2018년 110.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10년 98.3조원, 2015년 106.6조원, 2018년 107조원으로 연평균 1.07% 성장함

〈표 1-2-9〉

지역 내 총생산 (GRDP) 추세

(단위 : 십억원, %)

구분		2010년	2015년	2018년	연평균 성장률		
					'10~'15	'15~'18	'10~'18
전국 GRDP	명목	1,327,444	1,660,844	1,900,007	4.58	4.59	4.58
	실질	1,432,684	1,660,844	1,811,590	3.00	2.94	2.98
경남 GRDP	명목	90,168	106,591	110,536	3.40	1.22	2.58
	(비중)	(6.8)	(6.4)	(5.8)			
	실질	98,297	106,591	106,993	1.63	0.13	1.07
	(비중)	(6.9)	(6.4)	(5.9)			

주 : 기준년 가격 2015년 기준.
자료 : 통계청

2) 산업구조

(1) 산업구조(실질 GRDP 기준)

- 2015년 기준연도 최근 9년간 전국과 경남의 실질 지역 내 총생산(GRDP)을 살펴본 결과 전국 대비 경남은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음
- 전국의 산업구조는 2018년을 2010년의 비중을 비교하였을 때, 1차 산업 0.4% 감소, 2차 산업 0.6% 감소, 3차 산업 1.0%가 증가로 3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 경남의 산업구조는 2010년 1차 산업 3.8%, 2차 산업 54.4%, 3차 산업 40.8%였으며, 2018년에는 1차 산업 3.92%, 2차 산업 48.63%, 3차 산업 47.44%로 1차 산업이 약 0.1% 증가, 2차 산업이 6.8% 감소, 3차 산업이 6.7% 증가함
- 경남은 전국의 산업구조 변화와 비교하였을 때, 경남의 지역 내 총생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2차 산업이 하향 폭이 더 크게 나타남. 반면 3차 산업의 증가폭이 더 높게 나타남
- 또한 전국이 1차 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반면 경남은 1차 산업의 비중이 증가함

〈표 1-2-10〉

전국, 경남
연도별 산업 비중

(단위 : %)

구분	전국			경남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2010년	2.3	37.5	60.2	3.8	55.4	40.8
2011년	2.2	37.4	60.4	3.6	54.3	42.1
2012년	2.2	37.0	60.9	3.3	53.7	43.0
2013년	2.2	36.8	61.1	3.5	52.1	44.4
2014년	2.2	36.7	61.1	3.7	50.8	45.5
2015년	2.2	36.6	61.2	3.6	50.3	46.1
2016년	2.0	36.7	61.3	3.5	50.2	46.3
2017년	2.0	37.2	60.9	3.6	49.4	47.0
2018년	2.0	36.9	61.2	3.9	48.6	47.4

주 : 1차 - A코드, 2차 - B, C, D, E,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통계청 자료 활용. 실질 GRDP 기반 산업 비중(2015년 기준).

(2) 산업별 종사자

- 경상남도의 산업별 종사자는 2018년 1차 산업 취업자가 3.3천명으로 전체 산업별 종사자의 0.2%를 차지함. 전국 평균 또한 0.2%로 1차 산업 종사자의 비율이 비슷하게 도출됨
- 경남의 2차 산업 종사자는 5,777.0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6.5%임. 전국 평균 26.0%보다 높은 비중을 보임
- 3차 산업 종사자는 경남이 63.3%로 전국 평균 73.8%에 비해 낮음

〈표 1-2-11〉

전국과 경남의
산업별 종사자
비교표
(2018)

(단위 : 명, %)

구분	계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전국 (비중)	22,234,774 (100.0)	42,324 (0.2)	5,776,919 (26.0)	16,415,531 (73.8)
경남 (비중)	1,388,302 (100.0)	3,282 (0.2)	506,683 (36.5)	878,337 (63.3)

주 :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1차 - A코드, 2차 - B, C, D, E, F코드, 3차 - 그 외).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3) 지역별 특화산업 입지계수(LQ)

- 시군별 특화산업 파악을 위해 제조업 종사자 수 기준의 입지계수(LQ)를 분석함
- 경남은 식료, 음료, 담배, 목재 및 나무 제품, 고무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 1차 금속 제조, 금속가공제품, 전기 장비, 기타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이 특화되어 있음

4. 인문 및 사회환경

1) 토지이용

(1) 지목별 토지이용

- 전국과 대비하여 경남을 살펴보면, 도시용 토지와 농업용 토지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음
- 경상남도의 2018년 지목별 토지 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 토지가 전체면적의 3.9%, 농업용 토지가 18.1%, 임야 66.3%, 기타 11.7%의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 km², %)

〈표 1-2-13〉

전국과 경남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2018)

구분	총면적	도시용 토지	농업용 토지	임야	기타
전국 (비중)	99,857.46 (100.0)	4,426.50 (4.4)	19,301.17 (19.3)	63,441.33 (63.5)	12,688.46 (12.7)
경남 (비중)	10,540.12 (100.0)	414.60 (3.9)	1,907.63 (18.1)	6,988.34 (66.3)	1,229.54 (11.7)

주 : 도시용 토지(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체육용지, 공원), 농업용 토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기타(도시용, 농업용, 임야를 제외한 토지)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 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도시지역 면적은 2,007.7km²로 경남 전체면적의 17.0%에 해당됨. 이는 전국의 도시면적 비율인 16.7%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녹지지역이 7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거지역이 11.1%, 공업지역이 7.0%, 미지정지역이 7.0%, 상업지역 1.5%의 순으로 나타남
- 전국 대비 용도지역 분포는, 경남의 주거지역 비율은 11.1%인데 비해 전국은 15.1%로 경남의 주거비율이 낮고, 녹지지역은 73.5%로 전국(71.0%)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남

(단위 : km², %)

〈표 1-2-14〉

도시지역의 용도지역 현황(2018)

구분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지역
전국 (비중)	17,788.93 (100.0)	2,683.90 (15.1)	334.64 (1.9)	1,198.13 (6.7)	12,628.46 (71.0)	943.79 (5.3)
경남 (비중)	2,007.72 (100.0)	222.22 (11.1)	29.45 (1.5)	140.20 (7.0)	1,474.58 (73.5)	141.27 (7.0)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3) 비도시지역

- 경상남도의 비도시지역은 전체지역의 83.0%를 차지하고 있음.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농림지역이 50.6%로 가장 높고, 관리지역 29.5%, 자연환경보전지역 19.8%로 나타남

- 경남은 전국과 대비하여 농림지역의 비율은 낮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농림지역의 경우 전국 55.8%, 경상남도 50.6%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전국 13.5%, 경상남도 19.9%

(단위 : km², %)

〈표 1-2-15〉

비도시지역의 용도
지역 현황(2018)

구분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 (비중)	88,496.92 (100.0)	27,222.53 (30.8)	49,351.00 (55.8)	11,923.40 (13.5)
경남 (비중)	9,808.10 (100.0)	2,895.89 (29.5)	4,961.89 (50.6)	1,950.33 (19.9)

자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현황

2) 사회간접자본시설

- 경상남도 계획도로의 최근 포장률을 살펴보면 전국 대비 포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포장률은 93.2%이며, 경남은 2.2% 낮은 91.0%를 기록함
 - 2015년부터 2018년도의 증가율을 살펴보았을 때, 전국(0.40%)과 경남(0.41%)이 비슷한 수준으로 분석됨
- 생활환경지표인 상·하수도 보급률은 전체적으로 전국 대비 경남이 낮으나 2005년 이후 최근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경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상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전국 97%, 경남 94.4%로 나타남. 2005년부터 최근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37%, 경남 0.74%로 경남의 증가율이 더 높음
 - 하수도 보급률은 2018년 기준 전국 93.9%, 경남 91%로 나타남.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 0.65%, 경남 0.95%로 경남의 증가율이 더 높음
- 경상남도의 주택보급률은 신 주택보급률 기준 2018년 110.1%로 전국 평균 104.2% 보다 높게 나타남. 주택 보급률 증가 추이 또한 경남이 전국보다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택 보급률을 살펴보면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연평균 증가율은 0.32%, 경남의 경우 0.50%로 나타남

〈표 1-2-16〉

전국과 경남의
생활환경지표 비교

(단위 : %)

구분		년도				연평균 증가율			
		2005년	2010년	2015년	2018년	'05-'10	'10-'15	'15-'18	'05-'18
도로 포장률	전국	-	-	92.1	93.2	-	-	0.40	-
	경남	-	-	89.9	91.0	-	-	0.41	-
상수도 보급률	전국	90.7	94.1	96.5	97.0	0.74	0.50	0.17	0.37
	경남	82.6	88.8	93.1	94.4	1.46	0.95	0.46	0.74
하수도 보급률	전국	83.5	90.1	92.9	93.9	1.53	0.61	0.36	0.65
	경남	76.7	83.6	88.6	91.0	1.74	1.17	0.89	0.95
주택 보급률 (신 주택보급률)	전국	98.3	100.5	102.3	104.2	0.44	0.36	0.62	0.32
	경남	100.6	104.4	106.4	110.1	0.74	0.38	1.15	0.50

자료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각연도); 환경부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각연도); 환경부(각연도); 인구주택총조사(각연도)

3) 사회복지시설

- 2018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은 총 71,228개소가 있으며 337,979명이 생활하고 있음. 전국에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남지역 사회복지시설의 비중은 11.8%, 생활인원 비중은 6.0%를 차지함
- 경남의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복지 시설의 비중이 높음. 경남의 노인복지시설이 경남 전체의 복지시설 중 99.1%를 차지함
 - 경남의 아동 시설은 0.31%, 장애인 복지시설 0.4%, 여성 복지시설 6.0%, 부랑인 시설 0.1%로 나타남
 - 경남의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은 집계되지 않음
- 경남의 복지시설 생활인원은 노인복지시설 81.0%, 장애인복지 시설 7.5%,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5.5%, 아동복지 시설 4.2%, 여성복지 시설과 부랑인 시설이 각각 0.2%로 조사됨

(단위 : 개소, 명, %)

〈표 1-2-17〉

전국과 경남의 사회
복지시설 분포현황
(2018)

구분	총계		아동복지 시설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 복지 시설		여성복지 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시설수	생활인원
전국	71,228	337,979	450	12,207	68,726	275,544	1,604	29,949	285	4,647	45	7,989	118	7,643
(비중)	(100)	(100)	(0.6)	(3.6)	(96.5)	(81.5)	(2.3)	(8.9)	(0.4)	(1.4)	(0.06)	(2.4)	(0.2)	(2.3)
경남	8,414	20,428	26	860	8,335	16,555	32	1,536	17	326	-	1,119	4	32
(비중)	(100)	(100)	(0.3)	(4.2)	(99.1)	(81.0)	(0.4)	(7.5)	(0.2)	(1.6)	-	(5.5)	(0.1)	(0.2)
비율	11.8	6.0	5.8	7.0	12.1	6.0	2.0	5.1	6.0	7.0	-	14.0	3.4	0.4

자료 : 행정안전부, 2019 한국도시통계.

4) 문화·관광자원

- 국·도립공원, 전통사찰, 온천, 해수욕장, 문화재, 골프장, 관광축제·특구, 지정관광지, 관광단지가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분류됨
- 경상남도에는 4개소(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의 국립공원과 2개소(가지산, 연화산)의 도립공원이 분포함
- 대표적인 가야문화권의 중심지역인 경상남도에는 총 1,850건의 문화재(국보, 보물, 사저, 명승 등)가 분포함
- 21개소의 지정관광지와 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2개의 관광단지가 분포함
- 시·군의 관광축제는 총 14건이며, 10월에 7건이 개최되고 있음

〈표 1-2-18〉
관광자원 분포현황

구분	개소 수	분포지역
국·도립공원	6개소	국립공원(4개소) : 지리산, 가야산, 덕유산, 한려해상 도립공원(2개소) : 가지산, 연화산
전통사찰	103개소	해인사, 통도사, 쌍계사, 표충사, 내원사 등
온천	3개소	부곡, 마금산, 가조
해수욕장	28개소	상주, 송정, 비진도, 학동몽돌, 남일대 등
문화재	1,850건	국보 11, 보물 165, 사적 51, 명승 12, 천연기념물 45, 국가무형문화재 19, 국가민속문화재 12, 등록문화재 43, 유형문화재 550, 무형문화재 39, 기념물 255, 민속문화재 21, 문화재자료 627
골프장	38개소	창원, 통도, 가야, 부곡, 용원, 진주, 정산, 사우스케이프 오너스 등
관광축제	14건	진주남강유등축제(10월), 산청한방약초축제(9월), 통영한산대첩축제(8월), 밀양아리랑대축제(5월), 김해분청도자기축제(10월), 양산삼량문화축전(10월), 마산가고파국화축제(10월), 개천예술제(10월), 거제섬꽃축제(10월), 의병제전(4월), 창녕낙동강유채축제(4월), 독일마을맥주축제(10월), 하동섬진강재첩축제(7월), 함양물레방아골축제(9월)
관광특구	2개소	창녕 부곡온천, 통영 미륵도
지정관광지	21개소	창원 마금산, 진주 오목내, 통영 도남, 사천 실안, 밀양 표충사, 거제 장목, 거제 거가대교, 의령 벽계, 창녕 부곡, 고성 당항포, 남해 송정, 하동 목계, 산청 중산, 산청 전통한방휴양, 산청 금서, 함양 농월정, 거창 수승대, 거창 가조, 합천 미승산, 합천 합천호, 합천 합천보조댐
관광단지	2개소	창원 구산해양, 창원 웅동

자료 : 경상남도 도정백서, 2018.

제2절

경남의 여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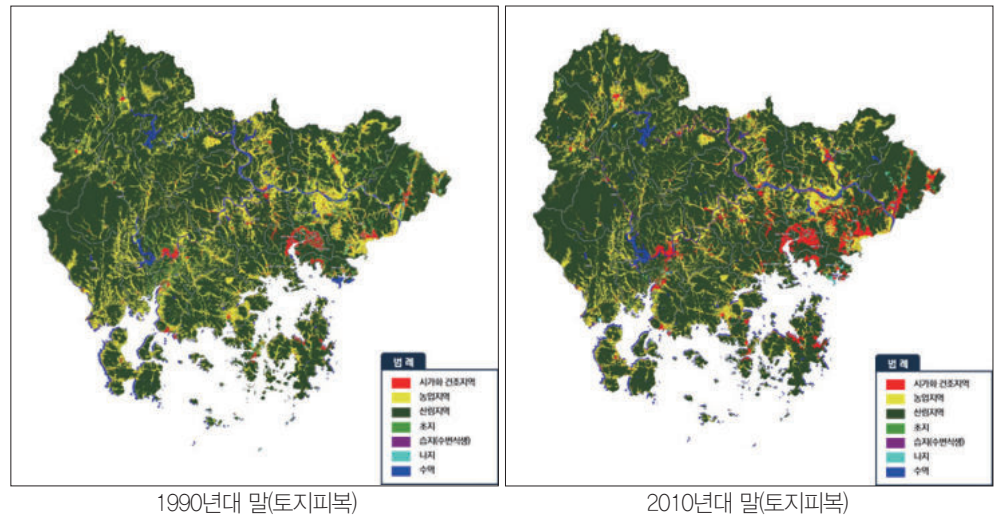
1. 공간구조 변화

1) 경남의 시가화 변화

- 경남의 시가지는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형성
- 과거 20년간 창원, 진주 등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인접한 지역으로 시가화 확대
- 부산과 인접한 김해, 양산은 지속해서 시가화 지역이 확대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서부·북부 경남 지역은 산악지형 등의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시가화 지역의 변화가 크지 않음

〈그림 1-2-5〉

경남의 시가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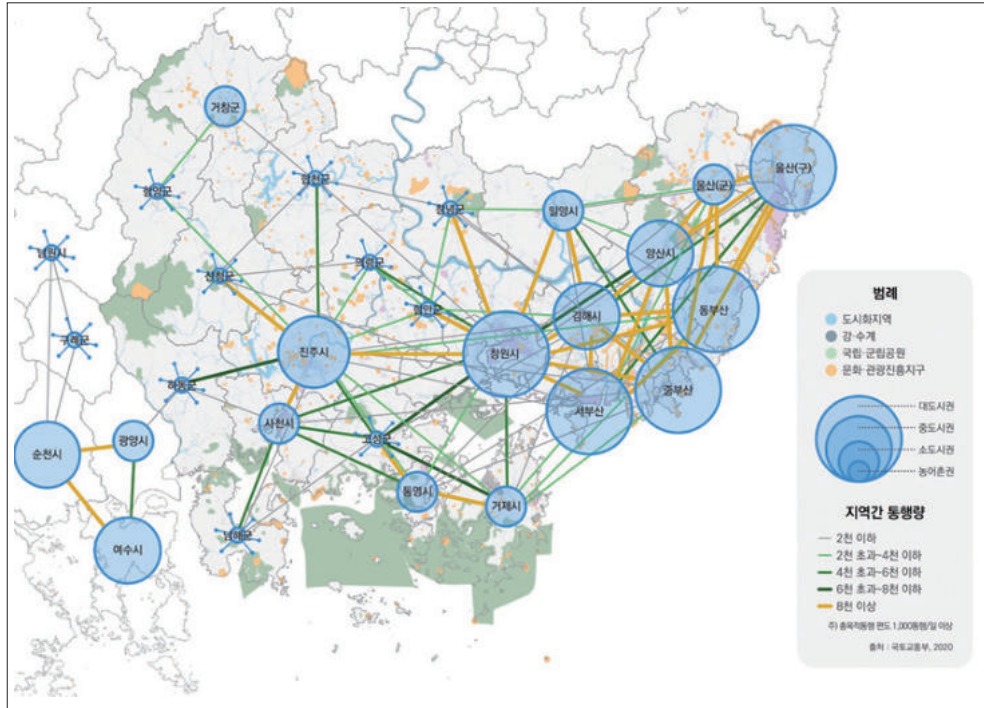


2) 지역 간 통행량

- 경남지역 내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창원시와 진주시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동부경남의 경우 창원을 중심으로 김해시, 밀양시 등과의 통행량이 많으며 서부경남의 경우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시, 산청군과의 통행량이 많음
- 경남지역 외의 통행량을 살펴보면 동부경남지역이 부산, 울산과의 통행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서부경남은 전라남도 시군과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6>

경남의 지역 간 통행량



2.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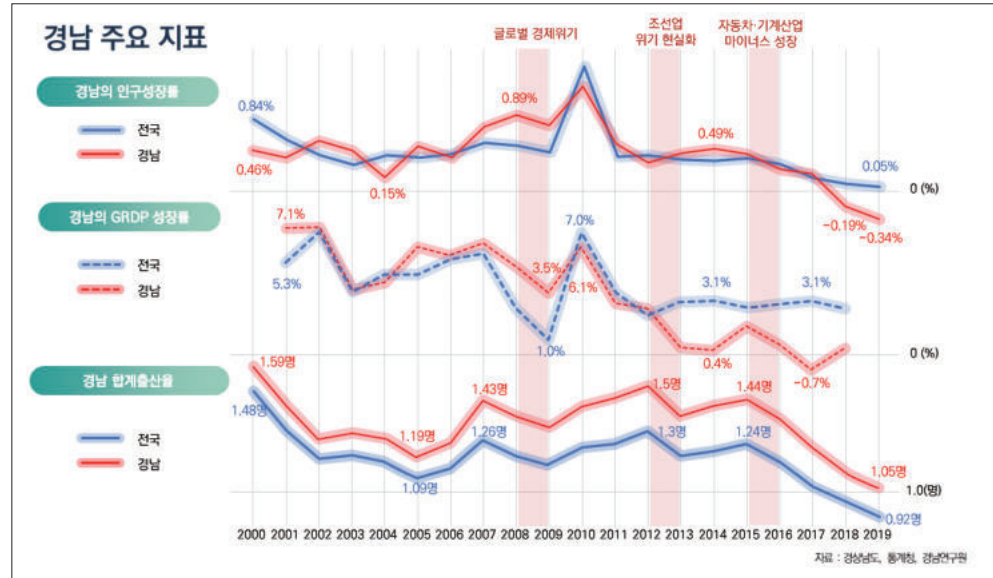
1) 경남의 인구 및 경제성장률 변화

- 경남의 인구는 2017년 정점(3,456천명)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지역 내 총생산량은 2000년 대비 현재(2018년 기준) 약 66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5년간 1%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함
-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과거 20년간의 다양한 지표를 중첩하여 분석
 - 경남의 인구성장률은 2000년 0.46%에서 201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여 2019년 기준 -0.34% 기록
 - 경남의 GRDP는 2001년 7.1%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2010년 이후 성장률이 감소하여 2017년에 -0.7% 기록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59명에서 증감을 반복하다 현재(2019년 기준) 1.05명으로 감소
- 경남의 인구성장률과 GRDP 성장률을 중첩하여 살펴보면 증감의 흐름이 유사한 것으로 보임

-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조선업 위기와 자동차·기계산업의 위기가 현실화되었음. 이에 대한 영향으로 경남의 인구성장률과 GRDP 성장률, 합계출산율이 변동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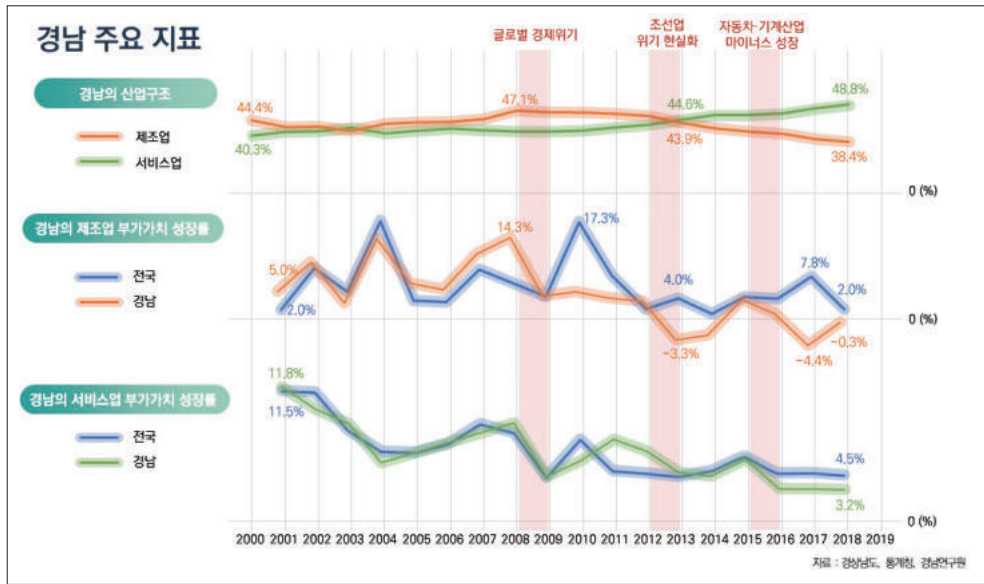
경남의 인구 및
GRDP 성장률 변화



- 2000년 경남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44.4%로 40.3%를 차지하는 서비스업보다 높았으나, 경제위기 이후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드는 추세
 - 2018년 기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 : 38.4%, 서비스업 비율 : 48.8%
- 제조업 비율이 줄어든 만큼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도 함께 하락
 - 특히 2012년 이후 제조업 부가가치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며, 증감을 반복하나 2018년 기준에서도 마이너스(-0.3%) 기록
-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업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2001년 경남의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이 11.8%를 기록하였으나 2018년 기준 3.2%까지 하락함
 - 전국 서비스업 부가가치 성장률 보다 약 1.3% 낮은 수치를 보임

<그림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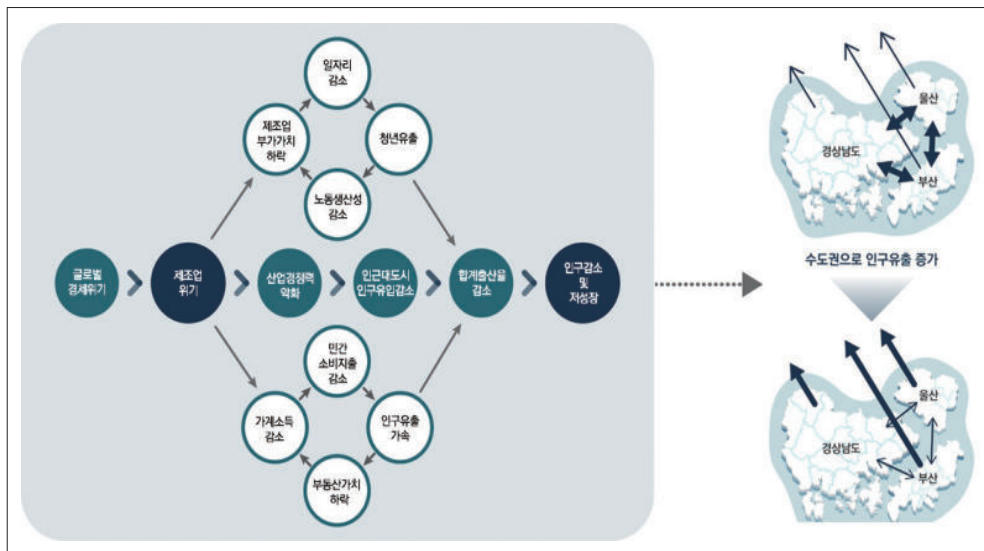
경남의 산업구조 변화



- 과거 20년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제조업 위기,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양상을 보임
- 과거 부산, 울산, 경남의 인구가 취업 등의 목적으로 상호 간 유출입이 활발했으나 최근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급증하고 있음

<그림 1-2-9>

경남의 인구감소 및 저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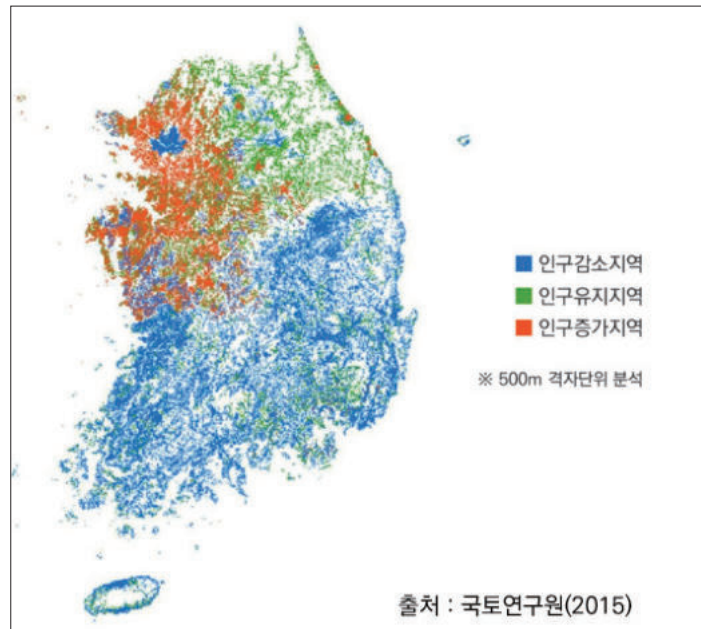
3. 국가적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인구변화

- 국가적 미래 인구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인구성장률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이며 2029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함
- 2019년 기준 처음으로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을 보임에 따라 예측하는 인구감소 시점보다 빨라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도권 외 대부분 지역의 인구가 감소 또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됨

〈그림 1-2-10〉

전국 인구변화 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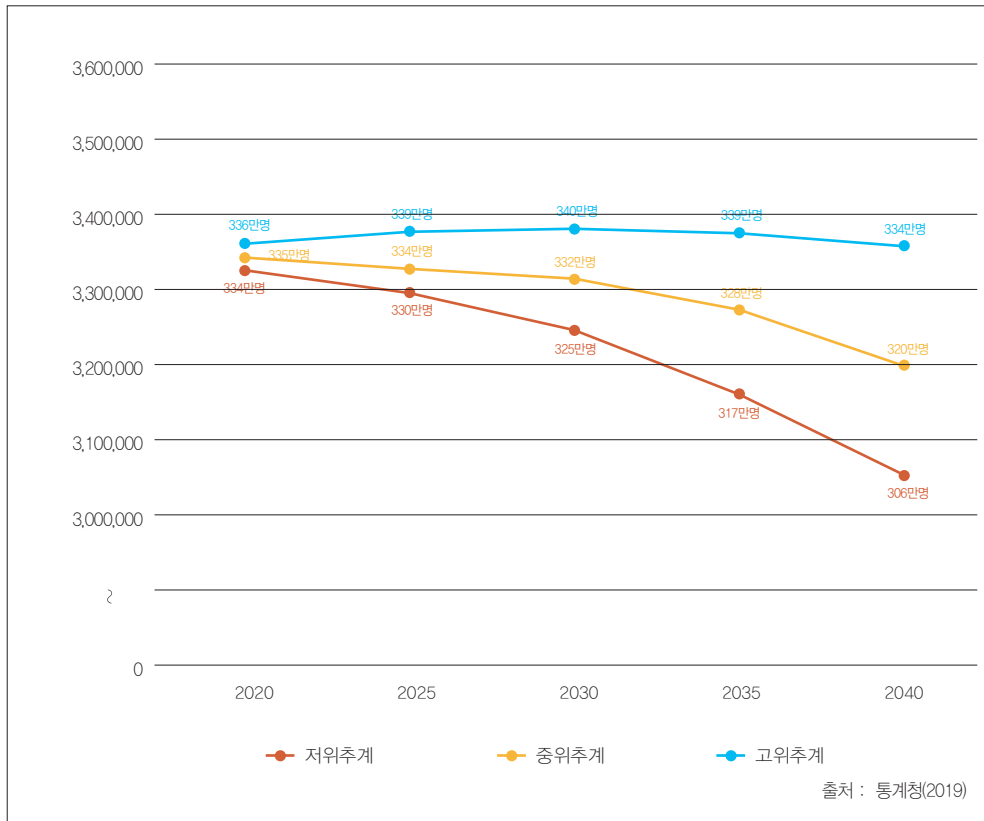
-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경남의 인구는 시나리오⁴⁾에 따라 인구가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고위추계 기준) 2030년까지 인구가 소폭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여 2040년까지 현재 인구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함
- (중위추계 기준) 현재부터 인구가 소폭 감소하여 2040년 기준 320만명으로 예상함
- (저위추계 기준) 현재부터 인구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 기준 30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4) 시도별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인구이동)의 미래수준에 대한 추계 시나리오.

- 고위 : 출산율, 기대수명의 고위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 중위 : 출산율, 기대수명 및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 저위 : 출산율 및 기대수명의 저위가정과 국내 순이동의 중위가정 조합.

〈그림 1-2-11〉

경남의 인구변화 전망



2) 사회변화

- 국가적 사회변화 트렌드를 살펴보면 불평등 문제, 다문화 확산 등으로 사회적 갈등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불평등 문제 : 소득양극화 심화,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의 확대 등
 -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등
 -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 일-삶의 균형, 웰빙 생활스타일 등
 - 다문화 확산 :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종교 갈등 등
 -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 1인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독거노인 증가 등
 - 젠더이슈 심화 :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 난치병 극복 : 난치병 치료제 개발, 개선된 미래의료시스템 등
 - 신종감염병 발생 :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

〈그림 1-2-12〉

국가적 사회변화 트렌드

불평등 문제	소득양극화 심화; 정치적 불평등 고착; 계층간 이동성 저하; 사회적 불공정성 및 갈등구조의 확대 등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미래세대의 경제적 불안정(일자리, 주거 등) 및 사회정치적 대표성/존재감 감소; 미래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 청년들의 좌절 등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	일-삶의 균형; 여가활동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노동문화; 웰빙 생활스타일 등
다문화 확산	국내 이민자 증가; 외국인 차별; 이민족-이문화 갈등; 종교 갈등 등
전통적 가족 개념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결혼관의 변화; 부양-양육 개념의 변화; 독거노인 등
학력중심 경쟁적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 학교 붕괴; 공교육의 해체; 스펙 경쟁; 전인교육의 부재 등
젠더이슈 심화	남녀의 사회적 조건, 지위, 권리, 의무가 동일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등
난치병 극복 (100세 시대)	난치병 치료제 개발; 인공장기 이식; 유전자 조작 등 기술의 발전; 개선된 미래의료시스템 등
신종감염병 발생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의 발생 가능성

• 경남 또한 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식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 될 것으로 예상함

- 2018년 경남사회조사에 따르면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가 2016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 지역이 군 지역보다 만족도가 높고, 월평균 소득이 증가할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지역 간, 소득간 갈등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에서는 연령별 이용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임에 따라 계층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1-2-13〉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 결과

경남도민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구분		합계	만족	보통	불만족
2016		100.0	18.0	47.1	34.9
2018		100.0	28.5	51.4	20.1
지역별	시 지역	100.0	28.4	51.6	20.0
	군 지역	100.0	22.7	56.2	21.1
월평균 소득별	10만원 미만	100.0	19.7	58.7	21.6
	100~200 미만	100.0	23.5	53.9	22.6
	200~300 미만	100.0	27.4	49.7	23.0
	300~400 미만	100.0	30.1	50.2	19.7
	400~500 미만	100.0	36.7	43.6	19.7
	500~600 미만	100.0	36.0	47.1	16.9
	600~700 미만	100.0	39.4	43.7	16.9
700만원 이상	100.0	43.4	41.3	15.3	

출처: 경남사회조사(2018)

<그림 1-2-14>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 결과

		경남도민 SNS 이용현황							1일 SNS 접속 횟수			
구분	이용 한다	이용하는 SNS							1~3회	4~6회	6~9회	10회 이상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	카카오 스토리	트위터	밴드	기타					
2018	54.9	27.0	14.3	30.2	1.9	25.8	0.8	40.0	25.7	13.1	21.2	
연령 별	15~19세	85.1	59.5	15.1	14.7	6.2	4.2	0.3	25.0	20.6	18.1	36.4
	20~29세	79.5	47.1	31.5	11.0	3.2	6.0	1.1	24.8	27.2	16.4	31.7
	30~39세	68.2	25.7	25.4	26.4	1.4	19.9	1.2	42.1	25.9	12.3	19.8
	40~49세	66.4	17.4	5.7	37.8	0.6	37.9	0.6	48.3	24.6	11.9	15.1
	50~59세	54.5	11.0	1.9	42.0	1.0	43.4	0.7	46.4	27.2	10.9	15.5
	60세 이상	35.8	8.2	0.5	48.9	0.9	40.5	1.1	48.0	29.3	9.8	12.9
	65세 이상	10.0	6.0	1.0	61.4	0.1	30.5	1.0	56.3	23.3	11.1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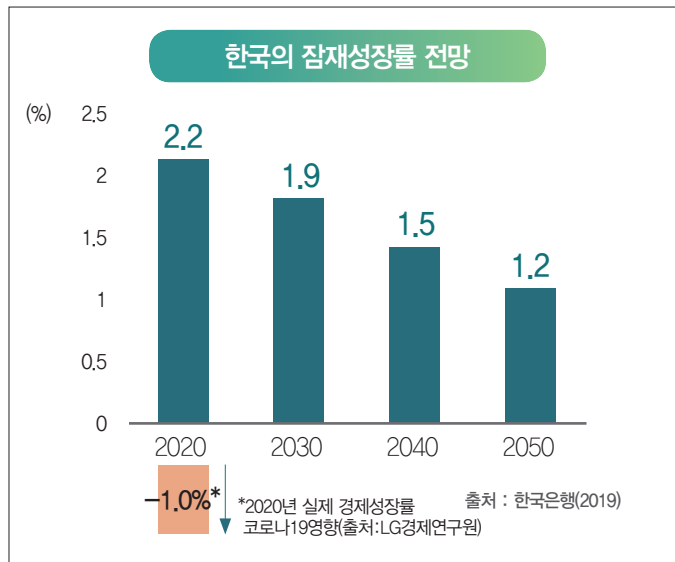
출처: 경남사회조사(2018)

3) 경제변화

- 2019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미래 잠재성장률 전망을 살펴보면, 2020년 2.2%에서 2030년 1.9%로 감소하며, 2040년에는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함
- 2019년에 전망한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므로 2020년의 실제 경제성장률은 -1.0%를 기록함
- 국가적·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놓여있는 만큼 세계 경쟁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그림 1-2-15>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 경남의 미래 경제·산업 구조 변화로는 경제의 디지털화, 제조업의 첨단화, 생산자 서비스 성장 및 동남권 메가시티 등의 이슈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제조업과 첨단 ICT 산업의 융합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 제조 서비스의 첨단화와 융·복합화를 통한 빅데이터, AI 산업의 성장
-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한 글로벌화 지속

- 제조 서비스의 고부가가치화 시대로의 전환
- 제조업 스마트와 결합한 ICT 산업 및 빅데이터, AI 산업 육성
- 그린수소, 수소 모빌리티, 연료전지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
- 글로벌 메가시티 지역으로서의 동남권 경제의 도약

4) 기술변화

- 국가적으로 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등의 적극적 노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첨단기술 도입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2030년까지 개발할 건설·교통·자동차·물류·주택·에너지 등 분야의 유망기술을 제시함
 - 인공지능(AI) 기술 :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관리시스템, 도로인프라 스마트유지관리 등
 - 이동수단의 혁명 : 완전 자율협력주행, 초연결 초고속철도시스템, 스마트 Mobility 서비스, PAV 등
 - 대면 기술의 진화 : AI 활용 건설 엔지니어링, 스마트 건설 로봇 등
 - 그린에너지 기술 : 수소도시,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환경플랜트 등
 - 기타 산업기술 : 인프라재료 혁신, 미래비행체(PAV) 부품개발 및 인증 등
- 경상남도는 이러한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고자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 사업 등을 추진함

<그림 1-2-16>

국가 및 경남 기술변화 전망



국가적 기술변화 트렌드

경남에서 추진하는 주요 기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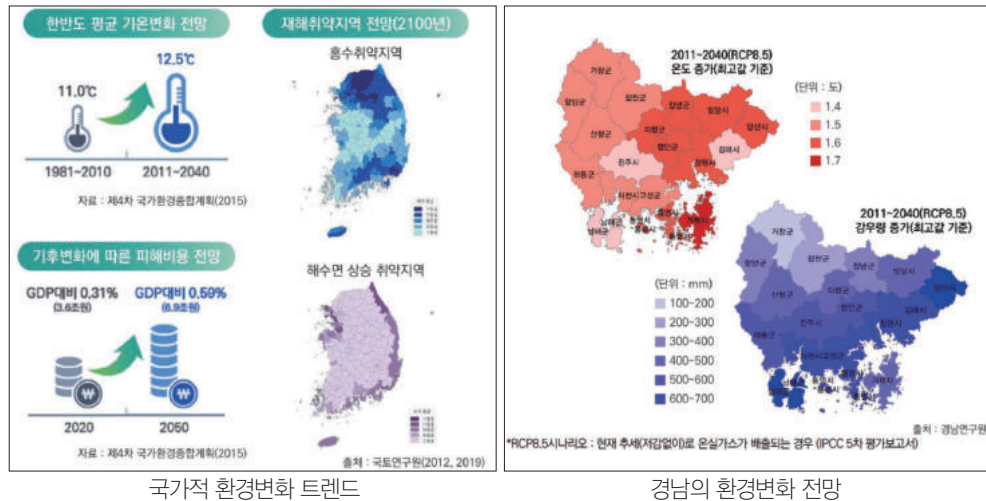
5) 환경변화

- 국가적·세계적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정책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한반도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에 따른 재해취약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취약지역이 증가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비용이 2050년에 GDP 대비 0.59%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국가 간 협약에 따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 강화가 예상되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강화가 필요함
- 경남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평균 온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및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상청에서 발표한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따르면 RCP 8.5시나리오⁵⁾를 기준으로 경남도의 2011~2040년의 온도는 최대 1.7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강수량 또한 최대 600~700mm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 경남의 탄소 배출량 저감 노력과 에너지 체제의 전환과 함께 경남도민의 환경 의식 개선 등의 사회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함

(그림 1-2-17)

국가 및 경남
환경변화 전망



국가적 환경변화 트렌드

경남의 환경변화 전망

6) 정치행정변화

- 국가적으로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의 안보·통일 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일본과의 영유권 문제, 중국과의 수출경쟁 등 주변국과의 지정학적 갈등 증가 예상
-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 강화 예상
-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시민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5) 현재 추세(저감 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IPCC 5차 평가보고서).

<그림 1-2-18>

국가적 정치행정변화
트렌드

식량안보	식량 수입의존도 증가로 인한 식량 자급력 감소 등
주변국가 지정학적 갈등	일본과 독도문제; 중국의 동북공정; 중국의 급부상(수출경쟁, 생산기지의 중국이전, 대중 경제의존 심화) 등
북한과 안보/통일 문제	국지전; 테러가능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 등 남북이 분단된 대치상황에서 통합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사이에 발생하게 될 다양한 이슈 등
전자 민주주의	디지털 기술로 인한 직접 민주주의; 거버넌스 변화; 전자정부 구현에 의한 행정 서비스 개선 등
글로벌 거버넌스	경제블록화 등 국제질서의 다극화; 핵확산 금지; 환경 이슈에서의 상호의존성 증대로 글로벌 거버넌스/파트너십 확대 등

- 경남은 2020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체제로의 전환과 주민 주권 구현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2-19>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주요사항
(2020.12.09.)

획기적인 주민 주권 구현	주민자치원리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주민참여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주민감사 청구인수 하향조정 등
자치단체 실질적 자치권 확대	국가-지방 사무배분,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사무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등
자치단체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정보공개 확대, 의원 겸직금지조항 정비,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정통합성 근거규정,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강화 등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관할구역 경계변경,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행정협의회 활성화, 국정참여기구 제도화, 특별지방 자치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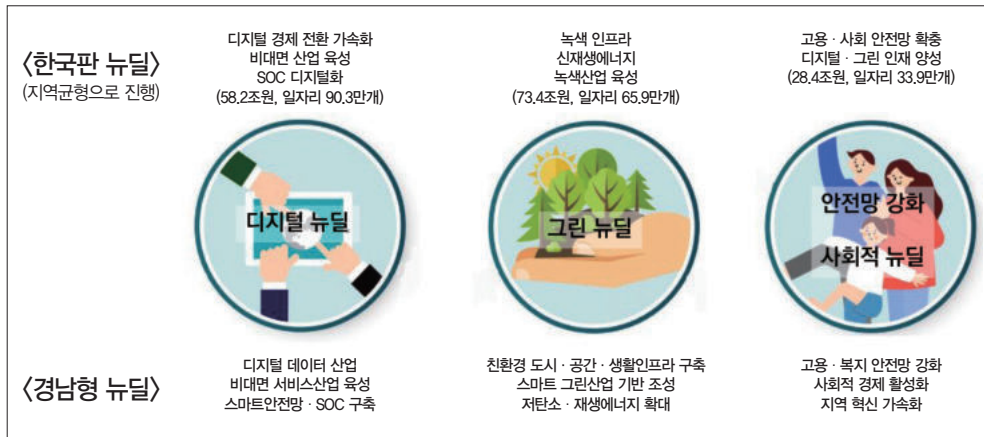
- 북한과의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이 강화되어 경남의 남북교류사업이 확대될 가능성 존재
 -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 : 선진적 남북협력모델 추구
 - 세계 10위권 북한 광물자원 연계 소재·부품사업 : 경남 제조업과 연계
 - 남북문화교류 : 윤이상 테마 남북음악 교류 등

7)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변화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부 주도의 '한국판 뉴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 비대면 산업 육성, SOC 디지털화 등
 - 그린 뉴딜 : 녹색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
 - 안전망 강화 :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디지털·그린 인재 양성 등
- '한국판 뉴딜'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사업 발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함

〈그림 1-2-20〉

국가적 정치행정변화
트렌드



-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도에서는 이와 부합하는 ‘경남형 뉴딜’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함
 - 디지털 뉴딜 : 디지털 데이터 산업, 비대면 서비스산업 육성, 스마트안전망·SOC 구축 등
 - 그린 뉴딜 : 친환경 도시공간·생활인프라 구축, 스마트 그린산업 기반 조성, 저탄소·재생에너지 확대 등
 - 사회적 뉴딜 : 고용·복지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역 혁신 가속화 등

제3절

관련
상위계획의
주요내용

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1) 계획의 비전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 포용국가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과 국민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국토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비전 수립

2) 계획의 목표

●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

-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인구 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여 어디서나 살기 좋은 균형국토를 조성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정책 추진의 한계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국토를 조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스마트국토

- 접근성 기반의 생활SOC 확충, 국토의 회복력 제고 등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안심 생활국토 조성
- 초연결·초지능화 시대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을 국토관리와 이용에 활용하여 국민의 편리함과 국토의 지능화

● 건강하고 활력있는 혁신국토

-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지역 산업 생태계의 회복력 제고 등 여건 변화에 맞는 산업기반을 구축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제고
- 3대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이행하고, 유럽까지 이어지는 교통·물류 기반 조성
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글로벌 위상 강화

(1) 공간구상 : 연대와 협력을 통한 유연한 스마트국토구현

● 개성 있는 지역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지역 간 연대·협력을 통한 경쟁기반 구축
- 지역 특성을 살린 상생형 균형발전 추진

●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육성기반 조성 and 지역 산업 생태계 회복력 제고
- 매력 있는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 생활공간 조성

- 인구 감소에 대응한 유연한 도시개발·관리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도시·생활공간 조성
-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와 주거공간의 선진화
- 안전하고 회복력 높은 국토대응체계 구축

● 품격 있고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

-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
-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 and 활용도 제고
- 매력 있는 국토·도시 경관 창출
-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 and 국토 지능화
- 네트워크형 교통망의 효율화 and 대도시권 혼잡 해소
- 인프라의 전략적 운영 and 포용적 교통정책 추진
- 지능형 국토·도시공간 조성

● 대륙과 해양을 잇는 평화국토 조성

- 신경제구상 이행 and 경제 협력
- 한반도-유라시아 경제공동체 육성과 글로벌 위상 제고

3) 주요 정책과제

(1)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협력 촉진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협력 촉진

- 행정구역을 초월해 특정 권역이나 경계의 고정 없이 산업, 관광, 교통, 환경, 생활,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 및 지역 발전 촉진

〈그림 1-2-21〉

국토 공간 미래상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표 1-2-19〉

광역 연계·협력 지방
자치단체 제안사업
(예시) : 경남 관련

구분	광역 연계·협력 제안사업	해당 지자체	
산업·경제	국가기간산업 초광역 산업 클러스터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북아 글로벌 물류 플랫폼 육성	부산, 울산, 경남 등	
환경	수자원	광역 상수도 취수원 다변화	부산, 울산, 경남 / 서울, 경기 등
	대기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추진(미세먼지 공동 대응)	울산, 부산, 경남 등
문화·관광	관광	남해안 광역 문화관광권 개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기, 충남, 전북 등
	역사·문화	가야문화권 조성 사업	경남, 경북, 전북, 전남, 부산 등
교통 인프라	도로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 (남해고속도로-동해안고속도로 연계 등)	부산, 경남, 광주, 전남, 경북 등
	철도	동해선 고속철도 등 광역교통체계 구축	부산, 울산, 경남 등

주 :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연계·협력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제안한 사업 중 일부 내용 발췌 정리(경남이 속한 부분만 편집).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기반 조성 : 지역 연계·협력 지원기반 구축

- 지역의 주도성을 보장하고 지역 간 광역적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지역 산업 생태계구축
- 중앙정부는 교통, 산업, 관광, 환경, 도시관리 등 광역적 행정수요와 신산업 도입, 현안에 유연한 대응 지원
 - 중소도시 연계형 : 기업-대학-혁신기관 간 연계 강화, KTX·공항 등 교통거점과 연계 네트워크 강화, 지역 간 시설공유 및 광역서비스 강화
 - 관광·휴양자원 연계형 : 지역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공동 브랜드화 및 체류 인구 공동 유치 추진 등(광역관광 루트 구상과 연계)

(그림 1-2-22)

지역 간 연계·협력 유형
(남해안 관광·휴양자원
연계 루트 구상)



주 :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예시로 제시
자료 : 국토교통부(2017) 해안권 발전거점 조성 시범사업 기본구상 수립연구.

● 중앙-지방 간 새로운 협업체계 운영·확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을 지원하여 지역발전 시너지효과 극대화

- 경남 : 남부내륙철도

(2)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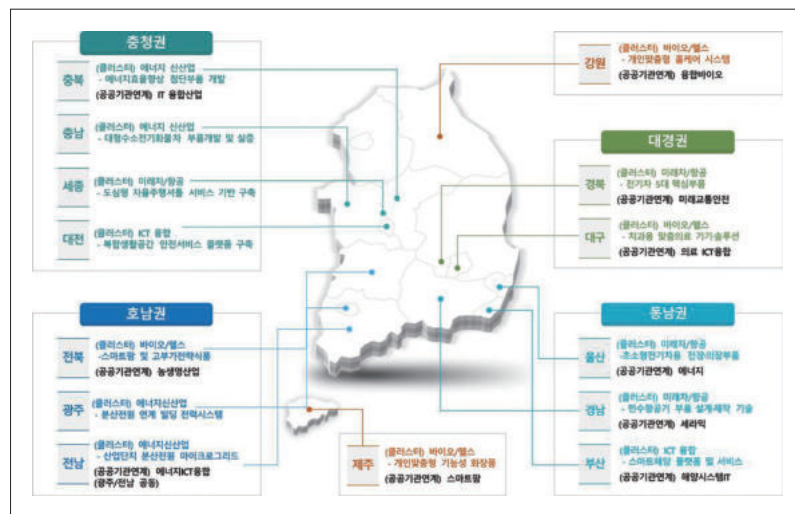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 공간 육성 : 지역특화 산업의 혁신 촉진

-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성장거점으로 육성

- 경남은 미래 자동차/항공 클러스터로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을 주로 다룸

(그림 1-2-23)

국가혁신 클러스터와
혁신도시별 특화 산업·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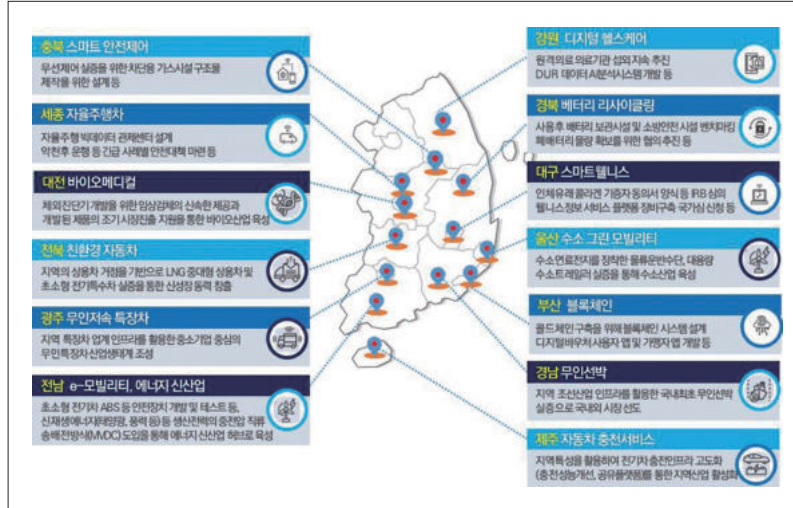


주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8)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계획안.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통한 규제혁신 가속화와 지역 신산업 육성
- 경남 규제자유특구는 지역 조선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최초 무인선박을 실증함

〈그림 1-2-24〉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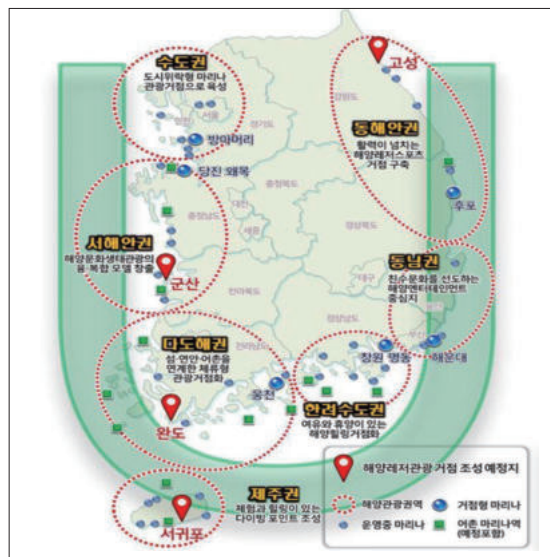
주 : 중소기업벤처부, 2019. 2차 규제특구 본격 출범, 규제혁신 가속화. 자료 토대로 작성.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공간 창출

- 지역문화 · 자연 유산을 특화한 개발과 활용으로 관광 경쟁력 제고
-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섬 · 해안이 가진 해양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고, 해안 관광 루트 조성, 수상 레저 활동 등 해양관광 · 레저산업 육성 추진
- 지역 고유의 역사 · 문화 관광상품 개발
- 경남은 한려수도권으로 여유와 휴양이 있는 해양힐링 거점화를 추진 중임

〈그림 1-2-25〉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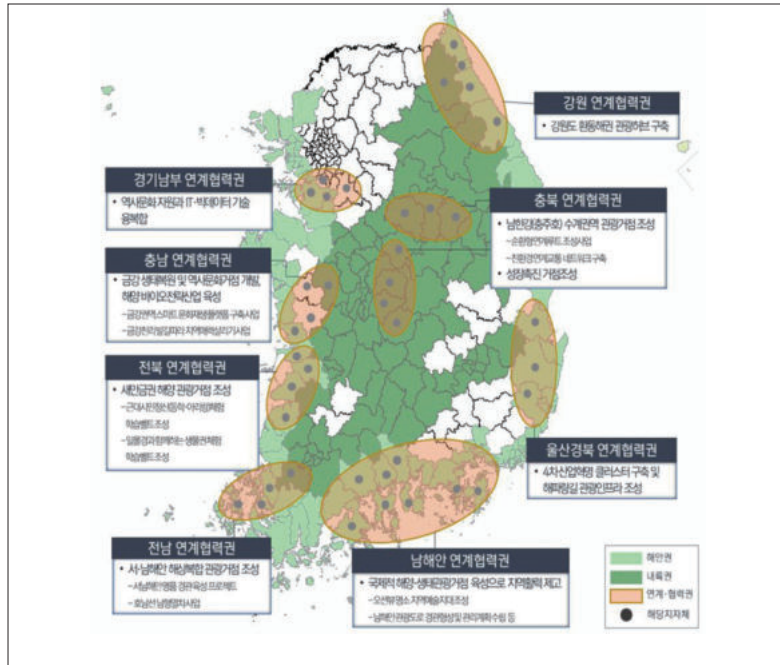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 매력적인 문화공간 조성 and 협력적 관광 활성화 : 지역 간 협력적 관광자원 발굴

-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주도로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주변 지역의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광역 관광 루트 육성,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연계, 공모사업 복합화 등 통합 지원
 - 경남은 남해안 연계협력권을 형성하고 국제적 해양·생태관광거점 육성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 오션뷰 명소 지역 예술지대 조성, 남해안 관광 도로 경관 형성 및 관리계획 수립 등을 계획하고 있음
- 연계·협력 관광자원 지원을 위한 인프라 정비

〈그림 1-2-26〉

관광 분야 지역 연계·협력사업 예시



주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http://www.molit.go.kr>) 자료 토대로 작성.
 자료 : 제5차 국토종합계획

(3) 인프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토 지능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해소 : 전국 2시간대 교통서비스 기반 확충

- 고속 교통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 국가 간선 도로망의 단절구간 연결을 통해 고속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IC 설치 등 접근성 제고와 스마트톨링 등 도로 운영의 스마트화 추진
 - 제주 제2공항, 동남권 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신공항 건설 및 지방 공항의 운영 개선을 통해 고속 항공 서비스 강화

- 촘촘한 교통망 구성과 고속서비스와의 연결성 강화
 - 기존 도로 정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환승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고속도로 IC, KTX 정치역 등 고속서비스 결절점과 연결성을 강화
- 기간교통망의 효율화와 대도시권 혼잡해소 : 광역 대중교통 혁신과 협력·조정을 통한 대도시권 혼잡 해소
 - 대도시권의 급행 광역교통망 구축
 - 대도시권의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을 구축하고, 도로
 -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도로의 간선기능 회복
 - 비수도권 역시 광역적 이동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철도 운영을 확대하고, 고속화가 필요한 구간 등을 폭넓게 검토
 - 부산·울산권에서 양산-울산축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확충, 부전~마산 복선전철, 창원 BRT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그림 1-2-27〉

지방 대도시권 광역
교통구상(2030) :
부산·울산권



자료 : 국토교통부(2019), 대도시광역교통망 철도중심으로 재편.

2.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1) 계획의 비전 및 전략

- 계획의 비전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으로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함
- 전략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사람), 방방곡곡 생기는 공간(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산업)을 추구하고 있음

〈그림 1-2-28〉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2) 균형발전 지원체계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 균형발전 총괄 지표 개발 및 지역 차등 지원
- 생활밀착형 SOC 사업 확대
- 지역발전 투자협약(계획협약) 본격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편
- 지역혁신체계 구축

3) 3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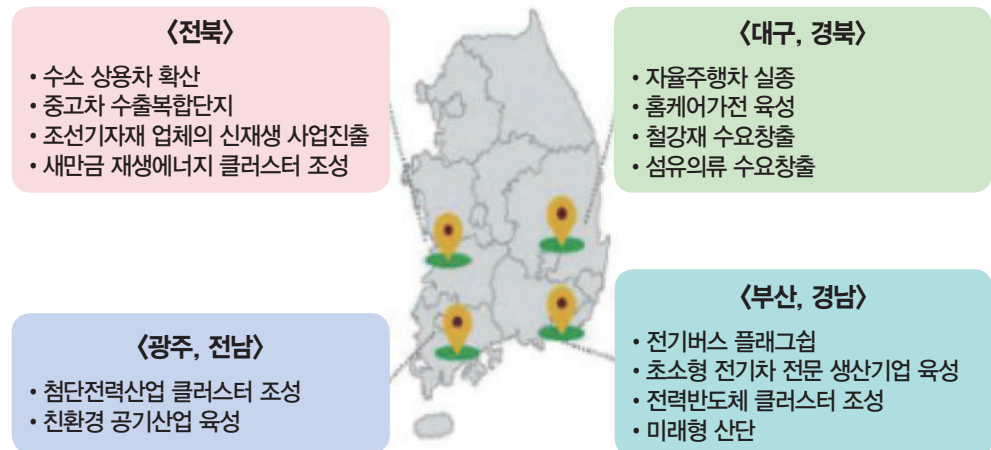
- (사람) 안정되고 품격 있는 삶
 -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 지역 자산을 활용한 특색 있는 문화·관광
 - 기본적 삶의 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공간)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 매력 있게 되살아나는 농산어촌
 -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 (산업)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 혁신도시 시즌 2
 - 지역산업 혁신
 -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그림 1-2-29〉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그림 1-2-30)

시도별 주요 산업 테마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4) 시·도별 역점과제 : 경남

● 비전 :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

- 일자리와 복지가 어우러진 포용 사회 전환
- 4차 산업혁명과 국가혁신성장의 거점화 달성

● 분야별 과제

- 품격 있고 건강한 경남도민(사람)
 - 지역대학-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구조
 - 문화 격차 해소와 관광거점 및 특화 관광 육성
- 활력 넘치는 경남(공간)
 - 신활력으로 가득 찬 농산어촌
 - 도시재생으로 특색 있는 강소도시권 육성
 - 인구 유출 감소를 위한 지원 및 상상·협력 강화

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국민생활과 나란히, 누구나 누리는 철도
- (목표) 국민이 원하는 경쟁력 있는 철도,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철도, 그린 모빌리티의 중심이 되는 철도
- 주요 추진과제
 - ①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②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 ③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④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⑤ 산업발전 기반 조성
 - ⑥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⑦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그림 1-2-32〉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비전 및 목표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 7대 추진방향

-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
 -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

- 일반철도 고속화
-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
- 지방 대 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

〈표 1-2-20〉

신규사업 현황
(경상남도 대상)

구분	철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신규	광역	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부산 노포~울산역	복선전철	50.0	10,631
신규	광역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진영~울산역	복선전철	51.4	19,354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 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

● 산업발전 기반 조성

-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
-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표 1-2-21〉

신규사업 현황
(경상남도 대상)

구분	철도	노선명	사업구간	사업내용	연장(km)	총 사업비(억원)
신규	일반	부산신항 연결지선	부산신항선~부전마산선	단선전철(연결선)	6.5	2,151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
-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
-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

● 남북·대륙철도 연계 대비

-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
- 남북/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

(그림 1-2-33)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계획도



자료 : 국토교통부(2021).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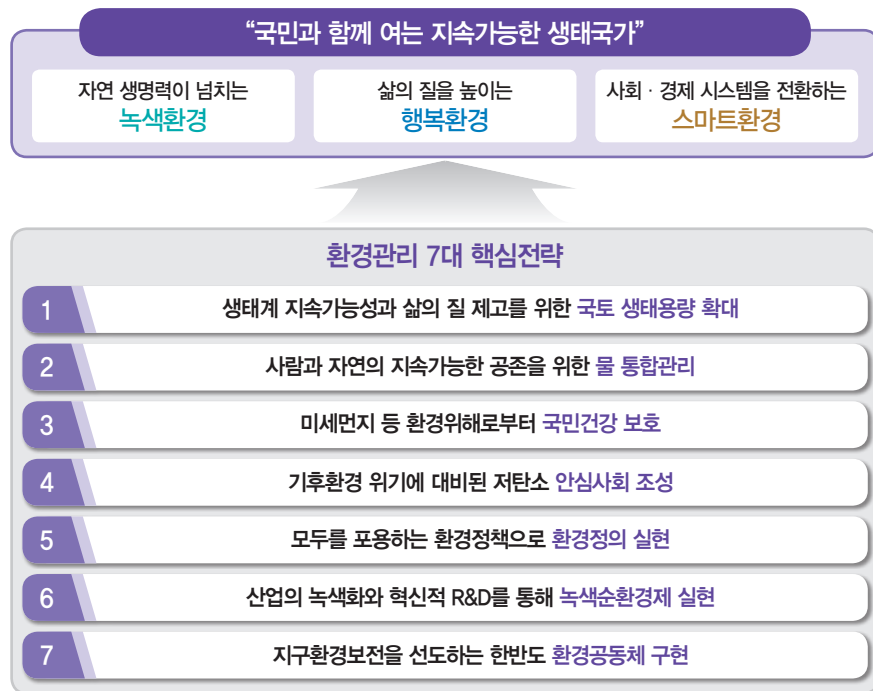
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 국가로 그에 따른 목표는 자연 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사회·경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 세 가지로 설정됨

〈그림 1-2-34〉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자료 : 환경부(2019),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 국토환경 기본구상

- 3대 목표에 따른 7대 핵심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과제 도출·제시
- **전략 1 :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국토 생태용량 확대**
 - 국토환경 연결성 확보와 자연회복으로 국토 생태용량 증가
 - 모두가 누리는 자연 혜택으로 생태복지 실현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지역으로 도약
 - 연안 및 해양 환경의 생태 건강성 강화
- **전략 2 :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물통합 관리**

-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
- 수질오염 관리 선진화로 안전한 물환경 조성
-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실현
- 유역기반·참여기반의 물통합 관리로의 전환

● 전략 3 :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 추진
- 위해성에 기반한 공기질 관리
- 생활 주변 유해인자·화학물질·제품 관리 강화

● 전략 4 :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 사회 조성

- 저탄소 안심 사회 기반구축
-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추진
- 기후위험 대응과 신(新) 기회 창출 현실화
- 미래 환경 안보 관리강화

● 전략 5 : 모두를 포용하는 환경정책으로 환경 정의 실현

- 환경 정의 구현과 녹색 사회로의 전환
- 수용체 관점의 환경개선
- 환경정보의 알 권리와 피해자 규제 강화

● 전략 6 :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 순환 경제 실현

- 환경 R&D의 미래지향적 혁신
- 물질 순환과 친환경경영에 기초한 산업 녹색화
- 환경 일자리 창출과 환경 가치 제고

● 전략 7 : 지구환경보전을 선도하는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현

- 항구적인 남북환경협력 이행
- 동북아 환경협력 발전
- 국제협약의 성실한 이행·선도와 개발도상국 협력 확대

3) 국토생태축 기본 구상

-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 형상의 우리 한반도 특성을 보전하기 위해 백두대간과 주요 정맥, DMZ, 도서·연안 등 해양, 5대 강을 잇는 한반도 생태골격 구축

〈그림 1-2-35〉

국토생태축 기본구상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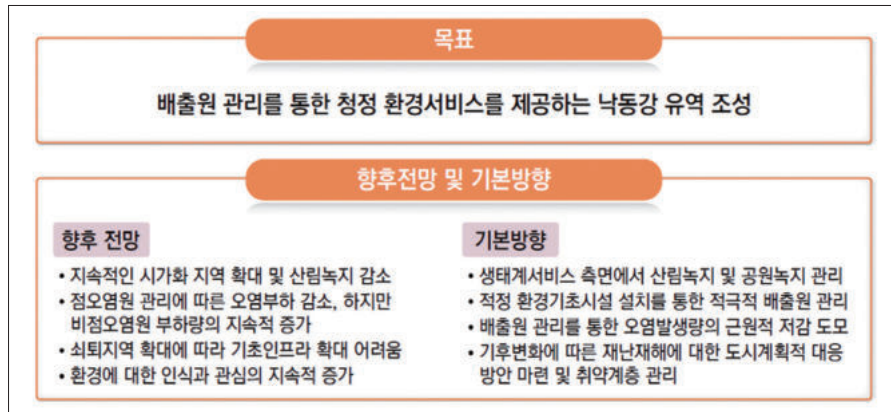
4) 권역별 공간환경전략 : 낙동강 영남권

● 목표 및 기본 방향

- 낙동강 영남권의 공간환경전략 목표는 배출원 관리를 통한 청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낙동강 유역 조성으로 설정함

(그림 1-2-36)

낙동강 영남권 공간환경 전략 목표 및 기본방향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주요 과제와 추진방향

- 주요 과제는 크게 3가지로 생태환경 증진,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미래 환경 대응 제시
- 생태환경 증진 전략
 -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보전·복원을 통한 생태계 서비스 향상
 - 그린 인프라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제공
 - 생물 서식공간의 보전·관리를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

(그림 1-2-37)

낙동강 영남권 생태환경 증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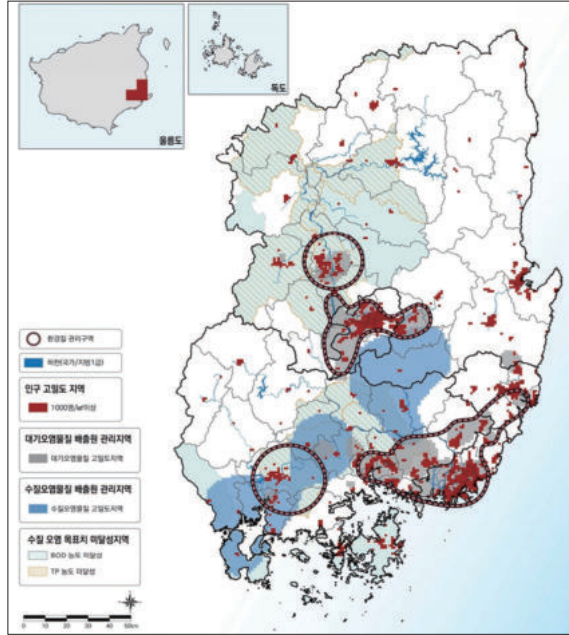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전략

- 체계적인 오염원 관리를 통한 낙동강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 배출원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저감
- 환경기초시설 용량 및 효율 향상을 통한 환경 부하 감소 도모

<그림 1-2-38>

생활환경 체감이슈 개선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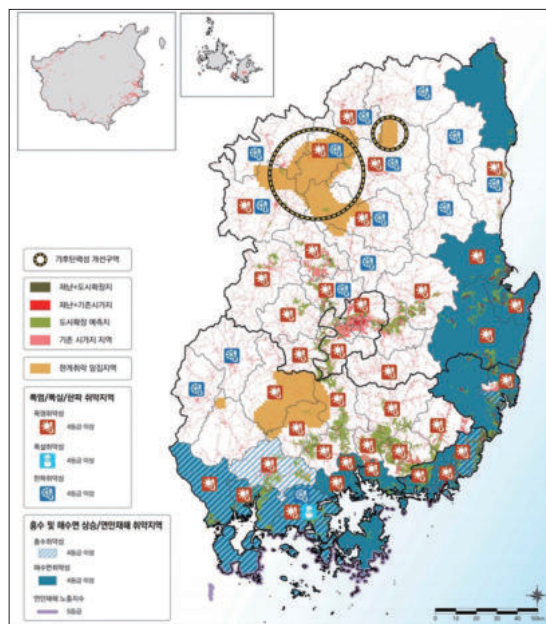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 미래 환경 회복력 확보 전략

- 도시지역의 폭염 관리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
- 재난재해별 취약계층 관리를 통한 영향 저감 방안 마련
- 기후회복력 확보를 위한 연안 지역 관리대책 마련

<그림 1-2-39>

미래 환경 회복력 확보 전략



자료 : 환경부 및 관계부처(2019) 제5차국가환경종합계획

제4절

지역의 미래에 대한 경남도민의 요구

1. 도민 의견수렴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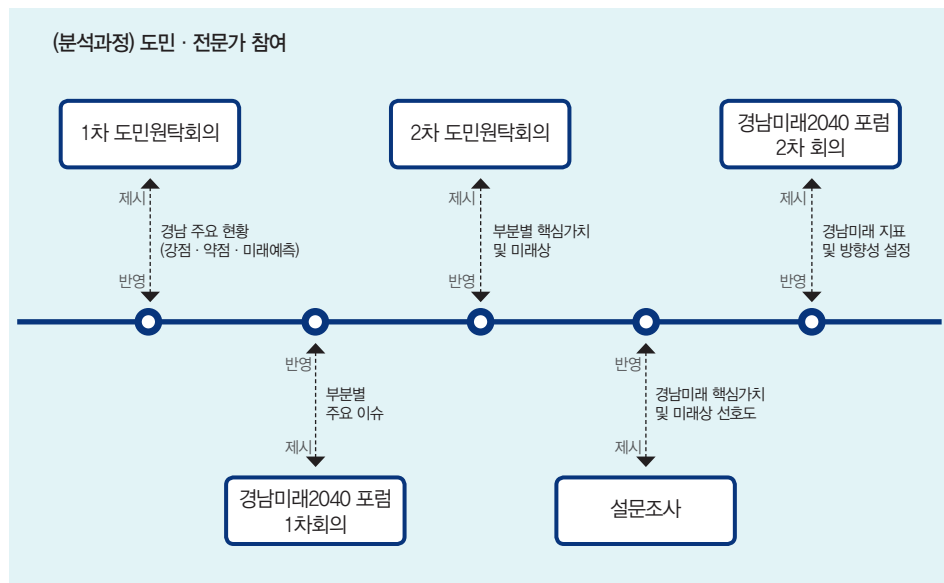
● 목적

- 도민이 바라는 지역의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전문가 집단과 도민의 의견을 동시에 청취함
- 계획 수립과정에 있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동시에 이들이 함께 모여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통하여 실용성 있는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

● 의견수렴 과정

<그림 1-2-40>

도민 의견 수립과정



• 도민원탁회의

- 제1차 도민원탁회의 : '19.06.29, 도민 85명 참석, 경남의 현재진단 및 미래예측 토론
- 제2차 도민원탁회의 : '19.10.12, 도민 70명 참석, 경남의 핵심 가치 및 미래비전 토론

<그림 1-2-41>

도민원탁회의



- 경남미래2040 포럼
 - 경남미래2040 포럼 발대식 : '19.09.04, 포럼위원 108명 참석, 발대식 및 분과회의
 - 경남미래2040 분과회의 : '19.11.26, 포럼위원 100명 참석, 경남미래 시나리오 구상

〈그림 1-2-42〉

경남미래2040 포럼



- 설문조사
 - '19.10.01~10.30(30일간), 도민 1,000명을 상대로 “경남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핵심 가치 및 미래상” 등 선호도 조사
- 온라인 의견 수렴
 - 경남1번가 도민 제안 : 932건
 - 미래 100년 도민 제안 : 255건
 -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민 제안 : 701건

2. 도민들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1) 도민원탁회의를 통한 의견

(1) 경남의 강점·약점·미래예측(1차 도민원탁회의)

- 1차 도민원탁회의에서는 “경남 현재를 진단하다”라는 큰 주제로 경남의 약점, 위기, 강점, 기회에 대한 상호토론을 함
- 조별 토론과 발표 이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분류한 후, 전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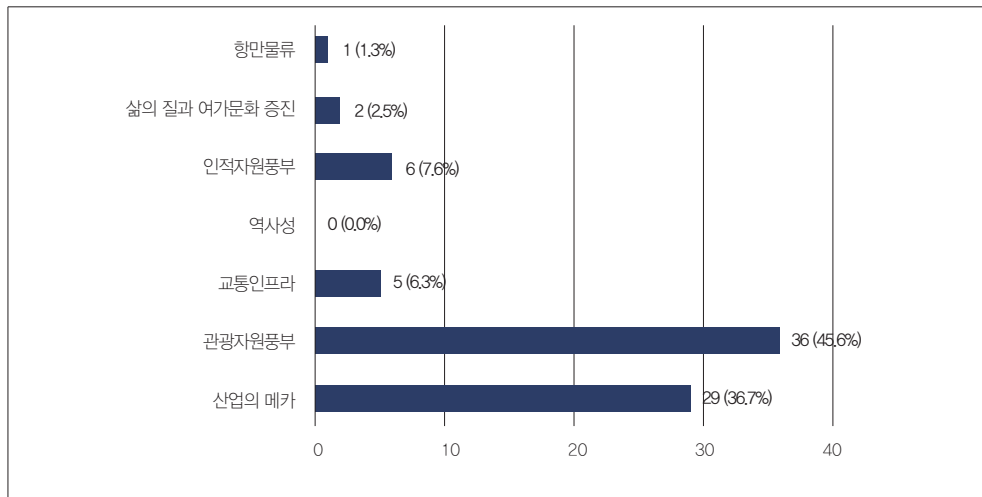
● 강점

- 강점의 경우 산업의 메카, 관광자원풍부, 교통인프라, 역사성, 인적자원풍부,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 향만물류 등의 의견이 나옴

- 산업의 메카 : 기계산단보유(제조업, 조선, 원자력 사업), 기업하기 좋은 조건, 산업사회 문화적 다양성, 산업의 메카(지역별 거점화 활성화), 스마트산단 선정 등
- 관광자원풍부 : 천혜의 관광자원(바다와 인접한 지리적 위치, 천혜의 관광자원, 관광인프라 구축), 풍부한 해양자원(관광레저, 해양자원, 남해안 등), 관광인프라 구축 등
- 교통인프라 : 내륙철도 추진, 교통의 요충지
- 역사성 : 4.19 혁명 발상지, 3.15 혁신적 시민의식 등
- 인적자원풍부 : 발전 가능성이 높음, 가치 있는 청년이 많음
-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 : 남해안·지리산 천혜의 자원 웰빙의 대명사
- 항만물류 : 바다 인접, 항만물류를 통한 물류수송 용이
- 7가지의 장점 중 우선순위를 선정하였을 때, 1순위는 관광자원풍부(36명, 45.6%) 2순위 산업의 메카(29명, 37.7%), 3순위 인적자원풍부(6명, 6.3%), 4순위 교통인프라(5명, 6.3%), 5순위 삶의 질과 여가문화 증진(2명, 2.5%)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3〉

경남미래2040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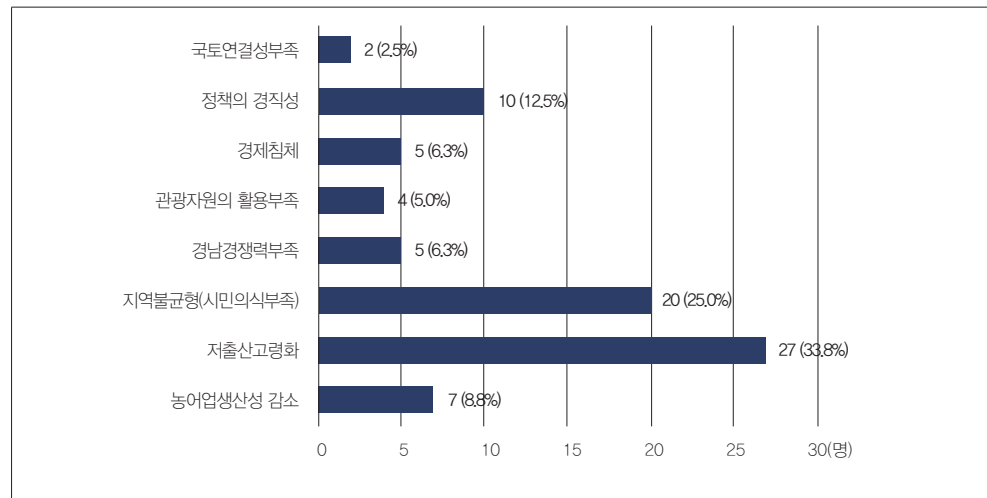
● 약점

- 경남의 약점으로 농·어업생산성 감소, 저출산·고령화,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 경남경쟁력부족,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경제침체, 정책의 경직성, 국토연결성 부족이 제시됨
- 농·어업생산성 감소 :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현실 문제, 농·어촌지역이 많음, 농업의 낙후(서·북부 농업 낙후)등
- 저출산·고령화 : 인구감소(젊은 층 인구 감소·고령화, 인구감소 추세 인구 불균형 등), 젊은 인구 대도시 이동, 고령화 등
-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 : 도농 간 소득 격차, 지역 간 불균형, 지역감정, 민주 의식 부족, 변화에 대한 시각 편차, 복지 부족 등
- 경남경쟁력부족 : 편중된 경제구조, 산업편중 현상, 경제 불균형(지역), 좋은 시야의 인적, 인프라 다양성 존중 부족,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교육 다양성 부족 등

- 관광자원의 활용부족 : 지리산, 남해안, 낙동강 등의 관광자원의 활용 부족 등
- 경제침체 : 경제침체(조선 인력, LNG 기술 융합 약화), 신성장 동력 미확보,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및 제조업 저하, 공장 외곽 이전, 기술 산업 진흥 미흡, 재정 독립성
- 정책의 경직성 : 지역의 문화재 관리 소홀, 행정의 부족한 표현력·지구력, 폐쇄적 지역주의,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 정보 부족, 소통구조 부족, 청년의 유출을 막을 청년정책이 없음, 기득권의 행동 등
- 국토연결성 부족 : 고속철도(KTX, SRT) 확충·통합, 교통인프라 부족, 중앙으로 향한 고속도로망 부족, 내륙지역 개발에 막대한 예산 소요, 불편한 교통(중앙으로부터 먼 거리), 수도권과 멀어 인적·물질적인 측면에서 불리 등
- 전체 우선순위에서 경남의 약점은 1순위로 저출산·고령화(27명, 33.8%), 2순위로 지역불균형(시민의식부족)(20명, 25.0%), 3순위로 정책의 경직성(10명, 12.5%) 4순위로 농·어업생산성 감소(7명, 8.8%) 다음으로 경남경쟁력부족(5명, 6.3%), 경제침체(5명, 6.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2-44〉

경남미래2040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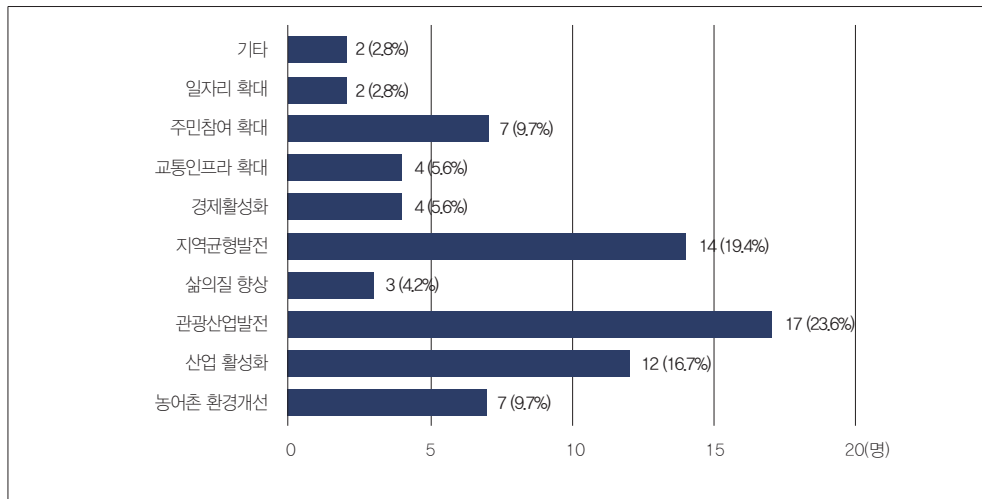
● 미래예측 긍정적 측면

- 도민이 예측하는 경남의 긍정적 측면은 농·어촌 환경개선, 산업 활성화, 관광산업발전, 삶의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경제활성화, 교통인프라 확대, 주민참여 확대, 일자리 확대로 나타남
- 농·어촌 환경개선 :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귀촌 인구 증가, 농업 경쟁력 강화·지역 특성화 특산물 변화 등
- 산업 활성화 : 지식기반 첨단산업 발달, 신산업 유치 성장으로 지역 활성화, 1차 산업 기업화, 향노화·나노산업 소득증대와 활력, 미래산업 발전, 고부가 가치 산업 구축 등
- 관광산업발전 : 관광산업발전, 천혜 자원 메카,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 및 소득 창출, 과학기술의 발달로 여가문화 생활 증대, 스토리텔링 관광, 지역·남해안 개발 활성화의 내용
- 삶의질 향상 : 도민 삶의 질 향상, 역동적 경남(젊은 경남), 지역별 특성화된 고른 경남, 경남 리더십 기대 등

- 지역균형발전 : 천혜 자원 활용 인구증가 가능, 지역특화(산업·문화), 지역적 특화·산업으로 세계 경쟁력 제고, 다문화가정의 확대로 인구증가 및 생산인구 증가 등
- 경제활성화 : 콘텐츠 원천소스 보유 자원이 많음, 마을 중심의 자체 경제·특성화 등
- 교통인프라 확대 : 교통기술발전, 생활권 확대
- 주민참여 확대 : 주민참여(소통력 강화,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역 맞춤형 활동가 양성 활발
- 일자리 확대 : 청년 우선 정책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 발전, 관광객 자원 연계 일자리
- 도민들이 생각하는 긍정적 미래 모습 1순위는 관광산업발전(17명, 23.6%), 2순위 지역균형발전(14명, 19.4%), 3순위 산업 활성화(12명, 16.7%), 4순위 농·어촌 환경개선과 주민참여 확대(각 7명, 9.7%)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5)

경남 미래예측 긍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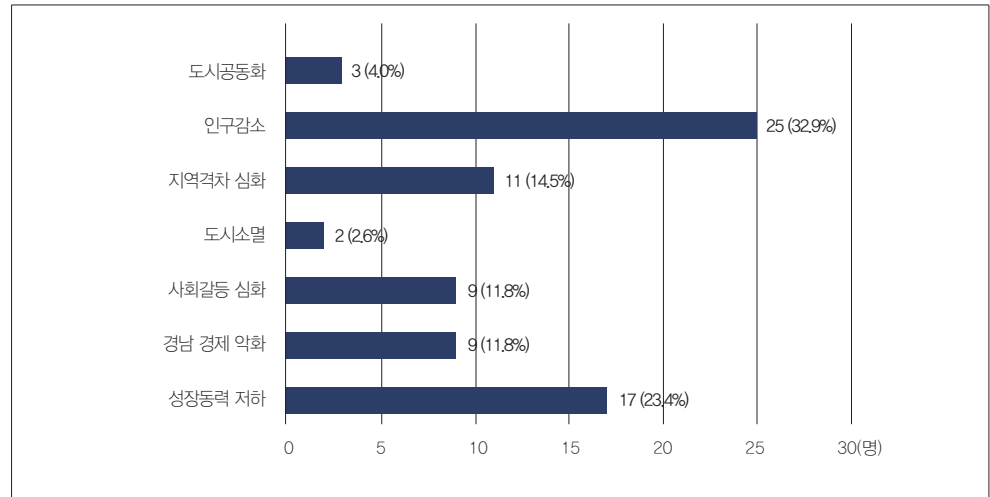
● 미래예측 부정적 측면

- 경남 미래예측의 부정적 측면은 성장동력 저하, 경남 경제 악화, 사회갈등 심화, 도시소멸, 지역격차 심화, 인구감소, 도시공동화 의견이 제시됨
- 성장동력 저하 : 지속발전 가능성의 한계 봉착, 자연재해로 인한 도시 문제, 경직되고 자기 지역 중심적인 지역 이기주의, 실질적 정책 부족, 미래 먹거리 사업의 발전 퇴보
- 경남 경제 악화 : 농촌 공동화(농지 부족, 농산물 생산 감소), 농촌인구 감소로 농업 침체, 일자리 창출 어려움, 경남지역 발전 저해, 외국인 투자 부족, 제조업의 사양화 등
- 사회갈등 심화 : 정책의 경직, 다문화가정 문제점 대두,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의 갈등 심화, 다문화가정 문제로 사회적 문제 발생, 갈등 심화, 지역 차별 문제, 인력 활용 시스템 부족 등
- 도시소멸 : 도농 격차의 심화로 다수의 시·군 소멸, 한계 마을의 증가(인구 유출, 농촌 벽지, 노령화) 및 노인복지 수요 증가, 청년 인구 유출 심화 등
- 지역격차 심화 :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 다문화가정 문제, 농촌인구 농업의 쇠퇴, 시·군 통합, 농촌 인재 양성 부족
- 인구감소 : 젊은 층 유출, 청년층 유출, 저출생 문제, 초고령 사회 진입, 인구 절벽, 청·장년층 감소·고령화 등

- 도시공동화 : 도시의 비대화, 인구감소로 통합도시 증가, 지역경제 소멸, 구도심 공동화, 지역격차로 인한 지역 공동화, 젠트리피케이션, 식량자원 자금화 문제 등
- 경남의 부정적 측면의 미래 모습에 대한 1순위는 인구감소(25명, 32.9%)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장동력 저하(17명, 23.4%), 지역격차 심화(11명, 14.5%), 경남 경제 악화(9명, 11.8%), 사회갈등 심화(9명, 11.8%) 등으로 나타남

〈그림 1-2-46〉

경남 미래예측
부정적 측면



(2) 부분별 핵심 가치 및 미래상(2차 도민원탁회의)

- 관심 부분별 전략을 청취함으로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들을 수집함
- 미래세대(경남 고등학생), 사회변화, 정치행정, 기술환경, 경제변화, 인구변화, 환경변화 분야별 토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전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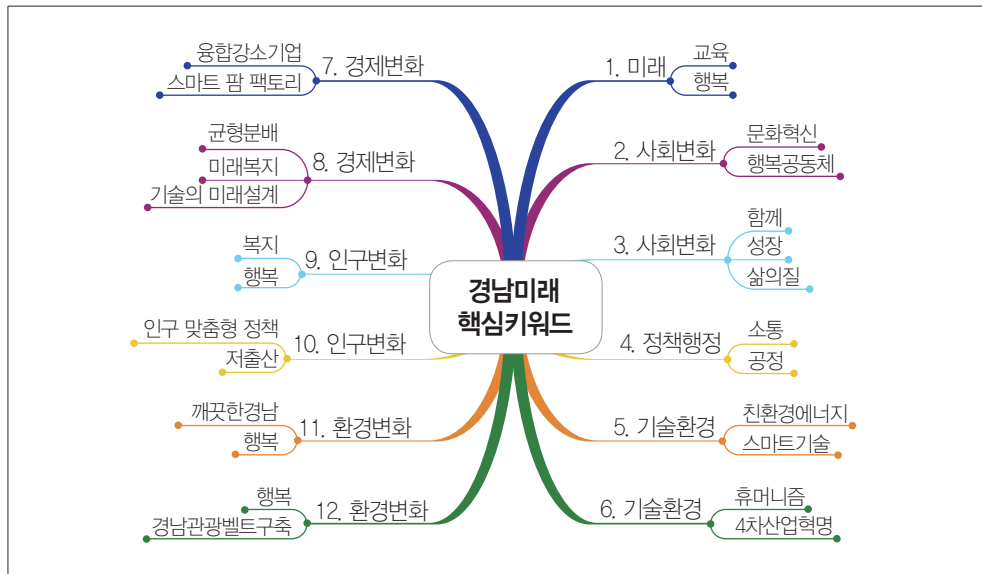
● 경남미래 핵심 가치

- 미래세대의 핵심 가치는 교육(교육지원, 진로, 대입, 인재 양성)과 행복(문화, 복지)이 도출됨
- 사회변화 분야에서는 문화혁신(문화, 공간, 도전), 행복공동체(인간, 가족, 행복), 함께 성장(공존, 시민참여, 청년 변화, 신중년 기회, 인구문제), 삶의 질(건강, 공기, 신중년)을 핵심 가치로 선정함
- 정치행정에 분야는 소통(참여, 시민의식, 상호신뢰, 사회혁신 등)과 공정(공평, 정의 등)이 주요 가치로 나타남
- 기술환경은 친환경에너지(친환경에너지 생활화, 핵심기술 시작), 스마트 기술(스마트화의 생활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 등), 휴머니즘(사람), 4차 산업혁명(편리한 기술, 새로운 길 개척, 속도, 인공지능)을 핵심 가치로 선정

- 경제변화 분야는 융합강소기업(융합, 상생), 스마트팜·팩토리를 주요 키워드로 도출함
- 인구변화는 복지(일자리, 안전 등), 행복(화합 융화, 여유, 평온), 인구 맞춤형 정책(워라벨, 빈집활용, 신혼부부 가정 출산 지원, 미래먹거리 등), 저출산(국가 양육시스템, 불임 가정 지원 확대, 공동체 등)을 주요하게 고려함
- 환경변화에서는 깨끗한 경남(미세먼지, 탄소), 행복(안전한 경남, 건강한 취미생활, 공감, 소통), 경남관광벨트 구축(관광 학습, 청정 환경, 민고 먹는 먹거리, 하이브리드)을 핵심 키워드로 선정함

(그림 1-2-47)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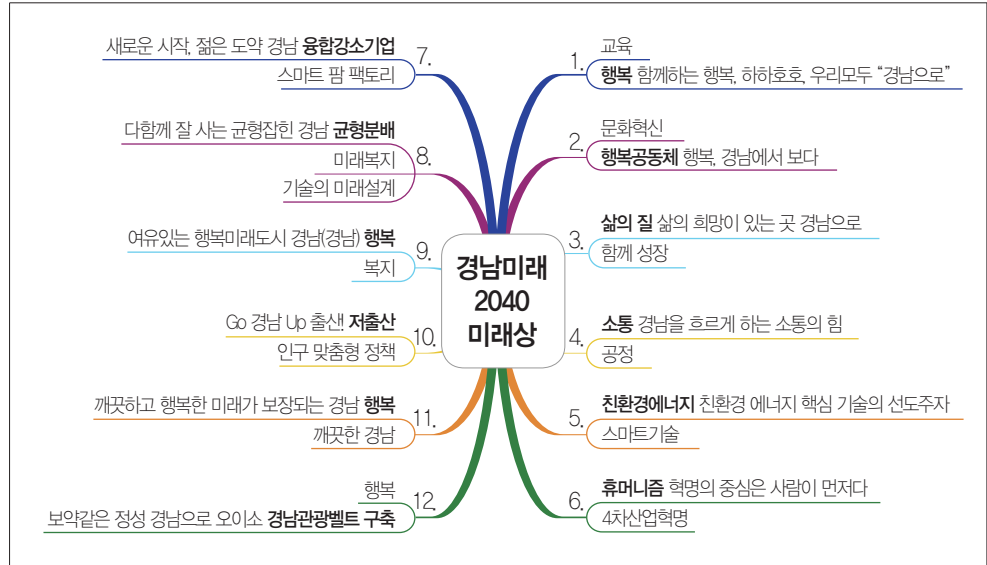


● 경남미래 핵심 슬로건

- 분야별로 핵심 키워드와 관련하여 다양한 핵심 슬로건을 만들고, 조별 토의를 통해 분야별로 핵심 슬로건을 도출함
 - 미래세대 : “함께하는 행복, 하하호호, 우리모두 “경남으로””(행복)
 - 사회변화 : “행복 경남에서 보다”(행복공동체) “삶의 희망이 있는 곳 경남으로”(삶의 질)
 - 정책행정 : “경남을 흐르게 하는 소통의 힘”(소통)
 - 기술환경 : “친환경 에너지 핵심 기술의 선두주자”(친환경 에너지), “혁명의 중심은 사람이 먼저다”(휴머니즘)
 - 경제변화 : “새로운 시작, 젊은 도약 경남”(융합강소기업), “다함께 잘사는 균형잡힌 경남”(균형분배)
 - 인구변화 : “Go 경남 Up 출산!”(저출산), “여유있는 행복미래도시 경남(경남)”(행복)
 - 환경변화 : “깨끗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되는 경남”(행복), “보약같은 청정 경남으로 오이소”(경남관광벨트 구축)

<그림 1-2-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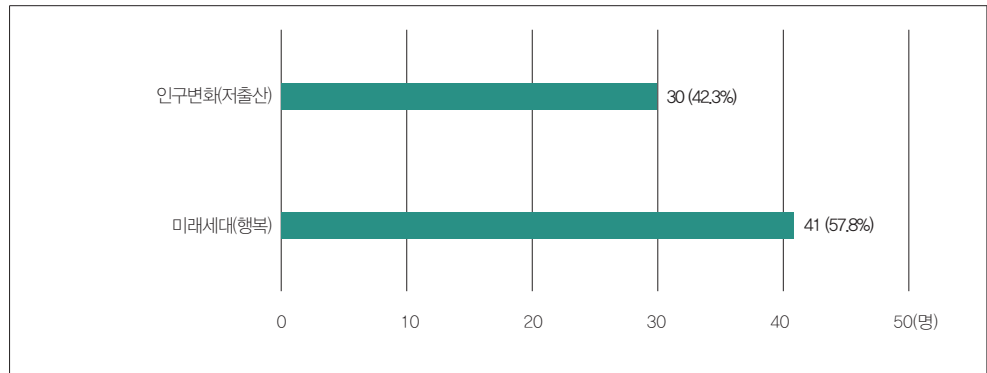
핵심 키워드에 따른 미래상



- 행복의 핵심 가치를 주제로 한 “함께하는 행복, 하하호호, 우리모두 “경남으로””가 참여자들이 가장 공감하는 슬로건으로 선정됨

<그림 1-2-49>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2) 경남미래2040 포럼을 통한 부분별 주요 이슈 및 경남미래지표 및 방향성

(1) 분과별 주요 이슈

● 경제산업 분과

- 동북아 산업물류중심
- 고급인력육성
- 의생명·나노 등 신산업 육성
- 농촌과 신산업 연계 방안 강구
- 방산 산업 메카로 육성
- 기존 제조업 스마트화
-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육성 등

● 도시환경 분과

- 지방대학 발전전략 강구
- 광역도시철도 · 준고속철도 구축 등 교통인프라 개선전략
- 환경 분야 동남권 공동대응(통합공간환경계획 필요)
- 첨단환경산업과 전문 인재 육성
- 세대융합환경교육 콘텐츠 발굴
-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 해안선 개발 및 관광자원화
- 응급의료체계 구축
- 제2의 고향이 될 수 있는 주거환경, 정주 여건 개선방안
- (자연재해, 화재, 시설, 보안, 범죄) 안전 환경 조성
- 국민 여가 대응 섬 개발 전략 필요
- 남해안 발전방안 강구 등

● 사회관광 분과

- 지역문화 분권 쇄신
- 배리어 프리 경남
- 장애인 관광인프라 구축
- 원경남(생활문화공동체 구축)
- 경남의 산업 축을 관광으로 전환
- 남북관계에 있어 농업 매개체 활용
- 다양성, 성평등, 참여와 소통, 효 문화, 사회적 자본
- 인문학적 개념 중시
- 젊은 농촌, 건강명소, 힐링라이프 등

(2) 분과별 경남미래 시나리오

● 경제산업 분과

- 행복 가치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도민이 바라는 행복을 구체화하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세부 전략 수립
- 인력양성 방안(경남도내 대학과 연계하여 역량 강화) 필요, 노년 일자리도 함께 고민 필요
- 주력 산업의 스마트화로 경쟁력 향상, 기업 경쟁력 향상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 스마트 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고민 함께 필요
- 지역을 권역으로 묶어 산업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 필요

● 도시환경 분과

- 경남을 떠나는 이유 중 상당 부분 의료, 교육 부족 지적
-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을 강화하고 산업과 관련된 교육,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적 인구 유입 촉진 필요
- 인구목표는 통계청 추계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과 비전이기 때문에 인구 증가를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부·울·경 중심의 광역권 형성 필요. 광역권 형성 수단으로 광역교통망 형성에 우선 투자 필요
- 압축도시를 지향해야 하며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 제시 필요. 생활권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함

● 사회관광 분과

-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귀농, 귀촌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
- 인구 유출(특히 청년층)에 대한 대책 필요. 20, 30대가 원하는 공정, 정의, 평등 등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함
- 관광, 건축, 도시설계 등의 기준을 장애인에 맞춰야 함
-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가 핵심. 특히 교육과 의료 격차의 완화 중요
- 새로운 사회에 맞는 선도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함. 도민이 봤을 때, 경남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 제시 필요
- 새로운 사회에 맞는 선도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제시해야 함. 도민이 봤을 때, 경남은 이렇게 갈 것이라는 청사진 필요
- 경남의 인구정책, 인력계획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 이를 바탕으로 장기 계획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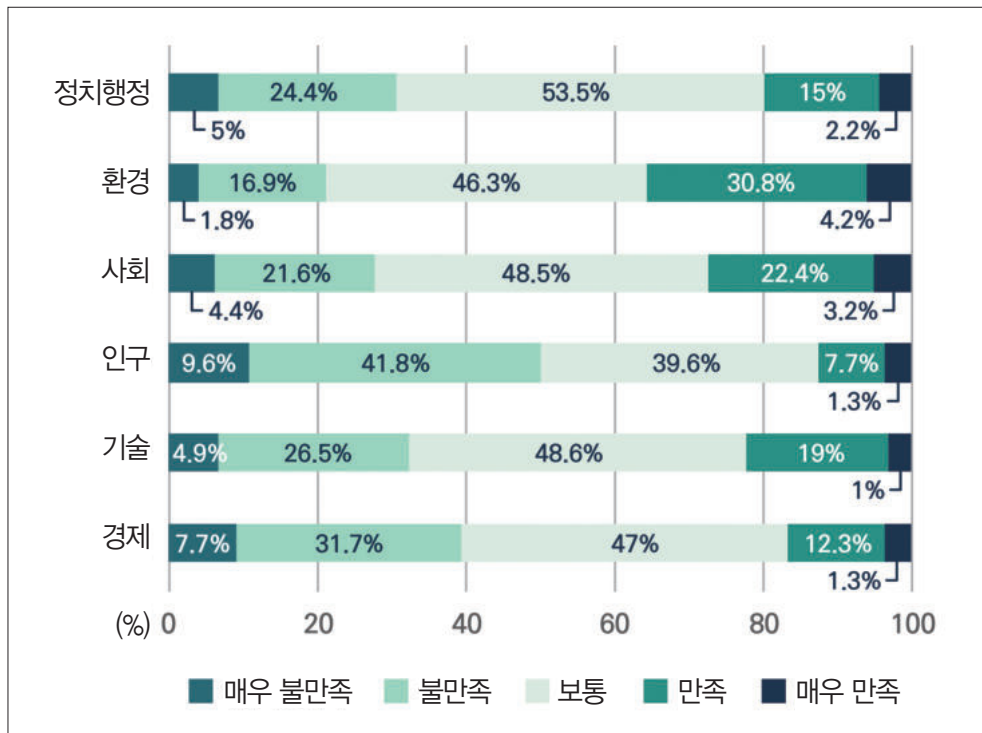
3) 도민 설문조사를 통한 경남미래 핵심 가치 및 미래상 선호도

(1) 경남에 대한 인식

● 현재 경남의 분야별 만족도

- 인구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보통”을 답한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인구의 경우 “불만족”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도출됨
- 인구 분야는 부정적 답변이 높음 : 불만족(421명, 41.8%), 매우 불만족(97명, 9.6%)
- 환경 분야는 보통을 제외한 답변에서 긍정적 답변(“만족”, “매우 만족”)이 부정적 답변(“불만족”, “매우 불만족”)보다 높음. 그 외의 분야는 부정적 답변이 더 높게 나타남
- 환경 분야의 긍정적 답변은 35.0%, 부정적 답변은 1.8%
- 경제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39.4%, 긍정적 답변은 13.5%
- 기술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31.4%, 긍정적 답변은 20.0%
- 사회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25.9%, 긍정적 답변은 25.5%
- 정치행정 분야의 부정적 답변은 29.3%, 긍정적 답변은 17.2%

〈그림 1-2-50〉
분야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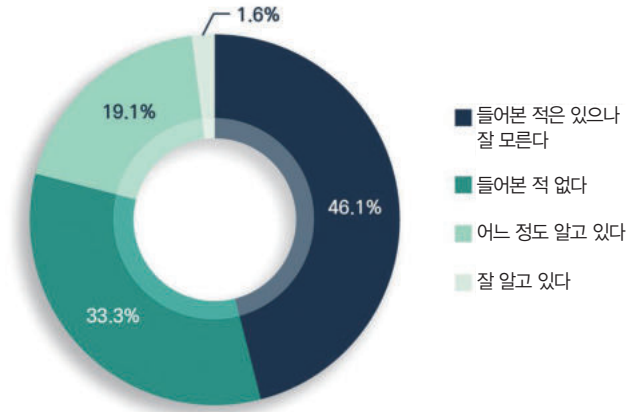


● 경남의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

- 도민들은 경남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들어 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는 답변이 46.1%(467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임
 - 다음으로 들어본 적 없다 33.3%(337명)로 조사됨

<그림 1-2-51>

비전 및 미래계획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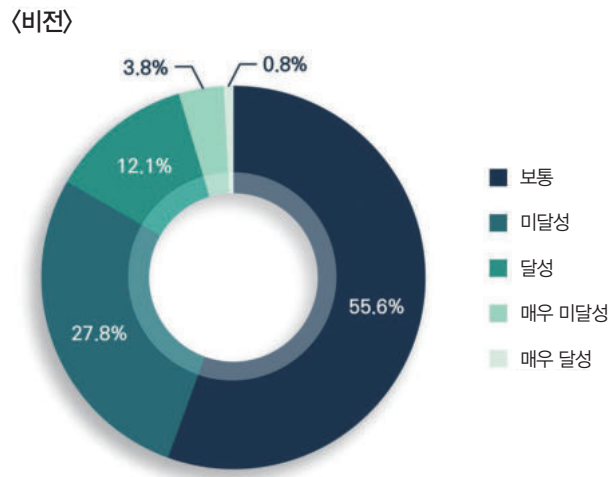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비전 및 목표 달성도

- ① 비전 : 성장과 복지의 순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남
 - 과거 비전 달성도에 관한 질문에서 '보통'(560명, 55.6%)의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미달성'(280명, 27.8%)이 나타남
 -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정적 답변은 31.6% : 미달성(280명, 27.8%), 매우 미달성(38명, 3.8%)
 - 긍정적 답변은 12.9% : 달성(122명, 12.1%), 매우 달성(8명, 0.8%)

<그림 1-2-5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비전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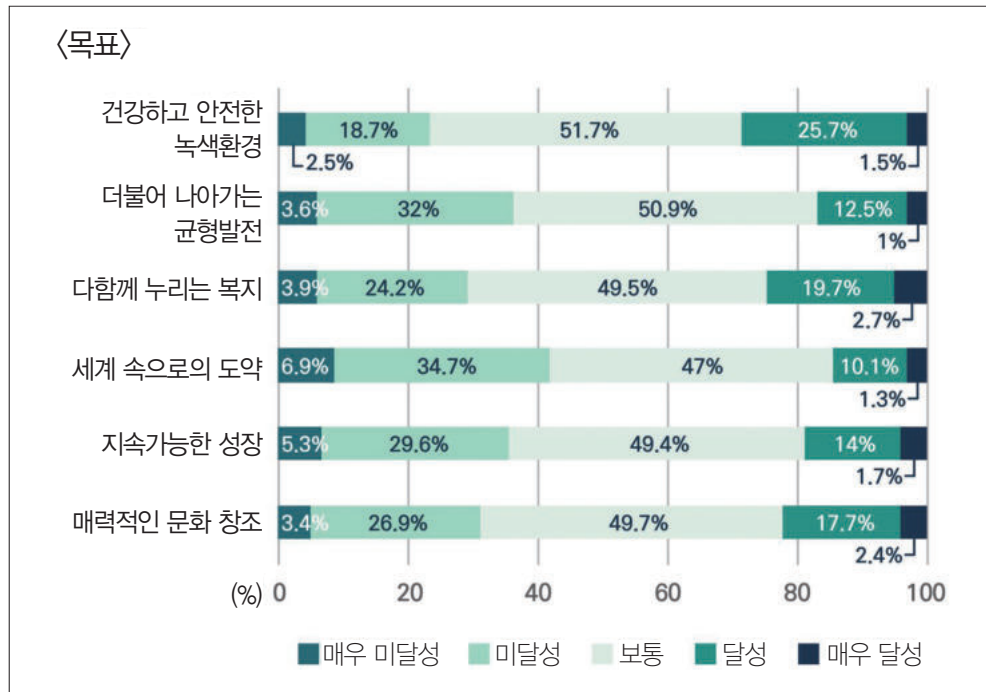


② 목표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6가지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 “다함께 누리는 복지”, “세계 속으로의 도약”, “지속가능한 성장”, “매력적인 문화 창조”로 제시됨
- 목표별 달성 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보통”을 답한 응답의 비율이 가장 높음. 또한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부정적 답변(미달성, 매우 미달성)비율이 높음
- 특히나 “세계 속으로의 도약”은 부정적 답변이 41.7%로 6개의 목표 중 가장 미달성 정도가 높다는 인식이 있음
- 건강하고 안전한 녹색환경의 긍정적 답변은 27.2%, 부정적 답변은 21.2%
- 더불어 나아가는 균형발전의 부정적 답변은 35.6%, 긍정적 답변은 13.5%
- 다함께 누리는 복지의 부정적 답변은 28.1%, 긍정적 답변은 22.4%
- 세계 속으로의 도약은 부정적 답변 41.7%, 긍정적 답변 11.4%
- 지속가능한 성장의 부정적 답변은 35.0%, 긍정적 답변 15.7%
- 매력적인 문화 창조는 부정적 답변이 30.3%, 긍정적 답변 20.1%

(그림 1-2-5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목표
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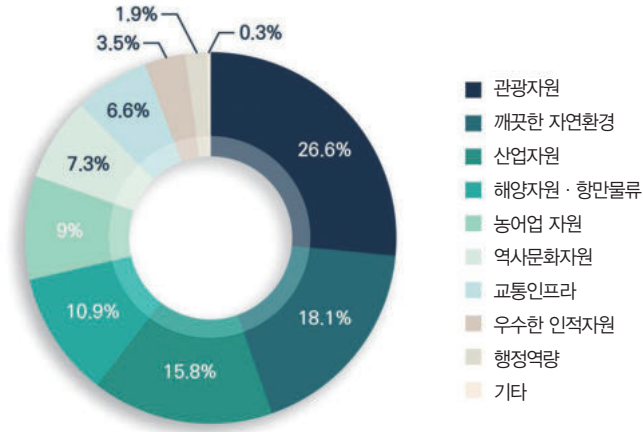


● 현재 경남의 가장 큰 강점

- 경남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관광자원(450명, 26.6%) 다음으로 깨끗한 자연환경(306명, 18.1%)으로 경남 본연의 자연자원과 관련한 답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강점 중 가장 답변이 낮았던 항목은 행정역량(32명, 1.9%)과 우수한 인적자원(60명, 3.5%)으로 조사됨

<그림 1-2-54>

현재 경남의 강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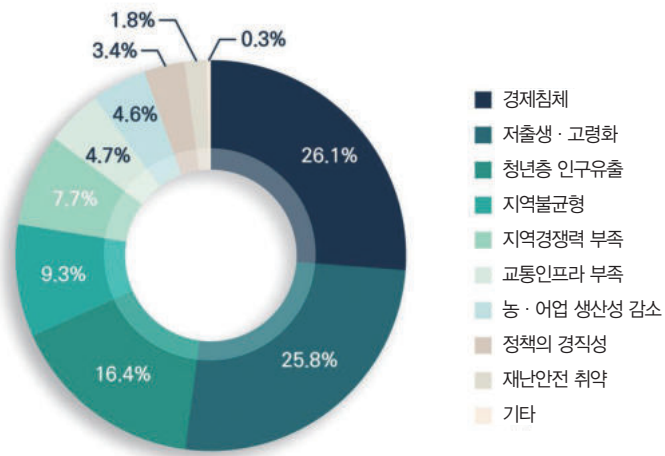


● 현재 경남의 가장 큰 약점

- 도민이 생각하는 경남의 큰 약점은 경제침체(498명, 26.1%), 저출생·고령화(492명, 25.8%)로 나타남
- 세 번째로 청년층 인구유출(313명, 16.4%)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와 연계하여 인구구조의 문제, 경제침체와 관련하여 경제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그림 1-2-55>

현재 경남의 약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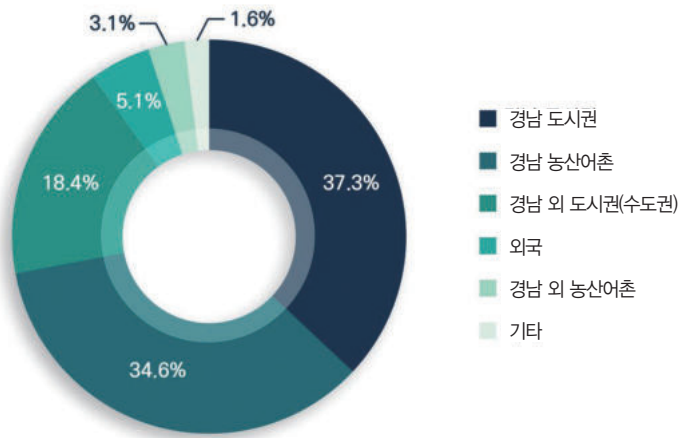
(2) 경남의 미래상 및 방향

● 20년 후(2040년) 살고 싶은 곳

- 20년 후 살고 싶은 곳에 대한 질문에 경남 내를 답한 비율이 71.9%로 도출됨
- ‘경남도시권에서 살고 싶다’(376명, 37.3%)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경남 농산어촌(348명, 34.6%)으로 조사됨
- 경남 외는 26.5%(265명)로 그 중 5.1%(51명)는 해외 거주를 희망함

(그림 1-2-56)

20년 후 살고 싶은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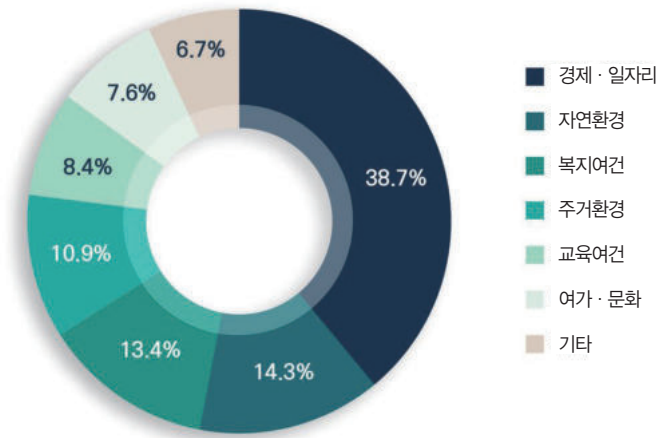


● 경남을 떠나고 싶은 큰 이유

- 경남을 떠나고 싶은 큰 이유는 경제·일자리(46명, 38.7%)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자연환경(17명, 14.3%)과 복지여건(16명, 13.4%)으로 나타남

(그림 1-2-57)

경남을 떠나고 싶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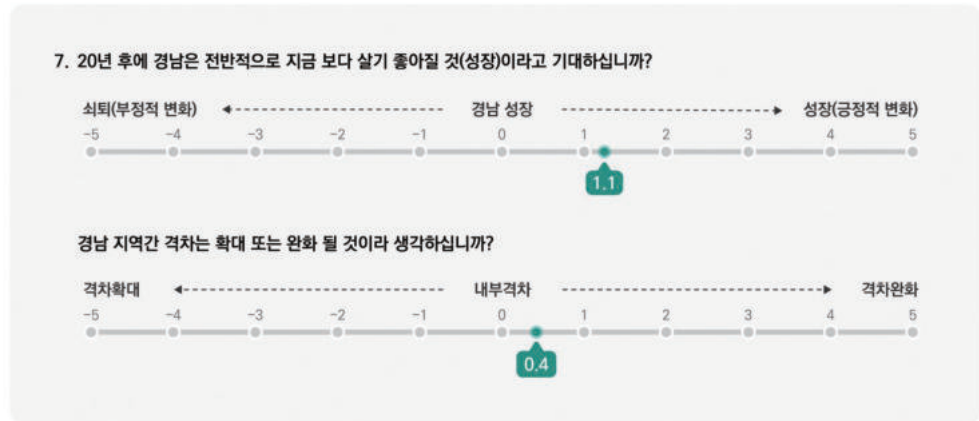


● 20년 후 경남은 전반적으로 살기 좋아질 것(성장)이라고 기대하십니까?

- 20년 후 경남의 성장에 대해 긍정적 변화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 변화 보다 소폭 높게 나타남
- 경남 지역간 격차에 대해서는 내부격차가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으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58>

현재 경남의 성장과 지역 간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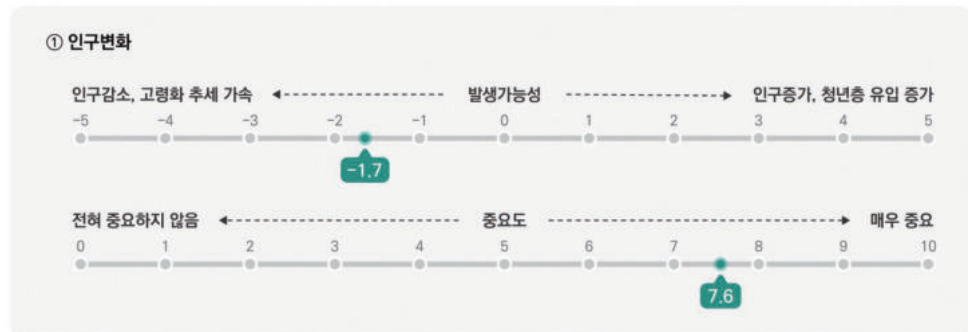


① 인구변화

- 인구변화 측면에서는 인구감소, 고령화 추세 가속과 같은 부정적 방향(-1.7점)으로 예상함
- 인구변화의 문제의 중요도는 0~10점 중 7.6점으로 도민들이 인구변화의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앞선 경남의 약점 답변과 더불어 도민들은 경남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속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59>

현재 경남의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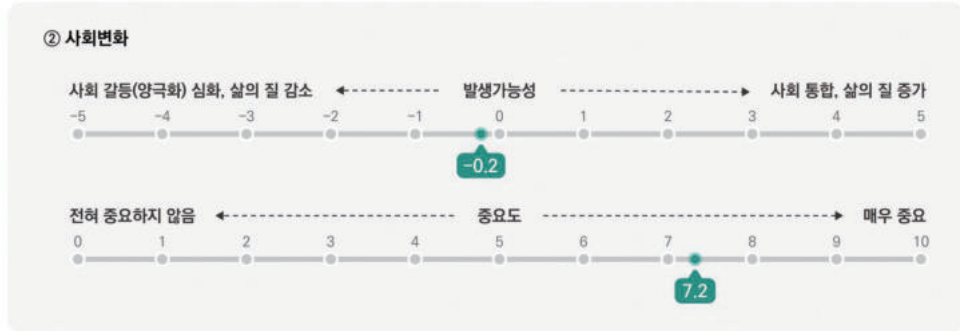


② 사회 변화

- 사회변화와 관련하여 사회갈등(양극화) 심화, 삶의 질 감소의 방향으로 예측하는 평균 점수(-0.2점)가 형성됨
- 사회변화에 대한 중요도는 7.2점으로 경남에 있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음

<그림 1-2-60>

경남의 사회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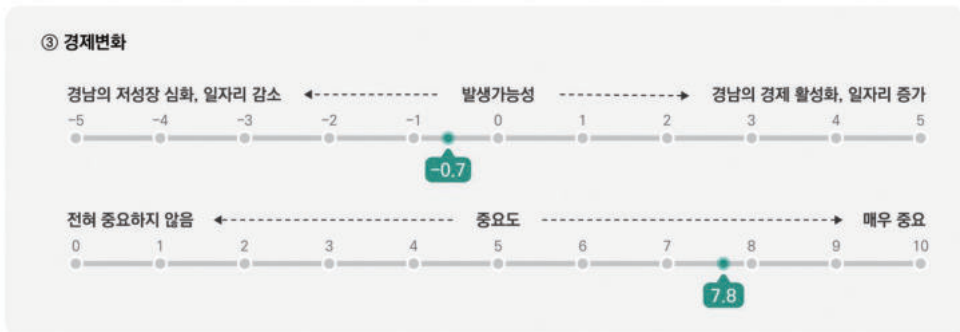


③ 경제 변화

- 앞으로의 경남의 경제 변화 전망에서는 부정적 방향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평균 점수는 -0.7점으로 형성되었으며, 중요도는 7.8점으로 형성됨
- 경제의 변화에 대하여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지만, 도민들은 경남의 미래에 대하여 저성장과 일자리 감소를 예상함

<그림 1-2-61>

경남의 경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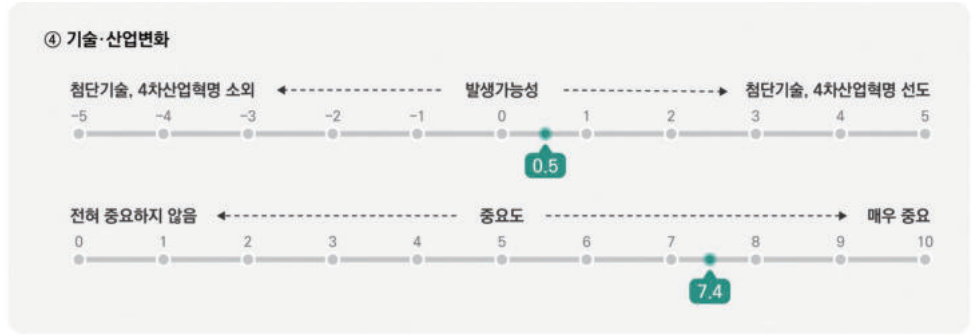


④ 기술 · 산업 변화

- 기술 · 산업변화는 첨단기술, 4차 산업혁명 선도와 같은 긍정적 방향의 점수(0.5점)가 도출됨
- 중요도는 7.4점으로 기술 · 산업변화는 경남의 미래에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1-2-62>

경남의 기술·산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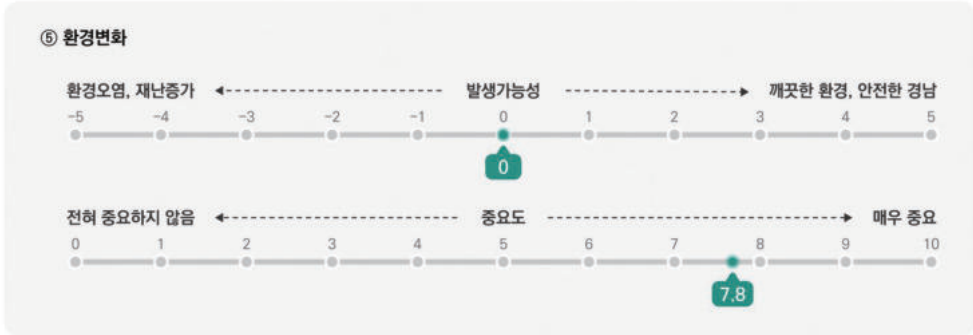


⑤ 환경변화

- 환경변화에 대한 중요도는 7.8점으로 경제변화와 함께 가장 높은 중요도가 도출됨
- 하지만, 부정적 방향(환경오염, 재난증가)과 긍정적 방향(깨끗한 환경, 안전한 경남) 어느 방향에도 치우치지 않음(0점)

<그림 1-2-63>

경남의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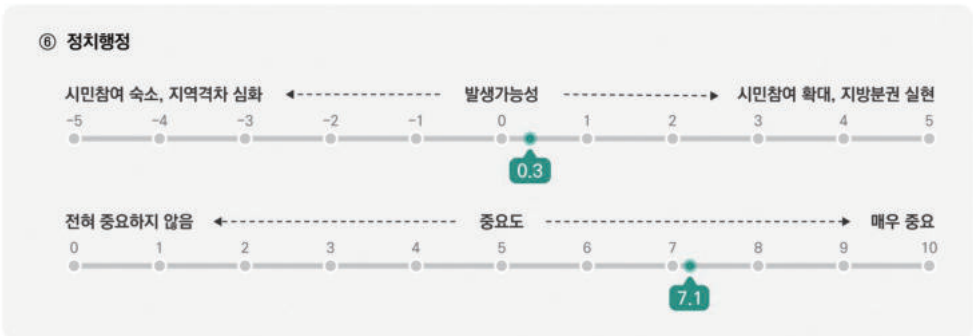


⑥ 정치행정 변화

- 정치행정의 변화는 시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실현과 같은 긍정적 방향(0.3점)으로 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정치행정의 중요도는 7.1점으로 경남의 변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됨

<그림 1-2-64>

경남의 정치행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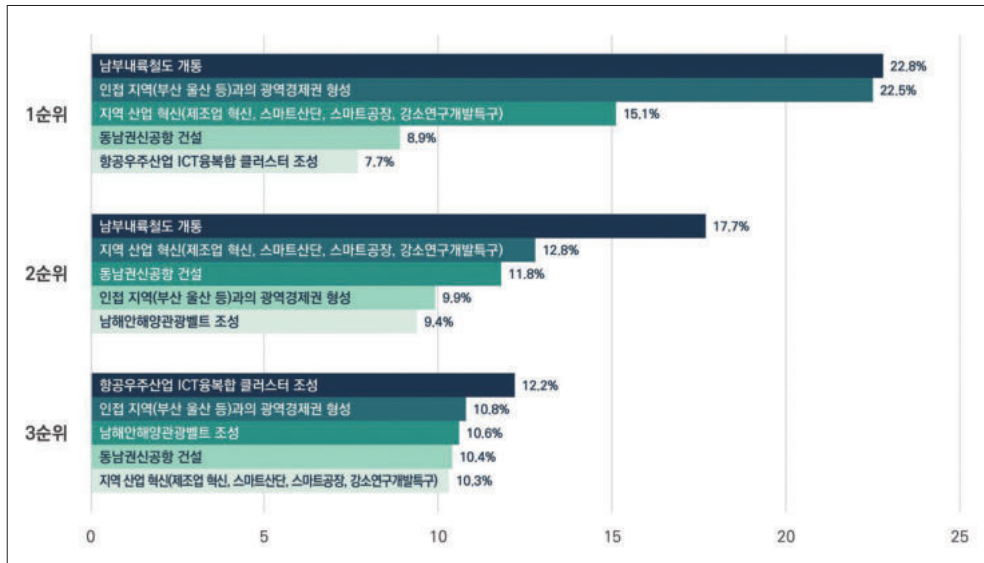


●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

- 경남에서 추진하는 주요한 12개의 사업 중 변화에 영향력을 끼칠 1, 2, 3순위를 질문함
- 도민들은 '남부내륙철도 개통'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남부내륙철도 개통은 1순위, 2순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을 보임
- 다음으로 인접 지역(부산, 울산 등)과의 광역경제권 형성, 지역 산업 혁신(제조업 혁신, 스마트산단, 스마트공장, 강소연구개발특구),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1, 2, 3순위 내에 상위권을 차지함

(그림 1-2-65)

경남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20년간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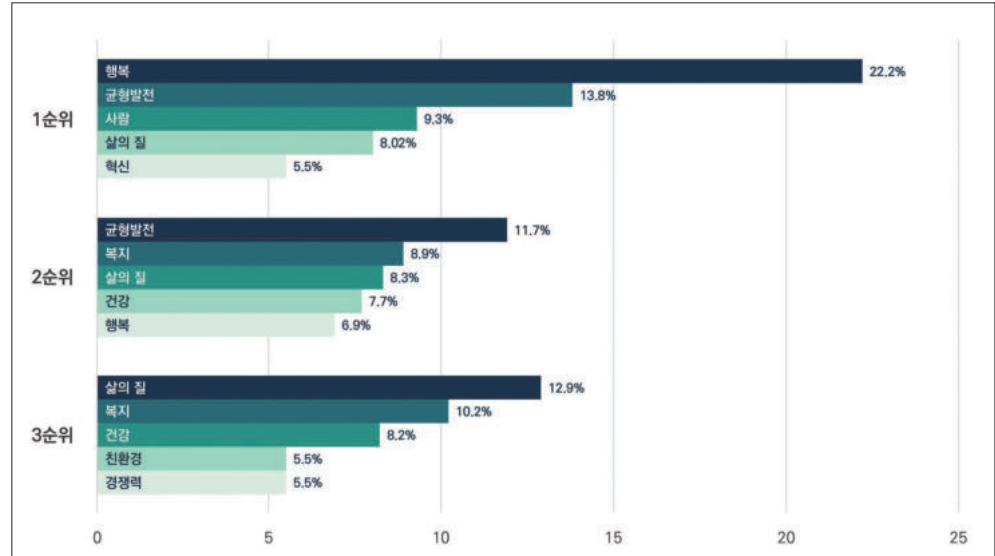


●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

-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 핵심 가치에 대한 우선순위는 28개의 가치 중 주요한 핵심 가치를 3순위까지 선정하게 함
- 1순위에서는 행복이 가장 주요한 미래 핵심 가치로 선정되었음. 다음으로 균형발전, 사람 등의 순임
- 행복 22.2%, 균형발전 13.8%, 사람 9.3%, 삶의 질 8.02%, 혁신 5.5%
- 2순위에서는 균형발전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복지, 삶의 질 등의 순임
- 균형발전 11.7%, 복지 8.9%, 삶의 질 8.3%, 건강 7.7%, 행복 6.9%
- 3순위는 삶의 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복지, 건강 등의 순으로 도출됨
- 삶의 질 12.9%, 복지 10.2%, 건강 8.2%, 친환경 5.5%, 경쟁력 5.5%
- 전체적인 답변을 살펴보면 도민들은 행복, 균형발전, 복지, 삶의 질, 건강의 키워드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개인적 삶의 만족에 대한 가치관들을 핵심적으로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66〉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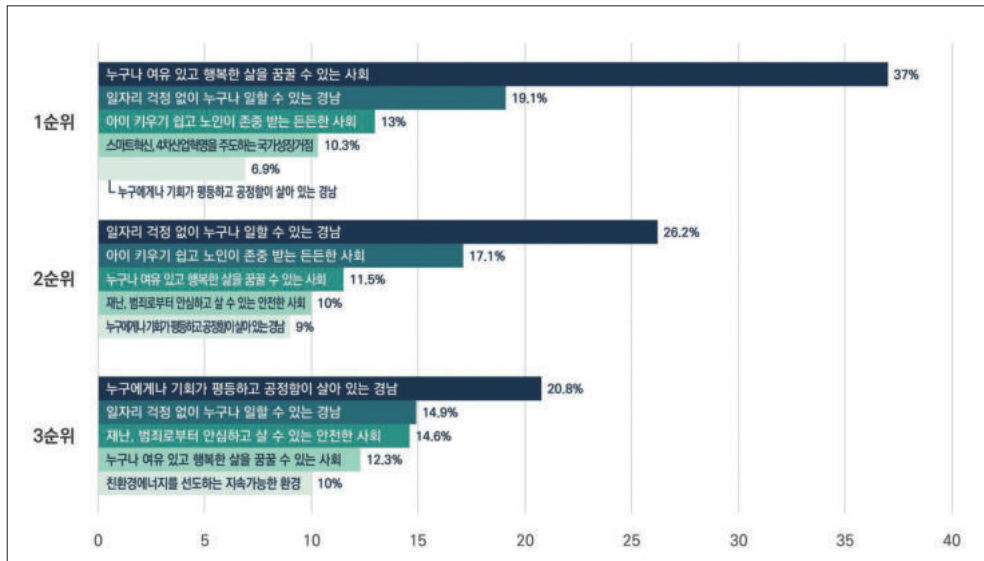


● 2040년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목표) 중 가장 중요한 것

-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 9가지를 제시하고 주요 미래상을 3순위까지 선정함
- 1순위에서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37.0%)가 가장 많은 호응을 얻음
 -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 : 19.1%
 - 아이 키우기 쉽고 노인이 존중 받는 든든한 사회 : 13.0%
 - 스마트 혁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 성장 거점 : 10.3%
 -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경남 : 6.9%
- 2순위에서는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26.2%)이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아이 키우기 쉽고 노인이 존중 받는 든든한 사회 : 17.1%
 -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 : 11.5%
 - 재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10.0%
 -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 있는 경남 : 9.0%
- 3순위에서는 “누구에게나 기회가 평등하고 공정함이 살아있는 경남”(20.8%)을 선택함
 - 일자리 걱정 없이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남 : 14.9%
 - 재난,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 : 14.6%
 - 누구나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사회 : 12.3%
 - 친환경에너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 10.0%
- 미래 핵심 가치와 함께 미래상 또한 “행복”에 대한 가치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 1-2-67>

경남이 추구해야 할 미래상(목표)



4) 온라인 의견

- 경남1번가의 932건(도민이 바라는 행정 역할), 도민 아이디어 255건(도민이 바라는 경남 미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민 제안 701건(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을 통해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 의견 수렴

(1) 도민이 바라는 행정 역할

- 경남1번가를 통해 도출된 도민이 바라는 행정의 역할에서 가장 빈도가 높게 나온 단어는 지원이며, 다음으로 지역, 경남, 운영, 설치, 교육, 사업 등이 나타남
- 행정이 경남의 사업, 교육 등의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운영하고 지원하는 것을 바람

<그림 1-2-68>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2) 도민이 바라는 경남미래

-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에 대한 핵심 키워드는 아이들, 행복, 미래, 산업, 문화, 도시, 일자리 등으로 미래 세대와 삶과 공간에 대한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나타남

<그림 1-2-69>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3)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핵심 가치

-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한 핵심 가치로는 교육, 환경, 미세먼지, 필요, 지역, 일자리, 농업 등이 도출됨
- 지속가능한 경남을 위해 교육, 환경과 같은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가치가 도출됨

<그림 1-2-70>

분야별 경남미래
핵심 가치 키워드



3. 도민 의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 도민이 생각하는 경남의 가장 큰 강점은 관광자원, 자연환경, 산업자원으로 나타남. 강점은 미래 긍정적 예측과 연계되어 경남의 관광산업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도민원탁회의에서 경남의 강점은 관광자원 풍부, 산업의 메카 등의 순으로 조사됨
 -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관광자원, 깨끗한 자연환경, 산업자원의 순으로 나타남
 - 경남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자원과 산업자원들을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강점은 미래의 긍정적 측면과도 연계할 수 있음

- 저출생·고령화, 지역불균형, 경제침체를 경남의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또한 도민들은 미래의 인구감소와 성장동력 저하라는 부정적 측면을 우려하고 있음
 - 도민원탁회의에서 저출생·고령화, 지역의 불균형 등의 순으로 경남의 약점이 나타남
 - 도민 설문조사에서는 경제침체, 저출생·고령화 등이 경남의 약점으로 조사됨
 - 또한 설문조사에서 20년 후 거주지에 대한 답으로 경남 외를 선택한 인원 중 이유를 묻는 설문에 “경제·일자리”의 문제를 이주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음
 - 도민들은 경남 부정적 미래 모습에 대하여 인구감소, 성장동력 저하, 경제 침체를 가장 높게 선택함

- 도민들은 행복, 삶의 질, 복지와 같은 질 높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균형발전과 같은 경제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 도민 설문조사에서 경남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미래 핵심 가치는 행복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균형발전, 복지, 삶의 질 등이 나타남
 - 또한 미래상에 대한 질문에서 ‘행복’, ‘일자리’를 핵심으로 한 미래상이 우선순위로 선택됨
 - 도민원탁회의에서는 제시한 여러 키워드와 미래상에서 ‘행복’을 경남의 핵심 키워드로 선정함

- 또한 미래세대의 교육, 환경, 행복을 고려하는 지속가능성을 기반한 경남의 미래 방향을 선호하고 있음
 - 온라인 의견을 살펴보면 도민이 바라는 경남미래에서 아이들, 행복, 도시, 미래, 환경, 산업, 일자리, 사람, 사회 등이 핵심 키워드로 도출됨. 이는 도민들이 미래세대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환경, 경제, 사회와 같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지속가능한 경남”의 키워드에 교육, 미세먼지, 필요, 환경 등의 순으로 나타남. 환경 등과 같은 물리적·공간적 측면을 관리하는 것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는 것이 주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인력 양성,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 지역격차 해소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함**
 -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그중 경남의 고급인력 양성과 스마트화를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도시환경 전문가들은 교통인프라, 인구 감소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주거환경, 안전 환경 등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경남의 미래를 위해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여러 여건(공간, 복지, 인프라)의 변화를 고려함
 - 사회관광 전문가들은 지역문화 쇄신과 배리어 프리, 다양성과 소동, 젊은 농촌 등의 키워드를 제시하였으며 미래에 대하여 인구소멸과 격차(교육, 의료, 장애인 시설 등)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편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제1절 비전 및 목표 수립 방향

제2절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제1장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제1절

비전 및 목표 수립 방향

1. 비전 수립 배경

1) 비전 수립에 대한 인식 변화

● 과거의 비전 수립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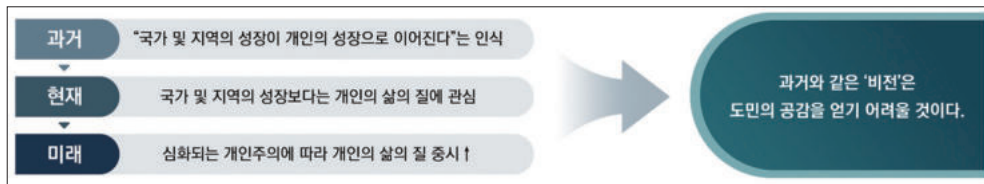
-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기본인식에 바탕으로 두고 수립
 - 국가 및 지역의 발전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따라온다는 인식
 - 국가 및 지역 단위의 비전이 주로 경제성장 및 발전을 대표하는 가치 및 단어 사용

● 현재의 인식 변화

- 도민의 입장에서 국가 및 지역의 성장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함
 - 과거와 같이 국가 및 지역의 성장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인식보다는 당면한 개인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즉 과거와 같은 비전은 도민의 호응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공감을 받지 못한 비전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음

<그림 2-1-1>

비전 수립에 대한 인식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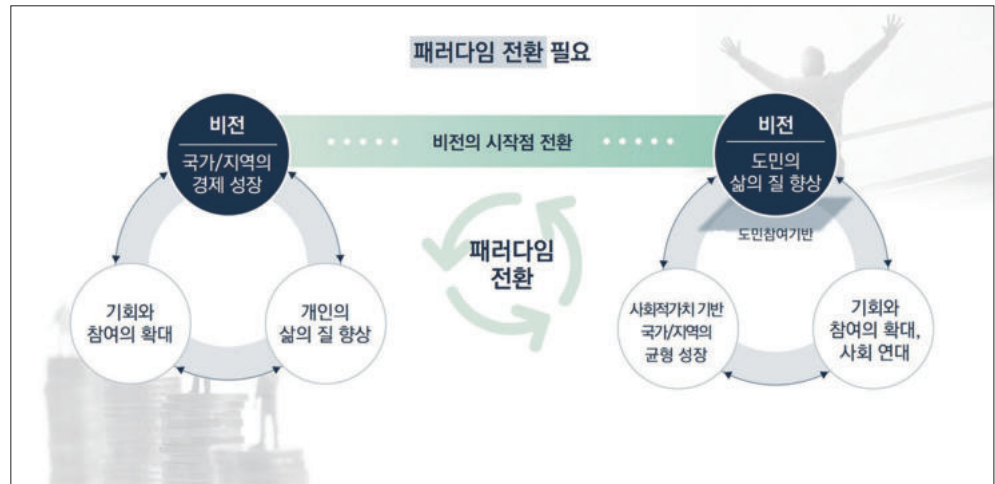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 심화되는 개인주의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정책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 제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증가
 - 국가 및 지역의 경제 성장에 기반을 둔 비전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하는 비전 수립이 필요함
 - 이러한 비전은 국가 및 지역의 균형 성장과 경남도민의 기회와 참여의 확대, 사회 연대에 기반을 두어야 함

<그림 2-1-2>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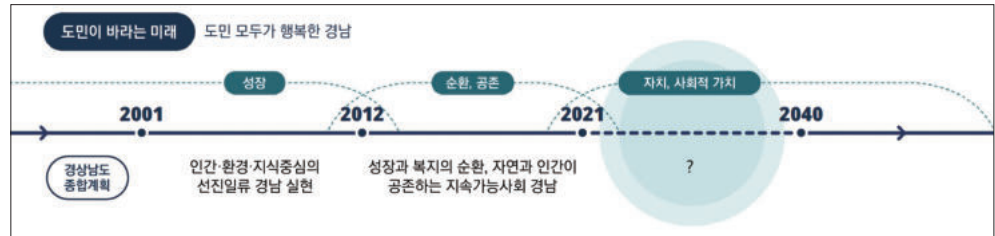
2)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지향점 제시 필요

● 미래 가치가 반영된 지향점 제시 필요

- 도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국가/세계적 추세에 따른 미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경남도의 지향점 제시 필요
 - 과거 핵심 가치가 성장, 순환, 공존 등이었다면, 앞으로 미래 가치가 반영된 지향점 제시 필요
 - 국가/세계적인 추세에 따르면 자치, 사회적 가치 등이 미래의 핵심 가치로 예상됨
 - 자치와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미래 경남의 지향점을 비전으로 제시 필요

<그림 2-1-3>

미래 가치가 반영된 지향점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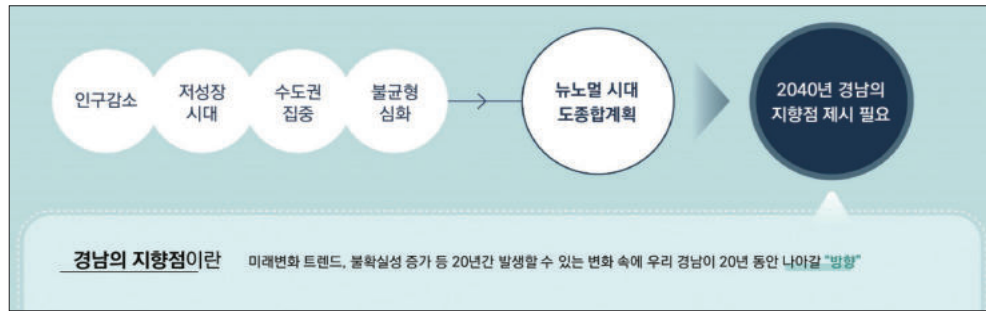


●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의 지향점 제시 필요

- 기존 사회적 여건과 달리 인구 감소 및 저성장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놓여있는 시대의 종합계획으로서 역할 중요
 - 인구감소, 저성장, 수도권 집중, 불균형 심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남도의 역할과 방향 제시 필요
 - 이러한 미래변화 트렌드 및 불확실성 증가 등 20년간 발생할 수 있는 변화 속에 우리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향점 제시 필요

〈그림 2-1-4〉

인구 감소 및 저성장 시대의 지향점 제시 필요



2. 경남미래2040 비전 수립 방향

1) 경남도민 삶의 질 향상

● 경남도민 삶의 질의 지속가능한 향상

-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40 비전 제시
 - 사회적 트렌드 변화와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종합했을 때,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전과 목표 수립 필요
 - 경남도민 삶의 질 향상이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비전 제시 필요
 - '지속가능성'은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기반을 둔
- * UN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 국가 내 불평등 해소, 기후변화 대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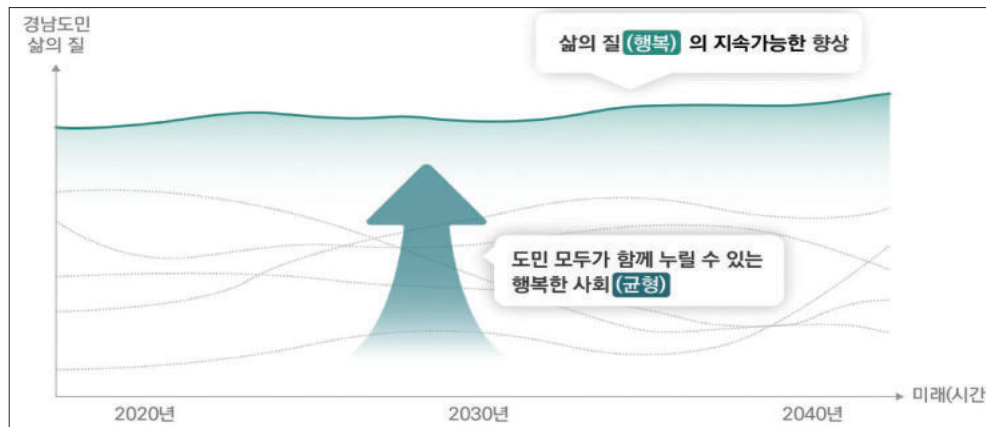
2) 균형사회 조성

●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회

-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균형적 가치가 적용된 비전 제시
 - 경남도민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비전 제시 필요
 -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남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사회 조성

〈그림 2-1-5〉

경남미래2040 비전 수립 방향



3. 경남미래2040 전략 수립 방향

1)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변화

● 미래 변화 트렌드 분석

- 기후변화, 수도권 집중, 저성장 인구감소 등 미래 변화 트렌드 분석
- 과거 데이터 및 국내외 여건 등을 바탕으로 미래변화 트렌드에 대한 과학적 분석

● 경남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 예측

- 경남도민 삶의 질을 위협하는 충격 발생 및 이에 따른 시나리오 예측
- 충격 발생과 회복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여 경남도의 전략 제시

● 예측되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변화를 위한 전략 제시

- 예측되는 미래에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 제시
- 국가적/세계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기반하여 경남도의 적극적인 준비와 변화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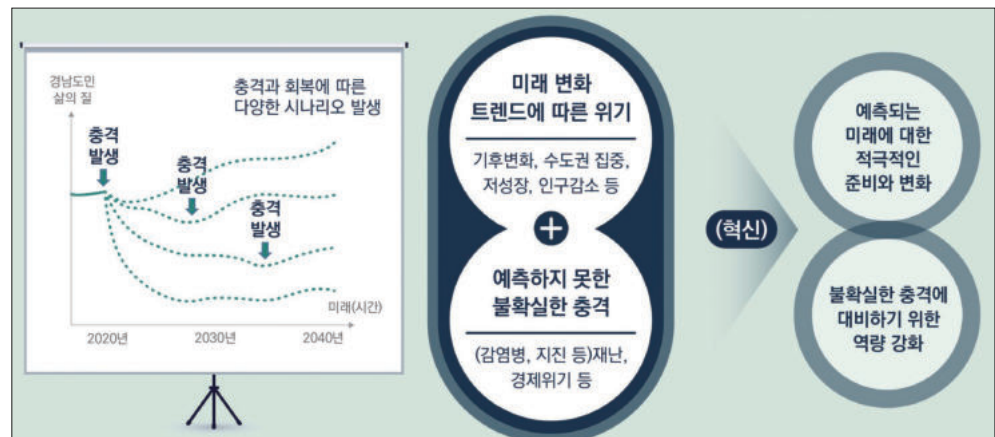
2)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 불확실한 충격 발생 시 경남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량 강화

- 감염병, 지진 등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역량 강화
- 불확실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자치역량 강화 등의 전략 방안 제시

〈그림 2-1-6〉

경남미래2040
전략 수립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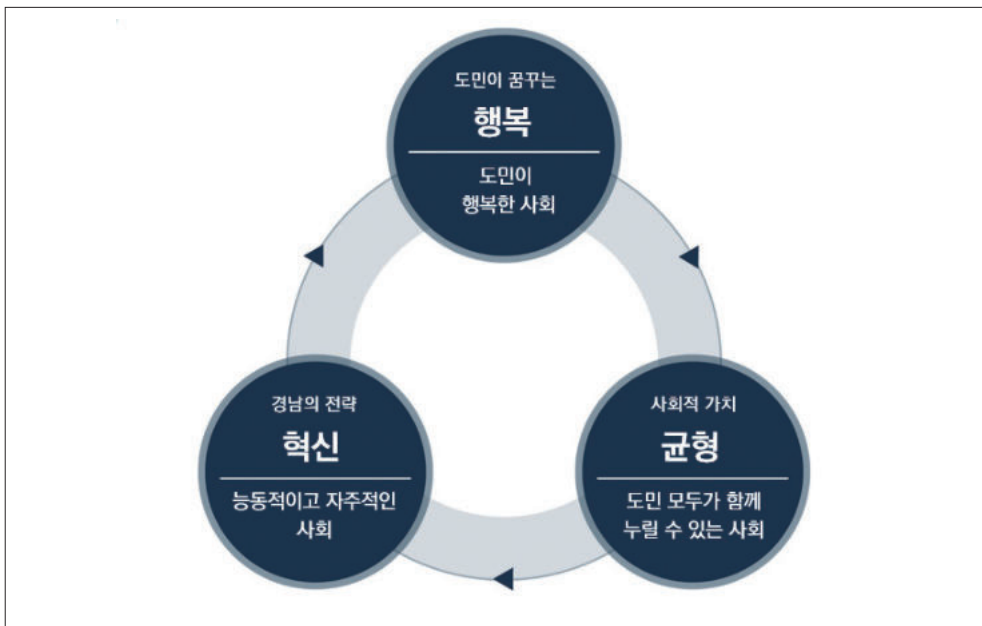
제2절

경남미래 2040 비전 및 목표

1. 핵심 가치 선정

-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바탕으로 ‘행복’, ‘혁신’, ‘균형’의 3가지 핵심 가치 선정
 - 도민참여단 원탁회의,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한 경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과 경남의 미래변화 트렌드를 기반으로 경남이 추진해야 할 전략을 핵심 가치로 선정
 - ‘행복’ : 도민이 행복한 사회
 - ‘혁신’ :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사회
 - ‘균형’ :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

〈그림 2-1-7〉
경남미래2040
핵심 가치



- 미래 핵심 가치 슬로건 : “우리는 혁신도(도) 함께시(시) 행복군(군)에 삽니다.”
 - 경남미래2040 핵심 가치를 경남도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슬로건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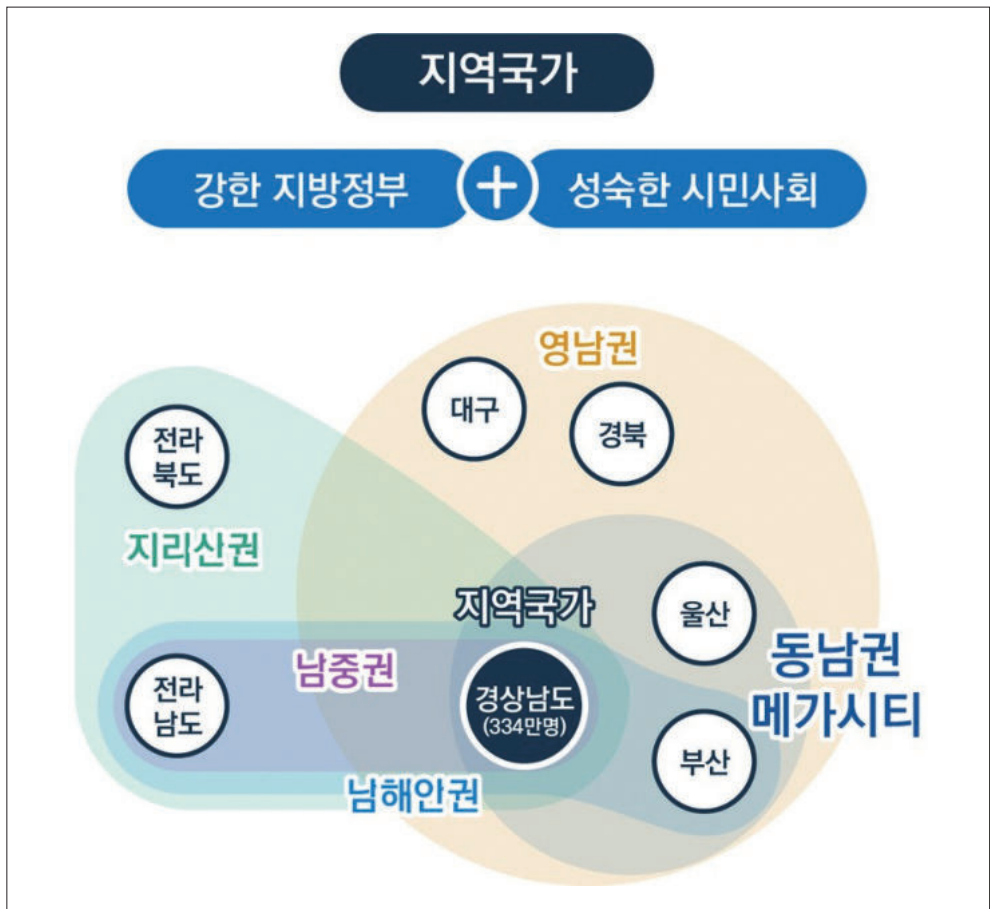
〈그림 2-1-8〉
경남미래2040
핵심 가치 슬로건



2. 경남미래2040 비전

비전 **지속가능한 지역국가, 더 좋은 경남**

“**지역국가**” :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고 정책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지방정부
 “**더 좋은**” : 성숙한 지역정체성을 발전시키며, 함께 행복한 시민사회



* 지역국가란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정책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지역 단위를 의미하며, 경남은 유연한 광역권(동남권 메가시티, 영남권, 남중권, 남해안권, 지리산권 등)을 통해 자립적인 경제권을 형성 하고 지방자치가 실현된 사회

3. 경남미래2040 목표 및 전략

- **목표 : 경남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더 좋은 행복사회)**
 - ‘더 좋은 행복사회’는 도민 삶의 질의 지속가능한 향상과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균형사회를 의미
- **‘더 좋은 행복사회’를 구체화하여 4가지 사회상 제시**
 - ① 미래 지향 혁신사회
 - ②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 ③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 ④ 생명 존중 안전사회

〈그림 2-1-9〉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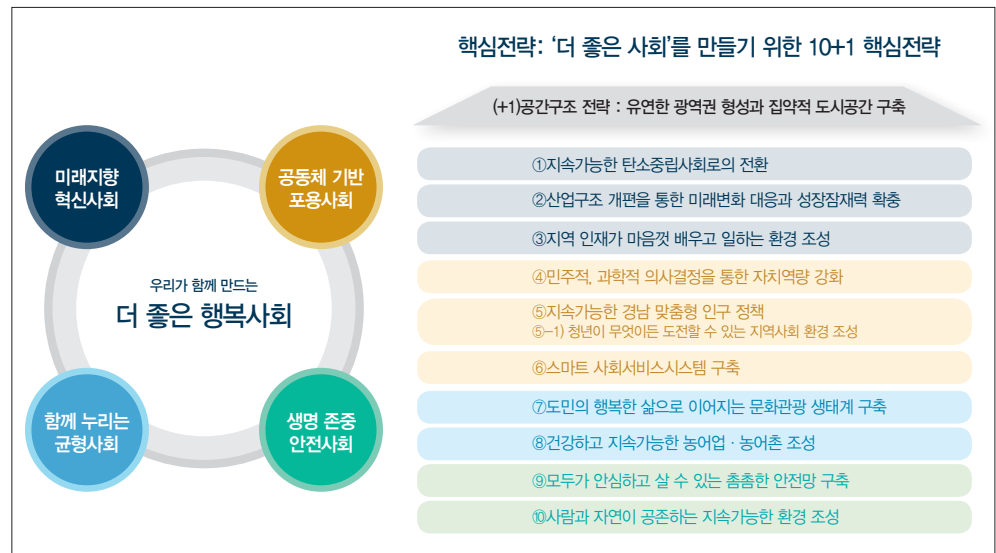
- **경남미래2040 비전 모니터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경남비전 2040”**
 - 비전 수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비전과 정책의 정합성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경남미래2040 비전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도민과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향후 수립될 수 있는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 및 제5차 경상남도 종합계획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더 좋은 행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10+1 핵심전략 수립

- 1) ‘미래 지향 혁신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전략
 - 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 ②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 ③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 2)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3대 핵심전략
 - ④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⑤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 ⑤-1)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⑥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3)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실현을 위한 2대 핵심전략
 - ⑦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 ⑧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 농어촌 조성
 - 4) ‘생명 존중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2대 핵심전략
 - ⑨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⑩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1) 공간구조 전략 : 유연한 광역권 형성과 집약적 도시공간 구축

〈그림 2-1-10〉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경남미래2040 계획지표

제1절 핵심지표

제2절 부문별 지표

제2장

경남미래2040 계획지표

제1절 핵심지표

● 경남미래2040 핵심 계획지표 선정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
- 인구 334만
- GRDP 210조(명목성장률 3% 목표)
- 경남 1시간 이동 생활권
- 관광객 2,000만명
- 기대수명 87세 시대(현재 81.9세)
- 경남도민 행복지수 전국 3위권
- 성평등 레벨 2 이상 유지
- 재생에너지 비율 40%
- 재정자립도 50%
- 경상남도 지역안전지수 1등급(전 분야)
- 청년 인구 순유입 +α

〈그림 2-2-1〉

경남미래2040
비전 및 목표



제2절

부문별 지표

〈표 2-2-1〉

경남미래2040
부문별 지표

●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부 부문별 지표 선정 및 목표 제시

- 32대 부문별 89개 부문별 지표 선정 및 미래 목표 제시

부문	핵심지표	현재 수준	2030년	2040년	연관 전략	
민생경제	실질 경제성장률	0.6%	2.0%	2.0%	핵심전략 2	
	가계 경상소득(월 환산)	5,187만원 (432만원)	7,180만원 (598만원)	9,649만원 (804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179개 협동조합 730개	사회적기업 300개 협동조합 1,500개	사회적기업 500개 협동조합 2,000개	핵심전략 3	
일자리	고용률	61.3%	64.5%	70.0%	핵심전략 9	
	청년고용률(15~39세)	57.1%	61.0%	65.0%		
	산업재해율	6.15%	6.00%	5.70%		
농업 (농산촌)	농가소득	3,692만원	5,000만원	7,000만원	핵심전략 8	
	귀농 귀촌인	55,882명	90,173명	140,823명		
	농가당 경지면적	1.17ha	1.27ha	1.37ha		
어업 (어촌)	어업 생산량	57만 6천 M/T	70만 M/T	100만 M/T	핵심전략 8	
	어가인구	17,553명	20,000명	25,000명		
	어가소득	4,8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지역 산업	1인당 GRDP (명목성장률 기준)	3,369만원	4,594만원	6,285만원	핵심전략 2	
	지식생산자 서비스 비중	10.4%	15.5%	20.5%		
	GRDP 대비 R&D 투자율	2.68%	3.5%	5.0%		
과학기술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6.5명	10명	15명	핵심전략 2	
	R-COSTⅡ 전국순위	15위	10위	5위		
	계획입지 면적 (개별입지→계획입지 유도)	52km ²	60km ²	65km ²		
산업단지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노후산단 증가 대응)	3개 지구	6개 지구	9개 지구	핵심전략 2	
	스마트산단 (산단 규모 大, 신규 산단 우선)	1개소	5개소	10개소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398건	1,102건	3,300건		
스마트 정보 인프라	공공와이파이 구축 건수	4,454개소	10,000개소	20,000개소	공간전략	
	스마트 커버리지	LTE(300mbps)	82.43%	99.0%		99.0%
		3bandLTE (1.2gbps)	44.23%	65.0%		99.0%
교통망	승용차 대도시 광역권 통행시간	43분	40분	35분	공간전략	
	대중교통 대도시 광역권 통행시간	93분	60분	30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률(평균)	V/C비 0.7	V/C비 0.6	V/C비 0.5		
	승용차 대비 농어촌버스 통행시간	180% (서비스수준C)	150% (서비스수준B)	120% (서비스수준A)		

〈표 2-2-1〉

경남미래2040
부문별 지표(계속)

부문	핵심지표	현재 수준	2030년	2040년	연관 전략
물류·항만	신항 배후단지 부가가치물류 비율	20%	40%	50%	핵심전략 2
	3자 물류 이용률	35%	50%	60%	
	전국 대비 물류업체 수	4.6%	6.0%	7.0%	
문화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0.2%	85%	90%	핵심전략 7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8개	0.10개	0.12개	
	콘텐츠산업 매출액 비중 (경남/전국)	1.3%	1.4%	1.5%	
관광	외래관광객 수	30만명	100만명	200만명	공간전략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24만명	27만명	30만명	
	관광지출액	3,4조원	4조원	5조원	
주거	자가 보유율	66.5%	70%	80%	공간전략
	주택 만족도	3.01점	3.4점	3.8점	
	주거환경 만족도	2.95점	3.2점	3.6점	
	공공임대주택 수	78,153호	100,000호	150,000호	
도시재생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발굴 건수	1건	13건	40건	핵심전략 10
	국비 공모 사업 선정 건수	33건	110건	200건	
	경남형 전문 인력 발굴	44명	300명	500명	
상하수도	누수율	19.0%	5.0%	4.0% 이하	핵심전략 10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5.0%	95.0%	97.0% 이상	
	하수도보급률	90.5%	91.1%	92.0% 이상	
수자원	하천유지유량 달성률	78.0%	90.0%	95.0% 이상	핵심전략 10
	수질 BOD(남지지점)	2.0mg/L	2.0mg/L 이하	2.0mg/L 이하	
	수질 T-P(남지지점)	0.038mg/L	0.035mg/L 이하	0.032mg/L 이하	
보건의료	기대수명	81.9세	85세	87세	핵심전략 6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6.6년	14.6년	12.6년	
사회복지	삶 만족도(지역사회보장계획)	61점	70점	80점	핵심전략 6
	인구십만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9.9개	12개	14.4개	
	인구십만명당 자살률	28명	25명	22명	
인구정책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	334만명	340만명	334만명	핵심전략 5
	행복지수	상위 40~60%	상위 20~40%	상위 20%	
	청년 인구 순유출	15,060명	4,000명 내외	±1,000명 이내	
여성가족	성평등 레벨	레벨 2~4	레벨 2 이상 유지	레벨 2 이상 유지	핵심전략 5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5%	60%	70%	
	광역 및 기초의원 여성 비율	19.8%	30%	40%	
교육	경남 소재 대학 졸업 비율 (경남대학졸업자 수/전국대학 졸업자 수)	4.1%	4.5%	5.0%	핵심전략 3
	대학졸업자 취업률	60.2%	70%	80%	

〈표 2-2-1〉

경남미래2040
부문별 지표(계속)

부문	핵심지표	현재 수준	2030년	2040년	연관 전략
체육	생활체육 참여율	69%	75%	80%	핵심전략 7
	인구만명당 공공체육시설	7.7%	10.7%	13.7%	
토지이용	도시지역인구 (콤팩트시티 구현, 인구집중)	290만명	295만명	293만명	공간전략
	개발제한구역 (해제잔여총량+추가수요대응)	458,96km ²	약 20km ² 해제	약 10km ² 해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특화지구	6개	50개	100개	핵심전략 1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발굴	0명	200명	400명	
	스마트기술 관련 민간기업 수	96개	200개	500개	
환경문제·관리	전기자동차/충전소 보급	4,683대/ 1,728기	140,000대/ 6,400기	600,000대/ 29,000기	
	RE100 달성기업 수	0개	100개	300개	
	초미세먼지(PM 2.5)	19 μ g/m ³ (2019년)	14 μ g/m ³	13 μ g/m ³	
에너지·자원	온실가스배출량	84,529천톤	(2017년 대비) 50% 감축	(2017년 대비) 60% 감축	핵심전략 1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5%	30%	40%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1개소	2개소	5개소	
경관계획	경관관련용도지구 면적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41,559,433m ²	50,000,000m ²	60,000,000m ²	
	산림보호구역 내 경관보호구역 면적*	1,195ha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안전·방재	지역안전지수	(평균) 2.7등급	(평균) 2등급	(전 분야) 1등급	핵심전략 9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218명	20% 저감	40% 저감	
	소방 골든타임률	65.3%	67.5%	70%	
행정계획	주민참여예산제	130억	500억	1,000억	
	주민자치회 실시	15.6%	50%	100%	
남북외교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0억	150억	300억	핵심전략 4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기초 지자체	7개	13개	18개	
	남북교류사업 규모	0억원	100억원	500억원	
재정계획	예산 규모	9.4조원	14조원	18조원	
	재정자립도	33.9%	40%	50%	
투자·재원조달	투자사업 사후관리 실적	-	총 투자사업의 20%	총 투자사업의 40%	
	민자사업 관리 실적	-	총 민자사업의 20%	총 민자사업의 40%	

* 전국 감소 추세

부문별 지표 활용 방안

- 경상남도 부문별 계획 및 시·군 종합계획 수립 시 해당 지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여건 변화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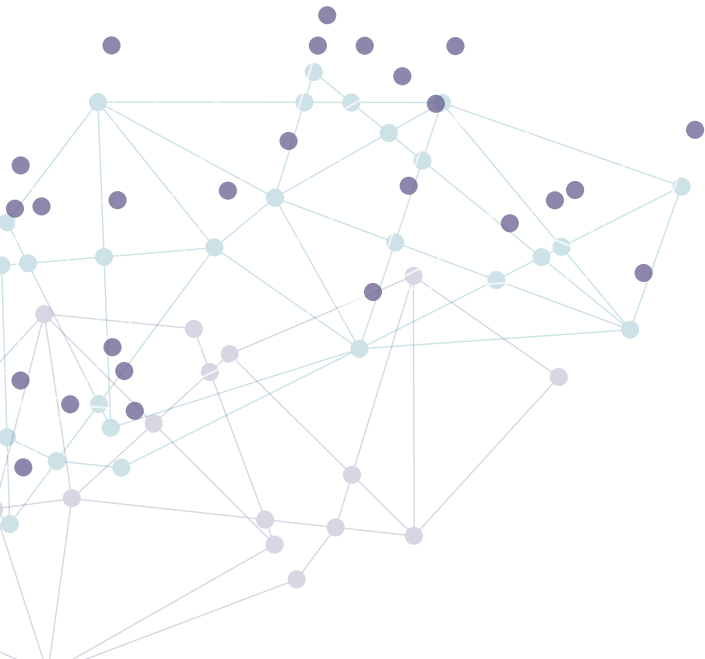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3편

경남미래2040 전략 계획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공간구조 전략

제1절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제2절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제1장

공간구조 전략

제1절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독자적 성장의 한계

- 도시지역 성장의 한계
 - 경남의 도시지역은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며, 동부권과 서부권 일부만 성장 중임
- 부산과 울산이 인접한 대도시권의 성장
 - 부산과 울산에 인접한 김해, 양산 등의 대도시권만 인구가 증가하고 대부분 감소함
-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 요구
 - 60년대 이후 국가 경제성장의 핵심지역이었으나 기술 혁신 한계로 성장 가능성 하락

2) 광역도시권(Mega City Region) 중심의 성장 추세

- 전 세계 광역도시권의 증가 전망과 생산량의 극대화
 - 인구 천만명 이상의 도시는 2030년 43개로 증가하고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함
- 2000년대 이후 광역도시권 중심의 성장권역을 정책적 육성
 - 미국 America 2050(2006), 일본 국토 그랜드 비전(2014) 등을 통해 광역도시권을 육성함

3) 유연한¹⁾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경남 중심의 광역권 형성

- 도시의 기능을 뭉치는 전략(Compact City)
 - 부산, 울산과 연계한 동부권의 창원, 서부권의 진주, 북부 지리산권 등 도시 기능을 집약함

1) 유연한 :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기능중심으로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자체간 연계·협력

-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전략(Network City)
 - 도시의 기능을 연결하는 철도, 도로 등 물리적 기반과 인재 육성 등 지역 플랫폼을 연계함
-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Mega City)
 - 경남을 둘러싼 도시권의 연계를 통한 기능적 연계와 집적을 통한 발전전략을 마련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 전략목표 : 경남의 유연한 광역권을 중심으로 국토 성장의 핵심지대 형성
- 정량목표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진입과 광역권별 공동과제 추진
 -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으로 진입을 위한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2) 경남 중심의 유연한 광역 공동체 형성

- 행정 공동체 구축 : 광역집행기관을 통한 지자체가 함께 구상하고 함께 실행하는 공동체
- 생활 공동체 형성 : 교통망 구축을 통해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 경제 공동체 구현 : 광역권을 대표하는 경제산업의 대전환을 통해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

3) 경남 중심의 2+3 광역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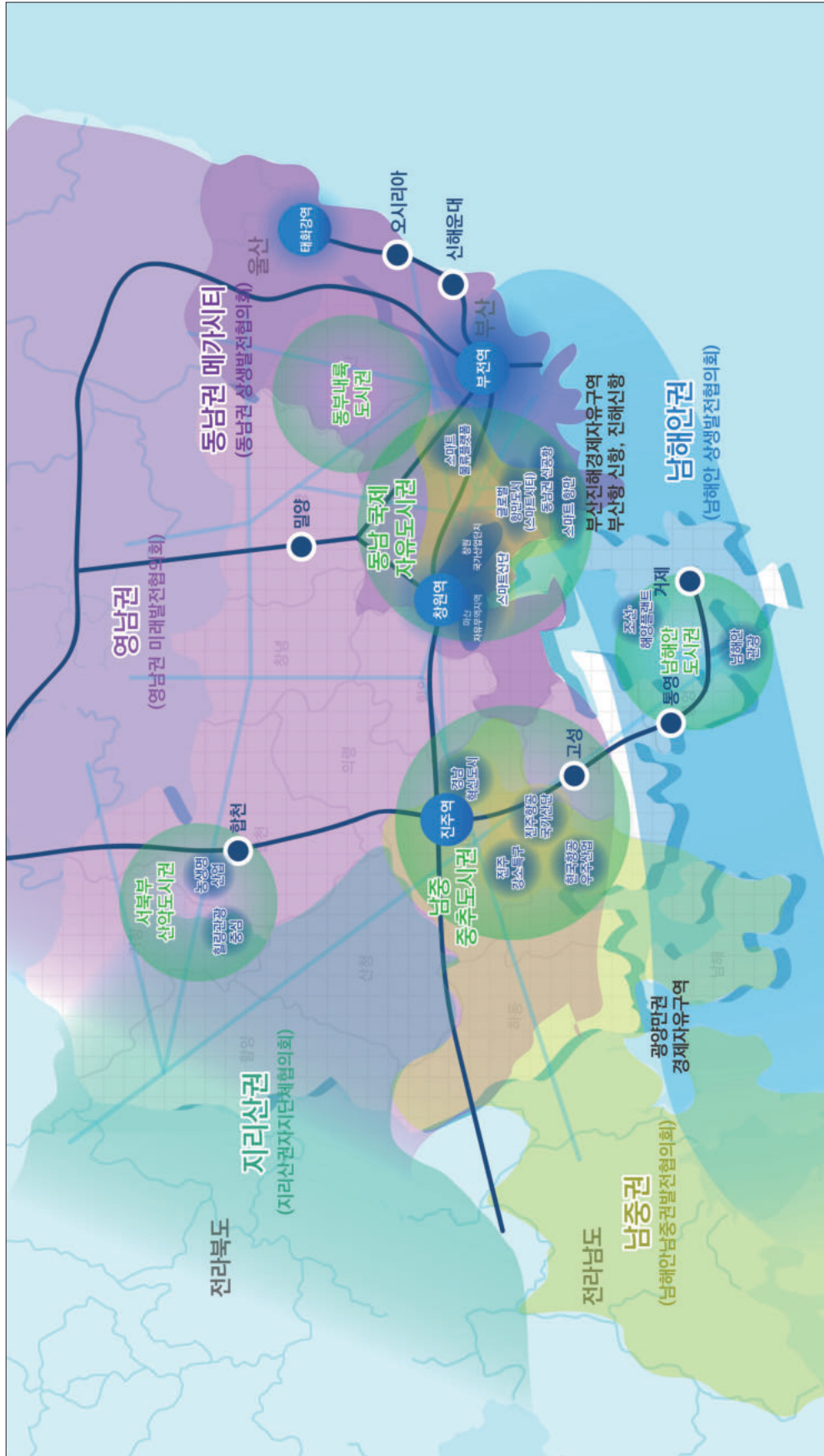
(1)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

- 동남권 메가시티²⁾ 확립
 - 부산, 울산, 경남 성장지대를 중심으로 국토 동남권 성장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
 - 동남권 메가시티와 대구·경북이 함께 더 큰 메가시티로 성장하여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킴

2) '동남권 메가시티' 또는 '부울경 메가시티'로 표현되며, 편의상 본 보고서에는 '동남권 메가시티'로 통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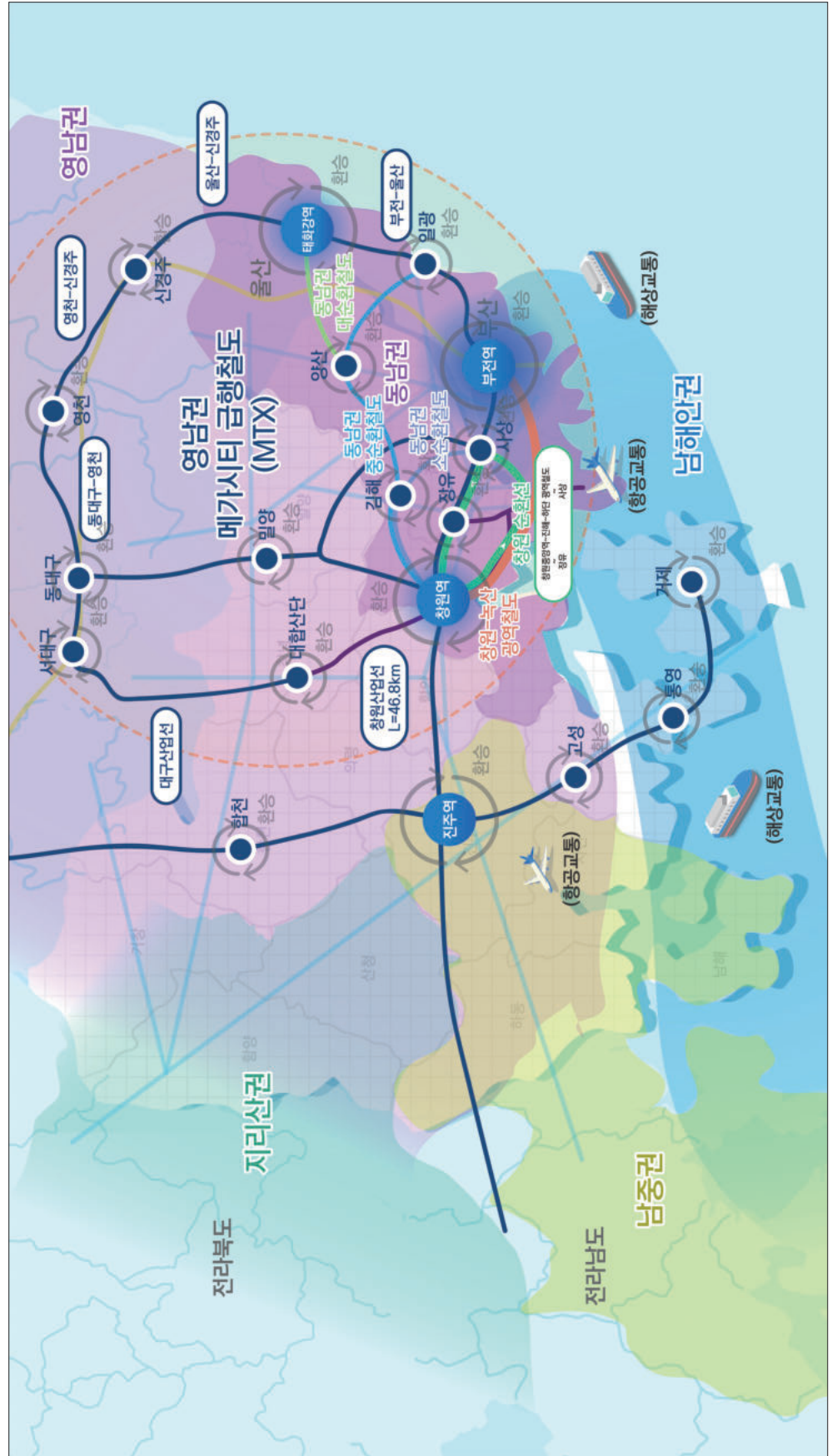
〈그림 3-1-1〉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공간 구상도



<그림 3-1-2>

「국토 남부권 중심, 유연한 광역권 형성, 교통망 구상도」



(2)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

●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

- 부산, 경남, 전남 등 남해안 권역의 문화, 관광, 산업의 성장축을 형성함

● 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

- 해양과 내륙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남중 중추 도시권을 형성하고 공동 발전사업을 추진함

● 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

- 국토 산림생태축의 시작점인 지리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사업을 추진함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동남권 성장권역 육성

(1) 동남권 메가시티 확립

● 행정 공동체 구축

- 부산·울산·경남의 행정기능을 위임하여 광역집행기관을 구성하여 동남권 메가시티 추진사업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며,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함
- 초기 '동남권 상생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고, 장기적으로 가칭 '동남권 광역특별연합'의 형태로 단계별 행정기능을 위임하여 기능을 강화함

● 생활 공동체 형성

- 부전-마산역 복선철도의 개설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의 30분대 생활권을 형성함
- 철도, 항만(부산신항, 진해신항), 공항(동남권 신공항) 등 3개의 교통 기능 강화를 통해 권역 내부의 생활권이 밀접해지고 국내외 연계 거점으로 성장함

● 경제 공동체 구현

-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형성을 위해 지역에서 기획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수소 메가블록, 동북아 물류 플랫폼, 동남권 한류 문화 벨트, 국가 내진 산업 네트워크 등을 추진함
- 전후방 산업의 연계성이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산업구조의 대전환을 선도함

(2)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확대

● 행정 공동체 구축

- 동남권 메가시티와 함께 대구·경북이 함께 하나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행정 협의회의 경험을 토대로 행정 공동체를 형성함
- 현재 대구와 경북은 광역 단위 통합을 추진이며, 2021년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사업 발굴 예정
-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상을 연장하여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을 추진함

● 생활 공동체 형성

- 동남권(마산-부전-울산) 전동열차(EC), 영남권 광역급행철도(MTX) 등 광역교통체계 형성을 통해 30분 이내 생활권을 형성하고 이를 통한 지역별 거점기능을 분배함
- 대도시권(부산, 대구, 울산, 창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기능 배분과 연계방안 마련을 추진하여 시간과 공간을 압축적으로 활용하여 연계함

● 경제 공동체 구현

- 동북아 물류 R&D 거점, 동남권 수소경제 전환, 탄소 메가 벨트 등 영남권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도권에 대응한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함

2) 경남 중심의 광역권 설정

(1) 남해안 관광벨트 상생 발전

● 행정 공동체 구축

- 3개 광역지자체(부산, 경남, 전남)와 33개 기초지자체가 해당하며, 2020년 6월에는 수정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향후 10년간의 사업이 확정됨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확정과 함께 2020년 6월, 부산·경남·전남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함
-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광역과 광역, 기초와 기초 간 행정협의회 구성과 협업 추진이 필요함

● 생활 공동체 형성

- 해양과 내륙을 활용한 연계를 통해 남해안의 해양자원을 활용하고 남도문화권과 도심해양권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능 도입이 연계된 상생과 번영을 추진함
- 섬진강 문화예술 벨트, 친환경 해양 신사업 육성, 글로벌 물류거점 등을 추진함

● 경제 공동체 구현

- 해안권 연계에 의한 광역관광벨트 형성, 미래형 산업 육성을 통한 광역경제권 조성 등 전략과제 추진을 통해 동서 간의 상행과 협력의 남해안권 벨트를 형성함
- 4개 추진전략과 7개 프로젝트(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를 추진할 예정임

(2) 남중권 발전 공동 추진

● 행정 공동체 구축

- 2011년부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현재 2020년 8월부터 6대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어 공동사업 추진과 정책 건의 활동을 진행 중임
-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과 경남(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9개 기초지자체 참여

● 생활 공동체 형성

- 남중권 발전을 위한 사업 중 섬진강 일원의 연결하는 교량 건설 등의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철도와 해양 교통을 통한 연계 생활 공동체 형성이 추진 중임
-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남도2대교, 동서해저터널(남해-여수) 등이 추진을 준비 중임

● 경제 공동체 구현

- 지역 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첨단 신소재산업 육성, 친환경 해양산업 육성 등의 3가지 방향으로 남중권의 경제 공동체의 먹거리 확보가 필요함
- 진주-사천 중심의 항공산업과 연계된 무인기 종합타운, 광양의 금속 소재 관련 연구개발, 청정연료 공급을 위한 LNG 벙커링 클러스터 등 현재 수준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함

(3) 지리산권 자치단체 연계협력

● 행정 공동체 구축

- 1998년 '지리산권자치단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리산권의 3개 광역과 7개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2008년)'이 결성되었으며, 16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중임
- 전북(남원, 장수), 전남(곡성, 구례), 경남(하동, 산청, 함양)이 참여함
- 2006년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되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국토부)'과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체부)'에 반영되었음

● 생활 공동체 형성

- 관광상품 개발. 관광기반 정비, 교통 안내 체계 개선, 지역사회 참여 촉진 등 4개 분야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계 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KTX역과 지자체별 연계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순환 관광 셔틀버스 운행 등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활용하고 있음
- 지리산을 중심으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며, 접근성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경제 공동체 구현

- 지리산이라는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간 연계 관광상품, 통합축제, 관광숙박시설 등을 연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함께 경제 공동체 구현을 추진함
- 2006년 계획 수립 후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과 새로운 관광 수요 및 트렌드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및 과제 발굴을 추진해야 함
- 남부내륙철도 조성 등 수도권 접근성 향상, 산양산축제(함양) 등 지역 특화축제의 다양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 변화 등을 고려한 변경 계획 수립이 필요함

(공간구조전략1) 시·군 계획지침

- 산업, 교통, 환경, 토지이용 등 분야에서 시·군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접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시·군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기능 중심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방안 강구

제2절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공간 현황

- 성장을 전제로 한 도시개발의 한계
 -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기반이 취약해지면서 도시 성장 잠재력이 쇠퇴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주택수요, 노인 및 아동 등 복지 수요 발생 등 새로운 삶의 형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지역의 여건과 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과대한 성장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기성 시가지의 쇠퇴, 인구 유출, 주택 미분양 등의 문제를 초래하여 도시문제를 가속할 수 있음
- 사회적, 공간적 양극화 심화
 - 사회적, 경제적으로 세수감소와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공공재정 부족, 투자 및 소비 둔화, 성장 동력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도시공간 측면에서도 건설투자와 개발수요가 감소하면서 주거지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중산층은 감소하고 빈곤율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노인가구, 1인가구의 빈곤율은 더 높아져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2)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의 필요성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치 중심의 도시재생 필요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간의 외연적 확산과 성장보다는 도시 관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되어야 함. 주민 개개인의 생활을 중시하여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고, 기성 시가지 활용을 위해 교통체계 개편을 통한 접근성 향상, 생활 서비스 시설공급, 노후 주거환경 개선 등 기성 시가지를 정비하여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 생활을 개선해야 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 전략목표 :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민 생활권 및 편익 확대” 실현
- 정량목표 :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경남 1시간 생활권 구축

〈표 3-1-1〉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승용차 대비 농어촌버스 통행시간	180%(서비스수준C)	150%(서비스수준B)	120%(서비스수준A)
대중교통 접근시간 10분 이내	58.6%(2018년)	60%	70%
경남내 이동시간	약 2시간	약 1시간(거점도시 30분)	약 1시간(거점도시 30분)

주 : 전국 평균 대중교통접근 수단 비율은 도보가 93% 이상으로, 대중교통 접근시간 측정값은 도보 통행시간인 10분 이내 도보거리로 가정함.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추진방향

● (공간구조) 생활권 중심의 공간 재편

- 행정구역 경계를 넘은 자립적인 공간 단위 설정을 통해 시민, 군민을 넘어 도민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재편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와 가족 생애주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도시공간정책과 주거환경 정책 연계

● (집약) 거점 도시 기능 유도 및 축소 예상 지역 중점관리

- 기성 시가지와 원도심은 다양한 도시재생 수법을 통해 재정비하여 도시기능 집약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후화로 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여 별도의 관리체계 마련

● (연계) 지역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 대중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외 대중교통 체계를 정비
- 인적, 물적, 정보 등이 지역 간 활발히 교류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2) 집약과 연계를 통한 도시공간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 2단계(중기) : 유연한 도시개발과 관리 및 긴밀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 3단계(장기) :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공간 창출로 지역 경쟁력 강화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기성 시가지 및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거점 도시 기능 유도

- 상업, 의료, 학교 등 도시기능시설을 집중하여 자립적 공간 단위 설정
 - 토지이용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위한 역세권 복합개발 추진
- 다양한 도시재생 수법을 통해 원도심 재정비, 외곽으로의 개발확산 억제
 - 민관협력 개발사업 인센티브 부여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2) 인구감소지역 압축관리계획 수립

-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선제 대응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여건 변화와 새로운 변수에 맞춰 계획의 재조성
- 규모의 확대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가치 중심의 효율적인 축소
 - 지역 내 빈집, 빈 점포의 철거 또는 재활용을 통해 정비
 - 주변 거점 도시와 대중교통 연결체계 강화
- 섬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혁신전략 수립
 - 에너지 자급이 가능한 섬 조성: RE100 아일랜드

(3) 다양한 대중교통 및 물류 교류 체계마련

- ITS기술을 활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교통 서비스 실현
 - 버스 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 결절점의 복합환승 시설 구축·정비 및 입체적 활용
 - 스마트교통 인프라 도입을 위한 기술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기존 대중교통 노선 강화, 커뮤니티 버스 및 수요대응형 택시 도입

(4)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급

- 청년, 고령자, 독신자 등 새로운 주택수요에 대응
 -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사회주택, 공동체 주택 등 1~2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
-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주거공급 프로세스 다양화
 - 노후 주거지 정비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한 양질의 공동체 주택 공급 지원

(5) 생활인프라의 성숙한 공급과 관리

- 시·군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공공서비스 이용
 - 생활인프라의 기능 복합 및 서비스 비혜택 지역에서의 접근체계 개선
 -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
-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 및 생활인프라의 종합적 관리
 - 생활인프라종합계획 수립을 통한 관리 및 모니터링

(6) 공공공간의 유연한 활용과 가로 활성화

- 보행친화도시를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건축물 전면공간(파사드, 주차장,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디자인지침 수립
- 광장, 도로 등 통행공간을 활동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 명소화, 경제 활성화
 - 방치된 저·미이용지는 활성화 용도(공원, 도심농원 등)로 전환
 - 도로, 공원 등에 다양한 공간 시범운영 및 제도 마련

(7) 지역 고유의 가치를 담는 경관계획수립

-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생활 등에 관한 종합적인 미래경관 제시
 - 도시경관 및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난개발 방지
 - 지역의 경관 가치 향상을 위해 근·현대 건축자산의 적극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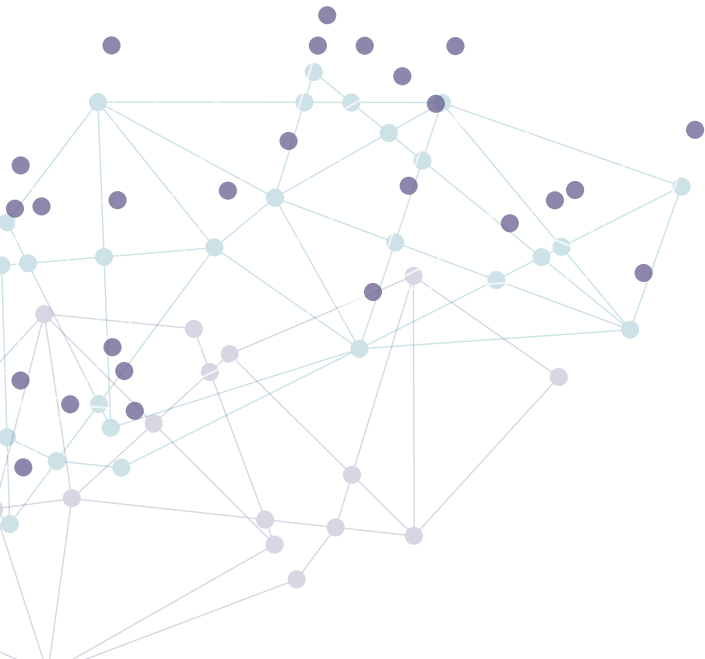
●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특화형 경관계획 수립

- 주민 주체의 경관협정 추진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

(공간구조전략2) 시·군 계획지침

- 소멸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과 가치 중심의 효율적인 장기발전전략 수립
-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교통 이동성 향상 등을 통해 생활인프라 서비스 비혜택 지역의 접근체계 개선 방안 마련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미래 지향 혁신사회

- 제1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 제2절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 제3절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제2장

미래 지향 혁신사회

제1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 에너지원별 공급구조

- 경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95%를 차지함
 - 2018년 기준 경남도 연간 전력 발전량은 53,192GW이며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95%로 나타날 만큼 높음
 - 에너지원별 공급구조를 보면 석탄 64.07%, 석유제품 20.78%, LNG 10.15%, 수력 및 신·재생에너지 2.6%임

(단위 : 천톤, %)

구분	합계	석탄	석유제품	LNG	수력	원자력	신·재생
전국	307,501	86,651	118,521	55,225	1,549	28,437	17,119
경남	19,290	12,359	4,008	1,957	250	-	715
(비율)	(6.27)	(14.26)	(3.38)	(3.54)	(16.14)	-	(4.18)
경남 내 비중		64.07	20.78	10.15	1.30	0.00	1.30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통계연도(2020).

〈표 3-2-1〉
에너지원별 공급 (2018)

2) 경남 에너지원별 수요구조

- 경남도 부분별 최종에너지 소비 비중을 보면 산업 39.27%, 수송 31.29%, 가정 및 상업(건축) 25.24%로 나타남
 - 2018년 기준 경남도 연간 전력소비량은 35,159GWh이며 그중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한 소비는 4.7%로 화석연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 경남도내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태양광 발전 685GWh, 풍력 786GWh, 바이오 671GWh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경상남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업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5.9%이고 그중 발전 분야에서 60.0% 차지하며 나머지는 건물 11.3%, 수송 9.6%, 폐기물 1.6%, 농업 1.6%로 나타남

3) 에너지 체제 전환의 필요성

- 탄소중립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경남도 탄소배출의 60.0%를 차지하는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전략 필요
- 수요부에서 에너지 효율성 달성,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 실현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전략목표 : “에너지 체제 전환과 산업의 탈탄소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구축
- 정량목표 : 2040년 재생에너지 40% 달성

〈표 3-2-2〉

경남도 총에너지
기준수요 및
재생에너지 비율
전망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에너지 소비량	9,51백만 톤(2017년)	10,71백만 톤	11,26백만 톤
재생에너지 비중	4.3%(2017년)	30%	40%

2) 추진방향 및 전략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및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 건축물, 가구 단위의 태양광 발전 보급 확대
 - 분산 전원 체제의 확립 및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분산 에너지 중심의 연계형 배전망 구축이 필수 불가결하며 이를 위한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 경남도 산업 체제 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발전산업 전환
 - 수소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효율성 증대
 -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수소 생산, 수소 액화, 수소 수송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지원 및 기술개발
 - 수소추진 선박 및 수소 액화 기술 선도, 수소 항구 구축을 통한 수소 공급라인 구축 및 수소 추진 건설기계와 수소추진 전투용 수송수단 개발 촉진
 - 건설기계 및 전투용 수송산업의 수소 추진 상용화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환경정의 실현(건강권, 접근성, 일자리 등)

-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과 모두를 위한 번영 정책 시행
 - 커뮤니티 활성화와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공급생태계 구성
 -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있어 환경적 훼손 최소화(친환경적인 발전단지 조성)
- 산업-생산, 발전, 교통, 농업 등 전 분야에서의 유해요인 및 탄소 저감
 - 환경 모니터링 강화 - 미세먼지, 물, 탄소배출이 포함된 환경지표 지수화
- 대중교통 중심의 지역사회 이동성 보장
 -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 보급 및 접근성 강화
- 에너지 및 산업체제 전환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탈탄소 인프라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2)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축

- 탄소제로 사회를 향한 건조환경의 구성
 - 2030년 이후 일정 규모 이상 신규건축물 탄소배출 제로 추진
 - 2040년까지 2020년 대비 건물 에너지 사용 35% 감소
- 지불가능한 양질의 공공주택 스톡 확대
 - 공공임대주택 지속적인 공급 및 일정 비율 공공임대주택 스톡 유지
-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및 그린 모빌리티 확대
 - 도보, 자전거, 마이크로 모빌리티 + 대중교통 연계 : 자가승용차 사용 축소
 - 2040년 내연기관 신규자동차 등록 금지 추진
- 동남권 저탄소 교통망 확충
 - 동남권 철도망 및 도로망의 건설 재료 및 수송대상의 저탄소화 추진
- 폐자원 재활용 순환시스템 구축
 - 플라스틱 재활용률 확대
 -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

3) 경남 에너지 체제 전환 실천과제

● 공급구조의 변화

- 석탄발전 단지 폐쇄 로드맵
 -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기본수명인 30년까지 가동 후 차폐로 폐쇄할 경우 기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는 2030년대 초반까지 수명이 다할 것이며 도내 신규 건설 중인 고성하이화력발전소는 2050년 폐쇄 예정
- 2018년 현재 석탄발전소가 집중된 화동 및 삼천포의 이산화황(SO_2)과 이산화질소(NO_2)의 지표 부근 연평균 최대농도는 전국 최고로서 도민 건강에도 치명적 영향
 - 매몰비용을 배제한 균등화발전원가(LCOE) 변화추이를 고려하면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유리함

●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획기적 개선

- 2040년까지 9,390MW 공급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
 - 남해권 해상풍력단지 개발, 태양광 보급 확대를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화 실현
 - 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 개발 및 국산 풍력터빈 상용화, 부유체 선진적인 기술도입을 통해 해상풍력 공급생태계 구성
- 공공배전망 운영기관 설비를 통해 배전망에 연계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에 대한 제어와 급전, 시장 운영을 담당할 에너지공사 설립

●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과 거버넌스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참여성 사업모델 활성화
 - 마을 단위, 공단 단위 분산 전원 체제 확립을 위한 계통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 산단 내의 입주 기업의 공동 수익사업 모델 개발
- 분산 전원 배전망 운영자와 프로슈머형 발전사업 참여자들 간의 계통연계, 전력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체제 구축
 - 전력거래소(TSO) 중심의 시장 운영에서 배전망 운영자(DSO)의 분산 에너지 거래시장 운용으로의 장기적 이행을 위한 공공중심의 로드맵 작성
 - 장기적으로 배전망 운영자는 분산 에너지 거래시장 운영의 주체가 되어 전력 자립화를 달성하며 계통운영자와의 전력수급 협의를 통한 전력 공급 안정화 실현

4)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

(1)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그린수소 생산체제로 전환

- 경남도내 수소생산·저장·발전 기업 육성 및 기업 간 연합-협력을 통한 수소기술 공동개발 추진
- 동남권 내 수소 생산·수소 액화 설비·수소 수송을 위한 인프라 형성과 수고 공급라인 확립

● 연료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간 협력체계 형성

- 수소연료전지 분야 선도 기업(두산중공업, STX중공업)과 도내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용도의 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 수소 및 연료전지 분야 부품 소재 기업 육성 및 기술 도입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공급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인력양성

(2) 미래형 수송기계 산업 고도화를 통한 탄소중립 경제 실현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공급생태계 구성

- 경남 및 동남권 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체들 가운데 미래형 자동차 부품 공급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보급 확대
- 자율주행자동차 및 미래형 모빌리티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시스템통합(SI) 선도 기업 유치 및 동남권 정보통신-지식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계통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 보급

● 수소추진 선박 실증단지 조성 및 수소 벙커링 사업 육성

- 2020년 현재 가스터빈 선박을 통해 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를 회피할 수 있으나 이산화황 및 이산화질소 규제가 강화되면 가스터빈 추진 선박으로도 환경기준 충족시키기 어려움
- 저공해·친환경 선박을 수소연료전지 선박 및 Hybrid 가스터빈-수소연료전지 선박 제조를 통해 조선 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및 환경규제 극복
- 수소 항만 구축, 하역시스템 혁신, 미래 해상교통 기반 형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 **풍력발전 핵심시스템(너셀) 및 부품 개발 · 실증 인프라 보강으로 풍력산업 기술혁신 체계 구축**
 - 풍력 터빈 발전 공급시설 구축 및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 개발
- **건설중장비(지게차 및 굴삭기 등) 연료스택 및 이동식 충전기 개발**
 - 건설기계 산업(지게차 및 굴삭기 등)과 전투용 차량 연료전지 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실증단지 조성

(미래 지향 혁신사회 전략1) 시 · 군 계획지침

-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 공급구조 전환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신규건축물 탄소제출 저감, 그린 모빌리티 확대, 폐자원 재활용 순환시스템 구축 등 사회 전반의 탄소저감 실행계획 마련

제2절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지역 산업 현황 및 예측되는 외생적 환경 변화

(1) 지역 산업 위기와 산업구조적 성장 한계

● 지역 산업경제의 성장둔화 및 원인

- 경남은 지난 40여 년 동안 전통 제조산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로, 최근 주력산업들이 쇠퇴기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이나 고용증가율이 둔화하는 상황에 직면
- 전통 제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흥국들과의 경쟁 환경 심화, 변화하는 세계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대처하지 못한 혁신의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

(2)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

● 혁신기술들의 등장과 미래변화 속 새로운 기회

- 미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치료 등의 혁신기술이 사회에 확산하면서 많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산업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혁신기술들이 전통적인 산업들과의 결합 또는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의 제고, 가치사슬의 재구성 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
- 다가올 미래 변화들 속에서 시장성 및 성장성이 큰 유망산업들을 경남의 차세대 먹거리로 선점하고, 기획의 산업으로 삼아 장기적인 관점에서 육성 필요

2) 산업구조의 개편과 내생적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1)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균형 성장 필요

● 제조, 생산자 서비스 등 지식서비스의 산업적 중요성 증대

- 지역 내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편향적 산업구조 개선 필요
- 또한, 혁신적인 기술들이 보편화되면 경제·산업, 의료·건강, 금융, 교육, 재난·안전관리 등 실생활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서비스 업종들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선점 필요

(2) 선순환적인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의 핵심 원천은 과학기술혁신 역량

-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혁신 주체 간 상호작용과 학습을 통한 내생적인 잠재력 촉진이 필요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 **전략목표** : “산업혁신으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혁신 경남” 실현
- **정량목표** : 경남의 부가가치율, R&D 투자율, 생산자·지식서비스산업 비중,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R-COSTI)의 지속 증대

〈표 3-2-3〉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총생산 대비 부가가치율	38.3%(2017년)	45%	60%
GRDP 대비 R&D 투자율	2.25%(2017년)	3.5%	5.0%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	10.5%(2017년)	25%	40%
R-COSTI 전국순위	15위(2019년)	10위	5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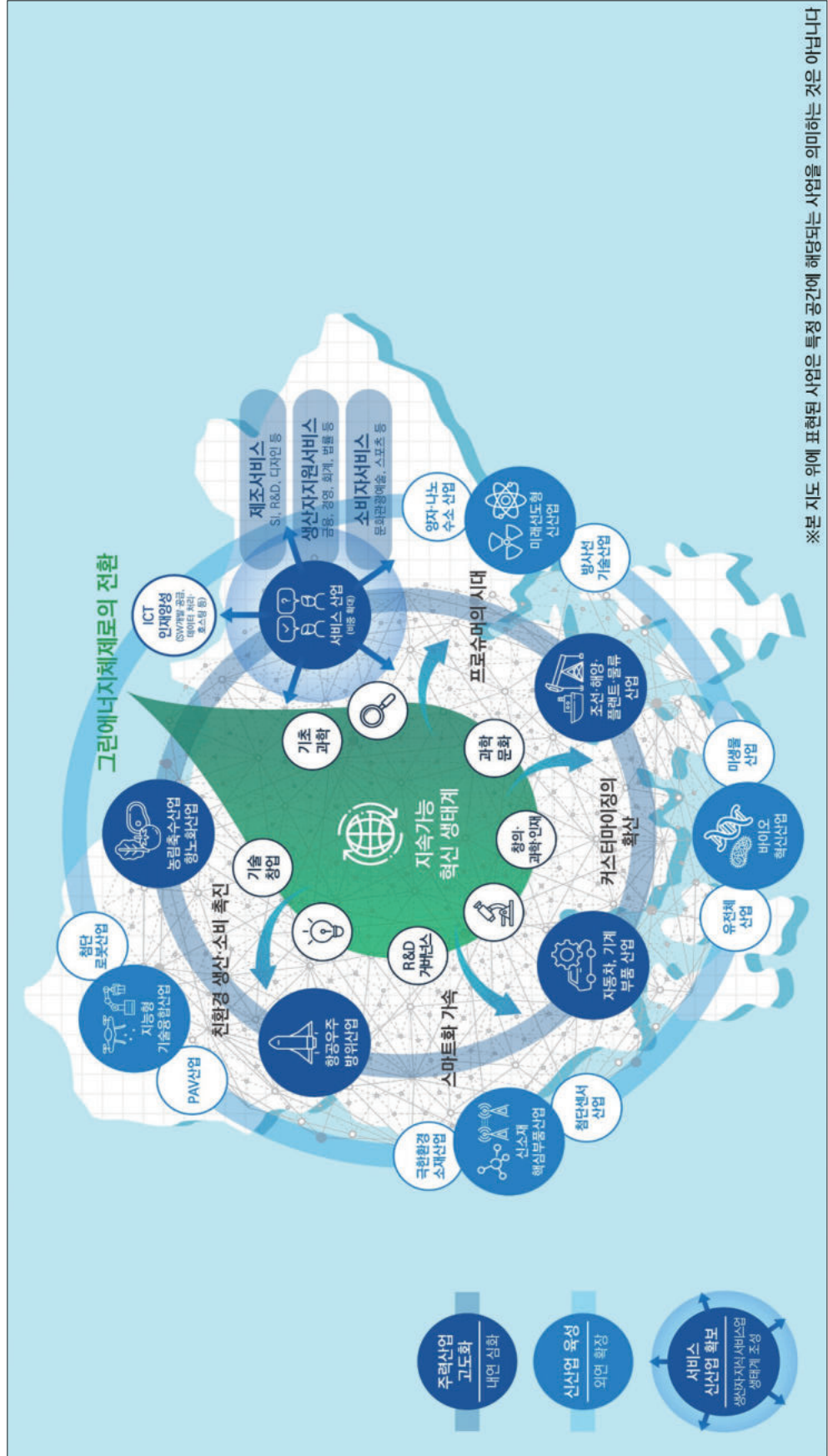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추진방향

- **1차 산업 및 주력산업의 내연(內延) 심화**
 - 친환경·스마트생산체제로의 전환 및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통해 미래변화 대응력 강화
- **새로운 첨단 분야로의 외연(外延) 확장**
 - 기존산업과 유망기술을 연계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롭게 등장할 신산업 분야 개척 및 육성
- **서비스 신산업 육성 및 서비스 경제 활성화**
 - 미래기술들이 부가된 새로운 서비스산업 개척 및 활성화 추진 등 서비스산업 비중의 확대
-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및 생태계 강화**
 -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내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

〈그림 3-2-2〉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구상도



(2)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변화 대응과 성장잠재력 확충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친환경·5G 기반 스마트화 추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
- 2단계(중기) : 핵심 신산업 + 6G 기반 서비스 신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3단계(장기) : 포스트 4차 산업혁명, 초인지·초생명화 시대에 대한 선제 대응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1차 산업 및 주력산업의 내연(內延) 심화

- 농·림·축·수산업의 고도화
 - 스마트팜·스마트산림·스마트축산·스마트양식 보급 확산 지원, 미래 식량 관련 바이오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분야별 전문 인력양성 등
- 기계·자동차부품산업의 고도화
 - 친환경·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 지원, xEV, 자율주행 등 미래차 중심의 제품생산으로 전환 유도, 차세대 모터개발 지원 등
- 조선 및 해양플랜트산업의 고도화
 - 친환경·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 지원, 친환경 미래 선박 개발 지원, 심해탐사, 해양자원 발굴 등 해양 분야 신산업 개척 지원 등
- 항공우주산업의 고도화
 - 친환경·스마트 생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업 지원, 위성, 발사체 관련 미래 항공우주 핵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등

(2) 새로운 첨단 분야로의 외연(外延) 확장

- 지능형기술융합산업 육성
 - 인공지능과 기계가 융합된 지능형 로봇 산업 육성 : 창의의 기계·로봇 제조 인프라 확충, 지능형기술(IT, BT, 뇌공학) 관련 기업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미래형 교통수단인 PAV·UAM 산업 육성 : 고성의 무인기 종합타운 및 진주·사천의 항공국가산단과 연계를 통해 제조와 연구개발 기능이 집적된 클러스터 조성

● 신소재 · 핵심부품산업 육성

- 극한환경 소재 등 신소재산업 육성 : 한국재료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R&D 인프라 활용, 도내 이중 소재의 성형, 용접 및 신소재 표면처리, 열처리 기업 지원 등
- 극한환경을 견디는 소재는 미래기술(초전도, 플라즈마, 양자기술 등) 구현에 있어 필수요소로, 장차 군사, 우주, 항공, 의료, 에너지, 바이오 등 산업적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
- 스마트화 수요에 대비한 첨단센서 산업 육성 : 김해의 스마트부품 클러스터와 연계, 비광학센서도 포함한 첨단센서 산업 클러스터로 범위 확장

● 바이오혁신산업 육성

- 개인 맞춤형 의료시대 대비 유전체 산업 육성 : 김해의 의생명 산업 인프라 활용을 통한 유전체, 줄기세포, 오가노이드, 인공장기 관련 산업 육성 지원
- 미생물 산업 육성 : 진주 바이오산업, 서부경남 항노화산업과 연계를 통한 마이크로 바이옴 중심의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합성생물학 기반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

●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

- 방사선기술산업 육성 : 도내 방사선 관련 생산기반 구축 및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 동남권 방사선 비즈니스 벨트 연계 등을 통한 부산, 경북의 전방산업 뒷받침
- 양자 · 나노산업 육성 :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단지과 연계를 통한 양자산업 클러스터 지정 추진, 양자응용기술 관련 시범사업, 사업화, 표준화 및 인증 활동 등 지원

(3) ICT 서비스 신산업 육성 및 서비스 경제 활성화

● 생산자 및 지식서비스 생태계 조성

- 제조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해당 기업 유치 지원, 네트워크 환경 조성 지원 등

● 디지털 플랫폼 기반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중심의 디지털 콘텐츠 개발, 기업 성장, ICT 인력양성 지원 등

● 기존 서비스와 미래기술 간 융합 촉진

- 교육,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 기존 산업에 IT, CT 등이 결합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 신서비스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

-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서비스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시범 구역 지정 추진 등

(4) 가치창조를 실현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및 생태계 강화

- R&D 투자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 지역 R&D 투자 규모 확대, 연구환경 조성, 연구인력 확충, 기술창업·사업화 지원 등
- 기초과학 저변 강화 및 창의 과학 인재 확보
 - 기초과학연구 인프라 구축, 기초과학 투자 비중 확대, 기초과학 인력양성 교육 강화 등
- 과학문화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의 대중화
 - 과학문화시설 및 콘텐츠 보강, 과학문화 전문 인력양성, 도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 등
- 도민의 인문학적 소양 제고
 - 인문학 보급 인프라 확충, 과학과 인문학이 결합한 과학기술문화사업 추진 등
- R&D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및 거버넌스 확립
 - 과학기술정책 협의체 기능 강화, R&D 전문관리기관 설립, 과학 및 미래 지향적 도정 정책 수립 지원 등

〈표 3-2-4〉
국내 기술혁신점
도달 시기 예측조사
결과

구분	예상 시기	구분	예상 시기
롤러블 디스플레이	2023년	자율주행자동차	2028년
멀티콥터 드론	2024년	포스트실리콘 반도체	2026년
실감형 가상·증강 현실	2024년	인지 컴퓨팅	2027년
스마트 팩토리	2025년	CO2 포집·저장(CCS)	2028년
만물인터넷	2023년	유전자 치료	2028년
3D 프린팅	2024년	줄기세포	2028년
빅데이터 활용 개인맞춤형 의료	2025년	지능형 로봇	2028년
스마트 그리드	2024년	인공장기	2029년
초고용량 배터리	2024년	인공광합성	2030년
극한성능용 탄소섬유 복합재료	2026년	양자 컴퓨팅	2031년
희소금속 리사이클링	2026년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2032년
웨어러블형 보조 로봇	2027년	초고속 튜브 트레인	2033년

주 : 기술혁신점은 기술이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하는 시점.
자료 : KSTIE(2017),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표 3-2-5〉

국토부 선정 국토·인프라·교통 분야 20대 유망기술 목록

구분	20대 기술	비고	구분	20대 기술	비고
국토 분야	① AI 활용 건설 엔지니어링	비대면 기술의 진화	교통 분야	① 완전 자율협력주행	이동수단의 혁명
	② 인프라재료 혁신	기타 산업 기술		② 도로인프라 스마트 유지관리	인공지능 기술
	③ 스마트 건설 로봇	비대면 기술의 진화		③ 미래형 교통관리시스템(FMS)	인공지능 기술
	④ 지하매설물 스마트 유지관리	인공지능 기술		④ 스마트 Mobility 서비스	이동수단의 혁명
	⑤ 지능형 주택	인공지능 기술		⑤ 고부가가치 융복합 생활물류 혁신기술	비대면 기술의 진화
	⑥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기술		⑥ 초연결초고속 철도시스템	이동수단의 혁명
	⑦ 수소도시	그린 에너지 기술		⑦ 데이터기반 철도안전관리	인공지능 기술
	⑧ 플러스 에너지 도시·건축	그린 에너지 기술		⑧ PAV/Flying Car/Air Taxi	이동수단의 혁명
	⑨ 미래 가상 국토 공간	인공지능 기술		⑨ 스마트공항 4.0	인공지능 기술
	⑩ 환경플랜트	그린 에너지 기술		⑩ 미래비행체 부품개발 및 인증	기타 산업 기술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세계를 선도하기 위한 20개 국토·인프라·교통 기술(20-Wonder) 개발 착수'

(미래 지향 혁신사회 전략2) 시·군 계획지침

-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양식 등 기존 시·군 주력산업의 고도화 방안 마련
- 각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선도형 신산업 발굴 노력 및 과학기술혁신(R&D) 투자 확대 방안 강구

제3절

지역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고용·노동여건 변화의 쟁점

(1) 경남 지역 주력산업의 쇠퇴와 고용·소득 불안정성 높은 일자리 증가

● 광공업 생산지수 급락, 제조업 일자리 급감

- 제조업 쇠퇴로 생산·기능직 일자리 감소는 지역 고용+경제 위기로 확산 중임

- 경남 주력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가져오고 있으며, 제조업 주요 직종인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전국과 달리 지속 감소(연평균 -0.2%)하고 있음

● 고용·사회안전망 취약한 서비스업 일자리 급증

- 최근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고용·소득 불안정성 높은 일자리 중심임

- 서비스·판매종사자(2.4%), 단순노무종사자(6.4%)는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

(2) 청년 노동시장 진입 애로 증가와 역외 유출 증가

● 청년고용률 감소, 실업률 증가

- 청년고용률 감소(2019년 39.3%)와 실업률 지속 증가(2019년 10.3%) 현상은 경남 전체보다 심각한 수준임

2)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

(1) 새로운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와 혁신을 이끄는 지역인재 증가 중요

●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쇠퇴하는 일자리의 직업 전환 지원 강화 필요

●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사회 주도할 새로운 인재 양성 교육시스템 마련 필요

● 배우고 싶은 사람 누구나, 미래를 위해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 여건 조성 필요

(2) 경남형 고용·사회안전망으로, 변화의 불안 해소하는 튼튼한 제도적 그릇 확충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 강화 필요

● 일터혁신과 상생의 경영·노동문화 조성으로 지역 고용·노동 환경 체질 개선 필요

● 경남의 고용·노동 현안 해소를 위한 지역 사회·경제 주체 간 협치 강화 필요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 전략목표 : “일하고 싶은 도민 누구나 존중받으며 일하는, 노동 존중 경남” 실현
- 정량목표 : 경상남도 경제활동참가율, 청년고용률 향상

〈표 3-2-6〉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경제활동참가율	63.7%(2019년)	64.5%	66.0%
청년고용률	39.3%(2019년)	45.0%	50.0%

2) 추진방향 및 전략

(1) 경남형 유연 고용 안정성 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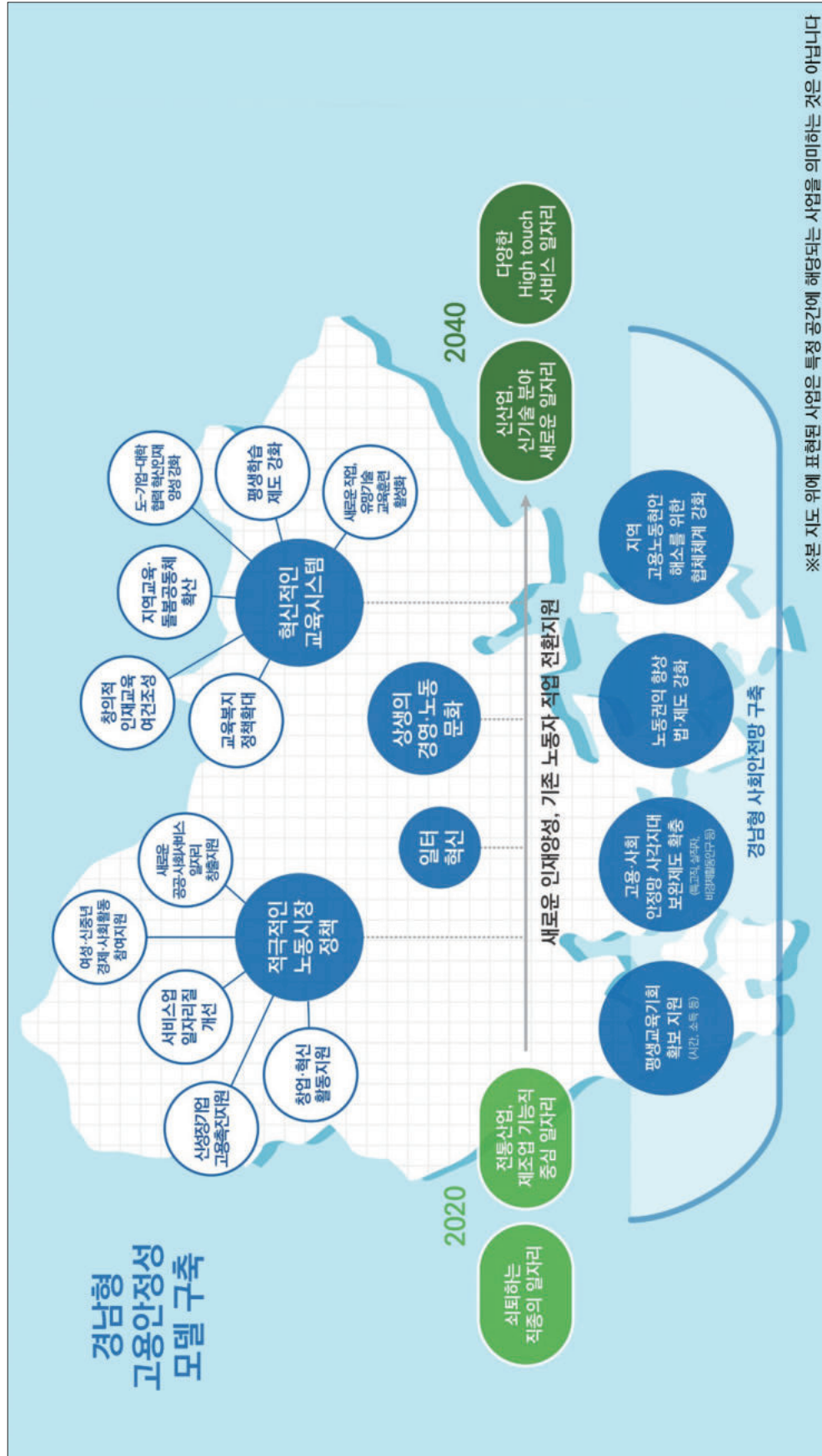
-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지역 사회·경제활동 기회 확대
 - 직업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적응토록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집중 지원
-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노동여건 개선, 상생 노동문화 조성으로 노동안정성 강화
 - 정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제도 확충, 노동권익 법·제도적 권리 강화
- 새로운 인재 양성, 평생학습 확대로 배움과 채움으로 활기 넘기는 환경 조성
 - 신사업 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평생교육 기회(시간 확보 등)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2)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도·기업·대학 지역혁신 체계 강화, 여성·신중년 경제·사회활동 확대
- 2단계(중기) : 일터혁신형 스마트제조혁신 안착, 창의적 인재교육 여건 조성
- 3단계(장기) : 경남형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유연안정성 높은 노동시장 환경 조성

〈그림 3-2-3〉

「지역 인재가 마음껏 배우고 일하는 환경 조성」 구상도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1) 경남 직업구조 변화에 체계적 적응 지원

● 소멸위험직종 관리 및 직업 전환 노동자 지원

- 쇠퇴하는 일자리를 새로운 기술·산업 부문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기존 노동자의 직업 전환 지원 강화

● 새로운 직업과 유망기술 직업훈련 교육 활성화

- 유망기술 직무별·직능수준별 특화교육과정 확대
- 신사업 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근무방식과 노동 형태의 안정적 정착·확대 지원 강화

- 지역 내 주력 생산인구의 고용촉진 및 생산성 향상, 고용구조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한 일자리 창출 지원

● 산업·직업 구조 변화 대응 기반 정보 구축

- 지역별(기초자치단체), 권역별(노동시장권역), 산업단지별 고용·노동 상황 모니터링 강화(고용률, 고용의 질 등) 및 데이터 구축

● 고용 서비스 혁신으로 일자리미스매치 해소

- 직능 전환 교육 훈련, 지역 사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숙련공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및 안착과 역외 청년의 경남정착 지원 강화

(2)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적 지원

● 신성장 기업 고용 창출 지원

- 신성장 기업 고용 지도(map) 구축, 지역인재 일자리 매칭 및 기업 고용장려제도 강화

● 창업, 혁신활동 지원

- 혁신+크리에이팅 활동 지원 확대, 스타트업 기업 지원 강화

● 사회적일자리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 제고

-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 공공·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처우 개선 강화
-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좋은 일자리 창출**
 - 감성과 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하이터치(High-touch)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청년 여성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성 노동시장 여건 개선**
 - 청년의 일·생활 인식 변화 존중, 양성평등 문화 정착, 능력 중심 공정한 노동시장 환경 조성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지원 강화
- **신중년의 노하우가 지역사회·경제 부활의 원천이 될 기회 확대**
 - 신중년 '신기술 재훈련'+ '산업 현장 경험(노하우)' → 고용 서비스 강화 → 재취업 촉진
 - 지역사회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활동 지원 강화

2)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노동 안정성 강화

(1)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 **경남형 노동자 고용안정제도 확대**
 - 경남형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기업의 환경변화와 근로자의 직업 전환을 지원
 - 정부 고용안정망 사각지대 보완 제도 확충, 노동권익 법·제도적 권리 강화
- **중소기업·미조직 노동자 복지지원 제도 마련**
 -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의제별·대상별 노동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연대·네트워크 활동 및 공제사업 지원 확대
- **소득·실직·산업재해에 대비한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지원**
 - 실직자와 비경제활동자, 여성 및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2) 일터혁신으로 노동여건 개선

- **노동여건 개선 중심의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기업체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 훈련 및 미취업자 대상 스마트공정 생산·사무관리 직종 노동자 참여형 스마트 제조혁신 변화 촉진

- **도민참여형 일터혁신지원체계 운영**

- 일터혁신을 중시하는 생산 현장의 기술도입, 일터의 스마트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스마트화를 위한 산업별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산업집적지별 노동자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 여건, 근무환경, 산업안전·보건, 통근 접근성 개선·지원 강화

(3) 공정하고 상생하는 노동문화 조성

-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과 공정한 시장 조성 지원**

- 이중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노동 인식개선, 저임금구조 개선 지원 강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노동권의 법·제도적 권리 강화

- **지역 고용·노동 현안 해소를 위한 협치 체계 강화**

- 노동 현장 밀접형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시민참여 강화

3) 배움과 채움으로 활기 넘치는 환경 조성

(1) 지역과 소득 차별 없는 학습 기회 보장

- **교육복지정책 확대**

- 통합교육 행정체계 강화, 경남형 스마트그린뉴딜혁신학교(+혁신교육콘텐츠) 지원,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시설 및 교육 기회 확대

- **창의적 인재교육 여건 조성**

- 초·중·등 창의교육 지원, 경남 미래 특화 분야별 특성화고등학교 확대

- **교육과 돌봄 중심으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 확산**

(2) 대학교육혁신으로 지역 혁신역량 향상

- **경남도-기업-대학 협력 체계 강화**

- 지역혁신 R&D +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플랫폼)체계 마련, 기업 및 대학 지원 강화

● 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협력 사업 지원 확대

- 지역 기업-거점 대학 간 협력 활성화, 경남 인재교육혁신사업 확대
- 경남지역 대학-타지역 대학, 경남 소재 대학 간 공동 사업 활성화

● 지역 석·박사 인력 연수·연구 지원 확대

(3) 평생학습권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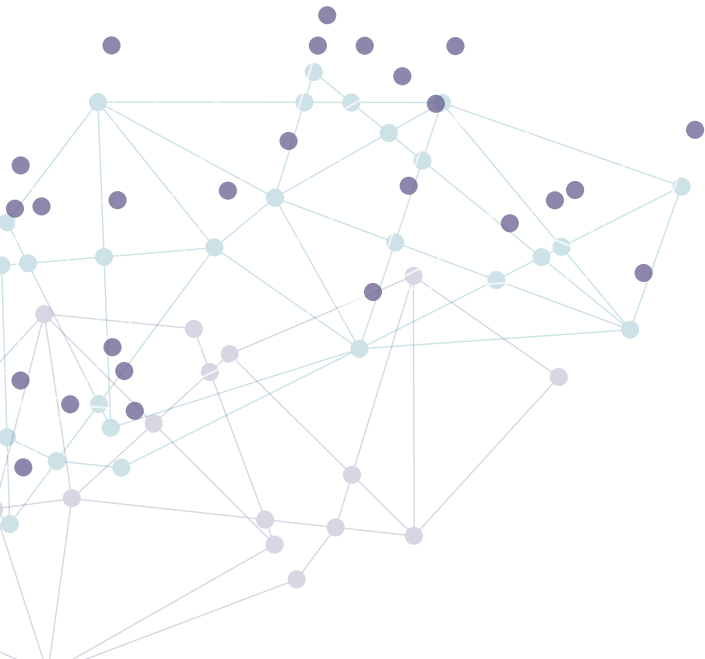
● 일상 속의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및 평생교육 기반 내실화

- 경남 평생교육 지원체계 강화,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과정 확대

(미래 지향 혁신사회 전략3) 시·군 계획지침

- 직업구조 변화에 대한 체계적 적응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집중적 지원 방안 마련
- 시·군 차원의 고용·사회안전망 확대 및 노동여건 개선, 지역 교육복지정책 확대 방안 강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3장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 제1절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제2절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 제2-1절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제3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3장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제1절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자치권한의 한계

- **입법권** :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제정 가능, 조례의 실효성 미흡
 - 헌법 제1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가능 규정, 주민 권리를 제한 및 의무 부과사항에 대해 법률 위임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 위반에 대한 제재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하여 조례의 실행력이 미흡함
- **조직권** : 정책 수요에 따른 조직 및 인력 구성 곤란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성과 정원 운영, 직위 구성에 대해 지방자치법,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정책 수요에 따른 조직 및 기구, 인력 구성이 어려움
- **재정권** : 조세권 부재, 국고보조사업 등으로 세출권 제약
 - 지방세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가능, 지자체는 중앙의 정책사업 매칭과 국고보조사업, 복지예산의 부담으로 정책 수요에 따라 활용 가능한 세출권 제약

2) 행정의 의사결정 방식의 한계

- **일방적, 하향식 의사결정의 한계**
 - 행정정보공개, 설문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서 수행, 정책 과정에서의 피드백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움

3) 공공성 가치 및 사회 혁신 실현 지원 필요

- **사회적 위험과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성 가치 필요**
 -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변화 및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적극적 대응을 위해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등 사회적 가치, 공공성의 가치 창출이 필요해짐
- **다양한 사회혁신 지원하는 행정**
 - 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과학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사, 성과, 정책, 행정서비스 등의 신뢰성, 효과성, 시민 생활의 편리성을 향상,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지원해야 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전략목표 : “민주적, 과학적 방법을 통한 도민주도형 정책 결정” 실현
- 정량목표 : 경상남도 자치권한(주민자치권과 재정권) 강화

〈표 3-3-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마을자치회(가칭)	주민자치회(305개)	마을자치회(4,000개)	마을자치회(8,243개)
재정자립도	33.9%	40%	50%
주민참여예산 비중	2.61%	10%	20%

2) 추진방향 및 전략

(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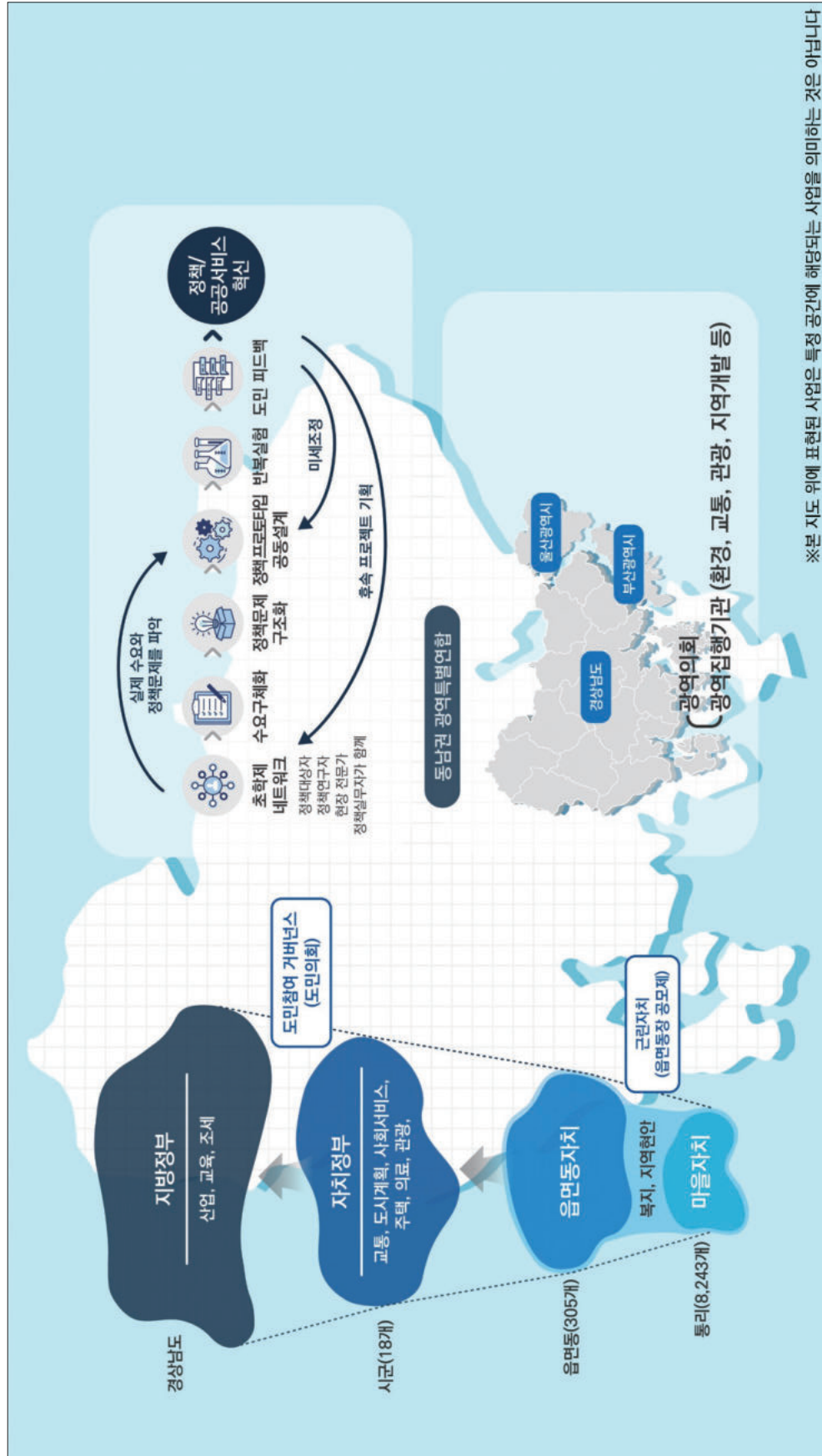
- 자치정부 형태의 다양화
 -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른 자치정부 형태 선택
- 근린자치 활성화
 - 경상남도-시군-통리(마을)의 역할 배분 및 재정립
- 민주적 공론장 및 정책 랩(Policy Lab) 운영
 - 행정과 도민 간 공론화 시스템 구축 및 활용, 상호학습 기반의 정책 공동생산
-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실현
 - 빅데이터, AI, IoT 등 ICT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2)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2단계(중기) : 주민자치조직 중심 정부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정책 과정 운영
- 3단계(장기) : 다양한 형태의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역자치정부 수립

〈그림 3-3-1〉

「민주적,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구상도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경남도내 기초자치정부 형태의 다양화

● 지역 특성과 주민 선호에 따른 자치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로 선택

- 인구 규모,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자치정부 형태 중 기관대립형(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 기관통합형(지방의회-책임행정관), 집행위원회 형(집행위원들)(자치분권 로드맵 제안 유형)을 주민투표를 통해 선택

- 현재의 읍면동 단위의 행정구역을 근린자치 기능 수행이 가능한 단위로 행정구역 개편

(2) 동남권 광역연합 구성 및 운영

● 동남권(경남, 부산, 울산) 연합체 설립

- 광역의회를 구성, 교통, 관광, 환경, 지역개발 등 사무를 집행하는 광역집행기관을 동남권광역교통본부, 동남권광역관광본부 등의 형태로 설치

(3) 근린자치 활성화

● 도-시군-통리(마을) 역할 배분

- 도의 경우 산업, 교육, 조세 관련 사무, 시군의 경우 교통, 도시계획, 의료, 관광, 사회서비스, 주택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읍면동과 통리의 경우 복지 사무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도록 함 이를 위해 주민자치조직을 수립, 강화하여 근린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기능을 활성화

(4) 정책 랩(Policy Lab) 운영³⁾

● 행정-도민 간 상호학습 기반의 정책 공동생산

- 경남도 정책설계를 위한 디자인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기반 개발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주요 정책추진과정에 관한 적극적 정보공개, 각 실·국별 업무에 대해 도민참여를 위한 계획을 수립, 도민모니터링 및 평가하도록 함

(5) 민주적 공론장 운영

● 행정-도민 간 공론화 시스템 구축 및 상시적 활용

- 주민 수요 및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함. 퍼실리테이터 역할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갈등 이슈 및 관리를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상시 운영

3) 정책 랩(Policy Lab) 모델은 한국행정연구원(조세현 외, 2019)의 개방형 정책협업모델 연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힘(149p 그림 포함)

(6)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실현

● ICT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

- 빅데이터, AI, IoT 등의 정보통신기술과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 통합 인증, 거래 및 계약 서비스와 온라인 투표 등을 비롯하여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정책별 통합솔루션을 제공하여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디지털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현함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1) 시·군 계획지침

- 주민자치조직 수립 및 강화 등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근린거버넌스 체계 구축
- 시·군 행정서비스의 신속성, 신뢰성, 편의성 제고를 위한 ICT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행정 플랫폼 구축 방안 강구

제2절

지속가능한 경남맞춤형 인구정책

〈그림 3-3-2〉

경상남도 과거
20년간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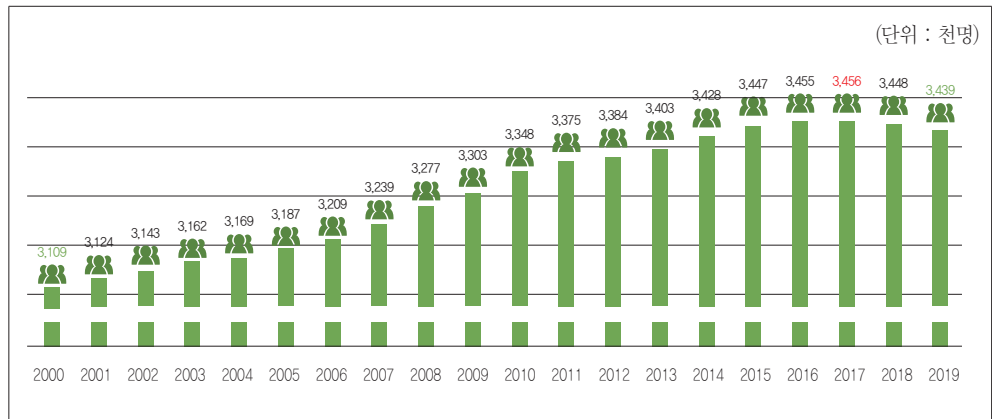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인구 추이 및 전망

(1) 과거 20년간 인구 추이

- 과거 20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 2017년도를 기점으로 인구 감소

- 인구는 증가세를 보이다 2017년 약 3,456천명을 정점으로 감소(2019년 기준 약 3,439천명)



자료 : 경상남도 통계(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

(2) 미래 20년간 인구 전망

- 고위추계 기준으로 인구 유지하나, 중위추계 및 저위추계는 인구 감소 전망

- 통계청(2019) 발표에 따르면 경남의 2040년 인구는 고위추계(334만명), 중위추계(320만명), 저위추계(306만명)으로 전망(등록센서스 기준)

2)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의 필요성

- 지속가능 경남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 필요

- 인구 문제는 경남도의 모든 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슈로서 인구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저출생 및 고령화 등의 당면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남 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 전략목표 : “경남 목표인구 달성 및 도민 행복” 실현
- 정량목표 : 인구 334만명 유지, 행복지수 상위 20%, 성평등 레벨 2 이상 유지

〈표 3-3-2〉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인구	334만명(주민등록인구 기준)	340만명	334만명
행복지수	상위 40~60%	상위 20~40%	상위 20%
성평등 레벨	레벨 2~4	레벨 2 이상 유지	레벨 2 이상 유지

자료 : 통계청; 국회미래연구원; 여성가족부.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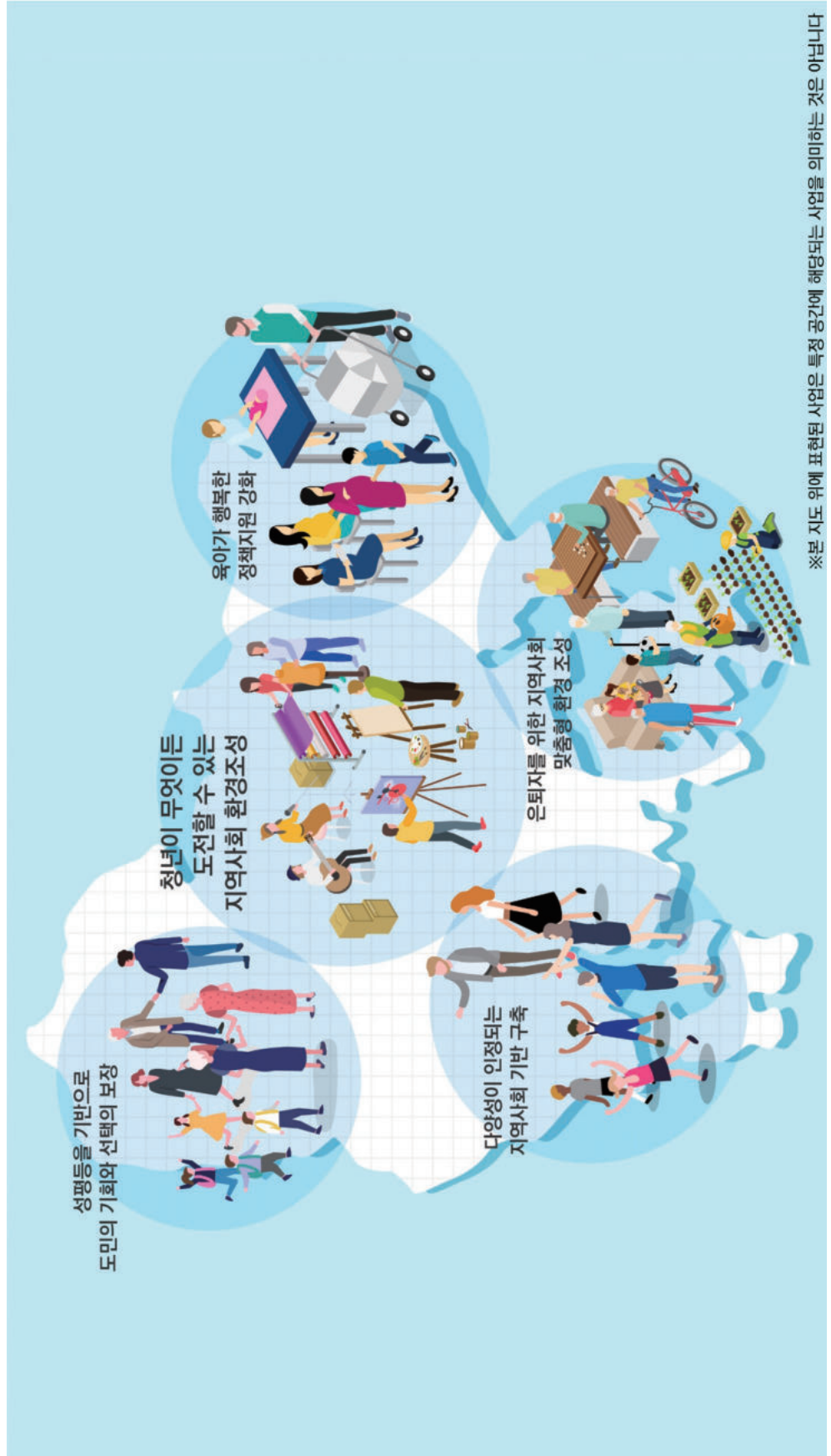
-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 기반 조성 :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및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
- 육아가 행복한 정책지원 강화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및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은퇴자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환경 조성
 - 은퇴자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경제적 활동 여건 제공
-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2)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실효성이 높은 인구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및 기반 구축
- 2단계(중기) : 성공적인 인구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인구 모델 제시
- 3단계(장기) : 2040 인구 목표(334만명) 달성

〈그림 3-3-3〉

「지속가능한 경남
맞춤형 인구 정책」
구상도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 기반 조성 :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경남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및 사업 체계적인 추진
 -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도민 대상의 성평등 교육 제공
 - 경남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성평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구성
 - 정책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2)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법률혼 관계에만 지원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
 -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 전체의 공동체성 강화
- **외국인 이주를 위한 다양한 정주환경 조성**
 - 농어업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생활인프라 제공
 - 지식서비스 외국인 이주자의 니즈 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환경 인프라 제공

(3) 육아가 행복한 정책지원 강화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 부모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및 산후조리 지원 확대
 - 돌봄의 신뢰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자녀 양육부담 분담
-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누구든지 주저 없이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센터 설립

(4) 은퇴자를 위한 지역사회 맞춤형 환경 조성

- **은퇴자의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조성**

- 은퇴자의 경제적 활동 여건 제공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은퇴자 정착 프로젝트 추진
- 은퇴자의 주거 환경 및 경제적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은퇴자 정착 컨설팅 전문 기관 설립

(5)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조성

-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경제활동 기회 확대
-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특별도 경남 완성

- 청년이 꿈을 찾도록 지원
- 청년의 창업 도전 지원
- 청년의 사회혁신활동 도전 지원
- 청년의 창작활동 도전 지원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2) 시·군 계획지침

- 시·군의 과도한 계획인구 추정을 지양하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등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계획인구 추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성평등 기반 조성, 다양성 존중,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은퇴자 맞춤형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 시·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 정책 수립 강구

제2-1절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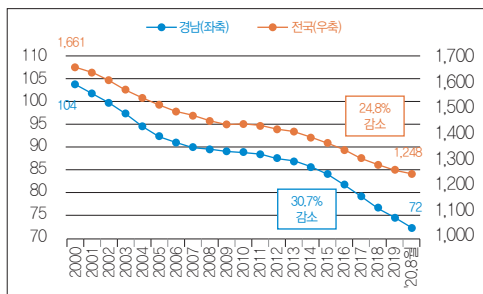
1) 경남 청년 인구 유출 문제 심화

● 경남 청년 인구 변화 추이

- 경남 청년(15~34세)인구 2000년 104만명 → 2020년 8월 72만명, △30.7% 감소
- 청년 인구감소는 출산율 감소라는 자연 요인과 지역 간 인구이동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합계출산율이 전국보다 높음에도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감소, 인구 유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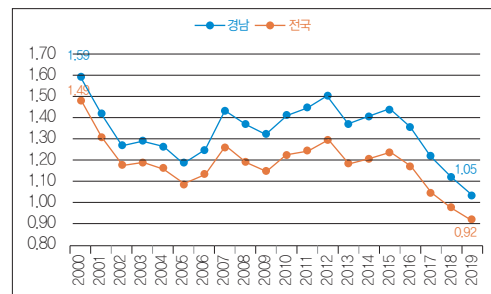
<그림 3-3-4>

청년 인구 규모 및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청년 인구 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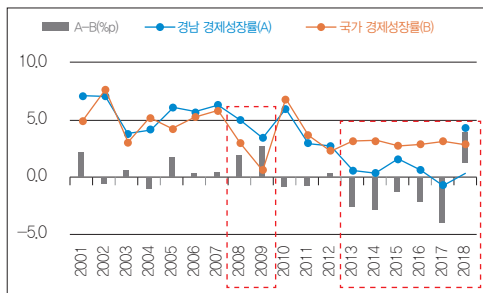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경남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 경남 경제 상대적 악화(전국보다 낮은 성장률 지속)로 청년 인구 유출 급격히 증가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기(2008~2009년)에 청년 인구 유입에 반해, 최근(2015년 이후) 유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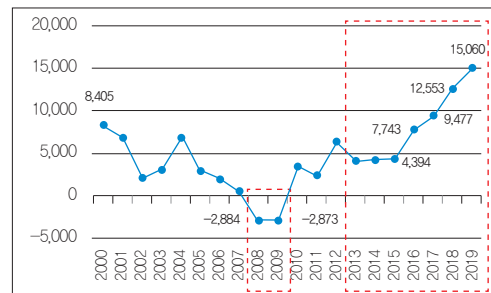
<그림 3-3-5>

경제성장률 및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지역소득.



청년 인구 유출 규모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 청년을 위한 특별한 미래 전략 구상 필요성

● 청년의 생활 터전으로서 경남의 매력이 경기 악화와 함께 급격히 하락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의 중심이 기존 전통산업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가속화
- 전통산업 의존도가 높은 경남의 경제구조와 경기 악화 → 청년 인구 유출 지속 전망

●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청년의 도전이 절실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사회 혁신에 참여할 역동적인 청년층의 지역 유입 전략을 강구해야 할 때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 전략목표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특별도 경남” 실현
- 정량목표 : 매년 청년 인구 순유출 규모를 ±1천명 이내에서 안정화

〈표 3-3-3〉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청년 인구 순유출규모	15,060명(2019년)	4,000명 내외 (2010~2015년 평균 수준)	±1,000명 이내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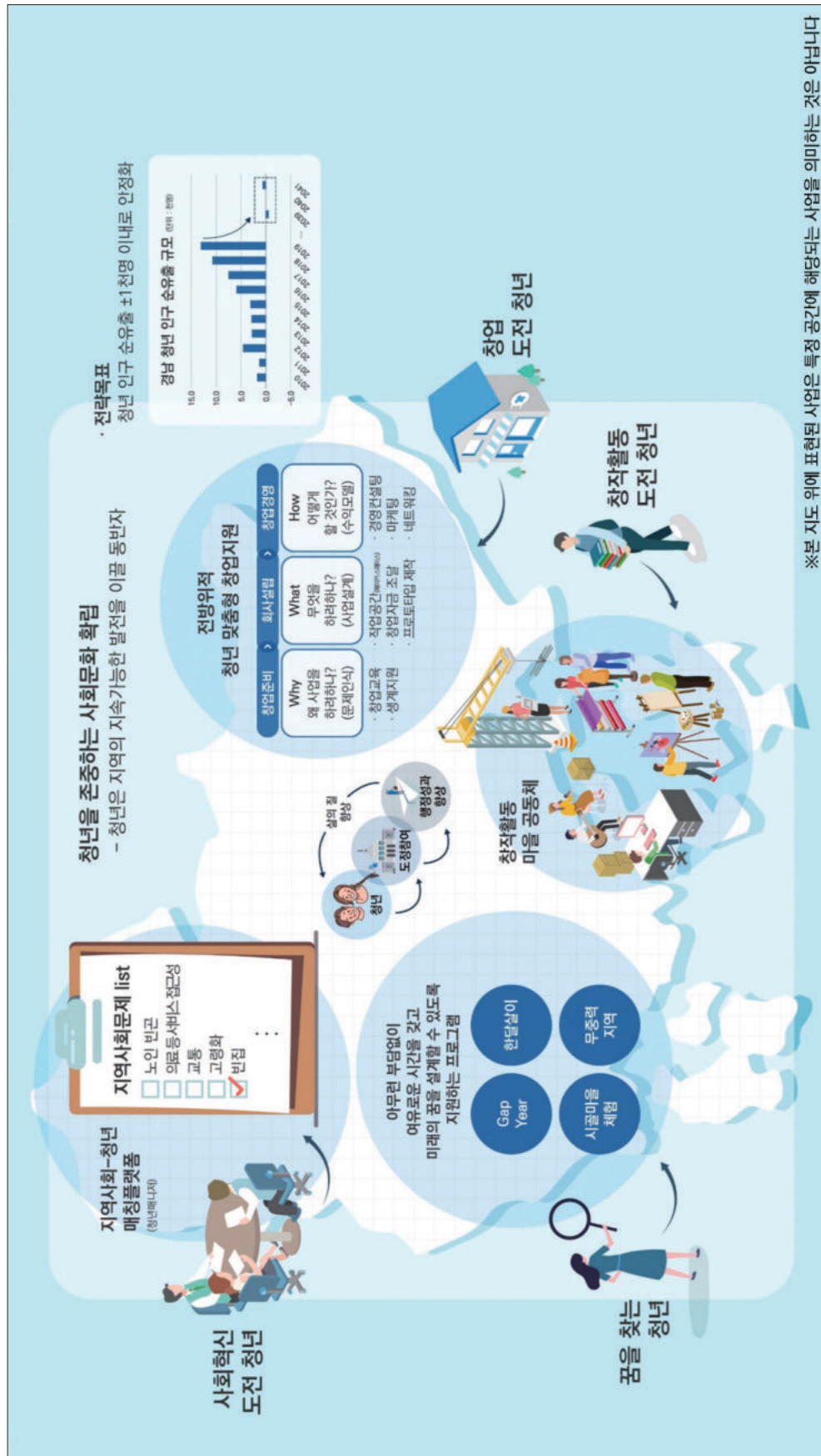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추진방향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사회문화 확립
 -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주체로서 청년 인식 확산
- 청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지역의 교육역량 강화 및 교육혁신을 통한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청년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청년 생애 과업의 원만한 이행과 공정한 출발선 보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청년의 자유로운 도전을 위한 최적의 여건 조성
 - 청년이 스스로 꿈을 설계하고, 창업과 사회혁신활동, 창작활동 등 도전을 적극 지원

〈그림 3-3-6〉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구상도



※본 지도 위에 표현된 사업은 특정 공간에 해당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청년이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2단계(중기) :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3단계(장기) :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 특별도 경남 완성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청년의 경제적 독립과 생활 안정 지원 기반 조성

-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의 취업과 진로 보장
 - 기술기반 학교공간혁신
 - 기초과학 인재 양성 지원 확대와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 대학교육혁신으로 지역 내 대학의 경쟁력 강화
 - 도-대학 상생발전협의회 및 대학교육 플랫폼 운영
 - 지역대학 석·박사급 인재 해외 파견
 -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설립 및 인공지능 대학원 학과과정 신설 등
 - 생애주기 평생학습 체계 구축
- 경제활동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일자리 공급 확대 등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 산업단지 및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문화 전문 인력양성 및 창업 활성화
 - 공유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확산 및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 농어촌 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청년농업인 유입 및 거주 확대, 차별화된 귀어 지원을 통한 어업 후속 인력 확보
 -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완화
 -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을 통한 노동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 해소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생활 안정 지원 강화

- 교육비, 취업활동비, 필수 생계비 등 지원을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
-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및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녀 양육부담 분담 등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2) 청년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이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사회문화 확립
- 청년 이용 공간 확대 및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청년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주체이자 동반자로 인식하는 정책 환경 조성
- 청년 참여 기반 구축 등 청년 참여 정책 확대
- 청년참여예산제도, 청년영향평가 도입 등 청년의 참여로 도정의 성과가 향상되고, 청년 삶의 질이 높아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

(3) 청년이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청년특별도 경남 완성

● 청년이 꿈을 찾도록 지원

- 갭이어(Gap year), 한 달 살이, 시골마을 공동체 체험, 무중력 지역 등 꿈을 찾는 청년의 여정 지원
- 지역 맞춤형 스토리 발굴 및 생활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청년친화도시 조성 확대

● 청년의 창업 도전 지원

- 창업 교육, 컨설팅, 프로토타입 제작, 작업공간, 창업자금, 네트워킹, 마케팅을 비롯해 창업 준비기간 생계비 지원 등 전방위적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 창업이 쉬운 스마트 창업 생태계 구축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창업지원 강화
-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등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 청년의 사회혁신활동 도전 지원

- 지역사회-청년 매칭 플랫폼 구축으로 기존 공동체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경제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 투자 지원 강화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확대 등 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 도시재생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서비스 구축을 통한 청년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청년의 창작활동 도전 지원

- 작가, 예술가, 건축가 등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꿈을 가진 청년이 부담 없이 오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
- 마을공동체성 회복 및 공동체 마을 육성 지원
- 도민 중심 문화예술 활동 및 전문예술인 지원 확대
- 생활권 문화기반 시설 조성 확대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2-1) 시·군 계획지침

- 청년의 순수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육 서비스 공급 및 경제활동 기회 확대 방안 마련
-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확립 방안 강구

제3절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사회서비스 현황 및 미래변화

● 신종 감염병 확산의 세계화

-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에 따라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면적 사회서비스 공백과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현상(팬데믹, pandemic)은 더욱 심화될 것임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증가

- 폭염, 감염병 등 재난·재해로 인해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였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당면 과제임
- 향후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재난·재해가 더욱 증가할 것이며, 그 위기는 중간계층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화하여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효율성 중시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속에서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 향후 경남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의료취약지 문제해결의 대안으로서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것임

● 지방소멸에 따른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

- 서부경남 등 군 지역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및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도서,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됨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 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근린권역별 원스톱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음
- 향후 지방분권이 강화됨에 따라 지자체는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에서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2) 전략의 필요성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역사회 중심의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으로 전환**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주기적 확산과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시설·병원 중심의 집단적 돌봄 체계에서 지역사회 및 소규모시설 중심의 돌봄 체계로 전환이 필요함
 - 지역공동체적 접근 방식에 기반한 대면 돌봄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감염병 확산 등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 **전략목표** :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량목표** : 도민의 기대수명 87세, 삶 만족도 70점 달성 등

〈표 3-3-4〉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량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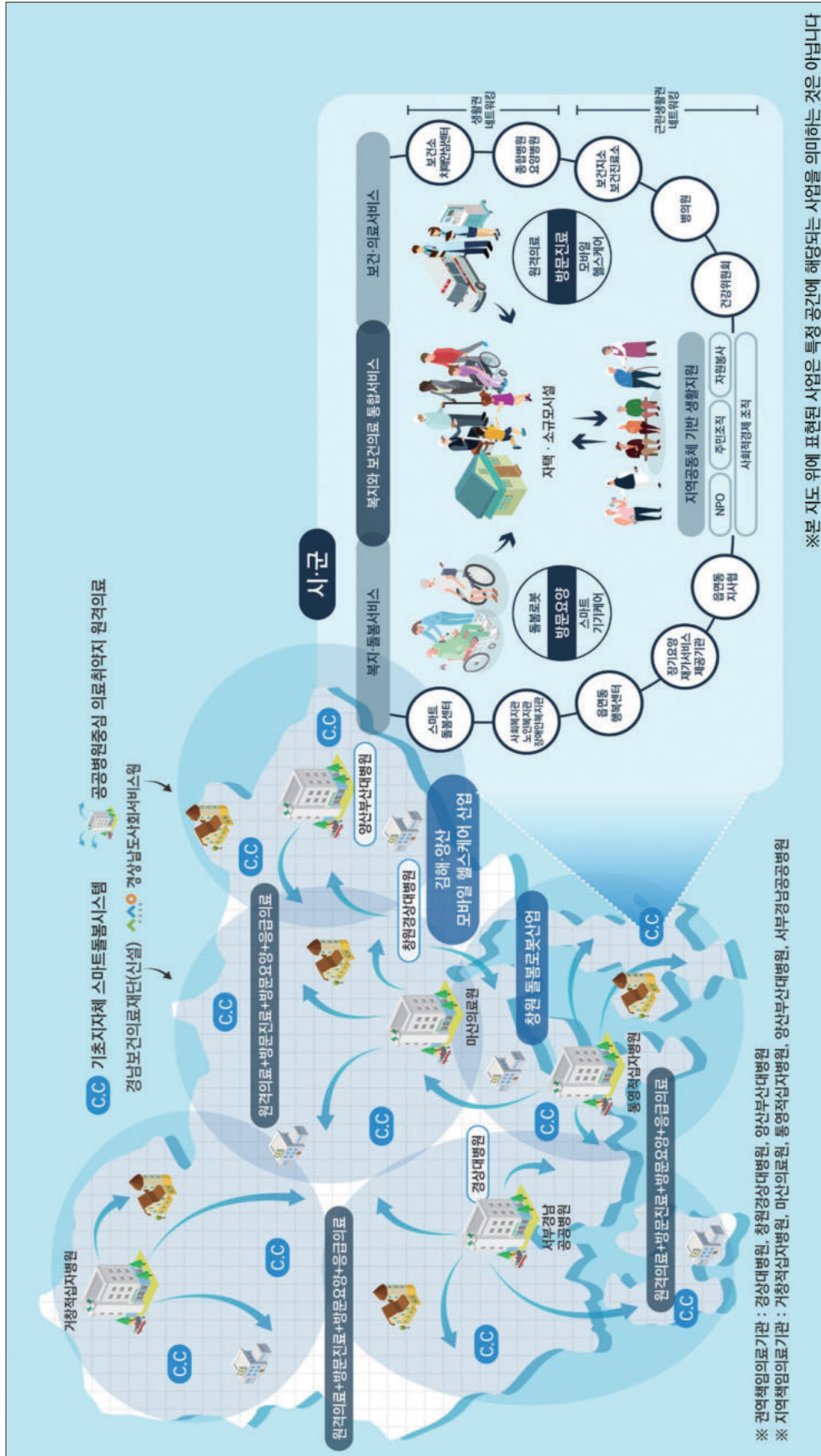
구분	지표	현재 수준	목표(2040년)
기대수명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생활 보장	81.9세	87세
삶 만족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조사)	도민의 주관적 웰빙 수준 향상	61점	70점

2) 추진방향 및 전략

- **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서비스**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연계성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 민간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케어 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스마트 의료 도입

〈그림 3-3-7〉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스템 구축」 구상도



※본 지도 위에 표현된 사업은 특정 공간에 해당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복지와 보건의료의 통합서비스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경남형 커뮤니티케어의 연계성 강화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공동 모니터링체계 구축
- 광역 및 기초단위에 민관협력 커뮤니티케어협의체 구성
- 경남보건의료재단 신설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계·협력으로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 서부경남 공공병원, 어린이재활병원, 감염병 전문병원 등 인프라 확충
- 의료취약지 지역보건기관 의료기능 강화 및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지역 의료 및 복지인력 양성, 교육체계 구축

2) 지역공동체 기반 생활지원 서비스

● 민간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주민참여형 사회서비스 확대
- 읍면동 돌봄 계획 수립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위원회 통합운영
-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거점 조직을 활용한 주민 조직화 강화
- 지역사회 중심 아동 및 청소년 비만 문제, 학대 예방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호스피스지원체계 구축

3) 비대면 방식의 스마트케어 강화

● ICT를 활용한 스마트돌봄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시스템 구축
-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아동, 외국인 가정에 AI 스피커, IoT 센서, 화상 영상기기 등 스마트 돌봄 기기를 보급하여 실시간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스마트돌봄 관리자, 방문 돌봄 제공인력, 사례관리자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ICT를 활용한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⁴⁾

- 재난 상황, 의료취약지, 만성질환자 중심의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추진
- 공공병원, 지역 보건기관 중심으로 원격협진사업 확대 실시(의료법 개정 후 원격의료 선도적 추진)
- 농어촌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원격의료+방문진료+방문요양+응급의료’를 핵심축으로 하는 중층적 네트워크 구축(읍면동 생활권-기초지자체-권역-경남도)

● 스마트케어 운영 및 관리체계

- 권역별 스마트돌봄센터 : 사회복지관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3~5개의 읍면동을 관리하는 스마트돌봄센터 설치,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정보화 교육사업 실시
- 스마트케어 서비스 내용 : 실시간 안부 확인, 상담 서비스, 원격의료, 정보제공, 건강생활관리, 치매 예방, 정보화 교육, 서비스 연계 등
- 돌봄로봇산업 육성 : 경남의 기계산업과 첨단로봇산업을 연계한 돌봄로봇산업 육성, 김해 의생명/의료기기 강소연구개발특구와 김해/양산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 기반구축 사업, 경남 로봇랜드와 연계하여 추진
- 돌봄로봇⁵⁾ R&D : 돌봄로봇연구개발센터 정부 건의 및 유치, 사회서비스원 요양시설과 종합재가센터 중심으로 돌봄로봇 시범사업 실시, 지역대학 전문 인력양성과정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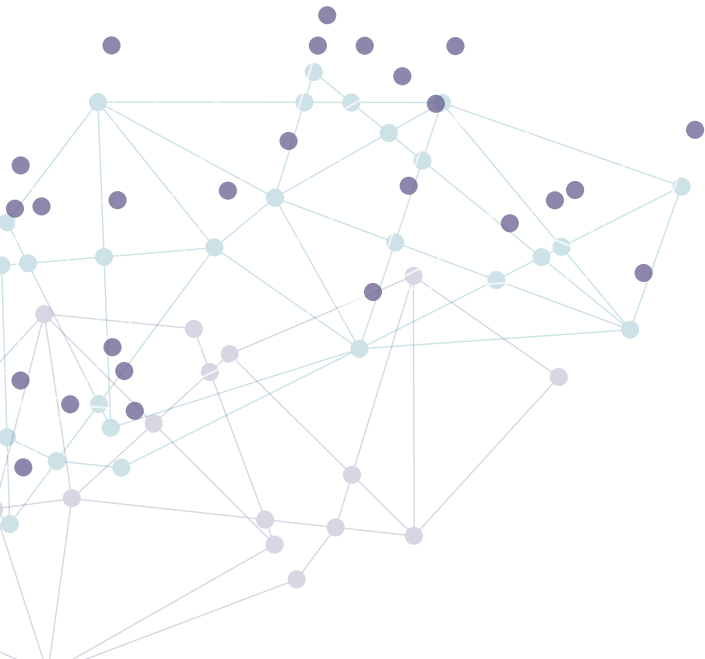
(공동체기반 포용사회 전략3) 시·군 계획지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 및 주민참여 확대 등의 근린생활권 네트워킹 강화 전략 수립
- 감염병 등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ICT를 활용한 스마트케어 강화 방안 강구

4) 원격의료는 전화 진료, 화상 진료와 타 기관의 진료기록, 영상을 전송받아 진단하는 원격진료에 더해, 환자 개인 의료기기에서 축적한 건강정보를 이용한 원격 모니터링까지 포함함(주간경향 1377호, '비대면 의료' 의료계 반발 넘을까), 모바일 헬스케어는 태블릿,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혈압, 혈당, 맥박 산소, 수면성 무호흡 등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체신호를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측정할 수 있음(부산연구원, Post COVID-19 부산 시민행복 프로젝트, 2020, p76).

5) 돌봄로봇은 로봇기술을 도입한 복지 용구로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제공인력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돌봄로봇은 이용자의 이동·식사·배설·입욕·복약 등을 지원하고, 치매 노인 관리, 커뮤니케이션(말벗), 건강 체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감염병 예방, 이용자의 의존기능 및 자립 능력 강화, 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부족 문제 해소).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4장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제1절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제2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제4장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제1절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 문화·관광·체육 현황

-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 경남도민 문화예술 관람률 전국 평균 하회
 - 19년 경남의 문화기반시설은 207개소로 15년부터 지속 확충되고 있으나, 18년 경남도민 문화예술 관람률은 80.2%로 전국 평균 81.5% 하회
 - 15년 187개소 → 19년 207개소로 20개소 증가
 - 18년 경남의 문화예산은 698,795백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3.0%로 전국 평균 3.0%와 동일한 수준
- 경남 관광수요 정체 및 만족도 하위권
 - 19년 경남 관광 총량은 47,832천일로 17개 시·도 중 6위 기록, 전국 대비 비중은 15년 7.8%에서 18년 9.7%로 상승하였으나, 19년 8.2%로 정체
 - 19년 경남 여행지별 전반적 만족도는 12위(77.8점)로 하위권 기록
- 공공체육시설 및 경남도민 생활체육 참여율 지속 증가
 - 18년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2,580개소로 15년 대비 568개소 증가
 - 15년 2,012개소 → 19년 2,580개소로 568개소 증가
 - 19년 경남도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9.0%로 전국 평균 66.6% 상회

2)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문화·관광·체육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소
 -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건강에서 정신적 건강으로 확대 → 문화·관광·체육 활동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
- 모두가 누리는 문화·관광·스포츠 생태계 구축을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 실현
 - 도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일상에서 누리고, 생애주기별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관광·스포츠 시스템 구축 필요

- 오래 머무르고 싶고,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도민의 삶과 문화가 관광이 되고, 관광객과 도민이 상호 교류·소통하는 도민 주도의 문화·관광 생태계 확립 필요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도민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 전략목표 :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으로 경남도 균형발전” 추구
- 정량목표 : 관광객 수 2,000만명 시대

〈표 3-4-1〉

「도민이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관광객 수	1,000만명	1,500만명	2,000만명
문화 향유율	80.2%	85%	90%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여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환경 조성

- 도민이 선도하는 경남형 문화 여가 시스템 구축
 - 소통과 포용 기반의 문화 향유·복지 체계 구축
 -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재생 추진
 -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스마트 체육 시스템 구축
 - 경남형 스포츠 복지 체계 구축
-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동력 구축 및 문화 자생력 강화
 -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남해안 아시아 문화 벨트 조성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및 가치 재창조

(2) 오래 머무르고 깊이 만끽하는 체류형 관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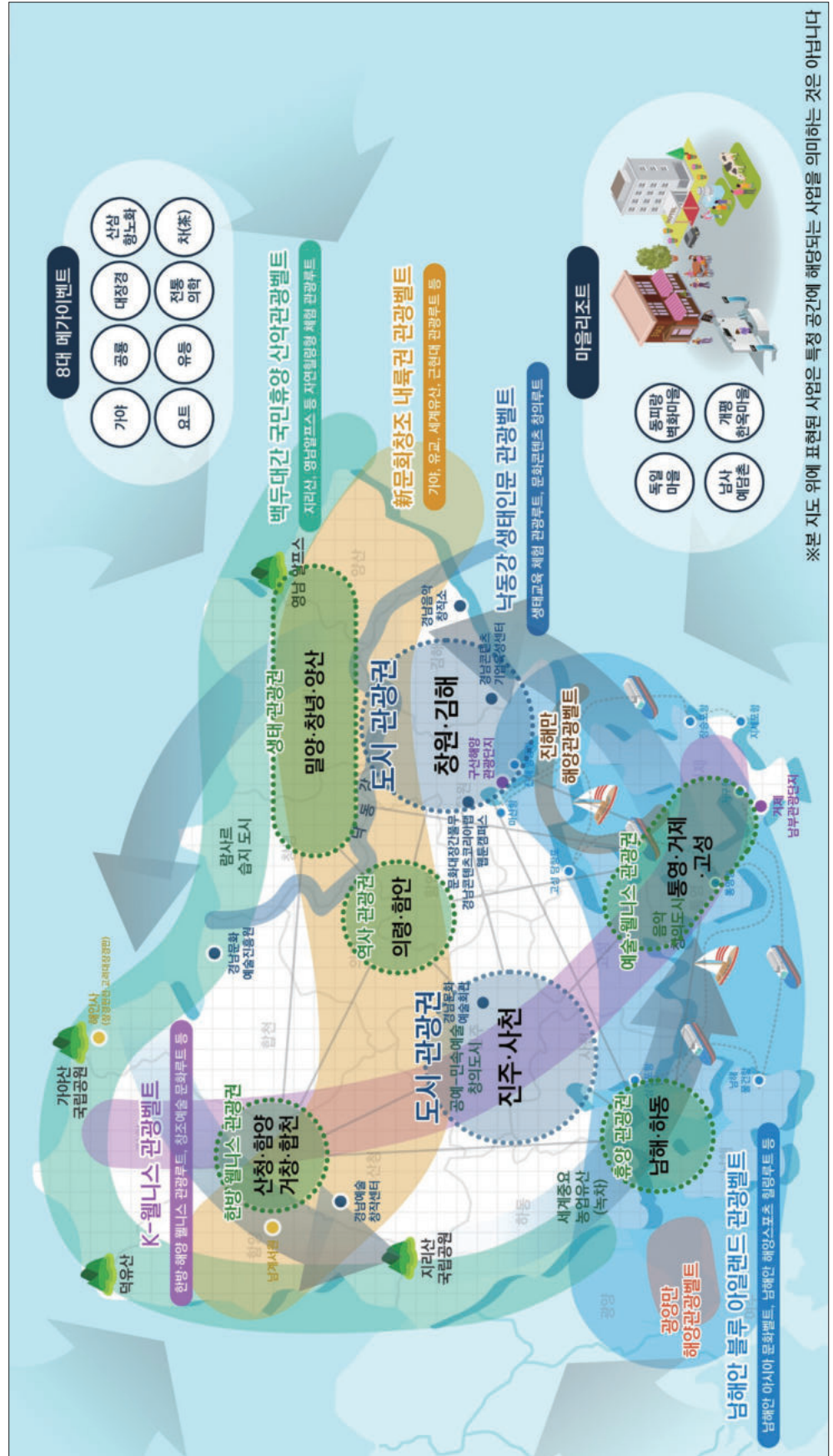
- 경남 구석구석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광역관광 기반 구축
 -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 광역관광 교통 체계 구축
 - 경남 스마트관광센터 조성·운영
- 모두가 누리는 즐거운 여행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 경남 복지관광 체계 구축

(3) 도민의 삶과 문화가 관광이 되는 선순환 구조 확립

- 관광객과 경남도민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경남 특화자원을 연계한 메가 이벤트 개최
 - 생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및 SW 개발·운영
 - 경남 Hidden jewels 프로젝트 추진

<그림 3-4-1>

「도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구상도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도민이 선도하는 경남형 문화 여가 시스템 구축

- **소통과 포용 기반의 문화 향유·복지 체계 구축**
 - 찾아가는 미술관 및 공연장 등 찾아가는 문화복지 실현
 - 문화기반시설의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
 - 도민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생활문화 공간 및 플랫폼 조성, 경남도민 생활예술단 운영, 경남 생활문화 활동가 육성 및 생활문화 동아리 매칭 등
 - 경남 도민 문화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등 지역 문화예술인 안정적 활동 지원
-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 재생 추진**
 - 문화낙후지역 우선 배치 등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
 -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등 유휴시설의 복합문화 공간화
 - 노후화 문화시설 컨설팅 및 리모델링(전시·교육 등 실감 콘텐츠 서비스 구축 등)
-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스마트 체육 시스템 구축**
 -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 ICT 기반 첨단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스마트 학교체육 시스템 보급
- **경남형 스포츠 복지 체계 구축**
 - 소외계층 없는 도민 체육향유권 보장
 - (가칭) 경남 찾아가는 체육 버스, 작은 체육관 조성 등
 -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2) 문화콘텐츠산업 성장 동력 구축 및 문화 자생력 강화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및 가치 재창조**
 - G-Culture 글로벌라이즈 프로젝트 추진
 - 가야, 유교, 최치원, 서복, 따오기 등 경남 대표 문화원형 기반 공동 문화상품 개발, 국제교류 세미나 개최 등

- 경남 근현대문화유산 보존·관리
- 문화재 지정·등록, 보수·복원 추진 등
- 가야역사문화권 정비 및 문화도시 조성
- **남해안 아시아 문화 벨트 조성**
 - 창원 MAMF·K-Pop World Festival, 통영 윤이상 국제음악제, 부산국제영화제, 목포 세계마당페스티벌 등 (가칭)남부권 K-문화 허브 비엔날레 추진
- **지역밀착형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기반구축**
 - 경남형 문화·콘텐츠산업 및 경남 뉴콘텐츠 육성
 -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콘텐츠코리아랩, 경남음악창작소, 웹툰캠퍼스 등 연계를 통한 경남형 문화·콘텐츠산업 창출
 - ICT 기반 1지역·1콘텐츠 육성 등 경남 뉴콘텐츠 개발·육성
- **문화를 통한 경남형 청년 일자리 창출**
 - 문화우물사업, 문화·콘텐츠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

3) 경남 구석구석을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광역관광 기반 구축

-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 도시관광, 역사문화(가야, 유교, 세계유산 등), 웰니스, 낙동강 생태인문, 남해안 등 관광벨트 조성
- **광역관광 교통 체계 구축**
 - 그린뉴딜 모빌리티 도입
 - 남해안 연안 셔틀 여객선, 낙동강 자율운항 해상택시,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 Maas 플랫폼 구축 등
- **경남 스마트관광센터 조성·운영**
 - 경남 스마트 관광 플랫폼 구축
 - 관광정보 제공(위치, 테마, 관광시설 및 콘텐츠, 숙박, 식음시설, 연계 관광지 등), 예약·결제·확정 서비스 → 비대면 방문 및 시설 이용
 - 거점·소거점별 스마트 관광센터 조성
 - 지역진흥(특산품 무인 판매, 디지털 공연·전시, 교육·체험 등), 편의(충전시설, 정보안내, 화장실), 환승(환승 정류장, 환승 교통수단 등) 등

4) 모두가 누리는 즐거운 여행 환경 조성

●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주기별 관광 지원 체계 구축
- (청소년) 선비 인성교육·진로교육 등, (청년) 갭 이어 투어, (중장년) 경남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노년) 경남 시니어투어(웰니스 투어, 조부모-손자 그랜드 투어, 평생교육 투어 등)

● 경남 복지관광 체계 구축

- ‘누구나 장애 없이 여행하기 좋은 경남’ 조성
- 경남 배리어 프리 관광인증제 등
- 경남형 나눔 여행 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바우처 지원 등

5) 관광객과 경남도민이 상호 교류하고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

● 경남 특화자원을 연계한 메가 이벤트 개최

- 경남형 메가 이벤트 발굴 및 개최
- 가야, 공룡, 대장경, 산삼 향노화, 요트, 유등, 전통 의학, 차(茶) 등

● 생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및 SW 개발·운영

- 경남 스마트 마을 리조트 조성
- 도내 마을 연계 숙박+식당+카페+상점+체험+공유오피스 공간 등 조성
- 경남형 스테이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 관광 활동+명인·명장, 남해안 해양 레포츠 교육·체험 등 정보 제공 플랫폼

● 경남 Hidden jewels 프로젝트 추진

- 숨겨진 관광지, 프라이빗 럭셔리 관광지 등 발굴 및 홍보·마케팅
- 도민 생활관광 해설사 양성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전략1) 시·군 계획지침

- 시·군민의 문화 향유·복지 확대를 위한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을 통한 문화 자생력 강화 방안 마련
- 시·군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시·군민이 함께 교류하고 즐기는 관광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제2절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농어업·농어촌 현황

● 경상남도 농어업 분야 실질 총생산액의 지속 감소

- 경남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총생산액의 변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생산을 통한 성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임

● 경남의 농어가 인구 감소

- 2010년에 비해 40세 이하 청년농가가 80% 가까이 감소해 향후 농가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약 40% 감소해 2018년 현재 어가인구는 18,045명임

● 도내 농축산물 수급의 불균형적 구조

- 도민이 소비하는 식품은 일정하지만, 경남의 농업생산구조가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품목을 들여오거나 수입해서 충족하는 구조를 보임

● 일반해면어업 및 천해양식어업의 생산량 변화 추이

- 경상남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1970년 이후 약 50년간의 장기 변화추이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며,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2)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의 필요성

● 농어업 생산활동, 농어촌이 가진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부각

- 농어업이 가진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먹거리의 안전성과도 직결되어 있으므로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생산환경 조성 필요

● 고령농가 비중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농어촌 경제활동 인구 확보 필요

- 경남 농어업 분야의 고령농가 비중은 총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 신규유입, 취업 유인 정책, 청년농업인 유입 정책 등도 농어업의 지속가능성 생산 환경 조성 필요

● 농어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필요

- 경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귀어·귀촌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 전문 인력 육성 및 거주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함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 전략목표 : “지속가능하고 여유로운 농어촌” 조성
- 정량목표 : 농가/어가 소득 증가

〈표 3-4-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조성」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농가소득	36,923천원	50,000천원	70,000천원
어가소득	48,000천원	60,000천원	90,000천원

2) 추진방향 및 전략

(1) 농축수산업의 통합관리·융합·협치 구조 확립

- 먹거리 안전성·신뢰도 향상
 - 국가 단위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의 확산과 지역 내 농어가-유통업체-소매업체-소비자 간 추적시스템 구축
- 푸드플랜의 광역화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광역 먹거리 전략을 통해 지역 간 농축산수산물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감

(2) 농어업, 농어촌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

- 산업으로서의 경제성 확립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국제무역 관계 속에서 경남의 농축수산물에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품질향상, 규모화 집중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신규 농어업 품목 개발
- 청년농어업인 등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 및 농어촌지역 거주 확대
 - 미래세대인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직업 또는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농어촌 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농어업은 산업으로서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환경개선, 신뢰도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스마트 농어촌은 거주자의 생활환경, 교육환경, 의료환경,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임

(3) 농어촌사회 공동체성 · 자율성 · 다양성 회복

●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 운동 추진**

- 시장경제, 경쟁, 산업화의 추진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운동 추진
- 마을에 유입된 신규 가구와의 갈등 문제를 마을 자율조직을 통해 해결할 방안 강구

●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마을 확산 및 육성**

- 생태적 가치, 교육에 대한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을 모집하여 새로운 마을공동체 육성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농축수산업의 통합관리·융합·협치 구조 확립

- 먹거리 안전, 신뢰도, 농어가소득 정보관리
 - 먹거리 안전·순환 체계 구축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통합유통시스템, 가공지원센터 등
 - 농지·어장 이용 및 보전 합리화
 - 광역 차원의 식량안보 지표, 민관협치 농지·어장관리
 - 공동체 및 귀농·귀어·귀촌 정보관리
 - 농어가 경제조사 시스템을 비롯한 경남 농림어업 통합관리 DB 구축
- 농림어업 거버넌스 강화
 - 경남 농정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중간단계 협치 조직)
 - 농어업 회의소 역할 재검토 및 개선
 - 중앙·지방사무 분리 및 지역 농어업 행정통합(동남권 농산어촌관리원 구축)

(2) 농어업, 농어촌 경쟁력 향상 및 지속 성장

- 농어업·농어촌 경제·환경·사회지표 관리
 - 동남권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양식, 식품클러스터,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 농식품 기업지원 R&D 체계 및 마케팅·기획 역량 강화 지원, 지역 농림수산물 원료중계 시스템 마련, 농식품 기자재산업·스마트팜·스마트양식 연계
 - 스마트팜, 식품, 산림바이오 청년 기술창업 지원
 - 청년 농어업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유형별, 단계별 지원), 청년 식품기술 창업 지원
 - 친환경 저투입농법 개발 및 보급, 정밀농업 육성(정밀농업 기자재산업, 지역별 정밀 토양도 구축)

(3) 농어촌사회 공동체성·자율성·다양성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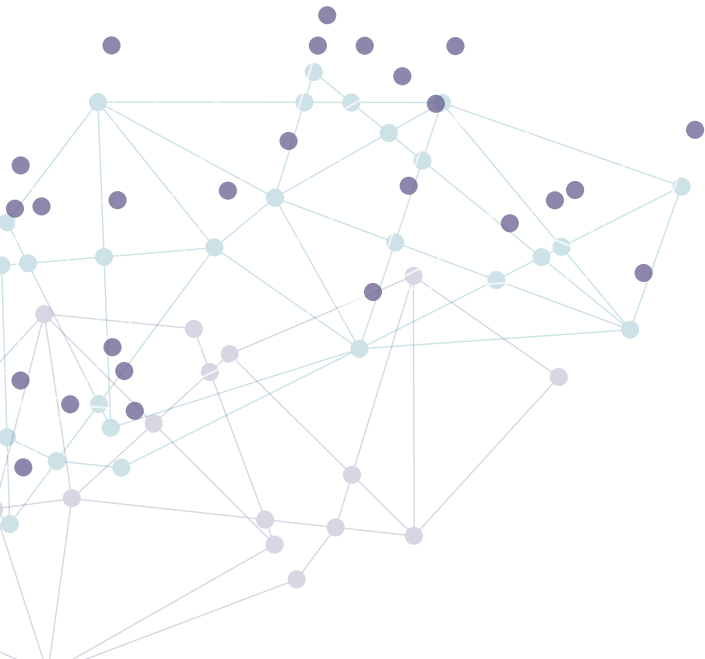
- 농어촌마을의 공동체성·다양성 지원기반 마련
 - 시군, 읍면 단위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 시군으로 확대(농·산·어촌 분야로 확산)

- 공동체 마을 육성(생활공간으로서의 귀촌 확대, 반농반X)
- 경남 농어촌지역 삶의 질 관련 세부지표 개발
- 농어촌관광 활성화(섬 가꾸기, 체험마을 등)
- 지속가능 농어업을 위한 농어업 환경지표 관리
- 농어업의 공익적기능 보존,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축산 부산물 및 폐기물 관리
-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참여, 소득기회 확대
- 공동체 지원농업(CSA) 확산, 사회적 기업을 활용한 아침 밥상 사업
- 귀농 · 귀어 · 귀촌 확대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전략2) 시 · 군 계획지침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화 및 청년 농어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한 청년층 유입 등의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을 위해 농어촌마을의 공동체성 · 다양성 지원기반 마련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5장

생명 존중 안전사회

제1절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제2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제5장

생명 존중 안전사회

제1절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재난 피해 현황과 안전 수준

(1) 경남의 재난 피해 현황

- 태풍 및 호우 등의 자연재난에 취약한 구조
 - 최근 5년간(2013~2017)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피해액이 약 1천억원에 달함
 - 2020년에 발생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경험으로 도민 불안감 가중
- 화재 및 도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에 위험한 상황
 - 기반시설 노후화 및 고령층 비율 증가 등의 문제로 사회재난의 위험성 증가
 -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도시 및 고령층 비율이 높은 농어촌 지역의 사회재난의 빈도 증가

(2) 경남의 안전 수준

- 재난대응체계 및 현장 대응력의 전문성 강화하고 있으나 인력, 재정 등의 한계 존재
 - 지역안전지수 기준, 전국 대비 경남의 안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
 - 최근 3년간 지역안전지수가 분야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화재 분야는 2~5등급으로 저조

2)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

(1) 재난의 미래 트렌드 및 경남의 미래 기후변화 위험성 증가

- 예측하지 못한 신종재난이 발생하고 유형이 다양화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커지는 추세
 - 경주·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의 경험 이후 재난 발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 재난 발생 가능성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난에 대한 도민 불안감 가중

(2) 안전사회 구축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이자 선진국의 정책 방향

- 불확실한 사회에서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필요
 - 다양한 재난 경험 이후 커지는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선진국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과학적 기법 등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의 전문성 강화 추세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 전략목표 :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경남” 실현
- 정량목표 : 경상남도 지역안전지수 전 분야 1등급 달성

〈표 3-5-1〉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7등급(2019년)	(평균) 2등급	(전 분야) 1등급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218명(2018년)	20% 저감	40% 저감

2) 추진방향 및 전략

(1)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추진방향

-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까지 발생 가능한 재난의 철저한 분석 및 신종 재난의 예측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향상, 사회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최소화
- (도민·지역사회역량 강화) 나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의 안전 인식 개선 및 커뮤니티 기반 지역안전 역량 강화
- (전문 인력/기술역량 강화) 안전 전문 인력양성 및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의 전문성 강화
 -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분석 및 예측, 대응 기술 향상

- (행정역량 강화) 재난의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까지 전주기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 역량 강화

- 사전예방 기능 강화, 안전 대비 역량 강화, 긴급대응 역량 강화, 더 나은 지역사회로 복구

(2)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재난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 및 기술력 향상
- (2단계(중기) : 대비·대응 정책에서 전주기 관리 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 (3단계(장기) : 스마트기술에 기반한 재난의 과학적 관리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자연재난부터 사회재난까지 발생 가능한 재난의 철저한 분석 및 신종 재난의 예측을 통한 재난피해 최소화

-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기반한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회복력 향상
 - (풍수해, 폭염 등) 기상학적 원인 분석 및 예·경보 기능 강화, 맞춤형 대책 수립
 - (지진, 화산폭발 등) 신속한 예·경보 시스템 마련 및 주요 시설물 관리 강화
- 휴먼에러를 최소화하여 사회재난 발생빈도 및 피해 규모 최소화
 - (화재, 교통사고, 범죄, 산업재난 등) 긴급대응 및 의료체계 개선 및 규제 강화
 - (감염병, 환경오염, 기반시설 마비 등) 광역관리를 통한 대비, 대응 역량 강화
- 미래 대형재난 및 복잡 재난 관리 방안 마련
 - 태풍+화재, 홍수+산사태, 지진 발생+원자력 사고, 감염병+폭염 발생 등

(2) (도민·지역사회 역량 강화) 나와 우리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도민의 안전 인식 개선 및 커뮤니티 기반 지역안전 역량 강화
 - 도민 스스로 안전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도민 및 지역사회 안전 교육 강화, 지역사회 커뮤니티 역량 강화 및 지속적인 환경 개선 등

(3) (전문 인력/기술 역량 강화) 안전 전문 인력양성 및 첨단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재난의 전문성 강화

-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분석 및 예측, 대응 기술 향상
 - 데이터 기반 재난 원인 분석 기술 향상 및 전문 인력양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의 분석 및 예측 기능 강화, 재난 정보의 신속 및 정확성 강화 등

(4) (행정역량 강화) 재난의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까지 전주기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 역량 강화

- 예방단계 : 재난영향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방재역량 분석(회복탄력성 평가)
 - 기후취약성, 사회취약성, 행정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및 평가
 -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도시의 위험지역에 도시개발을 억제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제도 및 법률 개선(조례 개정 및 규제 강화)
 - 경남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조례 개정
- 대비단계 :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철저한 안전 대비 역량 강화
 - 재난 시나리오 구축
 - 훈련, 교육 등에 활용하고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재난 시나리오 구축
 - 재난안전교육
 - 기관, 지역별로 안전관리자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주민참여형 방재마을 만들기
 -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위험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스스로 대비 역량 강화
- 대응단계 :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응 역량 강화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대응 역량 강화 및 전문 인력 확대
 - 경찰, 소방 등 대응 인력 확대 및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전문성 강화
 - 매뉴얼 점검 및 개정
 -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
 -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여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복구단계 :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조성을 위한 더 나은 지역사회로 복구**

- 다양한 복구 시나리오 구축
 - 재난 복구 시 다음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복구 시나리오 구축
 -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모델 개발
 - 재해복구계획 시나리오 및 복구 지원 시스템 개발
- 방재형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방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생명 존중 안전사회 전략1) 시·군 계획지침

- 시·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 시스템 마련 및 시·군민의 안전인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방안 마련
- 재난의 예방단계부터 복구단계까지 전주기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안전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제2절

사람과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 경남의 현재 여건 및 전략의 필요성

1) 경남의 환경문제 및 여건

(1) 경남의 기후변화

- 경남의 기후변화 가속화

- 경남의 평균기온이 1986~1995년 대비 2006~2016년에 0.5℃ 증가
- 기후변화 가속화에 따라 폭염 발생 등으로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는 현상 증가

-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 경남의 부문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2005년 대비 2015년에 30% 증가
-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은 2016년 대비 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

(2) 경남의 환경문제

- 경남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보전하고자 하는 지역적 노력 향상

- 남해, 지리산, 낙동강 등 국가적으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 자원이 풍부함

-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미세먼지, 수질 등의 문제에 대한 관심 증가

- 최근 미세먼지, 수질에 대한 도민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적 대응 노력 강화 추세

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

(1) 미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과 함께 지역적 노력의 동반 요구

-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은 현 사회가 당연한 필수 과제

(2)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방안 필요

- 경남은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풍부하며 단절된 생태축의 복원과 연결을 통해 환경의 지속가능성 향상이 필요함

- 경남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간이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누려야 할 공기와 물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필요

2. 추진전략의 목표 및 방향

1) 추진전략 및 목표

- 핵심전략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전략목표 :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적극적 노력 및 경남도민의 안심 환경” 조성
- 정량목표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좋은 물 달성

〈표 3-5-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정량 목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온실가스배출량	84,529천톤	(2017년 대비) 50% 감축	(2017년 대비) 60% 감축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	40% 감축	50% 감축
좋은 물 달성 비율	100%	100% 유지	100% 유지

2) 추진방향 및 전략

(1)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방향

- 자연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자연생태축 보전
 - 백두대간축, 낙동강 수생태계, 남해 해양생태축 구축 등의 지속가능성 향상
-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및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

(2)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 단계별 추진전략

- 1단계(단기) : 자연보전,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 인간 생활의 적극적 변화
- 2단계(중기) : 단절된 생태축 연결을 통한 자연 본연의 가치 강화
- 3단계(장기) : 완전한 저탄소 녹색도시로 전환

〈그림 3-5-2〉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구상도



3. 추진전략의 세부 실천과제

(1) 자연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자연생태축 보전

- 백두대간축을 중심으로 생태환경을 연계하고 훼손·단절된 축을 적극적으로 복원하여 경남의 생태네트워크 강화
 - 주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방지 : 도로·철도 등 개발사업 시 경남의 주요 생태네트워크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행정절차 강화
- 낙동강을 비롯한 경남 내 국가하천, 지방하천 등의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을 통한 자연이 우선되는 수생환경 조성
 - 자연이 우선되는 수생환경 조성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수질 개선을 위한 국비사업 확보 및 광역 차원의 협력 강화
- 해안녹지의 연속성 강화 및 남해의 생태자원 보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복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축 구축
 - 생태네트워크 구축 : 광역생태권 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백두대간 및 철새도래지 등 보호지역 확대 사업, 도시 비오톱 확대 등
 - 생태거점 보전 및 복원 : 야생동물의 서식 및 이동지역 보전 사업, 종 다양성 회복 사업, 연안 및 내륙 지역 습지 복원 사업 등
- 도시 공간의 재자연화 및 생태환경 기능 확보
 - 도심공간의 외연적 확산 방지 및 기존 도심 내 폐부지(유휴공간 등)의 재자연화를 통한 생태환경 기능 회복
 - 그린 인프라 확충 : 도시공원, 도시 숲 등 조성을 통한 그린 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

(2)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절감,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농축산 부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 등(기술적 검토를 통한 입지 선정)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지원 : 2040년 친환경 차 78만대 보급(2019년 등록 차량 170만대의 45%), 배출가스 등급제 연계 상시 차량 운행 제한(도시지역), 친환경에너지원 충전소 확대 등
- 산업·교통·농업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유도 및 기준 강화 등을 통한 저감대책 강화
 - 산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도내 전역 대기오염총량제 단계별 확대 시행, IoT 기반 스마트 환경관리(감시) 실시 등

- 농업 부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농촌지역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캠페인, 교육 강화 등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민감 취약계층 건강관리,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도민 건강 보호 강화**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산업, 발전, 수송, 농촌 및 생활 등 부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응
 - 동남권 미세먼지 관리체계 구축 : 동남권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 미세먼지 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추진, 배출원 저감대책 수립, 대기오염물질 관리 계획 수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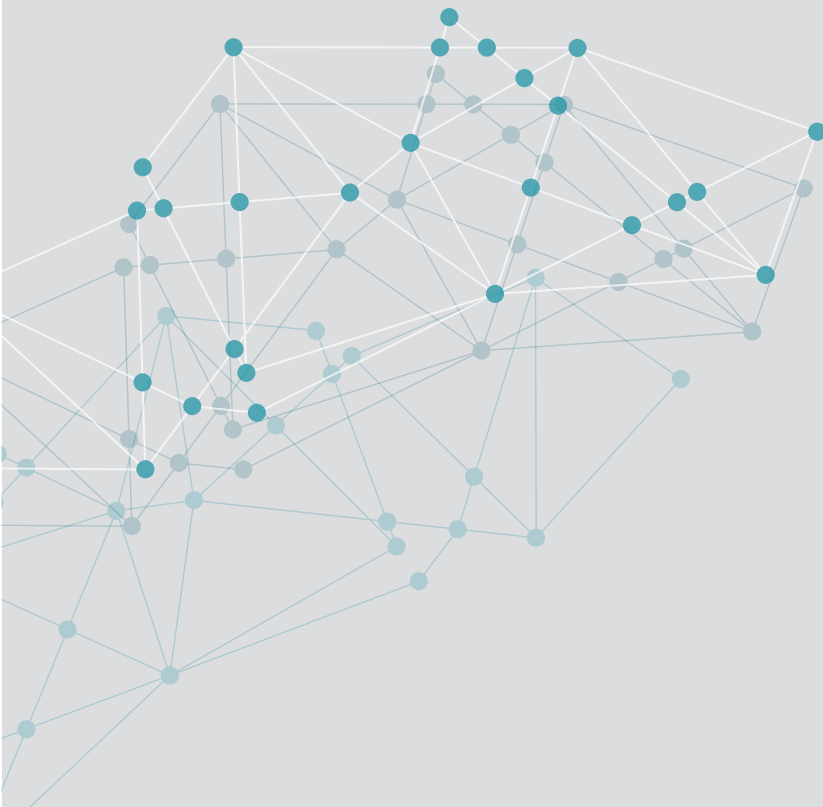
(3)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 경상남도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상남도 맞춤형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 낙동강 홍수 방어 능력 제고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 종합정비,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홍수 대응 안정성 강화, 도시 홍수피해 방지를 고려한 도시계획
- **저영향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친환경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 저영향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홍보, 빗물 이용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친환경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 하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물순환 선도도시 등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저류시설 설치, 경남 공익형 직불제, 초지 및 습지 등 조성 등
-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로 가뭄 등 기후변화와 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상습가뭄지역 맞춤형 물공급 및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추진
 - 하천유지유량 확보 : 합천댐 상류 거창2지점 하천유지용수 확보

(생명 존중 안전사회 전략2) 시·군 계획지침

- 백두대간축, 수생환경, 해양생태계 등의 주요 생태네트워크 단절 방지를 위한 제도 및 행정절차 강화
- 미세먼지 저감, 건강한 물환경 조성 등의 시·군민 건강권 보장 및 확대 방안 강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4편

경남미래2040 부문별 계획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지역 산업

제1절 농업(농산촌)

제2절 어업(어촌)

제3절 지역 산업

제4절 과학기술

제5절 산업단지

제1장

지역 산업

제1절

농업(농산촌)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의 농업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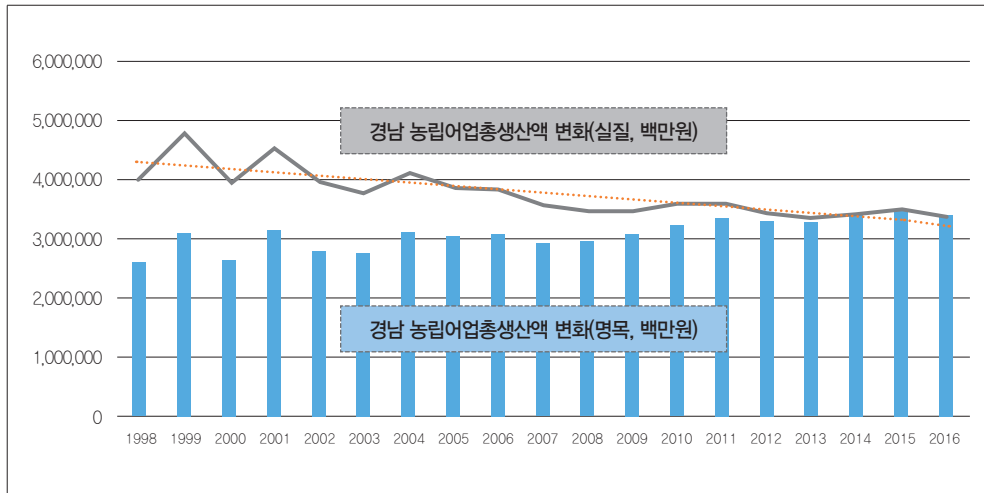
(1) 농림업 총생산액

● 경상남도 농림업 분야 실질 총생산액의 지속 감소

- 경남 농림어업 총생산액은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추세적으로는 상승하고 있음. 그러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총생산액의 변화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생산을 통한 성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임
- 이러한 양상은 전통적인 1차 산업으로써의 농업이 가진 부가가치 개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농업인력, 재배면적 등의 생산요소가 이농, 고령화 등으로 인해 꾸준히 줄어들며 노동, 자본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생산기술이나 부가가치 증대가 경남 농업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4-1-1〉

경상남도 농림어업 총생산액 변화



자료 : 이문호(2019),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해".

(2) 경지면적과 주요 생산 품목

● 경지면적은 논을 위주로 전국평균보다 빠르게 감소

- 경남의 경우 전체적인 경지면적은 연평균 0.6%씩 감소하였고, 감소 속도는 밭보다 논이 더 빠르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음(표 4-1-1) 참조)
 - 이러한 추세는 전국평균과 비교해 약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양산, 통영, 김해 등 그동안 2, 3차 산업과 택지개발이 크게 진행된 신도시 지역에서 두드러짐
 - 특징적인 사항은 경지면적에서 논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밭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미곡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밭작물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임
 - 이는 1인당 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¹⁾와 정부의 지속적인 미곡생산 감축 정책 등 경남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여건 변화가 반영된 결과임

(단위 : ha, %)

〈표 4-1-1〉
경남 시군별
경지면적(논, 밭) 변화

구분	2000년			2010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경지면적	논	밭	경지면적	논	밭	경지면적	논	밭	경지면적	논	밭
전국 (비율)	1,888,765 (100)	1,149,041 (60.8)	739,724 (39.2)	1,715,301	984,140	731,161	1,595,614 (100)	844,265 (52.9)	751,349 (47.1)	-0.53	-0.86	-0.06
경남 (비율)	179,792 (100)	119,256 (66.3)	60,536 (33.7)	159,651	100,104	59,547	144,404 (100)	81,991 (56.8)	62,413 (43.2)	-0.66	-0.97	-0.09
창원시	11,462	6,857	4,605	10,378	5,573	4,805	9,444	5,176	4,268	-0.55	-1.15	0.24
진주시	14,772	9,265	5,507	13,641	7,405	6,236	12,780	5,765	7,014	-0.44	-1.24	0.69
통영시	3,545	1,066	2,479	2,889	662	2,227	2,617	428	2,189	-1.13	-2.61	-0.59
사천시	8,670	6,431	2,239	7,982	5,620	2,362	7,197	4,145	3,052	-0.46	-0.75	0.30
김해시	10,698	7,817	2,881	8,862	6,059	2,803	7,608	4,450	3,159	-1.04	-1.41	-0.15
밀양시	15,780	9,975	5,805	14,269	8,725	5,544	13,258	6,608	6,650	-0.56	-0.74	-0.26
거제시	5,374	3,081	2,293	4,693	2,425	2,268	3,952	1,913	2,039	-0.75	-1.32	-0.06
양산시	3,936	2,285	1,651	3,115	1,734	1,381	2,469	1,265	1,204	-1.29	-1.52	-0.99
의령군	7,895	5,680	2,215	6,666	4,745	1,921	6,091	4,256	1,835	-0.94	-0.99	-0.79
함안군	11,740	8,198	3,542	10,403	7,193	3,210	9,211	5,951	3,260	-0.67	-0.72	-0.55
창녕군	13,181	8,466	4,715	11,585	7,781	3,804	10,106	7,299	2,807	-0.71	-0.47	-1.19
고성군	11,079	8,358	2,721	9,895	7,178	2,717	9,249	6,524	2,725	-0.63	-0.84	-0.01
남해군	7,642	4,519	3,123	6,542	3,626	2,916	5,461	2,250	3,212	-0.86	-1.22	-0.38
하동군	10,241	7,369	2,872	9,542	6,232	3,310	8,976	4,476	4,500	-0.39	-0.93	0.79
산청군	8,883	6,599	2,284	8,006	5,008	2,998	6,621	4,159	2,462	-0.58	-1.52	1.52
함양군	9,137	5,743	3,394	7,815	4,700	3,115	7,141	3,943	3,199	-0.86	-1.11	-0.48
거창군	11,931	7,193	4,738	11,129	6,186	4,943	11,027	5,365	5,662	-0.39	-0.83	0.24
합천군	13,826	10,354	3,472	12,239	9,252	2,987	11,194	8,018	3,176	-0.68	-0.62	-0.83

주 : 연평균 증감률은 2000년~2018년까지 기간의 증감률임.
자료 : 통계청 「농업면적조사」

1) 1970년 136.4kg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2019년 현재 59.2kg으로 줄어들었음.

● 고추, 마늘, 양파 등 조미채소류, 딸기, 수박, 토마토 등 과채류의 높은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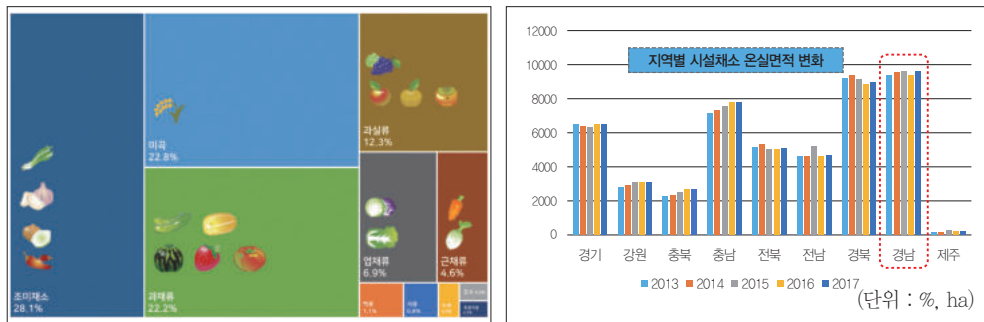
- 경남은 전체 농산물생산의 50% 이상이 고추, 마늘, 양파와 같은 조미채소류와 딸기, 토마토, 수박, 오이, 호박 등 과채류임(〈그림 4-1-2〉 참조)
- 조미채소류, 미곡, 과채류, 과실류 등의 순이며, 과실류는 단감, 대봉감 등 감류와 사과, 포도의 생산량이 많은 편임
- 딸기, 토마토, 수박, 파프리카 등 과채류는 대부분 시설작물로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의 시설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량이 많은 만큼 온실 면적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를 비롯한 축산물 사육두수는 10년 전보다 5% 이상 증가

- 한우, 육우, 젖소를 합산한 소 사육농가는 2010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사육두수는 5% 정도 늘어났음. 돼지, 닭의 사육두수도 증가하였음
- 축산농가는 축산폐수, 환경오염, 약취 등의 문제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나, 농가당 사육두수는 과거보다 늘어나 축산농가의 규모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림 4-1-2〉

경상남도 품목별
농업생산 비중과
온실 면적



자료 : 통계청, 농작물 생산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이문호(2019)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을 위해"에서 재인용.

〈표 4-1-2〉

경남 축산물
사육현황

구분		소		돼지		닭	
		농가 수	사육두수	농가 수	사육두수	농가 수	사육두수
2010년	전국	183,111	3,155,684	7,796	9,767,833	3,610	144,587,749
	경남	27,058	300,054	963	1,213,825	247	8,730,784
2015년	전국	107,662	3,083,292	4,946	9,971,415	3,065	163,016,849
	경남	13,208	282,982	604	1,101,073	171	9,212,699
2019년	전국	105,145	3,466,453	6,176	11,199,715	2,944	175,010,357
	경남	12,423	316,009	706	1,282,929	191	11,662,856

주1 : 소농가 수는 한우, 육우, 젖소 농가를 합산한 수치임.
주2 : 닭농가 수는 3,0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임.
자료 : 통계청,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동향조사」

(3) 농가

● 경남의 전체 농가는 12만호 수준

- 경상남도의 전체 농가는 122,953호이고, 농가인구는 265,433명으로 농가 호당 2.1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 40세 미만의 청년농가 비중은 711호로 전체 농가의 0.6% 수준이지만, 65세 이상의 고령농가는 76,599호로 6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전국 평균 고령농가 비중(60.3%)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경남의 농가 고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보여줌
- 2010년보다 40세 이하 청년농가가 80% 가까이 감소해 향후 농가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청년농가 감소추세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전남, 전북, 충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고, 고령농가의 증가추세는 경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빠른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어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단위 : 호, %)

〈표 4-1-3〉
지역별
농가 수 변화

구분	2010년			2018년			증감률	
	청년농가	고령농가	전체농가	청년농가	고령농가	전체농가	청년농가	고령농가
전국 (비중)	33,143 (2.8)	545,748 (46.4)	1,177,318 (100.0)	7,624 (0.7)	615,788 (60.3)	1,020,838 (100.0)	-77.0	12.8
경기 (비중)	4,712 (3.5)	51,184 (37.8)	135,332 (100.0)	945 (0.8)	62,743 (55.4)	113,288 (100.0)	-79.9	22.6
강원 (비중)	1,856 (2.6)	30,862 (42.6)	72,472 (100.0)	344 (0.5)	37,563 (55.4)	67,809 (100.0)	-81.5	21.7
충북 (비중)	1,942 (2.4)	35,643 (44.6)	79,963 (100.0)	464 (0.7)	39,463 (55.7)	70,874 (100.0)	-76.1	10.7
충남 (비중)	3,959 (2.6)	71,841 (47.6)	151,424 (100.0)	557 (0.5)	78,322 (63.4)	123,480 (100.0)	-85.9	9.0
전북 (비중)	3,120 (2.9)	52,792 (48.2)	109,433 (100.0)	996 (1.0)	58,539 (61.7)	94,935 (100.0)	-68.1	10.9
전남 (비중)	3,899 (2.3)	92,787 (54.5)	170,213 (100.0)	1,169 (0.8)	93,852 (64.6)	145,223 (100.0)	-70.0	1.1
경북 (비중)	4,653 (2.3)	98,837 (49.0)	201,651 (100.0)	941 (0.5)	109,884 (62.3)	176,385 (100.0)	-79.8	11.2
경남 (비중)	3,476 (2.5)	69,293 (49.0)	141,431 (100.0)	711 (0.6)	76,599 (62.3)	122,953 (100.0)	-79.5	10.5
제주 (비중)	3,056 (8.1)	13,354 (35.2)	37,893 (100.0)	863 (2.8)	15,647 (50.1)	31,208 (100.0)	-71.8	17.2

주 : 청년농가는 40세 미만, 고령농가는 65세 이상을 의미함.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2) 주요 농산물 유통현황

● 신선 및 가공 농축산물의 경남도내 유통 비중은 10% 수준으로 추산

- 경상남도 전체 먹거리 생산액(6조 828억원)의 로컬유통 비중은 10% 수준으로 추산되며 직거래 비중은 1.5% 수준으로 매우 낮음²⁾
- 주요 품목별로 농산물 유통구조 상에 많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 위치한 공판장, 농축산물 경매장을 통해 서울 등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특히 대량으로 생산되는 품목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가락시장이나 타지역의 경매장, 공판장으로 출하되었다가 다시 경남지역으로 유입되는 구조임. 물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할 정도의 물량을 다루는 농가는 출하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높은 가격이 책정되는 출하처를 선호함

● 농산물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

-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위주의 신선농산물이 일본,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740천톤, 1,842백만불³⁾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음
- 특히 신선농산물 수출 실적은 152.6백만불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출실적(1위)을 기록함

(단위 : 천불)

〈표 4-1-4〉

경남의 부류별
농축산물 수출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327,156	1,499,761	1,619,798	1,763,428	1,842,581
농림축산물(소계)	798,836	915,439	979,024	1,081,644	1,139,299
신선농산물	124,303	121,134	125,828	133,126	152,651
가공식품	568,818	707,742	752,600	848,585	877,520
임산물	20,312	13,296	20,055	24,797	23,164
축산물	85,403	73,267	80,541	75,136	85,964
수산물	528,320	584,322	640,774	681,784	703,282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 경남의 농축산물 유통 관련 시설은 879개소

- 쌀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정부양곡도정공장을 비롯해 산지유통센터, 도매시장, 공판장, 도축장, 축산물 가공공장 등 유통시설이 2018년 기준 879개소인 것으로 나타남

2) 경상남도 먹거리 2030혁신전략 발표 자료의 수치를 참조함.

3) 전국 수출액 9,305백만불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4-1-5〉

경상남도 농축산물
유통 관련 시설
(2018년 기준)

구분	개소	비고
미곡종합처리장(RPC)	18	남해, 통영, 거제, 양산을 제외한 시군에 1개 또는 2개의 RPC 위치
정부양곡도정공장	16	김해, 밀양, 양산, 창녕, 거제를 제외한 시군에 위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김해(농협하나로유통 운영), 양산(서원유통 운영)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54	창원(4), 진주(5), 사천(3), 김해(4), 밀양(7), 의령(2), 함안(1), 창녕(3), 남해(5), 하동(3), 산청(2), 함양(4), 거창(5), 합천(6)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	3	창원(2), 진주(1)
농산물공판장	13	창원(2)[공영도매시장 내], 진주(1)[공영도매시장 내], 통영(1), 사천(1), 김해(1), 밀양(2), 창녕(3), 고성(1), 합천(1)
로컬푸드 직매장	38	지자체, 농협, 민간단체, 농업인연합회 등 운영 주체 다양
학교급식지원센터	2	김해(1), 거창(1) 지자체 직영
도축·집유장	14	포유류(7), 가금류(3), 집유업(4)
축산물가공업	719	김해, 양산, 창원에 집중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3) 주요 농축산물 수급구조

(1) 경남 농축산물 수급구조

● 도내 농축산물 수급은 불균형적 구조

- 경상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물량과 소비물량을 매칭해 보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도민이 소비하는 식품은 일정하지만, 경남의 농업생산구조가 일부 품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지역에서 필요한 품목을 들여오거나 수입해서 충족하는 구조를 보임
- 생산이 많은 채소와 버섯류를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물량으로 소비량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임. 생산량이 많은 채소류 등도 유통구조에서 보았듯이 서울 가락시장 등을 거쳤다가 다시 경남에 유입되는 형태임
- 연간 순공급량(A)에서 경남 전체 수요량을 빼준 값의 대부분이 음(-)의 값을 보이는데, 경남에서 생산되는 모든 물량을 경남 도민이 소비한다고 가정해도 물량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함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산되는 물량의 10%만 도내에서 소비되는 실정⁴⁾이므로 유통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물류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음
- 물론 가격논리와 포전거래 등 유통방식에 따라 이러한 물량이 이동하는 것이므로 이유가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판단됨

4) 경상남도 먹거리 2030 혁신전략 발표 자료의 수치를 인용함.

(단위 : 톤, kg)

〈표 4-1-6〉

경상남도 농축산물
수급구조
(2017년 자료 기준)

구분	경남공급				경남수요		A-B
	생산량	수출량	감모량	손공급량(A)	1인당 연간 식품 섭취량	경남 전체 수요량(B)	
곡류	381,417		16,020	365,397	115.1	397,679	-32,282
서류	13,176		1,318	11,858	12.3	42,505	-30,646
두류	7,968		454	7,514	13.2	45,658	-38,144
채소류1)	972,245	72,412	257,645	642,188	109.8	379,517	262,671
버섯류	16,600		332	16,268	1.8	6,306	9,962
과실류	224,950		30,368	194,582	70.5	243,552	-48,970
육류2)	100,245		2,707	97,538	38.3	132,434	-34,896
합계	1,716,601	72,412	308,843	1,335,346	361	1,247,650	87,695

주1 : 채소류는 과채류, 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류를 포함한 것임.

주2 : 육류는 한육우, 돼지, 닭을 포함한 것임.

자료 : 경상남도「경상남도기본통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식품수급표」를 활용하여 추정, 이문호(2019)의 연구에서 재인용.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

(1) 불확실성이 크고 일본에 집중된 농산물 무역

● 국가 간 정치 상황, 국제유가, 환경, 기후변화 등 불확실한 요인 항상 존재

- 경상남도는 신선농산물 수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국가 간 무역환경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경남 신선농산물 수출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과의 불안한 정치적 관계는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전국적으로 170개의 농산물 전문생산단지가 있으며 그중 경남은 채소(32개), 과수(9개), 화훼(3개), 버섯(5개) 등 총 49개의 수출 전문 생산단지⁵⁾가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이들 수출단지는 정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해두었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힐 경우 참여하고 있는 농가(1,116호)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등 경남 농업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항상 대외환경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함

(2) WTO에서의 선진국 지위 전환

● 선진국 지위로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국내 농산물 수출입에 영향을 줄 전망

- 2019년 미중 무역전쟁, WTO 회원국 중 개도국에 부여된 무역 특혜에 대한 선진국의 불만 등으로 인해 한국은 앞으로의 세계무역에 있어 더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임

5) 경남의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전체 면적은 1,282ha로 전남(1,285ha)과 함께 가장 넓은 생산단지를 보유하고 있음.

-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WTO의 관세협정 및 비관세협정 등에서 우리나라가 받아온 농업 분야 특혜는 새로운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유지될 것이나, 2020년 이후부터 추진되는 다자간 또는 양자 간 무역 협상에서 이제는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기 어렵게 됨
- 이러한 대외 무역환경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농업시장이 그동안의 안전장치 없이 전 세계 시장에 열리는 것이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가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2) 농업환경과 먹거리 안전성

(1) 농업환경 개념의 확산 추세

● 농업 생산활동, 농촌이 가진 다원적, 공익적 기능의 부각

- 농업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인정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이 가진 다원적,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의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과거에는 농업용수(물), 토양 등의 천연자원이 농업 생산성,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입 요소 기능으로만 여겨져 왔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들 천연자원이 농업생산으로 인해 연계되는 외부효과(생물 다양성 확보, 농촌 경관, 식량안보 등)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고 있음
 - 이러한 양의 외부효과(공익적 기능)를 정책 근거로 하는 농업·농촌 정책들이 생겨나고 있음. 대표적인 정책이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였으며 2020년부터는 이러한 공익적 기능을 보다 중요시한 “공익형 직불제도”를 실행하고 있음
- 그러나 농업 생산 활동이 양의 외부효과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음의 외부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개선에 대한 규제와 관련 제도들이 더 중요해짐
 - 대표적인 음의 외부효과로는 과도한 화학비료, 농약 사용에 따른 토양오염, 축산 폐수 및 악취에 따른 주민 불편, 온실가스 배출 등을 꼽을 수 있음
 -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의 정체, 화학비료 사용의 증가, 과도한 농약 사용 등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농업환경에 음의 외부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관련하여 안전농약관리제도(PLS), 수질총량제 등과 같은 직접규제 수단이 강화되고, 공익형 직불제,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등 간접적 인센티브 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환경 관련 제도는 환경 측면 이외에도 먹거리의 안전성과도 연계

- 농약 사용준수, 제초제 사용억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 등은 농촌의 경관, 환경측면과 연계되어 보다 안전한 먹거리를 시장에 제공하도록 요구되고 있음

-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푸드플랜 역시 안전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사업의 기본요건으로 요구됨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남 먹거리 2030 혁신전략”에서도 그동안 자본주의적 효율성 관점의 농업생산을 친환경적 생산과 가치 중심의 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농약, 제초제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로컬유통을 확산하며, 유통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3) 고령화와 노동력 수급 불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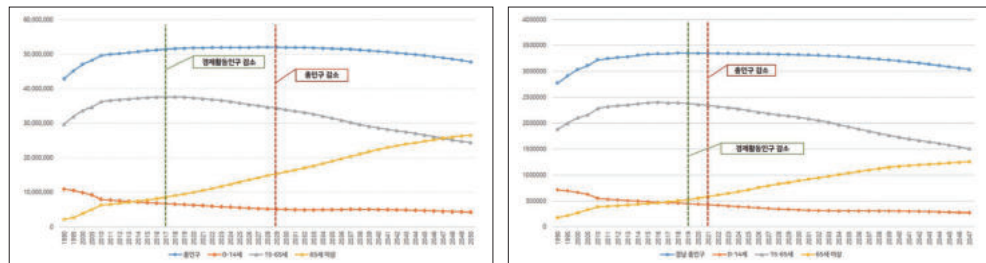
(1)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 지속

● 고령농가 비중의 지속적 증가와 인구감소

- 경남 농업 분야의 고령농가 비중은 총인구의 감소, 경제활동 인구 감소추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지금의 인구구조가 계속될 경우 2030년부터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65세 이하 경제활동인구는 2018년부터 이미 감소추세에 접어들었음
- 경남은 2019년부터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농업 분야 고령농가 비중이 2018년 이미 62%를 넘었기 때문에 이 연구의 목표연도인 2040년경에는 농가 수가 4만 6천호 수준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고령농가가 늘어나는 만큼 신규 청년농가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를 막기는 어려운 상황임
- 소수의 농가가 경남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일종의 기업형 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농촌지역이 대부분인 지역에서는 지역 간 통폐합의 논의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그림 4-1-3〉

우리나라 및
경남의 인구구조 변화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이문호(2019)의 자료에서 재인용.

(2) 고용노동력 부족 현상 지속과 인력 대체

● 고용노동력의 외국인 근로자 대체 추세 가속화

- 농가의 고령화, 규모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은 이미 현재도 심각한 상황임.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내국인 근로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실제로 농축산 분야 상용근로자의 대부분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임. 그러나 노지작물 재배 분야에서는 상시고용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고착화된 상황이며 여전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내국인의 고용은 대부분 임시일용근로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농작업의 계절성으로 인해 고용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농업의 지속성 측면에서 고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사회구조변화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가나 시도,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내국인의 농업 분야 신규유입, 취업유인 정책, 청년농업인 유입 정책 등도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주제임

4)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가속화

(1) 인공지능, AI 기술의 등장과 농업접목

● 2010년대 중반 이후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AI 기술 농업접목 확대

- 스마트팩토리, 3D프린터, 사물인터넷(IoT), AI의 등장은 농업에도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킴
- 경남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쉽게 접하게 되는 분야가 시설채소 분야임. 이미 온실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관련된 농작물의 생산·수출이 가장 많은 수준이므로 확산의 속도가 빠를 수 있음
-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농업 분야에도 획기적인 기술로 인정되는 이유는 전통적인 농업생산의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임
- 전통적으로 농작물은 토지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수확량, 품질이 결정되는 산업이었음. 따라서 농업인의 축적된 생산노하우, 병해충 방제 기술 등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
- 그러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업생산방식은 기존의 토양, 기후, 온도, 습도, 농업인의 생산노하우 등의 영향을 배제한 채 보다 생산성이 높은 방식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하므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노지보다는 환경요인이 제한적인 비닐하우스, 시설단지에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설단지가 밀집한 경남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술임
- 정부는 4차 산업 기술이 가지는 노동 절감 효과, 생산성 향상 효과, 농업 진입장벽 하향 효과 등을 토대로 젊은 층의 농업유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 경남에서도 2020년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밀양에 유치하였고 2021년부터는 실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임
-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확산의 기능을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기능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는 하지만,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확산과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확보, 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키워내는 데 집중해야 함

(2) 정밀농업으로의 확산

● 노지작물로의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농업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밀농업이 상용화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실증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에 의해 개발되어 시판 중인 상황임
-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설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머지않아 노지작물에서도 토양, 기상, 병해충, 로봇을 활용한 농업생산이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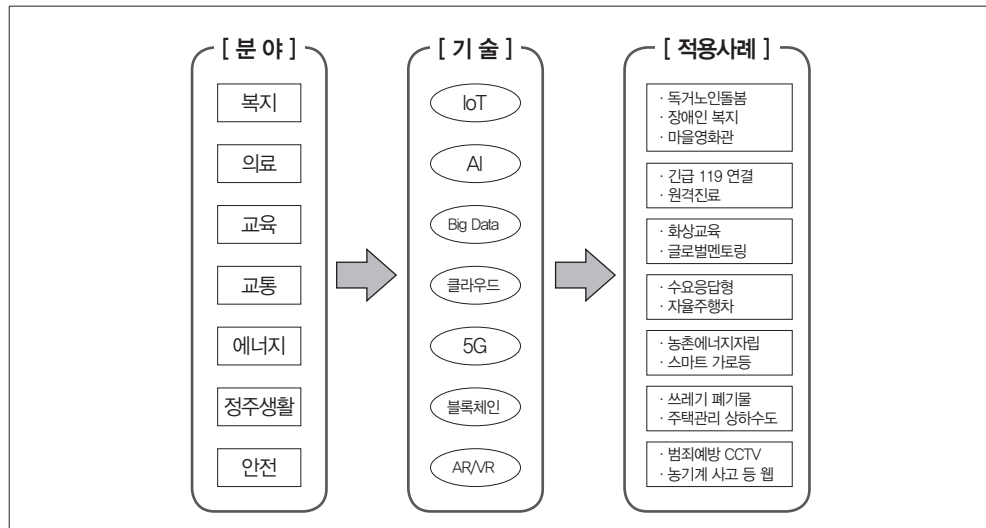
(3) 스마트 농촌

● 농촌지역 복지, 의료, 교육, 안전, 에너지 분야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복지, 의료, 교육환경 등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접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개선이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음

〈그림 4-1-4〉

스마트 농촌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자료 : 김연중 외(2020), 미래 기술이 만들어가는 스마트농촌, 농업전망 2020(1).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 안전한 농업, 상생하는 농촌사회, 동남권 균형발전

- 경상남도 농업·농촌의 미래 비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안전한 농업은 도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으로써의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담고 있으며, 그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해결해야 할 경남의 농업 문제들을 환경, 4차 산업 기술의 융복합 등 다양한 전략으로 추구해 가야 할 가치지향점을 의미함
 - 둘째, 상생하는 농촌사회는 지역·산업·계층 간 격차로 발생하는 다양한 농촌사회 문제를 포용, 협력, 상생, 연대, 자율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극복해 나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기초적 농촌마을 단위에서부터 시작해 읍·면, 시군, 시도 단위로 확대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임
 - 셋째, 동남권 균형발전은 농축산물 수급구조의 불균형, 도농 간 소득 격차, 삶의 질 격차 등 다양한 격차를 경상남도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주변의 대도시와 연계하여 더욱 합리적·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이를 통해 경남을 포함한 주변의 다른 지역까지 골고루 발전해 가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임

2)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농업(농산촌) 부문 핵심지표

〈표 4-1-7〉

농업(농산촌)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농가소득	36,923천원	50,000천원	70,000천원
귀농 귀촌인	55,882명	90,173명	140,823명
농가당 경지면적	1.17ha	1.27ha	1.37ha

(1)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급구조 확립

● 푸드플랜의 광역화

-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광역 먹거리 전략을 통해 지역 간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해 나감
- 학교급식에서 시작해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먹거리 유통구조를 개선해감

● 먹거리 안전성·신뢰도 향상

- 국가 단위의 식품안전 관련 인증의 확산과 지역 내 농가-유통업체-소매업체-소비자 간 추적시스템을 구축함
- 최근 실용화되고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지역 내 농협 등 유통, 소매업체에 확산·구축하여 식품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해감

● 스마트팜 확산과 스마트팜의 핵심기술 보유기업 확대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스마트팜 수요자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의 다양한 품목으로 확산시켜가되 스마트팜 공급산업도 육성해감
-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은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기술혁신을 통해 확산시켜 갈 잠재력이 있으므로 지속해서 지원해감
- 그리고 온도, 습도, 기온, 병해충정보, 시장 상황 등의 다양한 품목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사업화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육성하여 경남 농업의 새로운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감

● 정밀농업을 통해 고추, 마늘, 양파 등 전통적 생산 품목의 수급 안정 추진

- 품목별 수급의 불확실성은 다양한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요인을 정밀농업을 통해 내생화함
- 정밀농업 역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핵심이므로 관련 기업의 유치와 기술개발이 관건이 될 것임
- 농업인의 노하우를 데이터가 대신할 수 있는 시대인 만큼, 그동안 통제하기 어려웠던 기후, 토양 상태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일정 부분 통제, 예측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으므로 수급 불안정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2) 농업 · 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 산업으로서의 경제성 확립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신규 소득작목의 개발과 스마트 농업으로의 확산이 필요함
- 국가 및 지방정부가 경제성을 담보하기는 역부족이므로 농촌지역 주요 품목조직의 자율사업 추진역량을 길러주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설정함
- 지자체는 이들 품목조직, 마을 조직, 농협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사례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대학생 등 다양한 사회계층에 전파하는 것을 도움
- 국제무역 관계 속에서 경남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기술개발, 품질향상, 규모화에도 집중함
-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지만 상대적으로 소규모 농가 역시 지금보다 더 늘어날 전망임. 농가 간 규모의 양극화와 갈등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완책이 요구됨

● 청년농업인 등 신규인력의 원활한 유입 및 농촌지역 거주 확대

- 지금의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40년 경남의 농업인은 1/3 이하로 규모가 줄어들 것이므로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스마트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전문 청년농업인을 발굴하는 데 집중해야 하고, 직업으로서의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직업 또는 일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함

● 청정한 자연환경 유지에 따른 환경개선 및 거주 매력도 개선

- 농업의 산업적 측면 외에 농촌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공간에 위치하면서 거주 공간으로서의 매력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사업이 꾸준히 전개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의 자연환경 개선은 그 속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심리적 신뢰도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거주환경 개선은 귀농·귀촌 등으로 도시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공간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경상남도, 도내 시군의 농촌마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환경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3) 스마트 농촌 확산

● 스마트 기술 접목으로 농촌 생활환경, 삶의 질 향상

- 스마트 농업은 산업으로서 생산성, 효율성, 경제성, 환경개선, 신뢰도 상승효과를 가져오며, 스마트 농촌은 거주자의 생활환경, 교육환경, 의료환경,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임

(4) 농촌사회 공동체성·자율성 회복

●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 운동 추진

- 시장경제, 경쟁, 산업화의 추진으로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추진함
- 마을에 유입된 신규 가구와의 갈등 문제를 마을 자율조직을 통해 해결할 방안을 마련함

– 마을의 공동체성 회복은 주민들 간의 이해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이러한 가치를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통해 마을 단위에서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함

- 마을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활동가를 육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 협력의 방식, 지원방식, 규모 등을 연구하며 농촌 경제·산업 분야로 범위를 확대해 갈 수 있도록 함

●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마을 확산 및 육성

- 생태적 가치, 교육에 대한 가치 등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개인들을 모집하여 새로운 마을공동체를 육성함

– 농촌마을에서 농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의 개인들을 공동체로 육성하여 농촌 기능의 다양성을 확대해나감

(5)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

- 농업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통적으로 육성해 오던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생산성 향상, 규모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감
- 기업형의 대규모 농가, 생산자단체를 육성하여 수출 부문을 전담하게 하고, 내수시장은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 유통을 담당하게 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필요
- 또한 농가 간 소득 격차, 생활격차, 심리적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도 고려함
- 경쟁력 강화 대책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기업농 육성

- 대규모 스마트팜 같은 투자를 통한 기업농을 육성하고, 이들 기업농은 일반 기업과 같이 젊은 층의 농산업 분야 고용(일자리)을 확대함

● 지역의 전략 식품산업 육성

- 국가식품산업 혁신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식품산업단지 육성을 통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면서 고용개선에도 기여함
- 부산지역 수산식품업체, 김해의 축산가공업체, 기능성 식품생산업체, 관련 제조업체, 연구기관 등을 집적하여 고부가가치화하는 대규모 산업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함

(6) 거버넌스 강화

● 농업인 단체와 행정의 파트너십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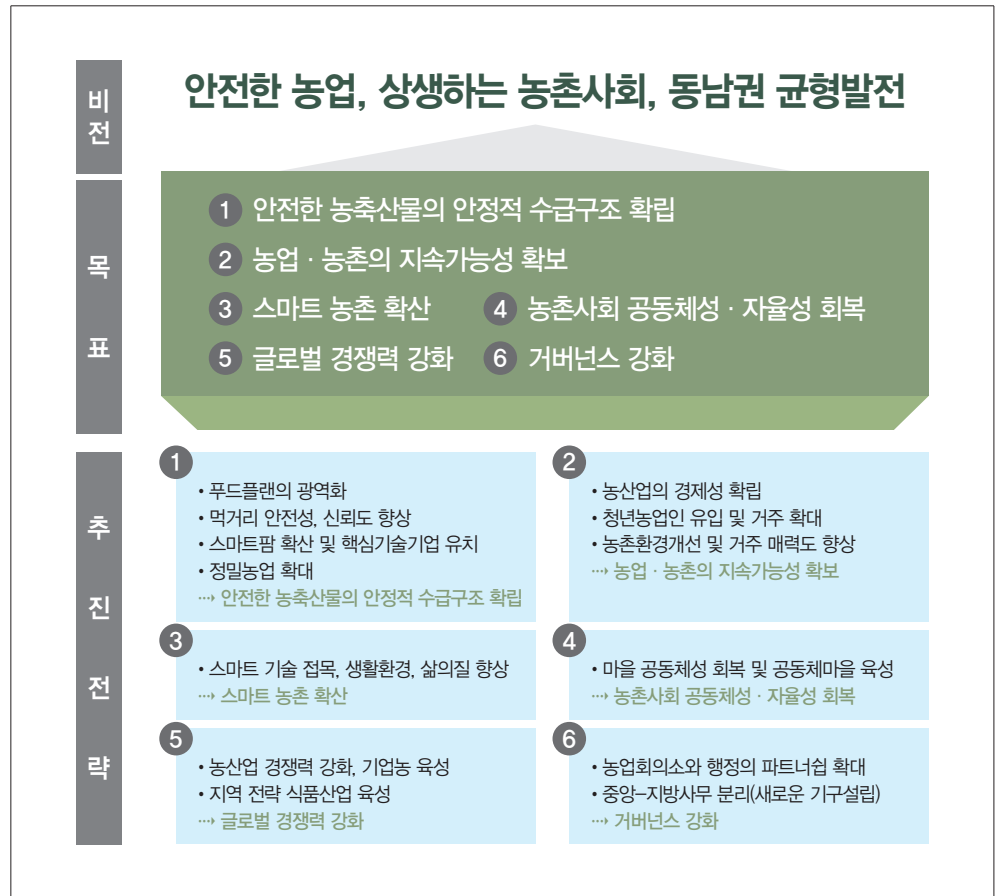
- 현재의 농업회의소 기능을 확대·개편하여 각 시군의 산하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농촌 문제를 행정과 같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으로 전환해 나감
- 농업회의소가 가지는 한계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책을 검토하여 지방분권 시대에 실질적인 농업인 대의기구의 역할을 정립함

● 중앙과 지방사무의 분리, 새로운 기구 설립

- 중앙-시도-시군의 농정추진체계에서 지방의 농정은 중앙의 사무를 지방에서 집행하는 것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지역의 고유한 농업·농촌 정책을 발굴하고 설계,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구조임
- 중앙의 사무는 기존의 방식대로 집행하되, 지방의 사무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여 기획, 설계, 집행하는 구조를 만들어감

〈그림 4-1-5〉

경남 농업·농촌 분야
비전 체계도



4. 추진시책

1)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구조 확립

(1) 푸드플랜의 광역화(정착 및 확산)

● 공공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 동남권 먹거리 생산-조달 체계 구축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경상남도 먹거리 2030혁신전략의 첫 번째 사업으로 푸드플랜사업의 시작(학교급식)에 해당
-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품목별 생산 농가를 조직화하고, 기획생산, 계약재배를 바탕으로 생산 부문을 통합관리
- 먹거리통합지원센터(경남도 통합센터)는 동남권 공공먹거리 전체의 공급계획을 수립, 수발주 내용에 따른 농산물 수집/패킹/배송, 입고 및 출하 농산물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및 가격조절위원회 운영
- 수요처는 우선 학교급식을 시작으로 동남권 공공기관 급식 및 로컬푸드 매장, 일반소매점으로 점차 확대

- 먹거리 가공지원센터 구축 및 확산

- 공공급식의 가공식품 소비 비중 확대에 따라 지역농산업 확대를 위한 가공센터 운영(도내 18개 전 시군으로 확대)
- 지역별 가공지원센터의 가공 품목, 물량, 수발주 등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관리
- 지역 마을기업, 농식품 가공업체와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전체와 전국의 먹거리 흐름을 관장할 광역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축
- 식자재 공급, 생산 농가 육성 및 안전성 관리, 식생활 교육, 지역가공 육성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등과 연계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확대
- 계약관리, 생산 및 출하 정보관리,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검사정보 관리 등을 위한 먹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공공급식 대상 확대 및 지역식자재 소비촉진

- 초중고교를 시작으로 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및 의료기관, 대학 및 일반사업체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 먹거리를 통한 도농 상생

-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전문 인력 육성
- 중소농가 및 청년농가의 지역 내 판매체계 구축 및 소비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로컬푸드 매장 수 확대
- 먹거리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매장 간 교류 지원

- 도농 교류 프로그램 확대

- 경남이 추진 중인 공동체 지원농업(CSA) 확산 및 교육, 컨설팅 체계 구축
-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간의 신뢰와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공동체 지원농업을 확대, 그러나 생산자단체의 사업이해도 부족, 소비자 단체의 참여 저조 등으로 확대에 한계를 보이므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교육과 컨설팅이 지속해서 필요

(2) 먹거리 안전성·신뢰도 향상

-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공급 관리

- 공공급식 식자재 품질기준 마련

- 현재 학교급식 납품 농산물 기준으로 거론되는 무제초제GAP 농산물 기준을 비롯해 향후 공공급식 납품 농산물 기준 별도 마련
- 농축산물 품질기준 다양화를 통해 대규모 생산 농가 등을 먹거리 순환 체계에 포섭

- 농어촌 활동가 육성

- 생산단계의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검사, 품질검사 기준 점검, 원산지 관리 등을 위한 농어촌지역 활동가를 육성
- 현행 국가품질검사기관의 인력으로는 점검범위의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활동가를 활용하여 점검범위 확장
- 점검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국가품질검사기관 관장) 실시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국가품질검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 먹거리 순환 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납품기준과 국가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시스템 연계 운영

- 품질인증 결과를 토대로 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경남 농업을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 제도 시행
- 중소규모 농가를 비롯해 대규모 농가를 포섭하기 위한 제도로 각종 품질기준을 충족한 농가에만 인센티브 부여

- **도농 교류 프로그램 활용 및 식생활 교육 강화**

- 공동체 지원농업(CSA) 확산

-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를 통해 소비자는 정기적으로 농산물을 필요에 따라 공급받고, 소비자는 농가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위험을 공유하는 신뢰 체계 마련
- (시도) 지자체-농가-소비자의 관계에서 중간지원조직 확대
- 현행 지자체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형태에서 나아가 생산자단체와 소비자의 자율적 도농 교류 확대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육성(예 : 시군별 농업회의소의 역할 확장)

- 아침 밥상 사업 추진

-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지역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회적 기업을 활용해 아파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실 등을 활용해 아침 밥상 제공사업 추진
- 식생활 교육네트워크 등 지역의 식생활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아침 식사, 식자재 등을 활용해 식생활 교육 병행 추진
- 또한 아침 밥상 사업을 통해 지역의 생산 농가와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들의 접촉, 신뢰도 개선 추진

-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농가 확대**

- 먹거리 품질기준에 따른 생산 DB화

-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핵심 기능인 먹거리의 수집/검사/분배 자료를 DB화
- 체계화된 DB 자료를 바탕으로 경남 농업의 생산성 개선, 유통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 파악, 관련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 DB를 바탕으로 한 차별적 인센티브 제도 시행
 - 구축된 DB를 바탕으로 경남농산업을 안정적 수급구조 마련,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시행
 - 학교급식과 공공급식의 품질기준을 차별화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
 - 먹거리 2030혁신전략에 참여하는 중소규모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시작,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확장됨에 따라 인센티브 범위 확대
- 친환경 저투입농법의 개발 및 보급 확대
 - 친환경 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농약과 화학비료 등의 사용 정도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등의 인증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 중
 -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토양의 화학적·물리적 특성에 따른 저투입농법의 개발 및 보급 확대

(3) 스마트팜 확산 및 스마트팜 산업 생태계 구축

●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거점으로 스마트팜 확산

- 스마트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 2020년부터 구축 중인 밀양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통해 경남의 스마트팜 혁신거점 구축
 - 청년 창업보육 및 임대형 스마트팜의 실용화로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 스마트팜 실증단지를 통한 R&D 체계화
 -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임대단지, 실증단지의 작물생육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체계화
 - 경남도 농업기술원의 ATEC의 스마트팜 교육, 밀양대, 경상국립대의 작물 이론을 접목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스마트팜 접목 품목 확대 및 시장 다변화
- 지역대학, 지역기술센터 연계, 스마트팜 기술산업 집적화
 - 작물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육프로그램 개발 기업의 집중 유치지원
 - 밀양 나노산업단지와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시너지 효과 극대화
 - 품목별 생산환경, 생산방식, 생산 노하우의 프로그램화를 통해 전 세계 시장으로 범위 확산
- 농가 현장지원체계 구축
 - 개별 스마트팜 농가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로 확산
 - 농가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팜 기술 연구 및 지원

(4) 정밀농업 생태계 구축

● 지역별 정밀농업 기반구축

• 지역별 정밀 토양도 구축

- 생산성 향상의 기반마련을 위한 토양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른 토양지도 구축
- 기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지리정보시스템 연계
- 농작업 의사결정 지원(토양 센서, 작물생육상태 실시간 측정, 수확량 센서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등 농작업 정밀관리 기반마련)

• 토양지도의 전산화

- 지역별 토양지도의 전산화를 통해 실시간 농작업 및 토양관리체계 마련

• 정밀농업 기자재 산업 육성

- 전자기술, 정밀자동제어기술 등 첨단기술산업 연계·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 지역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농업 혁신체계 마련

2)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1) 농산업의 경제성 확립

● 농산업 경제성 개선

• 경남 농가경제 관리 시스템 구축

- 경남 농가경제 파악은 통계청의 '농어가경제조사' 자료에 의존
- 2019년 기준 2만 농가의 경제 상태(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등)를 약 500여 표본을 통해 발표
- 표본 수 확장을 통해 지역 농가 현실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의 평가 지표로 활용
- 경남지역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 조사예산 중복사용 방지

• 지역별 농촌활동가 육성 및 활용

- 각 지역의 농어민 단체, 마을 이장단, 농어업회의소 등을 통한 농촌 지역활동가 육성
- 실태조사 및 정책적용 현황 파악
- 정책의 현장 적용성 강화

• 농업소득 50% 달성

- 현행 30% 수준(2019년 기준)의 농업소득 비중을 2040년까지 20%p 개선
- 경남 농가경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 매년 추적 관리하며, 문제점을 매년 검토하여 정책을 수정·보완

● 경남형 농가소득보전 제도 확립

- 경남형 ‘공익형 직불제’의 개선·확대
 - 마을 단위에 지급 중인 경남형 공익형 직불제도 개선
 -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제를 보완하는 형태로 제도 개선
 - 경남 농업이 추구하는 농업·농촌의 가치, 정책 방향에 맞추어 기존의 소득보조 정책을 통합·개선
- 마을 단위 소규모 정책실험 시스템 구축
 - 소득보조 정책의 효과 계측을 위한 소규모 정책실험 시스템 마련
 - 경남도-기초지자체-연구기관-농업인단체 간 실험설계 연구팀 구축

(2) 농업 생태계·생물 다양성 확대

● 농업환경 지표 관리

-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업환경지표 관리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질소, 인 양분수지가 가장 높은 국가
 - 고투입-고산출의 생산구조로 인해 토양, 수자원, 공기 등 농업환경에 나쁜 영향
 -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농업환경지표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 농촌진흥청의 토양환경정보시스템, 국립축산과학원의 가축분뇨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의 환경공간정보시스템 등 기관별 농업환경지표를 분석하여 핵심관리지표 도출 및 관리체계 구축
-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 확대
 - 국가 차원의 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적극 활용
 -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에 따른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 친환경농법 등의 확장으로 회귀조류, 종 다양성 확대

(3) 농지 이용 및 보전 합리화

● 농지 이용 합리화 체계 마련

- 농지 이용·보전 공감대 확산
 -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불일치 가속화, 신규농업인 농지 부족 등 문제 지속
 - 농지의 분절현상,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 우려
 - 농지소유와 이용 관리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필요

- 경상남도 민관협치 농지관리 위원회

- 농지관리 위원회에 민간참여 확대
- 마을, 읍면, 지자체 단위의 민관협치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 지자체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 및 관리 내실화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강화

- 마을 농지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 농촌마을 활동가를 통한 농지 이용실태조사 정례화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 고수
- 재배품목, 재배방식 등 확인·관리, 공익형 직불제 점검 역할 수행
- 농지투기, 난개발 등 근절
- 시군 농업회의소 조직 확대를 통해 농업인 자치적 통합관리

- 농지와 거주지(마을, 빈집) 관리체계 마련

- 빈집문제는 농촌지역 마을 경관 문제, 지역소멸,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대두
- 장기적으로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의 빈집 실태 파악과 수요 매칭 서비스를 통해 농촌마을의 지속가능성 유지 기반 마련

● 농지 종합관리

- 지자체별 농지관리 종합계획 마련

- 중앙정부, 시도의 농지 이용·보전 관련 계획과 더불어 지역의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특징에 맞는 농지관리 종합계획 마련

- 농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 농지법과 현실, 농지소유와 이용, 이원화된 농지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 개선
- 개선 대상과 범위, 개선 방법 등을 현장 조사 정례화로 파악
- 지역별 농지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가 차원에서 구축될 예정인 농지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4) 청년농업인 유입 및 거주 확대

● 청년농업인 지원 혁신체계 구축

- 경남 청년정책의 통합관리

- 각 사업 부서별로 추진 중인 청년정책 사업을 통합
- 청년이 경남에서 미래를 펼쳐가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하나의 창구로 일원화
- 농업 분야만 별도로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이 아니라 경남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청년들의 선택 폭 확장

- 농업 분야 진입단계별 문제해결 · 연계 시스템 마련

- 현재의 청년농업인 지원정책은 크게 기술 · 교육지원, 생활지원, 창업지원으로 구분
- 일자리사업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전환할 필요
- 농업으로의 진입 자체가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이고, 농업으로의 진입 이후에도 농촌지역으로의 거주 문제, 농지확보 문제, 지역주민과의 소통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에 직면
- 진입을 고려하는 단계에서는 농업으로의 진입이 일반 기업체에 취업이나 창업 등 다양한 선택지 중의 하나로써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 농업의 현실, 농업구조, 정책지원 등 진입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는 정보 · 교육 진행, 경남 청년센터 등 활용
- 지자체 농가와와의 지속적 교류 및 지자체 농지, 빈집 정보 구축 및 제공
- 농가경제 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품목별 농가의 연간 소득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시
- 청년들이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장벽으로 작용하는 농지, 거주, 경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을 마련

- 농지관리위원회 및 빈집관리 사업과 연계

- 기술 · 교육 훈련 등을 거친 청년농업인이 초기 진입단계에서 정착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 정착에 필요한 주거, 농지 구득, 판로 등에 대한 사전계획과 연락처이 가능하도록 지원

(5) 농촌환경개선 및 매력도 향상

-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내실화

- 경남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 2000년 이후 지속되어온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관리 문제 대두
- 지자체별 지역개발 사업의 중복, 투입 대비 개발 효과 미흡
- 지역별 개발사업 내력 관리시스템 마련
- 사업 시행 전후에 따른 지역거주민 만족도, 관련 기관으로의 파급효과 등 정량화
- 기존 사업의 문제점 발굴 및 피드백을 통해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의 발굴

- 농촌 생활환경 · 복지개선 지표 관리 및 개선

-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 경남 농어촌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조례 등 제도적 보완
- 경남 농촌지역 삶의 질 관련 세부지표 개발

- 보건, 교육, 정주생활기반 등 도농 간 격차 완화
- 농촌지역 마을 도서관, 작은 영화관 등 생활문화 공간 확대
- 농촌지역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 및 자연재해 예방
- **농촌관광 활성화**
 - 지역별 경관자원, 마을자원, 문화자원 등 자원조사 및 관리체계 마련
 - 농어촌마을 체험, 숙박 관련 표준지표 개발, 경남 농촌관광 맵&앱 개발
 - 마을 단위 체험, 숙박 관리 위원회 조직 및 운영(지원), 농어촌지역 청년 참여 확대
- **자연 속에 어우러진 농촌 생활공간 재창조**
- **농업인 복지서비스 질적 개선**
 -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및 거점의료기관 지원
 - 농촌 보육여건 개선

● 마을사업 주민참여 확대

- **마을공동체성 복원**
 - 마을 공동사업(마을 정비, 축제 등) 지속 발굴·지원
 - 마을주민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마을 사랑방) 조성
 - 마을공동체를 통해 필요사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동추진하며 성과를 공유하는 분위기 조성·확산
 - **마을 단위 소규모 창의사업 발굴**
 - 마을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소규모 사업 발굴
 - 마을별 창의사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
- ※ 예) 친환경 농산물 공동생산·유통·정산 체계구축, 마을 역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주민극단 등

3) 농촌사회 공동체성·지울성 회복

(1) 마을공동체성 회복

● 농촌의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 마련

-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전통적인 마을조직이 와해하는 상황
- 그러나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지원 사업으로 마을 사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공동체가 재활성화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
- 농촌 마을공동체의 자치사업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기관 마련

- 현행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각 시군으로 확대하고,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지원

● 시군, 읍·면 단위 마을공동체 활동가 육성

- 농촌마을의 급격한 인구감소, 초고령화 등으로 마을이 가진 역사·문화·자연을 활용한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인력이 부족한 상황
- 도시와 다른 농촌마을의 특성, 산업 및 정주 여건 등을 인지하고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들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를 육성
- 시군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지역자원을 관리하면서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을 유지, 회복하는 역할 담당

(2) 공동체 마을 육성

● 귀촌을 위한 공동체 마을 육성

- 농촌지역은 농사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이라는 인식에서 탈피
- 농촌을 하나의 거주공간으로 접근하며, 다양한 직업을 가진 개인이 특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농촌의 어메니티를 배경으로 마을을 형성
- 교육공동체, 은퇴자공동체, 종교공동체 등 특정한 테마를 가진 공동체마을 육성
- 개인이 생활하는 거주공간은 스스로 투자하되 공동체 마을 부지, 테마별 마을 커뮤니티 형성, 공동체 활동 시설 및 마을기업 활동 등을 지원
- 경남으로 귀촌 및 인구 유입 확대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농산업 경쟁력 강화

● 농림수산물 R&D 투자 강화

- 경남의 농수축산물 품종개량, 친환경농자재 및 농법의 개발, 병해충 방제, 가공식품 개발 등 지원 확대
- 특히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평가되는 스마트팜 분야에 집중 투자
- 밀양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스타트업 유치에 주력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농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수출국의 안전성 제도변화 모니터링 지원, 잔류농약 검사 및 처벌 강화
- 경남 수출 농가를 조직화한 국제안전 물류시스템 구축
- 식품산업 분야의 이력 추적 시스템 확산에 대응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경남 품목별 안전 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2) 지역 전략 식품산업 육성

● 동남권 식품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 경남의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 기계, 자동차 등의 어려움으로 경기침체 장기화
-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2020년 7조원 규모이며 자동차 시장의 4.4배, IT시장의 6배, 철강시장의 8배 수준
- 국내 전체 식품산업 사업체의 15%(수도권, 충청권에 이어 3위 규모)가 경남, 부산, 울산지역에 위치
- 부산, 통영, 고성 등 해안지역의 수산식품, 서부경남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생산 및 동부경남의 축산물, 농식품 기업의 역량 집중을 통해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
- 수산식품클러스터(부산), 농축산 식품단지, 지역 농축산물 원료화, 항만, 공항 등 양호한 수출 여건 등을 기반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시)와 차별화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식품산업혁신생태계를 조성
- 중앙정부 역시 국가 식품클러스터 만으로는 국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므로 향후 확대될 식품산업 육성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

5) 농정 거버넌스 강화

(1) 농업인 자치·협력 조직 육성

● 경남 농정혁신센터 설치

- 기존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의 주요의제와 경남 농정당국의 정책집행 기능 효율화를 위한 중간 조율기구로서 역할
- 급변하는 농업, 농촌 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농정의 변화를 주도할 농정혁신기구 설치

● 농업회의소 역할 재검토 및 개선안 마련

- 현행 농업회의소 확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별로 다양한 기존 농업인 단체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농업회의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데 있음

- 정부주도의 하향식 협치 기구설립은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바 지역별로 산재한 다양한 농업인단체의 협의체를 우선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개별 사안에 대응해 가면서 필요에 의해 농업회의소 형태의 기구로 발전할 것인지, 협의체 형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
- 농업회의소 역할이나 기능의 확대는 농업인단체의 필요에 의해 선택될 수 있도록 하고 관에서는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
- 전국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거창 농업회의소를 점차 지역사회의 농정 협치 기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협치의 우수사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경남,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아감

(2) 중앙-지방사무 분리

● 지방 농정관리기구 신설

- 지역 농정의 대부분이 중앙사무를 지방이 집행하는데 인력 및 역량이 집중된 구조
-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역이 가진 자원을 발굴하거나 개발해 가는 데 한계
-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중앙의 역할이 지방으로 점차 이양되는 추세이므로 이에 발맞추어 경남 농산어촌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특화·관리해 갈 기구가 필요
- 기구의 인력구성은 공무원과 민간이 적절히 분포되도록 하여 기존의 관 주도 조직 형태를 탈피하도록 함
- 관리기구는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 울산 등을 포괄하는 광역단위 조직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

제2절

어업(어촌)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인구

(1) 어가인구

● 경상남도 어가 및 어가인구 감소

- 경상남도의 어가는 지난 10년 동안 약 34% 감소해 2018년 현재 어가는 7,730가구임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는 지난 10년 동안 약 40% 감소해 2018년 현재 어가인구는 18,045명임
- 가구당 평균 인구 수는 2008년 2.6명에서 2018년 2.3명으로 감소함

(2) 어업종사 인구

- 경남도내 어가인구 중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원의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1% 감소해 2018년 현재 12,921명임
- 가구당 평균 어업종사자 수는 2008년 1.6명에서 2018년 1.7명으로 증가함

(단위 : 가구, 명, %)

〈표 4-1-8〉

경상남도
어가인구 현황

구분	어업가구	어가인구	어가인구 가구당 평균	어업종사가구원	어업종사자 가구당 평균
2008년	11,688	30,184	2.6	18,771	1.6
2018년	7,730	18,045	2.3	12,921	1.7
증감률	-33.9	-40.2	-10.2	-31.2	4.5

주 : 내수면어가 제외.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www.kosis.kr).

2) 어업 생산

(1) 어업 생산능력

● 어선 세력

- 경상남도의 어선 척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14% 감소해 2018년 현재 어선 척수는 14,092척임
- 지난 10년간 1톤 미만 어선의 수는 약 46% 감소했으나,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어선 척수는 오히려 약 38% 증가함

(단위 : 척, %)

〈표 4-1-9〉

경상남도
어선 세력 현황

구분	합계	1톤 미만	1~5톤 미만	5~10톤 미만	10톤 이상
2008년	16,421	4,870	10,049	712	790
2018년	14,092	2,612	9,759	986	735
증감률	-14.2	-46.4	-2.9	38.5	-7.0

주 : 내수면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등록어선통계(www.kosis.kr)

● 양식 면허

- 경상남도의 양식 면허 건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7% 증가했으나, 양식 면허 면적은 변하지 않았음
- 세부 면허별로 어류 등 양식은 건수 7.2%, 면적 6.4% 감소했으나, 해조류 양식은 건수 184.6%, 면적 164.1% 증가함
- 패류 양식의 건수는 3.7% 증가했으나, 면적은 8.4% 감소함

(단위 : 건, m², %)

〈표 4-1-10〉

경상남도
양식 면허 현황

구분	어류 등		패류		해조류		합계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2008년	538	1,687	1,610	10,006	26	117	2,174	11,810
2018년	499	1,579	1,669	9,168	74	309	2,325	11,811
증감률	-7.2	-6.4	3.7	-8.4	184.6	164.1	6.9	0.0

주 : 내수면어업 제외
자료 : 통계청 천해양식어업권통계(www.kosis.kr)

(2) 어업 생산규모

● 어업 생산량

- 경상남도의 2018년 현재 어업 생산량은 58만 6,188M/T임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21만 9,536M/T 중 어류 생산량이 17만 7,754M/T로 가장 많음
-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36만 6,652M/T 중 패류 생산량이 32만 1,250M/T로 가장 많음

(단위 : M/T)

〈표 4-1-11〉

경상남도
부류별 어업 생산량
(2018)

구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합계
일반해면어업	177,554	2,226	27,142	10,981	1,381	252	219,536
천해양식어업	25,656	145	294,108	0	35,771	10,972	366,652
합계	203,210	2,371	321,250	10,981	37,152	11,224	586,188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www.kosis.kr)

● 어업 생산금액

- 경상남도의 2018년 현재 어업 생산금액은 1조 2,359억원임
- 일반해면어업의 생산금액 6,905억원 중 어류 생산금액이 5,002억원으로 가장 높음
- 천해양식어업의 생산금액 5,454억원 중 어류 생산금액이 2,540억원, 패류 생산금액이 2,097억원임

(단위 : 억원)

〈표 4-1-12〉

경상남도
부류별 어업 생산금액
(2018)

구분	어류	갑각류	패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동물	해조류	합계
일반해면어업	5,002	190	559	1,031	120	4	6,905
천해양식어업	2,540	32	2,097	0	684	101	5,454
합계	7,542	222	2,656	1,031	804	105	12,359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www.kosis.kr).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어가인구 변화

(1) 어가인구의 양적 감소

● 최근 5년 변화 추이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는 2013년 23,568명에서 2018년 18,045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단위 : 명, %)

〈표 4-1-13〉

경상남도 연령별
어가인구 변화 추이
(2013~2018)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23,568	21,789	22,609	19,826	18,928	18,045
20세 미만 (비율)	2,605 (11.1)	1,982 (9.1)	2,114 (9.4)	2,128 (10.7)	1,827 (9.7)	1,636 (9.1)
20대~40대 (비율)	4,974 (21.1)	4,125 (18.9)	4,639 (20.5)	3,825 (19.3)	3,556 (18.8)	3,345 (18.5)
50대 (비율)	5,855 (24.8)	5,633 (25.9)	5,868 (26.0)	4,701 (23.7)	4,382 (23.2)	3,900 (21.6)
65세 이상 (비율)	6,842 (29.0)	7,002 (32.1)	6,582 (29.1)	6,045 (30.5)	6,204 (32.8)	6,167 (34.2)

자료 : 통계청 농림어업조사(www.kosis.kr).

(2) 어가인구의 질적 감소

● 고령화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3년 6,842명에서 2018년 6,167명으로 감소했으나 전체 어가인구 중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29.0%에서 2018년 34.2%로 증가해 어가인구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음

● 청년층 인구의 감소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 중 20~40대의 청년층 인구는 2013년 4,974명에서 2018년 3,345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어가 중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21.2%에서 2018년 18.5%로 감소함

● 중년층 인구의 감소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 중 50대의 중년층 인구는 2013년 5,855명에서 2018년 3,900명으로 감소했으며, 전체 어가 중에서 중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2013년 24.8%에서 2018년 21.6%로 감소함

2) 어업 생산 변화

(1)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 일반해면어업 생산량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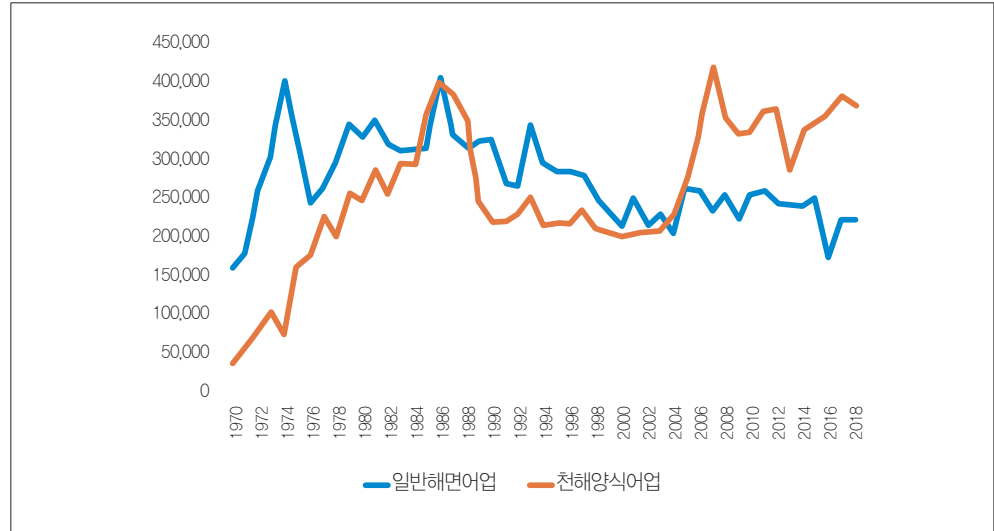
- 경상남도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의 1970년 이후 약 50년간의 장기 변화추이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임
- 특히, 1990년대 이후 가파르게 감소함
- 현재의 일반해면어업 생산량은 과거 최고점 대비 약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약 20만톤(M/T) 수준에 정체되고 있음

(2)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 천해양식어업 생산량 변화 추이

- 경상남도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의 1970년 이후 약 50년간의 장기 변화추이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
- 1980년대 말 약 40만톤(M/T)에 도달한 후 급격히 감소했으며, 그 후 약 15년간의 정체기를 거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4-1-6〉

경상남도 어업
총생산액 변화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조사(www.kosis.kr).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1) 어가인구 유지 목표

● 어가인구 전국 2위 수준 유지

- 경상남도의 어가인구는 2015년까지 전국 2위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6년 충청남도에 역전당해 2018년 현재까지 전국 3위에 머물러 있음
- 경남 어가인구의 급격한 감소 원인을 파악한 후 실효성 있는 인구 유지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청년층 인구 25% 달성

- 20대~40대의 청년층 인구는 자녀를 출산, 양육하며, 새로운 어업 기술을 적용한 첨단어업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어촌의 구성과 유지에 매우 중요함
- 적극적인 귀어·귀촌 정책을 통해 20대~40대 청년층 인구의 비율을 25%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경상남도 어가인구 유지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어가소득 6천만원 달성

● 어가소득 증대를 통한 어촌 활성화

- 경상남도 어가인구 감소의 원인은 장기적인 어업 생산 불황에 있음. 어가소득의 향상은 현재의 어촌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수단임

- 어가소득이 도시 근로자가구 소득과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계획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추진전략

● 어업(어촌) 부문 핵심지표

〈표 4-1-14〉

어업(어촌)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어업 생산량	57만 6천 M/T	70만 M/T	100만 M/T
어가인구	17,553명	20,000명	25,000명
어가소득	4,800만원	6,000만원	9,000만원

(1) 실효성 있는 귀어·귀촌 정책 수립

●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귀어·귀촌 정책

- 경상남도는 귀어·귀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귀어 인구의 수는 130명 수준에 그치고 있음
- 타 지자체의 귀어·귀촌인 수와 정책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상남도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귀어·귀촌 정책을 개발해야 함

(단위 : 명)

〈표 4-1-15〉

경상남도
귀어·귀촌 실적

구분	귀어 가구원 수			귀어인 수			동반 가구원 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년	85	51	34	59	43	16	26	8	18
2014년	153	99	54	103	83	20	50	16	34
2015년	143	93	50	91	72	19	52	21	31
2016년	132	81	51	83	63	20	49	18	31
2017년	137	95	42	93	80	13	44	15	29
2018년	135	89	46	88	70	18	47	19	28

자료 : 통계청 귀농어통계(www.kosis.kr).

(2) 어촌 6차 산업화를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

●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어촌 역량 개발

- 수산물 선호의 변화에 부합하는 수산물 공급 능력 개발
- 어촌 휴양관광 증가에 따른 어촌주민 참여 기회 부여

● 어업과 어촌의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어촌 활성화 추구

- 경상남도는 굴, 멍게, 양식 활어 등 지역 특화도가 높은 수산특산물이 많으나 이를 고부가가치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했음
- 최근 어촌뉴딜 300사업의 추진으로 어항과 어촌마을에 수산인프라 구축이 확대되고 있어 이를 활용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음

● 경남 어촌을 도시민의 휴양지로 개발

- 어촌문화와 어업활동 등 어촌다움을 간직한 어촌마을의 독특한 어메니티(amenity)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원과 연계해 국민들에게 휴양과 체험관광의 장소로 제공
- 바다낚시, 해양레저, 전통어업체험, 해양생태교육 등 청소년과 젊은 도시민이 취미를 즐기고 자연을 학습하면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특화

4. 추진시책

1) 어업의 지속가능성 유지

(1) 차별화된 귀어 지원을 통한 어업 후속 인력 확보

● 경상남도 및 시·군 귀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귀농어귀촌법) 제5조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 【제1차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음
- 동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또한,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함
- 현재까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한 광역자치단체는 전라남도가 유일함. 전라남도는 2019년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음
- 현재까지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한 기초자치단체는 전라남도 함평군이 유일함. 함평군은 2017년 【귀농·귀촌 지원 5개년 종합계획 : 2017~2021년】을 수립했음⁶⁾

6) 함평군이 수립한 함평군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수립한 것임.

- 경상남도 귀어·귀촌 지원계획 수립 후 동 계획에 따른 귀어·귀촌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함
- 경상남도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과 전망을 도출하고, 전문기관의 정책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경상남도 귀어·귀촌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함
- 경상남도는 도 계획 수립 시 시군별 귀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력함⁷⁾

● 경상남도 귀어학교 운영 고도화

- 정부는 귀어·귀촌 희망자, 귀어자, 어촌 창업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면서 어업 기술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해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개소 당 1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을 투입해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강원도, 경기도 등 5개 지역에 귀어학교를 개설함
- 경상남도의 어업 후속세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현재 경상남도 귀어학교는 경상국립대학교 해양과학대학 내 설립되어 일반교과, 어업, 양식, 수산기공, 수산물 유통 등 5개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나 각 과목당 4~8시간씩의 강의 및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 시간이 짧으며, 강사진 또한 현직 교수 또는 전직 공무원 등이 투입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함
- 2018년 최초로 개설된 경상남도 귀어학교는 2020년 현재 운영 3년 차에 접어들고 있으나 이수자의 뚜렷한 귀어인 배출 효과(실적)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예비어업인 맞춤형 교육·훈련을 통해 경남 어업이 필요한 미래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귀어학교의 운영을 체계화·고도화해야 함
- 경상남도 귀어귀촌 지원계획 수립과 별도로 경상남도 귀어학교 운영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거,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개편이 필요함

(2) 미래 어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 집중 양성

● 고부가가치 개체굴 산업 분야 전문 인력 육성

- 경상남도의 어업인구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어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미래 어업 인력을 성공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경상남도의 패류 양식어업은 수하식 굴 양식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수하식으로 생산한 알굴의 시장경쟁력은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음
- 굴 박신인력 감소 및 노무비 부담 증가, 굴패각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수하식 덩이굴 생산에서 개체굴 생산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어가가 증가하고 있음

7) 각 시·군이 개별적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분야에 대해 해당 지역의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 경남도 차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을 분리해 귀농·귀촌 지원계획과 귀어·귀촌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각 시·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개체굴 양식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종패생산(2배체 및 3배체), 치패단련, 출하 전 정화처리 등 새로운 기술을 보유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
- 개체굴 마케팅과 수출은 기존 수산물 유통경로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위생관리와 수출업무에 능숙한 개체굴 전문 유통 인력이 필요함

● 연안어업 자동화 및 정보화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 필요

- 현재 도내의 연안어업은 주로 2~5톤 규모의 소형 어선에 2인 정도의 인력이 승선해 당일 어로가 이루어지는 연안자망, 연안통발, 연안복합 등 업종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연안어업 종사자 고령화가 심화함에 따라 인력에 의존하는 연안어업의 패턴이 변하고 있음
- 어선과 어구 및 어업통신 분야의 기술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연안어업의 자동화와 정보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됨. 기존 어업인의 신기술 분야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향후 첨단어업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함

2) 어촌 사회 활성화

(1) 귀어촌인 및 어촌 단기 거주자 지원을 통한 어촌 활성화

● 경상남도 귀어촌인 지원체계 개편

- 현행 귀어·귀촌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 또는 귀어촌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귀어·귀촌 지원 사업은 귀어업인의 어업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 귀어촌인을 위한 지원 사업이 부족함
 - 귀어업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
 - 귀어촌인이란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함
- 어촌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귀어업인 뿐만 아니라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더라도 어촌 거주를 위해 도시로부터 이주한 귀어촌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현행 귀어·귀촌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미만이라는 연령 제한을 두고 있음.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도시 은퇴자가 귀농 또는 귀어촌을 고려하는 연령도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귀어촌 지원 사업의 자격 조건을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어촌 단기 거주 지원을 통한 어촌 활성화 도모

- 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모든 가구원이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하더라도 어촌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아지면 어촌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음

- 경남 어촌의 도로교통 여건이 개선되어 도시에서 어촌으로의 이동이 편리해짐에 따라 어촌에 주말 거주용 세컨하우스를 가지고 싶어 하는 도시민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에서 1달 살아보기’와 같이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느린 여행 또는 낯선 지역에 적응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단기 거주자들이 많아지면 어촌지역 내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어촌이 활성화되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어촌지역에 세컨하우스 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축 시 행정편의 제공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2) 어촌 청년 일자리 창출

● 어촌뉴딜 300사업 효과 제고를 위한 청년 인력 활용

- 어촌뉴딜 300사업은 낙후된 어항의 현대화 및 거점 어촌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해 어촌지역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하는 어촌재생사업임
- 19년부터 22년까지 전국 연안에 300개소의 사업을 목표로 하며, 현재 경남 연안 7개소, 시·군 38개소(19년 15개소, 20년 23개소)의 사업에 총 3,988억원(19년 1,775억원, 20년 2,213억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었음
- 22년까지 경남지역 내 약 80개소의 어촌뉴딜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어촌뉴딜 300사업이 어촌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효과를 얻고 강화된 어촌인프라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촌공동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할과 도시지역 거주 청년의 어촌 분야 일자리 참여가 매우 중요함
-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을 계기로 어촌의 혁신과 도약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도출이 필요함

● 어촌 6차 산업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청년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 어촌 6차 산업화는 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 특산물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개념의 어촌 융·복합 산업으로, 미래의 어촌 경제를 부흥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임
- 그러나 경남도내 대부분 어촌마을은 고령화가 심각하며, 4~50대의 비교적 젊은 어촌 주민은 각자의 생계 활동을 위해 바쁘게 생활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마을의 어촌 6차 산업화를 위해서 투입될 여력이 없음

- 이러한 어촌 인력 공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면, 어촌 6차 산업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임
- 어촌 6차 산업화를 추진하는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분야의 일을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과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어촌마을 만들기를 완성할 수 있음
- 어촌 6차 산업화 청년 서포터즈 구성 및 활용 방안(제안)
 - 경남도내 소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청년 어촌 서포터즈」 동아리 결성
 - [경상남도-경상남도교육청] 및 [각 시·군-각급 학교] 간 <학생의 어촌 봉사 활동>에 관한 MOU 체결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센터를 통해 봉사 참여 후 봉사활동 점수 획득 및 참여 수당 지급

제3절
지역산업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상남도 경제 현황

(1) 경상남도 산업

● 경상남도 산업구성

- 2018년 전국 산업구성 1차 산업 1.8%, 2차 산업 33.4%, 3차 산업 64.8%인 반면 경상남도는 각각 3.8%, 43.6%, 52.8%로 나타남
-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경상남도의 제조업 비중은 2018년 기준 43.6%로 매우 높지만, 서비스산업 비중은 52.6%로 상대적으로 저발전 상태임
- 경상남도는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수출기반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대외여건 변화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서비스산업을 비롯한 비교역제 분야는 상대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도 낮게 나타남

(단위 : 백만원, %)

(표 4-1-16)

경남의 산업구조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1차 산업	전국	28,360,518	30,740,963	31,535,409	31,598,412	32,203,471	33,229,204	32,366,342	33,981,048	34,583,625
	경남	3,249,126	3,405,429	3,393,996	3,424,282	3,490,460	3,569,027	3,494,042	3,725,327	4,149,132
2차 산업	전국	445,580,066	472,509,989	485,009,265	509,963,675	524,901,762	557,268,655	587,230,678	627,920,194	634,525,321
	경남	45,188,975	46,412,843	48,154,667	47,571,455	46,921,689	49,565,020	50,634,415	48,993,180	48,194,008
3차 산업	전국	733,775,213	769,190,047	804,743,036	839,844,999	880,527,500	933,109,468	976,151,176	1,021,570,299	1,067,480,142
	경남	34,373,454	36,899,945	39,295,651	41,124,035	42,910,038	45,379,714	46,894,163	48,420,909	49,966,171
경남 산업 비중	1차 산업	3.9	3.9	3.7	3.7	3.7	3.6	3.5	3.7	3.8
	2차 산업	54.6	53.5	53.0	51.6	50.3	50.3	50.1	48.4	43.6
	3차 산업	41.5	42.6	43.3	44.6	46.0	46.1	46.4	47.9	5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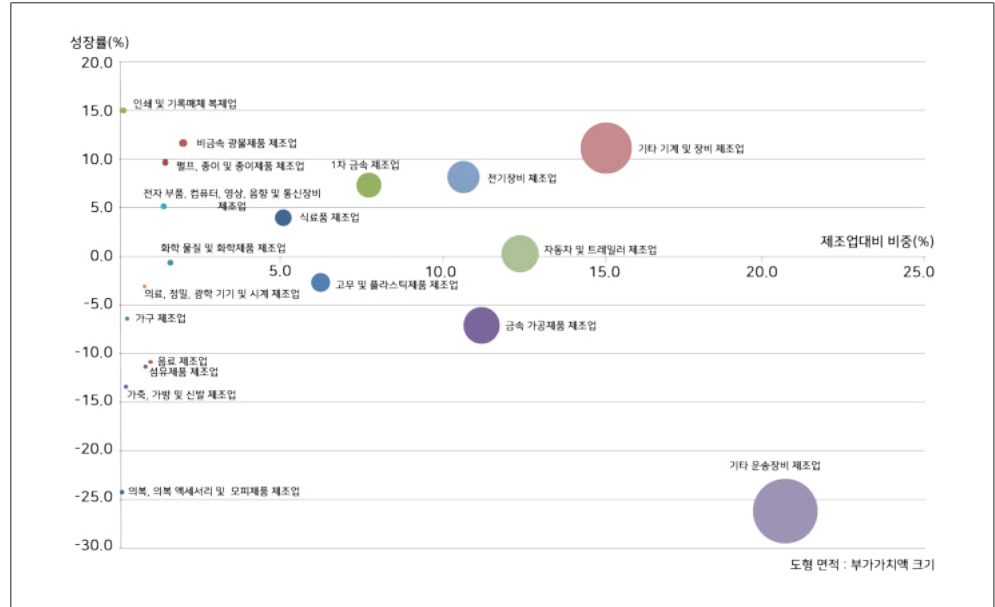
주 : 1차 산업(농림어업), 2차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3차 산업(그 외).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당해년가격), 각연도.

● 경상남도 제조업

- 2018년 현재 경상남도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제1차 금속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순으로 나타남
- 조선업의 음의 성장과 자동차산업 정체가 두 산업의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기계산업 및 금속가공산업,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정체를 유발하며 지역경제의 정체 지속

〈그림 4-1-7〉

경상남도 제조업
업종별 비중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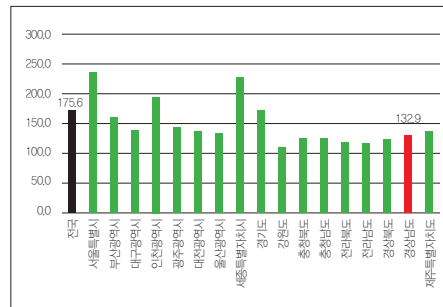
자료 : KOSIS, 광업제조업조사, 통계청(2018).

● 경상남도 서비스업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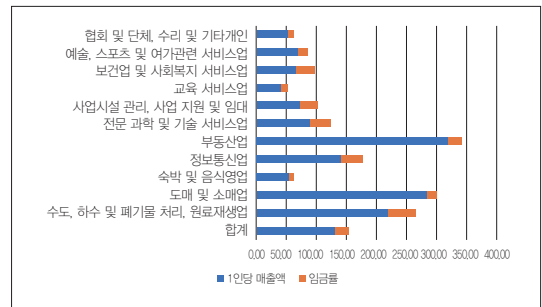
- 2018년 현재 경상남도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평균은 1억 3천 2백만원이며, 1인당 평균임금은 1,886만원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 내 평균임금이 높은 서비스 직종은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정보통신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임

〈그림 4-1-8〉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비교 및 경상남도
서비스 업종별
1인당 매출액 및 임금



서비스업 1인당 매출액 비교



경상남도 서비스 업종별 1인당 매출액 및 임금

주 : 1인당 매출액=총매출액/종사자 수, 임금율=인건비총액/종사자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서비스조사(2018).

(2) 경상남도 산업구조의 한계

● 생산기지로 쇠퇴하는 제조업

- 1990년대 이후 경상남도 주력제조업은 가치사슬 활동 중 제조 활동에 특화됨으로써 2000년대 이후 부가가치 기여도가 높은 가치사슬 전반부 활동(R&D나 디자인 등)이나 후반부 활동(마케팅 및 서비스) 기능이 약화되고 수도권 등에 비해 총자본투자효율이 낮아짐(경남연구원, 2020)

- 조선업 및 자동차산업 등 주력 제조업의 설비투자 중심 공정혁신 위주 성장은 R&D 역량 약화, 주력제조업 내 폐쇄적 거래구조, 생산자 서비스 기능 역량 미비로 귀결되며 단순 제조에 특화된 생산기지로 입지 축소

● 경상남도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

- 경상남도 서비스업은 2010년 41.5%에서 2018년 52.6%로 11.1%p 비중이 상승했지만, 서비스업 발전에 따른 결과이기보다 제조업 산출 감소의 결과임
- 경상남도 서비스업은 산업 다양성 지표가 매우 낮고 소비자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매·소매업, 음식점 및 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생산성이 낮고 자본조달 능력이 열악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제조혁신

● 경상남도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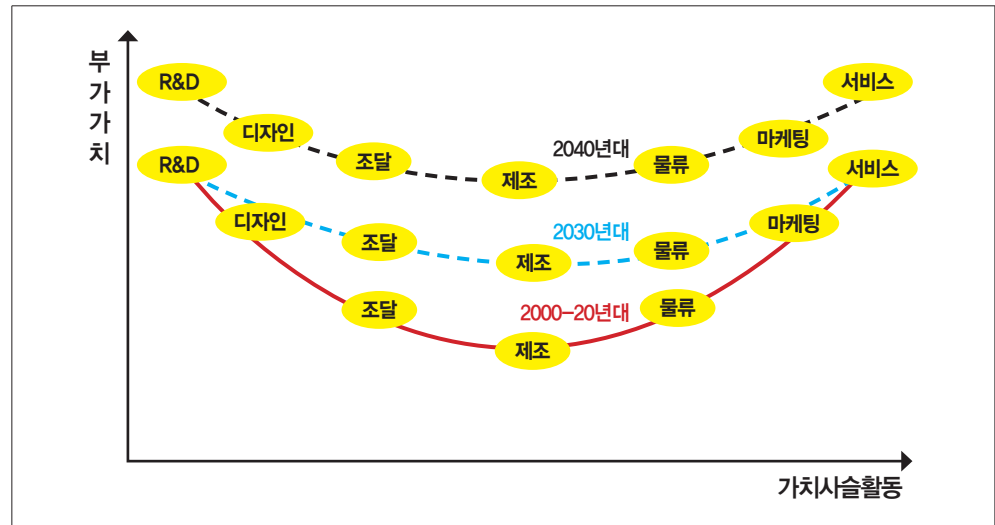
- 대표산업구조고도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균형발전 기반 조성
- 첨단신소재, 나노융합, 에너지 환경, 미래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산업 추진으로 지역 산업기반 다양화 및 고부가가치화

● 제조업과 생산자 서비스의 융합

- R&D 능력 제고, 제조 관련 생산자 서비스 확대,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가치사슬 활동의 다양화
- 제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조업 지원 서비스의 경우 수요자와 생산자 간의 밀접한 접촉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발달한 경남지역의 입지 여건은 유리함
- 가치사슬 활동에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등 전후방 활동의 결합

〈그림 4-1-9〉

동남권 제조업
가치사슬 변화
(2020~2040)



2) 서비스업의 양적·질적 확대

● 생산자 서비스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경상남도 제조업 생산성 향상, 서비스업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조혁신을 위한 시스템통합, 빅데이터·AI·자율주행자동차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 공급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소비자 서비스의 혁신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소득수준 향상, 여가 증가로 절대적인 서비스 수요시장 확대에 맞춰 빅데이터·AI 등의 활용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 활성화

●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경쟁압력 해소

- 서비스업 저부가가치화는 서비스 노동 수요가 과도하게 민간 소비자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과잉경쟁의 결과
-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보건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서비스의 과잉 경쟁 완화 및 공공복지의 질적 상승

3) 탄소제로 경제로의 이행

(1)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 절대량은 발전시설

- 에너지 분야의 17년 배출량은 국가 총배출량의 86.8%에 해당하는 615.8백만톤으로 90년 대비 156.2%, 전년 대비 2.2% 증가했음. 분야별로 보면 총배출량 대비 에너지 86.8%, 산업공정 7.9%, 농업 2.9%, 폐기물 2.4%(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8)

- GDP 당 배출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GDP 절대액 증가로 인해 총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임
- 전 지구적 기후 위기와 국제적인 온실가스 규제에 조응하여 경상남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수소발전·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및 수소자동차산업에서 주도권을 형성할 수 있음

(2) 탄소제로 경제로의 이행

●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른 경상남도의 이니셔티브

- 정부의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2018년 연료전지 발전은 307MW에 불과하나 2040년 15GW 생산, 수소자동차 공급을 620만대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간 526만톤 공급 예정(관계부처합동회의, 수소경제로드맵(2019))
- 외국에서 생산된 수소 액화 및 수송, 수소발전, 수소자동차, 수소추진 선박 등 다양한 형태의 수소경제 성장잠재력이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를 목표로 태양광 에너지, 풍력발전, 수소발전 등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 에너지 체제로 전환 중
- 국내 풍력 산업 기업 중 과반수가 경상남도에 있으며, 국내 주력 기업 역시 경상남도에 자리 잡고 있어 풍력발전 수요 증가는 경상남도에 새로운 기회가 됨
- 204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 50%의 에너지 믹스를 실현하기 위한 해상풍력 발전 및 수소발전 역량 극대화

(단위 : MW, %)

〈표 4-1-17〉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 용량 목표

구분	2016년	2020년	2023년	2025년	2030년	연평균 성장률
태양광 (비중)	342 (40.0)	996 (62.5)	1,462 (53.4)	1,759 (53.7)	2,472 (52.5)	13.4
풍력 (비중)	47 (5.5)	49 (3.1)	125 (4.6)	155 (4.7)	800 (17.0)	25.5
바이오 (비중)	317 (37.1)	318 (19.9)	318 (11.6)	338 (10.3)	338 (7.2)	0.5
소수력 (비중)	137 (16.0)	154 (9.7)	155 (5.7)	155 (4.7)	155 (3.3)	4.9
폐기물 (비중)	11 (1.3)	11 (0.7)	11 (0.4)	11 (0.3)	11 (0.2)	0
연료전지 (비중)	0 (0.0)	66 (4.1)	266 (9.7)	459 (14.0)	534 (11.3)	-
기타(GCC 등) (비중)	- (0.0)	- (0.0)	400 (14.6)	400 (12.2)	400 (8.5)	-
합계	854	1,594	2,737	3,277	4,710	12.97

자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2019).

● 주력 제조업의 탄소제로 경제로의 전환

- 경상남도 내 자동차 부품산업을 친환경 자동차 부품산업으로 전환 및 액화수소 수송선박 및 수소추진 선박 제조역량 강화
- 석탄 발전 중심지에서 가스터빈 발전, 연료전지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발전역량 고도화를 통해 탄소제로 경제를 위한 에너지 믹스
- 기계산업의 소재부품산업으로 구조 전환을 통한 수소경제 및 태양광, 풍력발전 구조설비 생산 경쟁력 제고

4)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과 인적자본 생산

(1) 건조 환경의 구성

- 광역교통망과 단일생활권
- 동남권 비즈니스 센터와 스마트 근린 공간의 구성

(2) 글로벌 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및 ICT 선도 기업 유치를 통한 생산자 서비스 기능 생태계 구축
- 제조업-서비스업의 융합을 위한 시스템통합, 비즈니스 솔루션 공급기업 유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 전문 컨설턴트 회사 유치

(3) 인적자본 생산 인프라 구축

- 스마트 경제에 필요한 스마트 인재 양성을 위한 연합대학 구성 및 연구기관 집적
- 주거-문화-광역교통-일자리가 연계된 건조 환경을 통한 청년 친화적 신도시 건설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 산업 부문 핵심지표

〈표 4-1-18〉

지역 산업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1인당 GRDP (명목성장을 기준)	3,369만원	4,594만원	6,285만원
지식생산자 서비스 비중	10.4%	15.5%	20.5%

(1) 제조혁신

● 주력산업구조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발굴

- 지능형 기계, 조선해양플랜트, 항공우주, 첨단방위산업 등 주력 제조업의 고도화와 첨단나노융합, 에너지·환경, 제조업과 ICT 융합, 미래 자동차산업으로 부가가치 확대
- 스마트산단 조성을 통해 제조혁신·사람 중심·신산업 중심의 경남형 선도 산단 모델 창출

〈표 4-1-19〉

경남 10대
미래전략산업

경남 10대 미래전략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① 지능기계·로봇	신성장 동력산업	⑥ 첨단신소재
	② 조선해양플랜트		⑦ 첨단나노융합
	③ 항공우주		⑧ 에너지·환경
	④ 항노화바이오		⑨ 제조ICT
	⑤ 첨단방위(경남도, 창원 중점 사업)		⑩ 미래 자동차

자료 : 경상남도 산업혁신과(2020).

● 경상남도 제조혁신을 통한 스타트업 환경 조성

- 제조혁신을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창업 인프라, 투자자금 등을 지원하여 스타트업 친화적인 창업환경 조성
- 새로운 혁신전략으로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합하는 개방형 혁신 및 창업 붐 조성

(2)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균형

● 제조업-서비스 산업 융합

- 시스템 통합 선도 기업 광역권역 내 유치 및 소프트웨어 산업 스타트업 촉진을 통한 제조서비스 역량 강화
- 국책 연구기관 집적지 조성 및 대학 연계 디자인, 마케팅, 사후 서비스 기능 확대

● 서비스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거버넌스 체계화

- 경상남도 및 동남권 서비스업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서비스산업 정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소비자 서비스 과잉공급 해소

-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 고용 비중을 OECD 평균이 20% 내외로 확대
- 이를 위한 공공 부문 노동시장 개혁으로 연공서열제 극복과 직무급제 실현

(3) 탄소제로 경제로의 이행 전략

● 수소경제 로드맵과 경상남도 제조업의 대응

- 수소 및 전기차로의 자동차 시장 전환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업이 미래 자동차 부품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 마련
- LNG 벙커링 및 LNG 추진선 설계 능력 및 제조 기술 확산과 더불어 수소추진 선박, 액화수소 운송 등 미래형 선박 제조 역량 강화
-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고도화 및 수출 주력 상품으로 육성

● 친환경 에너지 발전 경쟁력 강화

- 가스터빈 발전과 수소발전, 재생에너지 혼합을 위한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
- 노후 산업단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첨단·복합 산업단지로 재생
- 발전산업 선도 기업과 중소기업 기술 역량 축적을 위한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협력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4) 동남권 메가시티 계획과 인적자본 생산

● 동남권 메가시티 건조환경 조성

- 신공항 및 진해신항 건설,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국제물류 및 비즈니스 기반 확충 등 외국인 투자를 위한 글로벌 개방거점의 구축
-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국제 관광상품 및 국제 관광단지 개발, 컨벤션센터, 전시관, 호텔 등 국제교류 기반시설의 확충

● 글로벌 금융-ICT 기업 본사 유치

-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생산자 서비스가 조화된 미래형 도시로의 재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서비스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금융기업 및 ICT 기업 유치

- 글로벌 금융기업 및 ICT 기업 유치를 통한 제조업과 ICT의 융합, 생산과 제조업 서비스 융합을 통한 동남권 경제의 도약

● 인적자원 공급 생태계 구성

- 글로벌 금융기업, ICT 선도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이들 기업에 우수한 인적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대학 및 기관이 필요함
- 고부가가치 서비스인 연구개발, 디자인, 마케팅, 제조업 기술 서비스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인적자원은 글로벌 금융기업이나 한국의 ICT 기업 유치의 기반이 됨

● 대학-문화-연구 인프라의 구성

- 동남권 소재 과학기술 국책연구원 네트워크 활동 고도화와 경남, 울산, 부산 TP의 연합 거버넌스 구축 및 연구역량 결집
- 재료연구소의 한국재료연구원 승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경남 분원 유치, 한국자동차연구원 동남본부 설립(완료), 전자부품연구원 동남권 본부 설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동남권 분원 유치와 함께 부산-울산 동남권 연구기관과의 연구복합단지 건설
- 부산대, 창원대, 국립경상대, 울산대를 결합한 우수 연구중심 대학 복합체의 건설과 고급 인적자원 양성체계 확립
- 지역 청년 인재들의 선호에 조응하는 문화-서비스-주거 복합단지 개발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4. 추진시책

(1) 제조혁신과 구조고도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숙련의존형 첨단 산업생태계 조성

- 창원 국가산단을 소재부품장비 특화산단으로 조성하고 제조스마트화, 그린산단이 결합된 미래형 친환경 소부장 산업 육성
- 정밀가공 등 특수목적 기계 산업에 특화된 도내 중견기업 육성
- 소부장 산업의 성장을 이끌 장인 숙련 노동자의 육성을 통해 경상남도 소부장 산업의 숙련의존형 산업생태계 조성

● 운송기계 산업 전장화와 탄소제로화

- 자동차·조선·전투용 차량 등 운송기계 산업 주요 공급기업들의 전장화를 위한 공동기술개발 및 구조고도화 추진
- 자동차·건설기계의 수소추진체계 전환을 위한 경상남도 내 공급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원 및 필요 인력 양성 추진

- 중소형조선소의 친환경 선박 건조 역량 강화를 통한 중형 조선산업 첨단화
- **항공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와 항공MRO 산업 육성**
 - 항공전자 실증용 테스트베드 항공기 구축을 통한 항공기 부품 제조산업 고부가가치화
 - 에어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관련 신사업 발굴
 -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된 서부산 항공MRO 복합단지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

(2) 지식생산자 서비스 육성과 서비스산업 구조구도화

- **제조 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의 디지털화**
 - 경남 및 동남권 내 시스템통합, 정보통신 ICT 분야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기업 유치 및 공급기업 양성
 - 스마트공장의 구조고도화와 스마트산단조성, 에너지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ICT 서비스 공급기업 중점 육성
 - 제조혁신, 물류혁신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계시스템 양성
- **동남권 메가시티 내 생산자 지원 서비스를 중심업무지구 형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확대**
 - 동남권 내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및 구조조정을 위한 지역 밀착형 펀드 조성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
 - 경영컨설팅, 회계, 물류, 법률 등 제조관련 기업 지원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
 - 서비스 혁신지원 기관의 설립을 통해 창업컨설팅, 전문기술 축적 등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화

(3) 경남형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제로 경제 구축

- **경남도 내 풍력발전산업 가치사슬 전 부분 공급생태계 구성을 통한 세계 풍력산업 선도**
 -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통해 블레이드, 터빈, 감속기 등 풍력발전 일반기계 부품산업의 공급생태계 구축을 통한 가치사슬 전 부분 생산역량 강화
 - 경상남도 내 대형 조선 2사 및 중형조선사들의 해양풍력 부유물 및 발전설비 구조물 분야 세계적 선도
 - 철강, 금속 소재 산업 등 후방산업의 동시 성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탄소 제로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및 실행 계획 점검
 - 경상남도 내 수송기계산업(자동차 제조 및 부품산업, 조선 기자재 산업, 건설중장비 산업 등)의 탈탄소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작성
 -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충전소 등 지원 인프라 확대
 - 수송기계 핵심 부품기업들의 탈탄소화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 펀드 조성
-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 경상남도 내외부 발전단지로부터 생산된 재생에너지 계통건설을 통해 주요 국가산단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
 -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그리드 구축을 통한 에너지 자립 역량 강화
 - 창원 국가산단의 '에너지 자립형 산단 지정' 및 재생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
- 그린수소 공급을 위한 수소 항만 조성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그린수소만으로는 2030년 이후 국내 수소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해외에서 생산된 그린 수소를 수입 및 벙커링화 할 수 있는 전문 항만시설을 갖춤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진해신항 등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항만에서 수소저장 및 공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을 통해 동남권 그린에너지 공급체계를 다양화 해야 함
- 지역 자립 태양광 발전시설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 적극 육성
 - 주민-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촉진을 통한 분산 전원 실현 및 에너지 자립성 확대를 위하여 태양광발전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 육성
 -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촉진을 위한 마을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및 지원체계 구축
 - 개발이익 공유형 주민-시민 참여 에너지 협동조합 창립 시 장기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통한 초기 정착 지원

제4절
과학기술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상남도 과학기술 분야 현황 및 과제

(1) 연구개발 투입 현황

● 연구개발인력

- 경상남도 17년 기준 연구개발인력 수는 28,114명으로, 17개 광역시·도들 가운데 4위 수준에 해당
- 연구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17,574명(전국의 4.30%), 대학이 7,513명(전국의 4.05%), 공공연구소는 3,027명(전국의 5.42%)으로 구성됨
- 연구개발인력 수가 비록 4위지만, 상위권인 경기(211,620명), 서울(161,654명), 대전(50,724명)과 비교해 절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단위 : 명, %)

<표 4-1-20>

경상남도 연구기관별
연구개발인력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구 개발인력	전국 대비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 대비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 대비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 대비비중	연구개발 인력	전국 대비비중
대학	7,450	4.11	8,532	4.56	10,718	5.79	7,935	4.27	7,513	4.05
국공립	6,286	8.78	7,216	9.28	9,172	11.59	6,594	8.58	6,129	8.02
사립	1,164	1.06	1,316	1.20	1,546	1.46	1,341	1.23	1,384	1.27
공공연구소	2,442	4.91	2,721	5.25	2,976	5.49	2,994	7.07	3,027	5.42
국공립	726	6.66	721	6.38	594	5.51	505	4.84	561	5.24
정부출연	1,519	5.37	1,934	6.18	2,300	6.93	2,256	7.07	2,255	7.05
병원 및 기타	197	1.86	66	0.71	82	0.80	233	1.82	211	1.61
기업	15,297	4.52	15,254	4.16	14,024	3.68	15,440	4.02	17,574	4.30
정부투자기관	-	0.00	0	0.00	33	0.92	0	0.00	33	0.84
민간기업	15,297	4.57	15,254	4.20	13,991	3.71	15,440	4.06	17,541	4.33
합계	25,189	4.42	26,507	4.38	27,718	4.47	26,369	4.31	28,114	4.32

주 : 병원 및 기타 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각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연구원 수로 한정할 경우, 경상남도는 17년 기준 19,584명으로 경기(172,583명), 서울(118,541명), 대전(35,745명), 인천(19,635명)에 이은 5번째에 해당함
- 그러나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로 조정할 경우 그 순위는 더욱 낮아지며, 여성 연구원 수나 이공계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의 수도 타지역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1〉

경상남도 연구원 현황

구분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여성 연구원 수		이공계 대학원생(박사)		이공계 대학원생(석사)	
	명	순위	명	순위	명	순위	명	순위
2016년	5.3	11위	1,917	11위	598	13위	1,825	9위
2017년	5.8	10위	2,180	10위	577	14위	1,665	10위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각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연구개발투자

• 경상남도 17년 기준 총 연구개발비는 2조 4,536억원(전국의 3.11%)으로, 17개 광역시·도들 가운데 7위 수준에 해당

- 연구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1조 7,607억원(전국의 2.81%), 공공연구소가 5,488억원(전국의 5.75%), 대학이 1,442억원(전국의 2.16%)으로 구성됨

(단위 : 백만원, %)

〈표 4-1-22〉

경상남도 연구기관별 연구개발비 동향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구 개발비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비	전국 대비비중
대학	121,827	2.22	116,708	2.02	107,381	1.79	115,220	1.82	144,190	2.16
국공립	102,382	4.21	82,068	3.11	82,990	3.06	86,946	3.02	123,749	4.18
사립	19,445	0.64	34,640	1.11	24,391	0.74	28,274	0.82	20,441	0.55
공공연구소	367,311	5.06	493,595	6.08	533,780	6.05	577,861	6.34	548,811	5.75
국공립	30,486	4.87	53,708	7.13	39,123	5.03	45,590	6.11	44,009	5.52
정부출연	326,903	5.70	435,045	6.80	483,790	6.94	515,568	7.22	489,376	6.60
병원 및 기타	9,922	1.10	4,842	0.50	10,867	1.01	16,702	1.36	15,426	1.16
기업	1,585,768	3.41	1,451,722	2.91	1,453,645	2.84	1,500,637	2.78	1,760,698	2.81
정부투자기관	-	0.00	0	0.00	547	0.09	-	0.00	4,262	0.48
민간기업	1,585,768	3.45	1,451,722	2.95	1,453,098	2.88	1,500,637	2.82	1,756,436	2.85
합계	2,076,905	3.50	2,062,025	3.24	2,094,806	3.18	2,193,717	2.78	2,453,699	3.11

주 : 병원 및 기타 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각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살펴보면 17년 기준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12,832억원으로 전체 연구개발투자 가운데 약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분야별로는 기계(7,446억), 전기/전자(1,639억), 재료(1,141억), 농림수산식품(833억)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세부적으로 기계는 항공시스템과 국방 분야, 전기/전자는 무기센서 및 제어, 재료는 금속재료와 세라믹재료 등에 집중되어 있음⁸⁾

• 한편, 경상남도의 과학기술 관련 지방예산은 17년 기준 약 2,365억원이며 전체예산 가운데 1.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적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8) 자료 : 2018년 지역과학기술산업 스코어보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표 4-1-23〉

경상남도에 대한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및 경상남도
과학기술관련 예산 현황

〈경상남도의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투자금액	전국 대비비중	전국
2014년	7,156	4.2	168,652
2015년	9,403	5.2	181,807
2016년	9,721	5.3	183,355
2017년	12,832	6.7	192,688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구원출처: 각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경상남도 과학기술 관련 예산 현황(2017년)〉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총예산	215,288
재정자주도	76.30
총 과학기술 관련 예산	2,365
지역예산 대비 과학기술 관련 예산 비율	1.10
지역 총 과학기술 예산 대비 지방비 투자 비중	36.41

주1 : 총예산 - 2017년 시·도별 세출결산 순계 기준.
 주2 : 재정자주도 - 결산, 총계 기준(분정).
 주3 : 총 과학기술 관련 예산(계획) : 과학기술 관련 국비+지방비+기타 투자.
 주4 : 지역 총 과학기술 예산 대비 지방비 투자 비중 : 과학기술 관련 지방비(계획)/총 과학기술 관련 예산.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구원출처: 총예산, 재정자주도 - 지방재정365, 총 과학기술 관련 예산 -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17년 추진실적.

(2) 연구개발 성과 현황

● 논문 현황

- 17년도 경상남도의 SCI 논문 게재 건수는 주저자 기준으로 1,448편, 공저자 기준으로는 3,025편이며, 이는 한해 전국 논문 수의 3%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17개 광역시·도들 가운데 11위 수준으로, 대체로 주요 생산자라 할 수 있는 대학의 연구원 수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단위 : 건, %)

〈표 4-1-24〉

경상남도 SCI 논문
게재 현황

구분	주저자 기준				공저자 기준			
	논문 수	전체논문 대비점유율	피인용 수	1편당 피인용 수	논문 수	전체논문 대비점유율	피인용 수	1편당 피인용 수
2015년	1,508	3.07	7,523	4.99	3,080	3.53	18,331	5.95
2016년	1,452	2.95	4,030	2.78	3,061	3.40	11,853	3.87
2017년	1,448	2.90	1,265	0.87	3,025	3.30	4,427	1.46

주 : 전체논문은 지역 미상의 논문을 제외한 논문 수 기준.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구원출처: KAIST 학술문화원 내부자료.

● 특허 현황

- 17년도 경상남도의 특허출원 건수는 6,609건이고, 특허등록 건수는 3,738건으로, 각각 전국 내 4.16%와 4.14%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원 1인당 또는 연구비 10억원 대비 특허 등록 수로 조정하더라도 경남은 각각 0.191건과 1.50건으로 나타나 하위권으로 분류됨

(단위 : 건)

〈표 4-1-25〉

경상남도 특허출원 및
등록 건수 현황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특허출원 건수	4,935	5,017	5,502	5,548	6,625	6,609
특허등록 건수	2,963	3,076	3,465	2,840	3,538	3,738

주 : 출원은 제1 출원인의 주소지 기준, 국내 출원에 한함, 등록은 국내 권리자 중 제1 권리자의 주소 기준.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구원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기술사업화 현황

-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화 건수의 경우 경남은 1,493건으로 전체 32,625건 가운데 4.58% 수준이며, 지역 평균인 1,919건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한편, 경상남도의 기술료 징수 건수는 548건으로 비록 경기, 서울, 대전과 절대적인 차이는 있으나 이들 세 지역 다음으로 높으며, 기술료 징수액은 140.3억원으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전, 서울, 경기 다음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음

(3) 과학기술 인프라 현황

● 연구개발조직

- 17년 기준 경상남도의 연구개발조직은 총 2,187개로 전국(43,510개)의 5.03%를 차지
- 최근 5년간 연구개발조직은 연평균 약 14.3% 증가해왔으며, 대학 수는 유지, 공공연구소 일부 증가, 기업에서 대폭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됨

(단위 : 명, %)

〈표 4-1-26〉

경상남도 연구기관별 연구개발조직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구 개발조직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조직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조직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조직	전국 대비비중	연구 개발조직	전국 대비비중
대학	23	5.56	25	6.08	23	5.58	23	5.50	23	5.61
국공립	10	12.20	12	14.81	11	12.50	11	12.22	11	12.36
사립	13	3.92	13	3.94	12	3.70	12	3.66	12	3.74
공공연구소	25	5.23	29	5.62	32	5.97	32	5.77	33	5.80
국공립	11	9.91	14	10.45	14	11.11	11	9.32	11	8.66
정부출연	8	6.25	9	5.14	12	6.09	9	5.56	10	6.25
병원 및 기타	6	2.51	6	2.90	6	2.82	12	4.36	12	4.27
기업	1,227	4.60	1,446	4.65	1,727	4.74	1,857	4.85	2,131	5.01
정부투자기관	0	0.00	0	0.00	1	2.22	0	0	2	4.08
민간기업	1,227	4.60	1,446	4.66	1,726	4.74	1,857	4.85	2,129	5.01
합계	1,275	4.62	1,500	4.69	1,782	4.77	1,912	4.87	2,187	5.03

주 : 병원 및 기타 항목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기타비영리, 국공립병원, 사립병원이 포함.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각연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주요 R&D 거점 현황

- 기술개발거점으로서 18년 기준 경상남도에는 4개의 선도연구센터(전국 58개)와 2개의 지역혁신센터(전국 57개)를 구축·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됨
-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은 대학 내 우수한 연구인력과 자원을 결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세계적인 연구그룹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선도연구센터는 목적과 연구 분야에 따라 '이공학연구센터(SRC/ERC)'와 기초과학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과학연구센터(MRC), 학제 간 융합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연구센터(NCRC)'와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혁신센터(RIC)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로, 대학의 연구기반과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통한 산학협력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1995년도부터 시행한 R&D 기반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말함
- 지역혁신센터의 경우 경남 지역은 과거 지원혁신센터 지원 수가 총 7곳이었으나 현재는 2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표 4-1-27〉

경상남도
선도연구센터
설치 현황(2018년)

구분	설치대학	선정	센터명	유형
선도연구센터	창원대 (1개 센터)	2011	메카트로닉스 융합 부품 소재 연구센터	ERC
	경상국립대 (2개 센터)	2015	바이오항노화 의과학연구센터	MRC
		2017	산업수요기반 고효율·안전 항공핵심기술 연구센터	ERC
	인제대 (1개 센터)	2018	결핵 정밀 맞춤치료 선도연구센터	MRC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한국연구재단 내부자료).

〈표 4-1-28〉

경상남도
지역혁신센터 현황
(2018년)

구분	주관기관	센터명
지역혁신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수송기계부품 지역혁신센터
	창원대학교	5축-CAM 지역혁신센터(舊 메카트로닉스)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한국RIC협회 홈페이지).

-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경상남도에는 18년 기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 17개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 창업보육센터란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에게 입주공간 제공 및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을 지칭함

〈표 4-1-29〉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B)
현황(2018년)

구분	기관명	센터명	개소일
창업 보육 센터 (B)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재)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2014. 04. 2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01. 06. 29.
	경남대학교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1999. 09. 30.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거창대학 디자인창업보육센터	2000. 12. 30.
	경상남도(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상남도 창업보육센터(GNBI)	2001. 10. 18.
	경상국립대학교	경상대창업보육센터	2000. 04. 20.
	동원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00. 11. 17.
	(재)경남테크노파크	로봇창업보육센터	2015. 05. 13.
	마산대학교	마산대학교 창업지원센터	1999. 12. 14.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창업보육센터	2003. 04. 30.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스창업보육센터	2001. 01. 05.
	영산대학교	영산대학교그린창업보육센터	2000. 02. 10.
	인제대학교	인제대김해창업보육센터	2001. 03. 23.
	창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000. 03. 14.
	창원문성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1999. 11. 10.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998. 12. 01.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2001. 07. 10.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창업보육네트워크시스템 홈페이지).

● 과학문화 하부구조

- 과학관의 경우 공립과학관 14개소와 사립과학관 1개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17년 기준 생활과학교실의 강좌 수는 100개로 집계되어 둘 다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

〈표 4-1-30〉

경상남도 과학관 개소
현황

구분	과학관명	소속
공립	거제조선해양전시관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대첩기념공원	경상남도 거제시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경상남도 거창군
	고성공룡테마과학관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과학교육원	경상남도 교육청
	김해천문대	경상남도 김해시
	양산3D과학체험관	경상남도 양산시
	창원과학체험관	경상남도 창원시
	지리산생태과학관	경상남도 하동군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경상남도 사천시
	통영수산과학관	경상남도 통영시
	함양약초과학관	경상남도 함양군
	의령곤충생태학습관	경상남도 의령군
사립	부경동물원	개인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한국과학관협회 내부자료).

(단위 : 개소)

〈표 4-1-31〉

경상남도
생활과학교실
운영 개소 및 강좌 수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생활과학교실	51	46	60	133	95	100

주 : 2014년까지 운영 개소 수, 2015년부터 강좌 수로 집계.
자료 : 2018 지방과학기술연감(원출처: 한국과학창의재단).

2) 종합진단 및 향후 과제

● 경남의 낮은 연구개발 역량에 대한 제고 방안 필요

- 지역의 연구개발 활동은 그 지역의 과학기술진흥과 더불어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지역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하지만 국내 연구개발 활동의 경우 서울, 경기, 대전에 집중된 구조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경남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구조적 전환이 긴요함

● 연구개발인력 확충 및 인력양성 시스템 개선

- 경남의 연구개발인력이나 연구원의 수는 17개 광역시·도 중 상위권이지만, 연구개발인력을 많이 보유한 서울, 경기, 대전에 비하면 그 격차가 매우 큰 것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 따라서 경남은 연구개발인력의 유인과 확충에 우선하여 주력할 필요가 있음
- 타 광역시·도에 비해 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은 이공계 석·박사 인력 배출로, 지역 내 인력공급의 지속성 측면에서 이공계 분야 인재 유치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편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 연구개발투자 및 저변 확대

- 경남은 연구개발인력도 적지만 연구개발투자도 마찬가지로 정부, 민간 부문 가릴 것 없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 우선으로 연구개발투자를 정량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2017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은 4.55%로 세계 1위지만, 경남은 GRDP 대비 R&D 투자율이 2.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그 괴리가 매우 큼. 따라서 2040년까지 GRDP 대비 R&D 투자율 5%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 수단들이 강구되어야 함
- 한편,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분야는 지역 주력산업 분야와 경남 소재 공공연구소의 특징이 반영된 기계, 전기/전자, 재료 등 산업 기술 개발에 맞춰져 있는 편임.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래 대비를 위해 원천성과 범용성이 높은 기초과학이나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함

●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구기반 대비 우수한 과학문화 인프라

- 경남은 연구개발인력 및 연구개발투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연구개발수행 조직도 많다고 보기 어려움. 이는 상대적으로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수가 적고, 응용·개발연구를 수행하는 민간기업 연구소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데 기인함

- 그렇다 보니 연구개발 성과 측면에서도 논문과 특허의 생산이 비교적 저조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초연구를 전담하는 조직 또는 거점기관 설립과 함께 국내외 민간기업 연구소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함
- 한편, 과학문화 인프라 부분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경남도민들의 과학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역 내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생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과학기술 미래 트렌드

(1) 미래사회 변화와 과학기술 전망

●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경제·사회의 변화

- 미래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치료 등의 혁신기술들이 사회에 확산하면서 많은 변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
 -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들이 보편화되면 경제·산업, 의료·건강, 금융, 교육, 재난·안전관리 등 실생활의 모습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대표적으로 경제·산업에서는 스마트팩토리, 의료·건강에서는 생체조직 프린팅, 금융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교육에서는 가상현실 훈련, 재난안전에서는 스마트 재난관리 등

〈표 4-1-32〉

주요 혁신기술들의 기술확산점

구분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치료		인공지능		초고속 튜브트레인	
	세계	국내	세계	국내	세계	국내	세계	국내	세계	국내
기술확산점	2020년	2024년	2023년	2028년	2024년	2028년	2024년	2029년	2028년	2033년

주 : 기술확산점(Tipping Point)이란 기술이 사회에 확산되는 시점.
 자료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원출처: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

-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산업구조는 물론 고용환경 또한 변화하게 되면서 일자리 환경과 직업 등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
 - 컴퓨팅,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한 업무환경이 구현되고, 고용 형태 또한 일시적인 고용(gig economy)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
 - 기계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 단순 반복 위주의 일자리들은 점차 사라지고 드론 조종사, 인공지능기 제조 전문가, 우주여행 가이드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으로 전망
- 그 외에도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경제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도시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인류사회 난제 심화와 대응기술 개발

- 미래사회에는 저출생·고령화 심화, 지구 생태계 문제 심화, 안전·안보와 관련된 불안요인 증가 등이 주요 인류적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 의학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이 주목받고 있음
- 세계인구는 2040년에 이르러 약 88억명까지 증가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60년에 17.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폭염, 폭설,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한 멸종위기종 증가 등 생물 다양성 파괴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기후·환경기술도 주목받고 있음
-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에너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데 비해 전통 화석연료의 채굴가능량은 한정되어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관련 기술개발이 확대되어가는 추세
- 지역, 국가 간 교류 확대 등으로 먹거리, 감염병 등 일상생활 속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적 갈등 심화로 테러 발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늘어나고 있음

(2) 미래 비전 및 2040년의 미래모습

● 비전과 미래세상 모습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르면,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기여’를 2040년 비전으로 제시함
- 구체적으로 혁신적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풍요로운 세상’, 생활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편리한 세상’,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 걱정이 없는 ‘행복한 세상’,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을 청사진으로 제시함

● 세상 속 주체별 미래모습 및 목표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미래세상 속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기업인, 국민의 모습과 혁신생태계를 구체화하고, 각각 지향하는 모습을 관련 지표를 통해 제시하고 있음
- 먼저 미래의 연구자는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그에 따라, 2040년까지 피인용 상위 1% 논문 비중은 2.0%(05~15년 기준 0.79%),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8.0회(16년 기준 5.6회), 업무시간 중 연구개발 소요시간 70.0%(16년 기준 36.3%)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미래의 기업인은 기업하기 좋은 조건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
 - 그에 따라, 2040년까지 중소기업 기술 수준은 100점 만점에 84점(15년 기준 75.5점),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당 연구원 수는 9.2명(16년 기준 5.6명), 핵심기술 특허 점유율 25%(16년 기준 18%)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미래의 국민은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그에 따라, 2040년까지 건강수명 83.8세(15년 기준 73.2세), 재난재해안전 분야 기술 수준 100점 만점에 90점(16년 기준 73.5점), 과학기술 관심도 57.8점(16년 기준 37.7점) 등을 목표로 설정함
- 미래의 혁신생태계는 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출 것으로 기대
 - 그에 따라 2040년까지 연구원 천명당 산학연 공동특허 건수는 5건(14년 기준 2.3건), 혁신형 창업 비율은 51%(14년 기준 21%), 지자체 총예산 대비 R&D 투자 4.2%(16년 기준 1.07%), 지방 연구개발 인력 비중 42.2%(15년 기준 28.8%) 등을 목표로 설정함

(3) 분야별 과학기술 동향 및 전망⁹⁾

● 기초과학

- 수학은 최근 들어 금융, 바이오, 안전, 교통, IT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과 신기술 개발 등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에 따라, 산업 수학과 수학적 분석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 또한 중요해지고 있음
- 물리학에서는 2차 양자혁명의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임이 예고됨에 따라, 다양한 세부 분야 중에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컴퓨팅 기술의 기반이 되는 양자물질, 양자소재, 양자소자 등에 대한 연구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음
- 화학은 타 분야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학문으로, 국가적, 산업적 요구에 부응하여 인접 학문과의 융·복합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근래에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 등 전 지구적 문제 해결 관련 연구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구과학은 최근 동남권 지진 재해와 신기후변화협약 등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기술 수요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해양과학이나 극지에 대한 기초연구들도 꾸준히 수행되고 있음

● 생명공학·뇌과학

- 생명공학은 최근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유전체 분석기술과 유전자 편집기술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과 만나면서 정밀의료, 정밀농업, 합성생물학 등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뇌과학은 인간 뇌와 관련된 각종 기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뇌질환, 특히 국내에선 치매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음

9) 자료 : 2018 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농림·축산·수산업

- 농업은 전통적인 생명공학 기반에서 IoT, 빅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변혁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에 따른 인수합병이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임업에서는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복원, 미세먼지 대응, 신기후체제 대응 등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추진 중이며, 생명공학 외 ICT 기술 적용도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음
- 축산업에서는 생명공학과 ICT 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과 동물복지향상, 가축 질병 예방과 관리기술, 정밀영양과 사료 안전 관리체계 구축, 축산물 이용성 증진과 안전성 확보기술 관련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수산업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한 자원 평가관리 기술, 저탄소 배출 어선 및 에너지 절감형 어로장비, 양자컴퓨팅을 활용한 기후변화 및 재난예측 기술, 양식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환경변화 내성 품종 및 백신, 고효율 배합사료, 양식 시스템 등의 개발이 어장환경 악화,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수산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임

● 보건의료

-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신약, 그중에서도 디지털 신약 및 전자약의 출현이 새로운 형태의 약품군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나 재생의료도 윤리 문제와 규제 속에서 조금씩 임상시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지구화에 따른 감염병 이슈가 끊임없이 부각됨에 따라, 미생물 연구를 중심으로 예방, 진단, 치료기술 및 관리체계 시스템에 대한 개발도 지속 이루어지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료기기와 정밀의료도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계 등

- 기계 및 자동화(산업용로봇) 분야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공동 생산을 통해 생산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로봇(협동로봇)과 그동안 인간작업자만 수행 가능했던 난도 높은 정밀 조립작업들을 자동화하여 생산단가를 낮추는 로봇(조립로봇)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로봇개발은 물류로봇, 의료로봇, 스마트 홈서비스 로봇, 웨어러블 로봇 등의 분야에서 각각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 모두 공통으로 인공지능과 융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임
- 나노·마이크로 시스템 및 측정 기술은 크게 나노 패턴 형성 기술, 나노 전사 접속 기술, 나노 측정 평가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나노소자의 개발 및 실용화 추진을 통해 미래 전자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분야는 최근 주요국의 환경·안전 규제 강화로 인해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점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자율주행기술 또한 점차 차량에 탑재됨에 따라 센서,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및 투자도 완성차 업체와 IT업체들 사이에서 확대되고 있음
- 조선 분야에서는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고효율 선박시스템 및 관련 기자재에 대한 연구개발투자가 강화되고 있고, 그 외 선박 안전성 향상 기술과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선박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해양플랜트 분야의 경우 시추선(Drill ship), 부유식 생산 저장 하역 설비(FPSO), 부유식 저장·재기화 설비(FSRU), 기타 해저생산플랜트(URF)가 핵심기술 분야로 선정되어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고, 설계엔지니어링 기술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음. 그 외 고부가가치 분야인 모듈 기자재 국산화와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하는 시도도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재료·화공

- 재료 분야에서는 소재별로 다양한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먼저 기능 소재에서는 3D 프린팅 맞춤형 전용 소재 개발과 바이오센서용 기능성 나노소재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임. 구조금속소재에서는 미래형 철강 신소재 및 인공지능 활용 공정기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용 고강도강, 차세대 발전 플랜트용 내환경 내열강, 저원가형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및 설비 시 설용 철강재에 대한 개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세라믹 소재의 경우 AI, 빅데이터, IoT, 로봇, 3D 프린팅 등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소재로 분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투자가 특히 강화되고 있음. 고분자 복합소재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엄격해 지면서 탄소섬유 강화 고분자 복합재(CFRP)가 각광받는 중이며, 전기전도도나 열전도가 좋은 탄소나노튜브, 그래핀 및 나노 탄소소재의 경우 에너지 저장 디바이스의 고에너지 및 고출력 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성능 전극 소재로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임
- 화공 분야는 친환경 공정 분야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자원화 연구, 기존 제올라이트 흡착제보다 성능이 우수한 나노세공 흡착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고부가 화학소재 분야에서는 기존 유기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의 효율 향상, 나노분리막·바나듐 레독스 흐름전지(VRFB)·불소계 고분자소재 기술개발이 진행 중임. 의약 및 바이오화학 분야에서는 질환치료를 위한 신약후보물질 발굴이 지속될 것이고, 약물성 평가시스템 구축, 기존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의 연구, 신종바이러스 대응 솔루션, 그리고 제초제·살충제·살균제에 대한 연구들도 과제로 남아있음. 정밀화학 분야에서는 친환경·경량화 자동차를 위한 플라스틱 소재·부품 소재·접착제·저온 경화형 소재 연구가 지속될 것이고, 고기능 및 친환경의 바이오소재의 공정 최적화 등의 연구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기·전자·정보통신

- 전기 분야에서는 ICT 기반의 스마트변전소 시스템 관련 기술, 친환경·고성능 직류송배전 기술, 고전압·고효율 전기추진 및 전동력 기술, 그래핀 등을 활용한 전기 신소재 기술, 첨단 전기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기술 등에 연구가 한창 진행 중임

- 전자부품 분야를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단순 정보의 저장, 가공, 전달 기능을 넘어 인지 및 판단이라는 지능적 기능이 부여된 지능형 반도체 및 IoT 반도체 개발이 장차 기대되고 있고, 디스플레이의 경우 크게 실감화(고화질), 인간친화(플렉서블), 지능화의 세 가지 트렌드에 따라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유무선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등에서는 대용량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소재/소자/모듈 기술개발이 지속 진행 중이며, 센서와 관련하여 힘(압력), 진동, 변위 등의 물리량 및 가스, 냄새, 수질 등의 화학성분 그리고 인간의 세포, 근육, 신경, 뇌에서 발생하는 생체·바이오정보 등을 감지하는 소재 및 소자 기술도 개발 중임
- 통신·인터넷을 살펴보면, 5G 이후의 새로운 이동통신을 조기에 준비하기 위한 핵심원천기술로써 테라헤르츠 이동통신 기술 및 초고밀도 용량한계 극복 기술을 준비하고 있으며, 광 전달망, 데이터 센터망, 광 액세스망까지 광대역, 초저지연, 지능화를 목표로 하는 테라급 광통신 기술을 개발 중임. IoT의 경우 초기 센싱, 네트워킹, 원격제어 등의 사물연결 중심에서 최근에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과 융합·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센서는 정보 수집·전송뿐만 아니라 전력을 직접 생산하는 하베스팅 기술과 접목되고 있음. 양자정보통신은 양자의 물리적 특성을 ICT에 적용한 차세대 통신인터넷 기술로 지금까지는 양자암호통신, 양자측정 및 양자컴퓨팅 등의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점차 국방 및 금융보안 시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 방송통신융합에서는 먼저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허무는 초실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음. 전파기술에서는 한정되는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효과적인 공급을 위한 전파자원 공동사용 및 효율 향상 연구가 추진될 전망이며, 공급 5G를 넘어 차세대 무선통신 인프라 및 생활전파 센서망 도입을 위한 새로운 전파 통신방식 및 주파수 자원 발굴 등의 기술개발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무인 이동체 및 드론은 정보통신기술 관점에서 IoT를 구성하는 디바이스의 하나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정보보호

- 정보보호의 경우 사람, 사물, 데이터 등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물리-사이버공간의 지능형 정보보호기술이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정보보호기술은 양자컴퓨터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격자, 다변수 방정식, 코드 기반 공개키 암호 등 신규 PQC(Post-Quantum Cryptography) 연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인증기술에서는 사용자 바이오 정보, 행위 패턴, 이용환경을 기반으로 한 인증 기술이 중심이 되어 멀티팩터 인증 기술, 무자각 인증 기술, IoT 인증 플랫폼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고성능 하드웨어 위주의 네트워크 보안 기술에서는 소프트웨어 및 지능 중심의 보안 기술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자가방어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물리보안에서는 생체신호(심박수, 뇌파 등)를 이용한 사용자 인증 기술이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조를 맞추어 널리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형 CCTV는 단순 도메인에서의 이벤트 탐지가 아니라 스마트 시티 내 사회안전을 복합적으로 책임지는 AI 치안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임

- 융합보안 기술에서는 현재 차량의 내외부 통신보안 기술 개발에서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지능형 위협 예측·분석기술, 도로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연계 보안 기술, 차량용 이더넷 기반 차세대 차량 네트워크 보안 기술 및 사고·오동작 원인분석 등의 기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원자력·자원·환경·건설

-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대부분의 국가가 원자력발전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한편 원자력 분야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원전용 기술개발보다는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국민 생활 안전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확대되고 있음
- 자원 분야에서는 꾸준히 저비용 자원개발, 안정성/경제성 확보 등 생존형 기술 확보에 주력해 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ICT 기술을 자원탐사·개발 분야에 융합하여 스마트 자원탐사·개발 기술개발이 급부상하고 있음
- 환경 분야에서는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환경 유해인자 노출·위해 감시 및 피해 예방, 기후변화 대응 및 대기 질 개선, 수질·수생태계 보전, 폐자원의 순환이용 및 에너지화, 국토환경 관리 및 습지생태 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을 목표로 연구가 추진 중임
- 건설 분야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특징이라 할 수 있음. 구체적으로 설계 부문에서 AR·VR을 접목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반 시공 시뮬레이션 및 3차원 설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시공에서는 건설기계의 지능화·자동화 작업이 진행 중임.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센서 기반 데이터 중심의 시설물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거대과학 등

- 우주개발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성 및 위성 정보 활용 기술, 발사체 기술, 우주탐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비용·장기·신뢰성에 바탕을 둔 전통적인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저비용·단기·혁신성에 바탕을 둔 New Space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그에 따라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참여가 확대되면서 민간 기업 간 경쟁으로 생산의 최적화,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새로운 비용 절감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됨
- 녹색기술 분야에서는 화석연료 대체기술과 에너지 효율화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 등과 같은 '탄소 저감 기술', 탄소 포집 및 활용(CCU), C1 가스 리파이너리, 인공광합성 기술 등과 같이 부생가스 및 온실가스로부터 탄소원(CO, CO₂, CH₄)을 포집 및 분리하여 연료나 화학 소재 등을 생산하는 '탄소 자원화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또는 인간 시스템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회복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후변화적응 기술'에 대한 개발 중임
- 해양극지 분야에서는 미래해양자원 기술, 해양청정에너지 기술, 해양환경 기술, 해양생명공학 기술,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 구축,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 기술, 해양안전

및 교통시설 기술, 첨단항만·물류 기술, 대형 연구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근래에는 해상풍력에너지, 양식, 수산물 가공, 항만 고도화, 재료공학, 해저로봇, 센서와 이미지, 자율운전형 선박, 바이오테크와 나노기술 등이 해양극지 연구개발에 있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음

- 핵융합의 경우 미래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EU, 일본 등은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전기생산 실증을 위한 핵융합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중국은 2030년대 중국 핵융합 공학실험로 건설, 2050년대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41년 핵융합발전소 건설 능력 확보를 목표로 연구개발 중임
- 중이온, 양성자 등 가속기 분야에서는 지속해서 가속기의 안정적인 가동과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가속기 활용도 제고를 통해 기초과학 및 전략과학기술 분야에서 학술적 진보와 산업적 파급효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화 분야

- 문화기술(CT)은 디지털콘텐츠 기술과 그 궤를 같이하며, 실감형 영상콘텐츠 기술, 인터랙션 콘텐츠 기술, 감성 콘텐츠 기술로 구분되어 연구가 진행 중임
- 실감형 영상 콘텐츠 기술에서는 극사실적 영상 콘텐츠 CG 기술과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해상도와 정밀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계속 진행될 전망이며, 360도/다면 영상 획득을 위한 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진행될 예정이고, VR, 무인자동차, 드론과의 응용이나 관련 SW 개발도 추진되고 있음
- 인터랙션 콘텐츠 기술에서는 증강/혼합현실 관련 디스플레이 개발과 임의의 공간을 실시간으로 3D 모델링하고 가상공간을 정합하는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고, 가상현실 분야에선 다자간 원격 상호작용기술과 콘텐츠가 연동되어 다양한 형태로 응용·개발될 전망이다. 더욱이 가상현실의 몰입감 극대화를 위해 영상 출력기술과 3D 실감 음향 기술도 덩달아 빠르게 발전 중임. NUI/NUX¹⁰⁾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전망이며, 최근에는 주로 사용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지속 개발 중에 있음
- 감성 콘텐츠 기술의 경우 시청각 위주의 가상현실 경험에서 오감 경험이 동반된 초현실 경험으로 진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오감 정보 취득을 위한 센서기술 및 데이터 디지털화에 대한 기술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생체신호 분석을 응용한 콘텐츠는 문화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노령인과 같은 운동능력이 저하된 개인의 신체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측정표준·측정과학기술

- 측정과학기술 분야의 동향은 첨단산업 측정을 위해 수소 융복합스테이션 신뢰성 측정기술, 차세대 초박막 공정용 측정기술, 차세대 우주용 광학부품 성능평가 기술 등의 연구를 통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측정요소기술을 개발 중임

10) NUI(Natural User Interface)/NUX(Natural User Experience): 손, 몸, 얼굴, 음성 등 신체 일부로 모든 인터페이스를 대신하는 개념.

- 그리고 미세먼지 발생원 추적기술, 지구온난화 대응 고층대기 측정기술, 대형시설물 안전측정기술, 지진 정밀 측정기술 등 국가 사회적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측정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나노 기반 융합측정기술, 차세대 첨단 의료 측정플랫폼 개발, 정밀 보건의료 융합측정기술, 극한환경 물성측정기술, 에너지 소재의 에너지 변환효율 측정 기술 등 미래연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첨단 측정기술도 개발 중임
- 최근에는 양자 기술 실용화를 위한 양자 상태 생성·제어·검출기술, 양자 물성 정밀측정 신뢰성 향상기술 연구와 첨단측정 장비개발을 위한 광전자 융복합 측정기술, 초박막 공정/측정 장비 기술, 대영역/복합 자유곡면 3D 형상 측정기술, 차세대 생체자기 공명 측정 기술 등을 연구개발 중임

● 인공지능·빅데이터

-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개발 동향은 기업과 연구소, 학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연구와 개발도 구분하기 어려우며, 그 추세도 국내와 국외 구분이 거의 없을 만큼 동기화되어 있음. 특히, 음성인식과 영상인식 등 감각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응용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어처리, 상황이해, 유연한 판단 및 계획 등 고차인지기능에 대한 연구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 빅데이터 기술개발 동향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빅데이터 인프라를 고성능 컴퓨팅 기술과 결합하여 빅데이터 처리 고속화 등의 플랫폼 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며, 빅데이터 품질 측정 및 관리모델 구축을 위해 대용량 실시간 데이터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자동으로 검출, 분류하는 기술을 개발 중임. 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금융 리스크나 시장 동향 예측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요구 증가로 예측·분석 기술개발 및 시장 적용 중이며, 향후에는 이종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고속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개발과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고속화 기술개발이 확대될 전망이다

2) 정부 정책의 방향

(1) 부처별 지역 R&D 관련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존의 중앙 주도적 지역 육성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자생적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자기 주도적 혁신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17개 시·도의 R&D 싱크탱크 육성과 강소특구 지정방식의 도입, 신기술 테스트 베드 추진 등을 제시함
- 지역 R&D 싱크탱크 육성은 그동안 중앙 주도의 R&D 기획으로 각 지역의 특성 및 장점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차후 17개 연구개발지원단을 지역의 R&D 발굴·기획·추진·평가 등 전 주기적 활동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임
- 새로이 도입된 강소특구는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의미하며, 연구기관의 범위에 R&D 수행 공기업과 연구중심 병원을 추가하였다는 점에 기존 연구개발특구와 차이가 있음. 경남은 2019년에 창원, 김해, 진주 지역이 강소특구로 선정된 상태임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 혁신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한 혁신프로젝트 수행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임. 경남의 경우 진주 혁신도시 일대에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그리고 「중견기업 비전 2280」의 세부이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는 2022년까지 매출액 1조원 이상에 혁신역량이 우수한 중견기업 80개를 육성하고 중견기업의 수도 5,50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그에 따라 지역거점 중견기업 50개 육성 및 지역 채용을 통해 초기 중견기업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 인재 취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창업 분야 일자리 창출 강화, 성과공유 확산 등을 통한 소득 증대, 소상공인·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 정책 및 업무혁신을 추진하며, 지역과학기술 및 지역 혁신과 관련된 정책을 포괄하고 있음
-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 활성화가 대표적이며, 이는 수도권에 지역 혁신주체(지자체, 대학, 연구소 등)들이 자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창업 활성화 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정부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생태계의 발전을 지원하는 계획을 의미함
- 또한, 규제 샌드박스형 지역혁신성장특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신기술 등에 대한 규제 없이 실증과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특례가 주어짐과 함께 세제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짐
- 이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며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개편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개방성, 다양성, 자율성의 3대 원칙하에 혁신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경남의 경우 지능형 기계와 항노화를 특화 분야로 두산중공업과 협력파트너를 맺고 있으며, 장차 지역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넓혀갈 예정임

● 교육부

- 교육부는 혁신, 미래, 도전, 책임, 소통의 5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주요 업무를 추진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기여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문·이과 구분 없이 고1부터 3년간 통합과학이라는 공통과목을 학습하도록 하며, 중학교에서는 SW 교육이 필수가 되었음. 또한 지역사회 스타트업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이나 중앙·지역 창업체험센터 지원 확대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업체험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을 지원하고 있음
- 지방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의 허브로서 지방대학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의 일환으로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은 지방대학-지자체-

공공기관-산업계 간 연계·협력 컨소시엄을 구축하도록 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음

(2)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경남도의 정책 방향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지역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라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지역이 주도적으로 R&D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R&D 전주기 시스템(투자-기획-평가 등) 기반을 구축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조력자로 전환
- 둘째, 수도권 등에 편중된 과학기술자원을 지역에 배분·효율화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주체들에 의한 자생적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유도
- 셋째, 단순 기술개발을 넘어 혁신주체 간 연계 및 고도화를 통한 지역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음

●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경남도는 '4차 산업혁명 주도형 기술혁신으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 경남 실현'이라는 비전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제5차 경상남도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함
- 그에 따라, '미래 과학기술혁신 R&D 전략 거버넌스 구축',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융복합으로 경남전략산업 세계 경쟁력 제고', '기초 원천기술개발로 소재 강도 경남 실현', '과학기술기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으로 전략산업 고도화 실현', '기초과학육성, 과학인력양성 등 과학문화 저변 확산'의 5대 목표를 설정
- 세부 추진전략은 과학기술진흥 거버넌스 확립 및 거점기관 설립,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R&D 강화, 기초과학 연구기반 확충 및 응용·애로기술 기획 강화, 과학기술인력 양성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강화, 도내 과학 전인교육 강화 및 과학문화 확산으로 구성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기술혁신 중심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과학 경남 실현

- 지역 R&D 역량 강화를 통해 저부가가치 제조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혁신 중심으로 산업구조 전환

- 기초과학 육성, 과학인력양성, 과학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경남도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도내 과학문화에 대한 저변 확산

2) 추진전략

● 과학기술 부문 핵심지표

〈표 4-1-33〉

과학기술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GRDP 대비 R&D 투자율	2.68%	3.5%	5.0%
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	6.5명	10명	15명
R-COSTI 전국순위	15위	10위	5위

- 과학기술 관련 R&D 투자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추진
- 경남도 R&D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및 거버넌스 확립
- 과학기술 기반 지역 문제 해결 전문 연구기관 설립 추진
- 기초과학 인재 육성 및 조직 유치를 통한 도내 기초과학 저변 강화
- 과학문화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의 대중화

4. 추진시책

(1) R&D 투자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 배경

- 앞선 현황분석에 따르면, 경남의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구조는 지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오랜 기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임
- 특히, 서울, 경기, 대전 등의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지역과 비교할 경우 그 격차는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됨
- 이처럼 경남은 연구개발을 수행할 인력도 적고 절대적인 투입 규모도 적다 보니, 결과적으로 논문, 특허 등의 연구개발 성과 측면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음
- 따라서 경남의 경우 당장은 연구개발투자의 정량적인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개발인력의 유인과 확충에 먼저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과제

- R&D 투자 확대를 향한 구체적 목표 설정
 -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고려하기에 앞서 대외적으로 2040년 목표를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은 2017년 기준 4.55%로 세계 1위지만 경남의 GRDP 대비 R&D 투자율은 2.2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2040년까지 경남의 GRDP 대비 R&D 투자율 5% 달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필요함
- 즉, 이러한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바로미터로 삼은 다음 지역 R&D 투자 확대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경남도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 확보**
 - 2017년 기준 경남의 과학기술 관련 지방예산은 2,36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에 불과한 수준으로, 당장은 과학기술 관련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해나가는 것이 경남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첫 번째 과제임
 - 아울러 경남도 과학기술 예산확보를 위해 지역 실수요에 맞는 R&D 관련 사업들을 가능한 한 많이 발굴·추진하고, 향후 20년을 목표로 장기적인 계획과 그에 준하는 투입예산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R&D 기업 유치에 따른 민간 부문 투자 확대**
 - 경남도내 지역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세제 지원, 금융 지원, 공공구매, 인력 교육, 기술개발 자문 및 인증 지원 등 제도적 지원책을 아낌없이 마련해야 함
 - 경남 주력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도 국내외 해외 가릴 것 없이 기업연구소 유치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2) 지역 거버넌스 확립 및 R&D 전주기 관리체계 정비

● 배경

- 국가에 이어 지역사회 또한 복잡다기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학기술자 외 여러 전문가와 협의 및 합의를 거쳐 도출된 과학기술 거버넌스는 필수임. 이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다가올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그뿐만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R&D 사업 추진을 통해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이에 R&D 예산 및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를 담당할 지역 R&D 관리 전문기관 설립이 지속 요구되고 있음

● 세부 추진과제

- **경남 과학기술정책 협의체의 기능 강화**
 - 현재 경남도는 경남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과학기술정책 협의체로써 운영 중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강함
 - 이에 먼저 그 위원장을 경제부지사에서 도지사로의 격상함으로써 협의체의 도내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 내 연구개발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연계 강화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적 지원 체계를 구축이 필요함
 - 더 나아가 협의회로 하여금 경남도의 R&D 관련 사업들에 대한 심의나 의결 기능을 강화하고, 도내 R&D 조정 기능은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재설계가 필요함

- 경남 R&D 전담 관리기관 설립

- 경남은 지역 R&D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에 의존이 높고 지역주도로 R&D를 기획·관리하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역 R&D 사업의 기획·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R&D의 기획, 관리, 평가, 환류에 이르는 지역 R&D 혁신생태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R&D 관리 전담기관 설립이 그 출발선이라 할 수 있음

(3) 기초과학 인재 육성 및 조직 유치를 통한 도내 기초과학 저변 강화

● 배경

- 기초과학은 단순 지적 호기심 해결을 넘어 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하고, 기존 문제 해결 방식에서도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큼
- 하지만 그간 경남의 연구개발 동향은 산업과 응용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어온 까닭에, 경제성장이 한계점에 달하여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원천기술의 부재와 투입 요소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생산되는 부가가치도 나날이 감소하는 중임
- 특히, 경남의 문제는 다른 지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초과학에 소홀하여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생태계 환경조차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기초과학 인재 육성과 조직 유치 등을 통하여 도내 기초과학에 대한 저변을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음

● 세부 추진과제

- 기초과학 인재 양성 지원 확대

- 경남지역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서 시점별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 인재에 대한 수요를 먼저 조사·예측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지역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기초과학 인재육성·공급하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인재 양성 과정에서 경남도는 교육 외 필요한 제반 사항들 즉, 주거·학술·생활비 지원 등을 검토하고 교육기관들은 연구환경 조성 및 교육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는 주체별 역할 분담이 필요함
- 아울러 도내 기초과학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연구예산 및 사업을 편성하고 전문관리기관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이들이 전공별 특성 및 미션에 부합하는 도전적·창의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 양성된 기초과학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외부의 우수 인재들을 끌어들이려면 도내에 기초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필요하나, 기초과학 연구기관을 새로이 설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함

- 대안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선도연구센터를 도내 대학에 최대한 유치하여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선도연구센터 유치와 관련하여 지역대학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도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은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장차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여 기초과학에서의 분야별 연구가 진행될 예정임
- 그러나 아직 경남에는 한 개의 연구단조차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경남 내 1개 이상의 연구단 유치를 지원하여 지역 과학기술 발전의 거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

(4) 과학문화 기반 조성 및 과학기술의 대중화

● 배경

- 과학기술은 지금까지 경제발전만을 위한 도구로의 인식과 함께 전문가들만의 소유물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일반 시민들은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나 정책 이슈 등에 대해 참여가 배제되어왔음
- 하지만,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이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단 과학기술자들뿐만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과학에 대한 관심과 관련 이슈들에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져야만 가능함
- 따라서 다양한 과학문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도내에 과학기술의 대중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도민들도 일상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 추진과제

- 도내 과학문화 공간시설 보강 및 문화콘텐츠 결합 지원
 - 먼저 물적 인프라 부문에서는 현재 대도시 중심의 과학문화 인프라로부터 소외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시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으며, 고정 수요 확보가 어려운 일부 지역들의 경우 이동식 과학문화 체험 시설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산재해있는 과학문화 인프라는 물론 지역문화, 관광, 예술, 공연 등과도 연계된 융합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도 필요함
- 과학문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
 - 과학 융합강연자¹¹⁾, 과학 퍼포머¹²⁾, 과학저술가, 과학 웹툰 작가 등 과학기술의 이해 및 소통을 담당하는 과학문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내 소통과 공유의 장을 확대하여 배출된 인력에 대한 일자리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구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함께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과학 대중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11) 최신 과학 내용을 소재로 대중과 창의적인 소통을 하는 강연자.

12) 과학기술을 예술과 접목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자.

제5절
산업단지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산업시설용지 공급현황

- 경상남도의 산업단지 수는 2010년 149개에서 2019년 206개로 57개(국가 2개, 일반 53개, 농공 2개) 증가하였으며, 지정면적은 2010년 116,977천㎡에서 2019년 136,678천㎡로 19,701천㎡ 증가함
- 2019년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 지정면적은 전국의 9.6%를 차지하며, 산업시설용지(분양 대상면적)는 전국의 11.4%로 2010년에 비해 10,509천㎡ 증가한 78,405천㎡로 나타남

(단위 : 개소, 천㎡, %)

〈표 4-1-34〉

전국 및 경상남도
산업시설용지 현황

구분	유형	단지 수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현황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률
전국	계	1,220	1,426,114	687,198	584,578	561,830	22,748	3.9
	국가산업단지	47	806,020	299,338	267,962	261,734	6,228	2.3
	일반산업단지	673	535,691	326,050	258,840	244,986	13,854	5.3
	도시첨단산업단지	28	7,842	3,728	1,700	1,346	354	20.8
	농공단지	472	76,561	58,082	56,076	53,764	2,312	4.1
경남	계	206	136,678	78,405	61,860	59,827	2,033	3.3
	국가산업단지	8	61,088	30,741	27,403	27,403	-	-
	일반산업단지	116	63,564	38,575	25,478	23,567	1,911	7.5
	도시첨단산업단지	1	145	83	83	83	-	-
	농공단지	81	11,881	9,006	8,896	8,774	122	1.5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시도별 산업시설용지 분양현황

- 최근 시·도의 연도별 산업단지 지정계획 수립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입주수요가 확보된 경우에만 반영하는 등의 수급관리를 강화하면서 산업단지에 대한 신규 지정면적은 2010년 5,016천㎡에서 2019년 340천㎡로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함

(단위 : 개, 천㎡)

〈표 4-1-35〉

경상남도 산업단지
신규 지정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산업단지 수	23	11	9	12	14	11	7	10	3	2
산업시설용지면적	5,016	811	1,966	1,596	2,274	2,028	625	4,769	193	340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산업(농공)단지 신규지정단지 등록현황(각연도)

- 2019년 말 기준 도내 시군별 산업단지 지정면적 비율은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창원시(33.4%)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거제시(10.4%), 김해시(8.3%) 순으로 나타남

- 창원시, 거제시, 김해시의 비중(52.1%)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간 편중이 심하며, 기계산업 분야인 제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주요 업종 위기가 지역 산업 위기로 직결되는 구조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창원시(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2년간(18~19년) 지정하여 위기 지역의 경제 활력 및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산업시설용지의 개발면적은 창원시가 전체의 32.4%를 차지하며, 이어서 거제시(11.1%), 함안군(8.2%), 김해시(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도내 산업시설용지 분양률은 96.7%로 하동군(28.5%)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분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공급 가능한 산업단지 면적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단위 : 개, 천㎡, %)

〈표 4-1-36〉

경상남도 시군별
산업시설용지 현황

구분	단지 수	지정면적	산업시설용지 현황					
			비율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미분양률
경남	206	136,678	100.0	78,405	61,860	59,827	2,033	3.3
창원시	18	45,617	33.4	21,864	20,050	20,050	-	-
진주시	12	7,604	5.6	4,298	3,717	3,194	523	14.1
통영시	5	6,895	5.0	5,058	3,057	3,057	-	-
사천시	17	8,237	6.0	5,668	4,025	4,002	23	0.6
김해시	30	11,374	8.3	6,608	4,513	4,270	243	5.4
밀양시	13	5,694	4.2	3,600	2,480	2,480	-	-
거제시	8	14,261	10.4	7,426	6,884	6,884	-	-
양산시	14	8,072	5.9	4,807	3,689	3,668	21	0.6
의령군	6	1,262	1.0	933	768	768	-	-
함안군	26	8,552	6.3	5,677	5,101	5,039	62	1.2
창녕군	11	3,994	2.9	2,610	1,608	1,608	-	-
고성군	12	2,849	2.1	1,901	1,720	1,585	135	7.8
남해군	1	54	-	43	43	43	-	-
하동군	6	7,409	5.4	4,705	1,087	310	777	71.5
산청군	7	883	0.7	637	637	543	94	14.8
함양군	9	1,832	1.3	1,090	1,001	904	97	9.7
거창군	8	1,646	1.2	1,115	1,115	1,057	58	5.2
합천군	3	443	0.3	365	365	365	-	-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

- 2019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계획입지 비율은 54.6%(52,138천㎡)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개별입지 비율보다 9~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도내 계획입지 면적은 2010년 38,795천㎡에서 2019년 52,138천㎡로 13,342천㎡ 증가하였으며, 공장용지에 대한 계획적 공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 %)

〈표 4-1-37〉

전국 및 경상남도 개별
및 계획입지 공급현황

구분	2010년			2015년			2019년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전국 (비율)	666,213 (100.0)	342,188 (51.4)	324,026 (48.6)	793,008 (100.0)	393,052 (49.6)	399,956 (50.4)	864,553 (100.0)	414,777 (48.0)	449,776 (52.0)
경남 (비율)	76,007 (100.0)	37,210 (49.0)	38,796 (51.0)	91,432 (100.0)	41,973 (45.9)	49,459 (54.1)	95,490 (100.0)	43,352 (45.4)	52,138 (54.6)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팩토리온(www.femis.go.kr).

- 2019년 말 기준 도내 산업단지의 개별입지 면적은 43,352천㎡로 2010년 37,210천㎡에서 6,142천㎡ 증가한 수치이며, 공장 수는 2010년 10,124개에서 2019년 13,909개로 3,785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 개별입지 면적 비중은 김해시가 34.3%(14,883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함안군 13.8%(5,996천㎡), 양산시 12.7%(5,507천㎡), 창원시 8.1%(3,490천㎡)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천㎡)

〈표 4-1-38〉

경상남도 시군별
개별입지 공급현황

구분	2010년				2019년			
	공장 수	공장 비율	용지면적	면적 비율	공장 수	공장 비율	용지면적	면적 비율
경남	10,124	100.0	37,210	100.0	13,909	100.0	43,352	100.0
창원시	1,327	13.1	3,107	8.3	1,875	13.5	3,490	8.1
진주시	298	2.9	864	2.3	471	3.4	1,084	2.5
통영시	142	1.4	509	1.4	146	1.0	521	1.2
사천시	284	2.8	1,197	3.2	523	3.8	1,581	3.6
김해시	4,657	46.0	13,668	36.7	5,825	41.9	14,883	34.3
밀양시	215	2.1	1,245	3.4	489	3.5	1,809	4.2
거제시	127	1.3	1,145	3.1	123	0.9	979	2.3
양산시	1,216	12.0	4,527	12.2	1,800	12.9	5,507	12.7
의령군	62	0.6	466	1.3	105	0.8	657	1.5
함안군	930	9.2	4,447	12.0	1,480	10.6	5,996	13.8
창녕군	285	2.8	1,952	5.2	402	2.9	2,914	6.7
고성군	114	1.1	1,834	4.9	152	1.1	1,527	3.5
남해군	46	0.5	119	0.3	52	0.4	127	0.3
하동군	95	0.9	479	1.3	129	0.9	545	1.3
산청군	76	0.8	438	1.2	90	0.6	522	1.2
함양군	87	0.9	487	1.3	87	0.6	513	1.2
거창군	78	0.8	340	0.9	69	0.5	337	0.8
합천군	85	0.8	386	1.0	91	0.7	360	0.8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팩토리온(www.femis.go.kr).

- 2019년 말 기준 경상남도 내 착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산업단지 수는 57개로 전체 산업단지 수(290개)의 27.7%를 차지하며, 전국 노후산업단지 수(445개)의 12.8%를 차지함
- 국가산업단지 경우 대부분 1970년대 개발된 산업단지로서 시설의 노후화 및 지원기능 등이 미약하여 산업단지로서 경쟁력 저하되어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발달 등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위 : 개, 천㎡)

표 4-1-39

전국 및 경상남도 노후산업단지 현황

구분	유형	단지 수	지정면적	노후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현황				
				단지 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면적
전국	계	1,220	1,426,114	445	929,457	745,150	383,288	369,116
	국가산업단지	47	806,020	34	734,364	552,586	249,037	235,196
	일반산업단지	673	535,691	121	149,832	147,612	97,947	97,651
	도시첨단산업단지	28	7,842	-	-	-	-	-
	농공단지	472	76,561	290	45,261	44,952	36,304	36,269
경남	계	206	136,678	57	75,553	74996	41273	40245
	국가산업단지	8	61,088	6	57,793	57703	28,668	27,660
	일반산업단지	116	63,564	7	11,432	11049	7,486	7,486
	도시첨단산업단지	1	145	-	-	-	-	-
	농공단지	81	11,880	44	6,328	6244	5,099	5,099

주 : 2019년 11월 기준
 자료 : 산업입지정보시스템(www.industryland.or.kr), 노후산업단지 현황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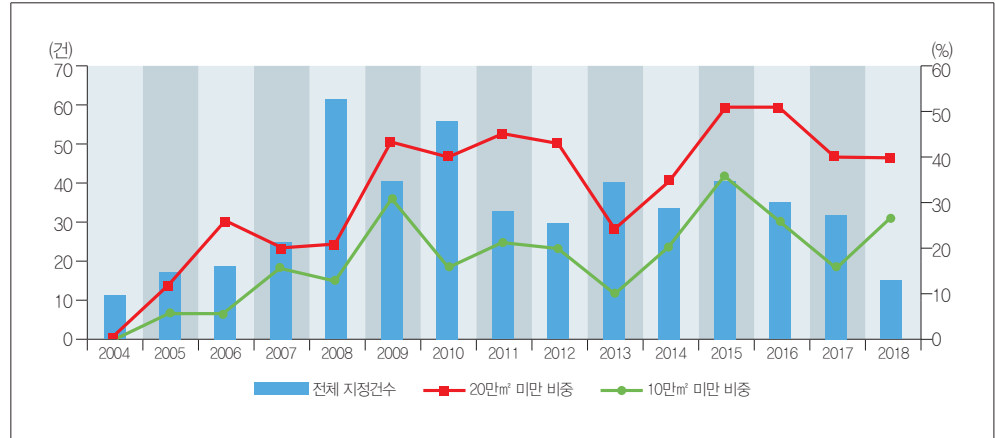
1) 미래 트렌드

●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증가**

- 2008년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산업단지 지정은 급증하였으며,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산업입지 공급에서 지자체·민간 주도의 소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변화하고 있음
- 최근 단순집적에서 연결형 스마트 공간으로 변모하고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융복합의 신산업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시에 요구되는 소규모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10〉

소규모 산업단지 지정 비중



주 : 전국 일반산업단지 기준.
 자료 : 정성국(2019), 동남권 산업단지 현황 및 발전 방안, BNK 경제인사이트.

● 신산업입지에 대한 수요 발생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서 도심 내 입지 등 산업입지 형태의 전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공유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산업 입지형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함

〈표 4-1-40〉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형 산업입지

구분	19~20세기 초반	20세기 후반	21세기
패러다임	산업혁명(제조업2.0)	정보화혁명(제조업3.0)	디지털혁명(제조업4.0)
생산방식	대량 생산	다품종 소량 생산	맞춤형 생산
기업유형	대기업 주도형	제조업+소프트웨어	협업형 소기업
입지방식	생산시설	생산+지원시설	생산+생활+문화 등 복합시설 (도심 입지 선호)
인재상	숙련 기술자	지식 근로자	창의인재
공간유형	물리적 공간 (하드웨어)	디지털 공간 (소프트웨어)	물리적 공간+클라우드 공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자료 : 장철순(2017),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산업입지 공급방안, 국토연구원.

- 산업단지 내 입주 기능의 복합화는 융·복합적 산업발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며, 산업단지는 제조업을 위한 '부지'에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변모할 것으로 전망됨(국토연구원, 2018)
- 최근에는 입주업종의 유연화를 위해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일정 구역을 지정하고 입주 제한 규제를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을 시범 도입하는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 도시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표 4-1-41〉

산업단지 입주 업종
네거티브 化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 수 제조업(25종), 지식산업(27종), 정보통신산업(5종), 기타(12종)로 한정 → 수 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 불가 예1) 드론제조업은 입주 가능하나, 연계서비스업(체력·교육, 항공촬영 등)은 불가 예2) 전자상거래업 입주 불가로 산업시설구역 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에 대해 업종 제한을 면제하는 '네거티브 존' 도입 → 단계적 확대(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 '19.9월) * 산업시설용지 내 일정면적(예: 30% 이내) 또는 복합용지(산업·지원·상업시설 등 복합입주) 등 부작용(제조업체 입지난 가중, 지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범도입 후 단계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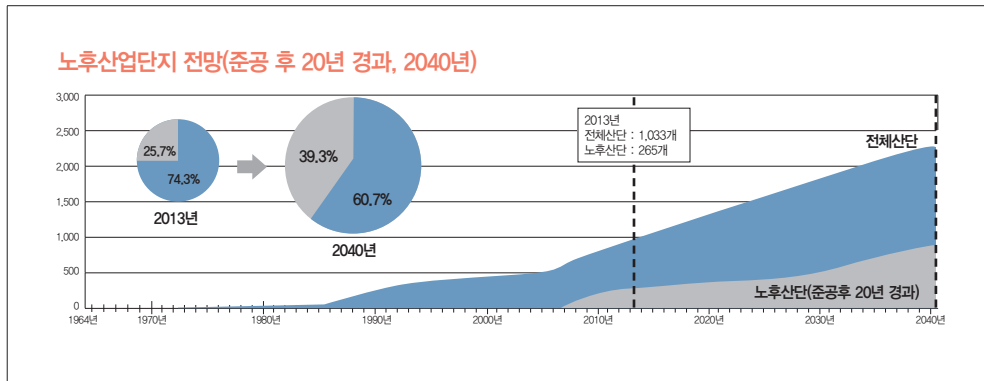
자료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19.4.18), 네거티브 규제 전환, 본격적으로 확산합니다.

● 기존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활성화

- 1970~1980년대 산업화·도시화시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산업단지 등 국가기반 인프라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국가 혁신성장 지체와 국민안전 위협이 우려되며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2040년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단지 중 약 40%가 노후산업단지로서 미래 국가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대한민국정부, 2019)
- 저성장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재정투자 여력이 감소하면서 신규 인프라 건설 등에 대한 투자보다는 기존시설에 대한 재생, 유지관리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1-11〉

2040년 산업단지
노후화 전망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 공급 계획·개발 요구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증가, 에너지·자원 부족, 온실가스 규제강화 등 환경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향후 산업활동 공간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입지공급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산업계 환경오염 물질 80%가 주요 산업단지(20개)에서 배출(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19)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산업단지 수급관리 마련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산업단지의 지속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도별 산업입지 수급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입지의 수요 파악 및 적정 공급량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이에 경상남도는 ICT 융합에 따른 기술혁신 가속화와 정보화 진전 등 스마트 산업으로 급변하는 산업입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을 수립함
- 입지 수급상의 불균형 방지 및 입지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기업의 수요가 반영된 공급계획 마련으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를 공급할 계획임

〈표 4-1-42〉

경상남도 산업용지
공급계획

구분	내용
공급지역	경상남도 18개 시·군
목표연도	2025년
산업입지 공급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공급면적(2015년 12월 말) : 130,768km² ○ 산업입지 총수요면적(2025년까지) : 최소 173,032km² ~ 최대 194,519km² - 산업입지 총수요면적(2016~2025년) : 최소 42,264km² ~ 최대 63,752km² ○ 계획입지 수요면적(2016~2025년) : 최소 23,126km² ~ 최대 35,159km² - 계획입지 목표 비율 : 58.5% ○ 계획입지 공급면적(2016~2025년) : 최소 21,801km² ~ 최대 36,468km² ○ 연간 계획입지 수요면적 : 2,313km²

자료 : 경상남도 고시(2019.1.17), 경상남도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 고시.

- 경상남도는 산업용지의 수급 안정을 위해 14개 산업단지(산업용지면적 4,000천m²)를 신규로 지정하였으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유치될 예정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12.23)

〈표 4-1-43〉
2020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구분	단지명	지정계획면적 (천㎡)	산업용지면적 (천㎡)	사업시행자
전국	85개소	42,684	27,089	-
경남	13개소	6,723	4,000	-
창원시	평성 일반산업단지	697	277	평성인더스트리아(주)
	덕산 일반산업단지	251	146	덕산일반산업단지(주)
	가주 일반산업단지	203	115	(주)세주 외 2개사
사천시	웅당 일반산업단지	312	259	사천시
	사천서부 일반산업단지	388	280	사천시
	송포 일반산업단지	937	446	사천시
김해시	제2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959	694	(주)김해테크노밸리
	하계 일반산업단지	264	205	삼영산업(주)외 2개사
	주촌 일반산업단지	193	120	(주)약동산업외 3개사
의령군	부림 일반산업단지	352	229	의령군
함안군	군북 일반산업단지	803	505	경남개발공사
고성군	내곡 일반산업단지	372	135	고성군, NH
합천군	서부 일반산업단지	992	589	합천군, 경남개발공사

자료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19.12.23),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 창출 이끈다.

● 노후산업단지의 재생 및 구조고도화 추진

- 창원국가산단 · 진주상평일반산단(14년), 양산일반산단(15년) 등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위한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되어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공간재편 등 산업입지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기존 노후산업단지 재생은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앞으로도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창업기업이나 첨단소기업의 도시지역 내 입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류승한, 2018)

●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확산

- 산업단지 노후화, 제조혁신 필요성, 친환경 · 에너지 문제 해결, 산업 활력 제고, 일자리 문제, ICT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단지의 스마트 기술 적용 등 산업단지의 혁신 창출을 견인할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 산업단지가 부각되고 있음
-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 · 전자 등 주력업종 특화, 풍부한 스마트 혁신기반 및 지자체의 높은 의지 등 산업단지 스마트화의 최적지인 것으로 평가되어 새로운 개념의 국가사업인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19년 2월)됨
-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는 제조혁신, 미래형 산단 조성을 위해 한 해 국비 총 2천억원 이상 투자되는 메가 프로젝트로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인프라 조성 등의 3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추진될 예정임

- * 19년 2개(경남 창원, 경기 반월·시화) 선도 산단으로 우선 선정·추진, 22년까지 10개 조성 목표
-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 업종별 맞춤형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계획임
- * 정부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양적 확대(22년까지 2,000개 구축)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산업단지 부문 핵심지표

〈표 4-1-44〉
산업단지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계획입지 면적 (개별입지→계획입지 유도)	52km ²	60km ²	65km ²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노후산단 증가 대응)	3개 지구	6개 지구	9개 지구
스마트산단 (산단 규모 대, 신규 산단 우선)	1개소	5개소	10개소

(1)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구축

● 지역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확대

- 지역별 환경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을 통하여 산업 공간 격차 해소 등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 융·복합시대에 대응하는 복합형 산업 공간 조성

- 생산+창업+R&D 연구센터+주거+문화·상업시설 등의 집적화로 일하고 싶은 편리한 공간 조성

● 스마트산단과 연계된 거점-연계 산단 구축 확대

- 창원국가산업단지 거점으로 주요 연계 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로 구축 확대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2)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 노후산업단지과 주변 지역의 통합재생 활성화

- 노후산업단지과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생활 공감형 재생사업 추진

●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신산업입지 공급

- 산업단지 내 휴폐업 공장 등의 리모델링을 통해 산업단지별 유망 분야 중심으로 창업기업에 저렴한 시세로 공급
- 휴폐업 공공 공간이나 유휴부지 및 국공유지 등을 매입·개발하여 공유형 공간의 임대 형태로 공급

(3)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업입지 공급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 및 환경갈등 최소화를 위한 주민참여 협의체 구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산업입지 공급

●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완충 녹지공간 보완

- 산업단지 내외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신규 숲 조성 또는 기존 완충 녹지공간 보완 추진

●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 공급체계 구축

- 개별입지에 대한 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를 공급

4. 추진시책

1) 미래형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환경 구축

(1)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확대

● 수요자 중심의 산업용지 개발·공급

- 입주기업과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한 주문형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등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용지 공급 추진으로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신산업의 부상에 따른 다양한 산업 수요에 대응
- 지역별 환경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으로 지역 간 산업 공간 격차 해소 및 경쟁력 격차 완화 등 균형 있는 개발을 도모

● 산업입지 수요 변화에 대응한 유연한 공급계획 수립

- 산업단지로 지정된 후 수요가 없거나 토지수용 등의 문제로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지정 해제 등을 고려하는 등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공급 시기 조정 필요

- 경상남도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기반으로 한 적정공급 관리 등 지역 특성과 산업용지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등 수급계획의 안정화를 도모
- 산업단지 수요는 감소 추세지만 낙후지역인 경남 서부지역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속적인 산업단지 공급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2) 융·복합시대에 대응한 미래형 산업 공간 조성

● 규제 완화를 통한 미래형 산업 융·복합 공간 조성

- 산업단지 내 생산(지식산업센터), 창업(창업보육센터), 연구개발, 주거, 문화, 상업시설 등의 집적화를 통한 일하기 좋은 편리한 공간 조성으로 청년근로자 유입 및 정착 유도
- 중소연구개발 특구 등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특화산업 공간 조성 및 규제자유특구지정 추진·확대 등 원활한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 산업경쟁력 확보

● 산학연계형 산업 공간 공급

- 대학교 내 유휴부지·건물, 대학·연구기관의 주변 지역 미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연구 및 창업공간 제공

2)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1)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혁신성장 거점 조성

- 노후화된 산업단지 내부의 휴폐업부지 및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시설, 창업·중소기업 지원시설, 행복주택, 문화·레저시설 등이 집적화된 고밀도 복합개발로 지역 산업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
- 창원국가산업단지 등 임대수요가 높은 산업단지의 휴폐업 공장 및 부지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산업단지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한 창업기업에 저렴한 시세로 임대공간 공급

(2) 노후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의 통합재생 추진

- 노후산업단지의 열악한 기반시설과 근로·정주 여건으로 인해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연계·보완하여 노후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하는 생활 공감형 재생사업 추진

(3) 스마트 산업단지로 전환 유도

- 스마트 선도산업단지로 지정된 창원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주요 연계 산업단지를 스마트산업단지로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인프라를 갖춘 산업단지의 개발·확산으로 열악한 노후산단의 근로환경 개선 및 4차 산업혁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

3) 환경을 고려한 산업입지 공급체계 구축

(1)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산업입지 공급

● 환경을 고려한 산업용지 공급

-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 지자체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업입지 개발 추진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협의체 구축

- 개발에 따른 집단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산업입지개발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

(2) 유희공간 등을 활용한 완충 녹지공간 보완

● 산업단지 주변 자연친화적 공간 조성

- 산업단지 내외 유희부지의 적극적 활용으로 도시 숲 조성 및 기존 완충 녹지공간 등을 보완 추진
-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미세먼지, 오염물질 등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이동·확산되지 않도록 주거지역과 노후산업단지 연결구간에 미세차단 숲, 자연친화적 공간 등의 녹색공간 조성을 확대

(3)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계획입지의 공급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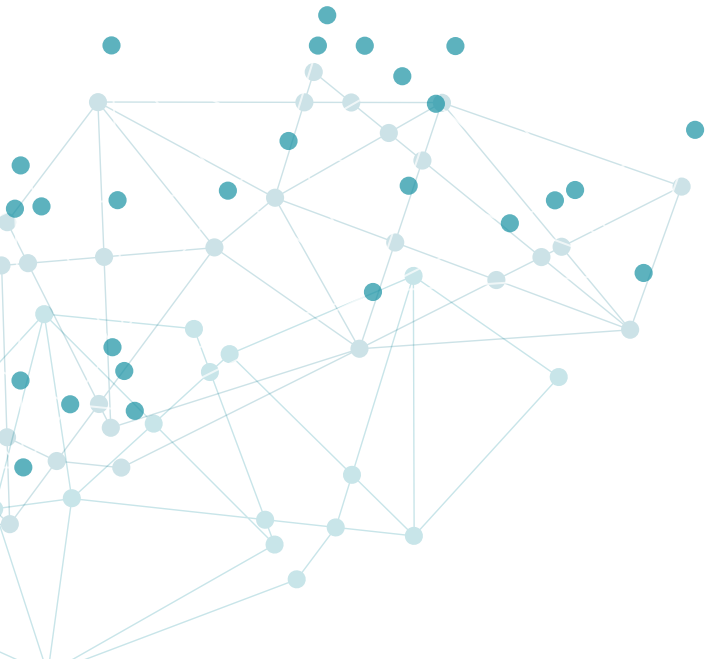
● 계획입지의 체계적인 공급·관리

- 계획입지에 대한 성과·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며,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권한·재원을 차등화하여 계획입지별 경쟁력을 강화
- 산업입지에 대한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제도에 의해서 지정된 계획입지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
- 개별입지를 적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등 산업단지의 계획입지 활성화로 난개발 우려 최소화

● 개별 입지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 계획입지 중심의 기존 산업입지수급계획 제도의 개편으로 개별 입지관리방안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의 개별입지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여 산업입지 관리를 강화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민생경제·일자리

제1절 민생경제

제2절 일자리

제2장

민생경제·일자리

제1절

민생경제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민생경제 구조적 여건

(1) 높은 제조업 비중과 주력산업 중심의 경제구조

● 주요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 경남은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38.4%로 제조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그중에서도 조선, 자동차, 항공, 기계공업 등 주력 산업 비중이 16.9%로 매우 높음
- 주력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43.9%를 차지

(단위 : 십억원, %)

〈표 4-2-1〉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금액 및 비중

구분	전국		경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총부가가치	1,736,589	100.0	102,309	100.0
농업, 임업 및 어업	34,584	2.0	4,149	4.1
광업	2,611	0.2	110	0.1
제조업	505,165	29.1	39,307	38.4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23,431	1.3	2,209	2.2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	16,481	0.9	505	0.5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14,514	0.8	855	0.8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91,724	5.3	3,473	3.4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79,109	4.6	9,030	8.8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172,702	9.9	5,985	5.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07,204	6.2	17,251	16.9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545	1.4	2,215	2.2
건설업	102,204	5.9	6,562	6.4
도매 및 소매업	139,334	8.0	5,094	5.0
운수 및 창고업	55,026	3.2	2,623	2.6
숙박 및 음식점업	42,910	2.5	2,392	2.3
정보통신업	81,504	4.7	1,388	1.4
금융 및 보험업	104,414	6.0	4,276	4.2
부동산업	135,908	7.8	6,373	6.2
사업서비스업	166,129	9.6	5,856	5.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6,537	6.7	8,688	8.5
교육 서비스업	90,546	5.2	5,456	5.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960	4.7	4,886	4.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3,210	3.1	2,935	2.9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2018년 잠정치)

●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2017년 전국사업체조사’ 기준 경남 전체 사업체 수는 27만 4,490개로 종사자는 총 137만 8,742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 상용근로자는 88만 7,226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64.4%를 차지
- 제조업 사업체는 3만 6,668개로 전체 사업체의 13.4%를 차지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42만 3,853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0.7%를 차지하여 제조업 사업체가 많은 종사자를 고용
- 제조업 상용근로자는 36만 8,517명으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86.9%를 차지하여, 제조업의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음

(단위 : 개, 명)

〈표 4-2-2〉

경남 산업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전산업	274,490	1,378,742	887,226	146,650	226,559	57,607	60,700
농림어업	336	3,267	2,429	751	0	0	87
광업	89	828	769	29	30	0	0
제조업	36,668	423,853	368,517	20,999	27,030	6,189	1,118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7	4,169	4,038	63	46	20	2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799	8,593	7,919	342	280	43	9
건설업	9,973	85,111	44,837	27,862	5,328	1,330	5,754
도매 및 소매업	65,162	169,269	67,193	17,077	58,356	16,222	10,421
운수 및 창고업	20,856	58,738	29,417	3,808	19,279	504	5,730
숙박 및 음식점업	59,762	147,783	30,309	30,386	58,563	26,359	2,166
정보통신업	1,163	10,074	8,456	888	441	43	246
금융 및 보험업	2,849	37,333	19,642	852	335	28	16,476
부동산업	9,130	27,166	17,226	1,405	6,231	559	1,7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793	32,796	27,369	1,734	3,361	248	8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57	40,333	29,885	5,544	2,263	332	2,30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60	45,350	39,021	6,193	0	0	136
교육 서비스업	13,085	93,514	66,674	10,544	10,644	944	4,70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340	112,981	91,826	9,926	7,072	198	3,95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360	23,442	7,829	4,767	6,518	1,569	2,75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8,051	54,142	23,870	3,480	20,782	3,019	2,991

주 : 기타 종사자는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를 의미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2) 높은 소규모 영세 사업체 비중

● 종사자 및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 경남 전체 사업체 중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매출액이 300억 이상인 사업체는 148개로 13만 5,479명이 종사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가 300명 미만이고 매출액도 300억 미만인 중소기업이 27만 3,305개(99.6%), 종사자가 114만 4,686명(83.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의 경우 300명, 3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체 73개에 8만 4,534명이 종사하고 있고, 300명, 300억 미만 중소기업 3만 6,126개(98.5%)에 28만 7,508명(67.8%)이 종사하고 있음

(단위 : 개, 명)

〈표 4-2-3〉

경남 전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매출액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300명 이상	300억 이상	148	135,479	126,014	8,724	4	0	737
	300억 미만	42	17,569	11,867	4,208	3	0	1,491
300명 미만	300억 이상	995	81,008	71,041	3,798	7	0	6,162
	300억 미만	273,305	1,144,686	678,304	129,920	226,545	57,607	52,31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단위 : 개, 명)

〈표 4-2-4〉

경남 제조업 사업체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구분	매출액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합계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기타 종사자
300명 이상	300억 이상	73	84,534	83,169	1,365	0	0	0
	300억 미만	3	1,150	896	253	1	0	0
300명 미만	300억 이상	466	50,661	49,638	1,003	3	0	17
	300억 미만	36,126	287,508	234,814	18,378	27,026	6,189	1,1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업체당 평균 매출액

- 경남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산업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14억 5,200만원인 반면, 경남은 11억 3,800만원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경우에도 전국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42억 5,700만원에 비해 경남은 41억 4,100만원으로 낮음

〈표 4-2-5〉

산업별 사업체 수와
매출액,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

(단위 : 개, 십억원, 백만원)

구분	전국			경남		
	사업체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 매출액	사업체 수	매출액	업체당 평균 매출액
전산업	4,019,872	5,836,148	1,452	274,490	312,295	1,138
농림어업	3,880	12,361	3,186	336	918	2,732
광업	2,001	4,434	2,216	89	237	2,665
제조업	433,684	1,846,038	4,257	36,668	151,847	4,14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830	143,085	78,189	157	9,881	62,93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8,533	24,651	2,889	799	1,923	2,407
건설업	138,478	403,857	2,916	9,973	15,533	1,558
도매 및 소매업	1,022,739	1,233,442	1,206	65,162	47,605	731
운수 및 창고업	386,919	189,915	491	20,856	7,310	350
숙박 및 음식점업	747,577	141,223	189	59,762	7,882	132
정보통신업	42,887	156,740	3,655	1,163	2,728	2,345
금융 및 보험업	43,514	804,362	18,485	2,849	22,899	8,038
부동산업	152,083	128,665	846	9,130	10,106	1,10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4,251	192,656	1,848	4,793	3,373	70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8,177	79,998	1,173	3,857	2,868	74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488	124,697	9,985	1,060	8,560	8,076
교육 서비스업	185,275	122,227	660	13,085	6,682	5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5,909	128,312	879	9,340	7,715	82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18,797	48,233	406	7,360	1,686	2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00,850	51,253	128	28,051	2,544	9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7년.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 경남은 대기업 상용근로자의 임금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
- 그러나 2019년 4월 기준 경남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5.4%로 전국 기준 78.0%보다 낮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큼

(단위 : 천원, %)

〈표 4-2-6〉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중소규모 (5~299)	2,246	2,366	2,414	2,476	2,565	2,678	2,774	2,887	3,021
	대규모 (300 이상)	3,211	3,292	3,415	3,486	3,705	3,840	3,765	3,849	4,008
	비중	69.9	71.9	70.7	71.0	69.3	69.7	73.7	75.0	75.4
전국	중소규모 (5~299)	2,329	2,467	2,573	2,654	2,739	2,833	2,950	3,074	3,219
	대규모 (300 이상)	3,087	3,180	3,323	3,500	3,698	3,778	3,829	3,997	4,129
	비중	75.5	77.6	77.4	75.8	74.1	75.0	77.1	76.9	78.0

주1 :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시점은 각연도 4월 기준.
 주2 : 사업체 규모는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4) 높은 자영업자 비중

●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

- 경남 자영업자 비중은 2019년 30.5%로 전국 24.6%에 비해 높은 수준
- 전국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남 역시 2015년 30% 아래로 하락하였으나,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상용근로자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2019년 다시 조정을 받는 상황

(단위 : %)

〈표 4-2-7〉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비중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32.3	32.8	33.2	33.0	30.9	29.6	31.8	32.7	32.9	30.5
전국	28.8	28.3	28.2	27.4	26.8	25.9	25.5	25.4	25.1	24.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

- 2018년 경남의 산업별 자영업자 비중을 전국과 비교해보면,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업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4-2-8〉

산업별 취업자 수와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비중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남		
	전체 취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중	전체 취업자	자영업자	자영업자 비중
전산업	26,978,837	6,820,945	25.3	1,748,384	575,531	32.9
농림어업	1,443,053	1,305,378	90.5	190,965	171,801	90.0
광업	18,598	860	4.6	1,615	0	0.0
제조업	4,494,089	531,320	11.8	418,562	43,707	10.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7,783	1,042	1.5	4,712	40	0.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31,490	12,866	9.8	11,162	1,316	11.8
건설업	2,056,551	419,803	20.4	93,724	29,859	31.9
도매 및 소매업	3,716,923	1,413,147	38.0	186,574	88,627	47.5
운수 및 창고업	1,410,557	611,741	43.4	93,761	47,725	50.9
숙박 및 음식점업	2,217,967	862,279	38.9	151,782	80,540	53.1
정보통신업	838,936	88,000	10.5	15,530	2,092	13.5
금융 및 보험업	846,515	23,575	2.8	38,995	938	2.4
부동산업	527,992	186,072	35.2	25,232	9,237	36.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86,246	172,743	15.9	33,336	7,510	22.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16,937	114,352	8.7	58,971	9,566	16.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36,585	0	0.0	92,155	0	0.0
교육 서비스업	1,851,771	329,638	17.8	104,564	22,464	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105,888	120,070	5.7	121,700	8,388	6.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35,475	146,763	33.7	26,852	10,835	40.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3,517	480,338	39.3	76,556	40,857	53.4
기타	51,963	957	1.8	1,637	29	1.8

주1 :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를 의미함.

주2 : 2018년 연간 자료는 1분기, 2분기 데이터를 평균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8년 1, 2분기, 원시자료(마이크로데이터 분석).

(5)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경제 양적 규모

●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 접근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은 총 1,112개로 전국 사회적경제기업 23,744개의 4.7%를 차지
 - 사회적경제기업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사회적기업 178개(4.6%), 협동조합 730개(4.3%), 마을기업 120개(7.5%), 자활기업 84개(6.9%)로 구성
 - 시군별로는 창원시(293개), 김해시(156개), 진주시(111개), 양산시(82개), 거창군(55개) 순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 %)

〈표 4-2-9〉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총합계
	합계	인증	예비	합계	사회적	일반			
전국	3,901	2,435	1,466	17,037	1,787	15,250	1,592	1,214	23,744
경남 (비율)	178 (4.6)	117 (4.8)	61 (4.2)	730 (4.3)	113 (6.3)	617 (4.0)	120 (7.5)	84 (6.9)	1,112 (4.7)
창원시	56	40	16	214	49	165	6	17*	293
김해시	24	16	8	119	15	104	5	8	156
진주시	13	8	5	86	7	79	6	6	111
양산시	20	10	10	55	14	41	5	2	82
거창군	10	9	1	30	4	26	11	4	55
통영시	3	3	0	36	2	34	5	3	47
거제시	6	2	4	27	0	27	5	5	43
함양군	3	2	1	26	1	25	7	5	41
사천시	5	5	0	27	2	25	3	4	39
산청군	7	4	3	21	0	21	7	4	39
함안군	9	4	5	12	4	8	7	5	33
밀양시	4	2	2	13	3	10	8	6	31
하동군	6	5	1	14	3	11	7	4	31
창녕군	2	2	0	13	1	12	9	3	27
고성군	6	3	3	8	5	3	7	4	25
합천군	1	1	0	11	1	10	12	1	25
의령군	2	1	1	6	0	6	3	0	11

주 : 전국 자활기업에는 광역 및 전국 자활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광역자활기업 2개를 포함.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현황(2019.12월 말 기준), 협동조합실립현황(2020.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세부현황(2019.6월 말 기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현황(2020.1.31.일 조회).

●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수 비교

- 시장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충족 사회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남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양적 규모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경남은 사회적경제기업 수를 놓고 봤을 때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있는데, 6.5%의 인구 비중, 5.8%의 경제적 비중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경제기업 수를 보면 경남은 33.1개로 인천(27.0개)과 경기(31.5개) 다음으로 낮음

〈표 4-2-10〉

사회적경제기업
규모 비교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수(개)					인구 (천명)	GRDP (조원)	인구 10만명당 사회적경제기업 수 (개/10만명)
	합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전국	23,744	3,901	17,037	1,592	1,214	51,850	1,900	45.8
서울 (비율)	4,866 (20.5)	690	3,930	96	150	9,729 (18.8)	422 (22.2)	50.0
경기 (비율)	4,177 (17.6)	672	3,137	183	185	13,240 (25.5)	474 (24.9)	31.5
전북 (비율)	1,556 (6.6)	237	1,103	110	106	1,819 (3.5)	51 (2.7)	85.5
전남 (비율)	1,370 (5.8)	202	921	161	86	1,869 (3.6)	76 (4.0)	73.3
강원 (비율)	1,355 (5.7)	240	920	122	73	1,542 (3.0)	47 (2.5)	87.9
경북 (비율)	1,289 (5.4)	256	792	131	110	2,666 (5.1)	109 (5.7)	48.4
부산 (비율)	1,189 (5.0)	196	831	78	84	3,414 (6.6)	90 (4.7)	34.8
경남 (비율)	1,112 (4.7)	178	730	120	84	3,363 (6.5)	111 (5.8)	33.1
광주 (비율)	1,110 (4.7)	135	857	61	57	1,456 (2.8)	40 (2.1)	76.2
충남 (비율)	1,047 (4.4)	149	705	134	59	2,124 (4.1)	118 (6.2)	49.3
대구 (비율)	978 (4.1)	145	699	89	45	2,438 (4.7)	57 (3.0)	40.1
대전 (비율)	880 (3.7)	136	669	53	22	1,475 (2.8)	41 (2.2)	59.7
충북 (비율)	843 (3.6)	169	526	88	60	1,600 (3.1)	70 (3.7)	52.7
인천 (비율)	797 (3.4)	207	489	56	45	2,957 (5.7)	88 (4.7)	27.0
울산 (비율)	503 (2.1)	136	304	44	19	1,148 (2.2)	76 (4.0)	43.8
제주 (비율)	461 (1.9)	128	277	36	20	671 (1.3)	20 (1.0)	68.7
세종 (비율)	211 (0.9)	25	147	30	9	341 (0.7)	11 (0.6)	62.0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예비)사회적기업현황(2019.12월 말 기준), 협동조합설립현황(2020.1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세부현황(2019.6월 말 기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활기업현황(2020.1.31.일 조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2019.12월 기준), 통계청 지역소득(2018년 잠정치).

2) 민생경제 현황

(1) 경제성장률 하락

● 경상남도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 경상남도 경제성장률은 2013년 이후 2018년까지 평균 0.5%에 불과
- 같은 기간 국가 경제성장률의 평균이 3.0%였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
- 특히 최근 2017년에는 -0.7%, 2018년에는 0.4%의 성장률을 기록해 2016년 실질 GR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표 4-2-11)

실질 경제성장률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경남 경제성장률	3.0	2.6	0.5	0.4	1.7	0.7	-0.7	0.4	
국가 경제성장률	3.7	2.4	3.2	3.2	2.8	2.9	3.2	2.7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한국은행 국민계정.

(2) 가계경제 악화

●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 정체 및 감소

- 경상남도 전체 노동소득의 실질증가율은 2016년 이후 대폭 하락하였고, 자영업자 소득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 경상남도 노동자 1인당 명목소득¹³⁾은 최근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2018년에는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보다 낮아졌으며, 자영업자 1인당 명목소득¹⁴⁾은 전국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2015년 이후 크게 하락·정체되어 그 차이가 더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2016년 이후 상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자영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

13) 피용자 보수를 임금근로자 수로 나누어 구한 수치.

14) 가계(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포함)의 영업잉여를 자영업자 수로 나누어 구한 수치.

〈표 4-2-12〉

가계소득 변화 추이

(단위 : %, 천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실질 증가율	노동소득	경남	5.0	3.5	4.9	5.1	4.3	1.9	0.4	1.0
		전국	5.3	3.6	4.4	4.5	3.5	2.7	2.5	4.6
	자영업자 소득	경남	-3.2	1.3	2.3	4.7	-1.3	-0.5	-1.5	3.6
		전국	-4.0	0.8	1.0	1.7	-1.8	1.1	-1.2	-4.7
1인당 명목 소득	노동소득	경남	33,543	35,416	36,815	37,444	39,038	41,518	42,124	42,328
		전국	34,247	35,302	36,339	37,113	38,725	40,014	41,423	43,196
	자영업자 소득	경남	14,810	15,086	15,564	17,212	17,519	16,455	15,586	16,116
		전국	18,706	18,752	19,349	19,790	20,394	21,061	21,046	20,300

주1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주2 : 노동소득은 피용자 보수, 자영업자 소득은 개인(가계 및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영업잉여.

주3 : 실질증가율은 명목수치에 지역별 디플레이터(= 실질 GDP/명목 GDP)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주4 : 1인당 지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수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경제활동인구조사.

● 가계 소득과 자산 정체 및 감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경상남도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순자산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이 2017년 5,478만원에서 2019년 5,828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남은 5,168만원에서 5,187만원으로 거의 정체되었음
 - 전국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2017년 3억 1,572만원에서 2019년 3억 5,281만원으로 증가하는 동안 경남은 2억 6,502만원에서 2억 5,244만원으로 감소하였음

〈표 4-2-13〉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 및 자산과 부채

(단위 : 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경남	경상소득	5,168	5,095	5,187
	자산	32,643	33,042	32,049
	부채	6,141	6,728	6,804
	순자산액	26,502	26,314	25,244
전국	경상소득	5,478	5,705	5,828
	자산	38,671	42,036	43,191
	부채	7,099	7,668	7,910
	순자산액	31,572	34,368	35,281

주 : 자산 및 부채는 조사년도 3,31일 기준이며, 소득은 조사 전년도 1.1~12.31(1년간) 소득임

자료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3) 소비 등 내수경기 악화

● 소비위축

- 경남 민간최종소비지출의 실질 증가율은 2016년 이후 급격히 하락해 전국적인 수준을 지속해서 하회하고 있음

〈표 4-2-14〉

민간최종소비지출
실질 증가율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P)
경남	3.4	1.9	3.5	2.3	2.5	1.9	1.8	1.7
전국	2.7	1.7	2.2	1.7	2.0	2.5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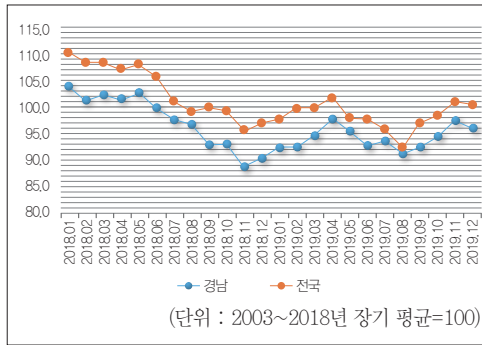
(단위 : %)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최근 소비자심리지수는 2018년 6월 이후 지속해서 100을 하회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소비자들이 최근 경기상황을 과거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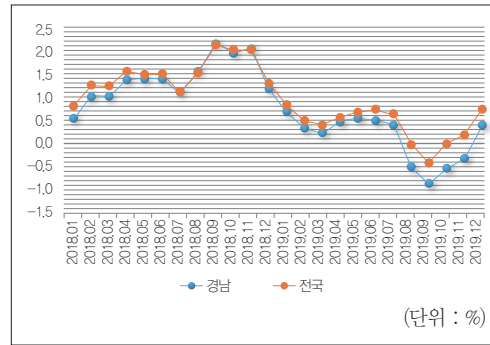
〈그림 4-2-1〉

소비자심리지수 및
경남 소비자물가상승률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



경남 소비자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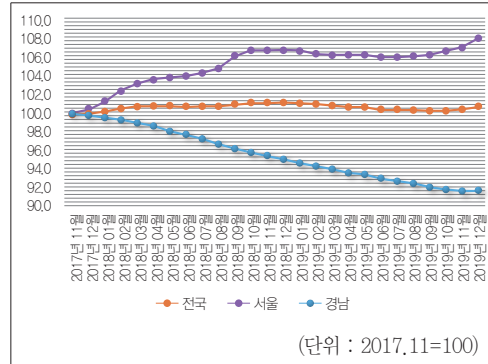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 부동산 가격 하락

- 최근 경상남도 주택매매가격지수는 기준시점(2017.11월) 대비 약 8.2% 하락
- 같은 기간 서울은 8.0% 상승, 전국적으로는 0.7% 상승
- 2019.11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경남이 13,060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전국 미분양 주택 53,561호의 24.4%가 경남
- 창원(5,845호), 거제(1,747호), 김해(1,694호), 통영(1,515호) 등에 미분양 주택 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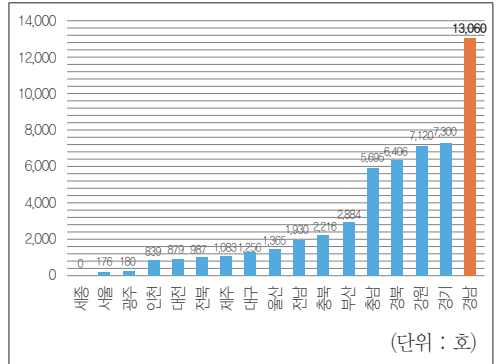
〈그림 4-2-2〉

주택매매가격지수 및
미분양주택 수



주택매매가격지수

자료: 한국은행 소비자자동향조사.



미분양주택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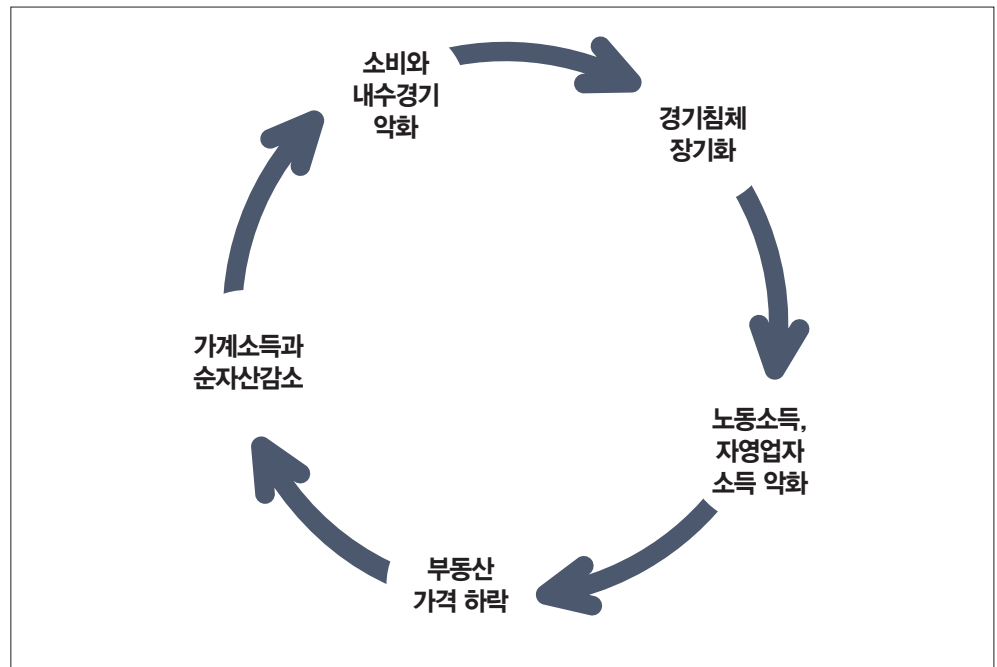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미분양주택현황보고.

(4) 소결 : 경남 민생경제 상황 요약

- 제조업 주력산업 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그 여파가 가계경제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상황
- 경남의 민생경제 상황을 요약하면, ‘산업경기 악화에 따른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의 상대적 위축과 전반적 가계소득의 상대적 감소 및 정체 + 부동산 가격 하락 및 가계 순자산 감소에 따른 역자산효과(Negative wealth effect) →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 경기침체 장기화 → ...’의 악순환

〈그림 4-2-3〉

경남 민생경제
상황 요약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4차 산업혁명 본격화

(1) 산업의 고도화

● 신기술 융합 산업의 확산

- ICT, IOT, Big Data, AI 등 신기술 융합으로 제조업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고, 제조업 연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확산 전망
- 전통 제조업 생산 양식과 생산품으로 더는 기업의 생존이 어렵게 될 것
- 전통 제조업의 상당 부분은 중국 등 후발 국가와의 가격경쟁으로 쇠퇴할 가능성 큼
- 경남 전체 사업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민생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 사업체가 산업의 고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성장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것이 중요

●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저하

- 제조업 생산 공정 고도화로 지금까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전통 제조업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신기술 습득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 가구를 중심으로 경제활동 기회가 줄어들 우려
- 고부가가치 산업 종사자와 여타 단순 서비스업 종사자 간 임금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소득 불평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소득 불평등 완화와 보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

(2) 일자리의 개념 전환

● 고용계약 관계의 다양화

-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체결하는 전형적인 장기 고용계약 관계가 아닌,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순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가 다양하게 등장할 것
- 새로운 유형의 노동 보호 및 권리 행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구직수단으로서 창업

- 다양한 ICT 플랫폼을 기반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접목한 소규모 창업이 일상화되고,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일자리를 찾는 보편적 방법의 하나가 될 가능성
- 도민들이 창업을 통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2) 사회적 가치 중심의 민생경제

(1)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

●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 사회서비스 공백 또는 부족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자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정착할 가능성
 - 공동체 형성과 복원, 공동체 구성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이 민생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것
- 사회서비스 공급 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과 사회서비스의 보편적 수혜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분의 자원 공급 및 역할 모델 수립 필요

● 사회적경제 확산

-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 연대와 협력, 민주성 등의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를 고려하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함
- 시장과 정부 부문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자리 부족, 불평등과 양극화, 사회적 배제 등의 문제 해결과 미충족 사회요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민생경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
 -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루어질 것

● 기업의 공유 가치 창출(Creating Shared Value) 일반화

-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고 존속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이윤 추구 행위에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자신들이 가진 가치사슬과 연관된 사회문제 해결 또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병행함으로써 경쟁력 향상의 기회를 찾을 수 있음¹⁵⁾
- 이는 민생경제를 구성하는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경영 전략이 보편화 될 가능성이 큼

● 친환경 경제모델 확산

- 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모든 경제주체가 추구해야 할 필수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될 것
 -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고려가 보편화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 배분이 증가하고, 환경 관련 산업과 사업모델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이에 따라 자원의 낭비적 소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모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임

15) Porter, Michael, and Mark R. Kramer(2011),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1/2): PP.62~77.

(2) 경제주체 간 상생 확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 미래에는 가격경쟁을 넘어 가치의 경쟁이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가치의 경쟁 시대에는 대기업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중소기업을 쥐어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가치 창출을 위한 상생과 협력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으므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기업과 노동조합, 소비자, 지역사회의 상생협력

- 생산자와 소비자, 사용자와 노동자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지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업시민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상생협력이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위한 공공 부문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

〈표 4-2-15〉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실질 경제성장률	0.6%	2.0%	2.0%
가계 경상소득(월 환산)	5,187만원(432만원)	7,180만원(598만원)	9,649만원(804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수	사회적기업 179개 협동조합 730개	사회적기업 300개 협동조합 1,500개	사회적기업 500개 협동조합 2,000개

(1) 종사자 300명, 매출 300억 이상 사업체 300개 육성

① 중소기업 혁신 역량 강화

● ICT,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경남은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중장비 산업에 대한 편중이 심각하고, 서비스업 역시 주로 도소매, 숙박 음식 등 단순 서비스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민생경제 부문 핵심지표ICT, 소프트웨어 등 첨단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기존 제조업과 융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음

●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 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도와 대기업의 공동 펀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연구 결과에 따른 기술을 참여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

· 중소기업 연합 연구중심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개발 인력 공급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이 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을 통해 대학원 운영
- 대학원에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재로 양성되어 중소기업에 취업

② 중소기업 성장 지원

● 금융과 경영 원스톱 지원

· 지역 기반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금융기관별 전담 중소기업을 매칭하고, 자금 지원과 함께 투자 및 경영 컨설팅을 동시에 진행

-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지방정부-금융기관-중소기업 파트너십 형성

● 마케팅 및 판로 확대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동남권 우수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정례 개최

· 민관협력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광고, 마케팅 채널 구축

- 경남 중소기업 상품 지도를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경남 중소기업 상품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경남 중소기업 연합 SNS 채널 구축 등

(2) 노동자 보호와 창업 활성화

①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 확산에 대비한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

● 실업급여 대상 확대

- 플랫폼 노동자가 질병, 이직 준비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마련
- 플랫폼 노동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 관계로 인해 기존 제도 안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실업 부조에 준하는 지원방안 마련

● 노동자 소득 안정 지원

- 플랫폼 노동자 등 소비자 수요에 따라 노동소득이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처한 노동자가 늘고 있는 만큼, 매월 노동자 소득수준이 큰 변동 없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상품 또는 상호부조 제도 설계

② 창업 지원

● 소규모 회사 창업 지원 복합 단지 조성

- ICT 발전과 스마트폰, SNS 사용자 확산에 따라 대규모 장비나 시설 없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 창업이 가능해짐
- 소규모 회사의 창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합 단지 조성 검토
- 소규모 오피스 임대는 물론 촬영 장비 등 창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지원 등

● 사내벤처 활성화

- 일반 창업과 비교해 사내벤처의 성공확률이 높은 점을 감안, 기업의 사내벤처 활동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3) 사회적 자본 확산

① 사회적 가치 원칙 확립

● 사회적 가치 지향 도정원칙 수립

-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의 대상 선정에 있어 경제적 이윤과 함께 사람과 환경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과 조직, 사람을 우선 지원하는 원칙 천명

②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공백 최소화

-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대상 계층 등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는 프로세스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창업에 대해 추가 지원 제공 방안 마련

● 사회서비스 노동자 처우 개선

- 사회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처우 기준 확립
- 처우 기준을 맞추기 위한 수수료 인상이 서비스의 보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공공지원 투입 기준을 함께 마련

③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사회혁신활동 지원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실험실을 읍면동 기초 행정 단위별로 갖추고, 사회혁신활동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사회혁신활동에 기초한 창업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정보 공개,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공모 및 지원, 정보공유, 제품 판매 및 홍보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서비스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개방형 업무 시스템(또는 플랫폼) 구축
- 투명하고 편리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

④ 참여와 상생 지원

●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과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 경영문화 확산을 위한 공공 부문의 마중물 역할 강화
 - 노사, 대·중소기업 상생의 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사회적 인정을 확대
 - 공공 부문 노동이사제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그 성과를 공유
 - 민간 기업의 경우 노동자와 경영정보 공유 확대부터 단계적으로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 도모
-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가해 및 피해 사실 등을 공표함으로써 불공정 거래행위 인센티브를 제약

● 참여 확산을 위한 신뢰 형성

- 공공 부문에 대한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효능감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주민 참여의 성공사례 확산
 - 시군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참여 마을공동체 성공 사례 구축

(4) 가계소득 향상

① 노동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향상

● 노동소득 향상 지원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서부터 확립하고, 비합리적 임금 차별을 해소
- 노동생산성 향상과 일자리의 질적 개선 도모

● **자영업자 소득 향상 지원**

- 가계의 필수경비 절감 등 가계 처분가능소득 향상과 민간소비를 지원하고, 관광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자영업자 매출 확대와 소득 증진 도모
- 도시재생과 제로페이 확산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자영업자 부담을 경감하여 소득 증진을 지원

4. 추진시책

〈그림 4-2-4〉

민생경제 시책
추진방향



1) **가계소득 800만원 시대¹⁶⁾**

(1) **중소기업 성장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혁신기술원(이하 '기술원') 설립¹⁷⁾**

- 개별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에 독자적으로 나서기에는 연구개발투자 여력 부족
 -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집합적 협력체 구성 필요
 - 경남의 독자적 기구로 설립하기보다는 동남권 광역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각 지역이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
- 기술원은 중소기업(단체)과 대기업은 물론 연구기관, 대학, 시민사회가 모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성격의 연구기관으로 설립

16)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5,187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32만원임. 향후 20년간 매년 경남 가계의 평균 경상소득이 약 3.1% 성장할 경우 2040년 가계소득 800만원 달성 가능.

17) 김유현 외(2019), "경남 경제 및 고용상황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경상남도 「경남형 일자리모델 개발」사업 최종 보고서.

- 덴마크 제조아카데미(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MADE) 벤치마크
- MADE는 정부투자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경제단체가 자금을 조성하여 2014년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현재 약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제조업 공정 자동화 등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기술원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공정 및 기술 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교육 훈련, 기술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되, 가장 핵심은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임
- 기술원이 선정하는 공모 사업의 주제는 친환경,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포용적 기술혁신 연구 프로젝트로 함
-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과 연대, 협업과 융합을 전제로 연구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하고, 선정되는 경우 선정된 팀의 대학과 연구소에 연구비용을 지원(대기업은 연구비용의 일부를 편당)
- 개발된 기술을 중소기업에 적용함으로써 생산품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으로 양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에도 이익이 됨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채용 지원

- 대다수 연구개발 분야 인재들은 대기업과 수도권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역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분야 인재유치가 매우 어려움
- (중소기업) 연구개발 인력 주거 단지 또는 마을 조성
 - 중소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연구개발 인력이 입주를 원할 경우 주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 인재 유치 리크루팅(Recruiting)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이 연합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공동 리크루팅 활동 추진
 - 리크루팅 행사 기획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경남도, 부산시, 울산시가 함께 지원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 공동 판로 확대 사업 추진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건립을 통해 우수제품 홍보 및 IR 행사 등 상설 운영
 - MICE 산업 연계,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 관람을 동남권 비즈니스 관광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
 - 동남권 중소기업 제품 전시장을 활용한 바이어 초청 설명회 및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미래 신산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 친환경에너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전략적 육성대상 산업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수준의 투자 또는 기업 유치 세제 혜택을 넘어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

•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미래 신산업 중소기업 육성 기금을 별도로 조성하여 중장기 연구개발투자에 나서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제공
- 단순한 이자 차액 보전 형태가 아닌 (준)지분투자 형태로 지원하여 투자의 리스크를 중소기업과 경남도가 공유해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장기 기술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도모

(2) 자영업자 소득 증대

● 제로페이를 넘어 지역 화폐로

• 경남도 지역 화폐 도입, 지불수단 다변화

- 경남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중장비 생산기지로 생산을 통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이 도내의 소득으로 머물러 소비되지 못하고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출
- 지역경제의 순환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도내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절실히 필요
- 지류 상품권, 경남도 소비전용 체크카드, 제로페이 등 다양한 지불수단을 통해 도내 소비, 특히 골목상권 매출 확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경남 지역 화폐 도입
-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사업의 지급 수단을 지역 화폐로 전환하고, 그 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단위 : 천원)

〈표 4-2-16〉

1인당 생산, 분배소득, 민간소비 금액

구분	1인당 생산		1인당 분배소득		1인당 민간소비	
	시도	금액	시도	금액	시도	금액
	전국	36,817	전국	19,894	전국	17,536
1위	울산	65,515	서울	23,259	서울	21,214
2위	충남	53,995	울산	21,666	울산	18,001
3위	서울	43,525	세종	20,611	광주	17,752
4위	충북	43,028	경기	19,851	부산	17,585
5위	전남	42,713	광주	19,804	대전	17,468
6위	경북	40,766	대전	19,749	경기	17,176
7위	세종	36,592	부산	18,917	대구	17,121
8위	경기	36,362	인천	18,626	세종	16,844
9위	경남	32,938	대구	18,585	제주	16,545
10위	강원	30,893	경남	18,479	강원	16,500
11위	제주	30,506	강원	18,472	인천	16,013
12위	인천	30,076	충남	18,472	경남	15,991
13위	전북	28,002	제주	18,469	충남	15,790
14위	대전	27,135	충북	18,427	경북	15,776
15위	광주	26,660	경북	18,319	전북	15,654
16위	부산	26,390	전북	18,291	전남	15,533
17위	대구	23,132	전남	18,053	충북	15,506

주 : 2018년도 지역소득은 잠정치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 한계 자영업자 경영컨설팅을 경남 사회서비스화

-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 그중에서도 경남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더 높은 상황¹⁸⁾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가 미성숙하고, 기초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취업이 여의치 않은 고령층의 다수가 자영업에 진출
 - 조선업 등 산업위기에 따른 실업 증가로 실직자 가구의 생계형 창업 증가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로 생계로 인해 쉽게 폐업하지 못하는 문제
 - 높은 자영업자 비중은 이러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경제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활성화해 사업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그 비용을 경남도가 일부 지원함으로써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경남의 사회서비스로 제공

● 폐업 자영업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경영컨설팅과 연계

- 경영컨설팅을 통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병행, 임금근로자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기 계발 지원, 시장 일자리 연결 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공급 확대 등 취업 지원 강화

(3) 노동소득 증대

● 「(가칭)경상남도 임금공정성 확립을 위한 조례」 제정

- 불합리한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소극적 원칙을 넘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극적으로 확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
 - 불합리한 임금 차별이 있는 경우 경남도의 투자 및 금융 등 지원에 있어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를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도입

● 생활임금 이하 노동자 소득 지원 방안 도입

- 경남 생활임금 이하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임금 이하 노동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

18)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중(무급가족종사자 포함)은 우리나라 25.1%로 OECD 평균(28개국) 15.5%보다 10%p 가까이 높고, 경남은 2019년 상반기 기준 30.9%로 전국 자영업자 비중 24.9%보다 훨씬 더 높음.

(4) 창업지원 강화

● 동남권과학단지(기술 실용화 창업지원 집적단지) 조성¹⁹⁾

- 대학 내 연구 활동으로 기술개발에 성공한 경우 실용화 단계를 거쳐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지원 플랫폼으로서 동남권과학단지 조성
- 스웨덴의 리센핑 지역에 있는 마르데비 과학단지(Mjärdevi Science Park)는 1984년 설립된 세계적인 혁신단지로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300여 개 기업이 지역의 거점 대학인 리센핑대학교를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임
- 마르데비 과학단지의 성공 요인은 대학과 기업의 경계를 허물었던 것에 있음
- 동남권과학단지를 통해 동남권 거점 대학(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UNIST, 부산대, 부경대 등)의 연구개발 성과 실용화와 기술 창업 도모
- 경남과학단지의 모든 시설을 거점 대학의 교수와 연구진,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과 연구, 창업, 생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함
- 대학 연구팀을 예비 창업기업으로 선발하여 과학 단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

● 청년 창업 활동 지원 강화

- 동남권 청년 창업 경진대회 개최
- 부산, 울산, 경남도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가 경남에서 창업할 경우 창업보조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금 모집을 위한 매칭 투자자금도 지원

● 사내벤처 성공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내벤처는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창업 활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창업에 비해 성공확률이 높음
- 경남 소재 기업이 사내벤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필요
- 사내벤처를 통한 창업에 성공한 경우 모기업 투자자금의 일부를 지방세 감면으로 지원하고 경남도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도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2)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

(1) 경남형 사회안전망 구축

● 장기 실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 제도 운영

- 실업급여 지급 기간 또는 국민취업제도 지원 기간이 종료된 도민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ex. 3개월) 추가 취업 지원금 지급

19) 김유현 외(2019), "경남 경제 및 고용상황 맞춤형 일자리 전략 수립", 경상남도 「경남형 일자리모델 개발」사업 최종보고서.

- 고용보험의 최대 지급기한은 6~8개월로, 그 안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실망실업자로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
- 청년과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 역시 지원 기간은 6개월에 불과
- 취업 지원이 종료된 도민이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추가로 취업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민들의 생계안정과 경제활동 참여의 지속성을 확보(실망실업 예방)

●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대상 경남도 자체 공공부조제도 마련

- 생계, 의료, 교육, 주거 등 정부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매월 5~10만원의 지역 화폐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경남형 공공부조제도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추진

(2) 상생의 경영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 상생경영 문화재단 설립 추진

- 경남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제단체, 노동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상생경영 문화재단 설립을 통해 상생경영 문화 확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남도가 재단 사업비 중 일부를 출연하여 기업과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함
- 예를 들면 경영 사정 악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의 기업이 고용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휴직노동자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해고 노동자 재고용 및 전직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업 간, 노사 간 상생 도모

● 노사 상생 경영문화 확산

- 노동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확대 및 이사회 참관 제도 등 노사 상생 경영문화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 종업원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 또는 노동자에 대한 스톡옵션 등 주식 배분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실효적 운영

- 경남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상담사례를 정례적으로 공개하고 사례집을 발간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와 MOU 체결 등 적극적 협력을 통해 상담사례 중 불공정성에 대한 입증 가능성이 높고 피해가 심각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상담센터가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사회적 자본 확대

(1) 사회적 가치 도정 확립

● 사회적 가치 도정 원칙 확립 및 비전 선포

-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준하는 사회적 가치 지향 경남도정 원칙 수립 및 '경남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 조례' 제정
- 도정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사회적 가치 도정 원칙을 반영토록 의무화하고 사업 또는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도 분명한 기준으로 작동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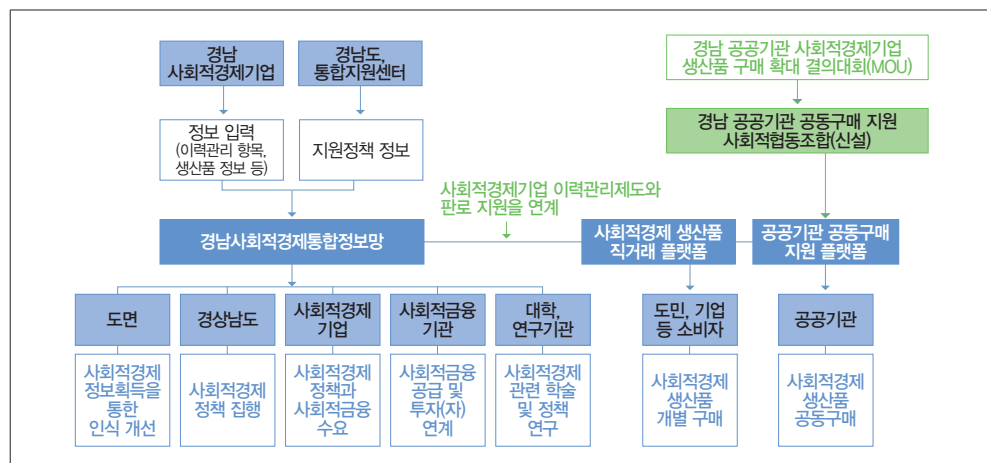
(2) 사회적경제 · 금융 활성화

● 경남 사회적경제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사회적경제 확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의 흐름
- 지금까지는 활동가 양성, 인건비 지원 등 인적자원에 집중하였다면, 이제는 정보와 금융자원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원활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
- 정보의 원활한 흐름 없이는 인적자원과 금융자원이 사회적경제 분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사회적경제기업이 필요로 하는 각종 지원정책 정보와 소비자, 투자자 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통합 제공되는 플랫폼을 구축
- 통합지원 플랫폼이 구축될 경우 그 자체로 인적 · 물적 · 제도적 자원은 물론 판로 확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그림 4-2-5)

경남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안)



자료 : 김유현(2020), "경남 사회적경제기업의 투·융자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의 필요성과 운용방향", 경남연구원 현안과제.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의 사회적금융 확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기금을 경남도 출연금을 바탕으로 조성

-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내 자본 공급을 1차 목표로 하되, 경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 시도 등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

● 사회적성과 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이하 SIB사업) 도입 검토

- SIB사업은 민간 투자자금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사회적과 창출 및 목표 달성 여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와 보상을 지급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임
- 사회요구는 증가하는 반면,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경남의 상황을 고려할 때 SIB사업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SIB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도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다만, SIB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는 만큼, 공공 부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도 내에서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²⁰⁾

(3) 사회혁신·공동체 활동 지원 강화

● 「경남 사회혁신활동가 수당 지원 조례」 제정 검토

- 사회혁신활동을 사회서비스의 하나로 보고, 농촌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나서는 사회혁신활동가에 대한 수당 지급 제도 도입

● 경남형 공동체 회복 사업 추진

- 경남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및 생활SOC사업은 반드시 공동체 회복 사업을 병행토록 의무화하고, 공동체 회복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추진토록 함
- 도시재생 또는 생활SOC사업과 별개로 공동체 회복 사업을 단독으로 공모하여 공동체 복원 사례를 확대하고 이를 공유함

(4)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확대

- 사회서비스 확대는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들의 삶의 질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사회적 요구가 있으나 시장을 통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공부문에서부터 공급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도모

20) SIB사업은 미래의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 효율성 증진, 협력과 혁신을 통한 더 나은 사회성과 달성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재정의 중복투자, 과도한 금융비용 지출, 제3 부문의 다양성 훼손, 공공부문의 민주성과 책임성 약화 등 우려도 있음(김유현(2020), "경상남도 사회적성과보상사업(SIB)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경남연구원 현안과제 발간 예정).

제2절 일자리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노동시장

● 실업자 수의 빠른 증가와 정체된 고용률

- 2018년 기준 경남의 1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2,845천명, 경제활동인구는 1,801천명으로 2012년 이후 각각 연평균 0.9%, 1.5% 증가 추세
- 취업자 수는 2018년 1,746천명으로 2012년 이후 연평균 1.3%씩 증가했지만, 실업자 수는 2016년 59천명으로 급등하며 동기간 동안 9.7%씩 빠르게 증가

(단위 : 천명, %)

〈표 4-2-17〉

경상남도
주요 경제활동지표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계	취업자	실업자			
2012년	2,689	1,649	1,618	31	61.3	60.2	1.8
2013년	2,719	1,676	1,641	35	61.6	60.3	2.1
2014년	2,758	1,702	1,660	43	61.7	60.2	2.5
2015년	2,791	1,736	1,691	46	62.2	60.6	2.6
2016년	2,812	1,763	1,704	59	62.7	60.6	3.3
2017년	2,830	1,775	1,723	52	62.7	60.9	2.9
2018년	2,845	1,801	1,746	54	63.3	61.4	3.0
연평균 증가율	0.9	1.5	1.3	9.7	0.5	0.3	8.9

자료 : 한국은행 경남본부, 경남주요경제지표(2020.1월 기준)

● 주력 제조업 산업의 위기와 기존 구조조정의 한계

- 경남의 산업구조는 조선, 기계장비, 금속가공, 자동차 등에 집중되어 있음에 따라 최근 주력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가져오고 있음
- 경남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산출액 10억원당, 2016년 기준)는 9.1명으로 서비스업(20.2명)의 절반 수준이며, 부산 등에 비해서도 상대적 고용 흡수력 낮은 상황임

(단위 : 명)

〈표 4-2-18〉

경남지역 산업별
취업유발계수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세부업종						
			도소매	운송 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	금융·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	사업지원	보건·사회 복지
경남	9.1	20.2	26.0	23.4	29.0	14.2	14.9	26.9	21.6
부산	11.0	18.8	21.3	14.7	25.8	12.5	17.8	36.7	18.7
울산	6.9	18.0	21.8	11.4	25.4	13.1	12.5	29.7	19.4

주 : 취업유발계수란 지역에서 생산하는 특정품목 최종수요 10억원이 전 지역·전 산업에 유발하는 취업자 수.
자료 : BNK동남권연구센터(2018), '동남권 서비스업 고용 변화', p.10.

● 제조 관련 직종의 지속적 감소와 서비스업의 빠른 증가

- 제조업 주요직종인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는 전국과 달리 감소(연평균 -0.2%)해왔고 서비스·판매종사자(2.4%), 단순노무종사자(6.4%)는 전국보다 빠르게 증가
 - 경남의 직업구조는 사무직, 농림어업직, 기능·기계조작·조립직종 일자리 감소하고, 단순노무직, 서비스·판매직 일자리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
- 전국의 관리자·전문가, 서비스·판매종사자 일자리 동반 증가하는 경향과 차별적임

(단위 : 천명, %)

〈표 4-2-19〉

경남지역 직업별
취업자 변화

구분	경남 취업자 수		경남 직업별 취업자					
	2013년	2019년	연평균 증감률		구성비		'13년 대비 증감	
			경남	전국	2013년	2019년	경남	전국
계	1,666	1,767	1.0	1.1	100.0	100.0		
관리자, 전문가	291	297	0.3	1.6	17.5	16.8	-0.7	0.7
사무종사자	258	233	-1.7	1.6	15.5	13.2	-2.3	0.5
서비스·판매종사자	331	382	2.4	1.2	19.9	21.6	1.8	0.2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182	175	-0.7	-1.5	10.9	9.9	-1.0	-0.9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424	419	-0.2	0.2	25.5	23.7	-1.7	-1.1
단순노무종사자	181	263	6.4	1.8	10.9	14.9	4.0	0.5

자료 : KOSI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 김해, 양산 노동시장 규모 확대, 통영, 고성, 의령, 합천 노동시장 축소

- 김해, 양산은 경남 내 생산거점 기능 강화되고 있는 추세
 - 13년 대비 김해시 취업자는 3.4만(14.2% 증), 양산시 3.9만(29.6%) 증가함
 - 거주지 외 통근 취업자 비중이 19년 기준 26% 수준으로 높고 김해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에 노동시장 규모 커지고 있음을 의미
 - ※ 역외 통근자 비중 : 김해 13년 22.8% → 19년 26.6%, 양산 13년 25.6% → 19년 26.3%
- 통영, 거제는 2014~15년 조선·기계산업 위기 이후 노동시장이 회복 축소·정체
- 의령, 고성, 합천은 2013년 이후 노동시장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음
 - 고성은 제조업 취업자 수 급감(13년 8,6천명→19년 3,9천명) 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종사자 수 감소(14년 13,9천명 → 19년 10,3천명) 감소가 주요 원인
 - 농림어업 집중지역(취업자 비중 50% 상당)인 의령 및 합천의 경우 빠른 인구고령화와 함께 농어업인구 감소, 대체 산업의 성장 부진에 따른 노동시장 전반 침체가 주요 원인
- 양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30~40대 취업자 수 감소 중임
 - 13년 이후 연평균 3% 이상 취업자 급감한 지역은 합천, 산청, 하동, 고성 등 총 8개

〈표 4-2-20〉

경남 시군별
취업자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13년 대비 증감	
					증감 수	증감률
창원시	510.0	509.8	514.9	530.0	20.0	3.9
진주시	165.7	174.4	169.4	175.6	9.9	6.0
통영시	68.4	67.2	61.8	63.0	-5.4	-7.9
사천시	60.1	59.4	58.9	60.6	0.5	0.8
김해시	238.7	255.8	266.0	272.5	33.8	14.2
밀양시	54.8	54.8	53.8	55.4	0.6	1.1
거제시	126.8	137.8	123.4	125.9	-0.9	-0.7
양산시	132.2	148.0	158.6	171.3	39.1	29.6
의령군	17.6	17.6	16.6	15.7	-1.9	-10.8
함안군	36.5	37.3	34.1	34.5	-2.0	-5.5
창녕군	35.4	37.2	34.4	36.6	1.2	3.4
고성군	33.3	31.2	30.3	28.7	-4.6	-13.8
남해군	27.0	28.5	25.8	26.0	-1.0	-3.7
하동군	26.5	28.5	25.1	26.8	0.3	1.1
산청군	20.9	21.4	21.2	21.4	0.5	2.4
함양군	23.7	23.6	22.3	22.3	-1.4	-5.9
거창군	32.4	34.3	32.6	34.8	2.4	7.4
합천군	29.0	27.7	25.4	25.0	-4.0	-13.8

자료 : KOS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표 4-2-21〉

경남 시군별
30~40대
취업자 변화

(단위 : 천명, %)

구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13년 대비 증감
전국	12,716	12,683	12,436	12,014	-0.9
경남	845	818	784	775	-1.4
창원시	265.4	247.2	250.4	241.1	-1.6
진주시	78.3	80.0	79.0	75.4	-0.6
통영시	33.1	33.8	28.9	28.9	-2.2
사천시	27.4	26.8	24.1	24.2	-2.0
김해시	139.5	142.6	139.3	133.4	-0.7
밀양시	21.2	19.7	18.6	17.3	-3.3
거제시	69.8	74.8	69.4	68.3	-0.4
양산시	74.4	79.0	82.5	85.8	2.4
의령군	5.2	4.9	4.1	3.9	-4.7
함안군	16.0	15.8	14.7	13.5	-2.8
창녕군	12.0	12.1	11.2	11.1	-1.3
고성군	11.8	11.1	10.0	8.8	-4.8
남해군	7.7	7.3	6.6	5.9	-4.3
하동군	8.4	8.2	7.0	6.2	-4.9
산청군	6.1	5.6	5.3	4.4	-5.3
함양군	7.7	7.0	6.3	5.9	-4.3
거창군	11.8	11.7	11.1	10.8	-1.5
합천군	8.2	7.4	6.3	5.5	-6.4

자료 : KOSS, 지역별고용조사(하반기 기준).

● 기업 규모별 노동여건의 격차와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심화

- 경남 제조업 하청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 여건, 산업안전, 기업복지 수준이 열악함
- 경남 소재 300인 이상 대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26,387원인 반면 중기업은 15,624원, 소기업은 12,893원임. 대기업 대비 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은 52.9% 수준
- 경남의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는 인근 지역인 부산, 울산 및 전국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편임. 이는 경남 청년이 취업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나은 근로 여건을 제공해주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함

(단위 : 원, %)

〈표 4-2-22〉

경남지역 기업 규모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 격차(대기업=100)

구분	소기업 임금수준(대기업=100)				격차(B/A)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대기업(A)	중기업	소기업(B)
경남	50.7	45.5	51.0	48.5	52.9	26,387	15,624	12,893
부산	70.2	71.7	58.6	59.6	62.9	23,333	17,569	13,328
울산	50.6	51.2	53.2	48.3	57.0	29,296	20,154	13,733
전국	54.5	52.1	50.4	48.5	51.7	28,746	17,676	13,407

주 : 소기업은 20인 미만, 중기업은 30~299인, 대기업은 300인 이상을 의미함.
 자료 : 고용노동부(2017), 동남권 지역고용실천전략(권역), p.49, 〈표 3-10〉, [그림 3-4] 재구성.

● 높은 성별 임금 격차와 고학력 여성 노동시장 참여 저조

- 경남의 여성 노동시장 특징으로 높은 비경제활동참여율과 남성대비 낮은 임금수준을 들 수 있음
- 경남지역 여성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16년 기준 남성 대비 61.3%로, 2012년
- 59.1%에 비해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국 평균 64.6%에 비해 여전히 그 격차는 큰 편임
- 제조업이 발달한 울산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의 특징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성별 임금 격차가 큰 원인은 경남의 노동시장이 남성 중심 제조업 일자리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여성 적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취약한 구조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단위 : 원, %)

〈표 4-2-23〉

경남지역 성별 시간당 임금수준 및 임금 격차(남성=100)

구분	여성 임금수준(남성=100)				격차(B/A)	2016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남성(A)	여성(B)
경남	59.1	59.1	59.3	60.1	61.3	18,019	11,041
부산	66.3	67.1	65.0	65.0	63.4	18111	11478
울산	51.9	51.7	59.6	58.8	57.9	21371	12383
전국	64.8	64.5	64.1	63.8	64.6	19,476	12,573

자료 : 고용노동부(2017), 동남권 지역고용실천전략(권역), p.46~47, 〈표 3-8〉, [그림 3-2] 재구성.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청년 인구 감소와 지역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핵심층의 감소

- 청년층의 지속적인 감소, 지역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30~54세 주력 생산인구 감소 추세
- 경남지역 연령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47년 총인구는 3,038천명으로 2017년 대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7.0%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핵심노동인구라 할 수 있는 25~49세 인구는 청년층(25~49세)의 급격한 감소(-53.5%)로 전체 인구의 21.2%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은 2047년 전체인구의 41.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
- 청년층의 일시적 과잉공급 문제에 따른 취업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역 내 주력 생산인구의 고용축진 및 생산성 향상, 여성 및 고령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가 더욱 중시될 필요

(단위 : 천명, %)

〈표 4-2-24〉

경남지역 핵심 노동력 계층의 변화 (연령별 장래인구추계)

구분	인구					2017년 대비 2047년	
	2017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47년	증감	증감률
총인구추계	3,339	3,350	3,321	3,197	3,038	-301	-9.0
중위연령	42.9	45.0	51.3	56.9	59.3	16.4%p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	2,392 (71.6)	2,360 (70.5)	2,113 (63.6)	1,728 (54.1)	1,508 (49.7)	-884	-37.0
핵심노동인구(25~49세) (비중)	1,231 (36.9)	1,175 (35.1)	976 (29.4)	800 (25.0)	645 (21.2)	-586	-47.6
청년층(20~34세) (비중)	608 (18.2)	568 (17.0)	448 (13.5)	345 (10.8)	283 (9.3)	-325	-53.5
신중년층(50~64세) (비중)	769 (23.0)	834 (24.9)	845 (25.4)	729 (22.8)	668 (22.0)	-101	-13.1
고령층(65세 이상) (비중)	483 (14.5)	554 (16.5)	885 (26.6)	1,167 (36.5)	1,256 (41.4)	773	160.0
						26.9%p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S), 장래인구추계 시도(2017년 기준).

● 새로운 일자리 형태의 확산과 노동 관행의 변화

- 이동노동자, 감정노동자 등 기존의 제조·생산 사업체 중심의 고용 관계를 넘어선 신규 고용 형태의 일자리 확산되는 추세
- 경남의 감정노동자 수는 약 51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서비스업의 발달로 향후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
 - 2018년 기준 전체 취업자 수의 약 30.2%를 차지함. 2015년 대비 0.8%p 증가
 - 진주(36.1%), 통영(35.2%)은 전체 취업자 중 감정노동직업 종사자 비중이 특히 높음
- 기존 노동정책과 차별화된 관점의 신규 고용 형태 및 근로 관행 포괄 가능한 정책 필요

〈표 4-2-25〉

경남지역 시군별
감정노동자 종사자 수
('18년 하반기 기준)

(단위 : 천명, %)

구분	경남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통영	사천	밀양	10개 군 지역
	2015년	2018년									
취업자 수(a)	1726.7	1715.1	528.7	272.5	169.0	168.9	120.4	63.3	61.4	55.7	275.2
감정노동자 수(b)	507.7	517.5	168.9	85.5	61.0	52.1	30.6	22.3	17.0	15.2	64.7
비중(b/a)	29.4	30.2	31.9	31.4	36.1	30.8	25.4	35.2	27.7	27.3	23.5

자료 :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및 상담센터 운영방안.

● 기술진보와 생산공정의 변화에 따른 고용감소 위협요인 증가

- 경상남도 소재 사업체의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은 2019년 10월 기준 총 1,457개 새(전국의 12.6%)로 2019년도에만 567개 사가 추가로 도입
- 스마트공장 도입 확산은 제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지만, 고용감소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 인력의 직무 전환 관련 기술교육의 강화와 업무 재배치 등을 위한 노동참여형, 일터혁신을 중시하는 생산 현장의 기술도입 전략 필요

〈표 4-2-26〉

경남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현황

(단위 : 개,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0월	합계
경남(a)	27	89	171	232	371	567	1,457
전국(b)	277	963	1,560	2,203	2,900	3,990	11,893
비중(a/b)	9.7	9.2	10.9	10.5	12.8	14.2	12.6

자료 : 경남연구원 · (사)경남고용포럼(2019.11.), '노동참여형 스마트공장 모델개발: 생산방식의 디지털화와 노동의 참여' 토론회 자료집, p.39.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단기 성과중심 일자리사업 지양,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 개선 노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지역 노동시장 개선 효과 제고를 위한 사업 성과관리체계 강화
 - 지역경제의 구조적·장기적·저성장 시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략 강화를 위한 지역 주체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경남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정책의 성과 제고
 - 산업-고용정책 간의 연계 강화와 지역 핵심 산업의 관철은 일자리 창출
 - 협력적 노사관계, 노동 참여형 제조혁신 등을 통한 지역 일자리 감소 대응 및 질 제고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원·하청 불공정 거래근절, 일·생활균형의 근로 여건 조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산업 및 노동시장 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정책 강화
- 새로운 고용 형태 및 고용여건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정책 강화
 - 기술진보와 제조 생산방법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용·노동정책과 사회안전망 제도 강화

2) 추진전략

● 일자리 부문 핵심지표

표 4-2-27

일자리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고용률	61.3%	64.5%	70.0%
청년고용률(15~39세)	57.1%	61.0%	65.0%
산업재해율	6.15%	6.00%	5.70%

● 지역 일자리 정책 사업의 추진 성과관리체계 강화

- 경남 일자리 거버넌스 역량 및 18개 시군별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운영 강화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적 지원 강화
- 일자리사업 성과 점검 정례회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산업단지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산업단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력수급계획에 밀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노동자 참여형 스마트 제조혁신 변화 촉진

●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여건 개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실현
- 일·가정양립 실천 및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경남 일·가정양립 종합계획 수립 및 일·가정양립 실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이중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 지역 사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숙련공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능 전환 교육 훈련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주요 전략산업 기업별 전문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노동여건 열악한 근로자,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비정규직 직업능력 강화로 격차 완화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경남 농어촌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 경남 6차 산업의 로컬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청년 농어업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및 승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6차 산업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원
- **청년의 안정적인 직업 세계 정착 지원**
 -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및 안착과 역외 청년의 경남정착 지원 강화
 - 산업 다양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확대
 - 창업·창직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 친화 노동시장 환경 조성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생애주기별 일자리 플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경남형 여성친화 직종 발굴을 통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기업 등 창업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 지원

4. 추진시책

(1) 지역 일자리 정책 사업의 추진 성과관리체계 강화

- **경남 일자리 거버넌스 역량 및 18개 시군별 일자리 정책 기획 및 운영 강화**
 - 경남 및 18개 시군별 산업-노동시장 구조의 특징과 지역 고용·노동 현안 완화에 특화된 지역 일자리 정책을 주도적으로 마련, 추진
 - 지자체, 지방노동청, 지역대학, 지역노사단체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일자리사업 발굴 및 기획부터 성과평가단계까지 공동의 노력 추진

●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통합적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 5060 신중년 등 노동시장 재진입이 필요한 취업 취약계층의 교육 훈련, 상담 및 고용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한 전직 지원 정책 강화
-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매칭을 통한 생계취약형 노인의 일자리 확충

● 일자리사업 성과 점검 정례화를 통한 정책 체감도 향상

- 개별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과 정기적인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의 성과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체계 강화

(2) 산업단지 및 지역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청년, 여성도 일하기 좋은 쾌적한 산업단지 근무여건 조성

- 산업단지 내 기업 근로 여건, 근무환경, 산업안전·보건, 통근 접근성 개선·지원 강화

● 전략산업 활성화와 인력수급계획에 밀착한 일자리 창출 지원

- 경남의 주요 산업 고도화 및 전문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등
- 전공, 직능수준 반영한 '인력수급종합계획'으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전략산업 대표기업의 실시간 일자리 모니터링을 통한 고용안정 대응 지원

● 노동자 참여형 스마트 제조혁신 변화 촉진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산단 유치 등 스마트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혁신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노동자 참여' 중시 문화 촉진
- '일터의 스마트화',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스마트화' 위한 산업별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 스마트공장 기업체 재직자 직무 전환 교육 훈련 및 미취업자 대상 스마트공정 생산·사무관리 직종 직업훈련 활성화

(3)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여건 개선

● 업무 생산성 향상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 실현

-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업무 효율화 설비 및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 단축 근로 및 휴직자를 위한 대체 인력풀제 운영

● 일·생활균형 실천 및 확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경남형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 중소기업근로자를 위한 친환경 공공보육시설 설립 및 운영
- 노동 존중 실현을 위한 경남 일·생활균형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 비정규직, 특고, 프리랜서 등 기업복지 사각지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마련
 - 재직자 역량 강화 확대 지원(취미, 직업능력 향상 교육, 고졸 재직자 학위취득 등)

(4)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경남 중소기업 일자리 질 향상

- 이중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 경상남도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통해 지역 노동 현안 해소를 위한 파트너십 전략 강화
 - 원-하청 표준거래계약서, 프리랜서 계약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와 모니터링 강화
 - 경남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마련·지원
 -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장 컨설팅
-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금융 및 제도적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지역 단위 복지지원책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원-하청 상생협력 개선을 위한 (가칭)상생협력 개선지원단 운영
 - 고용여건 개선 성과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경남 노동시장 이중구조(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한 장기전략 수립

(5) 지역·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 지역 사업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숙련공 양성을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역 산업 수요 적합도 제고와 교육 질 향상 통한 효율성 제고
- 직능 전환 교육 훈련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 산업위기 업종 중소·영세 소기업 노동자의 동종 및 타업종 전직지원 매칭 강화
- 주요 전략산업 기업별 전문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6) 노동여건 열악한 근로자, 미조직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 비정규직 직업능력 강화로 격차 완화
 -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산학연이 연계한 재직 훈련 지원 통한 정규직화
 - 미래 유망직종에 대한 비정규직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강화 및 경남도 사업 확대
-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 내실 있는 상담, 교육, 연구 기능 강화
 - 비정규직 일자리 근로실태(정규직 전환 등) 모니터링 실시,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7) 경남 농어촌지역 일자리 생태계 조성

- 경남 6차 산업의 로컬 브랜드화, 관광 상품화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기반 6차 산업 협동화 구축 및 6차 산업 기반 관광패키지 개발
- 청년 농어업 인력 유입 활성화를 위한 취·창업 및 승계 지원 프로그램 강화
 - 가족경영 6차 산업체 지원
 - 단기체류형 농어촌 삶터 체험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인식 변화와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연계 등 6차 산업 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및 지원
 - ICT 기반 농어업 분야의 6차 산업화 전환 희망 경영체 대상 경영지원 등

(8) 청년의 일자리 창출 확대

- 청년의 지역 기업 취업 연계 및 안착과 역외 청년의 경남 정착 지원 강화
 -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경남 청년의 지역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창업 활성화 촉진
 - 근로 여건 취약 청년(5인 미만 영세소기업, 비정규직 청년)의 사회안전망 확충
 - 경남 소재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체 소재지' 기반 정책 발굴
- 산업 다양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전략 확대
 - 신사업 분야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고용흡수력·취업계수 높은 산업·직무를 청년 눈높이에 맞는 대표산업 지정·관리

- **창업·창작을 통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

- 청년의 기술창업 적극지원과 개발된 제품 및 기술의 인수, 기업 성장 촉진 지원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시스템 활성화**

- 청년층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창구 일원화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 (가칭)청년통합고용정보망 운영 통해 정책 기초자료(고용·주거·생활·문화 등) 축적·활용

(9)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생애주기별 일자리 플랜을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 임신·출산기, 자녀 육아 여성을 위한 단시간·유연근무 일자리 활성화
- 재취업 여성의 취업 기회 제공을 위한 중소기업 인턴제도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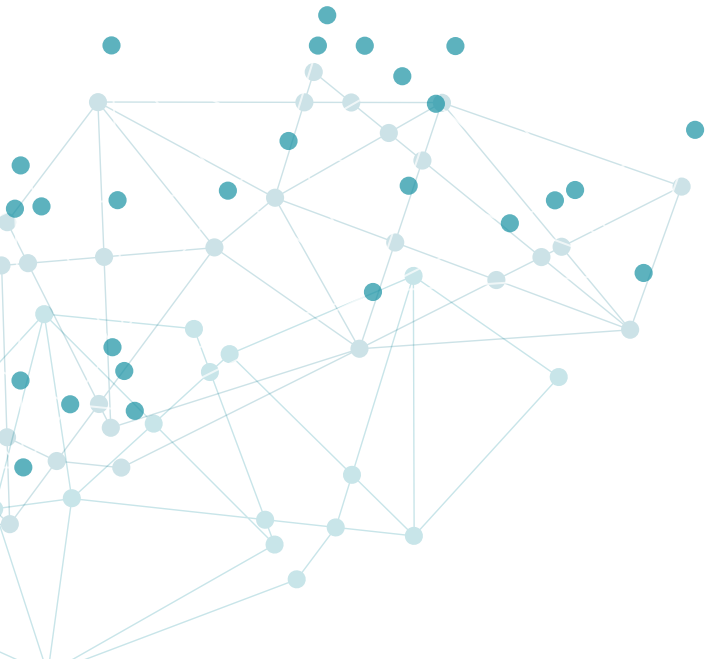
- **경남형 여성친화 직종 발굴을 통한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 경남지역 산업에 맞춘 가족친화기업 확산, 여성친화 직종 발굴
- 기업 수요 맞춤형, 직무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의 내실화

-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기업 등 창업 확대**

-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안정적인 좋은 일자리 확대 지원**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3장

관광·문화

제1절 관광

제2절 문화

제3장

관광·문화

제1절 관광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관광수요 분석

● 국민 국내 관광 수요

- 국민 국내 관광 수요는 지속해서 증가 추세이며, 수도권은 국민 국내 관광 수요의 약 30% 정도 차지하였으나 2018년은 감소하였음
- 강원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경상권은 국민 국내 관광 수요의 약 23~25%를 차지하였으나, 2018년은 29%로 증가하였음

(단위 : 천일)

〈표 4-3-1〉
권역별 국민 국내
관광 수요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수도권	103,989	119,850	121,008	143,757	94,444
강원권	44,988	39,062	38,423	46,297	87,796
경상권	103,062	96,531	97,284	108,595	162,841
충청권	65,581	69,098	69,836	79,191	78,209
전라권	66,897	63,172	67,343	79,102	89,136
제주권	13,789	19,102	18,481	22,730	45,440
전 체	398,308	406,818	412,378	479,673	556,890

주1 : 2018년부터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국민여행조사로 명칭변경, 조사방식 변경으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 결과 간의 비교는 불가함.

주2 : 2018년은 각 시도별 합과 전체 결과는 상이함(1회 여행시 여러 시도 방문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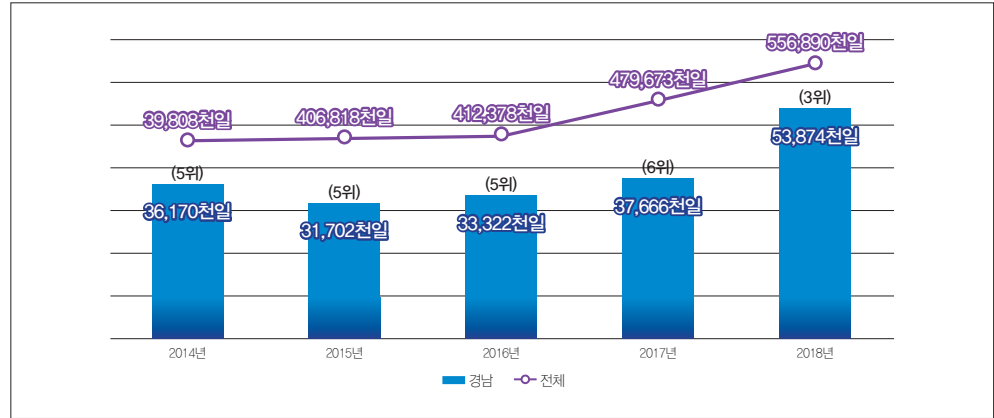
주3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 17개 시·도 중에서는 경기, 서울, 강원 등이 국내 관광방문지 중에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경남지역은 전국 5~6위 국내 관광방문지로 2018년의 경우는 전국 3위로 상승하였음

〈그림 4-3-1〉

국민 국내 관광 수요 현황



〈표 4-3-2〉

지역별 국민 국내 관광 수요

(단위 : 천회, 천인)

구분	참가 횟수					이동 총량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227,815	238,297	241,749	284,966	311,153	398,308	406,818	412,378	479,673	556,890
서울	26,729	27,656	27,234	35,514	14,811	39,970	41,724	38,011	49,671	23,789
부산	11,453	12,299	12,134	14,548	20,419	18,686	20,195	20,973	23,606	41,779
대구	5,892	6,162	5,464	6,054	6,613	9,070	8,946	8,680	9,242	10,612
인천	6,622	6,869	8,736	9,793	11,122	10,229	11,000	13,249	14,995	16,043
광주	4,561	4,609	3,797	4,982	4,396	8,390	8,673	6,297	8,885	7,700
대전	6,494	6,133	7,401	7,734	8,944	9,756	9,302	10,273	10,484	14,484
울산	2,672	2,801	3,712	3,374	3,891	3,883	4,347	5,232	4,709	6,541
세종	749	566	1,231	1,117	1,526	863	777	1,683	1,684	2,358
경기	36,195	44,327	44,893	54,554	38,279	53,789	67,125	69,748	79,090	54,612
강원	20,338	18,502	18,378	20,894	43,659	44,988	39,062	38,423	46,297	87,796
충북	9,506	9,875	11,697	14,664	12,044	16,187	16,809	19,862	23,606	19,749
충남	23,977	27,558	23,781	27,289	25,582	38,773	42,209	38,016	43,415	41,618
전북	15,654	14,899	16,406	20,437	18,633	29,388	24,386	27,833	31,604	29,163
전남	16,205	17,128	18,840	21,215	28,518	29,117	30,112	33,212	38,612	52,273
경북	19,081	18,384	16,262	18,461	27,840	35,250	31,338	29,075	33,369	50,035
경남	21,352	18,706	18,914	21,293	31,735	36,170	31,702	33,322	37,666	53,874
제주	4,229	6,023	6,077	6,995	14,222	13,789	19,102	18,481	22,730	45,440

주1 : 2018년부터 국민여행실태조사에서 국민여행조사로 명칭변경, 조사방식 변경으로 변경 전(2017년)의 조사 결과와 변경 후(2018년)의 조사 결과 간의 비교는 불가함.

주2 : 2018년은 각 시도별 합과 전체 결과는 상이함(1회 여행 시 여러 시도 방문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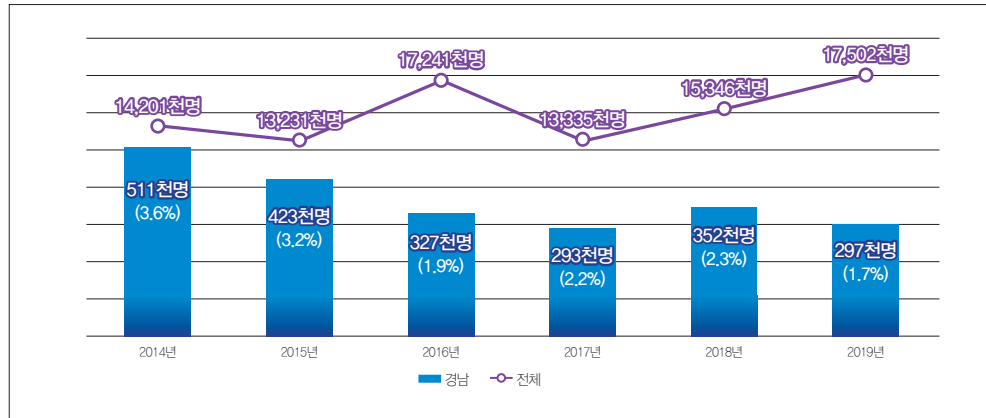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연도별 국민여행조사.

● 외래관광 수요

- 2016년 방한 외래관광객이 17,241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에는 사드 배치 갈등 이후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으로 급감하여 전년 대비 22.7% 감소하였음
- 2019년에는 17,502천명으로 2016년 수준으로 회복하였음
- 방한 외래관광객은 서울지역에 약 80%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부산, 인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경남지역은 방문율은 약 1~3% 수준으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탄력적인 방안이 필요함

〈그림 4-3-2〉

외래관광 수요



〈표 4-3-3〉

지역별
외래관광객 수요

(단위 : 천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국	14,201	13,231	17,241	13,335	15,346
서울	11,418	10,413	13,448	10,508	12,185
부산	1,136	1,362	1,793	2,013	2,255
대구	170	211	206	333	475
인천	710	899	1,068	1,333	1,273
광주	56	105	86	160	168
대전	156	158	172	226	260
울산	198	132	103	186	184
세종	14	26	34	53	61
경기	1,846	1,759	2,258	2,080	2,286
강원	1,008	846	1,103	906	1,488
충북	71	79	68	120	138
충남	127	172	172	173	214
전북	170	224	224	200	168
전남	227	238	155	93	107
경북	340	330	344	346	429
경남	511	423	327	293	352
제주	2,556	2,421	3,482	1,440	1,304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외래관광객 실태조사로 연구자 작성.

2) 경남 관광경쟁력 분석

(1) 관광인프라

● 관광시설

- 경남의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총 8,062객실로 전국 평균 12,122실보다는 적었으며, 객실 이용률도 40.24%로 전국 62.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MICE 개최 건수는 7,353건으로 전국 개최 건수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참가자 수는 1,415,517명으로 전국의 3.7%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안내소는 61개소로 전국 평균 30개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4〉

경남지역
숙박시설 현황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숙박시설	업체 수(개소)	1,983	100	117	
	호텔업	객실 수(실)	158,141	5,216	9,302
	객실 이용률(%)	62.44	40.24	-	2018년
휴양콘도미니엄	업체 수(개소)	235	17	14	
	객실 수(실)	47,938	2,846	2,820	
매출액(백만원)	7,664,356	261,826	450,844	2018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관광숙박업 등록현황, 한국호텔업협회, 2018 호텔업운영현황;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표 4-3-5〉

경남지역
회의·전시시설 및
관광안내소 현황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회의·전시시설	전문컨벤션센터(개소)	15	1	1	
회의·전시시설	MICE 산업	개최 건수(건)	213,263	7,353	12,545
	참가자 수(명)	37,822,294	1,415,517	2,224,841	2017년
	국제회의업 매출액(백만원)	1,303,342	20,801	76,667	2018년
관광안내소	개소	516	61	30	

주 : MICE 산업 현황은 Incentive Tour 산업 제외 수치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관광사업체조사, 한국관광공사(2019), 2017 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지역 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 관광사업체

- 관광진흥법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사업체 중 관광객이용시설업(294개소), 유원시설업(217개소), 관광편의시설업(276개소)은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업은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남
- 매출액으로는 관광업체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나타남

(단위 : 개소, 백만원)

〈표 4-3-6〉

경남지역
관광사업체 현황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관광사업체	여행업	22,283	1,047	1,311	2019년
	관광객이용시설업	4,580	294	269	2019년
	유원시설업	2,763	217	163	2019년
	관광편의시설업	4,369	276	257	2019년
	합계	29,626	1,558	2,000	2019년
매출액	여행업	8,462,198	74,543	497,776	2018년
	관광이용시설업	1,020,730	31,392	60,043	2018년
	유원시설업	1,970,884	108,347	115,934	2018년
	관광편의시설업	1,982,210	63,294	1,166,001	2018년
	합계	11,483,438	215,840	790,354	2018년

주 : 관광진흥법에 의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관광산업 사업체 현황임.
 자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2019년 4분기 관광사업체 현황.

(2) 관광자원

● 지정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 지정관광지는 전국 230개 지정, 경남은 21개가 지정되어 있음
- 경남의 지정관광지는 22개소였으나, 2016년 6월 비토관광지가 지정 실효되었음
- 관광단지는 전국 47개 지정, 경남은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와 거제 남부 관광단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관광특구는 전국 32개 지정, 경남은 부곡온천과 미륵도 2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그림 4-3-3〉

지정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현황도



● 생태·녹색 관광자원

- 국립공원의 개수와 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연공원은 1,053.83km²로 전국 평균보다 229km²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국유 자연휴양림의 면적은 전국 106,562ha의 0.3% 수준인 368ha이었으나, 공유 자연휴양림의 면적은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농원 145개소로 전국 평균에 3배가 많았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은 116개소로 전국의 10.7% 차지함

(단위 : 개소, km², ha)

〈표 4-3-7〉

경남지역
생태·녹색 관광자원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국립공원	개소	22	4	1	2019년	
	면적	6,726,298	865.26	395,664.59	2018년	
자원공원	면적	14,014.67	1,053.83	824.39	2017년	
자연 휴양림	국유	개소	43	2	3	2018년
		면적	106,562	368	6,268	2018년
	공유	개소	104	10	6	2018년
		면적	22,085	1,493	1,299	2018년
생태·경관보전 지역	개소	24	1	1	2018년	
	면적	37,764	0.002	2,221	2018년	
관광농원	개소	726	145	43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	개소	1,076	116	63	2018년	

자료 : 국립공원공단(www.knps.or.kr),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7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 역사·문화 관광자원

- 세계유산 14개 중 경남은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양산 통도사), 한국의 서원(남계서원), 해인사 장경판전이 등재, 세계기록유산으로는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이 등재되어 있음

(단위 : 개소, 개)

〈표 4-3-8〉

경남지역
역사·문화 관광자원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유네스코 등재유산	세계유산	14	3	0.8	2020년
	기록유산	16	1	0.9	2020년
사찰	전통사찰	968	103	57	2020년
	템플스테이	139	12	8	2020년

자료 : 유네스코유산(heritage.unesco.or.kr),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현황(2020년 기준), 템플스테이(www.templestay.com).

●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 경남의 스키장은 1개소였으며, 골프장은 49개소, 낚시터는 66개로 전국 평균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개소)

〈표 4-3-9〉

경남지역
레저(스포츠) 관광자원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스키장	18	1	1	2019년
골프장	486	49	29	2016년
낚시터	943	66	55	2019년

주 : 낚시터 현황은 낚시어선업 허가·등록 건수임.
 자료 : 한국스키장경영협회(www.skiresort.or.kr), 골프저널(www.golfjournal.co.kr), 해양수산부, 2019년 낚시터업 현황.

● 해양관광자원

- 어촌체험 휴양마을은 23개소로 전국 평균 6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은 484개소로 전국의 16.8%를 차지하고 있음

(단위 : 개소, 개)

〈표 4-3-10〉

경남지역
해양관광자원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어촌체험 휴양마을	97	23	6	2018년
섬(도서)	3,348	484	197	2019년

자료 : 지역관광발전,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http://ui.mof.go.kr/UI/INTRO/index.html>).

(3) 관광 인력

- 경남 관광산업 종사자 수는 9,339명으로 전국의 3.6% 수준이며, 6개 분야 모두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에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총 210명으로 전국 187명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광 관련 공무원 수는 전국의 4.0% 수준으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는 508명으로 전국의 3.0% 수준이며, 전국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은 7개소로 전국 평균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3-11〉

경남지역 관광 인력
및 양성기관

(단위 : 명, 개소)

구분	전국	경남	전국 평균	기준	
관광산업 종사자 수	여행업	99,077	2,352	5,828	2018년
	관광숙박업	69,926	2,481	4,113	2018년
	관광객이용시설업	23,154	1,125	1,362	2018년
	국제회의업	9,100	128	535	2018년
	유원시설업	26,189	1,814	1,541	2018년
	관광편의시설업	32,785	1,439	1,929	2018년
	합계	260,231	9,339	15,308	2018년
문화관광 해설사 수	양성 인원	5,627	443	331	2018년
	활동 인원	3,182	210	187	2018년
관광 관련 공무원 수		471	19	28	2018년
관광 인력 양성 기관	관광 관련 학과 재적생 수	16,756	508	986	2019년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55	7	3	2020년

주 : 관광 관련 공무원 수는 현원 기준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국외여행인솔자 인력관리시스템(www.tchrm.or.kr).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숨은 여행지(대안 여행지)의 부상

- 부킹닷컴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관광객이 집중되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지역보다는 비교적 덜 알려진 ‘대안 여행지’를 방문하는 여행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함²¹⁾
 - 전 세계 29개국 2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1%가 비교적 덜 알려진 ‘대안 여행지’로 목적지를 바꿀 의향이 있으며, 60%는 관광객 증가로 현지 지역사회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하는 앱 혹은 웹 서비스의 이용의향이 있다고 응답
- 국내에서도 대도시, 인기 여행지보다는 덜 번화한 곳, 부도심지를 방문함으로써 관광객 쏠림 현상으로 인한 불편을 피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됨(한국관광공사, 2019)
- 이는 오버투어리즘을 지양하는 추세와 더불어 TV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개성을 가진 새로운 여행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으로 분석됨²²⁾

21) 부킹닷컴(2019-11-25일), 부킹닷컴, 2020년 주목해야 할 8대 여행 트렌드 발표.

22) 이뉴스투데이(2019-12-30일), 하나투어 선정 ‘2020년 여행 트렌드’ 키워드 10.

● 소소한 여행, 여행의 일상화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가심비(가격대비 심리적 만족), 가시비(가격대비 시간 소비) 등의 개념이 확산하면서 물질적 소유 대신 짧고, 가까운 여행으로 소유욕을 해소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음(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즉, 여행이 특별한 날에 떠나는 것이 아닌 일상 중 틈틈이 짧은 시간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당일 여행, 1박 2일과 같은 단기간, 근교 여행, 스테이케이션, 호캉스 등 다양한 여행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한국관광공사, 2017)
- 2019년 상반기 국민여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대비 당일 여행 횟수는 23.6% 증가하였으나, 숙박 여행 횟수는 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한국관광공사, 2019)
- 주 52시간제 도입, 워라밸, 옐로(YOLO), 포미(FOR ME) 등 제도적 측면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여행의 일상화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 일상을 경험하는 생활 여행, 리빙 트립(Living trip)

- 과거, 랜드마크, 명소 중심의 방문형태에서 마을, 골목, 시장 등 지역주민의 일상을 경험하는 생활 여행의 선호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지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앞으로 이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
- 특히,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리, 골목 등을 포함한 구도심에 문화·예술·역사가 융합된 지역밀착형 도시재생 모델인 부산 감천문화마을, 통영 동피랑마을, 경주 황리단길, 목포 등이 인기를 끌고 있음(한국관광공사, 2017)
- 또한, 제주를 중심으로 현지에 살아보는 여행을 의미하는 리빙 트립(Living trip)인 한 달 살기가 유행하면서 강원도 한 달 살기, 남도에서 한 달 살기 등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내수축진에 대한 대안으로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
-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의 여행업계에서도 유럽 한 달 살기, 동남아 한 달 살기, 캐나다 한 달 살기 등의 여행상품을 출시·운영하는 등 리빙 트립의 공간적 범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을 여행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경남형 한 달 살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군별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테마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숙박비·체험비 등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음
- 과거 한 달 살기 등의 장기체류 여행은 은퇴자, 주부에 해당하는 여행 형태였지만, 최근, 리프레시 휴가, 안식월 등의 제도 등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³⁾

23) 매일경제(2019-07-22일), 2019 여행 뉴 트렌드 'PEACE' | 腕(탈)패키지·한 달 살기·체험&학습 눈요기 관광은 그만...맞춤형 여행 대세.

● 스마트 관광

-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를 중심으로 온라인여행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관광정보를 획득하고, 구매하는 스마트 관광(Smart tourism)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경남연구원, 2019)
- 부킹닷컴의 조사 결과, 응답자 22,000명 중 44%가 앱을 통해 미리 투어 및 액티비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46%는 여행 중 실시간으로 투어나 액티비티를 살펴보고, 예약에 앱을 활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음²⁴⁾
-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의 다양한 플랫폼들의 영향력이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액티비티 예약을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들이 증가하고 있음
- 경남에서도 수요자 중심의 위치기반 스마트 다국어 관광해설 시스템 구축 사업, 지역관광 플랫폼 구축 등 스마트 관광 체계에 대응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디지털과 SNS에 등에 능숙하고, 여행에 적극적인 Z세대가 여행업계의 주요 타겟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행의 의사결정에 있어 혁신적 기술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됨

● 배움과 경험의 여행

- 주 52시간제 도입,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의 개념이 확산, 퇴근 후 자기 개발을 즐기는 원데이 클래스 붐이 일면서, 여행에서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²⁵⁾
- 특히, 여행에 기억할만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구직활동, 직장생활 등 현실에서 벗어나 여행, 봉사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체험하면서 진정한 자아, 적성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갭이어(Gap Year)족이 증가하고 있음(경남연구원, 2017)
- 하나투어는 유럽의 유명 꽃 레슨 브랜드인 지타엘츠(Zita Elze), 맥퀸즈(Mc Queens)와 독점계약을 체결하여 '영국 맥퀸즈 · 지타엘츠 플라워 클래스' 상품, 축구 마니아들을 겨냥한 '영국 · 스페인 축빠의 길' 상품을 출시하여 인기를 끌었음
- 한국관광공사는 한 분야의 지역 전문가가 함께 여행하는 '명사와 함께하는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태국 마라톤 컨셉투어(마라톤 참가+자유여행), 차이나 비즈니스 학습여행(중국의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 및 사회 변화 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SNS의 영향력 Up,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

- 여행의 경험을 SNS를 통해 공유하는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사진 찍기 좋은 곳, 인생샷(인생에서 찍은 사진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 등이 여행지를 선택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음

24) 부킹닷컴(2019-11-25일), 부킹닷컴, 2020년 주목해야 할 8대 여행 트렌드 발표.

25) 매일경제(2019-07-22일), 2019 여행 뉴 트렌드 'PEACE' | 脫(탈)패키지 · 한 달 살기 · 체험&학습 눈요기 관광은 그만...맞춤형 여행 대세.

- 특히, 여행의 행위를 즉각적으로 사진 이미지로 편집·기록하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이 대세가 되면서 인스타그램에 기록하고, 공유할 만큼 가치가 있음을 의미하는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음
- 또한, 여행을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남기려는 경향이 증가하면서 유튜브(YouTube) 채널에 실시간으로 여행 관련 영상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관광명소를 발굴·소개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인기를 끌고 있음(한국관광공사, 2019)
- 국내여행 유튜버 중 개인 크리에이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영상 기준 87%, 조회 수 기준 75.7%→ 대형 콘텐츠 공급자보다 지역여행, 지역소개를 소재로 하는 소규모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 확대
- 트립닷컴이 2019년 6월~7월까지 20~50대 고객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세대별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정보를 얻고, 이를 공유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표 4-3-12〉

정보획득채널 및 사진·영상 업로드 채널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정보획득 채널	1위	인스타그램(45)	블로그(62)	블로그(67)	블로그(60)
	2위	블로그(43)	인스타그램(33)	지인추천(43)	지인추천(30)
	3위	유튜브(29)	지인추천(30)	커뮤니티(22)	기타(27)
사진·영상 업로드 채널	1위	인스타그램(65)	인스타그램(52)	미사용(33)	블로그(27)
	2위	미사용(18)	미사용(23)	페이스북(21)	미사용(23)
	3위	페이스북(12)	기타(8)	인스타그램(18)	페이스북(20)

주 : 다중응답.
 자료 : TravelDALY(2019-07-24일), 20대 여행정보 검색 1위 . . . 인스타그램.

- 이에 따라 경남도는 경남관광 글로벌 대학생 SNS 기자단 운영, 해외 주요 SNS 채널, 온라인 여행사(OTA),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 홍보·마케팅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발달, 스마트 기기 이용 확산, 세대를 초월하는 SNS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앞으로도 SNS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관광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관광 홍보·마케팅, 정보제공 등에 SNS 활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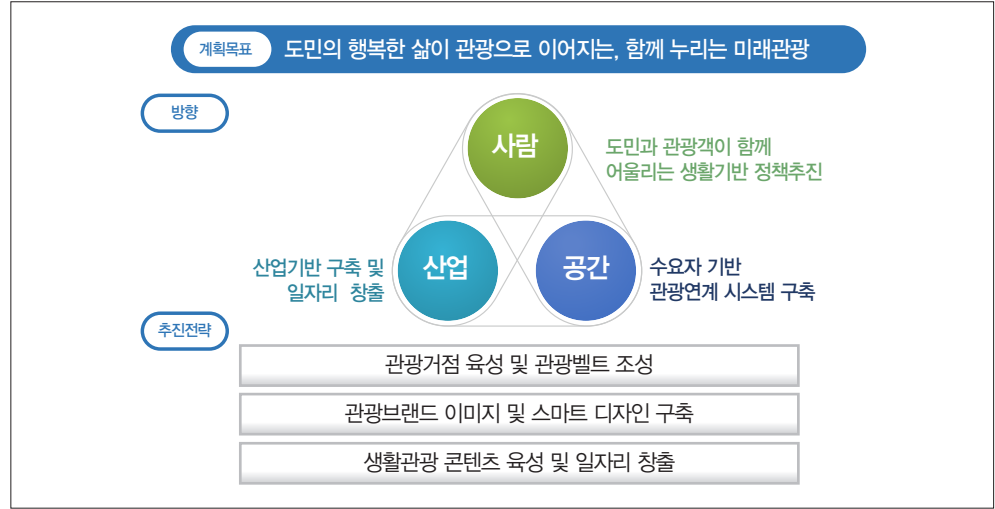
● 여행의 최우선 순위 '안전'

- 전 세계적으로 무차별 테러 발생, 전염병(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등)의 유행, 자연재해(지진, 해일 등), 대규모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관광목적지 결정에 있어 안전이 최우선 순위가 되고 있음(경상남도, 2017)
- 또한, 이러한 현상들이 관광객들의 여행 제약요인이 되면서 관광수요 침체를 야기하고, 관광산업에 위기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차원에서 안전사고, 재난, 전염병 등 다양한 유형의 관광 제약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4-3-4〉

관광 부문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의 행복한 삶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함께 누리는 미래관광

- 사람이 중심이 되는 관광기반 조성 및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기반 정책 추진
-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역 기반 관광산업 육성으로 고부가가치 관광시장 및 일자리 창출
- 수요자 중심의 관광시설 확충 및 연계 시스템 구축 등으로 연계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경남 전체를 관광공간으로 육성

2) 추진전략

● 관광 부문 핵심지표

〈표 4-3-13〉

관광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외래관광객 수	30만명	100만명	200만명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24만명	27만명	30만명
관광지출액	3.4조원	4조원	5조원

●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 역사문화, 자연환경 등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숙박, 식음, 쇼핑 등 다양한 인프라를 보유한 관광거점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
- 지리산관광벨트, 낙동강관광벨트, 웰니스관광클러스터 등 기존 관광벨트 외 신규 관광벨트 육성

● 관광브랜드 이미지 및 스마트 디자인 구축

- 지역 특성, 문화, 역사 등을 기반으로 특화 관광브랜드 이미지 구축, 브랜드 이미지를 적용한 스마트 디자인 설계 및 구현

● 생활관광 콘텐츠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일상의 영역도 관광의 공간으로 인식, 일상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는 관광 활동과 연계·포괄하는 지원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

4. 추진시책

1)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 지역 간 연계협력과 지역 관광거점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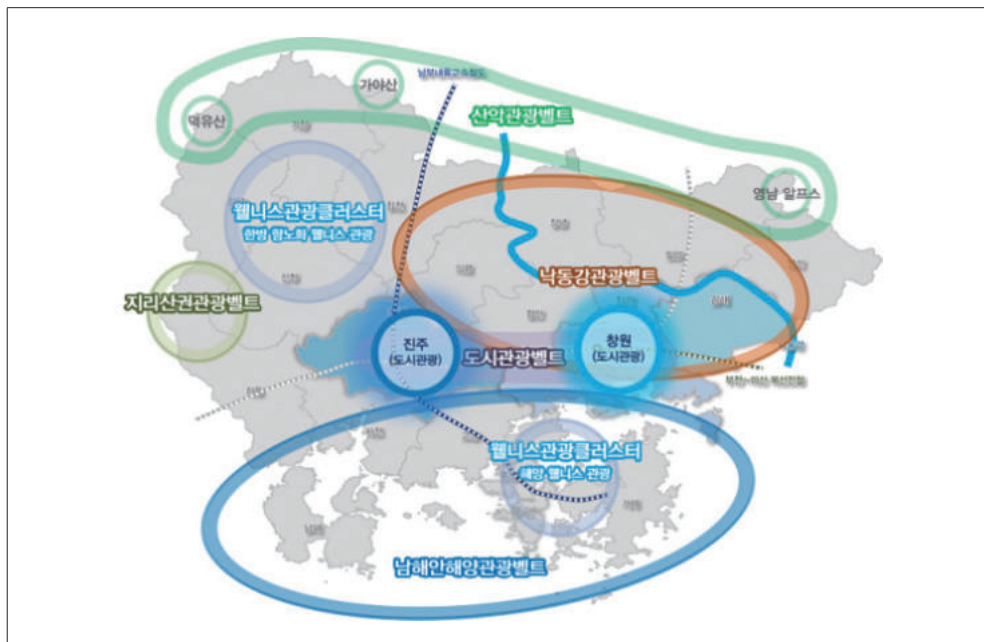
-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선정하여 개발을 집중 시켜 관광산업의 집객 효과를 유도
- 관광공간을 집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메가 이벤트를 개최하여 단기간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고, 교통·정보·가격 등 관광거점과 주변 지역을 관광벨트화하여 시너지 효과 극대화

● 지역의 특성과 테마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벨트 조성

- 지역이 특화 관광자원, 테마, 지리적 입지, 교통체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광벨트는 지속해서 개선 및 발전하여 운영

〈그림 4-3-5〉

경남지역
관광거점 육성 및
관광벨트 조성



2) 특화 관광브랜드 이미지 및 스마트 디자인 구축

● 특화 관광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육성

- 도민과 관광객들이 공감하고 선호하는 경남 대표 관광브랜드 이미지와 지자체별 특화 관광브랜드 이미지 개발, 개발된 이미지는 관광단지, 시설, 상품 및 프로그램 등 적용
- 지자체별 특화 관광브랜드를 연계 관광상품으로 확장하고 관광테마, 공간, 교통 등을 활용 다양한 관광상품 디자인

● 스마트 관광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관광 육성

- 소셜미디어와 앱 활용이 보편화되고, 관광마케팅 및 서비스 플랫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스마트 관광이 상용화되는 추세
- VR·AR 기반 관광콘텐츠 제작 및 스마트관광 오픈 플랫폼 제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보 등 스마트관광의 기반 조성

3) 생활관광 콘텐츠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역 맞춤형 스토리 발굴 및 생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 현지인 풍습, 생활 등 지역문화를 체험하는 활동의 선호가 확산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만의 독특한 생활방식이나 스토리를 발굴하여 핵심 관광프로그램 개발·운영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도모 추진
- 주요 관광지 외에 현지인이 주로 방문하는 숨은 관광자원(골목길, 맛집, 공원 등)과 생활공간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고 관광객과 도민이 함께 어울리고 지역민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 또한, 관광객 체류 확대를 위한 직업 교육·체험(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체류 관광객의 정주 인구 전환 등 유도

● 지역민 주도 생활관광 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

-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민이 프로그램을 운영·참여하도록 유도, 도민을 생활관광 전문 인력양성
- 지역민이 운영하는 'OO마을 생활관광 전담센터' 설치, 지역민이 다양한 관광 활동을 생활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제2절
문화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문화시설

● 전국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 2019년 1월 초 현재 경남은 경기, 서울, 강원에 이어 4번째로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단위 : 개소)

〈표 4-3-14〉

전국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9.1.1. 기준)

구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 원	문화 의 집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전국	2,825	3	1,096	840	233	23	881	416	363	102	258	72	172	14	255	231	101
서울	399	2	173	145	22	6	128	30	70	28	45	5	35	5	21	25	5
부산	107	0	43	27	14	2	30	13	6	11	8	2	4	2	11	15	0
대구	80	0	41	24	10	7	16	8	5	3	4	2	0	2	11	8	0
인천	104	0	50	41	9	0	28	15	12	1	5	2	3	0	10	10	1
광주	63	0	23	17	6	0	12	5	3	4	12	4	8	0	7	5	4
대전	55	0	24	22	2	0	14	4	4	6	5	2	3	0	4	5	3
울산	43	0	19	15	4	0	10	8	1	1	0	0	0	0	5	5	4
세종	19	0	10	9	1	0	7	3	4	0	0	0	0	0	1	1	0
경기	537	1	264	249	11	4	136	55	71	10	52	12	36	4	44	31	9
강원	215	0	57	34	22	1	95	50	40	5	18	4	14	0	21	18	6
충북	130	0	45	30	15	0	44	26	13	5	11	5	6	0	12	11	7
충남	166	0	62	43	19	0	55	34	17	4	9	2	7	0	18	16	6
전북	158	0	58	39	18	1	41	28	9	4	16	7	9	0	17	14	12
전남	206	0	69	47	21	1	58	38	17	3	32	8	24	0	21	22	4
경북	201	0	65	37	28	0	69	39	19	11	11	5	5	1	27	23	6
경남	207	0	71	45	25	1	70	44	21	5	9	5	4	0	22	20	15
제주	135	0	22	16	6	0	68	16	51	1	21	7	14	0	3	2	1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인용.

● 경남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 2019년 1월 초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에 분포된 주요 문화기반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창원시가 38개소로 가장 많은 문화기반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김해시 28개소, 진주시 18개소 순으로 나타났고, 함양군이 4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15〉

경남지역
문화기반시설 기본현황
(2019.1.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국립 도서관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 회관	지방 문화원	문화 의 집		
			계	지자 체	교육 청	사립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계	국공 립				사립	대학
경남	207	0	71	45	25	1	70	44	21	5	9	5	4	0	22	20	15
창원시	38		17	13	4		9	7		2	3	2	1		3	3	3
진주시	18		7	5	1	1	8	3	3	2	1	1			1	1	
통영시	14		5	4	1		2	1	1		2		2		2	1	2
사천시	7		3	1	2		1		1		1		1		1	1	
김해시	28		8	6	2		11	9	1	1	2	2			2	1	4
밀양시	11		4	2	2		5	1	4						1	1	
거제시	14		6	5	1		6	1	5						1	1	
양산시	12		5	4	1		2	1	1						1	1	3
의령군	5		1		1		2	1	1						1	1	
함안군	5		2	1	1		1	1							1	1	
창녕군	8		3	1	2		3	3							1	1	
고성군	10		2	1	1		6	5	1						1	1	
남해군	5		2	1	1		1	1							1	1	
하동군	6		1		1		2	2							1	1	1
산청군	11		1		1		6	5	1						1	1	2
함양군	4		1		1		1	1							1	1	
거창군	5		2	1	1		1	1							1	1	
합천군	6		1		1		3	1	2						1	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 2019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인용.

- 이처럼 경남 지역에 많은 문화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시·군의 경우 여전히 문화시설의 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수요에 부합하는 문화기반시설의 체계적 확충이 필요함
- 기존 문화시설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하여 문화시설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생활문화센터

-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 동호회 등을 위한 연습·발표 공간과 함께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커뮤니티공간, 북카페, 공연장 등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생활문화공간으로 2020년 2월 현재 전국에 130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경남 내 생활문화센터는 2015년 거창군 하성 단노을생활문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8개 시·군 중 창원시, 밀양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등 6개 시·군에 8개소가 개관되어 운영 중에 있음

〈표 4-3-16〉

경남지역 생활문화센터
개관 현황
(2019.1.1. 기준)

구분	센터명	운영방식	공간유형	선정연도	개관연도	개관일
창원시	중앙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존	2016	2018	04.12.
	백산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유휴	2015	2016	03.01.
밀양시	신안마을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기존	2015	2016	03.01.
	기산리 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기존	2016	2017	10.16.
남해군	남해생활문화센터	직영	유휴	2016	2017	01.05.
하동군	악양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유휴	2015	2018	03.01.
산청군	덕산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기존	2016	2017	04.10.
거창군	하성 단노을생활문화센터	주민자율	유휴	2014	2015	10.19.

- 경남의 생활문화센터들은 주민학습동아리 모임, 마을축제 개최 등 지역사회 주민들의 만남과 교류를 지원하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
- 2020년에는 함안(1), 창원(3), 진주(1), 사천(1), 김해(2), 밀양(1), 양산(2), 고성(1), 남해(2), 하동(1), 산청(1)에 총 16개소의 생활문화센터 건립이 예정되어 있음

● 경남 지역문화재단

-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정책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문화진흥기관으로 ‘공익적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이면서 공직유관단체’임
- 경남의 광역단위 문화재단은 2010년 설립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있으며, 기초문화재단은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밀양시, 거창군 등 6개 시·군에서 운영 중에 있음

〈표 4-3-17〉

경남지역 지역문화재단
현황(2019.1.1. 기준)

구분	재단명	설치조례	최초출연금(억원)				설립일 (등기기준)
			중앙문예 진흥기금	시도 출연	기타	계	
광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	-	2010.03.23.
	창원문화재단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1.0	-	1.0	2008.02.20.
	사천문화재단	사천시 사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	3	9.7	12.7	2011.10.28.
기초	김해문화재단	김해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0.5	0.5	2005.02.07.
	거제문화예술재단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0.01	-	0.01	2003.10.06.
	밀양문화재단	밀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2	-	32	2015.12.09.
	거창문화재단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0.5	0.5	2017.02.28

2) 문화유산

● 국가 및 시도 지정 문화재

- 가야문화, 불교문화, 유교문화, 해양문화 등 4대 전통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은, 후대에 와서 유교 및 불교문화의 번성으로 유명 사찰들과 국보급 문화재를 다수 가지고 있음
- 도내 지정(등록)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308건, 시도지정문화재 892건, 등록문화재 44건, 문화재자료 641건 등 총 1,885건임

(단위 : 건)

〈표 4-3-18〉

전국 시도별
국가·시도문화재
지정 현황
(2018.12.31. 기준)

구분	총계	국가지정									시도지정					문화재 자료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 무형 문화재	국가 민속 문화재	소계	등록 문화재	시도 유형 문화재	시도 무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 민속 문화재	소계	
전국	13,656	336	2,146	505	112	459	142	299	3,999	784	3,363	601	1,712	470	6,146	2,727
서울	1,808	163	706	67	3	12	29	41	1,021	203	395	49	39	33	516	68
부산	477	5	47	6	2	7	5	2	74	19	184	25	51	19	279	105
대구	270	3	72	9	0	2	0	6	92	11	76	17	17	4	114	53
인천	264	1	29	18	1	14	5	0	68	8	68	28	65	2	163	25
광주	156	2	14	2	1	2	1	3	25	19	29	20	24	9	82	30
대전	229	2	13	1	0	1	0	2	19	21	57	24	47	2	130	59
울산	142	2	8	5	0	3	0	2	20	6	34	5	46	1	86	30
세종	44	0	2	0	0	1	0	1	4	0	13	3	11	0	27	13
경기	1,119	11	161	69	4	19	11	22	297	85	298	68	183	12	561	176
강원	650	11	81	18	25	42	3	11	191	40	162	29	80	4	275	144
충북	797	12	94	19	10	24	4	21	184	29	311	28	135	20	494	90
충남	1,061	28	130	50	3	17	4	24	256	60	189	53	161	28	431	314
전북	1,015	8	95	39	7	32	8	13	202	68	239	87	117	35	431	314
전남	1,252	21	182	45	20	61	15	38	382	100	237	59	192	40	528	242
경북	2,117	54	341	99	15	67	9	93	678	47	465	46	154	158	823	569
경남	1,885	13	162	51	12	44	14	12	308	44	570	39	262	21	892	641
제주	387	0	9	7	9	49	4	8	86	24	36	21	128	82	267	10
기타	92	0	0	0	0	62	30	0	92	0	0	0	0	0	0	0

자료 : 문화재청누리집_통계정보

- 경남의 무형문화재는 밀양백중놀이, 영산쇠머리대기, 통영오광대, 남해안 별신굿 등과 같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정한 국가무형문화재와 소목장, 판소리, 장도장 등과 같은 시도무형문화재가 있음. 이러한 지역의 문화자원에 대한 역사문화교육이나 관광자원으로서의 적극적 활용이 향후 더욱 크게 요구됨

● 가야문화유산

- 경남은 고대 가야문화의 발상지로서 많은 수의 가야문화 유적과 유물이 분포하고 있음
- 가야유적은 비지정 문화재를 포함해서 2019년 현재 전국에 665개소가 분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81.8%인 544개소가 경남에 소재해 있음

(단위 : 개소, %)

〈표 4-3-19〉
가야유적 현황
(2019. 9월 기준)

구분	합계	지정문화재			비지정	비고
		소계	국가사적	시·도		
전국	665	58	38	20	607	
경남(비중)	544(81.8)	44	30	14	500(82.4)	

주 : 가야유적은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자료 : (사)이코모스한국위원회,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위한 연구용역(2015년); 경상남도 내부자료.

- 경남 창원시에는 1990년 6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를 개소하여 경남을 비롯한 부산시, 울산시 등 가야문화권역의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 발굴조사·연구를 하고 있음
-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가야사 복원은 우리나라 고대문화의 한 축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경상남도는 가야사 조사연구·정비복원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구성, 가야고분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단 구성 등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복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

3) 문화산업

● 콘텐츠산업 매출액

- 경남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분야의 제조 및 제작업은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대부분이 유통업에 해당함
- 전국 문화산업의 매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산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 전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의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전국 대비 비율이 1.3%에 지나지 않아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임
- 따라서 경남의 문화산업의 미미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남도 차원의 육성 지원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함

〈표 4-3-20〉

전국 콘텐츠산업 지역별 매출액 현황 (2017)

(단위 : 백만원,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비중	
합계	20,755,334	1,082,228	5,804,307	13,142,272	5,494,670	493,441	18,043,595	16,413,340	11,922,329	15,041,370	4,851,561	113,044,446	100.0	
서울	11,644,169	568,621	3,754,518	5,501,823	3,192,434	363,779	14,989,884	14,120,667	5,445,738	9,194,609	3,651,316	72,427,557	64.1	
부산	562,179	12,872	212,431	172,870	223,604	15,370	282,494	692,594	353,984	238,883	94,204	2,861,484	2.5	
대구	411,689	14,983	221,536	128,555	142,459	212	157,772	301,297	294,313	224,254	80,598	1,977,667	1.7	
인천	418,798	18,716	124,413	141,538	139,791	10,256	117,531	33,309	395,295	158,938	61,191	1,619,777	1.4	
7 개 시	광주	275,059	26,213	25,127	75,711	98,049	28,715	94,175	107,810	111,441	92,449	1,005,745	0.9	
대전	246,205	10,328	36,042	57,800	96,755	4,567	110,284	223,440	115,663	449,102	60,023	1,410,208	1.2	
울산	137,083	3,692	40,476	48,001	57,195	90	93,596	56,475	11,063	151,136	8,117	606,924	0.5	
세종	29,747	266	9,015	-	11,469	-	1,774	13,540	1,629	2,770	221	70,431	0.1	
9 개 도	경기	5,972,109	352,354	941,091	5,465,652	998,585	58,127	1,230,962	454,467	3,872,831	3,605,534	714,686	23,666,399	20.9
강원	65,484	17,089	69,652	44,528	63,858	3,465	156,574	29,484	58,599	85,703	19,998	614,434	0.5	
충북	86,671	2,357	32,447	41,571	64,868	692	109,033	41,426	363,080	81,542	46,895	870,583	0.8	
충남	208,702	1,905	39,964	102,236	74,774	3,125	84,580	45,905	202,243	99,463	6,895	869,791	0.8	
전북	103,095	12,419	42,842	71,997	76,074	1,611	97,435	91,451	111,368	70,873	17,284	696,450	0.6	
전남	50,329	1,623	47,450	54,759	37,697	1,479	101,141	83,811	56,666	52,203	154	487,313	0.4	
경북	280,502	25,966	74,010	74,305	68,659	720	150,631	11,916	87,884	236,591	2,504	1,013,029	0.9	
경남	223,436	6,957	120,357	122,669	122,482	1,758	196,144	57,794	375,282	282,163	12,584	1,521,625	1.3	
제주	40,077	5,877	12,937	1,038,257	25,918	123	69,585	47,954	65,251	15,157	3,894	1,325,030	1.2	

주 : 애니메이션(극장 매출액, 방송사 수출액)산업 매출액 제외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 기준).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의 연도별 매출액 현황으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의 연평균 증감률을 보면 7.5% 증가한 추세를 보임. 이는 전국 전체의 6.1%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임

(단위 : 백만원, %)

〈표 4-3-21〉

경남 연도별 콘텐츠산업 매출액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경남	1,316,881	1,361,055	1,521,625	11.8	7.5
전국	100,336,843	105,929,966	113,044,446	6.7	6.1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 기준).

● 콘텐츠산업 종사자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17년 현재 13,536명으로 전국 611,361명의 2.2%를 차지함. 이 중 음악 부문의 종사자가 3,33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출판 관련 종사자가 3,240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종사자 현황을 보임

〈표 4-3-22〉

경남 콘텐츠
산업별 종사자 현황
(2017)

(단위 : 명, %)

구분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 정보	콘텐츠 솔루션	합계	전국 대비 구성비
경남	3,240	436	3,339	2,498	578	1	305	173	613	2,320	27	13,536	2.2
전국	151,308	10,397	77,005	81,932	29,546	5,161	45,337	65,159	34,778	82,470	28,268	611,361	100.0

주 : 출판(계약배달 판매업(신문배달판매)), 2017년도 방송산업 종사자 포함되어 이전년도와 단순비교 불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 기준)

- 경남 문화산업의 경우 음악, 출판, 게임, 지식정보 영역에서 비교적 큰 매출액을 보이나 기타 분야의 경우 매우 저조한 상황임
- 경남지역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을 보면, 2015년에서 2017년 말 현재까지 연평균 1.4% 증가율을 보임. 이는 전국 연평균 증감률인 2.7%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증가율이지만 지역 콘텐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음

〈표 4-3-23〉

경남 연도별
콘텐츠산업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 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경남	15,971	15,360	16,418	6.9	1.4
전국	580,192	595,549	611,361	2.7	2.7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콘텐츠산업 통계조사(2017년 기준)

4) 경남 도민 문화예술 활동 현황

● 문화예술행사 관람 및 참여율

- 경남 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76.5%로 전국 평균(81.8%)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은 13.0%로 전국 평균(10.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4-3-24〉

경남 도민들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및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 수	10,102	1,388	443	469	516	475	510	606	664	297
관람률	81.8	85.2	78.6	78.9	80.5	74.2	69.6	71.8	76.5	81.0
참여율	10.4	9.3	8.1	13.5	7.7	4.8	7.9	6.6	13.0	25.4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도민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예술인 창작 환경개선 및 예술생태계 활성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을 이끌어 올릴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교육 실태

- 경남 도민들의 최근 1년 동안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9.1% 보다 높은 19%로 나타나, 전국에서 제주(24.5%) 다음으로 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표 4-3-25〉

경남 도민들의
1년 이내 문화예술교육
경험 여부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 수	10,102	1,388	443	469	516	475	510	606	664	297
경험 있음	9.1	6.7	5.3	8.0	6.9	10.2	9.5	7.8	19.0	24.5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경남 도민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애로사항을 시간부족(27.8%), 관심강좌없음(18.8%), 비용부담(17.5%) 등으로 응답하였음. 그중에서도 교통불편(5.2%), 편의시설불편(3.2%), 동행자없음(3.3%), 주변시설없음(11.9%) 등의 애로사항은 전국 평균보다 경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단위 : 명, %)

〈표 4-3-26〉

경남 도민들의
문화예술교육
애로사항

구분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표본 수	10,102	1,388	443	469	516	475	510	606	664	297
비용부담	19.8	20.8	8.8	26.9	16.2	15.8	9.7	13.5	17.5	8.8
시간부족	32.2	34.2	38.3	31.5	27.3	41.2	32.5	29.9	27.8	7.7
관심강좌없음	22.8	19.2	23.8	17.1	25.8	18.4	21.9	26.9	18.8	26.0
교통불편	2.8	2.9	2.7	5.1	4.9	4.9	5.0	2.8	5.2	6.8
편의시설불편	2.6	4.1	2.3	0.7	2.1	0.9	1.1	0.9	3.2	11.2
관련정보부족	8.7	8.9	10.4	9.5	5.0	9.2	10.3	8.1	8.4	21.7
동행자없음	2.7	2.1	2.0	1.6	1.0	3.6	1.9	3.0	3.3	9.6
주변시설없음	7.5	7.3	11.8	6.1	17.3	5.9	15.4	12.9	11.9	6.7
기타	0.9	0.4	0.0	1.4	0.4	0.1	2.1	2.0	3.8	1.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 따라서 경남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일과 여가생활의 조화로운 균형 추구

- **현재 삶을 중요시하는 라이프스타일 변화**
 -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삶과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
 -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함을 의미하는 옴로(YOLO: You Only Live Once),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Work-and-life Balance)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2)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드**
 - 문화예술 분야에서 인터넷TV(IPTV), 모바일, 홀로그램, 가상현실(VR)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즐기는 20~30대 ‘스마트컬슈머(Smart+Culture+ Consumer)’를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 소비 트렌드가 형성됨
- **경남도의 콘텐츠산업에 대한 관심 지속**
 - 콘텐츠산업의 육성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노력이 계속됨에 따라 고유한 지역문화를 매개로 하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표 4-3-27〉

경남도 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사업

구분	내용
경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	콘텐츠 스타트업 멘토링랩, 콘텐츠 투자유치 스타터-클라우드펀딩,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 전문가 양성과정, 로봣랜드 테마파크 수요형 아이디어 발굴, 스타트업 서바이벌 지원프로그램, 콘텐츠 고도화 지원사업, 협업형 기술융합 콘텐츠 제작지원(김해시 일원)
경남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콘텐츠 분야 인력·인프라 확충 및 창작·창업 문화 활성화(창원시 일원)
경남음악창작소 운영	음반제작지원사업, 도내 공연지원사업, 국내 쇼케이스 지원사업, 해외 교류지원사업, 뮤지션 및 음악산업 관계자 네트워킹, 음악창작소 대관 및 시설운영(김해시 일원)
경남웹툰캠퍼스	청소년, 일반인, 작가 등 대상 교육·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창원시 일원)
경남저작권서비스센터	저작권상담, 산업현장서비스, 맞춤형저작권교육, 사업화지원(창원시 일원)
경남 지역특화 스토리 육성	경남 소재 원천스토리 발굴 및 OSMU(경남스토리 공모전 등)
경남형 융합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제조·기계·로봇 등 하드웨어 분야와 도내 콘텐츠 개발(SW) 기업컨소시엄
경남 e-스포츠 활성화 지원	2020대통령배e마추어 e-스포츠대회 경남대표 선발전 및 전국대회 참가
경남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 조성	가야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AR콘텐츠 개발
뉴-아트창작공연지원	디지털 기술(CT)을 적용한 창작공연 개발지원, 컨설팅

자료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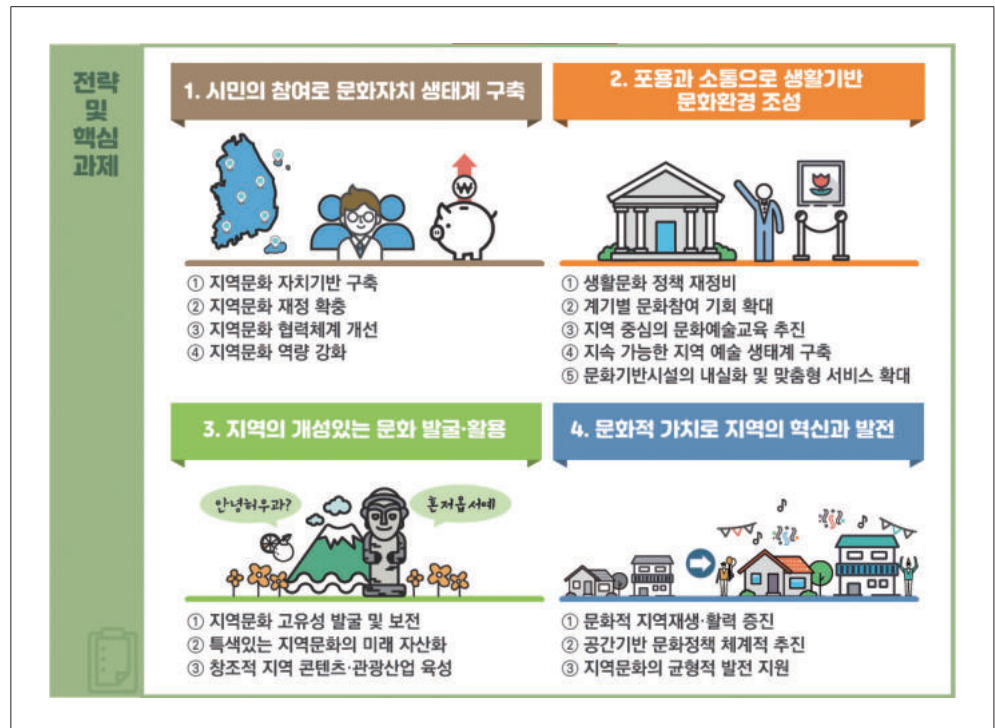
3)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 시대 도래

● 문화 분권 및 문화 민주주의 기반 정책 추진

- ‘문화 분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한 필요조건이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충분조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행복한 문화적 삶이 문화자치로 구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 민주주의’는 문화의 민주화 단계를 넘어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소외계층 없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함
-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근거해 수립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중앙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 기관 단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그림 4-3-6〉

제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전략 및 핵심과제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활성화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음
- 국민 기초문화생활 보장, 국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문화도시 지정 확대),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문화재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일상 속 문화복지 지원 강화 및 도민주도 문화생태계 구축**
 - 주체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경향을 반영하여 도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에서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민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및 창작환경 다각화를 지원함
-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및 창조적 콘텐츠산업 육성**
 - 지역 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활용을 통해 소중한 역사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가치를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향유기반을 조성하며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창출함
 - 지역 콘텐츠산업의 미흡한 현실을 극복하며 경남도 차원의 육성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함

2) 추진전략

- **문화 부문 핵심지표**

〈표 4-3-28〉

문화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80.2%	85%	90%
인구 천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0.08개	0.10개	0.12개
콘텐츠산업 매출액 비중(경남/전국)	1.3%	1.4%	1.5%

(1) 도민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및 창작환경 다각화

- **도민 생활문화공동체 육성 지원 강화**
 - 도민들의 문화적 삶의 영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민이 참여하는 자발적인 생활문화공동체의 형성과 활동을 지원하여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경험을 축적하고 공동체와 개인의 문화적 역량과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전략이 필요함
 - 도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도민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경제적 지원 및 보조사업 실시 등 도와 시·군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활동 활성화**
 - 기업과 예술단체의 파트너십을 지원하는 협력 및 후원활동에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지역 소재 대기업 및 중소기업 정보 DB 구축 및 제공

● 소외계층 문화복지 지원 확대

- 도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광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문화복지 지원

● 경남 예술인 창작환경 개선 및 복지 지원

- 도민, 예술인 누구 하나 소외됨 없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도민 주도의 문화예술정책 추진
- 도내 문화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창작활동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 또한 경남 공연예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문화 다양성 증진으로 공연예술 창작환경의 다각화 및 유통의 활성화 도모

(2)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및 가치 재창조

●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역량 강화

- 도내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으로 효율적 관리 기반 제공
-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과학적 문화유산 보호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통해 경남도의 비지정문화재 보호기반 확대, 경남도의 근대유산 보호·등록 및 지역 역사문화 자원으로 활용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한 체계적인 전승자 관리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의 전통예술 공연 및 체험행사 확대

● 근대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관리

- 경상남도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도입을 통한 근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 및 자원화 방안 마련
-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 등 문화재청 지원사업 지원 및 근대 테마 관광 도시로서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

(3)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강화

● 경쟁력 있는 콘텐츠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인력양성, 사업화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 구축 필요
-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로 경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함

- **첨단기술을 활용한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화**

- 경남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창작 소재 제공 및 지역 특화 문화상품 개발
- 첨단기술(AR, VR 등)을 활용한 경남 전통문화예술 자원의 테마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 콘텐츠 제작·유통·소비와 관련한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 고가장비 이용, 상품개발, 수출지원 등 콘텐츠산업 업계 공통의 과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지원체계 구축

4. 추진시책

1) 도민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 및 창작환경 다각화

(1) 도민중심 문화예술 활동 및 전문예술인 지원

- **기초 단위(생활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지역분권화의 차원에서 생활권 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필요, 경남의 각 지역 여건에 따라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운영 모델 다양화됨

- **아마추어 예술 활동 및 생활문화 동아리 지원**

- 도내 아마추어 창작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경남의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 확대 및 지역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 도민들의 문화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도민들의 생활문화 활동 참여 적극 장려

- **경남 예술인과 도민의 협력적 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경남 예술인과 도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특성(청소년, 시니어, 여성 등)에 맞는 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으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특히 경남도립예술단은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여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고 보는 예술, 듣는 예술에서 참여하는 예술로 확장해 나가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음
- 시·군 오케스트라와 지역 예술인이 함께해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 방안 강구

● 도내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 도내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작활동과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예술 활동 역량 강화 도모
- 특히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가정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아 역할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내 시군별 상황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적합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활용

● 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 도내 문화 예술인들이 최소한의 창작활동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예술인 복지정책 추진
- 경남예술인의 창작활동 개선 및 복지지원을 위한 예술인복지센터 운영 활성화

● 경남 메세나 결연 매칭펀드 시·군 참여 확대

- ‘경남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은 기업과 예술단체가 전략적 결연을 맺고 상호 협력해 나가는 사업으로, 기업이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후원금 외에 일정금액을 경상남도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함
- 기업의 창조적인 문화경제활동을 증진시키고 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보장에 기여함
- 경남도 시·군들의 경남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 참여 확대 지원 필요

● 경남 공연예술 다각화 추진

- 경남 예술인들의 융복합 기술(CT)을 적용한 창작공연 개발 지원
- 공연예술 국제아트마켓 참가, 국제 초청 공연, 한인축제 참가 등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사업 지원 및 활성화 필요

(2) 생활권 문화기반 시설 조성 확대 및 운영 내실화

● 문화시설 생활SOC 조성 사업 활성화

- 문화시설 생활SOC 조성 사업은 작은도서관, 지방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밀착형 생활문화거점 공간으로서 경남의 문화기반정책 추진에 탄력을 제공하며,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함

● 작은 도서관 확충 및 문화적 소통 기능 강화

- 작은 도서관은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공간을 통해 장애 없이 자유롭게 책을 접하도록 함
- 주민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주민 소통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 작은 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문화시설 생활SOC로써 긍정적 기능 강화

● 도민의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활성화

- 지역 내 많은 문화기반시설이 운영이나 이용도 측면에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와 이용객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프로그램 다양화 및 해당 지역의 여건에 맞춘 특성화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함

● 생활문화센터 및 거점 센터 조성 확대

- 경남 도민들의 안정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주거지에 인접한 유휴공간 및 소규모 공용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센터 조성
- 도민의 일상적인 문화 향유, 문화복지 확대, 주민화합을 위한 공연·전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적인 공간 조성 지원
- 또한 도내 거점 센터를 조성하여 시군 간 생활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조성

● 지역 박물관·미술관 확충 및 내실화

- 경남 18개 시·군 내 박물관과 미술관 확충 및 이용률 제고 필요
- 경남 도립미술관과 시·군 미술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능 정상화 및 지원 확대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영상산업 육성 등의 기능분리를 통한 경남의 문화예술 지원과 콘텐츠산업의 전문성 확보 및 적절한 지원으로 정상화 추진
-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경남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 진행과 함께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 및 실행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및 가치 재창조

(1)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

● 경남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송선전 제례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야유적의 국가사적 승격 추진
- 가야문화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구체적 증거'와 '해외유산과의 비교 연구' 보완 강화를 통해 가야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 및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 '역사 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가야왕성지 보존·관리·정비, 디지털

오픈 가야 헤리티지 구축 등 가야문화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야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으로 경남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 및 경쟁력 확보

- 가야사 재조명을 위한 학술적 기반 강화, 가야문화권 조성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가야 골격 회복을 위한 발전거점 조성, 가야정치·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특화 및 매력증진, 정부와 가야문화권 공조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등을 포함한 가야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가야문화재 안내 용어 통일, 안내 정보 및 관람환경 개선 등 가야문화재 안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향

● 경남 선비문화자원 수집 및 보존기반 마련

- 경남 유교문화를 대표하는 선비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토대 구축
- 경남 서북부 함양, 산청, 거창, 진주 일원의 남명 유교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유적의 정비·복원 지속 추진

● 경남 기록유산의 효율적 수집·관리

- 경남의 공공기록물 및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를 통해 도에 관한 기록문화 계승·발전
- 중앙기관(국립중앙박물관 등)에 이관되었던 경남의 공공기록물 및 민간기록물의 지역 환원 추진
- 도내 민간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한 목록화 작업 및 소장자 상호 간 연계시스템 구축

● 경남 무형문화재의 체계적 조사·기록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전승체계 선진화
- 무형문화재 분류 안에 따른 지정 현황 파악 및 비지정 무형유산 세부 목록 작성
- 전수교육관 운영 실태 파악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경남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DB 구축

(2) 문화유산 가치의 다각적 활용

● 가야문화유산 관련 법·제도 정비 및 가치 규명을 통한 향유기반 구축

- 가야사 연구복원 사업의 안정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가야문화유산의 가치 규명과 대중적 향유기반 조성
- 가야문화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후 세계유산 등재를 통한 가야역사 유적·유물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제고

-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5개 광역시·도에 걸친 가야문화유산을 통한 영호남 화합과 발전의 원동력이 될 권역별 특색 있는 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추진
- 가야문화재 활용 생생문화재 추진, 가야문화유산 아간체험 프로그램 문화재야행 추진, 가야역사문화 아카데미 지속 추진, 지역교과서 등 가야문화유산 활용사업 활성화

● 남명 선비문화 사상 계승발전 및 선비문화 활성화

- 조선시대 대표적 유학자이자 청렴결백한 선비인 남명(南冥) 조식의 선비문화 사상 계승
- 선비문화의 체계적 연구 및 계승을 통한 경남정신 확립, 선비문화의 교육·관광자원화를 통한 대중화, 선비문화의 국제 브랜드 구축을 통한 세계화 추진

● 경남 전통예술의 자원화 및 브랜드 구축

- 경남 지역 내에 위치한 문화예술공간 자원의 발굴 및 활용,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제작되는 전통예술 분야 공연예술 창작 콘텐츠 개발
- 대표적으로 ‘영호남 명무명창전’은 무형문화재를 많이 보유한 두 지역이 함께 명무·명창을 초청해 영호남 전통예술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전달함
- 전통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연극/뮤지컬 등 공연예술, 기술 등 연계)

● 도민 중심의 문화유산 보존 활동 참여 유도

- 생활 속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로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의 중요성 강조
- 문화재 지킴이,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존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유도

● 근대적 역사 공간의 조성 및 콘텐츠 구성

- 경남 근대 역사 시설(업무시설, 주거시설, 종교시설, 교육시설, 산업시설 등) 및 시설지 조사와 DB화
- 근대 역사 장소 지도 제작 및 탐방로 개발 등을 위한 경남의 유무형의 근대 유산과 근대 역사 장소의 재현 방식 검토·수정·보완 연구
-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카페, 갤러리, 커뮤니티 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여 경남의 특색 있는 근대시기의 역사, 문화, 음식 등의 체험이 가능한 문화유산 거점 공간 조성

3) 지역 특화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강화

(1) 문화 전문 인력양성 및 문화창업 활성화

● 청년예술인 직업·창작역량 강화 사업

- 청년예술인의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예술 활동 경력개발로 지역의 예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예술인 역량 강화 사업 개발 필요
- 예술계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약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이 있는 청년예술인(예비예술인) 대상 계약·저작권 교육 제공
- 청년예술인의 창작·기획 역량을 높이고, 창작 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차세대 유망예술인 지원, 차세대 콘텐츠 성장동력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 문화예술 전문가 협력의 문화적 도시재생 활성화

- 사업계획 작성 단계부터 문화예술 전문가 참여로 문화적 도시재생이 활성화되도록 경상남도 문화영향평가센터 설치·운영 필요
-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문화예술 전문가는 도시에서 문화로 가치를 만들고 사회적인 활동을 확대로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형성하며 향후 도시의 문화적 성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바탕을 마련함
- 문화기획자, 예술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고 지켜나가는 문화협치의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활성화 유도
-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 유희공간 문화재생 등 도시재생과 연계한 문화적 도시재생 분야 협력방안 제안 및 참여 기회 확대

● 지역 청년 중심의 문화창업 활동 지원

- 지역의 청년을 중심으로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창업 지원
- 문화 예술, 콘텐츠 등 문화 전 분야를 주제로 한 예비 창업자 또는 스타트업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밀착해 스타트업 성장을 도움
- 입주 청년 상인에게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과 창업 교육, 통합 홍보·마케팅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ex.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천안 청년장사꾼, 춘천 청년창업 등)

● 사회적 기업 참여 문화예술 프로젝트 개발 및 실행

- 사회적 기업은 도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지역이나 마을만들기 참여, 생활문화 활동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이를 운영하거나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전담조직으로서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문화예술을 활동 매개체로 하는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 공공문화에 전문적이고 지속적 연계를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참여 가능한 공모 프로젝트 개발 및 수행함

(2) 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및 특화 콘텐츠 개발

-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역할 강화**
 - 경남 콘텐츠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거점센터 역할 강화
 -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 인력양성, 사업화 등 체계적인 지원 기반 구축
- **경남 콘텐츠산업을 견인할 앵커 기업(선도 기업) 유치**
 - 경남 콘텐츠산업 생태계의 집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역량 있는 선도 기업 유치 필요
- **도내 콘텐츠 기업 강소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콘텐츠 분야 아이디어 및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제작비 지원, 우수 콘텐츠 발굴 및 지역의 콘텐츠 분야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작비 지원 사업 추진
- **경남 가야사 연계 증강현실(AR)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가야 역사기반 지역별 스토리 발굴 및 개발, 역사문화기반 콘텐츠 활용 전시관광 실감 콘텐츠 구현
- **지역 콘텐츠산업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 구축**
 - 지역에서 정착하여 활동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인력 양성 지원
 - 지역 대학 및 기업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한 콘텐츠산업 분야별 전문 인재 양성 교육 플랫폼 구축
- **산·관·학·연 연계 및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경남의 콘텐츠산업과 관련한 기업, 학교(전공), 연구소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연계 및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실행
 - 경남도내 산·학 연계 및 기술지도사업 등 사업 지원, 정부 지원 산·학 협력사업 추진 지원, 산·학 공동 기술개발 지원 등 추진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4장

교통·물류

- 제1절 교통망
- 제2절 항만·물류
- 제3절 스마트·정보인프라

제4장

교통·물류

제1절 교통망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동남권 메가시티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1) 현황

● 자동차 보유 대수

- 2019년 경상남도 자동차 보유 대수는 1,721,503대로 2015년 1,564,192대에 비해 2.4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차종별로는 특수차량의 연평균 증가율이 5.1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승합차의 경우 2015년 61,743대에서 2019년 55,134대로 연평균 2.79%가량 감소하였음

– 특수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의거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의미

(단위 : 대, %)

〈표 4-4-1〉

경상남도 자동차 보유 대수 추이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5년	1,564,192	1,215,445	61,743	280,535	6,469
2016년	1,625,244	1,273,485	59,878	284,986	6,895
2017년	1,667,809	1,313,421	58,207	288,953	7,228
2018년	1,694,448	1,338,384	56,591	291,880	7,593
2019년	1,721,503	1,366,284	55,134	292,183	7,902
연평균 증가율	2.42	2.97	-2.79	1.02	5.13

주 : 이륜자동차 제외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19년 기준 경남 시군별 자동차 보유현황은 전체 1,721,503대로 이중 창원시가 563,279대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김해시 274,093대, 양산시 169,875대, 진주시 167,889대 순으로 나타남
- 경남도의 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1대/인으로 시군별로는 함안군이 0.81대/인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통영시의 경우 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가 0.41대/인으로 가장 적었으며, 자동차 보유 대수가 많은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의 경우 0.48~0.54대/인으로 나타남

〈표 4-4-2〉

경상남도 시군별
자동차 보유현황
비교(2019)

(단위 : 대, 대/인)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
경남	1,721,503	1,366,284	55,134	292,183	7,902	0.51
창원시	563,279	483,474	15,448	62,808	1,549	0.54
진주시	167,889	131,930	5,468	29,840	651	0.48
통영시	53,760	41,945	2,425	9,247	143	0.41
사천시	56,496	43,155	1,998	11,113	230	0.50
김해시	274,093	220,670	8,280	44,285	858	0.51
밀양시	58,338	39,492	1,908	16,204	734	0.55
거제시	106,333	89,899	3,988	12,157	289	0.43
양산시	169,875	133,680	5,967	28,329	1,899	0.48
의령군	14,839	9,370	537	4,813	119	0.55
함안군	53,360	41,069	1,687	10,299	305	0.81
창녕군	35,812	23,960	1,367	10,328	157	0.57
고성군	26,845	18,223	1,055	7,423	144	0.51
남해군	19,890	12,879	796	6,151	64	0.46
하동군	24,829	15,786	797	8,125	121	0.53
산청군	20,509	12,247	682	7,337	243	0.58
함양군	19,473	12,273	716	6,413	71	0.49
거창군	32,265	21,739	1,197	9,108	221	0.52
합천군	23,618	14,493	818	8,203	104	0.52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도로현황

- 경남의 도로 연장은 2018년도 기준 연평균 0.83%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연장 12,650,294m에 도로별로 고속도로가 540,150m, 일반국도 1,540,379m, 지방도가 2,424,118m, 시군도가 8,145,647m로 구성되어 있음
- 도로 연장의 증가는 2014년 시군도의 연장이 7,772,505m에서 2015년도에 7,904,916m로 증가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단위 : m, %)

〈표 4-4-3〉
도로별 연장

구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연장	포장	포장률	미개통	연장	연장	포장	포장률	미개통
2014년	12,240,894	9,671,285	89.8	1,469,708	497,780	1,556,613	1,521,503	99.6	28,270
2015년	12,362,681	9,551,865	89.9	1,733,757	490,530	1,544,147	1,515,337	99.6	21,970
2016년	12,532,240	9,717,114	89.9	1,718,479	490,530	1,568,218	1,539,408	98.2	21,970
2017년	12,567,004	9,788,709	90.1	1,708,496	505,790	1,539,579	1,510,769	99.5	21,970
2018년	12,650,294	9,942,722	91.0	1,729,417	540,150	1,540,379	1,511,569	99.5	21,970
연평균 증가율	0.83	0.69	0.33	4.15	2.06	-0.26	-0.16%	-0.03	-6.11

구분	지방도				시군도			
	연장	포장	포장률	미개통	연장	포장	포장률	미개통
2014년	2,413,996	1,964,450	90.9	253,874	7,772,505	5,687,552	86.4	1,187,564
2015년	2,423,088	1,974,982	91.0	253,874	7,904,916	5,571,016	86.4	1,457,913
2016년	2,428,108	1,987,392	81.8	250,554	8,045,384	5,699,784	70.8	1,445,955
2017년	2,423,618	1,990,102	91.6	250,554	8,098,017	5,782,048	86.8	1,435,972
2018년	2,424,118	1,996,662	91.9	250,554	8,145,647	5,894,341	88.1	492,358
연평균 증가율	0.10	0.41	0.27	-0.33	1.18	0.90	0.49	-19.76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경남도의 총연장 12,650,294m 중 시군별로는 창원시가 1,930,494m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김해시 1,329,777m, 진주시 1,012,037m 순으로 나타남
- 도로 포장률은 경상남도 전체가 91.0% 비율을 나타내고, 통영시와 김해시는 100%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으나, 의령군의 경우 62.8% 비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미개통 도로의 경우 경남도 전체 1,729,417m 중 김해시가 520,149m로 가장 길고, 거제시가 161,206m, 사천시가 161,064m 순으로 나타남
- 시군별 총연장 대비 미개통 도로의 연장비를 분석해본 결과, 경남도는 전체 도로 연장 중 미개통 도로의 연장비가 13.7%로 나타났고, 이 중 김해시는 미개통 도로 연장비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합천군의 경우에는 5.0%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4-4〉

경상남도 시군별
등록 대수 및
포장률 현황(2018)

(단위 : m, %)

구분	합계(A)	포장	포장률	미포장	미개통(B)	총연장/ 미개통연장비 (B/A)*100
경남	12,650,294	9,942,722	91.0	978,155	1,729,417	13.7
창원시	1,930,494	1,696,733	95.7	76,630	157,131	8.1
진주시	1,012,037	796,484	89.3	95,531	120,022	11.9
통영시	698,155	657,045	100.0	-	41,110	5.9
사천시	756,280	590,685	99.2	4,531	161,064	21.3
김해시	1,329,777	809,628	100.0	-	520,149	39.1
밀양시	691,311	631,161	99.1	5,870	54,280	7.9
거제시	708,882	543,156	99.2	4,520	161,206	22.7
양산시	781,356	713,310	99.3	5,300	62,746	8.0
의령군	431,837	250,426	62.8	148,619	32,792	7.6
함안군	437,826	319,627	77.0	95,693	22,506	5.1
창녕군	502,061	392,251	97.9	8,500	101,310	20.2
고성군	501,064	350,704	74.5	120,277	30,083	6.0
남해군	324,328	280,888	93.9	18,300	25,140	7.8
하동군	495,688	389,763	87.0	58,262	47,663	9.6
산청군	497,820	375,200	80.7	89,800	32,820	6.6
함양군	466,246	357,906	83.5	70,940	37,400	8.0
거창군	500,854	356,242	87.3	51,992	92,620	18.5
합천군	584,278	431,513	77.8	123,390	29,375	5.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대중교통 현황

- 경남의 대중교통 등록 대수 현황을 살펴보면, 업체 수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 2.38%로 증가하고 있으나, 등록 대수는 1.12%로 2015년 기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임
 - 업체 수의 증가는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 개인택시의 업체 수의 증가가 아닌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수업 수가 늘어난 이유가 큰 것으로 보임
- 특히 농어촌 버스의 경우 업체 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등록 대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 업체의 운영수지 악화에도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단위 : 개소, 대, %)

〈표 4-4-5〉

경상남도 대중교통
등록 대수 현황

구분	계		시외버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택시(업체)		개인택시	
	업체 수	등록 대수	업체 수	등록 대수	업체 수	등록 대수	업체 수	등록 대수	업체 수	등록 대수	업체 수	등록 대수
2014년	19,212	48,128	20	1,574	28	1,639	10	187	121	5,066	8,101	8,101
2015년	19,471	51,405	21	1,604	28	1,640	11	192	121	5,016	8,114	8,114
2016년	19,570	48,263	21	1,628	28	1,657	10	197	121	4,899	8,106	8,106
2017년	20,121	47,742	20	1,617	29	1,666	10	206	121	4,727	8,097	8,097
2018년	21,106	50,324	20	1,558	28	1,715	10	198	121	4,553	8,153	8,153
연평균 증가율	2.38	1.12	0.00	-0.26	0.00	1.14	0.00	1.44	0.00	-2.63	0.16	0.16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9.

● 철도 현황

- 철도 수송현황을 살펴보면 여객수송의 경우 승차 인원과 강차 인원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객 수입은 3.3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화물 수송의 경우 발생 톤수는 연평균 -7.39%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착 톤수와 화물 수입은 19.18~22.6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 4-4-6〉

경상남도
철도수송 현황

구분	여객(명)			화물(톤)		
	승차 인원	강차 인원	여객 수입(천원)	발생 톤수	도착 톤수	화물 수입
2014년	4,543,073	4,566,607	68,824,860	68,435	124,791	2,533,435
2015년	3,896,263	3,908,730	70,085,162	49,680	191,753	1,942,140
2016년	4,246,405	4,241,830	71,633,484	55,650	213,730	2,886,808
2017년	4,484,458	4,467,171	73,504,809	50,842	215,732	3,058,755
2018년	4,256,438	4,216,645	78,407,712	50,332	251,733	5,726,092
연평균 증가율(%)	-1.62	-1.97	3.31	-7.39	19.18	22.61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9.

● 공항 현황

- 경남의 유일한 공항인 사천공항의 경우 2015년 이후 운항 편수가 지속해서 증가하여 2.2%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음. 여객 수송 인원 역시 2015년 12,248명이었던 것에 반해 2019년에는 17,452명으로 나타나 9.2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화물의 경우 2015년에 56.3톤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69.5톤으로 증가하여 5.41%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동남권의 유일한 국제공항인 김해공항과 비교해 본 결과, 운항 편수는 김해공항의 1.9%에 불과했으며 수송 여객 인원 역시 김해국제공항보다 1.3%, 화물 수송량은 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4-4-7〉
사천공항 운항 현황

구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톤)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2015년	77	77	154	6,300	5,948	12,248	32.2	24.1	56.3
2016년	77	77	154	6,412	6,363	12,775	30.3	26.1	56.3
2017년	84	84	168	7,356	7,258	14,614	32.3	28.9	61.2
2018년	81	81	162	6,966	6,657	13,623	31.8	27.0	58.8
2019년(A)	84	84	168	8,677	8,775	17,452	36.2	33.3	69.5
연평균 증가율(%)	2.20	2.20	2.20	8.33	10.21	9.26	2.97	8.42	5.41
김해공항 현황(B)	4,462	4,458	8,920	682,132	699,203	1,381,335	6,730.10	7,322.30	14,052.40
비교(A/B)	0.019	0.019	0.019	0.013	0.013	0.013	0.005	0.005	0.005

주 : 2019년 12월 기준.
자료 : 한국공항공사(http://www.airport.co.kr) 공항별 통계, 2019.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교통정책 패러다임 전환

(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교통 수요

● 부산·울산 대도시 광역경제권 인접 시·군 인구 증가

- 김해시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인구 추이를 보이며,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양산시의 경우 김해시와 같이 2015년 이후 인구 추이가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2018년을 기준으로 감소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2.3%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부산·울산광역 대도시권과 인접한 김해시, 양산시의 인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로 비추어보아 광역 대도시권과의 연계 교통망 확충이 필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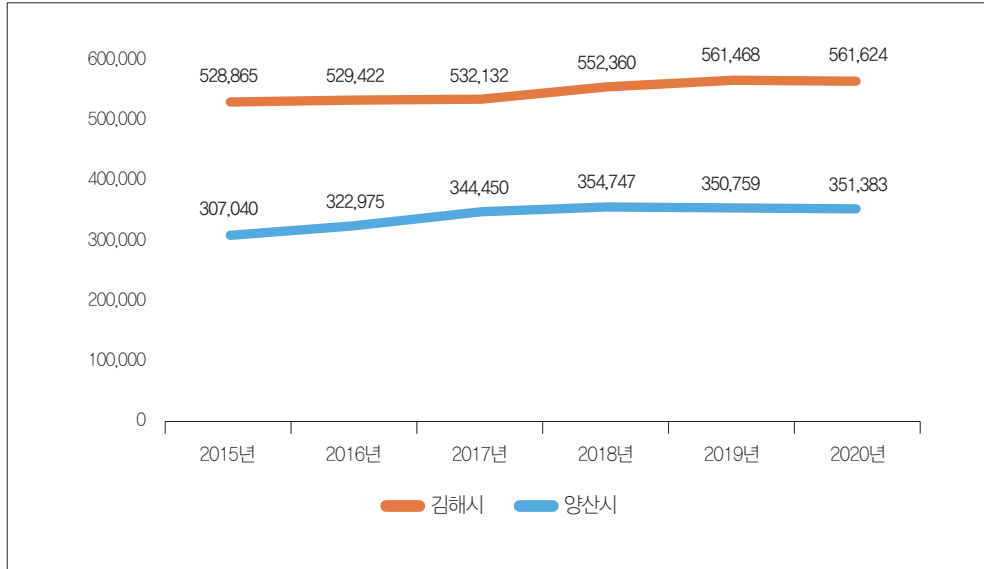
〈표 4-4-8〉
부·울·경 광역권역
(김해, 양산시)
인구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김해시	528,865	529,422	532,132	552,360	561,468	561,624	1.0
양산시	307,040	322,975	344,450	354,747	350,759	351,383	2.3

자료 : 각 시의 내부자료, 2020.

〈그림 4-4-1〉

부·울·경 광역권역
(김해, 양산시)
인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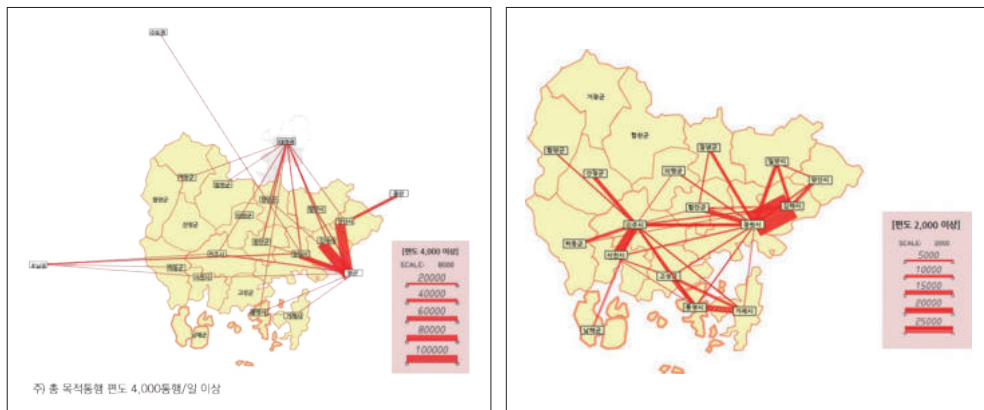


● 부·울·경 동남권 광역 교통권역을 넘나드는 교통 수요의 증가

- 경남도 외부 대도시 권역에 해당하는 부산, 울산 광역권 간의 통행량 분포를 살펴보면, 김해, 양산시의 경우 부산 대도시 권역과의 통행량이 일 10만 통행 이상 발생되고 양산의 경우 울산광역권 간에도 일 4만 통행 이상의 교통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원시의 경우에도 부산 광역권 간의 통행량이 일 4만 통행 이상 발생되고 있음
- 경남도 지역 간 통행량에 있어서도 창원~김해 간 통행량은 일 6만대 이상의 통행량을 보이며 경남 서부권역의 중심도시인 진주시를 중심으로 사천, 산청 등 인접 시군과의 통행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부·울·경 동남권 광역 대도시 간의 통행량 증가뿐만 아니라 도시 내부 간 통행을 넘어선 광역 통행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 구축방안이 필요함

〈그림 4-4-2〉

경남-대도시 권역 및
경남 내부 광역
통행분포



경남 외부 대도시 권역 간 광역 통행분포

경남 내부 광역 통행분포

자료 : 경남연구원(2020),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기반조성을 위한 공간혁신전략-광역교통인프라구축.

(2)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정책의 대전환

● 경상남도 시군 인구고령화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 마련 필요성

- 경남의 고령인구는 2018년 기준 522,747명으로 연평균 증가율 3.9%를 보이며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고령인구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전국 -4.3%, 경남 -8.3%로 감소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부상 사고는 전국 3.6%, 경남 3.8%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구 교통사고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함

(단위 : 명, %)

〈표 4-4-9〉

고령인구(65세 이상) 증가 추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경남지역 65세 이상 인구	448,998	464,017	480,278	504,460	522,747	3.9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9.

(단위 : 명, %)

〈표 4-4-10〉

노인교통사고 추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사망	1,814	1,732	1,767	1,682	1,523	-4.3
	부상	38,582	38,413	40,579	41,833	44,390	3.6
경남	사망	178	155	144	158	126	-8.3
	부상	2,614	2,662	2,749	2,689	3,030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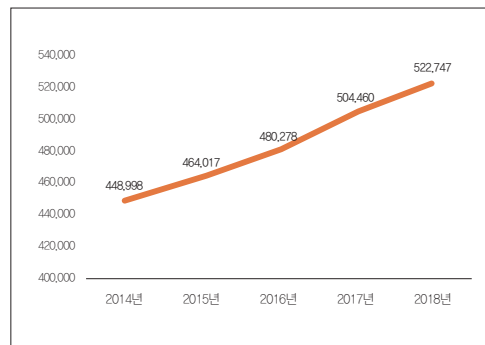
주1 : 부상자 수는 중상자 수, 경상자 수, 부상신고자 수의 합계.

주2 : 노인은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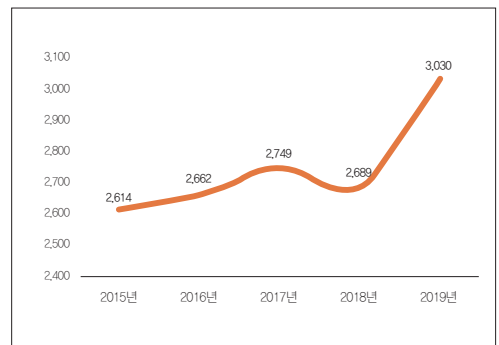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노인교통사고 자료.

〈그림 4-4-3〉

경남 고령인구 증가 및 전국 대비 경남 노인 교통사고 추이 (부상자 기준)



고령인구 증가 추이



노인 교통사고 발생 추이(부상자 기준)

●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관련 교통안전 대책 마련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등을 통한 시설개선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의 차별화 도모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디자인 기법을 활용한 통합적인 스쿨존 개선사업 추진
- 고령자 증가에 따른 교통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예방적 차원의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확대 시행 및 고령자 대체 대중교통수단 서비스제고를 위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의 정책 시행 검토

● 경남 시군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교통복지정책 확대

- 경남도 군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교통 수요 감소에 따라 시내·농어촌버스의 정기적 운행이 어려운 상황 등 운영수지 악화가 지속해서 발생
- 이용객 수요에 대응한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DRT)의 대체수단 확대 보급으로 비정기적·수요대응형 대중교통체계로의 전환이 필요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2) 4차 산업혁명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시대 도래

(1)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 및 혁신

●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플랫폼, 공유경제를 활용한 모빌리티 혁신

-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 대중교통 카드데이터, 택시운행정보관리 데이터 등 교통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
- 교통 빅데이터의 지속적인 수집 및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교통정보센터 설립 등의 데이터관리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
- 공유 전동킥보드 등과 같은 개인형 교통수단 등장으로 First/Last Mile을 담당하는 신개념의 접근교통수단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한 대중교통 환승 연계, 자동차 없는 거리공간 만들기에 활용이 가능
- 경남형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MaaS; Mobility as a Service) 구축으로 연계 교통 통합결제시스템을 이용한 공유교통, 카셰어링, 공유주차, PM(Personal Mobility), 자율주행, 드론교통 등 신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필요

● 스마트 도로 교통시스템의 추구

- 자율주행기반 기술로서 정밀도로 지도 및 C-ITS 구축 사업의 선제 대응 필요

- 창원·김해 등 산업도시에서 부산·울산 대도시 광역권역 간 자율주행 화물 물류 운송이 가능하도록 스마트 하이웨이 구축
- 비대면 시대를 맞이한 교통의 불규칙한 이동성을 고려한 도심 내부 스마트 교차로 운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교통체계로의 전환

(2) 미래 교통 신기술 등장에 따른 교통수단 변화

● 자율주행자동차, 드론수송 등 미래 교통수단의 등장

- 국토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 제정
- Uber-air, 플라잉카,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벤처형 조직 신설, 드론택시 R&D, 미래형 자율비행 개인 항공기 인증 및 안전운항 기술 개발 주도

● MaaS(Mobility as a Service) 및 공유 스마트 모빌리티의 활용

- 세계 최초 MaaS 상용화 솔루션 핀란드 헬싱키 Whim을 통해 택시, 차량 대여, 대중교통, 자전거 공유 등 다양한 교통수단 이용 가능

3) 기후변화, 미세먼지에 대응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

(1) 친환경 교통수단의 시대적 흐름

● 수소차 및 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등장

- 울산광역시 2030 세계 최고 수소도시 선포, 수소그린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선정
- 인접 광역권에서의 이동식 수소충전소, 수소 연료전지 무인운반차 등 수소 모빌리티 관련 산업과 연계한 경남도 전략 마련

4) 동남권 메가시티 신공항 건설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남권 메가시티 거점 신공항 건설

- 수도권에 대응하고 유고 시 대체·보완이 가능한 우리나라 제2거점·신공항 건설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1) 1시간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

● 도내 및 부·울·경 광역권 1시간 생활권 네트워크 구축

- 도로망 부문
 - 경남도내 광역도로 신설 및 확장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
 - 동남권 메가시티 대도시 광역권 간 통행시간 단축을 위한 혼잡도로 개선
- 철도망 부문
 - 동남권 메가시티 광역 급행철도(MTX) 및 순환철도망 구축
 - 부산·울산 광역 대도시권과 인접한 지역 간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통근·통학권 전철화

● 광역권 환승 편리성 제고

- 거점별 광역환승센터 건설 및 대중교통 환승편의 제고

(2)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시티

● 스마트시티 미래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경남형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사업

- 자율주행, 드론교통 등 미래교통 수단의 선점을 위한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구축

● 드론택시, 자율주행 등 수단의 고급화

- 경남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지역 드론택시 등 여객수송 및 물류수송을 위한 드론택배 등 미래교통수단의 고급화
-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지의 자율주행 셔틀 도입 추진 및 선진화된 자율주행 신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수단 자체를 관광자원화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책 수립

- 교통 빅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을 위한 센터 차원의 기관 설립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교통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교통 선도도시

● 전기, 수소차 인프라 구축 및 지원정책

-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가승용차 전기·수소차 대전환 및 대중교통수단의 전기·수소차 차량 대체 추진

(4) 교통약자 안전 및 이동 편리성 제고

- **보행친화도시**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걷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
- **고령 운전자 및 보행자 사고 제로화**
 -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안전정책 수립
-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안전 및 이동 편리성 제고**
 -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화 등 서비스 확충
- **시군 교통약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체계(DRT) 확충**
 - 수요대응형 대중교통 체계 확충으로 도민의 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5) 동남권 신공항

- **동남권 메가시티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
 - 전 세계 메가시티의 확장에 따른 동남권 메가시티 경쟁력 강화를 위한 24시간 운항 가능한 신공항 건설

2) 추진전략

● 교통망 부문 핵심지표

〈표 4-4-11〉

교통망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승용차 대도시 광역권 통행시간	43분	40분	35분
대중교통 대도시 광역권 통행시간	93분	60분	30분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률(평균)	V/C비 0.7	V/C비 0.6	V/C비 0.5
승용차 대비 농어촌버스 통행시간	180%(서비스수준C)	150%(서비스수준B)	120%(서비스수준A)

(1) 광역교통 및 환승 거점 연계성 강화

- **도로 및 철도 부문**
 - 광역도로 신설 및 확장
 - 부산·울산권 연계 광역도로 신설 및 확장(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근거)
 - 도내 주요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노선 신설 및 확장

- 광역철도 연계방안

-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 건설 및 부산·울산 광역권 연계 순환철도 도입
- 부전~마산선 광역전철화(전동열차(EC) 도입)
- 창원~진해~하단~녹산선 연결 광역순환철도 추진

- 광역환승센터 건설 등 환승 거점 확충 및 광역환승제 확대

-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역사와 버스터미널 연계 복합환승센터 구축
- 부산·울산권 거점 광역환승센터 연계한 접근성 편의 제공
- 부산·울산 대도시 광역권 연계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건설
- 도내, 부산·울산 광역권 간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및 환승할인 제도 확대
- 광역권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한 광역급행버스(M버스) 도입 확대
- 부·울·경 광역교통 협의체 기능 강화를 위한 상시 행정기구 설립

(2)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시티

- 스마트시티 미래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경남형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사업

- 자율주행, 드론수송 등 미래교통산업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실증사업 시범지구 조성
- C-ITS 사업을 통한 스마트 하이웨이·교차로·주차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교통수단의 첨단화

- 도내 자동차산업과 연계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사업 추진
- 도내 도서지역 간 이동 편리성 연계를 위한 드론 택시 등 드론을 이용한 물류기능 연구

-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정책 수립

- 교통량 및 교통카드 데이터, 모바일 통신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중교통정책 수립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차로 신호 지체 최적화 및 신호 연동으로 교차로 운영 효율성 강화

(3)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교통 선도도시

- 전기, 수소차 인프라 구축

- 전기,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기, 수소차량 충전시설 입지 분석 및 최적화

● 친환경 차량 도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강화

- 도내 전기, 수소차 구매보조금 상향 조정으로 친환경 차량 도입 활성화
- 고가의 수소충전소 확충을 위한 최적의 부지 제공 및 민간기업 참여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 증가와 함께 늘어난 이륜차 배달·택배 서비스에 대응하는 전기이륜차 및 전기, 수소 화물차 도입 추진

(4) 교통약자 안전정책 및 이동 편리성

● 보행친화도시

- 보행 중심의 도로구조 및 교통체계 구축으로 쾌적한 보행로 조성
-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를 통한 보행친화적인 도로의 건설
- 직주근접 향상을 위한 First/Last Mile 기능의 개인교통수단(Personal Mobility) 활성화

● 고령 운전자 등 교통약자 이동 안전성 강화 정책

- 고령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 연령대별 통행목적별 지역 맞춤형 정책대안 마련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제도 확대 및 안전교육 강화, 차량안전기술 장착 제도 등
-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도시 비전 선포 및 대상지별 교통안전 시설 강화

●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속 확충으로 교통약자 이동 편리성 제고

- 대중교통 서비스 취약 시군별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속 확충
-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수요응답형 버스 시스템 도입

(5) 동남권 메가시티 신공항 건설 지원

●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모멘텀, 국제적인 신공항 건설

- 부산의 김해국제공항, 경남 사천공항의 기능 및 시설적 한계를 보완하는 신공항 필요
- 서울·경기 수도권과 경쟁·상생하는 국제적인 신공항 건설

●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걸맞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

- 남북을 관통하여 유럽대륙과 연결되는 유라시아 철도 구상과 연계한 하늘길 조성
- 한반도의 중심에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더불어 동남권역을 분담하는 신공항 조성

4. 추진시책

1) 광역권 연계 교통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1) 광역도로망 구축 및 혼잡도로 개선

● 부·울·경 대도시권 연계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사업

• 부산~양산 광역도로 건설(금곡~호포간 도로)²⁶⁾

- 국도35호선 및 강변대로 상 연결 도로의 용량과 우회도로 부족으로 국도35호선 상 양산에서 강변도로 방면으로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노선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금곡동(강변대로)~호포(국도35호선)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1.4km, B=1차로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총사업비 : 약 386억원 정도(국비 50%, 지방비 50%)

• 부산 노포~양산시계 국도7호선 확장사업²⁷⁾

- 양산 덕계월라산업단지('20.12월) 및 덕계신도시('21.12월) 개발에 따른 부산광역시 진입로(국도7호선)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금정구(노포삼거리)~양산시계(여락고가교)
- 사업규모 : 도로확장 L=2.5km, B=35→45m(6차로→8차로)
- 사업기간 : 2021~2025년
- 총사업비 : 약 555억원 정도(국비 50%, 지방비 50%)

• 부산 미음~김해~부산 가락간 광역도로²⁸⁾

- 가락대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부산 강서지역과 김해시를 연결하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추진
- 사업구간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산단로~김해시 수가동~강서구 봉림동(장유로)
- 사업규모 : 도로개설 L=3.76km, B=18m(4차로)
- 사업기간 : 2021~2026년
- 총사업비 : 약 1867억원 정도(국비 50%, 지방비 50%)

● 도내 주요 도로의 소통 애로구간 혼잡 해소

• 고속도로 구간

- 남해선 산인~북창원 구간(4차로)²⁹⁾ : 일 교통량 73,870대/일, V/C 0.88, LOS E
- 중부내륙선 남지~창녕 구간(4차로)³⁰⁾ : 일 교통량 50,785대/일, V/C 0.85, LOS E

26) 경상남도 자체계획

27) 경상남도 자체계획

28) 상위계획 반영(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1~2025))

29) 상위계획 반영(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계획)

30) 경상남도 자체계획

• 국도 및 지방도 구간

- 국도14호선 통영~거제 구간(4차로)³¹⁾ : 일 교통량 49,013대/일, V/C 0.76, LOS E
- 지방도1020호선 창원~김해 구간(4차로)³²⁾ : 일 교통량 95,565대/일, V/C 1.09, LOS F
- 지방도1042호선 진례~김해 구간(2차로)³³⁾ : 일 교통량 15,466대/일, V/C 0.95, LOS E

〈표 4-4-12〉

경남도 주요 도로
교통서비스 수준

	구분 (대표구간)	차로 수	일 교통량 (대/일)	V/C	LOS
고속도로	경부선 양산~통도사	6	74,491	0.78	D
	남해선 산인~북창원	4	73,870	0.88	E
	광주대구선 함양~거창	4	12,939	0.18	A
	대전통영선 진주~서진주	4	34,406	0.39	B
	중부내륙선 남지~창녕	4	50,785	0.85	E
	중앙선 상동~삼랑진	4	42,024	0.63	D
	남해1지선 내서~서마산	4	64,361	0.67	D
	남해2지선 냉정~장유	6	53,768	0.37	B
	남해3지선 진해~대청	4	28,363	0.59	D
국도	2호선 진주~마산	6	40,276	0.41	C
	3호선 사남~정촌	4	35,714	0.54	C
	5호선 창녕~영산	4	20,041	0.31	B
	14호선 통영~거제	4	49,013	0.76	E
	24호선 평촌~우명	2	6,976	0.4	C
국지도	30호선 산인~종리	4	27,628	0.43	C
	60호선 칠서~북면	2	6,290	0.35	B
지방도	1001호선 초전~사촌	2	8,602	0.54	C
	1005호선 사천~단성	2	5,532	0.3	B
	1010호선 동해~고성	2	3,461	0.3	A
	1016호선 고성~정동	4	4,431	0.24	A
	1020호선 창원~김해	4	95,565	1.09	F
	1026호선 함양~산청	2	1,531	0.09	A
	1029호선 군북~정곡	2	5,470	0.32	B
	1037호선 의령~상이	2	3,558	0.2	A
	1040호선 내서~남지	4	11,136	0.18	A
	1042호선 진례~김해	2	15,466	0.95	E
	1077호선 금곡~원동	2	3,358	0.2	A
1089호선 봉산~거창	2	2,253	0.12	A	

자료 : 경상남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2020.

31) 경상남도 자체계획
32) 경상남도 자체계획
33) 경상남도 자체계획

(2) 광역철도망 구축

● 동남권 메가시티 형성을 위한 광역철도 및 순환철도망 구축

-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접 시군 간의 원활한 통근·통학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 광역권과의 철도 연계성을 제고
- 창원~김해~부산을 순환하는 순환형 광역철도망³⁴⁾ 건설로 광역권 이동성 편의 제공
- 동남권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남 양산을 중심으로 한 부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간선망³⁵⁾ 구축
- 양산시 지역개발 여건 및 수요 창출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산시 북정동과 웅상지역을 관통하는 2개의 노선(안) 추진 중

● 진해신항 연계 산업철도 노선 구축

- 경남권 역대 최대 규모 대형항만으로 진해신항이 추진됨에 따라 여객 및 화물수송을 담당할 철도 노선으로 녹산~진해 간 광역철도³⁶⁾ 구축 필요
- 신항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 광역권 및 초광역권 철도 노선과 연계한 철도망³⁷⁾ 필요

● 동남권 횡단 철도축 조기 건설

- 부·울·경 지역의 동남권 광역 철도 노선은 서울 등 수도권과의 통행을 분담하는 종단축 위주의 수직적 철도 노선 위주로 계획되어 추진됐으나, 낙후된 일 교통량권 및 동남권 내부 통행과 부산·울산 등 대도시 광역권 이동 편리성을 위해서는 동남권 횡단축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제2차,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기포함된 경전선 진주~광양 노선 사업³⁸⁾의 조기착공으로 동남권 횡단축의 철도 노선 구축이 시급함
-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의 준고속철도(EMU-250)수단의 기존 운영계획을 지역 간 통행목적에 근거하여 광역전철화(EC)³⁹⁾로 운영 전환

(3) 광역 교통체계 구축

● 광역권 연결 상급 BRT 추진

- 진해신항 추진에 따른 신항만 주변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광역권 간선축의 고속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요

34) 상위계획 반영(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

35) 상위계획 반영(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

36) 경상남도 자체계획

37) 경상남도 자체계획

38) 상위계획 반영(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39) 경상남도 자체계획

- 부산 하단지구와 진해 용원교차로를 연결하여 기 확정된 창원시 S-BRT 노선과 접속을 통한 광역 간선 급행 BRT 노선 구축

● 광역환승센터 및 통합환승요금체계 구축

-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2021년) 및 남부내륙고속철도(2028년) 개통에 따라 마산역을 주요 거점 복합환승센터로 지정·개발하여 교통수단 간 원활한 환승 및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계획에 따라 진주시를 비롯한 지역 역사의 입지에 따라 지역 간 간선 통행을 담당하는 시외·고속버스 등을 통합한 복합환승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중교통 환승할인 정책의 지속적인 확대로 울산권역 간의 환승할인 제도 도입 및 창원~진주 또는 인접 동일 생활권 내 경남 내부 군지역까지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및 환승할인 요금제도 확대 필요

2) 지속가능한 친환경 미래교통 선도도시

(1) 경남형 미래교통 테스트베드 시티

● 자율주행 및 드론수송 미래교통 선도도시

- 자율주행차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른 시범 운행지구 지정 및 운행 여건 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경남 지역별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를 선정하여 미래 상용화된 자율주행을 선도하는 지역으로서의 인프라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드론법 시행(2020년 5월)에 따라 드론 실증도시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정부는 2023년까지 드론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시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
- 경남 고성군 드론전용비행 시험장 등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지역 산업을 연계하여 드론수송 거점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통영·고성군 등 도서지역에 드론을 이용한 택배물류, 의료서비스, 농업지원, 해양관리 드론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드론교통산업 관련 인프라 및 실증도시 마련
- 기존 도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용자 중심의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수집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차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교통정책 수립

●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통정책 수립

- 교통카드데이터, 모바일 통신자료 등 교통 부문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을 구축하여 향후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노선 개편 및 교통정책을 구상
-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통해 도민의 실시간 통행패턴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여 맞춤형 교통소통 대책 및 대중교통 정책에 활용이 가능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 MaaS(Mobility as a Service)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존 자가용 중심의 도시구조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3)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수단의 도입

● 수소도시로의 전환에 따른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매 보조금 지원제도를 상향 조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
- 지역 내 자동차산업 관련 기업과 연계한 친환경 차량 R&D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 전기·수소차량 충전소 입지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부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3) 교통약자 안전 증진 및 교통복지 차원 이동 편리성 제고

(1) 보행친화도시로서 교통약자 안전 확보 및 이동 편리성 제고

● 보행자 안전 및 편리성 제고를 위한 보행친화도시로의 전환

- 도로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 구조 및 교통체계 구축
- 교통약자 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지점이 교통정온화(Traffic Calming) 기법의 물리적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의 획기적 개선

●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성화

- 고령자 교통 사고율의 증가 및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교통약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교통약자 이동성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차원의 대중교통 수단 확충

- 경남지역 교통 소외지역에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를 위한 수요대응형 대중교통체계(DRT)의 지속 확충 및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콜버스 등의 상용화
- 기존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및 보편적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적 차원의 대중교통 선별적 무료정책 시행검토

4) 동남권 메가시티 신공항 건설

● 부·울·경 동남권 메가시티 위상에 걸맞은 신공항 건설

- 서울·경기 수도권과 경쟁·상생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조성의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신공항 조성
- 군 공항으로서 김해공항의 수송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나라 제2의 신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국제적인 신공항 건설이 필요
- 향후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에서 동남권이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므로 대륙 간 철도 구상과 연계한 제2의 허브형 신공항 조성 필요

제2절

항만·물류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의 항만 현황

● 항만시설 현황

- 경남에는 부산항 신항을 포함하여 9개의 무역항이 있는데, 세계적인 컨테이너 전용항인 부산항 신항을 비롯하여 지역 산업 물류를 지원하는 마산항·진해항·하동항(예정), 조선산업을 지원하는 고현항·옥포항, 수산업을 지원하는 통영항·삼천포항, 도서이동 여객지원 기능을 하는 통영항·삼천포항·장승포항이 있음
- 이들 항만은 시설들이 지속해서 확충되고 있기도 하고 노후화, 주변 환경 변화 등의 이유로 항만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항만도 있으며, 항만 인근 도시공간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민원 등의 문제로 항만 기능 수행에 제약을 받는 항만도 있음
- 부산항 신항의 항만 육성 기본 방향은 컨테이너 물동량의 단계적 신항 일원화 및 운영효율 극대화를 통해 세계 2대 환적 거점항구로 육성, 유휴 부두의 특화 발전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항만 육성, 다양한 항만서비스 산업 도입을 통한 종합서비스 항만으로 도약, 선박의 초대형화에 안정적 대응을 위해 준설, 토도 제거 등 입항 환경 개선임⁴⁰⁾
- 잡화 부두로 이용 중인 신항 다목적부두의 경우 북컨~신항간 ITT 운영을 위해 부두 기능을 중지하고 대체 입지로 부두 기능 이전, 부산항의 2020년 시설확보율은 113.8%로 하역능력 향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
- 신항은 친환경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및 인프라가 취약하고, 항만 이용자 및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부족함
- 친환경 항만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 시설 유치 확대 및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확대, 신항 기능이 확대에 따른 주변 지역에 해운·항만업체를 집적화할 수 있는 공간 조성 필요
-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가 다수 자리 잡고 있는 창원시와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계 도로망 확대 개설, 신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LNG 벙커링, 선용품유통센터, 수리조선단지 등 항만 서비스 시설 유치를 강화 필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마산항 육성 기본 방향은 구항과 가포신항을 통한 배후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주도하는 중량물 중심의 수출 물류기지 육성, 해양신도시를 중심으로 항만 내 친수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민 편의 제공 및 항만환경 개선임
- 마산항은 기업 전용선 부두를 제외하고는 잡화(기계류) 및 잡화성 화물(고철, 철재 등)과 모래를 처리하는 부두로 특화하고, 가포신항은 민자 부두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에 따라 잡화를 비롯한 컨테이너, 자동차 등 다목적 부두로 특화, 마산항은 2020년 시설확보율이 151.3%일 것으로 전망

40) 해양수산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16~2020), 2016.

- 서항지구(서항부두, 중앙부두 및 1부두)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에 따라 폐쇄하고 친수공간으로 기능을 특화하여 시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2부두는 관광선 부두로 이용하고, 3, 4, 5부두는 현행 잡화부두로 유지하며 철재, 목재 등을 혼재 처리함
- 가포신항은 컨테이너·잡화부두에서 다목적 부두로 기능 전환(자동차 처리 물량 확대를 위한 즉시부두시설 도입 추진)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서 진해항 육성 기본 방향은 철재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한 배후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어항구 운영을 통한 지역의 어업전지지역 역할 수행, 진해항은 2020년 시설확보율이 190.9%일 것으로 전망
- 부두별 기능 특화는 제1부두는 모래부두 기능, 제2부두는 잡화부두 및 철재부두 기능, 어항구는 어선수용 및 수산물 취급임
 - 통영항 육성 기본 방향은 연안여객 수송 및 어업전진기지로서 지역경제 및 해양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육성, 어선물양장 이전과 연계한 다양한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항만환경 개선, 2020년에는 시설확보율이 218%일 것으로 전망
- 부두별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부두는 일반잡화(수산물, 철재 등) 처리, 내만물양장은 친수시설 조성에 따른 기능 전환, 동호만 부두는 수산물 취급
 - 삼천포항 육성 기본 방향은 배후권 발생 화물의 원활한 처리 및 어업전진기지화를 위해 항만물류산업 및 수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 육성, 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수적인 발전원료의 차질 없는 수송 지원을 통해 물류비 최소화, 삼천포항은 2020년 시설확보율이 146.7%일 것으로 전망
- 부두별 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 물동량 및 부두 운영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선석 활용으로 부두운영 효율성 제고, 구항은 소형어선 접안시설 및 수산물 양육부두 기능, 신항은 모래, 기타 광석, 철재를 비롯한 일반잡화 처리 기능, 삼천포 화력부두는 발전용 유연탄 처리
 - 고현항 육성 기본 방향은 배후 조선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화물의 원활한 수송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만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 고현항은 2020년 시설확보율이 83%일 것으로 전망
- 부두별 기능 강화를 위해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 포함된 물양장은 재개발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기능을 폐쇄 필요
 - 옥포항 육성 기본 방향은 배후 조선산업 관련 화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조선산업 지원항,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옥포항은 2020년 45.7%일 것으로 전망
 - 장승포항 육성 기본 방향은 관광 유람선 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물양장 확장 등 수산업 활동의 편의 제공을 통한 물류·어업기능 강화, 장승포항은 처리 물동량 실적이 없어 시 시설확보율 산정 의미가 없음

〈표 4-4-13〉

경상남도
항만시설 현황

구분	신항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안벽(m)	8,450	5,694	1,546	1,406	1,999	252	100	-	582
방파제(m)	1,490	650	497	1,528	2,376	-	1,546	248	-
잔교(기)	-	5	1	13	5	-	-	2	-
물양장(m)	-	1,076	925	3,126	3,004	210	338	1,203	120
접안능력(척)	23	26	9	9	10	2	1	-	3
상옥	-	-	-	-	-	-	-	-	-
동수	-	1	-	-	-	-	-	-	-
면적(m ²)	-	2,643	-	-	-	-	-	-	-
수용 능력(톤)	-	7,929	-	-	-	-	-	-	-
일반창고	-	-	-	-	-	-	-	-	-
동수	-	3	1	-	-	-	-	-	-
면적(m ²)	-	20,945	6,918	-	-	12,539	-	-	-
수용 능력(톤)	-	62,835	20,000	-	-	40,170	-	-	-
야적장	-	-	-	-	-	-	-	-	-
면적(m ²)	-	666,653	137,000	11,485	166,119	-	-	10,920	-
수용 능력(톤)	-	1,999,959	411,000	63,313	1,110,831	-	-	-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통계연보(2019), 해양수산부 항만업무편람(2018).

- 2019년 기준 경상남도 무역항 전체 화물처리 실적은 383,382천톤이고, 2018년 352,754천톤에 비해 8.7% 증가
- 2019년 경남 무역항의 화물처리 실적 증기율은 신항의 물동량 증가에 기인함

2) 경남의 항만 물동량

●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 : 천톤(R/T))

〈표 4-4-14〉

경남 무역항의
화물처리 실적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항	132,127	164,257	191,658	211,040	226,423	229,304	252,098	305,889	319,417
마산항	15,513	16,059	15,079	13,309	15,564	15,267	13,222	12,053	25,985
진해항	1,165	2,271	2,624	2,331	2,821	3,040	1,817	1,504	1,187
통영항	501	330	152	281	351	197	143	107	115
고현항	5,208	11,057	9,372	7,183	7,608	10,321	6,425	5,472	8,448
옥포항	8,550	7,837	7,864	9,527	10,142	8,759	7,830	5,746	8,746
삼천포항	12,187	12,183	12,297	11,753	11,914	11,328	11,208	10,202	8,539
장승포항	13	5	4	3	4	8	2	3	1
하동항	13,911	13,551	13,559	12,670	13,621	12,517	12,727	11,778	10,944

주 : 수출입 환적화물 포함.
자료 : PORT-MIS 및 부산항만공사.

- 경남 항만의 수출입 일반화물은 항만의 배후권역인 인근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원료 등에 한정되어 있고, 경남지역 항만들 대부분은 인근 산업단지의 원자재 및 완제품 수출입을 통한 지역 산업 지원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부산항 신항을 제외한 경남도내 무역항(마산항, 삼천포항, 진해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하동항)에서 처리된 수출입 화물은 대부분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화물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된 화물 물동량은 미미한 수준임
- 장승포항의 경우는 수출입 화물 처리실적은 전무하고, 어항의 기능만을 하고 있기에 장승포항의 기능 전환 방안(항만 재개발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경상남도 무역항의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은 방직용 섬유 및 그제품(13.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기타(12.2%), 기계류 및 그부품(8.5%), 플라스틱, 고무 및 제품(8.4%)순임

(단위 : 천톤(R/T), %)

〈표 4-4-15〉

경남 무역항의 품목별
화물처리 실적
(2019년 기준)

구분	신항	마산	진해	통영	고현	옥포	삼천포	장승포	하동	계	비중	
합계	319,417	25,985	1,187	115	8,448	8,746	8,539	1	10,944	383,382	100.0	
육류	3,765			3						3,768	0.98	
어패류, 갑각류 등	4,924	54		51						5,029	1.31	
양곡	802	42								844	0.22	
제분공업 생산품	544									544	0.14	
기타동식물성 생산품	12,289	109	113							12,516	3.26	
동식물성 유지류	620									620	0.16	
당류	722									722	0.19	
조제식품, 음료, 주류 등	14,235	1								14,236	3.71	
시멘트	52	1,681								1,733	0.45	
모래	240	246	552		50		42			1,130	0.29	
무연탄	12						13		40	65	0.02	
유연탄	31						7907		10020	17,958	4.68	
철광석	165									165	0.04	
기타광석 및 생산품	4,720	17	157		223		318		814	6,249	1.63	
유류	원유(역청유류), 석유	5		1						6	0.00	
	석유정제품	1,816	1,472	26	61	62	84	66	1	71	3,659	0.95
	석유가스 및 기타 가스류	173	13,415								13,588	3.54
	비료	968									968	0.25
화학공업 생산품	22,737	9	40		2					22,788	5.94	
플라스틱, 고무 및 제품	32,025	18								32,043	8.36	
피혁류 및 그제품	1,873									1,873	0.49	
목재	원목	1,456	110								1,566	0.41
	목재, 목탄, 코르크 등	17,256	90	1		1					17,348	4.52
방직용 섬유 및 그제품	52,135	49	2								52,186	13.61
철재	고철	1,763	175	29		5	12	1			1,985	0.52
	철강 및 그제품	17,148	2094	44		7935	8023	192			35,436	9.24
기계류	비철금속 및 그제품	12,667	3			16					12,686	3.31
	기계류 및 그부품	28,966	2097			38	627				31,728	8.28
	전기기기 및 그부품	15,870	178			115					16,163	4.22
	차량 및 그부품	21,066	4068	218							25,352	6.61
	항공기, 선박 및 그부품	1,682	4	3							1,689	0.44
기타	46,690	54	2	1	2						46,749	12.19

자료 : PORT-MIS 및 부산항만공사.

3) 경남의 물류 현황

● 물류시설 현황

- 물류거점시설은 권역 설정에 따라 국제물류거점(항만·공항물류터미널, 항만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광역물류거점(IFT, ICD), 지역물류거점(물류단지, 일반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철도 CY,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구분되는데, 경남에 있는 물류거점시설은 다음과 같음

〈표 4-4-16〉

경상남도 유형별
물류거점시설 현황

구분		물류거점시설
국제물류 거점	항만(터미널)	부산항 신항, 마산항, 진해항, 통영항, 삼천포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
	공항(물류터미널)	-
	항만배후단지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가포신항 배후단지
	공항물류단지	-
광역물류 거점	내륙 물류기지	IFT 양산 복합물류터미널 ICD 양산ICD
	물류단지	무등물류단지·김해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조성 중)
지역물류 거점	물류터미널	진주물류터미널
	공동집배송센터	-
	철도 CY	신창원역 철도CY
	농수산물도매시장	창원시 팔용 농산물도매시장, 창원시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송수단 장치	공영차고지	내서 화물공영차고지, 진해 화물공영차고지, 진주 화물공영차고지, 거창 화물공영차고지,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영차고지, 김해 화물공영차고지, 양산 화물공영차고지, 고성 화물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신항 화물차 휴게소, 고성 고속도로 화물차휴게소, 진영 화물차 휴게소

(1) 광역물류거점 시설현황

● 양산 내륙물류기지 현황

- 내륙물류기지는 화물의 집하·하역·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과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는 대규모 거점물류시설임
- 2018년 현재 경상남도 내륙물류기지로 양산시 물금읍 일원에 양산 복합물류터미널과 양산 ICD가 운영 중임

〈표 4-4-17〉

양산 내륙물류기지
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자	위치	면적 (천㎡)	사업비 (억원)	주요시설	운영 개시일
양산내륙 물류기지	양산 IFT	한국복합물류(주)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291	2,543	화물취급장, 배송센터, 철도인입선, 주차장	1999.6.1 (2010.1.18준공)
	양산 ICD	(주)양산ICD	양산시 물금읍 중산리 1416	1,002	3,368	CY, CFS, 철송시설, 편의시설	2000.4.1 (2010.1.18준공)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3.

· 양산 내륙물류기지의 운영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천㎡, 천TEU/년)

〈표 4-4-18〉

양산 내륙물류기지 운영 현황

구분	터미널 명칭/ 운영법인	처리능력	운영실적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양산내륙 물류기지	양산복합물류터미널/ 한국복합물류(주)	면적 : 177	-	78.30% (1,079)	78.90% (140)	89.80% (159)	89.80% (159)
	양산CD/ 양산CD(주)	컨테이너 : 1,370	13.80% (189)	11.10% (157)	9.80% (139)	9.30% (131)	15.0% (160)

자료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2018.3.

(2) 지역물류거점 시설현황

● 물류단지 현황

- 물류산업 거점 확보를 통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최적의 물류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물류네트워크 기반 구축을 위한 물류단지는 무등물류단지, 김해상동스마트일반물류단지 2개 조성 중(19년 기준)임

〈표 4-4-19〉

경남 물류단지 현황

구분	단지명	위치	면적(㎡)	사업기간(사업비)
물류단지	무등물류단지	고성군 거류면 용산리 산5번지	273,799	2012~2020 (371억)
	김해상동스마트 일반물류단지	김해시 상동면 대감리 산164-1번지	97,745	2019~2021 (420억)

● 일반물류터미널 현황

- 경남지역에는 진주 화물터미널 1개소가 소재하고 있고, 총 부지면적은 21,574㎡(차고지 17,315㎡, 건축면적 1,881㎡/연면적 2,547㎡)이고 진주 화물터미널 내 입주업체는 2015년 1월 기준 40개인 것으로 조사됨

〈표 4-4-20〉

진주 화물터미널 현황

구분	터미널명	사업자	위치	면적(㎡)	주요시설	운영 개시일
일반 물류터미널	진주 화물터미널	(주)진주화물터미널	진주시 상대동 33-89	21,575	주차장, 운수업체, 화물 알선업체, 정비, 세차, 식당	1987.1.31

● 철도 CY 현황

〈표 4-4-21〉

컨테이너
철도수송시설 현황

구분	선별	역명	면적(㎡)	처리능력(TEU/년)	운영개시	취급능력(천TEU)
철도 CY	진해선	신창원	36,249	122,000	2004.11	122

● **공동물류센터**

- 경남도내 현재 운영 중인 공동물류센터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동물류센터 1개소임

〈표 4-4-22〉

공동물류센터 현황

구분	위치	운영	면적(㎡)	사업비(억원)	취급품목	준공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창원공동물류센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국가산업단지 내	대한통운(주) 위탁	대지: 25,998 연면적: 20,584	159	기계, 전자, 자동차부품	2005.12.5

● **농산물 도매시장**

- 경남에는 창원시 팔용 농산물 도매시장과 창원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3개소가 있고, 2018년 기준 3개소의 부지 총면적은 206,358㎡, 유통량은 174,590톤이며 거래금액은 313,348백만원임

〈표 4-4-23〉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

구분	위치	시장 규모(㎡)			유통현황(18년)			
		부지	건물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점포	저온 저장고	유통량 (톤)	금액 (백만원)
합계	3개소	206,358	107,176	6개소	8,655 (289)	4,747 (41)	174,590	313,348
창원시 팔용 농산물 도매시장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45	50,284	32,610	농협창원(공) (주)창원청과	2,992 (79)	3,153 (19)	59,340	103,768
창원시 내서 농산물 도매시장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 서읍 유통단지 33	78,820	34,501	창원원협(공) 마산청과(주)	2,124 (118)	801 (8)	57,861	94,227
진주시 농산물 도매시장	진주시 남강로 1689	77,254	40,065	진주농협(공) 진주중앙청과 (주)	3,539 (92)	793 (14)	57,389	115,353

주 : ()는 개수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2018.

(3) 화물자동차 관련 시설현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 경남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진해구에 각각 1개소가 운영하고 있음. 마산회원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면적 6,941㎡의 규모로 총사업비 2.3억원으로 2008년 5월 완공하여 현재 운영 중임. 진해구의 경우는 15,000㎡의 규모에 총사업비 36억원을 들여 2010년 9월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임
- 현재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 3개소로 창원시, 진주시 및 거창군에 조성 또는 계획 중임

〈표 4-4-2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현황 및 계획

구분	위치	면적(㎡)	주차대수(대)	사업비(억원)	비고
공영 차고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리	6,941	44	2.3	운영 중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249	15,000	105	36	
	거창읍 대평리 1340-1 일원	18,500	110	44	
	진주시 호탄동 440-3번지 일원	50,500	-	340	공사 중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 758번지 일원	51,930	561	396	
	김해시 생림면 사촌리 507	3650	50	2	
	양산시 다방동 45	45263	323	198	
	고성군 고성읍 울대리 193	21268	248	40	

● 화물차 휴게소 현황

- 경남의 화물차 휴게소는 총 2개소가 운영 중이고 1개소는 추진 중임. 고성공룡나라휴게소는 총 부지 42,121㎡, 주차면적 12,109㎡, 주차대수 188대(소형 131, 대형 57)의 규모로 2005년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부산항 신항 화물차 휴게소는 신항 북권 배후지역에 신항 이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52,242㎡ 부지에 주차장, 휴게동, 주유소, 정비·검사·세차동 등의 건물을 갖추고 400대의 화물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규모로 2011년 11월 준공하여 운영 중임

〈표 4-4-25〉

화물차 휴게소 현황

구분	위치	운영	면적(㎡)	주차대수(대)
고성공룡나라휴게소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447	(주)연합진흥 위탁운영	대지: 42,121 연면적: 2,368	188
부산항 신항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일원	SK에너지(주)	대지: 52,242 연면적: 7,896	400
진영 화물차 휴게소	김해시 진영읍 좌곡리 일원	SK에너지(주)	대지: 60,076	466

(4) 유통시설 현황

● 유통업체

- 2017년 현재 경상남도의 유통업체는 총 247개로 대형마트(할인점) 31개, 전문점 6개, 백화점 7개, 쇼핑센터 8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177개가 영업 중이고, 총 매장 면적은 1,856,762㎡로 조사됨

(단위 : 개소, m²)

〈표 4-4-26〉

대규모 점포 현황

구분	합계		대형마트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개소	매장면적	개소	매장면적	개소	매장면적	개소	매장면적	개소	매장면적	개소	매장면적
경남	247	1,856,762	31	295,839	6	47,351	7	174,513	8	162,870	177	1,053,703
창원시	97	914,774	12	138,168	-	-	5	111,019	-	-	75	619,826
진주시	21	252,072	1	10,230	2	17,110	1	21,896	3	24,486	13	147,487
통영시	6	43,434	2	17,596	-	-	-	-	1	3,251	1	9,784
사천시	15	68,717	2	14,061	-	-	-	-	-	-	13	54,656
김해시	25	266,017	5	54,970	3	19,660	-	-	4	135,133	7	29,608
밀양시	6	32,867	1	14,185	-	-	-	-	-	-	5	18,682
거제시	13	89,713	2	17,724	-	-	1	41,598	-	-	10	30,391
양산시	12	68,251	3	26,344	1	10,581	-	-	-	-	7	27,727
의령군	2	14,178	-	-	-	-	-	-	-	-	2	14,178
함안군	4	6,730	-	-	-	-	-	-	-	-	4	6,730
창녕군	7	4,924	-	-	-	-	-	-	-	-	6	4,164
고성군	5	39,780	1	951	-	-	-	-	-	-	4	38,829
남해군	1	2,890	-	-	-	-	-	-	-	-	1	2,890
하동군	7	10,181	-	-	-	-	-	-	-	-	7	10,181
산청군	7	8,501	-	-	-	-	-	-	-	-	7	8,501
함양군	5	11,052	1	716	-	-	-	-	-	-	4	10,336
거창군	4	9,710	-	-	-	-	-	-	-	-	4	9,710
합천군	10	12,972	1	894	-	-	-	-	-	-	7	10,023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18.

●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 경남에는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가 3개소인데, 창원시, 진주시, 거제시에 각각 1개소가 운영 중임

〈표 4-4-27〉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현황

구분	위치	규모(m ²)		사업주체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창원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0-1 번지 일원(농산물도매시장 옆)	6,600	3,418	창원생활용품 유통조합	98	도매배송장, 창고 등 유통시설 · 물류시설 · 판매시설 건립 및 설비구축
진주 중소기업 공동도매 물류센터	진주시 정촌면 정촌산업단지 내 유통시설 용지 일원	12,084	4,066.4	진주슈퍼마켓 협동조합	70	
거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거제시 연초면 죽토리 1153-7번지 일원	2,508	-	거제 슈퍼조합	40	물류창고, 사무실, 냉동 · 냉장시설 등

4) 경남의 물류시설 및 지역 간 물동량

● 사천공항 수송 실적

- 사천공항의 여객수송 실적은 2014년 여객 124,792명에서 2019년 219,289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함
- 화물수송 실적도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0년 786톤에서 2019년 867.5톤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임

〈표 4-4-28〉

사천공항 여객 및 화물수송 실적

(단위 : 편수, 명, 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운항	도착	992	913	894	857	901	907	911	936	969
	출발	991	913	894	857	901	907	911	933	968
	계	1,983	1,826	1,788	1,714	1,802	1,814	1,822	1,869	1,937
여객	도착	81,143	74,528	73,141	63,109	65,529	70,945	76,523	89,931	93,169
	출발	79,561	68,955	65,054	52,997	59,263	65,567	74,205	88,330	89,517
	계	160,704	143,483	138,195	116,106	124,792	136,512	150,728	178,261	182,686
화물	도착	389.9	398.5	364.9	336.5	354.6	370	385.8	413.9	447.5
	출발	396.1	317.3	288.6	268.1	276.7	288	313.7	347.1	364.7
	계	786	715.8	653.5	604.3	631.3	658	699.5	761	812.3

주 : 사천 공항은 화물 물동량 부족으로 인하여 2009년 6월부터 화물터미널 운영을 중단함.
 자료 : 한국공항공사(<http://www.airportal.co.kr>).

● 양산 ICD 물동량 처리 실적

- 양산 ICD의 화물처리 실적은 19년 142,457TEU이고, 전년 대비 38.7%의 증가율을 보이고, 이는 재유통된 공컨테이너의 처리실적량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보임
- 양산 ICD의 화물처리 실적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0.5%이며, 이중 적컨테이너는 연평균 2.3% 증가, 공컨테이너는 연평균 0.1% 감소함

〈표 4-4-29〉

양산 ICD 화물처리 실적

(단위 : TEU)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138,962	131,322	159,949	161,430	102,745	142,457
적컨테이너	34,388	35,842	42,876	41,483	38,073	38,529
공컨테이너	104,574	95,480	117,073	119,947	64,672	103,928

자료 : 양산 ICD(<http://www.ysicd.co.kr/>).

(1) 경남 도로화물 물동량

- 경남의 도로화물 발생 물동량은 2017년 1.6억톤에서 2035년 2.0억톤으로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경남의 도로화물 도착 물동량은 2017년 1.5억톤에서 2035년 1.9억톤으로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단위 : 천톤/년)

〈표 4-4-30〉

도로화물 대분류
품목별 물동량
예측결과(2017년)

구분	농림수축산품		광산품		금속기계 공업품		화학공업품		경공업품		잡공업품		기타		도매업품		컨테이너		합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경남	3,833	4,080	44,402	48,961	41,119	40,446	26,093	26,346	4,395	3,710	3,974	4,906	132	422	13,445	14,145	19,478	11,165	156,870	154,180
창원시	390	1,263	12,217	9,138	10,646	14,583	3,682	8,218	717	1,360	720	1,691	27	142	4,732	4,597	13,091	3,802	46,221	44,795
마산 합포구	233	205	4,938	1,381	1,596	5,636	2,112	1,223	254	157	435	223	8	31	921	646	181	432	10,678	9,934
마산 회원구	12	168	1,311	1,465	791	1,590	464	1,309	120	171	73	237	5	21	924	723	1,374	38	5,075	5,722
성산구	7	419	1,476	3,064	5,631	3,739	343	2,715	11	466	80	688	8	44	701	1,583	9,128	2,240	17,384	14,958
의창구	88	339	1,614	2,281	1,755	2,555	294	2,120	73	279	127	387	4	33	1,903	1,182	1,522	87	7,380	9,263
진해구	50	132	2,878	948	872	1,063	469	851	259	287	5	157	2	13	282	463	885	1,007	5,703	4,919
진주시	240	311	2,541	2,626	896	2,280	933	2,525	208	314	179	504	3	37	1,531	1,344	214	362	6,745	10,302
통영시	277	144	1,016	698	168	786	333	934	129	101	3	150	1	12	493	458	43	46	2,463	3,329
사천시	194	116	11,205	978	751	910	683	970	316	112	89	167	1	13	484	511	56	171	13,778	3,948
김해시	194	616	4,284	4,028	7,961	3,894	7,202	4,311	777	547	1,427	761	64	66	2,602	2,303	1,506	3,111	26,017	19,637
밀양시	229	85	948	636	577	629	1,160	743	170	82	105	124	2	10	430	374	153	112	3,774	2,796
거제시	149	315	2,267	2,363	14,351	11,822	626	2,342	110	330	13	451	1	43	247	1,341	10	60	17,774	19,066
양산시	87	742	3,068	2,505	2,130	2,312	3,888	2,526	451	417	691	443	20	47	1,245	1,352	3,962	3,039	15,532	13,384
의령군	126	22	532	180	159	161	262	187	44	21	51	31		2	62	96	43	16	1,279	718
함안군	197	156	589	1,424	2,274	749	2,362	853	156	115	378	136	5	14	418	416	275	209	6,653	4,071
창녕군	317	60	829	617	578	439	679	525	164	62	178	88	2	8	294	258	27	95	3,067	2,153
고성군	184	48	487	10,022	313	350	416	425	241	46	19	68	1	5	141	209	26	32	1,829	11,206
남해군	257	34	457	228	11	251	76	280	112	33		49	1	4	141	150	1		1,056	1,029
하동군	161	33	730	12,624	39	245	817	321	96	32	3	48		4	89	146	5	3	1,942	13,455
산청군	181	28	886	188	36	209	586	262	172	27	44	41	2	3	115	125	9	6	2,031	888
함양군	203	30	549	201	55	271	788	278	225	40	19	44	1	3	110	134	26	58	1,976	1,059
거창군	206	46	1,157	303	162	336	830	388	181	44	41	66		5	226	201	28	27	2,832	1,416
합천군	243	30	650	201	12	218	771	259	127	29	13	43		3	84	130	2	16	1,902	929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품목별 도로 물동량 OD, 2017년 기준.

●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 경상남도 도로화물 물동량은 2.44억톤이고, 유입 물동량은 0.87억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8.8%이고, 유출 물동량은 0.90억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9.4%, 내부화물 물동량은 0.67억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7.8%를 차지함

〈표 4-4-31〉

경상남도 물동량
(2017년)

구분	전체 물동량	유입	유출	내부
2017년	243,749	86,879	89,570	67,300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품목별 도로 물동량 OD, 2017년 기준.

● 경상남도-전국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 경상남도-전국 간 도로화물 유출입 물동량은 175,641천톤으로 유입은 86,881천톤, 유출은 88,760천톤으로 물동량의 차이가 미미함
- 경상남도-전국간 물동량이 많은 지역은 부산 29.6%, 전남 18.3%, 경북 11.5%, 울산 8.7%, 경기 7.6%의 순임

(단위 : 천톤, %)

〈표 4-4-32〉

경상남도-전국
도로화물 유출입
물동량(2017년)

구분	물동량			비중		
	유입	유출	소계	유입	유출	소계
서울	835	2,275	3,110	1.0	2.6	1.8
부산	22,746	29,179	51,925	26.2	32.9	29.6
대구	3,319	2,428	5,747	3.8	2.7	3.3
인천	2,353	1,060	3,413	2.7	1.2	1.9
광주	1,266	850	2,116	1.5	1.0	1.2
대전	309	730	1,039	0.4	0.8	0.6
울산	4,696	10,658	15,354	5.4	12.0	8.7
경기	5,971	7,292	13,263	6.9	8.2	7.6
강원	3,304	2,000	5,304	3.8	2.3	3.0
충북	3,630	2,488	6,118	4.2	2.8	3.5
충남	3,397	4,398	7,795	3.9	5.0	4.4
전북	5,179	2,373	7,552	6.0	2.7	4.3
전남	20,769	11,421	32,190	23.9	12.9	18.3
경북	8,662	11,608	20,270	10.0	13.1	11.5
제주	-	-	-	-	-	-
세종	445	811	1,256	0.5	0.9	0.7
전국	86,881	89,571	175,641	100.0	100.0	100.0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품목별 도로 물동량 OD, 2017년 기준.

● 경상남도-경상남도 도로화물 물동량 현황

- 경상남도-경상남도 간 도로화물 유출입 물동량이 많은 지역은 진주권(42.8%), 창원권(37.9%), 김해권(17.8%), 함양권(11.5%)의 순임
- 진주권에 도로화물 물동량이 많은 것은 하동군 및 고성군에 입지한 화력발전소의 원료인 유연탄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단위 : 천톤, %)

〈표 4-4-33〉

경상남도-경상남도
도로화물 물동량
(2017년)

구분	물동량				비중				
	유입	유출	소계	내부	유입	유출	소계	내부	
함양권	함양군	246	319	565	54	0.4	0.5	0.4	0.2
	거창군	271	438	709	55	0.4	0.7	0.5	0.2
	합천군	231	365	596	32	0.3	0.5	0.4	0.1
	산청군	236	463	699	35	0.4	0.7	0.5	0.2
	소계	984	1,585	2,569	176	1.5	2.4	1.9	0.8
진주권	진주시	3,638	2,227	5,865	897	5.4	3.3	4.4	3.9
	사천시	1,533	11,603	13,136	666	2.3	17.2	9.8	2.9
	하동군	308	364	672	57	0.5	0.5	0.5	0.2
	고성군	10,220	743	10,963	54	15.2	1.1	8.1	0.2
	거제시	11,865	11,625	23,490	9,629	17.6	17.3	17.5	41.6
	남해군	233	213	446	18	0.3	0.3	0.3	0.1
	통영시	1,030	867	1,897	239	1.5	1.3	1.4	1.0
소계	28,827	27,642	56,469	11,560	42.8	41.1	42.0	49.9	
창원권	의창구	4,630	3,216	7,846	1,077	6.9	4.8	5.8	4.6
	성산구	6,879	6,164	13,043	1,484	10.2	9.2	9.7	6.4
	마산합포구	6,121	5,355	11,476	517	9.1	8.0	8.5	2.2
	마산회원구	3,062	2,230	5,292	544	4.5	3.3	3.9	2.3
	진해구	1,894	3,027	4,921	637	2.8	4.5	3.7	2.7
	소계	22,586	19,992	42,578	4,259	33.6	29.7	31.6	18.4
김해권	함안군	1,949	2,596	4,545	449	2.9	3.9	3.4	1.9
	의령군	263	351	614	16	0.4	0.5	0.5	0.1
	창녕군	735	761	1,496	97	1.1	1.1	1.1	0.4
	소계	25,533	23,700	49,233	4,821	37.9	35.2	36.6	20.8
	김해시	7,814	10,121	17,935	5,166	11.6	15.0	13.3	22.3
밀양시	양산시	3,116	3,020	6,136	1,307	4.6	4.5	4.6	5.6
	밀양시	1,024	1,230	2,254	134	1.5	1.8	1.7	0.6
	소계	11,954	14,371	26,325	6,607	17.8	21.4	19.6	28.5
합계	67,298	67,298	134,596	23,164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품목별 도로 물동량 OD, 2017년 기준.

(2) 경남 철도화물 물동량

- 경남의 철도화물 발생 물동량은 2017년 5.3만톤에서 2035년 6.5만톤으로 연평균 1.2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경남의 철도화물 도착 물동량은 2017년 23만톤에서 2035년 28만톤으로 연평균 1.2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표 4-4-34〉

철도화물 물동량
예측결과(2017년)

(단위 : 톤/년)

구분	컨테이너		비컨테이너		합계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발생량	도착량
경남	-	-	53,514	231,310	53,514	231,310
창원시	-	-	53,324	39,735	53,324	39,735
의창구	-	-	43,347	23,756	43,347	23,756
성산구	-	-	-	-	0	0
마산합포구	-	-	-	-	0	0
마산회원구	-	-	2,501	4,345	2,501	4,345
진해구	-	-	7,476	11,634	7,476	11,634
진주시	-	-	-	5,709	0	5,709
통영시	-	-	-	-	0	0
사천시	-	-	-	-	0	0
김해시	-	-	43	148,852	43	148,852
밀양시	-	-	102	31,244	102	31,244
거제시	-	-	-	-	0	0
양산시	-	-	25	5,770	25	5,770
의령군	-	-	-	-	0	0
함안군	-	-	-	-	0	0
창녕군	-	-	-	-	0	0
고성군	-	-	-	-	0	0
남해군	-	-	-	-	0	0
하동군	-	-	-	-	0	0
산청군	-	-	-	-	0	0
함양군	-	-	-	-	0	0
거창군	-	-	-	-	0	0
합천군	-	-	-	-	0	0
제주	-	-	-	-	0	0
세종	188,472	172,926	5,287	1,393,469	193,759	1,566,395
합계	8,465,507	8,465,507	23,204,103	23,204,103	31,669,610	31,669,610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철도항공 수단별 물동량 OD, 2017년 기준.

● 철도화물 물동량 현황

- 경상남도 철도화물 물동량은 301,795톤이고, 유입 물동량은 231,310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57.9%를 차지하고, 유출 물동량은 53,514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13.4%, 내부화물 물동량은 16,971톤으로 전체 물동량의 28.7%를 차지함

(단위 : 톤)

〈표 4-4-35〉

경상남도 철도화물
물동량(2017년)

구분	전체 물동량	유입	유출	내부
2017년	267,853	214,339	36,543	16,971

자료 : 국가교통DB, 2018년 전국지역간 철도항공 수단별 물동량 OD, 2017년 기준.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항만 분야 미래 트렌드

(1) 컨테이너 선박의 초대형화

● 대형 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 경쟁 지속

- 2013년 최초의 Megamax급 선박의 출현 이후 1만 8천TEU급 이상 선박 대폭 증가, 2018년 기준 1만 8천TEU급 초대형 선박은 74척 운항
- 1만 8천TEU급 이상 초대형선박 선복량은 2013~2016년간 연평균 129.4% 증가, 컨테이너선의 대형화 추세 급격히 진행
- 2017년 MSC와 CMA-CGM이 2만 2천TEU급 선박 총 20척 발주로 대형선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확보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

●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위한 항만 시설 확보 필요

- 2만 5천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접안·하역을 위해서는 약 516m의 안벽길이와 25열 이상의 컨테이너 크레인 확보 필요
- 초대형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안벽 수심 17m 이상, 항로 수심 19m 이상 확보 필요

(2) 세계 주요 항만 초대형 신규 터미널 개발

● 초대형 신규 터미널 개발

- 로테르담항은 Maasvlakte2 지역에 수심 20m, 연간 1천 4백만TEU 이상 처리 가능한 초대형 터미널 개발
- 싱가포르는 연간 6천 5백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투아스(Tuas) 신항 개발, 총 66선석, 수심 20~23m의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개발
- 말레이시아 포트클랑은 2040년 연간 3천 5백만TEU 처리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 예정, 탄중펠레파스항은 연간 2천 2백만TEU 처리 가능한 초대형 항만으로 확장 계획

● 기존 터미널 통합을 통한 선박 대형화 추세 대응

- 중국, 일본의 항만은 인근 지역 항만을 중심으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내 항만은 항만 간 또는 항만 내 터미널 간의 얼라이언스를 체결하여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응

(3) 해운 얼라이언스의 초대형화

● 얼라이언스 초대형화 및 초대형 컨테이너선 대폭 증가

- 2017년 기준 4대 해운 얼라이언스 체제가 3강 체제로 재편, 3대 얼라이언스 재편에 따른 항로 및 기항지 변경 등에 따른 항만 간 경쟁 심화
 - 항만의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 하역로 인화 요구,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른 부담 가중
- 초대형 얼라이언스들에 의해 2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40척(2017년 기준)이 발주되었으나 부산항 신항 내 일부 터미널은 초대형선(2만TEU급) 접안 대비 부족(24열 이상 컨테이너크레인 부족)

● 부산항 신항의 하역 생산성 향상 필요

- 선사들은 운영비 절감과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항만 내 재항 시간 단축을 위한 하역 생산성 향상 요구
- 부산항 신항에 기항하는 1만 5천TEU 이상 초대형 선박에서 처리되는 평균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사들의 생산성 증대 요구 더욱 강화 예상

(4) 항만 자동화 시스템 도입 확대

● 항만 간 경쟁 심화로 자동화 컨테이너터미널 시스템 개발 확대

- 컨테이너선 대형화 및 대형 선사 간 전략적 제휴 확대로 각국의 중심 항만 경쟁 심화
- 초대형 선박의 하역 서비스 시간의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 개발 필요성 확대
 - 초대형선 기항유치, 기후변화 대응, 하역작업 노동력 부족 해결, 인건비 절약 및 항만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자동화 항만 개발 확대
 - 자동화 터미널 확대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10년 내 대형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자동화 시스템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

● 항만 환경오염 최소화

- 항만 내 오염 최소화 및 자원 절약을 위한 친환경, 고효율 항만 조성 노력

(5) 세계 주요 항만 대기환경 개선 강화

● 선박 배출가스 규제 강화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양오염방지협약에 따라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지속, 2020년부터 전 해역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강화 결정

- EU는 자체적인 법령 근거로 IMO의 규제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자체적인 ECA 지정 등 선박의 배출 규제 마련
- 최근 해운의 주요 관심사는 IMO 2020 환경규제로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행 중인 이번 규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신규로 건조되는 선박뿐만 아니라 기존에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도 적용되는 것임
- 선사들은 스크러버(Scrubber)를 선박에 장착해 기존 고유황유(HFO) 계속 사용, 친환경 LNG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엔진으로 변경, 기존 고유황유(HSFO)를 저유황유(LSFO)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대응

● 항만 내 LNG 벙커링 인프라 확대

- DNV GL은 2020년까지 LNG 추진선박이 600척에 이를 것으로 전망, 글로벌 해운사들은 LNG 추진선 발주 적극 검토
- 자동차운반선, 크루즈선 등의 선종도 LNG 추진선박이 출현, 이러한 추세는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로테르담항에서는 셸(Shell)사가 LNG 벙커링 사업을 위해 터미널 임대 및 LNG 벙커링 선박 발주
- 싱가포르항은 2020년부터 선박에 LNG 벙커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2013년부터 관련 계획 추진

●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도입

- 유럽 주요 항만들을 중심으로 풍력, 태양광 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주목, 로테르담항은 2020년까지 총 300MW급 생산시설 설치 계획
- 함부르크항은 Eurigate 터미널에 3기의 풍력발전 시설 도입(연간 8,000MW 생산), 벨기에 안트워프항은 최대 55개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 예정, 일본은 항만 내 해상풍력발전소를 9개 항만(기타규슈항, 가고시마항, 아키타항 등)에 구축 검토
- 로테르담항 냉동창고 지붕(연간 750MWh, 7,500㎡ 규모), 미국 LA 항만은 물류창고 지붕(16.4MW, 185,506㎡ 규모), 미국 웨스트 새크라멘트항은 곡물저장 창고 지붕 활용(637kW, 8,361㎡ 규모)으로 항만의 전력 수요 충당 계획

● 육상전원공급장치(Alternative Maritime Power, AMP) 설치 확대

- 미국 LA/LB항은 AMP 사용 강제화(2017년부터 입항선박의 50%, 2020년 80% 이상 선박 확대 계획, 보조엔진 사용 3시간 이하로 규정), EU는 2025년까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AMP 설치 의무화 예정

(6) 소비 채널 다양화 등으로 新물류 서비스 수요 급증

●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거래 및 택배물량 급증

- 신선식품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소비 채널 다양화 등으로 택배, O2O 등 국민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新물류 서비스 수요 급증
- 온라인 쇼핑 거래액 : 2018년 114조원 → 2019년 135조원(전년 대비 18.3% 증가)
- 모바일 쇼핑 거래액 : 2018년 69조원 → 2019년 87조원(전년 대비 25.5% 증가)
- 국내 택배 시장 물동량 : 2008년 8.9억 박스 → 2019년 27.9억 박스(연평균 11% 성장)

● 전자상거래 시장 지속 확대

- 향후 전자상거래의 지속 성장이 예상되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거대한 성장이 예상되어 물류업계에서는 기존 항공 운송을 단거리 해상 운송으로 개편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음
- B2B 기업물류가 B2C 전자상거래 물류로 바뀌고, 소품종 대량 상품이 다품종 소량으로 바뀌고 있어 풀필먼트 서비스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
- 2020년 택배 시장도 높은 성장세 예상, 택배 물동량은 30억 6,240만개 정도, 매출액은 약 6조 7,372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

(7) 물류기업 M&A 빅뱅 및 이종 간 협업 확대

- 물류 기업들이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M&A이고, 앞으로도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M&A 추세는 이어질 전망
- 네트워크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 구축과 함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IT 영역의 통합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
- 화주와 3자 물류업체 간의 더욱 많은 협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화주와 물류업체는 비용 감축과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 추진
- 국내는 계열 화주사 물량을 기반으로 성장한 2PL 물류업체가 많으나, 2PL과 3PL이 많은 경우 협업을 확대해 가고 있음

(8) 디지털 플랫폼 등 물류 인프라의 진화

●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통한 물류 인프라 개선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맞춰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동화 인프라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2019년부터 아마존의 키바와 유사한 로봇을 선보이는 기업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상용화를 위한 단가 문제 해결 등을 통해 2020년 이후에는 물류로봇 활성화 예상

- 사물인터넷(IoT)은 최근 물류 트렌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아이템이라 할 수 있는데 화물 위치 추적과 온습도를 측정하는 RFID 태그와 센서에 이르기까지 사물인터넷 기술의 물류산업에의 보급은 향후에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사물인터넷 기술 보급의 확대는 화주사가 실시간 가시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는 물류업체와의 커뮤니케이션 시간 절감 및 더 빠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
-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통해 납품 일정과 통관 정보 등 여러 데이터의 연계성 확보, 데이터 위변조 방지를 통한 위조사기 예방과 같은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

● 디지털 물류 플랫폼의 확산

- IT에 기반한 다양한 물류 플랫폼이 성장 중임. 이를 통해 물류의 가시성과 투명성이 보다 확대
- 이러한 가치 창출을 위해 전통적인 물류업체들도 IT 역량을 강화하고 물류 플랫폼 사업에 진입하고, 기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

(9) 공급사슬 관련 위기관리 역량 강화

- 미중 무역분쟁, 한일 무역갈등,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생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다른 국가로 생산 네트워크를 조정하거나 해외 진출 공장의 국내 유티(리쇼어링)의 필요성이 커짐
- 대체생산 지원, 제3국 대체생산 지원 등을 통한 생산 정상화에 관한 이슈는 공급망 위험 관리 역량과 직결되어 향후 실효적인 공급사슬 위기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효과적인 공급망 위험 관리 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

(10) 드론/스마트 모빌리티 배송 확대

- 전 세계적으로 트럭 등과 같은 기존 물류 모빌리티를 통한 배송의 한계점을 넘어선 스마트 모빌리티 배송에 대한 관심 고조
- 국외의 경우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스마트 모빌리티 및 드론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 페덱스 등임
-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존 배송으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도서·오지 지역에 대한 드론 배송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행안부는 전국 도서 및 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통합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드론 배송 분야 경쟁력 확보 기대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초대형 항만인 진해신항 조성

- 서진 부두 서측 21선석 규모의 진해신항 조성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반 구축, 고용 창출 및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물류 비즈니스 환경 조성
- 4차 산업 첨단기술과 접목한 친환경 스마트 항만 및 융복합 항만물류 관련 산업 발전

●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CBT(Cross-Border Trade) 시장 대응, 공항·항만 그리고 대륙철도 운송 등 복합연계 운송의 동북아 거점이 되는 경남지역의 장점을 살려 글로벌 물류업체(글로벌 풀필먼트센터)들을 유치할 수 있는 대규모 물류부지 조성을 통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반 구축
- 동남권 신공항과 연계된 항공 물류배후단지 조성 및 해상·육상(철도) 복합 운송망 확충을 위한 신항 인입철도 및 철송장 확대 조성

● 신항 연계 교통망 및 물류망 확충

- 신항 연결성 제고를 위한 항만 배후도로망 및 항만 연계 간선 철도망 확대 구축
- 동남 광역경제권 연계 철도 노선 확충을 통한 신항 접근성 개선 및 항만 운영 효율성 제고

● 부산항 신항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항만 자동화 장비 관련 산업 육성

-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개념의 컨테이너 터미널 시스템의 개발·발전 방향을 주시하고, 현장 적용 활용 지원을 위해 동적 축소 모형 제작 및 성능 검증을 통한 자동화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항만 자동화 장비 국산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 신항 인근 고부가가치 창출 배후부지 및 항만 지원 도시 기능 강화

- 항만 배후도시 종합발전 방안 마련을 통해 신항 인근 배후부지, 산업단지 추가 확보 및 항만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 및 기존 도시 기능 강화
- 항만 배후단지 내 농축수산물 제조·가공업종 및 복합업종 유치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지자체 특화구역 지정 및 고부가가치 유망 품목·기업 전략적 유치를 통한 글로벌 수출입 제조·가공 기반 구축

● 글로벌 복합 물류기술 핵심 거점 지역으로 성장

- 동북아 물류 R&D센터(단지) 설치 및 융·복합스마트물류단지 구축을 통한 물류기술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기능으로 복합 물류기술 핵심 거점으로 성장

● **물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에 따른 물류산업 첨단화**

- 물류산업은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에 따라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한 물류산업 첨단화 추진
- 경상남도 산업 및 물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물류거점 시설(공항·항만, 물류단지, 첨단물류시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등)을 단계적·지속적으로 조성 추진

● **생활물류 대응 등 물류 인프라 조성 확대**

- 물류 트렌드, 국가 물류정책 방향 등을 고려할 때 경남에서도 온라인 시장의 성장 및 신선물류 수요 충족, 택배 등의 생활물류 수요 대응 등을 위한 물류 인프라 확대 조성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동북아 물류허브 조성을 통한 글로벌 핵심 경제권 도약**

- 트라이포트 관련 인프라 구축
- 친환경·스마트 진해신항 조성
- 수도권 대응 광역경제권 교통망·물류망 확충
- 복합물류 환경 조성 및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원스톱 스마트 환경 조성

●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최적지 구현**

- 스마트 물류단지 및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 생활물류 지원 인프라 확충
- 공공물류시설 조성 및 디지털물류 플랫폼 서비스 확대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및 물류네트워크 확충
- 스마트물류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시설 조성

2) 추진전략

● 물류·항만 부문 핵심지표

〈표 4-4-36〉

물류·항만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신항 배후단지 부가가치물류 비율	20%	40%	50%
3자 물류 이용률	35%	50%	60%
전국 대비 물류업체 수	4.6%	6.0%	7.0%

● 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스마트 진해신항 조성
- 해상·육상 복합 운송망 확충을 위한 항만 인입철도 및 철송장 확충
- 동남권 신공항 조성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조성
- 항만 배후물류단지 및 철도 물류단지 확대 조성
- 신항의 항만서비스 수준 강화
- 동북아 물류 플랫폼 도시 확대 조성
- 항만 배후도시 기능 강화

● 트라이포트 연계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 확충

- 항만 배후도로망 및 항만 연계 간선 철도망 구축
- 트라이포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 복합물류 환경 조성

- 물류 플랫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능 배치
- 실시간 화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원스톱 스마트 지원 환경 조성

- 항만 배후단지 내 글로벌 수출입 제조·가공 기반 구축
- 항만 배후단지 내 지자체 특화구역 조성 및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 항만 클러스터 구축 및 항만 관련 산업 스타트업 육성
- 막힘없는 물류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서비스 체계 구축

●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 확대 조성**

- 스마트 물류단지 및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 대형 스마트 물류센터 유치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 스마트 물류기술 R&D 거점 조성
- 스마트 물류 관련 스타트업 및 전문 인력 육성

4. 추진시책

(1) 신항 중심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친환경·스마트 진해신항 조성**

- 진해신항을 자동화·스마트 항만 구축, 육상전원공급장치 및 전기 사용 항만장비 확대
- 신항 서컨테이너부두 서측 위치에 30년까지 9개 선석, 40년까지 12개 선석 조성

● **해상·육상 복합 운송망 확충을 위한 항만 인입철도 및 철송장 확충**

- 진해신항 철도 연결 및 서권지역 철송장 확대 조성

● **동남권 신공항 조성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조성**

- 공항 인근 화물터미널 및 공항 배후물류단지 조성

● **항만 배후물류단지 및 철도 물류단지 확대 조성**

- 진해신항 배후지역 추가 매립 등을 통한 배후물류단지 추가 조성
- 진해신항 배후지역 산지 절취를 통한 배후물류단지 조성

● **신항의 항만서비스 수준 강화**

- 수리조선, LNG 벙커링 시설 조속한 조성

● **동북아 물류 플랫폼 도시 확대 조성**

- 신항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동북아 물류 플랫폼 도시로 지정

● 항만 배후도시 기능 강화

- 진해신항 조성에 따른 배후도시 확대 조성 및 기존 도시 항만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 안골지역 매립을 통한 항만지원 기능의 신도시 조성
- 안골 인근 지역 주거·상업 지역 확대 조성
- 진해구 제덕동 일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 안골 인근 및 연도에 해양관광 및 레저 시설 조성

(2) 트라이포트 연계 교통 및 물류 네트워크 확충

● 항만 배후도로망 및 항만 연계 간선 철도망 구축

- 진해신항 연결철도 신설(진례~진해신항)
- 신항과 창원국가산단 및 고속도로 연결성 개선(신항 ~ 석동-소사간 도로 ~ 제2안민터널 ~ (부산-창원간 자동차전용도로) ~ 25호 도로 ~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비음산 터널 ~ 남해고속도로(진례IC))
- 진해신항 ~ 구산면 연결도로 신설(창원 해양순환도로 구축)
- 웅동-안골-용원 연결도로 신설 및 확대
- 웅동 배후단지-마천 연결도로 개설
- 진해신항 제3배후도로 신설(진영JC~창원시 삼정자동~진해신항)
- 진해신항 내륙항만도로 신설(진영IC~영산C / 27.4km)
- 창원 항만도로 신설(제2안민터널~진해구청~백일마을~웅동배후단지~진해신항)

● 트라이포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

- 창원 도시철도 신설(창원역~성주사역~녹산역(하단-녹산선))

(3) 복합물류 환경 조성

● 물류 플랫폼 효과성 제고를 위한 핵심 기능 배치

- 창원시 진해구 신항 인근지역에 수리조선단지 조성
- 실시간 화물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 신북방·신남방 무역 지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조성

- 웅동배후단지 복합화물차 휴게소 조성
- 신항 소방서 신설
- 항만-철도-항공 복합물류를 위한 거점 시설 조성

(4) 항만물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및 원스톱 스마트 지원 환경 조성

-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입주 및 항만업무 지원 환경 조성을 위한 항만 비즈니스센터 조성
- 중소기업 수출입,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 납품 지원 등을 위한 공공 물류센터 조성
- 항만 및 항만배후단지 일자리 스마트 매칭 센터 신설/운영
- 물류 특화 외국인 학교 설립(물류 전문 인력 및 스타트업 육성)
- 신항 현장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신항 축제 개최(진해 해양공원 인근)
- 신항 해운항만산업 정보시스템 구축

(5)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 지원 인프라 확대 조성

- 스마트 물류단지 및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
 - 창원시 가주/용원동 일원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 창원시 팔용동 일원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 물류단지 조성
 - 김해시 진례면 · 한림면, 진주시 가좌동, 창원시 북면 등에 물류단지 조성
- 대형 스마트 물류센터 유치 및 물류센터 스마트화 지원
 - 스마트 물류단지 및 도시 인근 스마트 물류센터 유치
 - 운영 중인 물류센터의 스마트화 지원사업 추진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 신항 배후부지 내 중소기업 및 상인들을 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
-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대 조성
 -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함안군 등에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 스마트 물류기술 R&D 거점 조성(동북아 물류R&D 센터 조성)
 - 창원시 신항 인근지역에 스마트 복합물류 R&D 센터 및 생산단지 조성
- 스마트 물류 관련 스타트업 및 전문인력 육성

제3절

스마트·정보
인프라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2020년 정보기술 트렌드

- 디지털 기술이 물리학 및 생물학 분야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2020 세계경제포럼)
- 미국 IT 기업인인 가트너(Gartner)는 2020년의 10대 전략 기술을 인간 중심(People-Centric)과 스마트 공간(Smart Spaces)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함께 각 분야에서 공통으로 나아가야 할 정보기술 동향을 강조함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일자리와 일하는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기여도 요구
-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새로운 10년을 이끌어갈 'New Wave'가 시작되며, 사회 전면의 디지털로 전환을 준비해야 함을 강조
- 이러한 트렌드로부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클라우드 컴퓨팅, 5G 등이 정보기술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이러한 정보기술을 위한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부분도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임

2) 세부 정보기술현황

(1) 빅데이터

-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 전체 시장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15조 1,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6% 성장하였으며, 데이터 산업규모 중 데이터와 직접 관련된 매출은 6조 9,862억원으로 6.4% 성장함. 특히, 데이터 분석 솔루션 19.5%, 데이터 컨설팅은 15.7% 성장하였고, 데이터 거래 서비스 11.5%, 데이터 분석 제공 서비스 17.1% 각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18년 318,062명으로 2017년 대비 7.9% 증가하였으며 이 중 데이터 직무 인력은 7.2% 증가하였고, 데이터 산업과 일반산업을 포함하는 전 산업의 데이터직무 인력 수는 11만 7,727명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함(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019)

(2) 인공지능(AI)

- 영국 컨설팅기업 PwC는 2030년까지 AI가 세계 경제에 1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기여하고, 그중 노동생산성 향상 부문 9조 1,000억 달러, 소비 부문 6조 6,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컨설팅기업 McKinsey는 2030년까지 전 세계 GDP의 1.2%를 상승시키고 전 세계 기업의 70%가 AI 기술을 채택할 것으로 전망함
- 우리나라의 AI 기술은 미국의 81%로 평가받고 있으며,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술은 미국의 79%, 데이터 시장 거래량은 미국의 1/400 수준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3) 사물인터넷(IoT)

- 4차 산업혁명은 IoT 기술로 확보되고 유통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물 간 사물과 사물 간 상호작용에 따른 지능화된 융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에 가능하지 않던 혁신을 만들어 냄
- IoT는 매년 가트너가 발표하는 그해 주목받을 10대 전략기술에 2012년 이후 매년 이름을 올리고 있음
- 최근 급성장하는 IoT 적용 서비스 분야는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등을 들 수 있음. IoT 기술의 접목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사업 분야의 비즈니스가 연계되고 있어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가치를 창출해 내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음

(4) 블록체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한 5,509억원 규모의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심사를 추진
- 블록체인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목표는 차세대 블록체인 기술 및 표준 선점, 확보된 기술로 국내 생태계 지원, 블록체인 실용화 기술개발 등임
- 세계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은 그 성과가 미미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블록체인의 성공사례로는 암호화폐가 손꼽힘
-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하고 있음. 국내 블록체인 개발사 델리오(Delio)는 암호화폐 금융사업자회사 델리펀딩을 설립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을 담보로 하는 대출 서비스를 출시함
- 2020년을 들어 암호화폐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인식됨. 분산금융을 의미하는 디파이(DeFi)가 2019년부터 주목을 받고 있음

(5) 클라우드 컴퓨팅

- 가트너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이 연평균 약 17.6%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1년 시장규모는 2017년 1,453억 달러 대비 91.5% 증가한 2,783억 달러로 예상함. 전체 서비스 중에서는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oftware as a Service)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2021년 비중은 40.7%로 예상

- 국내 클라우드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 기업의 클라우드 사용률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

(6) 5G

- 2018년 12월 1일 우리나라 통신 3사는 세계 첫 5G 사용 전파를 송출하였으며, 2019년 4월 3일에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기반의 개인고객 대상 5G 서비스를 상용화함
- 4G의 활용 영역 대부분이 스마트폰 기반의 B2C 분야였다면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B2B)에 활용되어 기존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능하게 함
- KT경제경영연구소의 '5G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따르면, 5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이 가속화되면 자동차·헬스케어·운송·농업·보안·미디어·에너지·유통·금융 등 국내 주요 10개 산업 분야에서 5G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는 2030년 최소 4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스마트시티·비도시지역·스마트홈·스마트오피스 등 4개 사회 기반환경에 제공하는 가치는 2030년 최소 5조 4,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3) 전국·경남 스마트·정보인프라 현황

(1) 스마트·정보 인프라 기초기반 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 스마트·정보인프라 관련 업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등
- 사업체 수는 전국 대비 2.67%, 종사자 수 1.54%로 기반업종이 상당히 열악한 수준임. 또한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증감률은 일정하게 유지 내지 감소하는 추세임

(단위 : 개, %, 명)

〈표 4-4-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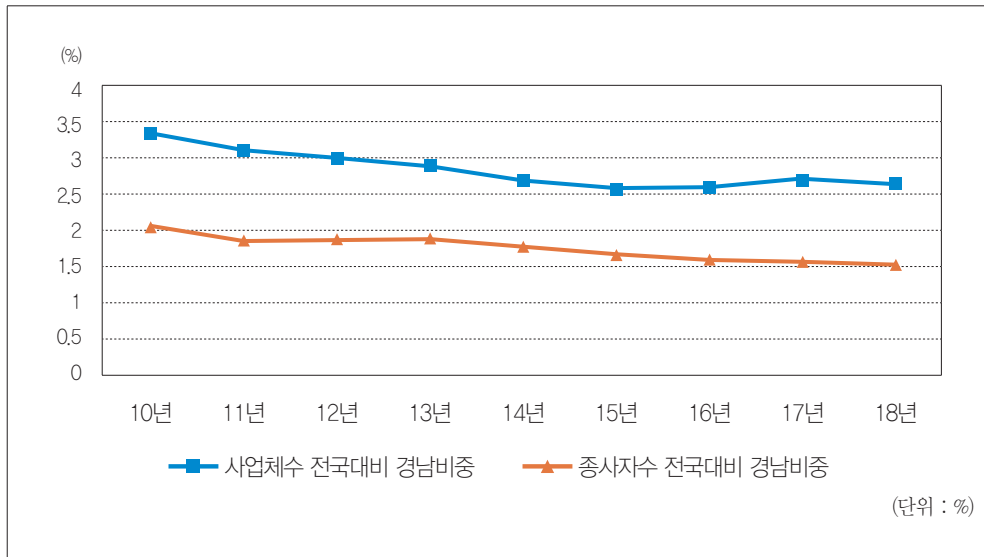
경남 스마트·정보인프라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구분	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체 수	전국	32,025	36,841	42,057	44,028	50,677	53,098	53,569	53,995	54,769
	경남	1,079	1,156	1,271	1,296	1,373	1,375	1,392	1,470	1,465
	전국 대비 경남 비중	3.37	3.14	3.02	2.94	2.71	2.59	2.60	2.72	2.67
종사자 수	전국	580,163	597,949	622,785	644,164	674,503	722,679	723,798	734,552	763,198
	경남	11,754	11,286	11,788	12,254	12,082	12,205	11,673	11,707	11,777
	전국 대비 경남 비중	2.03	1.89	1.89	1.90	1.79	1.69	1.61	1.59	1.54
사업체 수 증감률	전국	8.94	13.07	12.40	4.48	13.12	4.56	0.88	0.79	1.41
	경남	2.78	6.66	9.05	1.93	5.61	0.15	1.22	5.31	-0.34
종사자 수 증감률	전국	7.80	2.97	3.99	3.32	4.50	6.67	0.15	1.46	3.75
	경남	-4.41	-4.15	4.26	3.80	-1.42	1.01	-4.56	0.29	0.59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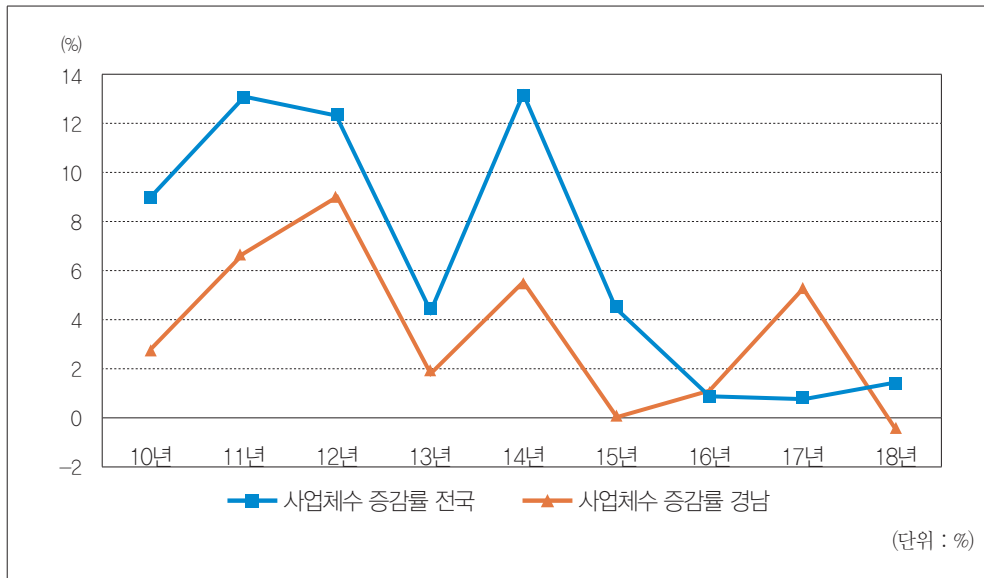
〈그림 4-4-4〉

사업체·종사자 수
전국 대비 경남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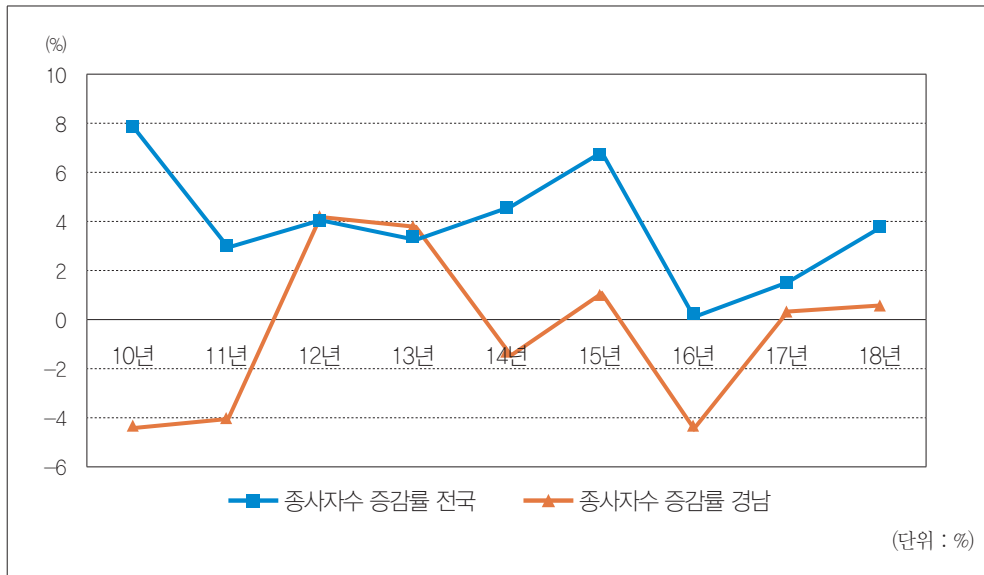
〈그림 4-4-5〉

전국·경남 사업체 수
증감률



〈그림 4-4-6〉

전국·경남 종사자 수
증감률



4) 현재 경남 스마트·정보인프라 여건

● 스마트·정보인프라 산업 비중은 매우 낮은 편

- 2010년대에 경남의 관련 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사업체 수는 14년도 이후 사실상 정체하였고, 18년은 감소함
- 종사자 수는 전국 추세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보이며 12년, 13년도를 제외하고는 정체하거나 감소함

● 공공 부문의 인프라 수준

- 기관·서비스별 다른 개별 정보 시스템 운영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규모는 전체 정보시스템 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
- 정보화 예산 중 경직성 비용이 높아 신사업(지능화 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낮음
- 공공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서비스 위주로 맞춤형·지능형 서비스 제공은 제한적

● 산업·경제 부문의 인프라 수준

-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 시장 요구에 부응한 데이터 개방에 미흡하여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려움
- AI,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등 정보화 기술 수준·인력은 타지역에 비해 부족함
- 기존 제조업과 지능정보기술과의 융합이 미흡함

● 사회·문화 부문의 인프라 수준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을 갖춘 인재가 타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도 매우 부족
- 정보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의 정보화 수준은 저조함
-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성폭력 심화 등 건전한 디지털 의식 수준 정착 필요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디지털 정부 혁신 6대 우선 추진 과제

(1) 대국민 서비스 혁신

-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하여 대화형 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적 복지 서비스 선제적 지원
- 한 개 아이디로 정부 웹사이트 전체 이용

(2) 공공 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 공공 부문에 있는 본인 정보로 마이데이터 포털 구축
- 민원인 요청 시 행정정보 보유기관 동의 없이 민원처리
- 주민등록증 및 신분증을 스마트폰 안에 저장
- 디지털 고지, 수납 활성화

(3)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 공공 분야 콜센터 156개 통합
- 모든 유형의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교육 강화

(4)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 공무원 1인당 2대 PC 지급을 1대 PC, 1대 노트북으로 교체
- 민간 클라우드 기반 가상 PC 이용
- 개방형 운영체제(OS)도입

(5)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 및 민간에 클라우드 접근 허용
- 오픈소스 중심의 개방형 생태계 도입

(6)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생태계 구축

-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 포털 등에서 이용하게끔 함
- 공공서비스를 오픈API 방식으로 민간에 개방
- 공익적 가치가 큰 개인정보 데이터도 익명화 조치 이후 개방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경남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 제조업 혁신(ICT) 융합

- 대기업(중견기업)이 중심이 되어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품목공적으로 동반성장하는 기업 묶음형 스마트공장 보급
- 4개 업종별 스마트 MC 중심(기계, 방산, 자동차 부품, 뿌리산업), 소속기업의 스마트 수요발굴, 수준진단 등 스마트공장 구축
- 특화 업종별(기계, 방산, 자동차부품, 백색가전, 뿌리산업) 대표공장 설립
- 표준제조혁신 공정 모듈을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공정 데이터 수집 분석 및 결과의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역할 수행
- 시뮬레이션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 및 인프라 조성을 통한 산단기업 상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업 맞춤형 해석기술 서비스 제공 역할 수행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융합/공유전공) 스마트산단 취업 촉진 및 미래형 인재 양성
- 스마트 통합교육센터 및 포털을 구축하여 산재된 스마트공장 집중 교육을 통해 현장형 인재 육성

● 사람 중심 단지(행복공간)

- 산단-도시가 연결되는 사람 중심 Park to Park 조성과 산단 주변 공원 환경개선
- 산단 내 동남종합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실내정원, 클라이밍 체험 및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설립
- 임대주택, 어린이집, 공장 내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거복지개선
- IoT기반 지능형 주차시스템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기반 셔틀버스 운영 확대로 교통환경개선
- 문화, 주거, 산업 및 기업지원이 어우러지는 창원산단 멀티콤플렉스를 랜드마크로 조성

● IT접목 미래단지(미래지향)

- 창업 인큐베이팅-엑셀러레이팅 등 창업 전 단계를 One-Stop으로 지원하는 창업혁신타운 조성
- 제품기획-시제품-필드테스트→창업혁신타운, 제품양산체계 구축→창업단지 내 기업과 연계지원
- Spin-off 창업 등 4대 신규창업 분야 집중 지원 체계 마련
- 벤처투자조합 구성을 통한 ICT 업종 창업 활성화와 민간중심 모태펀드 조성 및 산학연 연구인력 1:1 매칭
- 창업단지 사업 부문별 관제관리 서비스와 창업기업의 투자성장지원 프로그램 지원 공간 조성

3) 4차 산업혁명위원회 대정부 권고안

(1) 사회혁신 분야

● 노동 : 노동 다양화를 포용, 국가 주도 최소화

- 현재 노동제도는 여전히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양화되는 노동의 변화를 반영하지도, 혁신을 이끄는 인재들을 포용하지도 못하는 상황
- 앞으로의 노동제도는 노동자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사업장·개인 단위에서 자율적 선택이 가능하고, 다양한 노동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변화되어야 함

● 교육 : 대학의 자율권 강화 등 고등교육혁신

- 연구중심 대학 육성과 같이 대학의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구조조정을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함
- 대학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재 육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권을 강화해야 함

● 사회보장 : 혁신을 촉진하는 탄탄한 안전망 구축

-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과 혁신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2) 산업혁신 분야

● 바이오헬스 :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 법 제도적 불확실성과 이해관계자 간 오랜 대립으로 인해 관련 산업 발전은 매우 더딤
- 바이오 및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이고 선진적인 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인의 건강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데이터 기반 서비스 발굴을 위한 일관된 정책 등을 통하여, '개인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추진

● 제조 :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협업방식 정착 지원

- 산·학·연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등 혁신 주체 간의 긴밀한 협업 기반이 필수적임
- 정부는 이러한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는 산업 플랫폼과 제조 빅데이터 구축을 지원해 나가야 함

● 금융 : 기업 생애 전 주기를 지원하는 스마트 자본의 역할 확대

- 매출과 자산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던 기업 금융을 벗어나,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기업의 기술력, 미래 성장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투자하는 '인내하는 모험자본'으로 변화해야 함

● 스마트시티 : 민관합동(PPP)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공공주도의 정책만으로는 예산, 행정 등의 한계로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정부는 민간 기업과 시민 중심으로 민관합동(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의 협력적 추진체계를 통해 지속성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해야 함

● 농수산식품 : 도전과 시행착오를 활성화하여 신산업으로서의 잠재력 강화

- 정부는 농수산식품 분야의 연구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3) 지능화 혁신기반 분야

● 인공지능·데이터 : 인공지능과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활용기반 구축

- 우리의 인공지능 기술은 경쟁국보다 뒤쳐져 있으며, 인재 양성 기반도 부족함.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도 원활하지 못함
- 개별 산업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의 양성 필요

-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의 활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적·물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사이버 보안 : 도메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정책 전환**

- 보안이 또 다른 규제가 되지 말아야 하며, 대표적인 것이 ‘망 분리’와 같은 도메인 중심의 사이버 보안 정책은 폐기해야 함

● **블록체인 : 기술육성과 암호자산 제도화를 연계하여 미래 기회 선점**

- 블록체인이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는 점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데 정책 목표를 두어야 함
-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기술 활성화와 암호자산 제도화를 함께 추진해야 함
- 암호자산에 대한 법적 지위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세, 회계 처리 방안이 필요함

● **스타트업 생태계 : 도전과 시행착오를 막는 각종 규제 혁신 및 행정적 절차 개선**

- 정부는 스타트업 조력자로 관련법과 규정을 빠르게 정비하고 행정적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적극 행정을 해야 함
-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스타트업의 경영 재량 확대를 위해 근무 시간과 방식, 고용 대상 및 형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ICT의 미래를 여는 경상남도

2) 추진전략

- **스마트·정보인프라 부문 핵심지표**

〈표 4-4-38〉

스마트·정보인프라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398건	1,102건	3,300건
공공와이파이 구축 건수		4,454개소	10,000개소	20,000개소
스마트 커버리지	LTE(300mbps)	82.43%	99.0%	99.0%
	3bandLTE(1.2gbps)	44.23%	65.0%	99.0%

(1) 기반이 갖춰진 기존 제조업과 ICT 기술의 융합

● 경남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

- 경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지만, ICT 관련 제조업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이 작음
- 제조업 비중이 높고 집적화되어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ICT 기술과의 융합으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야 함

(2)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 및 유치

● 대학과 스마트산단에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실시

- 대학교육과 산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사이의 미스매치가 있음
- 청년 취업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산단에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인재 양성이 필요함

(3) 모든 도민이 모두 누릴 수 있는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교육과 지원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화 교육

- 스마트 정부 및 ICT 경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농·어업인과 장애인, 저소득 및 노령계층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필요함

4. 추진시책

1) 경남 창원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혁신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제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하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 기존 산업과 ICT 간 연계가 부족, 융·복합 산업의 성과 창출이 미흡함
- 선진국 대비 중소기업 지능정보기술 역량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임
- 제조업이 집적화 되어 있는 창원을 중심으로 스마트산업 단지 조성을 통해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발판으로 삼아야 함

● 인재를 유치 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센터 및 주거복지 개선

- 청년층 인재들을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이 가장 원하는 문화 및 정주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임
- 청년 인재들이 즐기고 거주하기 위해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주거시설 및 환경 개선

● **창업·신산업이 쉬운 스마트 창업 생태계 구축과 산단자원을 활용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 콘텐츠·앱/웹·SW·융합 등 분야 창업 활성화 및 생태계 구축
- 산업단지 내의 자원을 이용하여 창업자를 위한 설비 및 공간 공유
- 설비와 공간의 공유에서 공동구매, 마케팅, 인력, 연구개발, 비즈니스 기획 등 사업과 서비스 공유로 확대

2) 대학과 스마트산단에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 실시

●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산단에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고급인재 양성**

- 청년 취업과 기업의 인력 수요를 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학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산단에서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인재 양성이 요구됨
- 실습 중심의 학습을 통해 짧은 기간에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효과 거양

● **지역 대학에서 양성한 석·박사급 인재를 해외에 파견하여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

- 지역 대학의 인재를 선발하여 해외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 프로젝트를 연구 수행하거나, 해외 유망기업, 연구소 등 ICT 선도기술 보유기관으로 파견하여 인턴십 수행을 지원
- ICT 유망기술 등에 대한 기술 선도국의 연구, 교육 경험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

● **수준급 SW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학위과정의 아카데미 설립·운영**

- SW산업 선진화, 지역 SW 진흥 등을 위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실무역량을 갖춘 SW 인재 확보가 필요
-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잠재력 있는 인재를 선발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실전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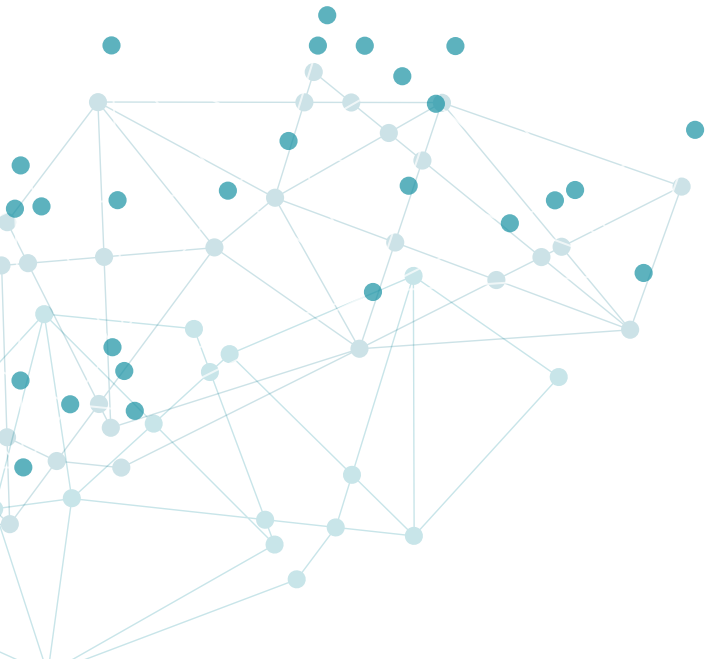
● **도내 일반대학원에 인공지능 학과과정을 신설하여 산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 현재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등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며, ICT 산단조성이 되면 그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 따라서 도내대학에서 이러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학과 및 대학원 과정을 신설하여 지역 산업 현장을 위한 인재 양성

3)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중점적인 정보화 교육

-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 농·어업인들은 상대적 정보화 낙후지역인 농어촌 군지역을 거주하면서 이들의 고령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보취약계층으로 분류됨
 -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업인들을 위한 눈높이에 맞는 정보화 교육 실시
-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에서 실시**
 - 농·어업인과 함께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 실시
 - 특히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화 교육 실시와 함께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을 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저소득 및 노령계층을 위해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PC 및 통신설비 설치 지원**
 - 저소득 및 노령계층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PC 및 통신설비 지원이 필요함
 - 읍·면·동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비치하여 교육과 함께 필요할 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 저소득층 자녀에게 PC 대여료와 통신비 지원**
 - 초·중·고 재학 저소득층 자녀들의 방과후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PC 대여와 통신비를 지원함
 - 방학이나 코로나 사태와 같이 집에서 교육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학생이 각자의 집에 PC를 갖춰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함
- **지역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산업과제를 지원하는 지역정보화사업 운영**
 -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같은 지역정보화센터 운영
 - 예를 들면, 하동은 녹차, 대봉감 등 농산물, 진주는 바이오산업과 교육 등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지역정보화센터의 기능임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5장

생활환경

- 제1절 주거
- 제2절 도시재생
- 제3절 스마트시티
- 제4절 상하수도
- 제5절 보건의료
- 제6절 사회복지
- 제7절 인구정책
- 제8절 여성가족
- 제9절 교육
- 제10절 체육

제5장

생활환경

제1절 주거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주택 보급률 추이

- 전국과 경남의 주택 보급률의 차이가 2010년 3.9%p에서 2018년 5.9%p로 벌어졌음
- 특히, 경남은 2018년에는 110%를 넘어 양적인 측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주택 공급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양적 공급이 충분하고, 주거의 질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단위 : 가구, 개, %)

〈표 4-5-1〉

전국과 경남의
주택 보급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가구 수	17,655.7	17,928.1	18,209.2	18,499.6	18,800.0	19,111.0	19,367.7	19,673.9	19,979.2	1.6
전국 주택 수	17,738.8	18,082.1	18,414.4	18,742.1	19,161.2	19,559.1	19,877.1	20,313.4	20,818.0	2.0
보급률	100.5	100.9	101.1	101.3	101.9	102.3	102.6	103.3	104.2	0.5
가구 수	1,155.3	1,175.0	1,195.2	1,215.8	1,236.9	1,258.5	1,273.5	1,293.0	1,306.4	1.5
경남 주택 수	1,206.6	1,227.2	1,247.1	1,276.8	1,308.2	1,338.5	1,358.4	1,404.0	1,438.8	2.2
보급률	104.4	104.4	104.3	105.0	105.8	106.4	106.7	108.6	110.1	0.7

주 : 등록센서스방식 적용.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보급률.

● 경상남도 유형별 주택 보급 추이

- 경남 유형별 주택을 살펴보면, 아파트의 비중이 59.2%(2018년 기준)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단독주택의 비중도 34.2%로 전국 평균(22.4%)에 비해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냄
 - 다세대, 다가구, 연립 등의 주택 유형의 비중이 다소 낮고, 기타의 비중이 높음

〈표 4-5-2〉

전국과 경남의
유형별 주택 보급 추이

(단위 : 개, %)

구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계	12,494,827	13,883,571	16,367,006	16,692,230	17,122,573	17,633,327	2.5
	단독	3,984,954	3,797,112	3,973,961	3,967,776	3,963,072	3,948,984	-0.2
	아파트	6,626,957	8,185,063	9,806,062	10,029,644	10,375,363	10,826,044	3.4
경남	다세대	1,684,563	1,750,116	2,383,439	2,493,252	2,575,419	2,648,549	2.8
	기타	198,353	151,280	203,544	201,558	208,719	209,750	1.0
	계	875,815	968,582	1,134,738	1,151,057	1,193,912	1,226,708	2.6
경남	단독	388,402	377,242	416,364	418,406	419,772	419,628	0.3
	아파트	424,577	534,417	641,589	654,679	694,326	726,589	4.2
	다세대	46,251	45,432	60,645	61,849	63,076	63,604	1.7
기타	16,585	11,491	16,140	16,123	16,738	16,887	1.5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고 빈집이 포함되며 다세대는 연립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

● 경상남도 시군의 유형별 주택 보급현황

- 유형별 주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시부는 아파트의 비중이 6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군부는 단독주택이 75.2%로 높게 나타나 시부와 군부의 유형별 주택의 특징이 구분됨
 - 시부 중 단독주택 비중이 높은 지역은 밀양시가 59.6%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사천시 44.5%, 통영시 38.1%, 진주시 35.0% 순으로 나타나 도농 통합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음
 - 군부에서 아파트 비중은 함안군이 39.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거창군 29.8%, 고성군 21.1%, 창녕군 20.0% 순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이 비교적 활발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부에서는 아파트 공급에 따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군부는 늘어나는 새로운 형태의 단독주택지역(귀촌단지 등)과 빈집 등의 관리가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주택 공급의 확대 이면에는 노후주택의 방치 등 빈집의 발생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시부와 군부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빈집문제의 접근 방법이 달라짐

(단위 : 호, %)

〈표 4-5-3〉

경남 시군의
유형별 주택 보급현황

구분	합계	단독		아파트		다세대		기타	
		호수	비중	호수	비중	호수	비중	호수	비중
경남	1,226,708	419,628	34.2	726,589	59.2	63,604	5.2	16,887	1.4
시부	1,005,279	253,004	25.2	685,474	68.2	53,642	5.3	13,159	1.3
창원시	343,978	78,507	22.8	242,745	70.6	18,768	5.5	3,958	1.2
진주시	118,859	41,565	35.0	71,581	60.2	3,412	2.9	2,301	1.9
통영시	51,096	19,461	38.1	28,248	55.3	2,431	4.8	956	1.9
사천시	46,294	20,592	44.5	22,157	47.9	2,539	5.5	1,006	2.2
김해시	173,974	27,562	15.8	131,217	75.4	13,570	7.8	1,625	0.9
밀양시	46,779	27,872	59.6	15,725	33.6	2,318	5.0	864	1.8
거제시	97,425	22,625	23.2	66,750	68.5	6,649	6.8	1,401	1.4
양산시	126,874	14,820	11.7	107,051	84.4	3,955	3.1	1,048	0.8
군부	221,429	166,624	75.2	41,115	18.6	9,962	4.5	3,728	1.7
의령군	13,435	11,397	84.8	1,243	9.3	644	4.8	151	1.1
함안군	28,145	15,540	55.2	11,114	39.5	1,053	3.7	438	1.6
창녕군	27,574	19,505	70.7	5,512	20.0	2,208	8.0	349	1.3
고성군	23,918	16,961	70.9	5,057	21.1	1,476	6.2	424	1.8
남해군	22,473	19,482	86.7	1,877	8.4	627	2.8	487	2.2
하동군	20,487	16,992	82.9	2,420	11.8	709	3.5	366	1.8
산청군	16,688	14,696	88.1	1,307	7.8	335	2.0	350	2.1
함양군	18,272	14,556	79.7	2,782	15.2	605	3.3	329	1.8
거창군	27,188	17,440	64.1	8,102	29.8	1,169	4.3	477	1.8
합천군	23,249	20,055	86.3	1,701	7.3	1,136	4.9	357	1.5

주 : 주택을 대상으로 집계되었고 빈집이 포함되며 다세대는 연립을 포함함.
 자료 : 통계청, 주택총조사(2018년 기준).

● 주거 점유 형태별 변화

- 주택의 점유 형태에 따라서도 시부와 군부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부보다 군부의 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시부 중 밀양시의 자가 비중이 77.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 전체 임대 가구는 29.4%이며, 양산시가 3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다음으로 창원시가 35.4%, 진주시 33.5%, 김해시 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경남 동부(김해, 양산), 중부(창원), 서부(진주) 등 권역별 임대시장의 다양화 전략이 필요함

〈표 4-5-4〉

경남 시군의
점유형태별 주거 현황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가구	비중
경남	1,258,243	836,970	66.5	101,799	8.1	267,489	21.3	51,985	4.1
시부	1,055,320	667,411	63.2	96,349	9.1	248,080	23.5	43,480	4.1
창원시	391,279	236,941	60.6	41,842	10.7	96,567	24.7	15,929	4.1
진주시	133,507	84,588	63.4	12,662	9.5	31,988	24.0	4,269	3.2
통영시	53,244	36,033	67.7	2,987	5.6	11,956	22.5	2,268	4.3
사천시	44,503	30,535	68.6	2,893	6.5	8,603	19.3	2,472	5.6
김해시	186,473	118,963	63.8	17,395	9.3	43,091	23.1	7,024	3.8
밀양시	43,124	33,302	77.2	1,318	3.1	6,912	16.0	1,592	3.7
거제시	93,977	59,630	63.5	6,477	6.9	20,578	21.9	7,292	7.8
양산시	109,213	67,419	61.7	10,775	9.9	28,385	26.0	2,634	2.4
군부	202,923	169,559	83.6	5,450	2.7	19,409	9.6	8,505	4.2
의령군	12,173	10,382	85.3	262	2.2	1,035	8.5	494	4.1
함안군	26,729	20,901	78.2	1,059	4.0	3,577	13.4	1,192	4.5
창녕군	25,984	21,231	81.7	991	3.8	2,703	10.4	1,059	4.1
고성군	22,241	18,010	81.0	439	2.0	2,523	11.3	1,269	5.7
남해군	19,672	16,881	85.8	378	1.9	1,729	8.8	684	3.5
하동군	19,313	16,796	87.0	352	1.8	1,384	7.2	781	4.0
산청군	14,997	12,880	85.9	363	2.4	1,023	6.8	731	4.9
함양군	16,676	14,164	84.9	324	1.9	1,545	9.3	643	3.9
거창군	24,719	20,229	81.8	998	4.0	2,709	11.0	783	3.2
합천군	20,419	18,085	88.6	284	1.4	1,181	5.8	869	4.3

주 : 월세는 보증부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를 합산한 값임.
 자료 : 경상남도, 제58회 통계연보(2015년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 2019년 12월 기준으로 경남의 미분양주택은 12,269호이며, 전국 대비 25.7% 수준임
- 산업경기 침체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경남의 10만호를 넘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 위기이며, 정부 차원에서의 주택시장 관리대책이 마련이 필요함
- 3년 주기로 주택시장 수요가 관리되는 것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양적 수요 관리가 필요함

〈표 4-5-5〉

미분양주택 현황

(단위 : 호,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국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58,838	47,797
수도권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319	6,202
지방	59,294	41,926	42,288	27,845	20,132	30,859	39,724	46,943	52,519	41,595
경남	4,780	6,375	9,558	4,909	2,962	3,411	8,014	12,088	14,147	12,269
(비중)	(5.39)	(9.13)	(12.77)	(8.04)	(7.34)	(5.55)	(14.21)	(21.08)	(24.04)	(25.67)

주1 :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포함)을 받아 건설 중이거나 건설된 전국의 미분양 주택(준공 전·후)을 의미.
 주2 : 해당연도의 12월을 기준으로, 자료는 매월 생성됨.
 자료 : 국토교통 통계누리, 미분양주택 현황보고.

2) 여건 분석

● 주택 공급의 양적 수요 관리 필요

- 2017년 이후 경남의 주택 공급은 양적인 측면에서 안정권에 있음
- 2019년 전국 최대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하는 등 양적 수요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구 감소 및 저성장 기조 대응

-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는 인구 축소 현상으로 이어지며 주택 공급의 한계가 발생함
- 국가 및 지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을 고려한 포괄적인 주거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품격 있고 건강한 정주 여건 확보

-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절약하는 정주 여건 확보가 필요함
-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 도민에게 품격 있는 정주 여건 제공이 필요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주거지 노후화 심화

- 노후주택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택 개량이나 주거지 재생(정비)의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장래인구 성장이 둔화하는 국면에 있어 총괄 주택 수요가 증가하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며,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 주거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산발적으로 분포된 노후주택과 일부 구도심을 중심으로 집중된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시성장관리 한계와 난개발 심화

- 소규모 택지 개발을 포함한 난개발은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초지자체와의 도시성장관리에 관한 상호 간의 합의가 필요함
- 확장형 사업 추진이 한계가 있으며, 수요 관리를 위한 경남과 시군의 협력이 필요함
- 재개발·재건축 등이 진행되는 창원과 같은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기존 주거지 외의 외곽의 무분별한 주거지 개발로 인해 원도심이나 기존 주거지의 쇠퇴 현상이 심화함
- 산 중턱 등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택지 개발을 통해 전원 단지 조성이 이뤄지는 실정임

● 1인가구 수요 증가

- 지역의 특성에 따라 1인가구의 특성 다르게 나타나며, 도시지역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 가구의 1인가구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았지만, 농촌지역은 독거노인 등의 수요가 높음
- 반면, 도시지역도 일부 도심 취약지역(일명 달동네)에서 노령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의 주거 여건 개선이 필요함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인구 감소 시대의 도시성장관리

-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고 고령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가구 구성원의 형태가 다양해짐
 -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소멸 등의 화두와 함께 도시공간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함
 - 특히, 창원, 진주, 김해 등 경남의 권역별 중심도시들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인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생활 여건이 양호한 도시지역의 인구는 농촌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감소 현상이 둔화할 것임

● 노후주택과 빈집(공실)의 관리

- 기존 주거지의 노후주택뿐만 아니라 수요(인구)감소로 발생한 빈집(공실)의 증가하는 양상임
 - 도시지역은 구도심과 도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노후주택과 빈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인구 이동과 감소 현상으로 인해 계속 빈집이 발생할 것임
- 농촌과 도시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양적 수요 관리뿐만 아니라 질적 수요 관리가 필요함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낡은 농가 주택의 수요보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형태로 주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장년층뿐만 아니라 '반농반'과 같은 형태로 청년층의 귀농·귀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정주 여건의 통합적 관리

- 대단위 아파트 단지과 달리 좁은 골목길과 낮은 담장 그리고 방치된 빈집 등이 밀집된 노후 주거지나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재난·안전뿐만 아니라 생활편의기능의 증진이 필요함
 - 단순히 민간의 개발 수요에 따라 도시를 무분별하게 확장할 것이 아니라 적정 인구 수준에 맞춰 공공행정 및 생활편의기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도록 유도해야 함
- 최저 주거기준 등 생활 여건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적정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 마련**
 - 도시와 농촌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를 마련함
 - 도시기능(기반시설)이 충족하는 수준을 평가하고 안정적 도시공간구조를 확립함
 - 생활SOC 복합화,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체계를 마련함
-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 신규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재건축·개발 등 대규모 택지 공급을 관리함
 - 인구구조의 특성과 전망을 바탕으로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함
- **포용적 주거 여건 정착**
 -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독거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주택 공급을 추진함
 -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촘촘한 주거 안전망을 제공함
 -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경남 맞춤형 입주기준을 설정함

2) 추진전략

- **주거 부문 핵심지표**

〈표 4-5-6〉
주거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자가 보유율	66.5%	70%	80%
주택 만족도	3.01점	3.4점	3.8점
주거환경 만족도	2.95점	3.2점	3.6점
공공임대주택 수	78,153호	100,000호	150,000호

(1) 적정한 정주 여건 관리체계 마련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별 정주 여건 개선**
 - 상대적으로 청년이 많은 지역과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함
 - 사회적 이동에 따른 신규 주거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주택의 활용을 촉진함
- **안정적 도시공간구조 확립**
 - 교통, 생활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능의 분포와 기반시설계획 등이 연계함
 - 시군별 도시기본계획·관리계획에 있어 기능(시설)과 공간을 고려하여 수립함
-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 발굴**

-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SOC 복합화, 취약지역 개조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을 추진함
- 경남과 시군이 협력하여 지역별 주거취약지역의 관리체계를 마련함

(2)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 양적 주택 관리

- 신규 공동주택 조성,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관리체계를 마련함
- 도시계획위원회 등 현장실사, 인구 전망 등 양적 주택 공급에 관한 심의 기준을 마련함

● 질적 주거 관리

- 인구구조의 특성과 전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
- 시군의 정주 여건 분석과 함께 비도시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의 복합적 활용을 촉진함

●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순차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함
- 경남형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산·학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함

(3) 포용적 주거여건 정착

●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함
-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동 홈 등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확대함

●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망 확립

- 최저 주거기준 개편, 적정 주거기준 도입 등과 함께 적정한 주거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
- 차상위계층 등 주거복지 대상의 수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함

●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 주거급여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 가구를 확대하고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을 확대함
-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지원 및 도심 내 비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확대 지원함

4. 추진시책

1) 계획적 관리체계 마련

(1)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별 정주 여건 개선

● 도시지역 생활공간 연계형 주택 공급

- 도시 기능을 크게 생활공간과 정주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남의 경우 농업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상업지역, 대학가 등 대표적 생활공간과 연계된 정주공간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도시지역 대학생, 청년 등 사회초년생들의 안정적 주거환경 공급을 위해 생활공간에서 필요한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고 이와 연계된 주택 공급방안을 마련함
- 이를 위해 공공에서 기존의 주거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에서 발생하는 주거의 수요를 확인하고 기존 주택과 함께 신규 주택의 수요를 관리함

● 농촌지역 공동생활 거점공간 조성

- 상대적으로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은 농촌지역과 도시의 주거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생활 거점공간을 조성함
- 공동생활 거점공간은 단순히 만남과 휴식의 공간도 되지만, 작은 일거리나 마을 회의 등을 위한 공간을 포함하며, 마을회관 등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공동생활 거점공간은 건강관리 등 서비스공간뿐만 아니라 휴한기 또는 혹서기의 동안 공동으로 냉·난방을 활용할 수 있는 주거 기능을 포함하여 조성함
- 장기적으로 고령인구가 밀집된 대상 지역의 '공동 생활 홈'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함

● 다양한 주거 수요를 반영한 주거 유형 확대

- 개인의 소득 수준이 다양한 만큼 주거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추진되던 전원택지 개념을 넘어 동호인택지, 은퇴촌 등 다양한 형태로 주거 수요가 확산됨
- 도시지역에서도 고층·고밀의 일률적 주택 수요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등 고급 주택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주택 공급의 다양성 확보도 필요함
- 다만, 무분별한 주택단지의 확산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공법이나 환경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새로운 유형의 주택 수요에 맞춤형 주거정책을 적용함
- 구릉지나 산지 등 경관이 뛰어난 지형에 택지를 개발할 경우, 경관, 환경 등에 대한 영향평가를 철저하게 시행하고, 환경보전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를 진행함

(2) 안정적 도시공간구조 확립

● 시군별 주택 밀도계획 수립

- 경남의 시군별 특성과 장래인구 변화를 감안하여 주택 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주택 공급의 방향을 설정하고 주택 수요의 유형을 관리함
-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중밀과 고밀이 혼재된 밀도에서 주거와 상업 기능이 융합될 것이며, 농촌지역은 저층·저밀의 주택 유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지역의 경관과 미관의 관리에 활용될 것이며, 토지이용 강도(LUI; Land Use Intensity)를 관리하는 데 유용함
- 장래인구가 감소하는 양상에서 무분별한 확산보다는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을 도입하여, 토지이용 강도를 높일 지역과 낮출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를 시행함

● 장래인구 추정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 도시 지정

- 2020년 현재 인구는 약 336만명이며, 2030년경에는 25~35세 여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줄어들고 2050년경에 총인구는 276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⁴¹⁾
- 경남의 권역은 크게 동부(창원권역)와 서부(진주권역)로 구분되지만, 정주권역과 생활권역을 구분하면 인근 시군의 기능에 따라 세분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공공의료, 문화예술 등 권역 단위의 기능을 모든 시군으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권역 단위로 구분하여 거점 도시로 지정된 시군을 중심으로 공급함
- 예를 들어 공공병원 신축과 관련하여 서부권역의 진주시와 거창군이 확정되어 추진 중이며, 정주 여건 및 생활 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시의 기능을 세분화하여 거점 도시 선정이 필요함

● 경남 주택정보 관리체계 구축

- 공공의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의 정보를 포괄적으로 취합하여 제공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융합되도록 유도함
- 공공의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시장의 주택 정보를 포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임
- 특히 주택가격 정보는 시장의 담합 등으로 교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임대시장으로 확대되면 저렴한 도시 주택의 수요 관리가 가능함
- 경상남도와 시군에서 추진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 정보를 취합하고 제공하여 실제 수요를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의 기능을 구현함
- 서울시는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을 통해 사회주택 추진에 필요한 빈집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고 있으며, 온라인상담, 사업컨설팅, 교육프로그램, 금융지원 등을 시행함

41)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용역.

(3) 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 발굴 확대

● 생활SOC 복합화 확대 추진

- 보육, 복지, 문화, 체육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은 양적·질적으로 부족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낮은 수준이며, 최근 정부는 생활SOC 시설들을 복합화하고 있음
 - 개별 시설을 자리 잡게 하는 것보다 복합화를 통해 지역에 부족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음
-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시설을 구상하며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태임
- 생활SOC 수요 관리를 위해서 시군 지역에 부족한 기능(시설)을 발굴하고 경남도 단위에서 시설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임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사업) 컨설팅단 운영

-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은 도시나 농촌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매년 도시형과 농촌형을 구분하여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남은 올해(2020년) 역대 최대 규모인 23곳이 선정됨
- 경남도내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발굴·추진을 위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굴하고 중앙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틀을 마련함
 - 현재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류, 현장, 종합 등 3단계의 평가를 시행 중이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경남도 차원의 컨설팅 지원이 필요함

● 공기업 연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발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이 가능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도내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사업 추진을 제안함
-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군 단위의 주거취약지역을 선별하고, 공기업에서는 이들 대상지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함
- 정부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공기업 제안형 주거지 재생사업 등으로 추진하여 지역공동체와의 연계 추진을 통해 각각의 시군 지역에서 특색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도록 유도함
 - 2017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거지 재생 유형의 추진이 가능하며, 2019년부터 시행되는 총괄 사업관리자⁴²⁾ 형태로 공기업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42) 「도시재정비 촉진법」 제14조의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 시행에 있어 지자체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의미하며, 2019년 12월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신규 제도로 도입되어 운영 중임.

2) 맞춤형 주택 공급대책 마련

(1) 양적 주택 관리

●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 지양

- 과도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관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현재 경남도의 미분양주택 공급이 많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밀·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을 지양해야 함
-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강화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강화함
- 고밀·고층 아파트 공급을 포함한 택지개발지구나 정비지구의 경우 주변 지역을 포함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개발 밀도를 산정하여 제시하도록 해야 함

● 재개발·재건축의 합리적 추진 여건 마련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재건축과 재개발이 경제적인 이익 추구의 측면에서 추진되는 것이 현실이며, 도시와 주변 지역 환경에 악영향을 미침
-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고층·고밀로 조성되어 교통 체증 유발, 경관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침
-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고밀·고층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보다 기존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 추진 방식의 접근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중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을 검토하고 사업 해제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함

● 주택 수요 검증단 운영

- 경남도는 공동주택관리기술자문단을 구성하여 도내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해서 기술 자문을 실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여 72개 단지를 검수함
- 장기적으로 건설이 완료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사전 수요의 관리도 필요하며, 지역대학, 연구기관, 업계 등이 참여하여 공동주택 공급에 대한 개발 수요를 관리해야 함

(2) 질적 주거 수요 관리

● 노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재건축 수요의 관리 측면에서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 2014년, 주택법을 통해 수직증축 허용과 세대수 증가 등을 허용 범위를 확대함
- 장기적으로 낡은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수요의 상쇄방안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이는 '경남공동주택관리기술검수단' 등의 조직에서 관리함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크게 증축형, 수선형, 맞춤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며, 주택의 상태에 따라 수직·수평 증축 등 사업성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모델을 제시함
- 장기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경남 공동주택 맞춤형 진단을 실행함

●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확대

- 노후도가 심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추진 가능한 도시재생의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주거지의 경우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건축, 조경, 가로 등 환경적 요소를 결정하고 장기적으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관을 통해 고밀도 개발사업 추진을 제어함
- 현재 추진 중인 주거지 재생, 일반근린 재생 등과 연계하여 경남도와 시군 차원에서는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지 재생 모델을 발굴하여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
- 국비 공모 이전단계에서 커뮤니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한 예비사업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정주 여건 모니터링단 운영

- 경남의 정주 여건을 파악하고 도시 및 농촌지역의 특성 맞춤형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추진함
-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이나 취약지역 개조사업의 목적으로 추진되는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것이 아니라 경남도와 시군 단위의 정주 여건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목적임
- 이를 통해 빈집 수요 관리, 공·폐가 정비 등 공익사업과 연계 가능하며, 경남개발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 참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기반시설 개선사업 등의 추진이 가능함

(3)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 경남형 사회주택 추진체계 확립

- 경남도는 빈집을 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2018년부터 매년 20채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확산하는 단계임
- 하지만 매년 반값 임대주택 공급 등 사회주택 개념의 맞춤형 주택 보급은 확대되고 있지만, 경남도와 시군의 여건이 행정을 중심으로 대상을 발굴하고 관리하는 수준임
- 빈집 소유자 및 수요자 발굴과 함께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임

- 장기적으로 행정은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공기업 또는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중심으로 빈집을 수선하여 사회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 추진 및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함
- 사회주택은 일반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주변의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형 임대주택의 일종이며, 운영 주체에 따라 공공 및 민간의 임대주택과는 차이가 있음

● 사회주택 활성화 거버넌스 구축

- 공공을 넘어 민간의 영역이 참여하는 경남의 사회주택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행정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실수요 파악이나 사회주택 운영에 한계가 있으며, 공기업에서도 공사 발주나 관리는 수월하지만, 사회주택을 운영·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서울시 등 국내에서 사회주택을 운영 중인 사례지역에서는 공공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방식의 사회주택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공공의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단계임
- 경남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조직을 중심으로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주택 공급에도 민간과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주택 및 지역 관리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활성화

- 사회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는 것만큼 사회주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이 중요하며, 현재 경남에는 관련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전혀 없음
- 경남에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단 등 다양한 육성조직이 운영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등 마을 단위의 공동체 발굴과 육성이 지속해서 추진 중임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을 위해 초기에는 공공이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자발적인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회주택 및 지역관리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필요함

3) 포용적 주거 여건 정착

(1)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 청년 1인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 경상남도는 '2030년 3대 핵심과제'의 하나로 '청년특별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거와 관련된 내용은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확대'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마련함
- 청년특별도 조성 정책의 방향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찾아오는 경남'과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한 경남'으로 설정되어 있음
- 경남 맞춤형 청년주택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장기적으로 리모델링 대상을 확대하고 수혜 청년을 확대해야 함

- 더 많은 빈집을 활용하고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하기 위해 시군의 예산 확보와 연계가 필요함

● 신혼부부 임대주택 확대

- 기존의 빈집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을 중심으로 공공 주택단지의 일부를 신혼희망타운으로 설정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 신혼부부의 수요에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유형별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며, 현재 경남의 미분양주택을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검토함
-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또는 민간임대로 전환을 시행함

● 공적 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도시 개발, 택지 개발 등 공적 개발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높이거나 '토지 임대형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함
- 경상남도는 2015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을 8.5%에서 3%로 완화하여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였으나, 미분양주택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향후 적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보해야 함
- 또한 '매입형 임대주택'과 함께 사회주택의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공적 개발에 따른 잔여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해야 함
- 공공에서 토지를 민간(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장기 임대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

(2) 사회적 약자 주거 안전망 확립

●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경남의 주거복지체계 확충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체계 마련이 필요함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4% 이하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음
- 주거급여 신청과 활용은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대상 발굴을 시행하고 읍·면·동 사무소 정보와 연동한 주거급여 신청,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함

● 노인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주택 공급

- 베이비붐 세대 은퇴가 지속되고 고령화 인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게 될 것이며, 생활지원 차원의 복지주택 확충이 필요함

- 수요자 맞춤형 복지 주택 공급을 의미하며, 공공 차원에서의 운영이 필요함
-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과 일상 생활이 가능한 복지주택을 공동생활 형태로 확충함
- 독립된 생활을 보장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택으로 한정함

● 최저 소득 계층 대상 영구임대주택 공급

- 국토부는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내는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음
-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급 대상자에게 안정적 주거권을 부여하여 지역사회 주거 안전망을 확충함

(3)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 확대

●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전환 유도

- 현재 경남은 전국 미분양주택의 비중이 전국의 약 25%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상황에서 미분양주택 해소방안에 대한 뚜렷한 대책 마련이 어려운 시점임
-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선분양제도로 공급되었지만, 대부분 미분양주택의 경우 외곽지역이거나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입주 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임
- 민간에서 공급된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측면에서 일부 세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추진함
- 다수의 미분양주택이 발생한 공동주택을 활용한 신혼부부 타운이나 사회초년생 타운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지만, 특정 민간기업의 자산을 매입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경상남도 주택종합계획의 성과를 살펴보면 주택보급률, 천명당 주택 수, 연간주택건설 등의 지표는 초과 달성했으나, 임대주택 수와 공공임대주택 재고 등의 목표는 턱없이 부족함
- 주거 취약계층 규모를 감안하여 시군 단위의 수요를 발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공기업과 연계한 경남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
- 창원, 김해, 양산 등의 동부권과 진주 등 일부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공임대주택 조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임

● 비주택의 거주자 지원 강화

- 쪽방, 고시원 등 일반 주택에 비해 취약한 비주택에 거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함
- 공공이나 민간의 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에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이 대부분이며, 실질적 주거복지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임

-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충족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대상을 발굴하여 지원함
- 지역자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대상 주민을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공동생활이 필요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생활 주택 공급 등을 확대 추진함

제2절 도시재생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경상남도 도시재생사업 현황

- 경상남도 전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는 26곳이며, 매년 대상지가 증가하는 추세임
- 창원시(2014)와 김해시(2016)는 각각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이후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 24곳에서 추진 중임
 - 2020년 상반기 기준을 기준으로 도내 거창, 창녕, 고성, 의령에만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함

〈그림 4-5-1〉

경남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현황



● 도시재생사업 유형별 현황

- 우리나라는 2006년에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 확정과 '도시재생 R&D 사전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4월까지 8차 연도의 '도시재생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였음
 - 국토부 'VC(Value Creator)-10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 제도, 건설기술, 환경기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도시재생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됨

- 경남은 2011년 선정된 창원시 ‘도시재생 시범지역(Test Bed)’ 사업을 시작으로 현장에서의 도시재생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 이전까지는 창원시와 김해시 2곳의 대상지가 전부였음
- 2017년 정부의 정책 변화와 함께 중앙(국토부)과 광역이 각각 선정하는 5개 유형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경남의 사업 대상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7년 6곳, 2018년 8곳, 2019년 10곳 등 광역도 단위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임
- 2019년 12월 신규 제도 시행 등 정책 변화에 대응한 경남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 등 3개 유형이 신설되면서 사업 추진 방식이 다양해짐

〈표 4-5-7〉

경남 유형별 도시재생사업 현황

구분	시군	유형	위치	기간	권한	비고
2011년	창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마산합포구 오동동·노산동	2011~2013 (3년)	중앙	
2014년	창원	근린 일반	마산합포구 오동동	2014~2018 (5년)	중앙	선도
2016년	김해	근린 중심	회현·동상·부원동	2017~2021 (5년)	중앙	일반
	통영	경제기반(公)	봉평동	2018~2023 (6년)	중앙	
	사천	중심시가지	동서·선구동	2018~2022 (5년)	중앙	선도
2017년 (6)	김해	중심시가지	무계동	2018~2021 (5년)	중앙	선도
	밀양	일반 근린	내이동	2018~2021 (4년)	광역	선도
	거제	주거지지원	장승포동	2018~2020 (4년)	광역	선도
	하동	우리동네살리기	하동읍	2018~2023 (3년)	광역	선도
	창원	중심시가지	진해구 총무·중앙·여좌동	2019~2022 (5년)	중앙	선도
		일반근린	마산회원구 구암동	2019~2023 (4년)	광역	선도
2018년 (8)	김해	중심시가지	삼안동	2019~2023 (5년)	중앙	선도
	남해	중심시가지(公)	남해읍	2019~2022 (4년)	중앙	선도
	함양	일반근린	함양읍	2019~2022 (4년)	광역	선도
	통영	주거지지원	정량동	2019~2022 (4년)	광역	선도
	사천	주거지지원	대방동	2019~2021 (4년)	광역	선도
	산청	우리동네살리기	산청읍	2019~2024 (3년)	광역	선도
2019년 (10)	진주	중심시가지	본성동	2020~2024 (5년)	중앙	
	김해	중심시가지	진영읍	2020~2024 (5년)	중앙	
	밀양	중심시가지	가곡동	2019~2023 (5년)	중앙	
	양산	중심시가지	북부동	2020~2024 (5년)	중앙	
	양산	우리동네살리기	북부동	2019~2021 (3년)	광역	
	거제	중심시가지	고현동	2020~2024 (5년)	중앙	
		일반근린	옥포동	2020~2023 (4년)	광역	
	창원	주거지지원	소계동	2020~2023 (4년)	광역	
	합천	일반근린	삼가면	2020~2023 (4년)	광역	
	함양	우리동네살리기	함양읍	2020~2022 (3년)	광역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020), 내부자료, 재구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 경남 광역센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운영되는 공모사업에 따라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 중임
 - 광역센터를 제외한 18개 지자체 중 17개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 중
- 대부분의 지원센터는 행정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거창군은 민간단체에서 위탁하고 있고,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 중임
 - 창원시와 김해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전에 도시재생 선도지역(2014)과 일반지역(2016)에 선정되면서 각각의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소프트웨어 부문을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중임
 - 2019년에 선정된 남해군은 관광공사가 제안한 '공기업 제안형'으로 선정되었음

〈표 4-5-8〉

경남의 시군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공모 선정내역

구분	설립시기	운영방식	공모 선정내역
경남	2018.10.	공기업위탁	26곳 : 재생 1, 일반 1, 뉴딜 24
창원시	2014.06.	민간위탁	4곳 : 선도 1(2014), 중심 1(2018), 일반 1(2018), 주거 1(2019)
진주시	2018.08.	행정직영	1곳 : 중심 1(2019)
통영시	2018.09.	행정직영	2곳 : 경제 1(2017), 주거 1(2018)
사천시	2017.07.	행정직영	2곳 : 중심 1(2017), 주거 1(2018)
김해시	2016.07.	민간위탁	4곳 : 재생 1(2014), 중심 3(2017 · 2018 · 2019)
밀양시	2016.08.	행정직영	2곳 : 일반 1(2017), 중심 1(2019)
거제시	2018.06.	행정직영	3곳 : 주거 1(2017), 중심 1(2019), 일반 1(2019)
양산시	2019.01.	민간위탁	2곳 : 중심 1(2019), 동네 1(2019)
의령군	2019.06.	행정직영	-
함안군	2019.12.	행정직영	-
창녕군	-	-	2020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
고성군	2019.06.	행정직영	-
남해군	2019.04.	공기업위탁	1곳 : 중심 1(2018)
하동군	2019.01.	행정직영	1곳 : 동네 1(2017)
산청군	2019.11.	행정직영	1곳 : 동네 1(2018)
함양군	2019.04.	행정직영	2곳 : 일반 1(2018), 동네 1(2019)
거창군	2019.07.	민간위탁	-
합천군	2019.04.	행정직영	1곳 : 일반 1(2019)

주 : 창원의 재생(2014)과 김해의 재생(2016)은 도시재생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의미함.
 자료 : 경상남도 도시계획과(2020), 내부자료, 재구성.

2) 여건 분석

● 지방분권적 사업 추진체계 마련

- 중앙 관리 대상의 공모사업에서 순차적으로 광역 관리대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새로운 유형이 적용되며 신규 선정사업에서 중앙정부 선정은 변경되고 광역 선정은 유지됨
 - 중앙은 실행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적격성 검증,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강화 등을 실행함
- 경남도와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차원의 사업 추진체계를 확대 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 대상 지역 확산

- 경남의 308개 행정동 중 70.5%인 217개 지역이 인구, 사업체, 노후 건축물을 기준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국 비중과 비교하여 2.3%p 높은 수치임
- 시군 단위에서 집계구를 기준으로 쇠퇴도를 분석하여 활성화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서 쇠퇴지역의 범위와 규모는 더 커짐
- 모든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경상남도과 시군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쇠퇴지역(도시재생 대상 지역)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표 4-5-9〉

활성화지역
진단결과
(2018년 12월 기준)

구분	합계	부합지역	비율	미부합지역
전국	3,504	2,389	68.2	1,115
경남	308	217	70.5	91
비중	8.7	9.1	-	8.2

(단위 : 개, %)

주 : 지표의 기준연도는 2018년 12월 기준이며, 분석 단위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임.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도시쇠퇴현황 자료, 2020.01.06. 기준.

● 정책 변화에 따른 공모 대응

- 기존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행력 높은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법 개정하여 혁신지구 등 새로운 재생 수단인 신규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선정 물량이 늘어날 것임
- 새로운 중앙 공모방식에 대한 대응과 광역 차원에서의 사업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시기임
-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적 공감과 당위성은 유지될 것이며, 중앙과 광역에서 공모 형태나 사업 유형의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4-5-10〉

도시재생
신규 제도 도입
내용

구분	도시재생 인정사업	거점연계 뉴딜사업 (총괄 사업관리자)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념	전략계획 수립지역 내 점단위 사업을 재생사업 인정. 국비 지원 (활성화지역 밖, 활성화계획 불요)	공기업 시행 거점개발사업 포함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 사업 추진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구단위 건설사업 (활성화계획 불요)
대상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인프라 미달지역 (10만㎡ 미만 점단위사업)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제외)	쇠퇴지역 요건 충족 토지권원 확보 지역(50만㎡ 미만)
절차	인정 신청 → 도시재생특위심의 → 지방위 심의·인정	활성화계획(거점개발사업 포함) 신청 → 평가 → 선정(특위)	신청 → 특위(선정) → 지방위 심의·승인
지원액	3년간, 국비 10~50억원 (지방비 40% 매칭)	국비 100~250억원 (지방비 40% 매칭)	국비 최대 250억원 (지방비 40% 매칭)
조세감면 및 특례	(제30조) 국·공유재산 등의 처분 (제30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31조)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개발부담금·농지보전협력금·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 동일 적용 (제54조) 사업인정 후 재결신청 가능

자료 :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 신규 제도 소개자료, 2020.01.06. 기준.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저출생과 고령화로 소멸위험지역 확대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1.227명으로 전국 0.977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결과적으로 자연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분석됨
- 경남의 고령화율은 15.5%로 전국 평균인 14.8%에 비해 높고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으며, 경남의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고령화로 인한 지역 문제가 지속될 것임

● 압축도시로의 도시공간관리체계 전환

- 저출생과 인구고령화는 앞으로 인구 감소시대를 넘어 축소시대도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 성장의 한계의 영향은 도시공간구조의 확대가 지속되지 못할 것을 의미함
- 도시기능의 분산보다 압축적 활용과 권역별 거점 도시의 기능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
- 의료, 문화, 산업, 경제 등 도시기능이 집중된 권역별 거점 도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커뮤니티 중심의 지역관리체계 확립

-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커뮤니티(지역공동체)가 도시재생 등 지역사업 관리 주체가 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자생적 조직으로 육성되어야 함
- 도시재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정책사업이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발굴되고 운영되어야 하는 시점임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도시재생 대상지 확대

-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5년간 500곳의 대상지를 지정하는 것이었으며, 순차적으로 대상지가 확대되고 있고 경남도는 현재 26곳의 대상지가 지정되어 있음
- 매년 경남의 대상지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중앙정부 공모사업이 수시 접수 형태로 전환됨에 따라 대상지가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선정(관리) 대상지뿐만 아니라 광역에서 선정하는 대상지도 지속 증가할 것임
-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와 함께 지속해서 공모사업의 대상지는 늘어날 것임

● 경남도의 역할 확대

- 향후 대상지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 도시재생과 관련된 이해당사자가 많아지면 중앙정부의 사업 관리 등 역할에 있어 한계가 나타날 것이며, 경남도의 역할이 늘어날 것임

-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공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확대될 것이며, 경남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화 유형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정부가 갖고 있던 대상지 선정 및 관리의 권한을 순차적으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고 있으며, 쇠퇴지역이 더 증가하면 경남도의 권한과 업무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임
- 경남도시재생지원단, 경남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의 재구조화와 역할 제고를 위한 진단과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 제도권 밖의 쇠퇴지역 관리의 필요성 제기

- 현재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기준인 3개 지표⁴³⁾를 만족하지 못하는 대상 지역 중에서 쇠퇴 현상에 있는 지역도 장기적으로 쇠퇴가 지속될 것이며, 쇠퇴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함
- 경남 읍면동의 70.5%인 217개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부합되는 쇠퇴도를 보이며 집계구를 기준으로 진단할 경우 도시재생이 필요한 쇠퇴지역은 더 많아질 것임
-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지는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은 규모로 지정되고 있어 쇠퇴 분석을 집계구 단위로 시행했을 경우 더 많은 지역이 쇠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 경남도, 시군 등 행정 부문에서의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지역 차원에서 사업의 선정과 관리 등 단계별 거버넌스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역할과 임무를 배분하는 것이 중요함
- 지난해 시범사업 이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되는 총괄관리자 지정 등 신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임
- 중앙정부는 순차적으로 선정보다 정책사업의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나게 되어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쇠퇴지역 관리가 필요함
- 인구의 저출생과 고령화, 건축물의 노후화 등 쇠퇴지역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상남도도 시군 단위로 사회적경제조직과 연계된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음
- 다만, 지역 특색이 있는 조직의 발굴에는 미비한 성과를 보여 활성화가 필요함

43) 인구 감소, 사업체 감소, 노후 건축물 비중 등 3개 기준에 부합할 경우 대상지에 포함됨.

-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관리하고 활력을 찾기 위한 도시재생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도내 사업의 주민참여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도시재생을 단순히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단위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관기관이 대상지를 되살기 위해 함께 협업하기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 중앙부처 단위에서 다양한 연계·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경상남도과 시군 차원에서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행정 중심이 아닌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수임
- 특히, 국가혁신클러스터, 강소연구개발특구, 문화재복원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의 기존 부처별 정책사업의 연계방안을 시군 차원에서의 진단과 방향 설정이 필요함
- 도시공간구조를 감안한 기능 배분과 함께 재생과 개발을 양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관점에서의 중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인구의 감소, 노후 건축물의 증가 등으로 쇠퇴지역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며, 공모사업 대상지가 아닌 비법정 대상 지역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임

2) 추진전략

● **도시재생 부문 핵심지표**

〈표 4-5-11〉

도시재생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발굴 건수	1건	13건	40건
국비 공모 사업 선정 건수	33건	110건	200건
경남형 전문 인력 발굴	44명	300명	500명

(1)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함
- 광역 차원에서 경남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함
- 정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남형 도시재생 기획, 관리, 운영 등의 추진체계를 마련함

●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 경남도 차원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의 임무와 역할을 부여함
- 시군 지자체의 거버넌스 조직 현황을 진단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

● **총괄 사업관리자 등 신규 정책사업 발굴**

- 경남개발공사 등 총괄 사업관리자 지정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고 운영함
- 신규 3종 등 새로운 유형과 관련한 경남도 차원의 추진 및 적용방안을 마련함

(2)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확대

- 중앙정부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청년혁신스타 등 사회적경제와 연계를 추진 중임
-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청년, 사회혁신 등 혁신 분야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함

●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시군별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의 수준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함
- 경남은 2017년부터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 사업'을 추진 중이며, 확대 적용이 필요함

● 경상남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사회적경제추진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경남의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의 연계방안을 마련함
-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 도정 혁신 분야와의 연계방안을 마련함

(3)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 중앙부처 연계 · 협력사업 발굴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사업 발굴 및 적용을 확대함
- 중앙부처와 함께 경남도의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청년정책 등 영역과 협업을 추진함

● 기존 정책사업 대상지구 연계

- 원도심의 쇠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의 도입이 필요함
- 경제 · 산업 · 과학기술 진흥, 상권 활성화 등 정책지구와 연계하여 공간 · 기능적 위계를 조정함

● 비법정 대상 지역 관리방안 마련

- 공모 기준을 일부 충족하거나 장기적으로 쇠퇴 가능성이 큰 지역의 관리방안을 마련함
- 현재 도시재생 공모를 위해서 인문 · 사회(인구), 경제(사업체), 물리 환경(건축물) 등 3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3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쇠퇴지역을 공모사업 추진이 가능함

4. 추진시책

1) 정책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1) 경남형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

● 도시재생 스타트업 확대 지원

- 경남은 2017년부터 사전기획사업의 하나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타트업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앙 및 광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보였음
 - 초기에는 3곳에서 현재 매년 5곳 대상지의 스타트업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광역 차원의 지원과 시군 차원에서의 준비과정을 통해 공모사업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추진 확대가 필요함
 - 서울시는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앞서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희망지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남도의 스타트업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대상지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공기업 참여기반 확보

- 경남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부의 공기업들이 도시재생사업 참여하고 있으며, 공기업 주도의 신규 제도가 시행되면서 더 많은 공기업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참여가 이뤄질 것임
 - 2018년 남해군은 관광공사가 참여하여 활성화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원센터 운영까지 진행 중임
-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의 신설과 함께 공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경남도 차원에서 공기업 참여를 확대해야 함
 - 총괄 사업관리자 제도는 크게 ‘전체 위탁형’과 ‘일부 위탁형’으로 구분되며, 지자체와 공기업의 역할 구분을 통해 공기업의 전문 분야를 활용한 물리적 사업을 시행하게 됨

● 경남형 도시재생 평가체계 확립

- 정부는 광역 선정분 50개 중 기본 배정 15곳을 제외하고 시도별 ‘예산 총액 배분’ 방안을 통해 시급성, 형평성, 준비성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정을 시행할 예정임
 - 시급성은 쇠퇴도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형평성은 시군구의 수가 고려되며 준비성은 활성화계획의 수립 여부에 따라 배정되는 것으로 준비성은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달라짐
- 도시재생사업의 준비성 평가에는 지원센터 등 지원조직 확보에 대한 지표표를 포함하여 행정 주도의 사업 추진이 아닌 주민과 민간의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 조직의 평가가 필요함
 - 현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 있어서 지원센터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시군의 예산을 통해 주민협의체 등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의 평가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함

(2) 도시재생 거버넌스 활성화

● 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지금까지 경상남도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임해오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경남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 시군별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장기계획의 성격이 띄고 있으며,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심의가 진행된 이후에는 위원회의 특별한 임무가 없는 것이 현실임
- 도시재생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함
- 시군별 담당제나 전문 분야별 담당제를 실행하여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을 유도함

● 도시재생지원단 기능 확대

-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함께 위원회 소속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지원단의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기획, 운영 등의 관리를 통해 시군을 지원함
- 신규 사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운영 중인 사업의 점검을 실행하며, 분기별 점검과 전담제를 통해 경남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생태계를 안착시킴
- 중앙정부는 기존 3개에서 현재 5개 기관을 추가하여 총 8개 기관이 지원조직으로 설정되어 있고, 시책 발굴, 전문가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남도 도시재생 행정조직 개편

- 현재 경상남도는 계 단위의 조직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 단위의 모든 사업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권역별 또는 유형별 담당자를 확충하여 경남형 도시재생의 추진과 성과를 관리함
- 추가로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등 유관 부서와의 협업 추진과 함께 경남형 도시재생 성과를 발굴해 나아가기 위한 행정조직의 기능 강화가 필요함

(3) 총괄 사업관리자 등 신규 정책사업 발굴

● 시군별 활성화지역 사전진단 시행

- 현재 도시재생 대상지는 5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쇠퇴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시군에 따라 유형별 사업 추진실적과 성과가 상이하며 일부 시군은 도시공간구조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유형을 설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들도 있어 진단이 필요함
-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을 중심으로 혁신지구와 거점연계 뉴딜 등 신규 제도가

추진되면서 경남도 차원에서의 거점 도시 기능 강화와 시군별 도시공간구조 진단이 필요함

- 지역별 인구, 산업, 경제, 사회 등의 쇠퇴로 나타나는 대상지의 유형을 진단하여 적정 유형 추진이 가능하도록 활성화지역의 유형을 사전진단하고 시행하도록 지원함
- 지역의 쇠퇴 특성보다 예산 규모에 맞춰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을 구상하는 것을 방지함

● 생활SOC 복합화 등 점 단위사업 추진

- 지역에 필요한 생활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커뮤니티 복합시설을 추진 중임
- 청년주택, 생활편의시설(주민 동아리 공간 등), 지원센터 등이 복합시설 형태로 계획되고 있음
- 일정 구역을 설정하여 추진되는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인근의 낙후지역 주민들을 포용할 수 있는 도시재생 인증사업 등 점 단위사업 추진을 확대함
-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개발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점 단위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과 함께 시군 단위의 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쇠퇴진단이 진행함

● 경남개발공사 역할 확대

- 총괄 사업관리자의 추진과 함께 경남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남개발공사는 ‘신사업재생팀’을 운영 중이며, 경남도지원센터에 직원을 파견함
- 현재 중앙부처나 수도권의 공기업을 제외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실질적 사업 추진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사업 대상지의 일부 물리적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경남개발공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문을 도출하여 위탁 등의 형태로 사업의 영역 확장이 필요함
- 총괄 사업관리자의 역할 중 전체 사업을 관리하기보다 일부 ‘어울림센터’, ‘복합문화시설’ 등 물리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2) 지역관리회사 등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1)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확대

● 경남형 도시재생 연계형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도시재생은 쇠퇴지역에 대한 공간적 여건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군에서 공간적 여건을 개선에 치중된 사업을 추진 중임
-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도시재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이 발굴이 필요함
- 기능적으로 센터는 지역관리회사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자생적으로 조직된

주민조직이나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육성함

- 도내 시군 지원센터의 경우 대부분 한시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 운영에 대한 고민이 전무한 실정으로 자생적 운영조직을 만들어야 함
-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등 일부 민간 위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이 행정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시점에는 직원과의 계약 해지를 통해 센터가 없어지는 구조임

● 사회혁신 모범사례 확산

- 도시재생을 통해 지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거 문제, 사회취약계층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 사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외부로의 홍보가 부족함
-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경남도 차원에서 사회혁신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경남도와 시군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함
- 남해군에서 활동 중인 청년 농부들인 '팜프라'와 같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모범사례를 발굴함
- 경진대회와 같이 일회성으로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지역공동체를 발굴하고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을 진단하여 지원함

● 청년 일자리 연계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경남의 경우 시와 군으로 행정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시군별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활동 인력이 차이임
- 비교적 청년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활동 인력의 확보가 쉬움
- 국토부는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2020년부터 지역대학이 주도하여 도시재생의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도내 대학을 중심으로 연합체 구성이 필요함
- 2019년을 기준으로 전국 도시재생과 관련된 직종에 8천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관련된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확대될 것을 감안한 체계를 마련함

(2)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도시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시군의 활동 인력의 차이와 함께 운영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도 필요한 시점임
-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학과 전문가들이 집적된 권역을 제외하고 균등한 수준의 교육(역량 강화)이 이뤄지는지를 진단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가 파견 등을 지원함
- 경남도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인력풀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재정 여건이 부족한 시군에는 전문가 수당 등의 일부 경비를 지원하여 도시재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함

● 주민협의체의 법인 전환 지원

- 다자간의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의사 표현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의 법인화를 지원함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발굴된 지역주민 중심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등을 중심으로 해당 분야의 지원조직(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전환을 지원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컨설팅과 현장 확인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하며, 경남도 차원에서 인증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행하여 인증을 지원함

● 시군별 지역공동체 활성화 평가 시행

- 실행예산이 투입되는 본 사업 시행에 앞서서 지역공동체의 참여 등 여건을 평가하여 시군의 역량을 확인하는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함
- 이를 통해 시군 단위의 역량을 평가하고 공모사업을 위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공동체 참여와 활동을 보장하여 활성화를 장려함
-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사업 집행을 방지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지역주민 간 의사결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여 공모사업 선정과 함께 신속한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함

(3) 경상남도 및 관내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 민간기업 및 사회적경제조직 연계형 사업 공모

- 도시재생을 위한 예산 집행이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며, 예산의 확보와 집행이 이뤄지는 과정에 주민과 민간(민간기업 또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는 한정됨
- 도시재생을 공모하는 단계에서 공기업 참여의 기회는 총괄 사업관리자 등의 제도를 통해서 확대되지만, 사회적경제조직 등 지역공동체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지역공동체나 지역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운영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담보하는 사회적경제 연계형 사업 공모가 필요함
- 주민협의체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수준에서 참여하게 되며,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단체의 성격을 갖춘 민간기업이나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가 필요함

● 일자리 등 실현 가능성 확보

-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활동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임
- 하지만 기존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이 진행되고 있어 외부인이라 할 수 있는 민간기업이나 청년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도내 청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모델로 도시지역의 청년 또는 활동이 가능한 인력을 모집하고 일정한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건비나 활동비를 지원을 실행함

- 일본은 지방창생(地方創生)의 일환으로 지방부흥협력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소멸위험지역으로 이주하도록 하고 인건비와 활동비를 지급함
- 도시재생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연계하여 과정을 수료한 사회초년생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 계층을 특정 지역으로 파견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함

● 도시재생 대상지 부동산가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마련

- 지방 도시는 수도권에 비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활성화되는 지역은 임대료 등 지가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음
-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사업 배제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남도 차원에서도 임대료 등의 부동산가격 변화의 모니터링이 필요함
- 국토부는 한국감정원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부동산가격의 모니터링을 실행 중임
- 실시간으로 부동산가격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어려우며, 상권 실태 모니터링 등을 위해서 상점가 업종 변화나 세입자 변화 등을 확인하여 동지 내몰림 현상을 진단함

3) 유관사업 연계를 통한 혁신거점 투자

(1) 중앙부처 연계 · 협력사업 발굴 확대

● 경남형 도시재생 안내서 작성

- 우리나라는 2006년 시작된 도시재생 사전기획연구를 통해 한국형 도시재생의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2013년 도시재생 특별법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지정함
- 전국 13개의 선도지역이 지정되었고, 경남에는 구 마산시의 오동동 일원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됨
- 이후 도시재생 일반지역(2016년), 도시재생 뉴딜사업(2017년)뿐만 아니라 도심취약지역 개조사업,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유사 사업들이 추진 중임
- 도시재생 방향에 부합되는 부처별 정책사업은 다양하게 진행되며, 국토부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도시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유관사업을 확인이 가능함
- 정부는 도시재생을 종합적 · 계획적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함
- 다만, 정보의 접근과 변화하는 정책사업의 여건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맞춰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행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지역공동체, 민간 등)의 참여를 위한 유도가 필요함
- 도시재생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경남도 도시재생 안내서를 작성함
- 시군 및 경남도의 지원센터를 통해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대학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 추진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이나 내용의 전달은 부족함

● 부처별 신규 사업 협의체 운영

- 한시 조직 구성하여 시기별·유형별·지역별 특성에 맞춰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전략사업팀을 구성하여 시군 대상지의 진단과 계획 방향 등을 설정함
- 경남도는 신규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팀을 운영 중이며, 도시재생 차원에서의 지원을 실행함
- 시군에서 대상지와 해당 공모사업을 제안하고, 경남도를 중심으로 대상지 여건 진단과 기본방향 설정, 타당성 제시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국비 확보를 지원함
- 대부분의 시군은 행정이 중심이 되어 소규모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지역관리회사 등의 기능을 갖춘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함께 전문 분야의 기술 지원이 필요함
- 도내 관련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 컨설턴트 등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이를 활용한 시기별·기능별·지역별 분과를 운영하여 시군 단위의 국비 확보를 지원함

● 경상남도 도시재생 행정협의체 확대 운영

- 경상남도는 부지사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행정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시군 단위에서도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주축으로 행정협의체 운영 중임
- 행정협의체 운영은 행정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서 간의 협력을 높이기 위해 운영됨
- 시군에서는 관련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충실한 기획도 중요하지만, 경남도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경남도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사업의 진단과 관리를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함
- 도시재생 대상지에 추진되는 정책사업에 관해 도시재생 담당관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함

(2) 기존 정책사업 대상지구 연계

● 지역 산업 연계 스타트업 육성 확대

- 경남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중앙부처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타트업 육성사업과의 연계가 전무한 실정임
- 기존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제안되고는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과 관련된 스타트업이 발굴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 도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남테크노파크 등 기관과 연계하여 산업 분야 육성뿐만 아니라 신규 스타트업 육성을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추진함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지역의 산업기반이 무너진 지역에서 산업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추진되며 경남에는 통영시 1곳이 지정되어 추진 중임
-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여건을 경남도 차원에서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관이 연계하여 만들어가야 하는 시기임

● 시군 차원 도시공간구조 진단

- 시군의 자원이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고 쇠퇴한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책사업과 활성화지역의 역할을 구분함
- 대상지의 특성을 반영한 유형 발굴을 위해 경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원조직의 기능을 확대해 사전 컨설팅의 과정을 진행하며, 시군 도시재생사업의 수요 관리를 병행하여 추진함
- 시군별 도시공간구조에 맞는 유형별 사업 추진을 제안하고 제시된 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도시재생사업과 유관기관의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지원함
- 유형별 도시재생사업의 진단과 함께 관련 분야 정책사업 지원에 관한 추진체계를 연계 구상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 연계 도시재생 추진

- 국토부는 기존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였음
- 기존에는 동일한 규모에 추진되던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대상 지역을 구분하여 스마트시티(대), 스마트타운(중), 스마트솔루션(소)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음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과 별개로 규모별 추가 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가 융·복합 추진을 위해 관련 민간기업과 전문가 그룹의 연계를 실행함
-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수도권 전문기관 등이 연계하여 사업 추진체계 마련이 필요함

(3) 비법정 대상 지역 관리방안 마련

● 시군 도시재생사업 수요관리 강화

- 시군에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상위계획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상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 공모방식의 사업 선정에 따라 시군에서 수립된 전략계획을 기준으로 모든 활성화지역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음
- 경상남도에서는 매년 변화되는 정책을 반영한 수요조사는 시행하고 있으며, 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지원단 등을 통해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여 선정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경남도도시재생지원센터의 찾아가는 상담소 등 컨설팅 기능을 확대하고 각 시군의 특성에 부합되는 사업의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정기적인 수요 관리를 시행함

● 도시재생사업 공모 이외의 연계사업 발굴

-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대상지는 쇠퇴 양상에 따라 유형별 사업이 결정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부처별 추진사업의 공모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함

-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로 부처별 연계사업과 연계한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연계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과 시군의 협업이 필요함
- 지역관리회사 차원에서 대상 지역의 공모사업과 함께 민간기업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함

● 예비사업 지원 등 단계별 공모방식 전환 유도

- 도시재생사업의 최대 수혜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며, 도시재생에서 있어 주민의 참여 의향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과 같은 형태의 초기 단계 예비사업을 시행하고 대규모 본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성과의 도출도 가능함
- 시군 단위에서 예비 프로그램과 주민협의회 운영을 통해 본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정 규모가 되지 못하는 지역의 지원이 필요함
- 모든 시군을 일률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역량이 부족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대학이나 공공기관 등이 연계방안을 마련함

제3절 스마트시티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현황 분석

● 시군별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추진현황

- 현재 경남은 스마트시티 관련 총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시군별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대부분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의 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0년 7월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에 거제, 통영, 밀양, 하동 등 4개 시군이 최종 선정됨
- 대부분 통합플랫폼 기반을 시작으로 행정 서비스와 관련된 모바일 행정, 지방세 납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창원, 김해, 양산 등에서 스마트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임
- 농촌지역에서는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4-5-12〉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구분	대표 사업	비고
창원시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 스마트 창원국가산단 추진	14건
진주시	○ 경남혁신도시 시즌 2 사업 연계 추진 ○ 경남형 스마트산단 조성사업 추진 예정	4건
통영시	○ 통합IT 접목한 지능형 홈 기반 건강복지서비스 ○ ICT기반 스마트 어장관리 시스템 구축	9건
사천시	○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 관광 구현 ○ 항공산업 스마트공장 자동화 기술 확보	7건
김해시	○ 스마트 부품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 발표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5건
밀양시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계획 추진 ○ 스마트팜 혁신 밸리 조성	3건
거제시	○ 스마트 현장 행정 서비스 확대 추진	1건
양산시	○ 사람 중심의 U-Eco 그린시티 구축사업 ○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00개 구축 계획	12건
의령군	○ 스마트폰 이용 원격 환경제어 시스템 구축	3건
함안군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4건
산청군	○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1건
함양군	○ ICT를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 선도 추진	2건
거창군	○ 드론 활용 인공수분 기술 확보 및 시연	1건
합천군	○ 스마트투어 체계 구축사업	3건

주1 :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시군별 정책사업 리스트를 검토하여 작성된 내용을 요약함.
 주2 : 해당 사업의 명칭은 실제로 시군별로 추진된 사업 명칭과 다를 수 있음.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19; 재구성.

● 정부 정책사업별 추진현황

-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은 크게 7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부분 시범사업 수준의 시작 단계에서 본격적인 확산 단계를 앞두고 있음

〈표 4-5-13〉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정책사업	사업 내용	해당 지역	비고
국가 시범도시	○ 스마트시티 기술을 실증·접목하기 위해 지정된 대상 지역으로 신규 개발지역임	○ 세종 행복도시 ○ 부산 에코델타시티	신규 개발지
스마트도시 챌린지	○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스마트시티 솔루션 적용	○ 광주, 부천(경기), 대전, 인천, 창원	민간(기업) 연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 지역의 리빙랩을 중심으로 소규모 지역 수요에 맞는 스마트 서비스 발굴	○ 대전 등 매년 4개 지정 ○ 김해('18), 통영('19)	관광, 전통시장 등 연계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중 스마트 기술 접목을 구상한 대상지	○ 세종 등 7개 지정 ○ 경남 없음	도시재생 대상지 연계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 LH 및 지역개발공사가 진행하는 택지개발 사업 등에 접목	○ 79개 지구 ○ 가포, 율하 등 포함	신규 택지 개발 연계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 방법, 방재, 교통 등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플랫폼 보급	○ 22년까지 108곳 지정 ○ 양산, 김해 등 지정	지자체 통합정보 제공
혁신인재 육성사업	○ 스마트시티 혁신인재육성계획에 따라 전국의 교육기관을 지정	○ 전국 6개 대학 ○ 경남 없음	대학 연계 혁신인재 양성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20~p.26; 재구성.

〈표 4-5-14〉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2) 여건 분석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발전단계

-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개념을 접목하여 제도 정비와 관련 계획 수립을 진행함

구분	1단계(2013년 이전)	2단계(2014~2017년)	3단계(2018년 이후)
목표	건설·정보통신산업 융복합형 신성장 육성	저비용 고효율 서비스	도시문제 해결 혁신 생태계 육성
정보	수직적 데이터 통합	수평적 데이터 통합	다자간·양방향
플랫폼	폐쇄형(Silo 타입)	폐쇄형+개방형	폐쇄형+개방형(확장)
제도	U-City법 제1차 U-City종합계획	U-City법 제2차 U-City종합계획	스마트도시법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주체	중앙정부(국토부) 중심	중앙정부(개별)+지자체(일부)	중앙정부(협업)+지자체(확대)
대상	신도시(165만㎡ 이상)	신도시+기존도시(일부)	신도시+기존도시(확대)
사업	통합운영센터, 통신망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 통합플랫폼 구축 및 호환성 확보, 규격화 추진	국가 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2019~2023), p.8; 재구성.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추진

- 정부는 5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8대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임
- 스마트시티는 시범도시 착공 등을 중심으로 진행 중임

〈표 4-5-15〉

8대 선도사업
주요 대책 및 추진과제

구분	주요 대책	주요 추진과제
스마트공장	스마트 제조혁신전략('18.12)	4,000개 공장 보급
바이오 헬스	의료기기 규제 혁신·산업육성 방안('18.7)	중장기 발전전략 마련
핀테크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18.3)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 마련
미래 자동차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18.2)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 추진전략('18.1)	시범도시 착공 등
스마트팜	스마트팜 확산방안('18.4)	스마트팜 혁신 벨트 2차 선정
에너지 신산업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확대
드론	드론산업 기반 구축방안('17.12)	도심 등 상용화 확대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8대 핵심 선도사업 세부추진계획.

● 부처별 스마트시티 동향

- 부처별 업무에 따라 스마트시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국토부는 도시 운영 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분야별 도시 데이터를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음

〈표 4-5-16〉

경남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현황

중앙부처	정책 동향
국토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운영 통합플랫폼 확산사업 지속 추진 ○ 신기술 및 서비스 연계 발굴(BIS, 교통카드 등 ITS 분야 성과 확산) ○ 교통, 방범 및 방재 등 분야별 도시 데이터 통합 관리 추진 중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구축, 빅데이터, IoT 혁신기술을 통한 ICT 융합 도시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확대 추진 중 - 2019년 5G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융합 서비스 확대 ○ 부산과 고양의 IoT 실증사업 성과를 확산하고 교통, 환경, 안전 등 공공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 발굴과 검증을 지속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미터(AM),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의 검증된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중임 - 초기 시장형성단계를 넘어 민간 참여를 통한 확산사업을 추진 - 나주 스마트에너지시티(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성공모델 마련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있음 - 2022년까지 20개 분야의 국가 중점 데이터를 개방 - 지자체 스마트서비스 수준 진단과 컨설팅 지원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전기차 분야의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함 - LD 적용 물순환 선도도시 시범(광주광역시 등 5개) 조성 후 확산 - ICT 활용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사업 전국 확대 - 전기차 보급 관련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충전기 1만대 구축

자료 : 경남연구원(2019), 경남형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p.14; 재구성.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공간 특성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수준

- 공간의 특성에 따라 추진전략(정책사업)과 적용기술의 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새롭게 개발되는 대상지에 적용되는 스마트시티 기술은 시범사업 수준임

〈표 4-5-17〉

공간 특성별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및
적용기술

구분	공간 특성	추진전략	적용기술
신규 개발 단계	자유로운 인프라 구축 다양한 용·복합 용이 실험적 시도	국가 시범도시(2곳) 거점 신도시(혁신도시 등)	미래형 첨단 선도기술 (혁신기술 창출)
도시 운영 단계	신규 인프라 한계 충분한 기술 수요 시민 참여 우수	데이터 허브 모델(국가 R&D 등) 테마형 특화단지(연 4곳)	상용화 단계 기술 (수요기반 혁신)
노후 쇠퇴 단계	다양한 도시문제 신규 투자 한계	스마트 도시재생(매년 선정)	비용 효율적 적정기술 (문제 해결형)

자료 : 관계부처합동(2018).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p.13; 재구성.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는 크게 3개 분야이며, 공간적 특성에 맞추기보다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단계이며, 우리나라는 알고리즘과 서비스 분야가 가장 취약함

〈표 4-5-18〉

스마트시티 구성요소

구분	주요 내용	추진체계	
인프라	도시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이지만 도시 하드웨어 발전이 필요	도시개발사업자 등
	ICT 인프라	유·무선 통신 인프라의 도시 전체연결	ICT 산업
	공간정보 인프라	공간정보 핵심 플랫폼 등장 공간정보 이용자가 사람에서 사물로 변화 위치 측정 인프라, 인공위성, Geotagging	공공주도에서 향후 민간주도 전환
데이터	IoT	각종 인프라와 사물을 센서 기반 네트워크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큰 시장, 투자 필요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운영 주체
	데이터 공유	좁은 의미의 스마트시티 플랫폼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 및 활용 지원 도시 내 스마트시티 리더들의 주도적 역할 필요	초기 공공주도에서 데이터 시장 형성 후 민간주도
서비스	알고리즘 & 서비스	실제 활용 가능한 품질과 신뢰도의 지능서비스 데이터의 처리 분석 등 활용 능력 중요 유럽 Living Lab 등에서 다양한 시범사업 전개	공공·민간의 다양한 주체 등장 (한국 취약 부문)
	도시혁신	도시문제 해결 아이디어 및 서비스 환경 조성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 신뢰 등 사회적 자본 작용 중앙정부의 법제도 혁신 기능 필요	시민이 주도하고 정치권 지원

자료 : 이재용(2017).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월간교통, 6-12.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경남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추진 경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스마트 사회로의 변화 요구는 중앙정부의 3대 투자전략과 8대 선도사업의 하나로 국토교통부 등 부처별로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중임
- 경남도는 2018년 이후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 공모사업에서 17개가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228억원의 규모임

● 새로운 혁신 생태계 구축

- 기존 유비쿼터스 도시는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이 중심으로 ICT와 건설이 주된 정책의 대상이었으나, 스마트시티는 법률이나 제도, 그리고 추진 주체의 플랫폼을 넘어 해당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을 포함함
- 개인이나 공공의 영역 경계가 없어지는 수준으로 정보가 확산하는 단계이며,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생태계의 거점이 되는 혁신 생태계의 전환이 중요함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융합

- 이는 예전의 공간과 정보화의 결합과는 달리, 도시와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넘어서는 개념으로서 기초와 광역, 개인과 공공의 역할이 확장되는 개념임
- 한국판 뉴딜과 함께 준비 중인 경남형 뉴딜인 디지털 뉴딜사업, 사회적 뉴딜 등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스마트시티 정책의 방향임

● 지자체 차원의 의제 발굴 필요

- 스마트시티 추진은 도시공간의 특성, 산업구조의 진단, 과학기술의 수준을 고려하여 시군과 광역 차원의 전반적인 진단과 정부 정책사업의 연계가 필요함
- 기존 도시문제의 영역에 해당하는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도시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마트시티의 개념은 적용될 것이며, 그 기술 분야도 다양해짐
 - 스마트 공장을 넘어 스마트 산업단지화 같이 스마트시티의 공간적 영역이 점차 확대됨

● 산업경제 기반과의 연계 전략 마련

- 수송기계(철도, 선박 등)와 소재·부품·장치 중심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미래산업의 분야인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혁신 생태계의 구성·운영이 필요함
- 국가 산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창원국가산업단지는 한국판 뉴딜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며, 쉬지 않고 움직이는 생산기지가 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
 -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국가산단을 찾아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를 당부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술개발과는 별개로 경남이 갖는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초 및 광역 단위로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전략계획 수립 추진
 - 도내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자체는 김해(2018)와 창원(2020)이 유일함⁴⁴⁾
 - 스마트리전계획 : 기초지자체의 스마트시티를 연계·활용하는 광역단위 계획
-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과 광역 지자체에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보안, 안전 등 재난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이 확대되어야 함
- 유비쿼터스와 달리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고 기술개발 진행이 활발해져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이 있으며, 이를 경남 맞춤형 정책으로 연계가 필요함

●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2개의 축으로 구성된 한국형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은 경남형 뉴딜을 구상 중이며, 디지털(스마트), 그린과 함께 사회적 뉴딜이 포함되어 있음
 -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뉴딜을 통해 경제·산업, 사회 전반의 여건을 변화시키는 내용임
- 경남은 소재·부품·장치 중심의 산업·경제 구조로 저위기술 중심으로 생산성이 하락함에 따라 미래형 산업 전환과 제조업 고도화의 과제를 안고 있음
-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형태인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기업의 육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여건을 전반적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육성이 중요함

●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 경남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시티와 연계한 경남형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우리나라 스마트시티 관련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총 6곳이고 경남에는 지정되지 않았으며, 경남의 지역대학과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의 양성이 필요함
 - 지자체와 지역대학 협력기반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이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험이 있으며, 현재의 기본구상에 국토 관리,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의 확대가 필요함
-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산업, 사회혁신,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다양한 주제와 내용을 갖출 수 있으며, 지역별·분야별로 다양한 스마트시티 수요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경남형 지원조직의 운영이 필요함

44) 스마트시티 종합포털(<https://smartcity.go.kr/>), 지역 스마트 도시계획 현황(2020년 10월 5일 기준).

2) 추진전략

● 스마트시티 부문 핵심지표

〈표 4-5-19〉

스마트시티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스마트시티 특화지구	6개	50개	100개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 발굴	0명	200명	400명
스마트기술 관련 민간기업 수	96개	200개	500개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 추진

●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전략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의 제8조에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장이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 전에 수립해야 함
- 경남도 차원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추진계획, 추진체계를 마련함
 - 경남도는 2021년부터 경남형 지역특화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 예정임
- 유비쿼터스에서 스마트시티로 개념이 변화된 이후 수립된 도내 스마트 도시계획은 창원시와 김해시가 유일하며,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 지자체별 계획 수립이 필요함
 - 2018년 이전에 수립된 김해시의 계획도 정부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이 불가피함

●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

- 정부는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광역 단위의 통합플랫폼 구축은 서울(2018), 강원(2019), 충북·전남(2020) 등이 완료되었음
- 또한 매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초 지자체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양산(2015), 김해(2017), 창원·진주(2019) 사천·남해(2020) 등이 선정됨

●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발굴 추진

- 관광, 시장, 도시재생 등 특화된 공간 단위로 적용 가능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민간기업의 아이디어를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의 유형과 지원이 다름
- 신규 택지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며, 도시 생애주기에 맞춘 스마트시티 적용이 필요함
 - 도내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적용 사례는 없으나, 일부 대상지에서 스마트시티가 일부 포함됨

(2)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

- 단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목표로 경남형 뉴딜이 구상 중이며, 산업 전환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함
- 제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 서비스 업종의 육성이 필요하며, 김해시에 유치가 확정된 NHN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전환 유도, 디자인산업 연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과 제조업이 융·복합이 필요함

● 미래형 산업 전환 및 제조업 고도화

- 경남의 현재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미래산업(수소, 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설정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이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마련함
- 소재, 부품, 장비 중심의 산업시설 생산량 증대를 위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산업 전환과 연계한 분야로 나노산업, 의생명 의료기기 등의 분야로 확대함

● 경남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확대 및 기업 육성

- 2020년 이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은 솔루션, 타운(단지)형, 시티형으로 구분되며, 솔루션 실증과 본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고 이후 본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2020년 시티 챌린지사업에 18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김해를 포함한 4곳이 선정됨
- 스마트시티 챌린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민간기업의 솔루션을 적용하는 내용이며, 통신사 등 대기업이 주를 이루고는 있으나 벤처기업 등 창업기업의 참여도 가능함
 - 도내의 강소연구개발특구의 벤처창업, 연구소기업 육성 등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 스마트시티 연계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민선7기 성과 중 도정의 도민 참여 플랫폼인 '경남 1번가'가 자리 잡은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확대한 주민 참여기반 플랫폼이 필요함
- 또한 도민의 민원을 행정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이나 전문가가 참여해 해결하는 리빙랩(Living Lab) 프로세스의 안착을 통해 열린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함

●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 육성(일자리 창출)

- 도내 대학 중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없으나, 관련된 학과인 도시, 건축, 전기, 기계 등 전공 분야별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경남 혁신도시 오픈 캠퍼스나 지역혁신 플랫폼과 연계한 정책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

● 경남 스마트시티 지원기구 지정 · 운영

- 스마트시티 기술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공공이나 민간에 연계가 중요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기 위해 지역의 혁신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지원기구를 마련함
- 스마트시티 확산과 정책 발굴을 지원하는 정부 기관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지역대학이나 국책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변화되는 기술 수준의 점검하여 적용 가능성 검토하고 지역 수요에 맞춰 컨설팅이나 민간기업 매칭을 지원함

4. 추진시책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남형 스마트시티 추진

(1) 경남형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추진 전략계획 수립

● 경남 스마트시티(스마트리전) 전략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수립하며, 국가에서 추진될 전략, 제도 정비,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이를 바탕으로 경남도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해 경남 스마트시티 전략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경남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된 분야의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시행함
- 광역지자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경남형 뉴딜 추진과 연계하여 관련 분야의 방향 정립이 필요함

● 기초지자체 스마트도시기본계획 수립

- 2018년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이 발표된 이후 수립된 도내에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은 김해(2018)와 창원(2020)이 유일하며, 변화된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이에 앞서 도시기본계획이나 장기발전계획 등 시군 지자체에서 수립된 정책이나 계획에서 제시된 스마트시티 관련 내용을 취합하여 계획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함
- 도시기본계획 등에 제시된 스마트시티 전략을 스마트도시기본계획을 간주할 수 있음

(2)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

● 경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현재 시군 단위로 확산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의 통합 광역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행정구역의 한계를 넘어 시군 및 광역 간의 지원체계를 마련함

- 방법·방재·교통 등 개별서비스를 경남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연계하고 112, 119 등 긴급출동과 재난 상황 대응,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 최근 전남, 강원, 충청도가 광역도 단위로 국토부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았음

● 시군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확대

- 정부에서는 매년 3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양산(2015), 김해(2017), 창원·진주(2019) 사천·남해(2020)에서 선정됨
- 119 종합상황실(소방서), 재난종합상황실(지자체), 112종합상황실(경찰서) 등의 기능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음

(3) 부처별·분야별 스마트시티 정책사업 발굴 추진

● 테마형 스마트시티 추진

- 도내 관광지, 전통시장, 도시재생 대상지(주거지, 상업지역) 등 지역별로 특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적용 가능한 스마트시티 기술(솔루션)을 발굴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함
- 초기 단계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일부 기술 수준만 접목하고 장기적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와 같은 형태의 사업으로 구상함

●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확산

- 도내 도시재생사업 중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시도는 있으나,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을 추진한 대상지는 없으며, 신규로 준비되는 도시재생 대상지 중에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이 가능한 대상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제안함
- 스마트시티 관련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 선도사례로 육성

2) 경남형 스마트시티 산업기반 강화

(1)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경남형 뉴딜사업 지속 추진

● 경남형 뉴딜을 통한 산업기반의 전환

- 한국판 뉴딜 추진과 함께 경남도 차원에서 이에 상응하는 정책이 마련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발굴이 필요함
-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제조업 기반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고 미래산업 분야로 진전되기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데이터와 공간을 기반으로 추진함
- 제조업과 스마트기술의 접목한 첨단 제조업의 전환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현재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을 통해 관련된 정책사업이 추진될 예정임

-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인력 중심의 제조업 시설은 가동을 멈추지만, 스마트산단과 같이 데이터와 첨단설비를 갖춘 산업시설은 지속적인 생산을 지속할 수 있음

● 제조업 지원 서비스 업종의 육성

- 제조업 성장 한계와 저위기술 수준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 디자인, 법률, 마케팅,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지원 서비스사업이 육성이 필요함
- 스마트산단 등의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이터 분야의 기업 유치와 육성이 필요한 시점임
- 최근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역혁신모델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의 여건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분야의 제조업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 육성이 필요함
- 수도권에 비해 벤처기업 신설이나 연구개발투자가 미흡하며, 적극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2) 미래형 산업 전환 및 제조업 고도화

● 스마트시티 연계 미래산업 육성

-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되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모든 산업과 연계성이 있어 경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함께 융·복합화의 과정이 필요함
- 최근 미래산업으로 발표되고 있는 수소 산업은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위험 관리와 대응을 스마트시티 기술을 통해 실시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이에 포함됨
- 경남테크노파크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김해시에 유치된 NHN데이터센터 등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나 서비스 관련 기관이 연계하여 경남 맞춤형 스마트시티 산업전략 마련을 추진함

●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한 경남 산업 맞춤형 기술 통합플랫폼 마련

- 기계소재, 항공우주, 조선해양 등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조직과 나노융합, 과학기술, 정보화 등 서로 다른 분야의 산업이 융합하고 유사 분야 산업의 복합이 필요한 시점임
- 나노융합을 통해 발굴되는 부품 소재를 기계나 항공우주 부품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 기업과 기업, 산업과 산업 간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제조업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 발굴과 연계를 총괄하는 기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융·복합화된 기술개발을 지원함
- 시를 활용해 해당 분야 연구개발 수준과 필요 기술 분야 분석을 실행할 수 있음

(3) 경남형 스마트시티 챌린지 확대 및 기업 육성

● 경남형 스마트 챌린지 공모

- 도시재생, 관광개발, 지역개발, 어촌뉴딜 등 공간 단위 공모사업이 다수 추진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은 해당 공모사업의 주무 부서에 따라 제각기 추진되는 실정임
 - 공간 단위 정책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적용되어 미래형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스마트 챌린지 공모를 연계하여 추진함
 -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의 접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진행하고, 이후 공모사업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함께 사업에 참여함
- 스마트시티 담당 부서에서 별도의 예산 마련하거나, 해당 공모사업 담당 부서에서 진행함

● 스마트시티 챌린지 민간기업 육성

-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기업 대부분이 현재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의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음
- 경남도내 스마트공장, 스마트산단 등을 추진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러한 전문가나 민간기업의 정착과 경남의 스마트시티를 함께 추진함
- 육성 분야는 크게 시스템과 디바이스 분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우선 육성 가능한 디바이스 분야는 도내 분포된 제조업과 연계한 육성이 가능하고, 시스템 분야는 수도권 기업 유치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해 육성이 필요함

3) 스마트시티 추진기반 확보

(1) 스마트시티 연계 사회혁신 플랫폼 구축

● 주민 참여 기반 플랫폼 확대

- 스마트기기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으로 도정에 참여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2019년부터 도홈페이지 ‘경남1번가’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230건이 넘었음
- 단순히 제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공론화, 제안사업의 찬반 토론, 도민심의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여 도정 운영에 있어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

● 리빙랩 프로세스의 안착(열린 거버넌스 확대)

- 스마트시티 기술의 진전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전문가의 영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특정 집단에서 주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지역사회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하며 실행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 프로세스의 정착이 필요함
- 추진 과정에서 이슈의 발굴과 관리는 공공에서 역할이 가능하고, 이슈의 해결과 사업 추진과정 관리는 전문가가 주체가 될 수 있어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가능함

(2) 스마트기술 관련 혁신 인재 육성

● 지역대학 연합형 인재 양성 과정 운영

- 스마트시티 혁신 인재 양성기관은 전국 6개 대학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도시공학 전공 분야에서 연관되어 있으며, 향후 5년간(2023년) 전문 인력을 양성함
- 도내에서는 도시, 건축, 전기, 기계 등 다양한 전공 분야의 대학들이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전공 분야도 확인할 수 있음
-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지자체와 대학이 연계한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경남 맞춤형 인재 양성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 양성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 세부 분야의 구분과 연계형 인재 양성을 위한 오픈 캠퍼스 확대

- 데이터와 서비스는 스마트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현재 수립 중인 정보화, 데이터, 경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이 필요함
- 스마트시티의 구성요소는 인프라, 데이터,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먼저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분야로 도시, 건축, 토목 등 분야가 포함되고 ICT 인프라와 관련된 전기, 전자, 기계 등이 가능하고 두 가지 분야를 융복합하는 공간정보 인프라 분야의 육성을 추진함

(3) 경남 스마트시티 지원기구 지정 · 운영

●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공공뿐만 아니라 지역에 분포된 관련 혁신기관(출연연, 지역대학 등)과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정책을 만들고 도정을 지원하는 기구를 구성함
- 용역 과제나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정책이 현장에 적용하는데 여러 단계의 검토가 필요하게 되며, 그러한 과정에서 정책이 성숙해지지만, 기술 변화 등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과 같은 상시기구 또는 분야별 정책 안건 중 스마트시티와 연계 가능한 정책의 제안하는 자문기구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지원기구의 운영 활성화

- 한국판 뉴딜이 확정되면서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과 그린 뉴딜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연계하여 지원기구의 역할이 정해짐
- 특히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스마트)과 관련된 방향으로 사업을 구성하면서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한 검토의 연계 가능성의 검토가 가능함
- 특히,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해 도민이나 전문가 그리고 공공의 구상이 실현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신규 벤처 기업이나 수도권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병행함

제4절 상하수도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상수도 현황

(1) 상수도 보급 현황

-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약 3,456천명이며 이 중 급수인구는 3,249명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4.0%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97.5%의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진주시가 99.9%로 가장 높고, 밀양시가 81.8%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 군부 평균은 73.6%의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창녕군이 99.4%로 가장 높고, 산청군이 46.8%로 가장 낮은 상수도 보급률을 나타냄

〈표 4-5-20〉
경남지역 상수도 보급 현황

구분	총인구 (천명)	급수인구 (천명)	보급률 (%)	총급수량 (천㎥/년)	직접급수량 (천㎥/년)	1인 1일당 급수량(ℓ)	1인 1일당 물사용량(ℓ)
경남	3,456	3,249	94.0	409,724	406,989	343.2	255.0
시부	2,950	2,877	97.5	357,810	355,075	338.1	255.1
창원시	1,073	1,053	98.2	124,857	122,122	317.8	234.1
진주시	352	351	99.9	54,757	54,757	427.0	312.8
통영시	140	138	98.7	17,257	17,257	343.3	258.9
사천시	117	112	95.6	16,107	16,107	393.1	323.2
김해시	551	539	97.9	61,975	61,975	314.9	247.6
밀양시	110	90	81.8	9,740	9,740	295.7	234.7
거제시	263	255	96.9	29,106	29,106	312.6	250.9
양산시	344	338	98.2	44,012	44,012	356.4	257.0
군부	506	372	73.6	51,914	51,914	381.9	254.1
의령군	29	20	69.7	3,297	3,297	452.7	240.1
함안군	72	69	95.7	8,869	8,869	353.5	268.5
창녕군	67	66	99.4	9,465	9,465	392.2	269.2
고성군	55	44	79.6	5,346	5,346	331.9	266.5
남해군	45	31	67.4	4,861	4,861	434.3	229.4
하동군	49	27	54.4	3,134	3,134	319.8	192.8
산청군	37	17	46.8	2,949	2,949	467.5	264.6
함양군	41	26	64.0	4,290	4,290	452.6	254.3
거창군	63	49	77.4	6,483	6,483	362.7	256.0
합천군	48	24	49.9	3,220	3,220	372.1	249.1

주1 : 총급수량 = 자체 생산량 + 정수수입량
 주2 : 분수량은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수량
 주3 : 1인 1일당 급수량은 직접급수량(총급수량-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주4 : 1인 1일당 물사용량은 '부과량(=유수수량-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2) 누수 현황

- 경상남도의 총급수량은 약 409,724천㎥/년이며 이 중 누수되는 용수는 77,645㎥/년으로 누수율은 19.0%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18.0%의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양산시가 23.4%로 가장 높고, 김해시가 13.0%로 가장 낮은 누수율을 나타냈음
- 군부 평균은 25.3%의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산청군이 39.4%로 가장 높고, 고성군이 15.0%로 가장 낮은 누수율을 나타내었음

〈표 4-5-21〉

경남지역 누수 현황

(단위 : 천m³/년, %)

구분	총급수량	누수량	누수율
경남	409,724	77,645	19.0
시부	357,810	64,508	18.0
창원시	124,857	23,533	18.8
진주시	54,757	11,009	20.1
통영시	17,257	3,464	20.1
사천시	16,107	2,140	13.3
김해시	61,975	8,040	13.0
밀양시	9,740	1,646	16.9
거제시	29,106	4,388	15.1
양산시	44,012	10,287	23.4
군부	51,914	13,137	25.3
의령군	3,297	1,149	34.8
함안군	8,869	1,253	14.1
창녕군	9,465	2,284	24.1
고성군	5,346	801	15.0
남해군	4,861	1,668	34.3
하동군	3,134	877	28.0
산청군	2,949	1,163	39.4
함양군	4,290	1,486	34.6
거창군	6,483	1,548	23.9
합천군	3,220	908	28.2

주1 : 시설용량은 지방상수도에 한함

주2 : 총급수량 = 자체 생산량 + 정수수입량

주3 : 분수량은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한 수량

주4 : 1인 1일당 급수량은 직접급수량(총급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주5 : 1인 1일당 물사용량은 '부과량(유수수량) - 분수량'을 급수인구로 나눈 값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3) 수도요금 현황

- 경상남도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71.17원이며, 생산단가는 1,148.2원으로 현실화율은 75.9%로 나타남(2017년 기준)
- 경남 시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67.76원이며, 생산단가는 1,036.3원으로 현실화율은 83.7%로 나타남
- 경남 군부의 수도요금 평균단가는 897.87원이며, 생산단가는 2,025.3원으로 현실화율은 44.3%로 나타남
-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통영시로 95.0%로 나타났으며, 합천군이 27.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22〉

경남지역 상수도요금
현황(2017년)

구분	총급수량 (천㎥)	연간부과량 (천㎥)	부과액 (백만원)	평균단가 (원/㎥)	생산원가 (원/㎥)	현실화율 (%)
경남	409,724	305,188	265,870	871.17	1,148.2	75.9
시부	357,810	270,644	234,854	867.76	1,036.3	83.7
창원시	124,857	92,711	77,834	839.53	1,022.1	82.1
진주시	54,757	40,114	26,779	667.57	757.9	88.1
통영시	17,257	13,016	13,607	1,045.40	1,100.0	95.0
사천시	16,107	13,242	14,077	1,063.03	1,229.2	86.5
김해시	61,975	48,734	41,708	855.83	992.0	86.3
밀양시	9,740	7,732	6,761	874.51	1,664.0	52.6
거제시	29,106	23,361	22,050	943.87	1,156.0	81.6
양산시	44,012	31,734	32,037	1,009.56	1,150.0	87.8
군부	51,914	34,544	31,016	897.87	2,025.3	44.3
의령군	3,297	1,749	1,599	914.61	2,699.0	33.9
함안군	8,869	6,736	5,921	879.01	1,913.2	45.9
창녕군	9,465	6,497	7,504	1,155.02	2,064.0	56.0
고성군	5,346	4,293	4,563	1,062.97	2,017.0	52.7
남해군	4,861	2,568	2,267	882.70	2,102.0	42.0
하동군	3,134	1,889	1,506	797.00	1,320.4	60.4
산청군	2,949	1,670	1,255	751.78	2,208.0	34.0
함양군	4,290	2,410	1,685	699.24	2,082.0	33.6
거창군	6,483	4,576	3,168	692.35	1,771.0	39.1
합천군	3,220	2,156	1,547	717.57	2,591.0	27.7

자료 : 상수도통계(환경부, 2017).

2) 하수도 현황

(1) 하수도 보급률 현황

- 경상남도의 총인구는 약 3,455천명이며 이 중 하수처리인구는 3,130천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0.5%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84.4%로 나타남(2017년 기준)
- 시부 평균은 94.4%의 하수도 보급률과 86.2%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나타내었음. 하수도 보급률은 김해시가 99.5%로 가장 높고, 밀양시가 8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진주시가 99.6%로 가장 높고, 김해시가 6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군부 평균은 68.2%의 하수도 보급률과 79.9%의 하수관로 보급률을 나타내었음. 하수도 보급률은 거창군이 81.6%로 가장 높고, 함안군이 52.4%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관로 보급률은 창녕군이 91.8%로 가장 높고, 하동군 65.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m)

〈표 4-5-23〉

경남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2017)

구분	하수도보급률			하수관로보급률		
	총인구	하수처리인구	보급률	하수관로 계획연장	하수관로 시설연장	보급률
경남	3,455,540	3,130,076	90.5	16,858,184	14,231,761	84.4
시부	2,949,859	2,784,750	94.4	12,095,850	10,427,058	86.2
창원시	1,072,657	1,034,709	96.4	3,946,683	3,871,546	98.1
진주시	351,547	323,891	92.1	1,474,203	1,468,457	99.6
통영시	139,525	120,050	86.0	716,576	530,683	74.1
사천시	117,365	113,309	96.5	686,287	572,200	83.4
김해시	550,758	548,222	99.5	2,526,189	1,576,175	62.4
밀양시	110,395	89,744	81.2	970,848	747,529	77.0
거제시	263,162	217,760	82.7	626,281	568,706	90.8
양산시	344,450	337,065	97.8	1,148,783	1,091,762	95.0
군부	505,681	343,863	68.2	4,762,334	3,804,704	79.9
의령군	28,624	17,715	63.6	274,192	223,827	81.6
함안군	71,822	37,641	52.4	424,220	375,056	88.4
창녕군	66,517	47,212	70.9	467,718	429,287	91.8
고성군	55,471	34,380	63.3	479,904	303,258	63.2
남해군	45,476	35,449	77.9	675,717	509,951	75.5
하동군	49,386	34,801	70.4	462,658	303,282	65.6
산청군	36,971	25,056	67.7	577,288	460,283	79.7
함양군	40,582	31,226	76.9	596,279	492,187	82.5
거창군	63,290	51,688	81.6	377,497	325,474	86.2
합천군	47,542	28,695	60.8	426,862	382,099	89.5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2) 하수관거 현황

- 경상남도의 하수관거 현황은 총 14.2백만km로 나타났으며,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약 5.5백만km로 전체 하수관거중 약 38.3%의 비중을 차지함(2017년 기준)
- 경남도에서 창원시가 3.9백만km로 가장 많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의 27.2%에 해당함. 창원시 내의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2.6백만km로 창원시 하수관거의 68.4%를 차지함
- 고성군은 0.3백만km로 가장 적은 하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경남도의 2.1%에 해당함. 고성군 내의 20년을 초과한 하수관거는 1.5만으로 고성군 하수관거의 4.9%를 차지함

(단위 : km, %)

〈표 4-5-24〉

경남 시군별 노후관로 현황(2017년 기준)

구분	합계	20년 초과		20년 이하		비고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경남	14,231,761	5,450,986	38.3	8,780,775	61.7	
시부	10,427,058	5,132,859	49.2	5,294,199	50.8	
창원시	3,871,546	2,649,004	68.4	1,222,542	31.6	
진주시	1,468,457	708,172	48.2	760,285	51.8	
통영시	530,683	294,450	55.5	236,233	44.5	
사천시	572,200	303,285	53.0	268,915	47.0	
김해시	1,576,175	565,862	35.9	1,010,313	64.1	
밀양시	747,529	404,010	54.0	343,519	46.0	
거제시	568,706	208,076	36.6	360,630	63.4	
양산시	1,091,762	-	-	1,091,762	100.0	
군부	3,804,704	318,127	8.4	3,486,576	91.6	노후화 관로 증가추세
의령군	223,827	-	-	223,827	100.0	
함안군	375,056	-	-	375,056	100.0	
창녕군	429,287	6,273	1.5	423,014	98.5	
고성군	303,258	14,915	4.9	288,344	95.1	
남해군	509,951	7,962	1.6	501,989	98.4	
하동군	303,282	-	-	303,282	100.0	
산청군	460,283	-	-	460,283	100.0	
함양군	492,187	252,872	51.4	239,315	48.6	
거창군	325,474	36,106	11.1	289,368	88.9	
합천군	382,099	-	-	382,099	100.0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3) 하수도 요금 및 징수 현황

- 경남 하수도 평균단가는 505.0원/톤이고, 처리원가는 1,359.9원/톤으로 현실화율은 37.1%로 나타났음(2017년 기준)
- 시부 평균 하수도 평균단가는 531.2원/톤이고, 처리원가는 1,231.9원/톤으로 현실화율은 43.1%로 나타났음
- 군부 평균 하수도 평균단가는 193.7원/톤이고, 처리원가는 2,883.4원/톤으로 현실화율은 6.7%로 나타났음

〈표 4-5-25〉

경남 하수도 요금 현황(2017년)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경남	327,956	165,623	505.0	445,979.1	1,359.9	37.1
시부	302,539	160,699	531.2	372,692.0	1,231.9	43.1
창원시	124,562	59,037	473.9	98,898.0	793.9	59.6
진주시	43,497	20,099	462.0	61,814.0	1,421.1	32.5
통영시	11,783	2,639	223.9	18,607.0	1,579.1	14.1
사천시	10,556	4,643	439.8	24,495.0	2,320.4	18.9
김해시	51,605	40,930	793.1	68,443.0	1,326.3	59.8
밀양시	7,931	3,254	410.2	25,972.0	3,274.7	12.5
거제시	17,229	6,831	396.5	31,089.0	1,804.5	22.0
양산시	35,376	23,266	657.6	43,374.0	1,226.0	53.6
군부	25,417	4,924	193.7	73,287.1	2,883.4	6.7
의령군	1,424	220	154.4	2,199.0	1,544.2	9.9
함안군	3,006	878	292.0	5,734.0	1,907.5	15.3

구분	연간부과량 (천톤) (A)	부과액 (백만원) (B)	평균단가 (원/톤) $C=(B/A*1,000)$	총괄원가 (백만원) (D)	처리원가 (원/톤) $E=(D/A*1,000)$	현실화율 (%) $F=(C/E*100)$
창녕군	4,654	1,198	257.4	16,641.0	3,575.6	7.1
고성군	2,847	663	232.9	4,652.0	1,634.2	14.3
남해군	1,830	167	91.2	1,357.0	741.5	12.2
하동군	1,500	254	169.3	3,225.0	2,150.0	7.8
산청군	1,556	166	106.6	1,334.0	857.3	12.4
함양군	2,490	358	143.6	9,178.1	3,686.0	3.9
거창군	4,162	764	183.5	16,885.0	4,056.9	4.5
합천군	1,948	256	131.4	12,082.0	6,202.3	2.1

자료 : 하수도통계(환경부, 2017).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인구, 거주 및 이동성 변화

- 우리나라 인구는 2010년 4,941만명에서 2030년 5,216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2060년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노령화 인구(65세 이상)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49년까지 1,800만명으로 증가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인구 노령화에 따른 용수수요량 감소 예상
- 2030년 기준 인구감소 시작, 1·2인 가구 증가로 외식 증가 등 식생활 변화 및 가구 이동성 증가

(2) 홍수·가뭄 피해 증가 및 수질오염으로 인한 물부족

- 지구의 온도 상승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로 홍수·가뭄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물관리의 불확실성 증대
- 물수요관리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이 줄어들면서 향후 물부족 문제가 심화할 전망

(3) 상업시설 상하수도 이용량 증가

- 물이용 효율 향상, 생활용수 사용량 감소 등으로 1인당 물소비량 감소 추세(OECD, 2015)
- 1·2인 가구 증가와 교통발달에 따른 인구 이동성 증가 등으로 상가 등의 영업용 수도사용량이 증가하고 따라서 하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인구 활동의 변화로 수도사용량이 변경될 수 있음

(4) 생공용수 부족 전망

- 용수수급 전망 계획의 목표연도인 25년 기준 용수수급 검토 결과 생활용수는 창녕군,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함안군이 부족하고, 공업용수는 창녕군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음(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 변경(2015.8))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상하수도 부문 비전

-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2) 추진전략

- 상하수도 부문 핵심지표

〈표 4-5-26〉

상하수도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누수율	19.0%	5.0%	4.0% 이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	75.0%	95.0%	97.0% 이상
하수도보급률	90.5%	91.1%	92.0% 이상

- 안전한 수돗물의 지속가능한 공급

- 깨끗하고 풍부한 수원 확보로 가뭄 등 기후변화와 재해 시에도 안정적인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
- 군 지역 및 도서지역 보급률 확대

- 안심하고 믿고 마시는 수돗물

- 수도시설 정비로 수질 저하를 방지하고, 고도화된 선진 정수기술의 도입으로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회복
- 노후 관로 정비를 통한 누수율 저감

- 도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상하수도 사업

- 상하수도사업 정보의 투명성 강화 및 정보공개 확대 등으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사업체 계 구축
- 하수도 약취 저감 및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4. 추진시책

1) 상수도 분야

- 농·어촌·도서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 개선
 - 농어촌지역 지방상수도 보급률을 개선하고 소규모 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수도공급 안정적 확보 추진
- 노후 상수도 시설 정비
 -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관망은 관망 노후도 조사 및 평가를 통한 정비계획 실시
 - 노후도 및 누수율이 높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
-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 구조개편, 경쟁 합리화 등 효율성 개선 노력과 더불어 지자체 여건에 맞추어 합리적인 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 지자체별 현실화 목표 설정 및 시행 결과 평가 제도화

2) 하수도 분야

- 하수도 보급률 확대
 - 하수처리장 신증설
 - 하수관로 확대
-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재이용사업 확대
- 경남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사업 확대
 - 경남 노후 하수관로 상태진단 지속적 추진
 - 결함 하수관로의 교체 및 개보수 동 정비 및 유지관리 지속적 추진
-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 시행
-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관리제도 도입
 -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공공관리 편입 유도 및 확대
- 재정 여건에 따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목표

제5절

보건의료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보건의료 자원

●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 증가

- ‘20.8월 기준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17.1%로 고령사회에 해당함⁴⁵⁾
 -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전국의 16.1%보다 높으며 17개 시도 중 8순위임
 - 경남은 ‘16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졌음
- ‘18년 기준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10.52%, 치매 환자 수는 53,653명에 이룸⁴⁶⁾
 - 경남의 치매 유병률은 전국 10.16%보다 높은 수준이며 치매 환자 수는 서울, 경기,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순위임
 - 서부경남의 군 지역(남해군, 합천군, 산청군, 함양군, 하동군, 거창군)과 의령군의 치매 유병률이 12%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17년 기준 경남의 치매 관리비용은 105억 4,033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됨

● 보건의료 인프라의 부족

- ‘19.9월 기준 경남에는 종합병원 26개소, 병원 317개소, 의원 3,342개소, 보건기관 등 415개소, 약국 1,272개소가 있음
 -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70% 이상이 창원권, 김해권에 편중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서부경남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임
- ‘18년 기준 경남의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6.5%(22개소), 병상 수는 10.5%(6,385병상) 수준에 그침⁴⁷⁾
 - 도부에서 보면 경남은 경기, 전북에 이어 3번째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제주(21.7%), 강원(19.8%), 세종(12.5%), 전남(10.2%), 경북(10.2%) 지역이 상대적으로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높음

45)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1.29).

46) 중앙치매센터(www.nid.or.kr/main/main.aspx), (접속일 2020.1.28).

47)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기관현황(KOSIS 접속일 2020.1.28).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보건의료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을 포함함.

〈표 4-5-27〉
지역별 요양기관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약국
전국	355	3,650	1,587	64,729	3,498	22,418
서울	57	465	122	17,047	35	5,079
부산	29	363	189	4,802	34	1,530
대구	16	194	67	3,557	25	1,274
인천	19	175	72	3,122	65	1,093
광주	23	242	64	1,898	16	675
대전	10	116	52	2,114	20	729
울산	8	91	42	1,265	24	408
세종	1	9	6	341	18	120
경기	63	721	349	14,348	338	4,915
강원	15	83	33	1,512	244	658
충북	13	100	51	1,713	268	661
충남	13	152	89	2,151	401	923
전북	13	192	86	2,254	405	904
전남	23	199	89	1,801	565	802
경북	20	213	119	2,609	560	1,081
제주	6	18	10	853	65	294
경남 (바울)	26 (100.0)	317 (100.0)	147 (100.0)	3,342 (100.0)	415 (100.0)	1,272 (100.0)
창원권 (바울)	11 (42.3)	110 (34.7)	53 (36.1)	1,310 (39.2)	90 (21.7)	461 (36.2)
진주권 (바울)	4 (15.4)	48 (15.1)	21 (14.3)	622 (18.6)	126 (30.4)	244 (19.2)
통영권 (바울)	3 (11.5)	29 (9.1)	8 (5.4)	385 (11.5)	71 (17.1)	151 (11.9)
김해권 (바울)	8 (30.8)	119 (37.5)	60 (40.8)	884 (26.5)	44 (10.6)	347 (27.3)
거창권 (바울)	0 (0.0)	11 (3.5)	5 (3.4)	141 (4.2)	84 (20.2)	69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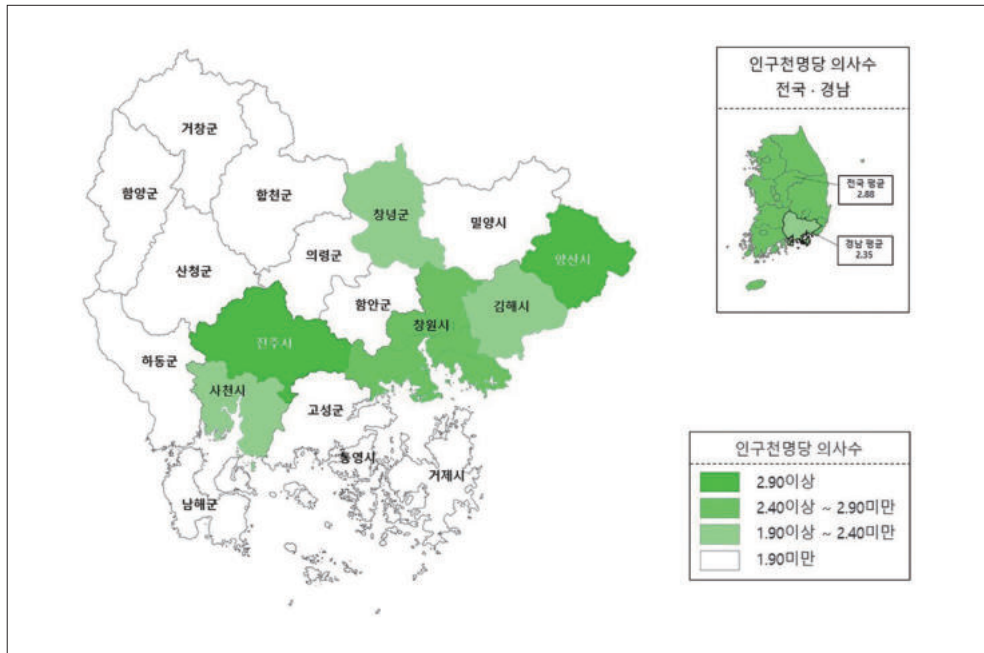
주1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등 : 보건기관, 조산원
 주2 :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권역경계와 인구 수, 이동시간, 의료이용률, 시도 공급계획을 기준으로 70개의 지역 진료권을 구분함. 경남은 창원권, 진주권, 통영권, 김해권, 거창권, 총 5개의 진료권으로 구분됨.
 *창원권 : 창원, 의령, 함안, 창녕 *진주권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통영권 : 통영, 거제, 고성
 *김해권 : 김해, 밀양, 양산 *거창권 : 거창, 함양, 함천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

- ‘18년 기준 경남의 인구천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는 2.35명으로 전국 2.8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임⁴⁸⁾
 - 서울이 4.2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광주 3.58명, 대전 3.49명, 대구 3.31명, 부산 3.27명 등의 순임. 경남은 전국 11순위, 도부 5순위에 해당함
 - 시군별로 보면 함안군(1.40명), 거제시(1.55명), 하동군(1.56명), 함양군(1.62명), 남해군(1.68명), 산청군(1.72명), 합천군(1.79명) 등의 순으로 의료기관 의사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48)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1.29.)

〈그림 4-5-2〉

경남 인구천명당 의사 수



- ‘18.9월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 보건소 외 지역 보건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⁴⁹⁾
 - 건강생활지원센터(3개소) 인지도 17.2%, 이용 경험 6.9%
 - 정신건강복지센터(20개소) 인지도 14.8%, 이용 경험 3.8%
 - 치매안심센터(20개소) 인지도 17.9%, 이용 경험 6.1%

2) 보건의료 이용

● 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

- 서부경남⁵⁰⁾은 의료 취약계층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이연상 외, 2018)
 - 서부경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동부경남과 비교할 때 장애인 비율, 수급권자 비율이 높음
 - 서부경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모두 진주시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또한 서부경남의 병상 수는 경남 전체의 1/5 수준에 그침
 - 서부경남의 군 지역의 경우 인구 천 명당 의료기관 의사 수가 1.56명~1.86명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전국평균 2.88명)
-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동부경남, 중부경남에 집중되어 있어 서부경남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임
 - ‘18년 기준 인구10만 명당 경남의 응급의학전문의 수는 1.6명으로 전국 3.6명에 크게 못 미침⁵¹⁾

49)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p48.

50) 서부경남 :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거창군, 함양군, 함천군.

51)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현황통계(KOSIS 접속일 2020.9.16).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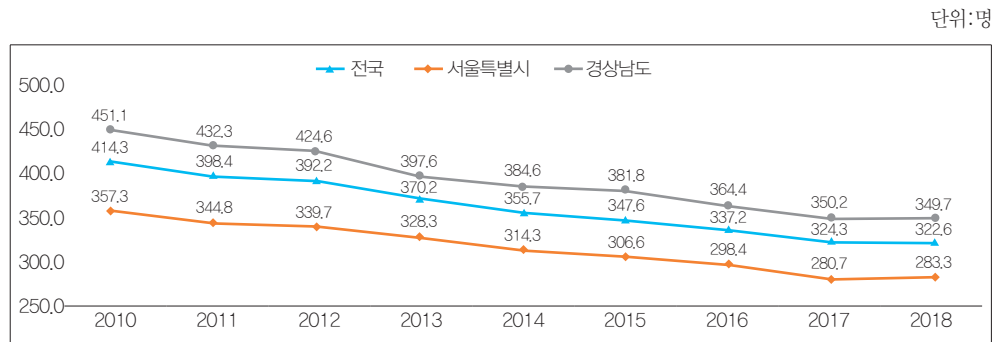
- '18년 기준 경남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1.1%로 충남(13.0%), 인천(11.6%)에 이어 전국 3위 수준임⁵⁴⁾
- '16~'17년 경남의 연간 미충족 의료율은 14.7%, 1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18년 11.1%로 다소 개선됨
- 시군별로 보면 거제시(13.7%), 남해군(13.6%), 통영시(13.6%), 고성군(13.4%), 밀양시(12.3%), 창원시(12.3%) 등의 순으로 미충족 의료율이 높게 나타남
- 높은 관외 진료비와 낮은 입원환자 자체충족률⁵⁵⁾
- '17년 기준 경남의 진료비 총액은 약 5조 5,329억 원이고 이중 약 1조 2,618억 원(22.8%)의 진료비가 경남 외부에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77.9%이고 치료가 어려운 전문진료질병군의 경우 50.3%로 전국 중하위권에 해당함(서울 입원환자 87.1%, 전문진료 94.1%)
- 시군별로 보면 입원환자의 자체충족률이 낮은 지역은 산청군, 함안군,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남해군, 합천군 등의 순으로 주로 서부경남의 군 지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3) 도민 건강 수준

● 암, 심장질환, 알츠하이머병 등 높은 연령표준화 사망률

- 경남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49.7명으로 전국 322.6명, 서울 283.3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은 울산(355.3명), 충북(352.6명), 부산(350.8명)에 이어 전국 4순위에 해당함

〈그림 4-5-4〉
연도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 경남은 10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총 8개 항목에서 전국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⁶⁾
- '18년 기준 경남의 악성신생물(암)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101.5명, 심장질환은 44.6명, 알츠하이머병은 8.8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 만성하기도질환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2순위, 뇌혈관 질환은 전국 4순위에 해당하며 당뇨병, 간 질환, 고의적 자해가 각각 전국 6순위로 높게 나타남

5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KOSIS 접속일 2020.1.30).

55)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2019년~2022년), pp.24-25.

56)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보도자료 2019.9.24).

- 경남의 표준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349.7명으로 전국 322.6명보다 높고, 울산(355.3명), 충북(352.6명), 부산(350.8명)에 이어 전국 4순위에 해당함
- 경남은 10대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중 총 8개 항목에서 전국 사망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⁵⁷⁾

(단위 :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표 4-5-28〉

2018년 시도 사망원인별 연령표준화 사망률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322.6	283.3	350.8	332.7	339.4	338.0	316.2	355.3	318.2	306.8	347.9	352.6	344.3	330.0	348.3	348.5	349.7 (4위)	326.1
암	90.3	85.4	100.3	91.1	91.8	95.2	85.0	95.3	92.4	86.7	92.8	94.1	91.3	92.0	86.0	91.3	101.5 (1위)	91.3
심장질환	32.3	28.0	40.8	38.5	34.2	30.2	26.1	39.8	24.8	29.5	34.0	30.4	30.7	24.4	31.2	35.1	44.6 (1위)	26.9
폐렴	21.2	14.7	20.3	21.4	23.8	28.5	17.0	20.7	19.2	19.4	24.9	28.5	20.6	20.4	29.8	30.3	20.1	16.8
뇌혈관 질환	23.3	21.2	25.1	26.4	23.6	28.4	24.9	30.6	29.4	22.8	24.2	24.8	23.0	23.4	20.6	21.1	27.4 (4위)	18.5
고의적 자해	22.6	18.9	23.0	23.1	24.3	23.1	24.5	24.2	24.5	21.0	26.1	26.7	29.8	25.8	23.5	24.3	24.8 (6위)	27.3
당뇨병	9.1	8.4	11.1	11.6	8.7	9.3	10.9	14.1	11.1	8.9	8.4	6.8	6.6	10.5	8.8	8.5	10.6 (6위)	7.1
간 질환	9.1	7.7	10.8	10.1	10.7	7.4	6.7	9.0	4.5	8.0	12.6	10.0	10.7	9.2	10.8	10.2	10.3 (6위)	11.9
만성 하기도질환	6.1	4.0	7.1	6.6	5.0	7.3	5.5	10.9	6.7	5.8	6.9	5.5	7.2	7.2	6.9	6.6	7.6 (2위)	6.0
알츠하이머 병	5.1	4.5	8.7	5.4	3.7	7.0	6.6	4.4	7.6	3.1	3.8	5.8	6.7	7.0	3.7	3.8	8.8 (1위)	5.2
고혈압성 질환	5.3	4.2	7.0	5.4	7.4	4.7	4.5	7.9	7.0	6.2	3.4	4.8	4.6	5.3	4.4	5.8	4.3	3.8

자료 : 통계청(2019), 「2018년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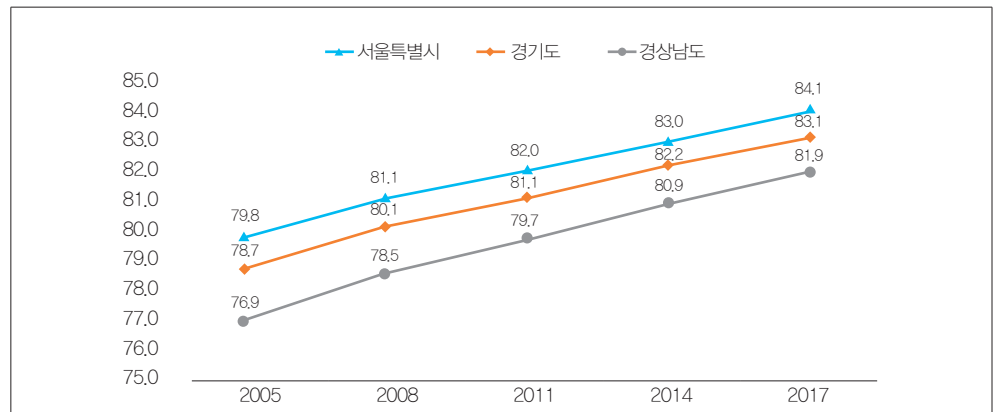
● 건강수명,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 수준

- 경남의 건강수명은 64.3세로 전국에서 가장 짧고, 특히 하동군, 남해군, 함양군의 건강수명은 전국 최하위권에 속함⁵⁸⁾
- '17년 기준 경남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부산, 충북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짧음⁵⁹⁾

단위: 세

〈그림 4-5-5〉

경상남도
서울특별시·경기도 간
기대수명 비교 현황



57) 통계청, 2018년 사망원인통계(보도자료 2019.9.24).

58)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59) 통계청, 인구동향과(생명표).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19년 WHO가 발표한 10대 건강위험요인은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 비감염성질환, 인플루엔자 국제적 유행, 취약한 환경, 항균제 내성, 에볼라 및 고위험성 병원균, 일차보건의료 취약성, 예방접종 거부, 뎅기열, HIV로 나타남⁶⁰⁾
- 보건의료 분야의 미래 트렌드 변화를 바탕으로 경남지역의 미래변화를 예측해 보면 크게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급증',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감염병, 미세먼지 등 미래질병의 확산'으로 요약될 수 있음

1) 인구고령화와 의료비 급증

●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 경남은 '24년 이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명이 고령인구 1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⁶¹⁾
 - 노년부양비는 '18년 21.0에서 '30년 41.9, '45년 78로 증가하고, 고령화지수 역시 '18년 110.6에서 '30년 273.6, '45년 435.1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 다시 말해 유소년인구와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인구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 늘어나고 치매 유병률 또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변화하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17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자는 약 1,73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3.6%에 이룸⁶²⁾

●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 만성질환의 증가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개인적·사회적 부담 또한 커지게 됨
 - 만성질환이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환자는 입원·퇴원을 반복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레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됨
 - 고혈압 및 당뇨병 진료비는 17년 5조 3,363억 원으로 10년에 비해 38.9% 증가함⁶³⁾
 - 실제 우리나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6.0%씩 증가하여 OECD 연평균 증가율 1.8%보다 3.3배 높은 상황임⁶⁴⁾
- 경남의 만성질환 급여현황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08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체계가 개편된 '14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음.⁶⁵⁾ 향후

60) 채수미(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미래 질병 대응을 위한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기준일 : 2019.6.27.).

62) 보건복지부 외(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차개정).

63) 보건복지부 외(201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2차개정).

64) 보건복지부,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 OECD 「보건통계 2019」결과 발표(보도자료 2019.7.22.), 참고로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 및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함.

65)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KOSIS 접속일 202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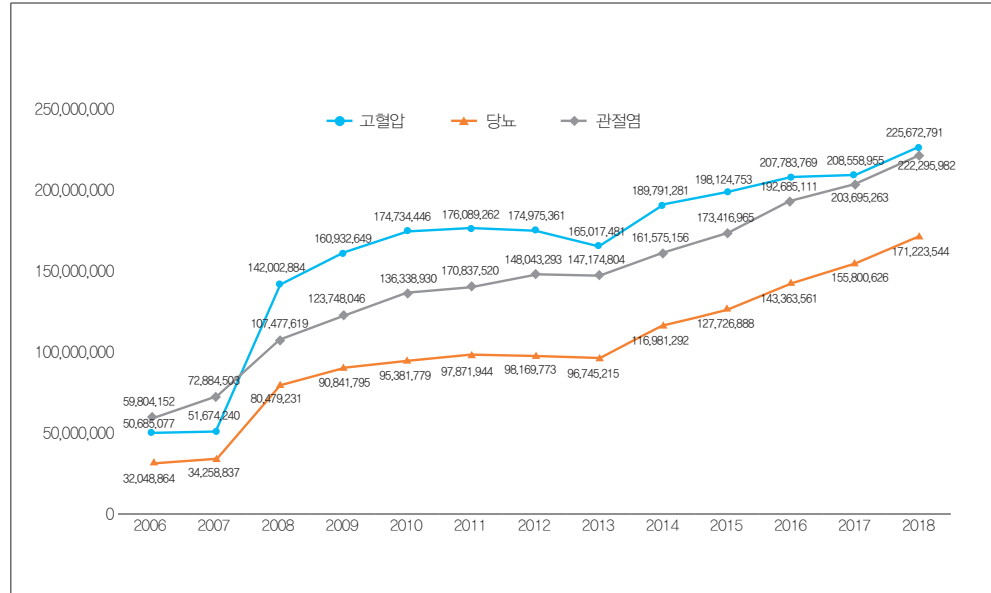
인구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만성질환 급여지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18년 기준 경남지역의 고혈압 급여는 약 2,257억 원, 관절염은 2,223억 원, 당뇨는 1,712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13년 이후 매년 증가추세임

단위: 천원

<그림 4-5-6>

경상남도 만성질환 급여현황



2)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

● 소멸고위험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동화 현상

-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병원 운영이 어려우므로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큼
 -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부족은 정주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인구감소는 병원 신축을 어렵게 하여 지방소멸이 가속될 가능성이 큼
 - 남부내륙고속철도 등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관외 진료비 지출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보건의료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소멸고위험지역에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비용대비 효과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에 대한 원격진료, 찾아가는 서비스 등 새로운 정책 개발이 요구됨

3)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 분절된 보건, 의료, 복지 등의 공급체계로는 급증하는 의료적 수요에 대응할 수 없음.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정부의 재정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임
 - 노인 진료비 비율은 '07년 28.2%에서 '18년 40.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⁶⁶⁾

66)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시키면서 동시에 도민의 건강권,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일명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것임
- 커뮤니티케어의 추진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임
- 커뮤니티케어는 지역성, 통합성,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을 의미하며 이 시스템의 핵심은 네트워크로 볼 수 있음
- 커뮤니티케어가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보건, 의료, 복지, 요양 등 분야가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민참여를 통한 사례발굴과 비공식적인 돌봄 창출이 핵심적인 요소임⁶⁷⁾

●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커뮤니티케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지자체는 정부 정책의 단순 집행자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보건 의료 정책을 수립·집행·평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
- '19.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는 지역 진료권 구분과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지원단 설치 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⁶⁸⁾
- '1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역시 커뮤니티케어 추진의 핵심적인 주체는 시군구 지자체임
- 과거 가족에 의한 돌봄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care by the community), 즉 '돌봄의 지역화' 시대를 맞이하게 됨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방정부는 보건과 의료의 연계·협력을 끌어내고 민관협력의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4) 감염병, 미세먼지 등 미래 질병의 확산

● 신종 감염병 확산의 세계화

-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일상화된 가운데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현상(팬데믹, pandemic)은 더욱 심화될 것임
- '03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2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비롯하여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등
- 특히 '19.1월부터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발생지인 중국 우한지역을 넘어서 한국,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이란 등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세계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67) 이연생(2018), 일본 지역포괄케어시스템과 경남 커뮤니티케어 추진방안, 경남발전 145호, p72.

68) 보건복지부(2019),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2019.11.).

- 향후 신종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의 세계화 현상에 대비하여 도민, 지방정부, 중앙정부, 나아가 국가 간 유기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문제에서 파급되는 건강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환경성 질환자 수는 '18년 기준 약 875만 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년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됨⁶⁹⁾
- 이와 같은 환경문제로 인한 미래 질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제 간 연구와 다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모든 정책에서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의 실현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의 건강생활이 보장되는 함께 누리는 보건 의료

- 보건 의료 분야의 지역 간 불평등, 계층 간 불평등 해소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두루 누리는 보건 의료 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도민의 건강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표임
- (성과지표1) '기대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 평균치 수준으로 향상(통계청, 2017)
 - 기대수명은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함
 - 경남 81.9세 → 87.0세('40년 전국 평균값 86.8세)
- (성과지표2) '건강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평균 수준으로 향상⁷⁰⁾
 -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함(현재 공식화된 통계치 없음)
 - 경남 64.3세 → '40년 전국 평균값 수준

2) 추진전략

● 보건 의료 부문 핵심지표

〈표 4-5-29〉

보건 의료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기대수명	81.9세	85세	87세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16.6년	14.6년	12.6년

● 건강형평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계층 간 불평등 해소

69)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70)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 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 강화

-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기반구축
-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취약지 사망률 감소

4. 추진시책

1) 건강형평성 제고

(1)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간 불평등 해소

● 서부경남 공공병원 확충

- 진주, 사천, 남해, 하동 등 서부경남지역의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거점 공공병원 설립 추진
-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선7기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된 정책임
- 서부경남의 인구학적 특성과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 지역 간 건강 수준 격차 등을 고려할 때 거점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함
- 공공병원의 주요 기능은 지역 간 보건의료 이용의 격차 해소,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적 지원, 민간에서 꺼리는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적정가격의 적정진료 선도, 지역 보건기관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 대학병원과 연계사업 등으로 요약됨⁷¹⁾

●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 집중 재활 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을 위한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및 설립 추진
- 권역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며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으로 경남권(부산, 울산, 경남)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창원경상대병원에 건립할 계획임
- 경남지역은 장애아동 재활 의료 수요대비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지역에서 치료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필요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주요 기능은 경남권 장애아동 재활 의료의 컨트롤타워 기능,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교육 및 돌봄 등 통합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으로 요약됨⁷²⁾

71) 이언상 외(2018), 서부경남권 보건의료 현황과 주민·전문가 인식에 관한 연구: 거점 종합병원 확충 타당성, 경남연구원.

72) 이언상 외(2019),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강화

- 보건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도서 및 농어촌지역의 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 보건기관의 진료 기능 강화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을 중심으로 ICT를 활용한 원격협진시스템을 구축함(의료법 개정 상황에 따라 의사-환자 원격의료 추진)
 - 노후화된 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 의료장비 지원, 의료인력 지원을 추진함
 - 노인성 질환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검진 버스의 대상 지역, 검진과목, 검진 인원을 확대하여 운영함
-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의 민간의료기관 운영 지원 확대
 - 경남의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은 분만 의료취약지이며,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임⁷³⁾
 -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의료시설 및 장비비 지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119와 연계한 병원이송 서비스 등의 지원이 필요함
-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문가, 민간의료기관, 도민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함
 - 민관협의체는 경남의 공공보건의료 관련 현황을 공유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도정을 지원함
 - 협의체 위원은 도의회,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센터, 의료단체, 학계, 시민단체, 시군 보건소, 도민(공모) 등으로 구성됨
 - 형식적인 협의체 운영이 되지 않도록 복지보건국장이 주재하고 분기별 회의를 개최함

(2)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계층 간 불평등 해소

● 의료취약계층 지원사업 확대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 활성화와 서부경남 추가 건립을 통한 장애인 의료접근성 향상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경남지역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현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서부경남권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추가 건립이 필요함
-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18년 기준 경남지역 외국인주민의 수는 124천 명에 이르며 이 중 외국인노동자는 44천

73)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2018), 2018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명입⁷⁴⁾. 외국인주민은 저출생·고령화시대, 우리 사회의 핵심 인재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임

- 건강보험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의 진료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발굴 및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365안심병동, 301네트워크지원사업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함
- 단순 의료비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퇴원계획을 포함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여 커뮤니티케어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 보건의료의 예방적 기능 강화

(1) 건강환경 조성을 통한 건강생활실천 강화

● 심뇌혈관질환 관리 강화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지원단 기능 강화
- '18년 기준 경남의 심장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1위이며 뇌혈관질환은 전국 4위로 매우 높은 상황임
-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등록시스템을 도입하고 ICT를 활용하여 수시 건강 체크 및 교육을 함
-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단의 전문 인력을 총원하여 심뇌혈관질환 연구기능과 보건소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한 소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취약인가가 집중된 도심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및 운영 활성화가 중요함
-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읍면동 건강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주민을 조직화하고 그 활동을 활성화함
-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비만, 흡연, 음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경남지역 청소년의 비만율은 '12년 5.7%에서 '19년 11.0%로 급증함⁷⁵⁾. 또한 청소년의 금연 시도율은 낮고 현재 음주율은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지역의료기관 및 전문가와 연계하여 아동·청소년기부터 철저한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함(의무적 시행을 위한 조례제정 등)

74)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KOSIS 접속일 2020.4.6).

75) 보건복지부, 청소년건강행태조사(KOSIS 접속일 2020.4.13).

(2)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구축

●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 도내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확충

- 현재 도내 감염병 전문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경남지역 5개 진료권별 지역책임의료기관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업무를 명문화하고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함

●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 분야별 세분된 보건의료지원조직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 현재 경남에 있는 보건의료지원조직으로는 '19년에 발족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비롯하여 경남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지역암센터, 금연지원센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이 있음
- 감염병 발생 및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치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저질환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데, 현재의 파편화되고 분절화된 지원체계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의 발생과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사업 효과성 저해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

3)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1)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의 융합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기반구축

● 권역별 자체 완결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읍면동(건강위원회, 건강생활지원센터) - 시군(보건소, 병·의원) - 지역진료권(종합병원) - 권역진료권(대학병원) 간 종·횡적 네트워크 구축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는 동부경남, 중부경남, 서부경남 권역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내에서 자체 완결적인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연계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임
- 종단적 통합 의료벨트에 분야를 초월한 횡단적인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커뮤니티케어 정책의 연계성 강화

• 경남지역의 보건·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통합 의료벨트와 복지·요양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남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의 통합적 추진

- 경남지역보건의료계획과 경남지역사회보장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공동모니터링 및 공동연수 등을 실시함
- 읍면동 단위 건강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합운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종합적인 치매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함
- 지역사회 중심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함

(2)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통한 의료취약지 사망률 감소

● 권역외상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

- 외상전용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을 갖추어 권역외상센터를 설치·지정을 통해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외상전용 치료기관으로 현재 경상대학교병원 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음(중환자병상 20개, 수술실, 소생실, 외상병실 20병상 등)
- 경남지역 권역외상센터 설치 및 지정을 통해 외상환자의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닥터헬기 도입 및 운영

- 권역외상센터 지정과 함께 응급환자 치료 및 이송을 위한 닥터헬기 도입 및 운영
- 닥터헬기는 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거점 의료기관에 배치하여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지원함⁷⁶⁾
- 경남은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매우 높고 14개 시·군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의료 자원의 지역적 불균형, 넓은 면적, 도서지역 등을 고려할 때 닥터헬기가 배치가 필요함
- ※ 현재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경기도에 닥터헬기가 배치되어 있음

● 응급의료기능 강화

-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 시군이 지정하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 인건비, 의료장비 등을 지원함
- 보건소 등 지역 보건기관이 진료 및 응급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 전환
- 인구감소 등의 이유로 민간의료기관을 통한 응급의료 기능 수행에 한계가 있는 지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긴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함
- 지역 보건기관에 우수한 의료인력 유치를 위한 임금 등 인센티브를 강화함

76) 보건복지부,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보도자료 2018.5.3.)

제6절
사회복지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 경남의 사회복지예산 규모는 전국 4순위, 예산 비율은 7순위

- 사회서비스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경남의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남의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10년 23.5%, '14년 28.4%, '18년 30.3%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⁷⁷⁾
- '19년 기준 경남의 사회복지예산은 2조 8,216억 원으로 서울, 경기,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지만, 전체예산 중 비중은 37.5%로 전국 7순위에 그침

(단위 : 백만 원, %)

〈표 4-5-30〉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구분	예산총액	사회복지예산		
		예산액	비율	순위
서울	35,741,608	11,960,365	33.46	12
경기	22,097,444	8,191,713	38.83	4
인천	7,177,427	2,773,552	38.64	5
세종	1,155,000	321,960	27.88	16
충남	5,740,000	1,880,307	32.76	13
충북	4,047,912	1,486,252	36.72	9
대전	3,845,524	1,546,858	40.22	1
강원	4,786,400	1,613,224	33.70	11
경북	7,579,600	2,676,175	35.31	10
대구	6,243,300	2,379,169	38.11	6
울산	3,600,333	1,015,538	28.21	15
부산	11,666,119	4,645,190	39.82	2
경남	7,516,354	2,821,607	37.54	7
전북	5,629,041	2,104,321	37.38	8
전남	6,557,076	2,126,239	32.43	14
광주	4,139,292	1,613,114	38.97	3
제주	4,493,557	1,013,301	22.55	17

주 : 2019년 일반회계 예산 기준 사회복지예산(기능별세출총괄표 상 사회복지로 분류된 예산).
 자료 : 각 시·도별 기능별세출총괄표,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및 지방재정공시.

2)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 '19년 기준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1.04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⁷⁸⁾
-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0.918명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12년 1.50명 정점을 찍고 매년 급격하게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음
- '19년 경남의 출생아 수는 19,250명으로 '18년 대비 9.3%(1,974명) 감소했으며, 이는 도부에서 4번째로 큰 감소폭임⁷⁹⁾

77)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KOSIS 접속일 2020.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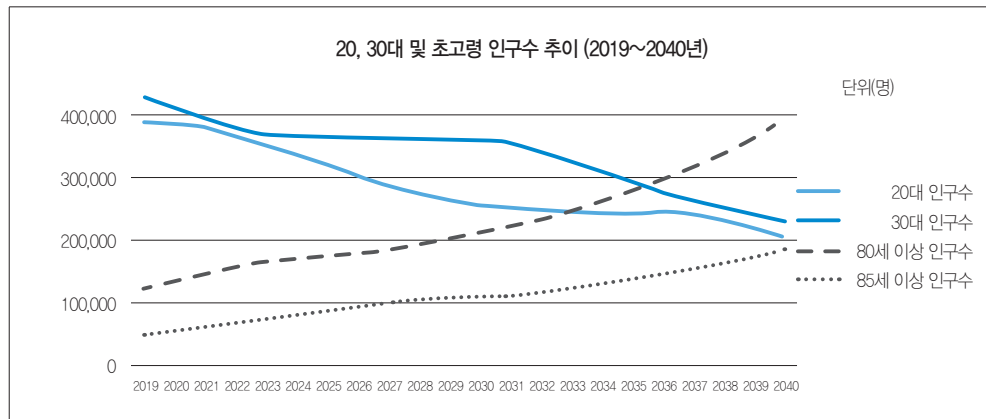
78) 통계청(2019), 2018년 출생 통계(확정)보도자료 2019.8.28.).

7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출생아 수 및 조출생률(접속일 2020.09.16.),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Cd=DT_2AD0109R#

- 각 지자체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 보육 및 양육서비스 확대, 청년유입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8월 기준 경남의 고령인구 비율은 17.1%로 전국의 16.1%보다 높음⁸⁰⁾
- 사천시와 밀양시 그리고 8개 군 지역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⁸¹⁾ 합천군, 남해군, 의령군, 산청군의 경우 '3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측됨⁸²⁾
-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노인가구 중 노인 독거가구와 노인 부부가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라 돌봄서비스 이용의 보편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라 사회복지예산 또한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져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경남은 '16년부터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졌으며 '24년 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향후 경남은 20, 30대 인구 수는 감소하고 80세 이상 인구 수는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정책 추진이 요구됨

〈그림 4-5-7〉

경남 20, 30대 및 초고령인구 수 추이



자료 : 서울대인구학연구소(2019), 경상남도 미래 인구맵 설계 용역.

● 취약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 인구고령화, 가족 기능의 변화와 함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돌봄을 비롯하여 고독사, 자살, 학대, 다문화 등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음
- 특히 상대적 노인빈곤율은 '18년 기준 58.5%에 이르며 노인학대 경험률은 '17년 기준 9.2%로 매년 증가추세임⁸³⁾
- '19년 기준 경남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21,275명(일반수급자 115,599명, 시설수급자 5,676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80) 통계청, 지역통계총괄과.

81) '20.8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경상남도 시군은 '사천시(21.8%), 밀양시(28.1%), 의령군(36.7%), 함안군(24.6%), 창녕군(30.6%), 고성군(30.9%), 남해군(37.7%), 하동군(34.0%), 산청군(36.3%), 함양군(33.4%), 거창군(27.6%), 합천군(39.2%)'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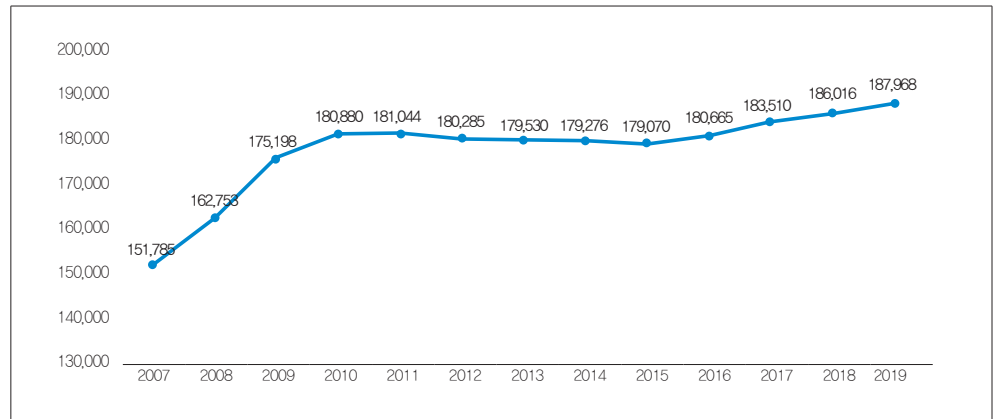
82) 경상남도(2017),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년).

83)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 그림으로 보는 사회보장 2019.

- 연도별 수급자 수를 보면 '14년 86,996명, '16년 104,213명, '18년 112,183명, '19년 121,275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⁸⁴⁾
- '20.4월 기준 경남의 등록장애인은 187,968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⁸⁵⁾
- 시군별 장애인 수를 보면 창원시가 49,480명(26.6%)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이어서 김해시 24,040명(12.9%), 진주시 17,853명(9.6%), 양산시 15,726명(8.5%) 등의 순임
- '20.8월 기준 경남의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27,925명, 장애수당 수급자는 25,858명, 장애인의료비 수급자는 5,735명으로 증가추세임⁸⁶⁾

〈그림 4-5-8〉

경남 등록장애인 추이



단위: 명

- '17년 기준 경남의 외국인주민은 116,37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07년 대비 2.9배가 증가함⁸⁷⁾
- 외국인주민 중 외국인근로자가 38.6%, 결혼이민자가 8.4%, 유학생이 2.2% 등의 순으로 많고 주로 김해시, 창원시, 거제시 등 도심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경남의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수급자 수는 '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18년 기준 44,566명의 장기요양기관 급여이용수급자 중 재가급여는 34,831명, 시설급여는 11,485명으로 나타남⁸⁸⁾
- 전체적으로 '13년 26,490명이었던 수급자는 '18년 44,566명으로 68.24% 증가함

8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KOSIS 접속일 2020.9.16).

85)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KOSIS 접속일 2020.9.16).

86) 복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접속일 202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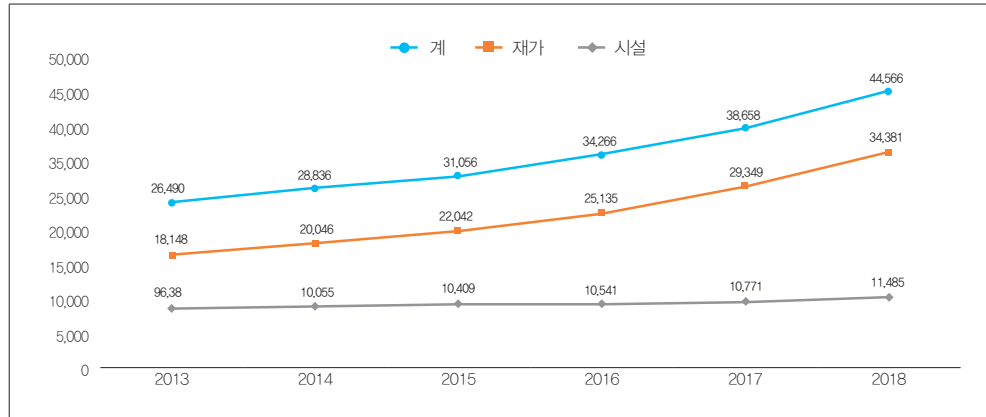
87) 경상남도(2019), 제7기 경상남도 지역보건의료계획.

88)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KOSIS 접속일 2020.09.16), 급여이용수급자 계는 재가 및 시설 급여 간 중복 건수를 제외한 값임.

단위: 명

〈그림 4-5-9〉

경남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급여실적
(급여이용수급자)



3) 지역·분야 간 복지 격차

● 경남 사회복지시설 수 전국 최저수준

- '17년 기준 경남의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는 9.94개로 전국평균 14.40개보다 적으며 인근 경북 18.54개, 전남 23.31개보다 적음

(단위: 개소)

〈표 4-5-31〉

인구 10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2.24	2.52	3.21	4.05	4.81	6.54	8.37	10.74
경남	2.77	2.99	3.51	4.25	5.16	6.14	7.32	8.97
경북	3.16	3.64	4.69	5.84	5.82	8.12	10.41	13.05
전남	3.57	4.13	5.90	5.87	6.22	10.73	12.75	16.89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국	11.01	11.6	12.42	13.07	13.56	14.15	14.40	
경남	9.28	7.32	9.69	9.88	9.75	9.78	9.94	
경북	13.71	14.82	15.60	16.59	17.80	18.07	18.54	
전남	18.02	18.54	20.66	22.09	22.94	23.37	23.31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김기식(2020) 재인용.

●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공동화 현상

- '19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11,573개소 중 노인 관련 시설이 전체의 67.3%(7,793개소)로 가장 많음(노인시설 중 약 7,380개소는 경로당)
 - 이어서 보육 관련 시설 25.8%(2,990개소), 아동 관련 시설 4.1%(320개소) 등의 순임
-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보육 관련 시설은 시 지역에 92.8%가 집중되어 있음
 - 이어서 여성·가족 관련 시설의 77.1%, 아동 관련 시설의 75.3%, 장애인 관련 시설의 71.0%가 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물론 사업에 따라서는 시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근 군 지역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 '19.6월 기준 경남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944개소 중 군 지역에 위치하는

제공기관은 95개소로 전체의 10.1% 수준에 그침⁸⁹⁾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남 전체 이용자 6,176명 중 군 지역 이용자는 1,088명으로 17.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군 지역의 경우 사회서비스 인프라 부족으로 아이를 낳기도 기르기도 힘든 지역이 되어 가고 있음. 이와 같은 지역 간 복지 격차는 개인의 복지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참고로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은 분만 의료취약지이며, 의령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표 4-5-32〉

시군별 사회복지시설

(단위 : 개소, %)

구분	계(비율)	노인	장애인	보육	아동	여성가족	다문화가족	노숙인
경남	11,573(100.0)	7,793	276	2,990	320	170	20	4
창원시	2,239(19.3)	1,070	77	953	90	45	3	1
진주시	920(7.9)	572	20	289	31	6	1	1
통영시	402(3.5)	261	13	107	15	5	1	0
사천시	508(4.4)	375	15	101	11	4	1	1
김해시	1,274(11.0)	573	21	612	40	27	1	0
밀양시	539(4.7)	442	13	58	23	2	1	0
거제시	646(5.6)	326	21	265	14	19	1	0
양산시	770(6.7)	324	16	389	17	23	1	0
시 소계 (비율)	7,298 (63.1)	11,412 (50.6)	456 (71.0)	5,375 (92.8)	544 (75.3)	278 (77.1)	29 (50.0)	7 (75.0)
의령군	325(2.8)	301	7	10	4	1	1	1
함안군	442(3.8)	359	16	57	7	2	1	0
창녕군	462(4.0)	418	6	25	8	4	1	0
고성군	395(3.4)	338	8	23	9	16	1	0
남해군	297(2.6)	264	9	13	8	2	1	0
하동군	418(3.6)	387	7	16	6	1	1	0
산청군	403(3.5)	367	7	12	5	11	1	0
함양군	452(3.9)	424	7	15	5	0	1	0
거창군	518(4.5)	459	8	33	16	1	1	0
합천군	563(4.9)	533	5	12	11	1	1	0
군 소계 (비율)	4,275 (36.9)	14,729 (49.4)	531 (29.0)	5,579 (7.2)	612 (24.7)	316 (22.9)	38 (50.0)	8 (25.0)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년)를 바탕으로 작성함.

● 군 지역, 보육·여성 예산은 적고 노인 관련 예산은 많음

-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등의 순으로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예산 중 분야별 예산 규모를 보면 노인·청소년이 36.9%로 가장 많고 이어서 보육·여성 27.2%, 취약계층 12.5%, 기초생활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89) 경상남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내부자료.

(단위 : 백만원)

〈표 4-5-33〉

시군별 사회복지예산

구분	총액	기초생활	취약계층	보육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사회복지 일반	보건· 의료
경남 (비율)	4,071,939 (100.0)	498,760 (12.2)	509,669 (12.5)	1,105,866 (27.2)	1,501,838 (36.9)	92,317 (2.3)	141,920 (3.5)	221,569 (5.4)
창원시 (비율)	984,337 (100.0)	136,741 (13.9)	117,113 (11.9)	336,320 (34.2)	312,125 (31.7)	25,237 (2.6)	19,320 (2.0)	37,481 (3.8)
진주시 (비율)	400,244 (100.0)	53,951 (13.5)	56,733 (14.2)	129,117 (32.3)	133,148 (33.3)	8,352 (2.1)	4,646 (1.2)	14,297 (3.6)
통영시 (비율)	172,567 (100.0)	25,280 (14.6)	16,684 (9.7)	39,815 (23.1)	77,452 (44.9)	0 (0.0)	4,096 (2.4)	9,240 (5.4)
사천시 (비율)	183,096 (100.0)	44,077 (24.1)	17,053 (9.3)	37,786 (20.6)	65,161 (35.6)	2,789 (1.5)	4,705 (2.6)	11,525 (6.3)
김해시 (비율)	513,108 (100.0)	64,907 (12.6)	54,268 (10.6)	208,778 (40.7)	135,678 (26.4)	6,313 (1.2)	20,530 (4.0)	22,634 (4.4)
밀양시 (비율)	187,977 (100.0)	3,842 (2.0)	20,501 (10.9)	33,764 (18.0)	74,246 (39.5)	3,204 (1.7)	37,070 (19.7)	15,350 (8.2)
거제시 (비율)	240,781 (100.0)	18,356 (7.6)	55,672 (23.1)	80,116 (33.3)	62,811 (26.1)	9,089 (3.8)	2,708 (1.1)	12,029 (5.0)
양산시 (비율)	363,824 (100.0)	42,588 (11.7)	40,579 (11.2)	134,109 (36.9)	113,002 (31.1)	9,437 (2.6)	10,082 (2.8)	14,027 (3.9)
의령군 (비율)	69,670 (100.0)	8,180 (11.7)	12,150 (17.4)	5,139 (7.4)	34,778 (49.9)	0 (0.0)	2,878 (4.1)	6,545 (9.4)
함안군 (비율)	116,958 (100.0)	13,801 (11.8)	11,322 (9.7)	16,796 (14.4)	61,155 (52.3)	2,302 (2.0)	3,854 (3.3)	7,728 (6.6)
창녕군 (비율)	128,409 (100.0)	14,930 (11.6)	9,969 (7.8)	12,786 (10.0)	75,068 (58.5)	4,311 (3.4)	2,562 (2.0)	8,783 (6.8)
고성군 (비율)	108,233 (100.0)	12,158 (11.2)	15,015 (13.9)	12,701 (11.7)	50,732 (46.9)	4,685 (4.3)	3,409 (3.1)	9,533 (8.8)
남해군 (비율)	95,844 (100.0)	821 (0.9)	9,033 (9.4)	11,257 (11.7)	54,393 (56.8)	1,966 (2.1)	11,807 (12.3)	6,567 (6.9)
하동군 (비율)	103,184 (100.0)	13,420 (13.0)	10,415 (10.1)	12,280 (11.9)	52,696 (51.1)	1,277 (1.2)	2,874 (2.8)	10,222 (9.9)
산청군 (비율)	88,505 (100.0)	8,073 (9.1)	11,122 (12.6)	9,957 (11.3)	42,745 (48.3)	3,395 (3.8)	4,074 (4.6)	9,139 (10.3)
함양군 (비율)	87,306 (100.0)	8,966 (10.3)	10,944 (12.5)	13,190 (15.1)	43,816 (50.2)	0 (0.0)	718 (0.8)	9,672 (11.1)
거창군 (비율)	119,923 (100.0)	14,147 (11.8)	32,289 (26.9)	1,667 (1.4)	57,062 (47.6)	3,139 (2.6)	3,970 (3.3)	7,649 (6.4)
합천군 (비율)	107,973 (100.0)	14,522 (13.4)	8,807 (8.2)	10,288 (9.5)	55,770 (51.7)	6,821 (6.3)	2,617 (2.4)	9,148 (8.5)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년)를 바탕으로 작성함.

- **군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예산 중 보육·여성 관련 예산 비중이 평균 10.4%로 경남 전체 평균 27.2%와 비교할 때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거창군이 1.4%로 가장 낮고 이어서 의령군 7.4%, 합천군 9.5%, 창녕군 10.0%, 산청군 11.3%, 남해군과 고성군이 각각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군 지역의 노인·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은 평균 51.3%로 경남 전체 평균 36.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녕군이 58.5%로 가장 높고 이어서 남해군 56.8%, 함안군 52.3%, 합천군 51.7%, 하동군 51.1%, 함양군 5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4) 전문분화된 사회복지시설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간 연계·협력의 필요성

- 경남지역에는 54개의 시설유형에 따라 755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있으며 시설마다 담당 부서가 상이함
- 사회서비스 이용의 보편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설 간 연계·협력과 유사 기능을 가진 시설의 통폐합이 요구됨
- 아래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

〈표 4-5-3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구분	세부종류	시설현황	
		개소 수	종사자 수
	합계	755	4,504
	소계	54	502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17	175
	노인복지관(노인여가복지시설)	21	239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1	4
	노인보호전문기관	2	18
	노인일자리지원기관(시니어클럽)	13	66
	소계	395	1,44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3	11
	일시지원복지시설	1	7
	모자가족복지시설	2	9
가정폭력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	33
	가정폭력상담소	14	55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	1	5
	여성긴급전화1366경남센터	1	17
성폭력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2	11
	성폭력상담소	15	60
성매매	성매매피해자 지원	6	30
	성매매피해상담소	2	10

〈표 4-5-3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계속)

(단위 : 개, 명)

구분	세부종류	시설현황	
		개소 수	종사자 수
아동복지시설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1	26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1	17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1	12
	경상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	1	13
	지역아동센터	266	574
	아동양육시설	25	388
	아동보호치료시설	1	8
	공동생활가정(그룹홈)	26	75
	학대피해아동쉼터	3	15
청소년복지시설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	1	8
	경상남도중장기청소년쉼터	2	12
	단기청소년쉼터	2	12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	25
	소계	55	526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30	331
경남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1	8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20	114
노숙인시설	노숙인재활시설	3	55
	노숙인요양시설	1	18
	소계	242	1,847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16	495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6	487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1	19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1	6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50	73
	경상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1	29
	(지역사회재활)장애인주간보호시설	29	111
	(지역사회재활)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	20	67
	(지역사회재활)발달장애인주간보호시설	2	8
	(지역사회재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20	55
	(지역사회재활)수화통역센터	20	72
	(지역사회재활)점자도서관	1	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	23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	122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	7
		소계	9
결핵한센시설	한센생활시설	1	15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	4	142
정신재활시설	종합시설	2	19
	재활훈련시설	2	8

주 : 일부 시설은 제외되어 있음.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2019.10월)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커뮤니티케어의 추진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사회서비스

- 관료제에 의한 칸막이 행정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지자체 및 소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직 간 팀워크를 통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강조될 것임
- 공급자 중심의 파편화된 서비스로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도민의 사회복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분야 간 네트워크가 당면과제로 등장할 것임
- 돌봄의 지역화 시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집행자의 역할에 벗어나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의 핵심주체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사회서비스 및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역량 강화, 지역사회 복지문화 조성, 정책연구 기능 강화, 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과제로 부상할 것임⁹⁰⁾
- 향후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복지, 보건, 의료, 요양, 고용 등의 서비스는 소지역 단위의 분야 간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적 전달체계로 전환될 것임
- 병원 및 시설중심의 보호 체계로는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및 일차의료 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전달체계의 전환을 알리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음

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

- 현재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나타나는 지역·분야 간 격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의 민간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제공기관 간 과다경쟁과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 도덕적 해이,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다양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
- 향후 ‘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과 같이 시장화·민영화된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임

3) 삶의 질 중심의 인구정책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구정책으로의 전환

90) 이안성(2018), 지방분권시대의 경남형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경남발전 143호, p56.

-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의 효과성이 의문시되는 가운데 개인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구정책으로 전환될 것임
- 정부는 '06년부터 '18년까지 13년간 152.9조 원의 저출생 대응 예산을 지출했으나, 합계출산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18년에는 0.98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함
- 여성의 사회진출 등 가족 기능이 변화하는 가운데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정책목표로 사료됨
- 인구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비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삶의 질 중심의 정책추진이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인구정책임

4) 빅데이터 및 공동체 활용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빅데이터, AI에 기반한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개입

-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되고 고위험군 발굴뿐만 아니라 예방적 개입까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데이터3법 개정('20.1.9) 등 데이터 개방·유통이 확대되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확대될 것임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정교화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동반하게 될 것임.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복지의 특성상 이를 둘러싼 논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됨

●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동의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복지 정책이 강화될 것임
- 이미 정부는 건강보험료, 단수 및 단전 정보, 아파트 관리비 연체 정보 등 다양한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정보시스템이 더욱 정교화 된다고 해도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복지 활동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임
- 향후 지역공동체 중심의 비공식적인 서포터와 전문직에 의한 공식적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남복지”

- 경남도민의 전체성, 권리성, 능동성, 주체성을 핵심이념으로 하는 통합복지, 균형복지, 지역복지의 추진을 통해 경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사람 중심의 경남복지 실현을 목표로 설정함
- (성과지표1)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 70점 이상으로 향상(15% 향상)

-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측정하기 위해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조사(4년 주기)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항목을 활용함
- 경남 61점('18년 조사 결과) → 70점(15% 향상)
 - (성과지표2) '건강수명' 전국 최하위에서 전국평균 수준으로 향상⁹¹⁾
- 건강수명은 평균수명 중 건강하게 삶을 유지한 기간을 의미함(현재 공식화된 통계치 없음)
- 경남 64.3세 → '40년 전국 평균값 수준

2) 추진전략

● 사회복지 부문 핵심지표

〈표 4-5-35〉

사회복지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삶 만족도(지역사회보장계획)	61점	70점	80점
인구 십만 명당 사회복지시설 수	9.9개	12개	14.4개
인구 십만 명당 자살률	28명	25명	22명

(1) 통합복지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복지와 보건 ·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2) 균형복지

● 공공성 강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추진

-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지원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간 자원 재조정

(3) 지역복지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
-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지역자원 발굴, 주민참여로 지역의 복지력 강화

91) 박진욱(2018), 지역별 건강불평등 현황(한국건강형평성학회 토론회 자료집).

4. 추진시책

1) 통합복지 : 수요자 중심 통합서비스

● 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통합적 추진

– 분야 간 공동연수 및 통합교육, 정보교류,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연계성 강화

- 사회복지시설과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역 보건기관 간 연계·협력체계 강화

– 사회복지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건강위원회 등 분야별 핵심조직의 통합 운영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통합서비스 제공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서는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 재활 치료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재활 서비스 연계, 학교와 사회 복귀 지원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보건복지부, 2018)

– 경남지역은 장애어린이 재활 의료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재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임. 특히 낮은 입원 재활 치료율을 고려할 때 타지역으로 이동하여 치료받는 경향이 강함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운영에 있어 진료과별 협진체계를 통한 양질의 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및 기존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장애어린이 및 가족 대상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⁹²⁾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 사회복지 분야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정기적 지역사회 욕구조사와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지역별 수요-공급 격차분석 및 정책개발

2) 균형복지 : 사회보장 균형발전

●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지원

- 취약계층의 비율은 높으나 사회보장 인프라가 부족하여 사회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사회보장 취약지로 선정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활용하여 시군의 사회보장 수준 평가

– 수요-공급 격차분석을 통한 사회보장 취약지 선정 및 관리

92) 이연상 외(2019),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지역 사회복지예산 및 서비스 이용 지원
- 사회보장 취약지역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공공 부문 사회복지시설 직영 비율 확대
 - 전담인력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을 강화하여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민간 제공기관의 경우 소규모로 영세성이 강하여 열악한 종사자 처우, 낮은 사회서비스 품질, 민간기피 서비스 대상자 등의 문제가 발생
 - 경남사회서비스원, 기초지자체 단위 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처우개선
-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 제공인력의 처우개선 및 권익 보호
 - 직능단체별 임금체계 또는 단일임금체계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검토⁹³⁾
 -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참여 독려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

3) 지역복지 : 지역사회 기반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 중심 돌봄 시스템 구축

- 시설·병원 중심의 돌봄에서 탈피하여 민관협력에 기반한 커뮤니티케어 시스템 구축
 - 시설 및 병원의 퇴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제공기관 연계·협력 체계 강화
 - 복지와 보건 의료 분야의 연계·협력을 통한 커뮤니티케어 추진
- 지역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강화, 생활밀착형 재가 서비스 확충
 - 자원봉사자, 검침원, 집배원 등과 협업하여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강화
 - 주민 조직화 및 주민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활동 창출
 - 돌봄로봇 도입으로 노인 일자리 확대, 은퇴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돌봄인력 부족 문제 해소
- 전문가에 의한 공식적 돌봄과 주민에 의한 비공식적 돌봄의 통합적 추진을 위한 읍면동 돌봄 계획 수립
 - 지역과제 도출 및 공유,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방안, 주민 활동 계획수립, 정책제안, 상위계획 수립에 반영 등
- ICT 기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돌봄 체계 구축
 -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시 스피커, IoT 센서, 화상 영상기기 등 스마트기기 보급을 확대하고 안부 확인, 복지정보 제공, 건강생활 모니터링, 상담, 치매 예방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 권역별 스마트돌봄센터 설치를 통한 비대면 돌봄 시스템 구축

93) 이연상 외(2019), 경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기초연구, 경남연구원.

●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실시·평가와 사회보장협의제도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지원단 구성
 - 상시 자문 및 정기교육을 통해 기초지자체의 사회보장 추진 역량 강화
 - 시군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 지자체의 사업 개발 및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자문체계 구축
 -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사회적경제조직과 공동체적 접근 방식을 활용한 시범사업 추진

제7절
인구정책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 인구

(1) 경남 인구 동태

● 경상남도 인구 추이

- 지난 10년간 경상남도의 인구는 약 7만 2천명이 증가하여 2019년 현재 336만 3천명임
- 시부의 인구는 같은 기간 약 10만명 증가했지만, 군부의 인구는 약 2만 8천명 감소하여 경남도 인구의 증가는 시부로 집중됨

<그림 4-5-10>

경남 인구 추이
(2010~2019)



(단위 : 천명)

● 경상남도 인구 동태

- 경남의 인구동태를 지난 2010년 이후 전국과 비교하여 볼 때, 대체로 사망과 혼인 관련 지표 값을 제외하고 전국 대비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8년을 기준으로 조사망률은 전국 3.6%보다 큰 6.3%였고,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1%로 전국 -2.6%보다 감소하였고, 이혼 건수는 3.0%로 전국 2.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평균 증감률로 비교할 때, 자연증가 관련 건수와 증가율의 감소율이 각각 -37.1%, -35.7%로 전국 -18.9%, -19.6%p 보다 감소폭이 컸음

〈표 4-5-36〉

인구동태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연평균 증감률	
출생 건수	전국	명	470,171	471,265	484,550	436,455	435,435	438,420	406,243	357,771	326,822	
		전년 대비	-	0.2	2.8	-9.9	-0.2	0.7	-7.3	-11.9	-8.7	-4.3
	경남	명	32,203	32,536	33,211	29,504	29,763	29,537	27,138	23,849	21,224	
		전년 대비	-	1.0	2.1	-11.2	0.9	-0.8	-8.1	-12.1	-11.0	-4.9
합계 출산 율	전국	%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1,052	0,977	
		전년 대비	-	1.5	4.3	-8.5	1.5	2.8	-5.4	-10.2	-7.1	-2.6
	경남	%	1,413	1,446	1,503	1,367	1,409	1,437	1,358	1,227	1,122	
		전년 대비	-	2.3	3.9	-9.0	3.1	2.0	-5.5	-9.6	-8.6	-2.7
조출 생률	전국	천명당	9.4	9.4	9.6	8.6	8.6	8.6	7.9	7.0	6.4	
		전년 대비	-	0.0	2.1	-10.4	0.0	0.0	-8.1	-11.4	-8.6	-4.6
	경남	천명당	9.9	9.9	10.1	8.9	9.0	8.9	8.1	7.1	6.3	
		전년 대비	-	0.0	2.0	-11.9	1.1	-1.1	-9.0	-12.3	-11.3	-5.3
사망 건수	전국	명	255,405	257,396	267,221	266,257	267,692	275,895	280,827	285,534	298,820	
		전년 대비	-	0.8	3.8	-0.4	0.5	3.1	1.8	1.7	4.7	2.0
	경남	명	19,502	19,593	20,419	19,994	20,239	21,313	21,193	21,634	22,719	
		전년 대비	-	0.5	4.2	-2.1	1.2	5.3	-0.6	2.1	5.0	2.0
조사 망률	전국	천명당	5.1	5.1	5.3	5.3	5.3	5.4	5.5	5.6	5.8	
		전년 대비	-	0.0	3.9	0.0	0.0	1.9	1.9	1.8	3.6	1.6
	경남	천명당	6.0	6.0	6.2	6.1	6.1	6.4	6.3	6.4	6.8	
		전년 대비	-	0.0	3.3	-1.6	0.0	4.9	-1.6	1.6	6.3	1.6
자연 증가 건수	전국	명	214,766	213,869	217,329	170,198	167,743	162,525	125,416	72,237	28,002	
		전년 대비	-	-0.4	1.6	-21.7	-1.4	-3.1	-22.8	-42.4	-61.2	-18.9
	경남	명	12,701	12,943	12,792	9,510	9,524	8,224	5,945	2,215	-1,495	
		전년 대비	-	1.9	-1.2	-25.7	0.1	-13.6	-27.7	-62.7	-167.5	-37.1
자연 증가 율	전국	천명당	4.3	4.3	4.3	3.4	3.3	3.2	2.5	1.4	0.5	
		전년 대비	-	0.0	0.0	-20.9	-2.9	-3.0	-21.9	-44.0	-64.3	-19.6
	경남	천명당	3.9	4.0	3.9	2.9	2.9	2.5	1.8	0.7	-0.4	
		전년 대비	-	2.6	-2.5	-25.6	0.0	-13.8	-28.0	-61.1	-157.1	-35.7
혼인 건수	전국	건수	326,104	329,087	327,073	322,807	305,507	302,828	281,635	264,455	257,622	
		전년 대비	-	0.9	-0.6	-1.3	-5.4	-0.9	-7.0	-6.1	-2.6	-2.9
	경남	건수	21,170	20,769	20,140	20,291	19,056	18,671	17,580	15,978	14,996	
		전년 대비	-	-1.9	-3.0	0.7	-6.1	-2.0	-5.8	-9.1	-6.1	-4.2
조혼 인율	전국	천명당	6.5	6.6	6.5	6.4	6.0	5.9	5.5	5.2	5.0	
		전년 대비	-	1.5	-1.5	-1.5	-6.3	-1.7	-6.8	-5.5	-3.8	-3.2
	경남	천명당	6.5	6.3	6.1	6.1	5.7	5.6	5.3	4.8	4.5	
		전년 대비	-	-3.1	-3.2	0.0	-6.6	-1.8	-5.4	-9.4	-6.3	-4.5
이혼 건수	전국	건수	116,858	114,284	114,316	115,292	115,510	109,153	107,328	106,032	108,684	
		전년 대비	-	-2.2	0.0	0.9	0.2	-5.5	-1.7	-1.2	2.5	-0.9
	경남	건수	7,503	7,207	7,427	7,547	7,602	7,368	7,486	7,355	7,575	
		전년 대비	-	-3.9	3.1	1.6	0.7	-3.1	1.6	-1.7	3.0	0.2
조이 혼율	전국	천명당	2.3	2.3	2.3	2.3	2.3	2.1	2.1	2.1	2.1	
		전년 대비	-	0.0	0.0	0.0	0.0	-8.7	0.0	0.0	0.0	-1.1
	경남	천명당	2.3	2.2	2.3	2.3	2.3	2.2	2.2	2.2	2.3	
		전년 대비	-	-4.3	4.5	0.0	0.0	-4.3	0.0	0.0	4.5	0.1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각연도).

(2) 경남 순이동

- 지난 10년간 경남의 순이동을 보면 2012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음. 반면, 20대의 경우 지난 10년간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대의 경우 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37〉
경남 순이동
(전체 및 20~30대)

(단위 : 명)

구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성별	
							남자	여자
전체	13,029	3,246	-2,772	6,075	1,772	-5,810	-3,152	-2,658
20대	-77	-4,499	-5,826	-5,177	-7,290	-10,977	-5,511	-5,466
30대	5,677	3,252	1,706	3,533	1,933	395	-347	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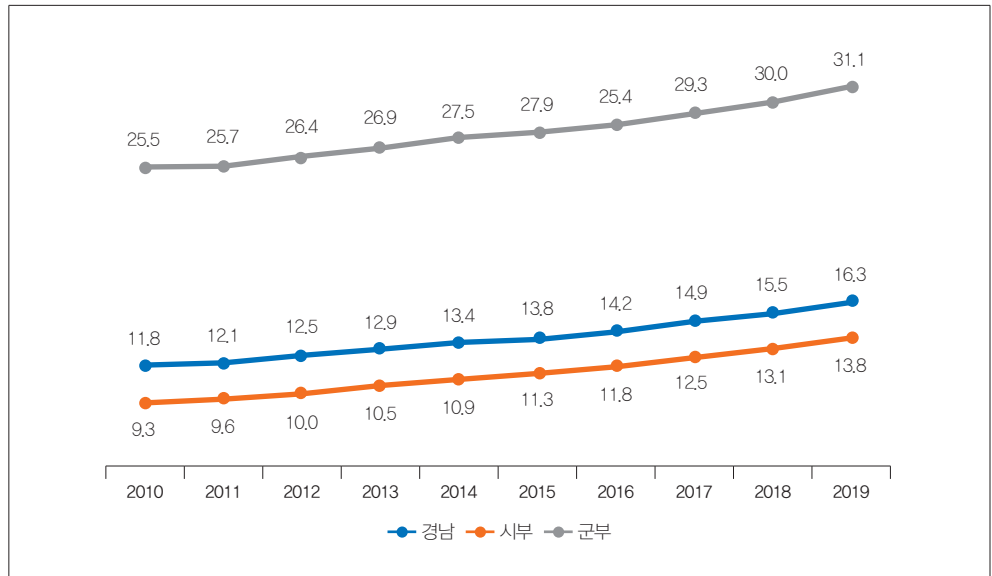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각연도).

2) 고령화

● 고령인구

- 경남의 고령인구⁹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0년 11.8%에서 2019년 16.3%에 이룸
 - 시부 고령 비중이 2019년 13.8%임
 - 반면, 군부는 31.1%로 초고령사회를 나타내는 수치인 2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남
- 고령인구의 성비는 여성 비율이 높고, 특히 군 지역의 여성 비율은 60.7%에 이룸

〈그림 4-5-11〉
경남 65세 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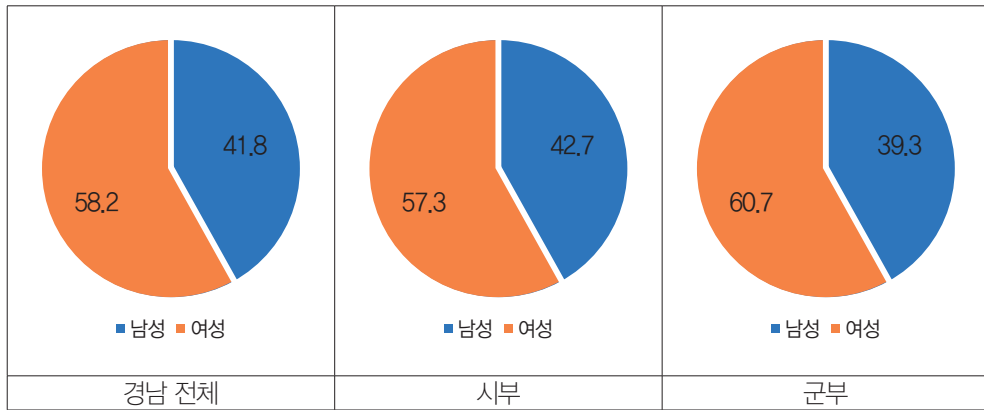


주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100.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각연도).

94) 65세 이상 인구.

<그림 4-5-12>

경남 성별 고령인구 (2019)



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9.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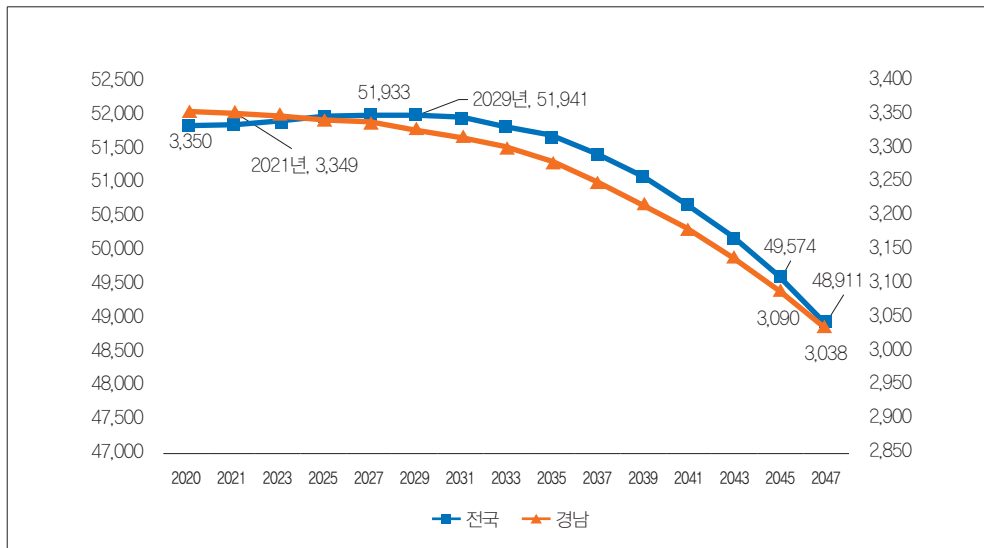
1) 인구추계

● 인구추계

- 경남의 인구 감소는 전국 추계보다 일찍 시작될 것으로 추계됨
 - 전국 인구는 2029년 51,941천명을 시작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으로 줄어 2045년도에 5천만명이 깨져 49,574천명, 2047년 48,911천명이 될 것으로 예상함
 - 경남 인구는 2020년 3,350천명이었던 것이 2021년도 3,349천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나타남. 경남의 300만명 선은 2045년부터 깨질 것으로 예측됨

<그림 4-5-13>

인구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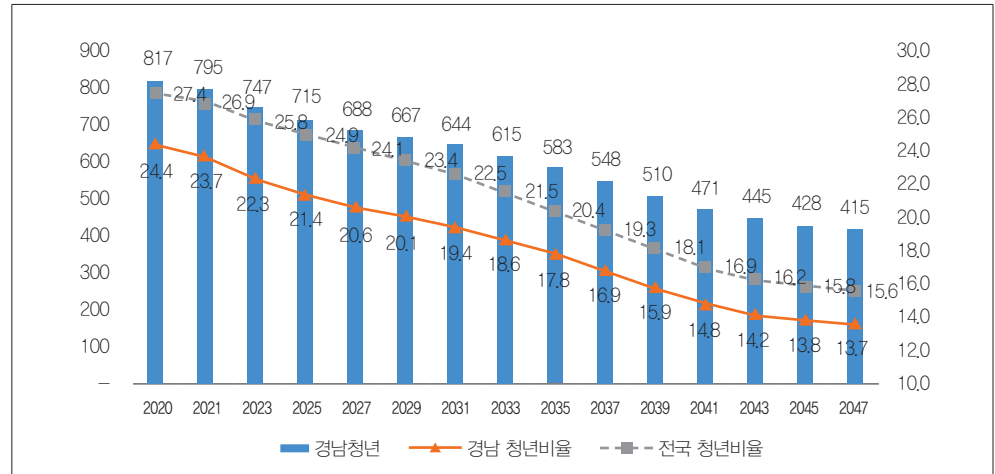
주1 :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면 자료임.
 주2 : 매년 7월 1일 시점 자료임.
 주3 :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주4 : 197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주5 :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로 이를 활용함.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 청년 인구

- 2047년 20~30대 인구 비중은 13.7%로 2020년 24.4%보다 10%p 이상 줄어듦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전국과 비교해서도 낮은 비율로 2020년 전국 20~30대 비율이 27.4%였으나, 경남 20~30대 비율은 24.4%였고, 2047년도에도 차이는 지속되어 전국 15.6%, 경남 13.7%일 것으로 추정됨

<그림 4-5-14>

청년 인구



주1 : 2019년 6월에 공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주2 : 매년 7월 1일 시집 자료임.
 주3 : 작성대상 인구는 국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인구임(외국인 포함).
 주4 : 1970~2017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8년 이후는 다음 인구추계 시 변경될 수 있음.
 주5 : 중위추계(기본추계)는 출생-사망-국제이동 중위가정과 국내이동 기본가정을 조합한 결과로 이를 활용할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9.

2) 인구감소

● 인구소멸지수⁹⁵⁾

- 도 및 시군의 인구소멸지수(2019. 12. 기준)에 따르면, 경남은 주의단계인 3단계임
- 경남 시군 중 3곳은 소멸위험 보통단계인 2단계, 3곳은 주의단계인 3단계, 8곳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4단계, 4곳은 소멸위험단계인 것으로 나타남
- 시 지역 중 김해, 거제, 양산은 소멸위험 보통인 2단계였고, 창원, 진주, 통영, 사천은 주의단계인 3단계였음. 사천과 밀양은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소멸위험 진입단계인 것으로 분석됨

95) 이상호(2019). 인구소멸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방소멸위험지수의 배경과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 ① 지역공동체의 세대 간 불균형과 미래 지속가능성 정도를 측정
 - 20~39세 여성 인구 : 지역 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자, 미래 구성의 토대를 이룸
 - 65세 이상 인구 : 지역 공동체의 현재 구성원이지만, 미래에는 자연 감소 확률 높음
 - 양자 간 비율이 0.5 미만일 경우, 인구 재생산 주기를 고려할 때 향후 사실상 해당 공동체의 인구 기반은 붕괴하고 사회경제적 기능을 상실한다는 의미
- ② 지방소멸위험지수는 단순지표로 정책 활용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 지역의 미래 인구 변화를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인구 추계에 의한 보다 엄밀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활용 지표로는 지역의 경제, 사회, 재정 등의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며 기계적인 적용에는 주의할 필요

- 군지역은 모두 소멸위험지역으로서 이 중, 함안, 창녕, 고성, 하동, 함양, 거창은 소멸위험 진입단계, 의령, 남해, 산청, 합천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남

〈표 4-5-38〉
경상남도 및
시군별
인구소멸지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경남			√		
창원시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의령군					√
함양군				√	
창녕군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시군지역 소멸위험 단계합(개)	0	3	3	8	4

주 : 인구소멸지수는 "이상호(2019), 인구소멸지수, 한국고용정보원"의 산식을 따르며(인구소멸지수=20~34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 단계별 해석은 다음과 같음.

구분	명칭	소멸위험지수
1단계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2단계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3단계	주의단계	0.5 ~ 1.0 미만
4단계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5단계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

- 각 시군의 읍면동의 인구소멸지수를 분석한 결과 도내 313개 읍면동 중 145개(46.3%)가 5단계인 소멸고위험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시부 읍면동의 인구소멸 단계는 3단계인 주의단계가 55개(29.3%)로 많았으나, 소멸고위험지역도 43개(22.9%)에 이르렀음
 - 군부 읍면동 125개 중 102개(81.6%)가 소멸고위험지역임

〈표 4-5-39〉

경남 읍면동의
인구소멸지수

(단위 : 개, %)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합계
창원시 (비율)	6 (10.3)	14 (24.1)	20 (34.5)	15 (25.9)	3 (5.2)	58 (100.0)
진주시 (비율)	2 (6.7)	3 (10.0)	11 (36.7)	5 (16.7)	9 (30.0)	30 (100.0)
통영시 (비율)	0 (0.0)	1 (6.7)	3 (20.0)	5 (33.3)	6 (40.0)	15 (100.0)
사천시 (비율)	0 (0.0)	1 (6.7)	3 (20.0)	5 (33.3)	6 (40.0)	15 (100.0)
김해시 (비율)	4 (21.1)	4 (21.1)	6 (31.6)	3 (15.8)	2 (10.5)	19 (100.0)
밀양시 (비율)	0 (0.0)	0 (0.0)	3 (17.6)	3 (17.6)	11 (64.7)	17 (100.0)
거제시 (비율)	6 (28.6)	1 (4.8)	4 (19.0)	5 (23.8)	5 (23.8)	21 (100.0)
양산시 (비율)	1 (7.7)	3 (23.1)	5 (38.5)	3 (23.1)	1 (7.7)	13 (100.0)
시부 (비율)	19 (10.1)	27 (14.4)	55 (29.3)	44 (23.4)	43 (22.9)	188 (100.0)
의령군 (비율)	0 (0.0)	0 (0.0)	0 (0.0)	1 (7.7)	12 (92.3)	13 (100.0)
함안군 (비율)	0 (0.0)	0 (0.0)	2 (20.0)	3 (30.0)	5 (50.0)	10 (100.0)
창녕군 (비율)	0 (0.0)	0 (0.0)	0 (0.0)	5 (35.7)	9 (64.3)	14 (100.0)
고성군 (비율)	0 (0.0)	0 (0.0)	0 (0.0)	2 (14.3)	12 (85.7)	14 (100.0)
남해군 (비율)	0 (0.0)	0 (0.0)	0 (0.0)	1 (10.0)	9 (90.0)	10 (100.0)
하동군 (비율)	0 (0.0)	0 (0.0)	0 (0.0)	3 (23.1)	10 (76.9)	13 (100.0)
산청군 (비율)	0 (0.0)	0 (0.0)	0 (0.0)	3 (27.3)	8 (72.7)	11 (100.0)
함양군 (비율)	0 (0.0)	0 (0.0)	0 (0.0)	1 (9.1)	10 (90.9)	11 (100.0)
거창군 (비율)	0 (0.0)	0 (0.0)	1 (8.3)	0 (0.0)	11 (91.7)	12 (100.0)
합천군 (비율)	0 (0.0)	0 (0.0)	0 (0.0)	1 (5.9)	16 (94.1)	17 (100.0)
군부 (비율)	0 (0.0)	0 (0.0)	3 (2.4)	20 (16.0)	102 (81.6)	125 (100.0)
경남 (비율)	19 (6.1)	27 (8.6)	58 (18.5)	64 (20.4)	145 (46.3)	313 (100.0)

주 : 인구소멸지수는 "이상호(2019)의 자료를 근거하였음. <표>도 및 시군의 인구소멸지수의 주석의 표와 같음.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통계, 2019.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인구정책 부문 핵심지표

〈표 4-5-40〉

인구정책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인구(주민등록인구 기준)	334만명	340만명	334만명
행복지수	상위 40~60%	상위 20~40%	상위 20%
청년 인구 순유출	15,060명	4,000명 내외	±1,000명 이내

(1) 지속가능 경남을 위한 인구정책 수립

①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 자녀 출산과 양육 지원의 체감도 제고

- 임신 가정의 비용경감을 위한 지원
 - 난임부부 지원, 임신부 건강지원
-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어린이집 질 제고, 보육료 지원, 보육 지원체계 구축

②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특별도 조성

● 경남출신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 청년 정착 유도

- 수도권 집중되는 인구, 경제, 인프라로 인한 지방소멸로 치닫는 악순환 고리 개선
 - 메가시티 플랫폼, 부·울·경 협업 등을 통한 청년이주 완화와 정착을 위한 행정역량 집중

● 청년과 함께 청년이 직접 정책 설계

- 청년이 계획하고 실행할 거버넌스 구축
 - 청년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청년정책 플랫폼 등을 통한 청년 참여 활성화

③ 경남과 인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인구 유출 방지

● 對 수도권 청년층 인구 순유출 완화

- 경상남도-부산-울산 공동대응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협력방안 마련
- 청년의 이동과 정착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응 사업 발굴

(2) 도 정책의 인구관점 도입

① 인구영향평가를 통한 신규정책 점검

● 부정확한 인구통계 및 미래인구 예측으로 인한 오류 개선

- 인구학적 관점의 도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환류할 시스템 마련
- 인구목표를 통한 인구영향평가 모델 및 체크리스트 적용
- 행· 재정적 비효율 제거로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

②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도정 협업

● 민관 협치를 위한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구성·운영

- 경남 인구정책의 민관 협치 기구 구성
- 출산, 이동, 고령화 등 경남 인구 문제의 대책 논의

● 민간과 도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인구정책추진단 등 도민 체감과 생활밀착형 정책발굴을 위한 논의체 구성

4. 추진시책

1) 저출생 완화를 위한 정책지원

(1) 부모 부담 완화

● 난임부부 지원 강화

- 전국 여성 인구 대비 가임기 여성 인구 비중은 2000년 51.6%에서 2018년 47.4%로 하락함
- 경남의 경우도 2000년 55.4%에서 2018년 44.4%로 하락하였음
- 또한, 늦은 결혼, 환경적 요인, 건강상의 요인으로 인해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임
- 난임의 원인 및 치료를 위한 기초검진비 소요
- 난임 진료비는 여러 차례 시술을 해야 하므로 가계 부담으로 작용함. 이는 난임 진료 주단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함
- 난임시술비 및 기초검진비 지원을 통해 아이를 갖고 싶으나 상황이 어려운 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

〈표 4-5-41〉

난임부부 지원 방향

구분	난임 시술비 확대 지원	난임 기초검진비 지원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난임부부 난임 시술비 일부 지원	난임부부 난임 진단에 따른 기초 검진비 일부 지원
지원금액	회당 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 지원 확대

- 경남의 산후조리원은 시 지역에 집중되어 2019년 현재 29개소가 민간에 의해 운영됨
 - 과거와는 달리 출산 후 대부분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나, 비용과 안전성의 문제로 인해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려움
- 민간시설이 없는 시군지역에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양질의 모자보건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
 - 특히, 취약계층 산모의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
 - 향후, 공공영역의 시설확대뿐 아니라 민간시설 이용자의 자기부담금 지원을 고려함

(2) 돌봄의 신뢰성 제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학부모는 어린이집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기를 기대하나,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2019년 현재 203개소로 전체 시설 2,776개소의 7.3%에
불과함
 - 2021년까지 이용률 40% 달성을 목표로 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만으로 모든 이용
어린이의 안전과 부모의 신뢰를 받을 수는 없음

(단위 : 개소, 명, %)

〈표 4-5-4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단기계획

구분	합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확충 개소 수	358	42	66	110	140
누계	508	192	258	368	508
국공립 이용아 수(누계)	32,802	11,018	15,340	23,040	32,802
국공립 이용률	40	12.5	17.7	26.6	40

-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이외의 어린이집의 안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기 이전의 아동이 안심하고 놀이와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

● 자녀 양육부담 분담

- 자녀를 양육할 때 개별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원이 매우 중요
 - 군 지역을 중심으로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시설의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제공
 - 아이를 가진 가정이 함께 모여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육아 정보와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하여 이용할 수 있음

2) 청년정책 활성화

(1) 청년친화도시 조성 확대

● 청년친화도시

- 연간 청년 인구가 1만명 내외 순유출되는데, 구직으로 인한 이동이 63.9%로 가장 큰 이유임. 그러나 청년은 일자리뿐 아니라 문화나 여가에 대한 요구도도 높음

※ 경남 거주 선호(65.4%), 향후 5년간 타시도 이동 의사가 없음(66.6%)

-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공동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 시군의 특성에 맞는 청년정책 전반에 관해 지원함
- 활동 참여, 생활 안정 지원, 권리 보호, 능력개발, 문화진흥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사업을 지원함

(2) 청년 참여정책 활성화

● 청년이용 공간 확대

- 도 및 시군 단위 청년 활동공간을 통해 청년에게 지역사회 내 활동의 많은 기회를 제공
- 오픈 카페, 공유주방, 모임 공간, 공유오피스, 전시, 강연 등 청년의 이용이 활발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공간 조성
- 도 및 시군 청년센터를 통해 청년이 참여하는 정책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참여 기반 구축

- 청년의 요구가 지속적·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네트워크 운영
 -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청년 문제 발굴·조사, 아이디어 제안
 -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분과별 이슈 발굴 및 정책개발
 - 타지역 청년활동가와 교류 등
- 청년들의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을 위한 실무협의체인 청년정책 플랫폼을 활용
 - 청년과 관련되는 일자리, 창업, 복지 등 다양한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 관련 업무를 공유하고 연계성을 강화

3) 도 정책의 인구관점 도입

(1) 인구영향평가 실시

● 인구영향평가 실시

- 인구문제는 정책 결정의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부정확한 인구통계와 미래인구 변화자료로 정책수행 시 행정적·재정적 비효율 발생 우려
-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확대할 때, 정책의 영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안 마련함
- 인구변화로 인한 정책의 행·재정적 비효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시행단계, 수행단계, 결과단계에서 점검함

(2) 민간 파트너십 구축

●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인구의 핵심인 저출생·고령사회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수립과 이행을 체계화하여야 함
 - 2019년 현재 경남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는 1개 총괄위원회, 4개 분과위가 구성됨
 - 도는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장기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이의 이행을 위한 심의를 하도록 함
- 위원회를 통해 인구정책 수립과 이행을 점검하고, 경남을 넘어 동남권 인구정책 수립으로 확장하여 대수도권 인구정책에 관한 적극적 논의를 주도함

● 도민참여 협의체 구성·운영

- 인구의 문제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전문가와의 협업과 민간의 참여가 중요
 - 그간 인구정책이 행정 주도의 임신, 출산, 보육 중심의 획일적 정책추진으로 도민 체감도가 낮았고, 법적 위원회가 단체장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음
 - 당사자인 대학원생, 신혼부부, 보육 학부모, 귀농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분야의 도민이 직접 본인의 필요를 제시하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함

제8절
여성가족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지역 여성 및 가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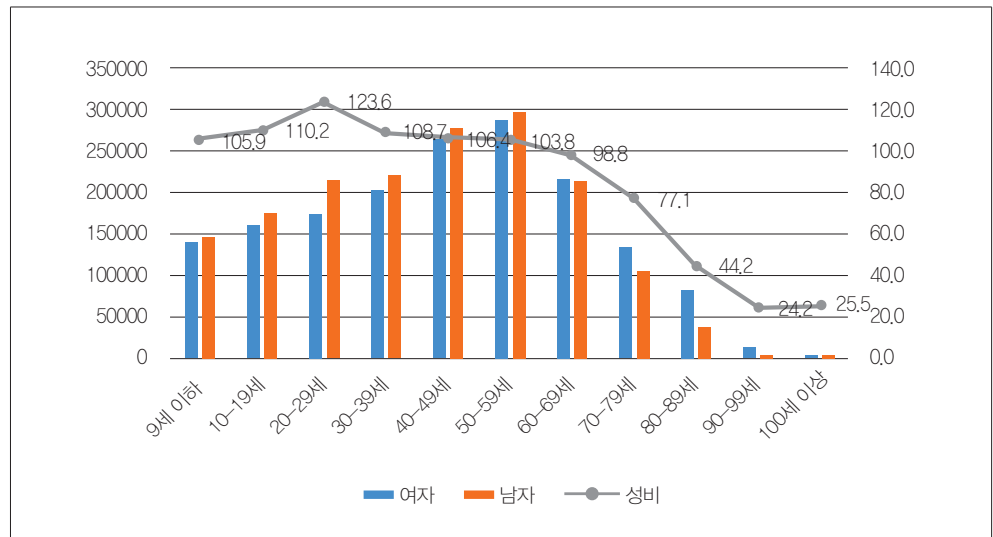
(1) 지역 여성 현황

● 경남 여성 인구

- 경남의 2019년 연령별 성비를 보면 20~29세가 123.6으로 가장 높고 이후 감소하고 있음. 60세 이후 성비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짐
- 2019년도 경남 전체 인구는 3,362,553명이며 여성 1,670,521명, 남성 1,692,032명임. 경남 성비는 101.3으로 남성 인구가 더 많으나, 전국 성비는 99.5로 여성 인구가 더 많음
- 한편, 60대 이후로 여성 인구가 증가하는데, 특히 80세 이후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의 2.4배이며, 90세 이상 여성 인구는 남성 인구의 4배에 육박함

<그림 4-5-15>

연령별 인구 및 성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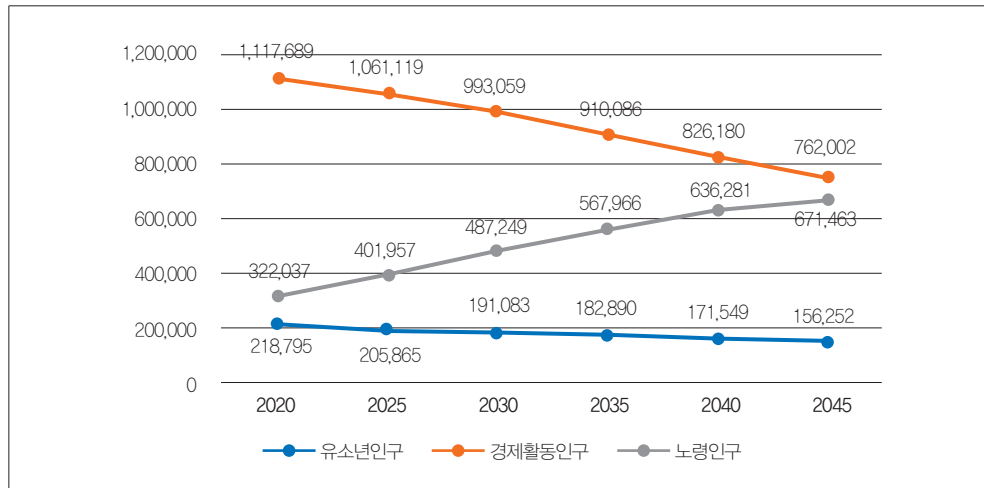
(단위 : 명, 여성 100명당 남성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경남의 전체 인구는 2020년 3,385,992명에서 2045년 3,253,934명으로 132,058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여성 노령인구(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여성 노령인구는 2020년 322,037명에서 2045년 671,463명으로 2.1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여성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2020년 1,117,689명에서 2045년 762,002명으로 355,687명 감소, 여성 유소년인구(0~14세)는 2020년 218,795명에서 156,252명으로 62,543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4-5-16>

경남 여성의
장래추계인구
(2020~2045)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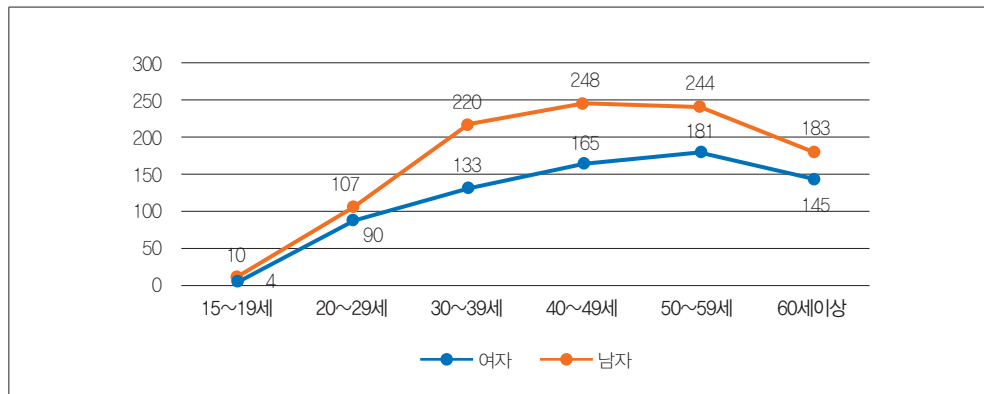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장래인구추계

● 경남 여성 경제활동인구

- 경남의 2013년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694천명이었고, 2019년은 718천명으로 증가하였음
- 2019년 경남 전체 경제활동인구는 1,730천명이며, 남성의 경제활동인구는 1,012천명으로 여성보다 294천명 많음
- 2019년 경남 여성 취업자를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60대부터 감소 경향을 보임(여성 취업자는 50대가 가장 많음)
- 2010년 당시만 해도 명확히 드러났던 M자형 곡선이 보이지 않게 되었음⁹⁶⁾
- 이것은 곧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는 여성 인구 자체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상황으로 20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와 함께, 비혼율 및 만혼율의 증가라는 요인도 작용하지만, 여성 취업자가 경력을 단절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생활균형 제도의 진전이라는 긍정적인 요인도 작용했을 것임

<그림 4-5-17>

연령별 취업자
(2019)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연보

96) M자형 곡선은 여성들의 생애주기별 취업 현황을 나타내는 용어로, 여성이 최종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했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육아가 끝나면서 복귀하게 되는 현상을 말함.

(2) 지역 가족 현황

● 다양한 가족의 보편화

- 경남의 총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2015년에서 2018년 사이에 한부모가족(모자가족 + 부자가족)과 조손가족의 증가세는 둔화되거나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으나, 1인가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음
-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로 분류되는 비친족가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비율적으로는 안정세에 접어들었음

(단위 : 가구, %)

〈표 4-5-43〉

세대구성별 가구

구분	2015년				2018년			
	전국		경남		전국		경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가구 수	비율
총가구 수	19,111,030	100.0	1,258,487	100.0	19,979,188	100.0	1,306,394	100.0
모자가족	1,522,554	8.0	90,146	7.2	1,498,840	7.5	90,592	6.9
부자가족	537,608	2.8	35,400	2.8	517,173	2.6	34,879	2.7
조손가족	113,111	0.6	7,592	0.6	113,297	0.6	7,168	0.5
1인가구	5,203,440	27.2	346,754	27.6	5,848,594	29.3	379,719	29.1
비친족가구	214,421	1.1	12,422	1.0	340,367	1.7	16,478	1.3
다문화가구	299,241	1.6	18,238	1.4	334,856	1.7	20,135	1.5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 경남 외국인등록인구

- 2019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 구성 중에 외국인등록인구의 비율은 2.4%를 넘었고, 경남의 외국인등록인구는 2.2%로 전국 수준보다는 조금 낮음
- 외국인등록인구 수는 전국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경남의 경우, 외국인등록인구는 2015년 82,316명에서 2019년 76,123명으로 감소하였음
- 동일 기간 외국인등록인구 비율의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는 지역은 거제시(2015년 58.8% → 2019년 33.4%)와 고성군(2015년 34.2% → 2019년 24.0%)이며, 증가세를 보인 것은 창녕군(2015년 32.8% → 2019년 44.7%)임
- 해당 증감세의 변화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주력산업의 경제 상황의 부침과 직결됨

(단위 : 명)

〈표 4-5-44〉
외국인등록인구

구분	2015년				2019년			
	계	여자	남자	인구천명당 외국인수	계	여자	남자	인구천명당 외국인수
전국	1,143,087	486,822	656,265	22.18	1,271,807	544,526	727,281	24.53
경남	82,316	23,120	59,196	24.46	76,123	24,171	51,952	22.64
창원시	16,788	5,497	11,291	15.69	15,073	5,826	9,247	14.43
진주시	4,409	1,709	2,700	12.80	5,219	2,044	3,175	15.03
통영시	4,603	991	3,612	33.08	3,962	728	3,234	30.15
사천시	3,117	669	2,448	27.00	3,417	753	2,664	30.53
김해시	18,522	4,122	14,400	35.02	19,013	5,320	13,693	35.05
밀양시	2,089	932	1,157	19.36	2,870	1,459	1,411	27.19
거제시	15,051	3,959	11,092	58.83	8,302	2,245	6,057	33.44
양산시	5,749	1,719	4,030	19.08	6,319	2,203	4,116	18.02
의령군	795	285	510	27.85	765	275	490	28.16
함안군	3,743	578	3,165	54.12	3,498	613	2,885	53.24
창녕군	2,091	614	1,477	32.77	2,789	852	1,937	44.74
고성군	1,891	447	1,444	34.21	1,256	330	926	24.03
남해군	846	191	655	18.45	861	151	710	19.74
하동군	611	314	297	12.16	525	292	233	11.27
산청군	584	301	283	16.19	608	318	290	17.17
함양군	445	244	201	11.03	504	213	291	12.72
거창군	467	257	210	7.39	547	274	273	8.80
합천군	515	291	224	10.48	595	275	320	13.16

자료 : 법무부, 「체류외국인통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지역 여건 전망

(1) 여성·가족 정책의 과제

● 지역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본격적인 실천

- 경남의 지역 성평등 수준은 2013년 이래로 계속 중하위권 지역으로 분류되다가 2017년 중상위권으로 상승했지만, 2018년 가족 분야의 급격한 성비 하락으로 하위권에 위치함⁹⁷⁾
 - 2018년도 경남 성평등지수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하위권, 여성의 인권·복지 영역은 하위권,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은 상위권임
 - 분야별로는 경제활동, 의사결정 분야가 하위권이고, 교육·직업훈련 분야는 중하위권임. 경제활동 분야는 경제활동참가율 성비와 성별 임금 격차 성비가 약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상용근로자비율 성비 수준은 악화하였음
 - 의사결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비교적 개선되었으나, 성평등 수준은 낮음

97) 주재선 외, '2019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pp.264-268.

- 지역 성평등지수와 연관되는 일·생활균형 지수도 2018년 기준 전국 최하위 수준임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일·생활균형 지수가 2017년도 전국 5위에서 2018년도 최하위로 하락한 요인으로는 '지자체 관심도' 부문임. '생활' 부문의 변화는 단시간에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목표와 비전을 토대로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 구성이 요청됨
- 따라서 성평등 관련 과제나 일·생활균형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이 필요할 것임

●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및 경력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 최근 3년간 경남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1/4분기의 각연도 추이는 2017년 49.7%, 2018년 49.5%, 2019년 51.5%로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냄
- 동시기 전국의 경우도 2017년 51.6%, 2018년 51.8%, 2019년 52.2%로 경남지역보다는 약간 낮은 증가세를 보임
- 남녀 고용률의 차이는 2017년 경남 24.5%p(전국 21.7%p), 2018년 24.7%p(전국 21.4%p), 2019년 23.7%p(전국 20.8%p)로 전국의 남녀 고용률 차이보다는 넓게 벌어져 있지만, 전국의 고용률 차이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폭을 보이고 있으므로, 경남지역의 여성고용률 상황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현재, 경남 여성 취업자 가운데, 50대 여성이 가장 비중이 크므로, 전 연령대 대상의 맞춤형 경제활동 지원 정책이 요구됨
- 특히, 여성 청년들의 고용률 제고 및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할 특화된 정책개발이 필요함

● 가족 형태의 다양성 보장

-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육박하여, 모든 가구형태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지속됨
- 청년 1인가구, 중장년 1인가구, 노년 1인가구 등 전생애주기 1인가구 지원 정책 요구됨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및 가정생활 측면에서의 육아, 가사 등 돌봄정책에 대한 요구 증가
- 친족 관계가 아닌 남남끼리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비친족가구의 확대도 점차 증가하게 될 것임
-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하는 사람이 66.3%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는 높은 상태임. 그러나 비혼동거 가족, 미혼모·부 가족 자녀에 대한 개인적 수용도는 다소 낮았으며,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용도는 대부분 높게 나타났음⁹⁸⁾
- 가족 형태의 다양화에 맞춘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98)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2019-05-28).

(2) 이주민 정책

● 경남의 이주민 증가세는 주춤

- 현재, 경남의 국제결혼 건수도 예년보다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최근 침체된 경제정세로 인해 이주노동자의 유입도 위축된 상태임
-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경제활동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 취업 지원 등 지자체-학교-지역사회가 연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이 필요함
- 다문화가정에 특화된 지원체계에서 점차 보편적인 범주민 대상의 지원체계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완비가 요구됨
-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 등 경남의 다양한 이주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남의 이주민에 대한 통합적 지원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 정부 정책 변화

(1)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성평등 수준 향상

-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 수립, 노력도 평가
-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 여성 대표성 및 안전 제고

- 기업 협약을 통한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 젠더 폭력 및 사이버 폭력 예방

(2)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법 제도 개선

-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 관련 차별적 법·제도 및 인식 개선

(3) 청소년 보호 · 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 청소년 안전

- 자살, 폭력 등 청소년 유해요소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마련

● 청소년 성장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 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보호 및 성장 도모

3) 지역정책 변화

(1) 지역 성평등 추진 기반 조성

● 여성가족청년국 설치로 여성 · 가족 · 청년정책 위상 강화

- 경남은 2020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여성 · 가족 관련 직제를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하여 개편하였고, 2021년도에는 여성가족아동국으로 재편됨
- 여성, 아동, 청소년, 보육, 다문화 등 여성 · 가족 · 청년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등하고 공정한 정책 마련 도모
- 실질적 성평등 실현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 여성가족정책 연구기관 설립
 - 범도민 성평등 교육으로 양성평등 문화조성
 - 가족지원 서비스 강화

(2) 여성 대표성 및 경제활동 제고

● 여성 대표성 제고

-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추진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여성가족 연구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경남도민들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
- 의사결정 부문에서의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2020년까지 40% 이상까지(2019년 현재, 37%) 상승
 - 그리고 경남도정의 의사결정 책임자인 5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2022년까지 20%(2019년 현재, 15.9%) 달성을 목표로 추진
 -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향상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남녀가 균형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여성 경제활동 제고

- ‘경력단절여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경남지역에 새일센터를 9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
- 예비창업 여성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부터 상담, 교육, 컨설팅, 실무체험, 행정지원까지 One-stop으로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조성
- 여성 일자리에 대한 생애주기별 진입 지원의 다양성 확대 및 지역 맞춤형 취업교육 활성화

(3)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

● 출산·양육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

- 결혼·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 등과 관련된 서비스 통합·연계 시스템 조성
- 경남 공공산후조리원 권역별 설치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저소득 맞벌이·한부모 자녀 양육가정의 일·생활균형을 지원

● 아동복지 실현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

- 지역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확대
-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 학교폭력 대책 마련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등 지원

●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 증대

- 다문화가족 자녀의 체계적·단계적 교육 서비스 제공과 생활 및 경제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요구

- 노동·인권 고충상담 등 안정적 정착과 통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여성가족 부문 핵심지표

〈표 4-5-45〉

여성가족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성평등 레벨	레벨 2~4	레벨 2 이상 유지	레벨 2 이상 유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5%	60%	70%
광역 및 기초의원 여성 비율	19.8%	30%	40%

(1) 도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안전 및 삶의 질 추구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안전망 구축

- 사회적 약자인 아동, 여성, 고령자 등을 배려하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지역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지역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여성친화도시의 4대 가치인 배려, 형평성, 친환경,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정책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도민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운영하는 것임
- 여성친화도시는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도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8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남도의 지원이 필요
 - 시군 중심의 여성친화도시 담당 공무원 및 시민참여단 네트워킹 활성화
 - 각 시군 특화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

● 범죄와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다양한 폭력 예방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
- 각종 범죄, 폭력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시 자립 지원 강화
 - 피해자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고, 안전한 상태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례관리를 제공

(2) 성평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기회와 선택의 보장

●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

- 경남의 성평등지수 향상을 위한 경남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
 - 여성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제 세력화, 여성의 사회참여 등
 -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성평등정책 추진으로 정책 효과 극대화

- **경제활동의 기회 보장 및 생활과의 균형 향상**

- 경남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삶의 지원체계 마련

(3) 돌봄과 포용의 경상남도

-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 결혼, 출산, 양육을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확산
- 믿을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확충으로 보육 서비스 질적 향상

- **1인가구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한 사회적 인정 강화**

-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하여, 도민 누구나가 장애, 이주 배경, 빈곤 등과 상관없이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지 않고 자립하여 잘 살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조성
- 결혼제도를 통한 가족 구성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파트너십 관계를 인정하는 제도도 함께 마련
 - 독일 생활동반자법, 프랑스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 PACS), 일본 「파트너십 인정 조례」 등

4. 추진시책

1)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 **광역형 여성친화도시(Gender Equality Region)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경남도 자체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제공
 - 경남도 18개 시군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 지역 상황에 맞춘 컨설팅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자문위원'을 구성 및 운영
 - 광역형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남도에서 정기적으로 '경상남도 여성친화도시 포럼' 개최

- **도민 참여 방식의 사회안전망 구축**

- 도 및 시군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통한 민관경 합동 'With you 지킴이단' 운영
 - 성평등 교육 및 젠더폭력방지캠페인을 통한 인식개선
 -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 취약공간 및 지역에 대한 합동 점검 실시
 -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 등 다양한 안전 취약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 젠더폭력 대응 체제 마련
 - 공공시설 범죄 카메라 수시 점검 및 지역 제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확대
 - 언제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도록 젠더폭력 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 디지털 성범죄 방지 기반 구축을 위한 젠더폭력상담체계 강화
 - 안정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젠더폭력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폭력 피해자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역서비스자원 연계 지원

● 대면·비대면 혼합형 사회적 약자 지원 방식 모색

- 코로나19의 위협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움을 인식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존의 대면 방식의 복지전달체계에 ICT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방식의 안전망 구축 필요
-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 방식의 다양화 전략 필요
 - 지역자원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연계 가능성에 대한 사전 조사가 필요
 - 전문가의 직접 투입이 어려운 시급한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응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지역에서 가능할 수 있도록 도민 대상 사회적 재난대응 교육 및 자원 지원

2)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성평등 기반 조성

- 경남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강화 및 교육, 사업,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구축
 - 여성·가족과 관련되는 경남지역의 연구과제 수행
 - 성평등 및 일·생활균형을 추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 및 진행
- 경남여성가족재단 및 지역성평등센터를 중심으로 범도민 성인지 교육 추진체계 강화
 - 경남도의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도민대상의 성평등 교육 제공
- 성 주류화 정책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및 도민 참여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개선
 - 경남도민 전체에게 골고루 성평등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 구성
 - 지역별, 생애주기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 제공 기회 확대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 리더 교육 내실화
 - 경남도 정책의 성평등 주류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더불어, 18개 시군의 정부 공모사업(각종 국책사업 포함)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의 컨설팅 제공 확대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제도 및 성인지예산제도 강화

● 일·생활균형 지원

- 경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설립으로 경남도민의 워라밸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한 컨설팅 제공
 - 기업과 지역사회에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도민 대상 가족친화 교육을 통한 가족친화 캠페인 추진
- 직장 내 젠더 차별을 금지하도록 젠더영향평가 관점에서 점검 추진
 -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젠더영향평가제도 도입
 - 성별 임금 격차, 남녀 승진 기회 평등, 남녀 임금상승률 차이, 여성의 출산·육아휴직 이후 복직률, 기업 내 고임금 노동자 중 여성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에 인센티브 부여
 - 프랑스 '젠더인덱스법' 참고

3) 다양성이 인정되는 지역사회 기반 구축

● 안전하고 든든한 양육환경 조성

- 누구든지 주저 없이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원스톱센터 설립
 - 결혼·임신·출산을 희망하거나 계획하는 도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결혼·임신·출산·양육과 관련된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 및 지역자원 연계
 - 개인이나 가족의 니즈나 환경변화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사례 관리 제공
 - 핀란드 '네우볼라'제도 참고

●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만들기

- 법률혼 관계에만 지원되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사실혼 관계까지 확대
 - 현재, 경남도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사실혼 관계의 커플까지 확대하고 있음
 -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다양한 부부의 형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삶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음
- 도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권 존중을 위한 지역 전체의 공동체성 강화
 - 1인가구지원센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지원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가족 중심의 행정체계의 다각화 모색
 - 개인 중심의 니즈 파악으로 행정서비스의 선진화 도모

제9절 교육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학교 및 학생 수

(1) 각급 학교 현황

● 지역활력 감소 우려

· 경남의 고등학교 수는 늘어났으나, 학생 수는 줄었음

– 2010년 이후 경남 고등학교 수는 188개에서 192개로 증가하였다가, 190개로 2013년 수준으로 줄어들음

– 학생 수는 13만명에서 93천명 수준으로 줄었음

● 고등교육 참여자 수 감소

· 경남의 전문대학 10개소로 공립 2개소, 사립 8개소임

– 학생 수는 2012년 39,243명에서 2019년 30,527명으로 -22.2%로 줄어들음

· 경남의 대학은 10개소로 국립이 3개소(교육대학 제외), 사립이 7개임

– 학생 수는 2012년 84,243명에서 2019년 79,942명으로 -5.1%로 줄었음

경남 고등학교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학교 수	학생 수	
		전체	여자
2011년	188	130,026	59,621
2012년	189	129,209	59,536
2013년	190	127,457	59,399
2014년	190	123,853	58,395
2015년	191	120,084	57,051
2016년	191	117,575	55,588
2017년	192	111,618	52,570
2018년	192	102,461	48,129
2019년	190	93,849	44,171

경남 전문대학 및 대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문대학		대학	
	전체	여자	전체	여자
2012년	39,243	13,772	84,243	29,259
2015년	36,125	12,119	87,657	32,061
2016년	34,000	11,445	86,495	32,047
2017년	32,751	11,009	84,580	31,312
2018년	31,575	10,798	82,469	30,790
2019년	30,527	10,894	79,942	29,6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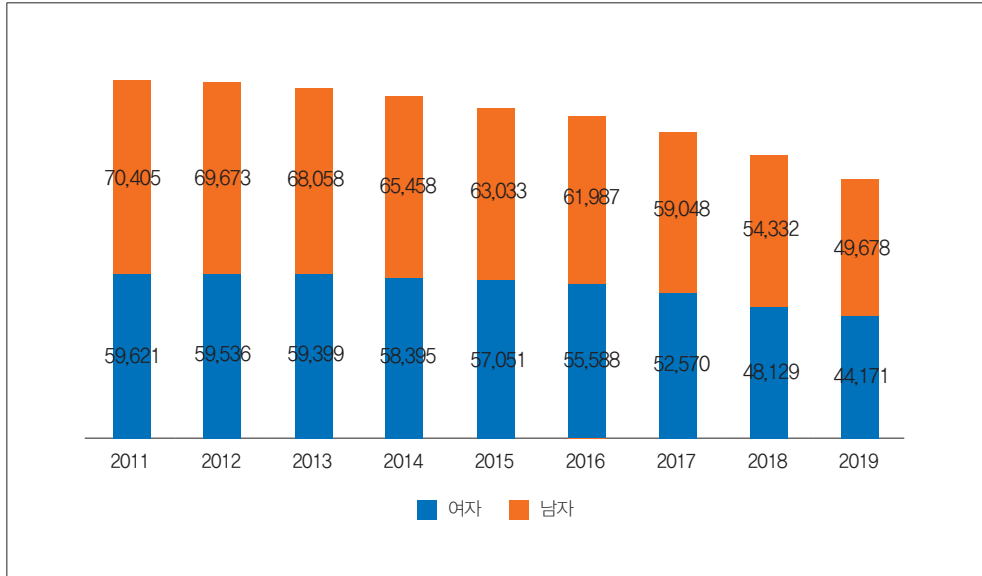
〈표 4-5-46〉

경남의 각급 학교 현황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연도).

〈그림 4-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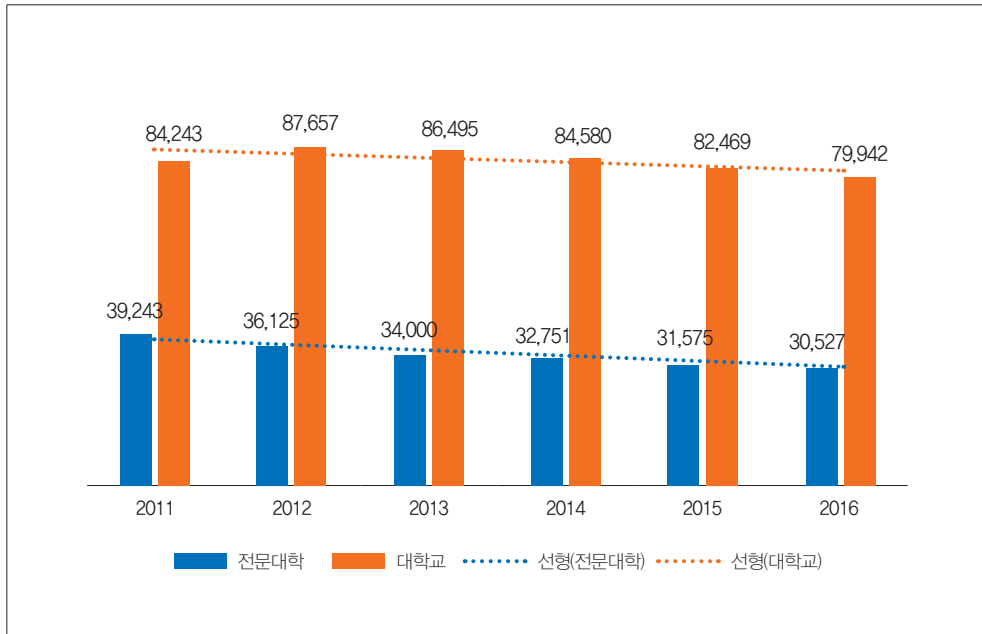
경남 고등학생 수



(단위 : 명)

〈그림 4-5-19〉

경남 전문대학 및 대학교 학생 수



(단위 : 명)

- 경남의 대학원 46개소로 학생수 2012년 10,894명에서 2019년 8,970명으로 -17.7%로 줄었음

〈표 4-5-47〉
경남 대학원 학생 수

(단위 : 명)

구분	박사			석사			합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07년	1,385	962	423	8,447	4,728	3,719	9,832	5,690	4,142
2012년	1,482	900	582	9,412	4,853	4,559	10,894	5,753	5,141
2015년	1,500	892	608	8,445	4,423	4,022	9,945	5,315	4,630
2016년	1,594	941	653	8,289	4,337	3,952	9,883	5,278	4,605
2017년	1,582	952	630	8,083	4,083	4,000	9,665	5,035	4,630
2018년	1,562	938	624	7,960	3,889	4,071	9,522	4,827	4,695
2019년	1,549	874	675	7,421	3,488	3,933	8,970	4,362	4,608

자료 : 교육통계서비스, 교육통계연보(각연도).

2) 학교별 현황

(1) 입학

● 대학교의 입학정원 변동 없으나, 정원 내 신입생 총원을 감소세

- 경남 소재 대학의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이 지난 3년간 낮아지는 추세임
- 11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100% 총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5-48〉
경남지역 대학교
입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가야대학교(김해)	635	95.1	7	633	95.5	6.8	633	87.9	5.1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206	99.6	5.6	1,206	99.5	5.3	1,206	99.6	5
경남대학교	2,930	98.2	5.5	2,900	99.5	4.8	2,875	99.4	4.6
경상국립대학교	3,009	99.9	7.5	3,009	100	8.1	3,032	99.8	6.4
부산장신대학교	70	85.7	2	67	95.6	1.5	67	58	1.2
영산대학교	740	91.9	6.3	690	99.9	7.9	680	99.3	7.3
인제대학교	2,088	100.3	5.8	2,088	99.8	6.5	2,088	100	4.6
진주교육대학교	319	100	7.7	319	100	7.2	319	100	6.4
창신대학교	500	97	6.2	500	100	7.2	500	100	6.4
창원대학교	1,754	99.5	6.9	1,754	99.4	7.1	1,754	99.5	7
한국국제대학교	777	99.2	5.4	738	81	5.8	664	42.6	2.9

자료 : 대학알리미(각연도).

●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약간 감소하고, 신입생 총원을 증가세

- 경남 소재 전문대학의 지난 3년간 입학정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경쟁률과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남
- 각 대학이 정원을 감축하면서 운영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표 4-5-49〉

경남지역 전문대학 입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입학정원	정원 내 신입생 총원율	경쟁률
거제대학교	455	61.1	2.3	445	73.9	4.2	441	75.3	3.3
경남도립거창대학	445	90.6	3.9	430	100	4	417	100	4.8
경남도립남해대학	400	92	3.2	400	100	3.2	400	100	4.2
김해대학교	527	87.5	6.5	527	87.9	5.5	508	96.3	6.7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66	96.4	6.6	828	99	6.7	806	98.3	7.9
마산대학교	2,108	97.2	8.3	2,108	89.8	8.2	2,080	94.7	11.9
연암공과대학교	510	100	5.8	510	100	6.5	510	100	6.1
진주보건대학교	833	100	5.8	783	97.8	5.4	783	100	5.3
창원문성대학교	1,580	84.6	3.6	1,430	83.4	6	1,399	87.8	5.4
한국승강기대학교	297	100	3.5	297	100	3.8	297	100	3.5

자료 : 대학알리미(각연도)

(2) 취업

● 대학교 및 전문대학 취업률에 차이를 보임

- 약 10%p가량 차이를 보이거나, 학생 수의 차이와 대학교의 진학률이 감안되어야 함. 다만, 대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표 4-5-50〉

경남지역 대학교 및 전문대학 취업 현황 (2019)

(단위 : 명, %)

구분	대학			구분	전문대학	
	졸업자	진학률	취업률		졸업자	취업률
가야대학교(김해)	555	0	76.1	거제대학교	447	79.5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146	2.6	64.5	경남도립거창대학	338	70
경남대학교	2,714	2.5	59.1	경남도립남해대학	336	75.2
경상대학교	3,273	8	52.6	김해대학교	400	69.1
부산장신대학교	59	5.1	47.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829	69
영산대학교	587	0.9	68.3	마산대학교	1,968	73.3
인제대학교	2,011	5.4	61.4	연암공과대학교	524	79.5
창신대학교	315	0.6	74.8	진주보건대학교	919	75.5
창원대학교	2,080	4.4	58	창원문성대학교	1,386	66.8
한국국제대학교	817	0.7	67.4	한국승강기대학교	295	81.7

자료 : 대학알리미, 2019.

3) 평생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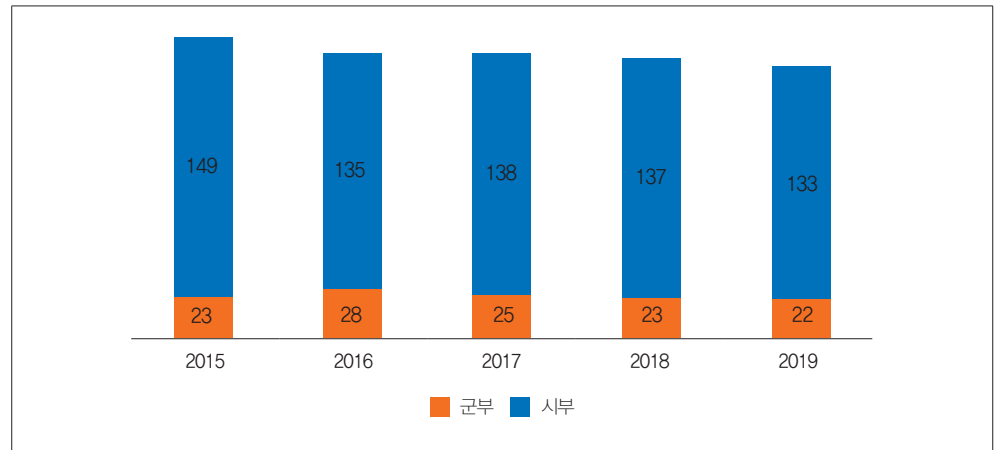
(1) 기관 현황

● 평생교육기관 감소세

- 경남의 평생교육기관은 2019년 현재 총 155개로 시 지역이 133개 분포됨
- 시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은 2015년 149개에서 133개로 -10.7% 감소함

<그림 4-5-20>

경남 평생학습기관
추이
(2015~2019)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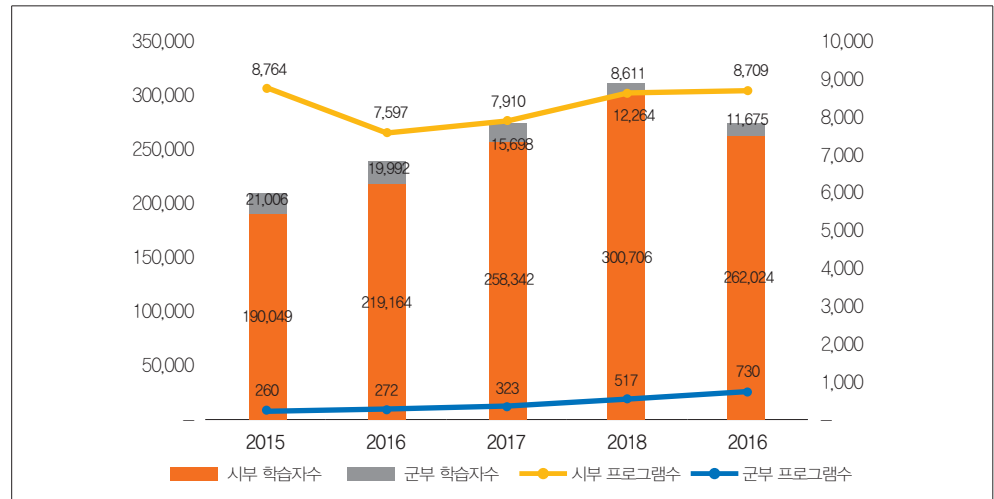
(2) 운영현황

● 경남 평생교육 학습자 및 프로그램 시부에 집중

- 평생교육 학습자는 시 지역이 군 지역에 22배 이상 분포
- 2019년도 학습자 중 시부 학습자의 감소가 매우 큼
- 시부와 군부 모두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습자 참여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4-5-21>

경남 평생학습기관
추이
(2015~2019)



자료 :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각연도).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대학 학생 수 감소 자구책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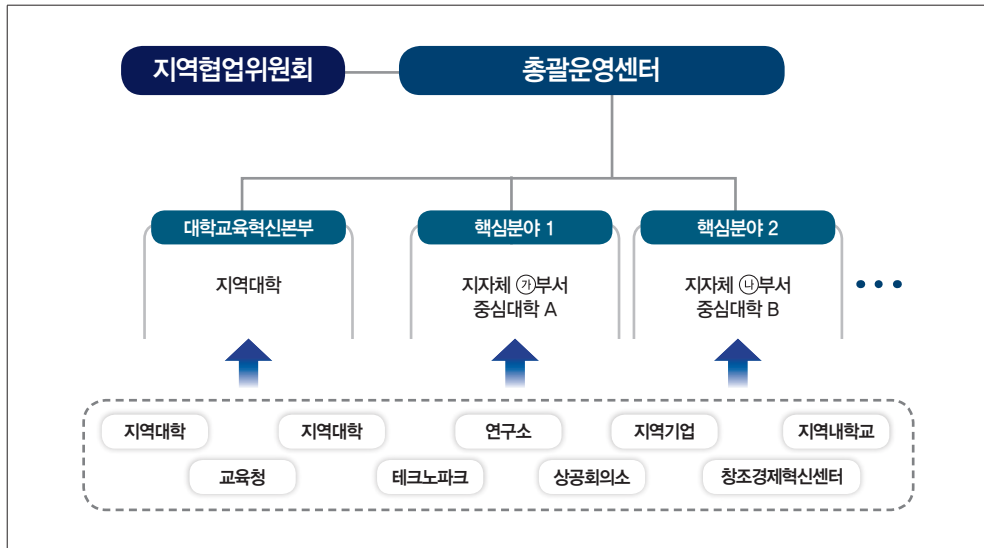
(1)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행정기관 역할 중요

●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견인

- 정부에서는 대학과 연계된 지역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 협업의 장 마련을 지원할 것을 시도
 -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대학의 활로 개척사업으로 실시될 예정
 - 정부 부처의 사업들이 각 지자체로 하향식으로 전달되며,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중복, 칸막이라는 비판에 따라 기업, 연구소, 학교, 교육청,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업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추진

<그림 4-5-22>

지역혁신 플랫폼 운영 체계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20.01.20).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한다".

(2) 통합교육플랫폼을 통한 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

● 지방행정과 교육행정 협치

- 도-교육청의 상설 협의 실시
 - 경상남도와 교육청은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2010. 10. 1)하여 상시 업무협의 및 교육지원
 - 포럼, 교육회의 등 두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발굴 및 실행

● 경상남도 통합교육체계

- 도와 대학이 지역의 상생을 위한 공동논의장 구성
 - 지역과 대학의 협력모델 구축, 지속적 네트워크 및 협의체 구성

2) 평생교육 변화와 확대

(1)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으로 참여 확대

● 경상남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점검 및 질 제고

- 경상남도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증가됨
- 경상남도 평생교육의 체계적 운영과 내용의 질적 모니터링 확대 필요

● 경상남도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 특성화 사업 발굴 및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법인화로 장기 전략 수립
- 평생교육진흥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재단법인 설립으로 독립성과 전문성 등 역할 강화
- 평생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

(2) 대학개방으로 입학자원 확보

● 대학의 평생교육체계 지원 확대

- 성인을 대상으로 학사학위 또는 양질의 대학교육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유연화된 학사제도 도입 예정
- 정부는 단과대학, 학부, 학과, 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대학이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대학 및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 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확대

〈표 4-5-51〉

교육부 평생교육체계 운영모델(2019)

단과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습자 대상 학과들로 이루어진 별도의 단과대학 구성 ○ 단과대학 내에 성인 학습자 전담 별도의 행정기관 설치
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 학습자 대상 전공(학과)으로 이루어진 학부 설정 - 학부 단위로 학습자를 모집하고, 전공탐색 후 전공 설정 - 별도의 단과대학을 구성하지 않고, 기존 단과대학에 학부 설정 ○ 성인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학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단과대학 내에 성인 학습자 전담 학과를 설치 ○ 성인 학습자를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마련
컨소시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수의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공동 학위 수여 가능

자료 : 교육부 보도자료(2019.01.20),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교육 부문 핵심지표

〈표 4-5-52〉

교육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경남 소재 대학 졸업 비율 (경남대학졸업자 수/ 전국대학졸업자 수(4년제))	4.1%	4.5%	5.0%
대학졸업자 취업률	60.2%	70%	80%

(1) 도-대학의 지역 상생방안 공동추진

① 도와 대학 간 협의체계 구축

● 도-대학 상생발전협의회

- 도와 대학이 상생할 방안 마련과 지역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논의·조정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 마련
- 주요 사업을 함께 작성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축하여 파트너십을 강화

② 지역혁신 플랫폼 추진·활용

● 교육혁신 및 대학 R&BD 강화

-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과 지역 간 상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실행
- 지역 내 대학 참여를 보장하고, 경남도는 대학 간 갈등과 이해 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함
- 궁극적으로 다양한 사업발굴로 지역 내 취·창업 생태계를 구축함

(2) 도청-교육청 협업으로 초·중·등 교육의 혁신 추진

① 교육 협치 행정

● 도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업 추진

- 그간 자치단체의 행정과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음
- 지역의 주민인 초·중·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인 학부모의 만족을 위해 상생 협의가 필요함

●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 협치와 상시협력을 위해 기구 구성 및 운영
- 통합교육추진단 운영 및 법적기구인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함

② 학교공간혁신을 통한 미래교육 대응**● 기술기반 미래학교 적용**

- 교실 수업에 기술기반 학습모형을 도입하여 학생들의 교육효과 극대화 및 흥미 제고
- 학교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데이터 기반 종합적 체계 구축
- 학교 내 시설 및 공간 개선으로 학생들의 만족도 제고 및 학습효과 제고

● 학교공간혁신

- 교육과정 변화 등 미래교육 대비 필요
- 미래에 요구되는 자율적 학습 공간 구축으로 학습공간의 개방과 활용 극대화

4. 추진시책

1) 도-대학의 지역 상생 협의체 구축

(1) 도와 대학 간 협의체 구축

● 대학교육 플랫폼 운영

- 지역대학과 지방정부의 협업을 통한 지역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부의 지방정부-대학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와의 효과적 협업체계에 활용
 - 그러나 현행의 개별대학 기반 사업별 지원 체계만으로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끌어내는 데 한계
 - 지역혁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역 현안 해결, 취·창업 생태계 구축 등 R&D 지원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등 추진

● 2020년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운영의 내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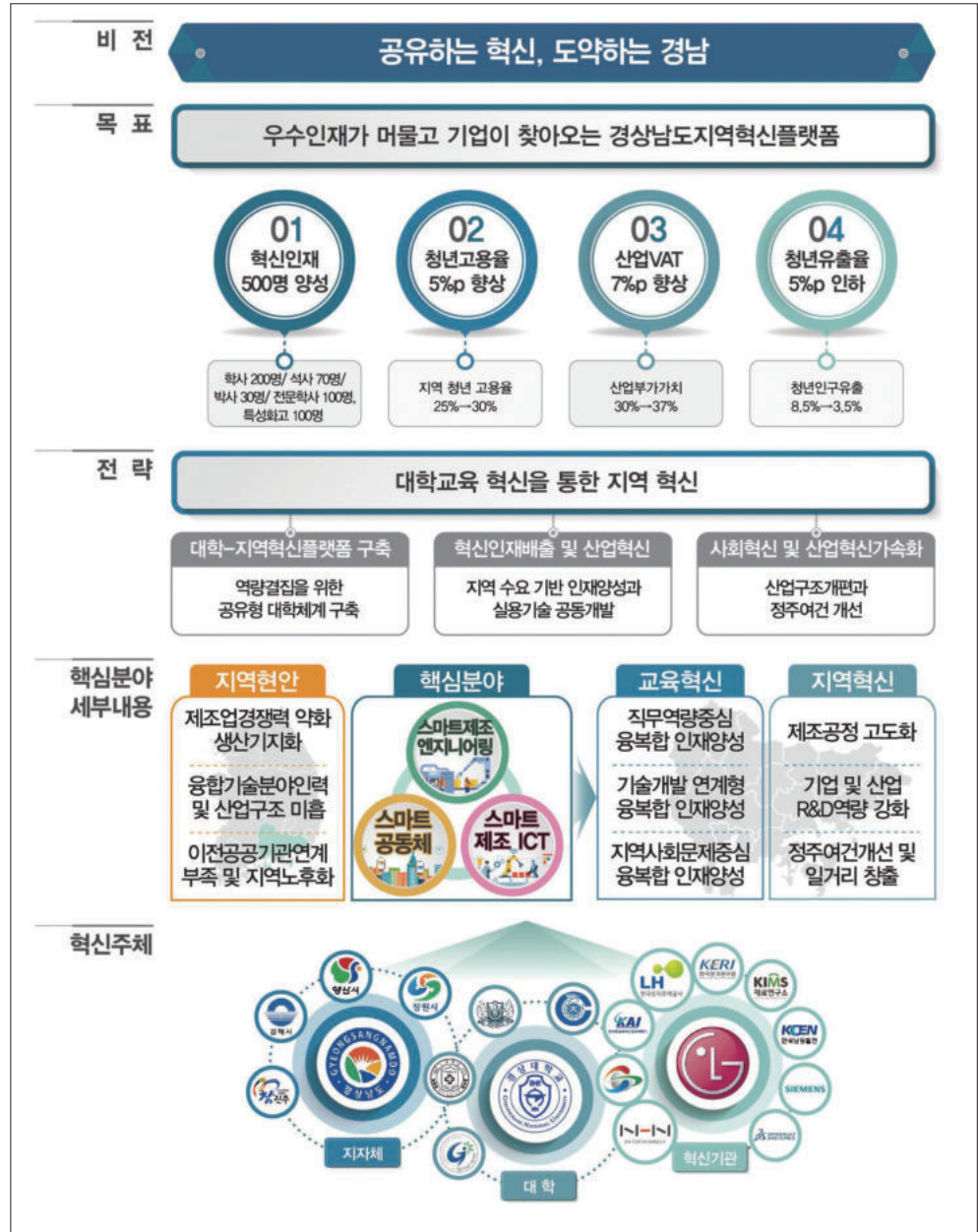
- 「공유하는 혁신, 도약하는 경남을 비전」으로 '인재가 머물고 기업이 찾아오는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을 목표로 함
 -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및 제조혁신, 융합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혁신 주체로 지자체-대학-기업이 참여하여 상생 플랫폼 구축
 - 핵심 분야로 스마트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를 제시

● 도-대학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 도지사-대학총장 간 상생간담회를 통해 대학 인재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교환 및 행정적 지원 탐색
 - 도-대학이 주도적·자율적으로 주요 사업계획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지속·공식적인 소통의 장인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 지역의 대학과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 선도모델 발굴
 - 상생발전 협의회를 지역협의체로 활용하여 지역 사회 발전 방향 협의

〈그림 4-5-23〉

경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계획서
(2020.7.), p.3



2) 도청-교육청 협업 공고

(1) 교육 협치 행정 활성화

● 도 행정-교육 행정간 협업

- 교육행정과의 협업을 위한 통합교육추진단의 확장 운영
 - 두 기관 협력사업의 최종의사결정기구로서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 현안사업별 협의체 구성으로 실질적, 상시적 협업구조 구현
 - 도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 협치 및 상시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상설기구로 통합교육추진단 역할 확장
- 도와 교육청의 협업으로 행복한 미래교육복지 구현

● 지자체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무상교육 확대
 -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 확대, 초·중·고 신입생 체육복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경감, 수학여행비 지원을 통한 교육 격차 및 교육복지 실현,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 및 무상급식 실현으로 학교급식의 질 향상
- 특색을 살리는 학교 만들기
 - 작은 학교, 원도심 지역, 과대·과밀학교의 운영 해소 및 인근 중·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교육격차를 줄이는 교육복지
 - 계층·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교육바우처, 장학금, 글로벌 캠프 등 초·중·고생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 지속)
- 방과후학교·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지원
 -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방과후학교 정책 추진 지원, 맞벌이·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의 지자체 협업

(2) 기술기반 학교공간혁신

● 미래학교 구축

- 미래를 선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미래형 학교 구축
 - 4차 산업시대에 학교교육은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수업과 평가방식을 유지
 -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실 환경 구축
 - 개인 맞춤 지능형 교육 솔루션 및 실감형 콘텐츠 정보화 기기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업혁신 선도
 -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서버구축
 - 미래사회 미래교육 공간 콘서트 운영

● 학교공간혁신

-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인공지능 교육, 미래교육 등 미래사회 대응
 -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을 단순한 시설개선사업이 아니라 미래사회 학습역량에 기반한 다양한 학습 형태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환경 조성, 고교학점제 등 미래교육과정 변화 반영
 - 교실과 도서관, 실험실이 지식 전달 위주보다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학교 내에 학습공간은 물론 동아리나 스터디모임을 할 수 있는 공용학습공간, 협력공간 등을 설계·운영
- 에듀테크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방법 변화 도모

- 학생 자기 주도적 맞춤형 학습 및 교사의 업무부담 해소 도모
 - 데이터 기반 종합적 정보에 의한 효율적 시설관리
- 지능형,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학교 환경의 효율적 관리
 - 도교육청 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학교공간혁신 사업 지원
- 학교공간혁신 촉진자 인력풀 운영
- 교육, 건축 등 전문 분야 간 융합적 협업 추진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된 사용자(학생, 교원) 참여 설계 추진
 - 학교공간혁신 사업 평가
- 전문가와 비전문가(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수준의 평가도구 마련 및 적용
- 가변적인 기능이 다양한 생태적인 학교공간

(3)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공동노력

- 시군 단위 교육종합센터 기구 구축
- 시군 단위 교육종합 센터 시설 건설
- 시설, 보건, 급식, 교통, 체험학습, 학습준비물, 방과후, 돌봄, 육아 등 교육과정 이외의 일체의 업무를 지자체와 협의

3) 생애주기 평생학습 체계 구축

(1) 평생교육 체계 조성

● 평생교육 체계 구축

-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도민들의 학습이력화 및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추진을 위해 시군별 평생학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 도민의 요구에 따른 평생학습 네트워크, 생애주기별 강좌, 학습동아리, 강사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사회변화 및 고용 형태 변화에 대응한 질 높은 평생학습 체제 마련
- 경남도-시군-읍면동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 도민 모두에게 촘촘하고 세밀한 평생학습 지원을 위해 도-시군-읍면동 평생교육기관 실무자 네트워크 조성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전문가 또는 실무자 중심의 협의회 구축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활성화

- 도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구축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운영
- 국가와 지역 간 연계협력을 원활하게 수행. 기관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제고
- 평생교육 기회 다양화 기회 다양화 및 세대별·영역별 평생교육 진흥

(2) 평생교육기반 내실화

● 평생교육진흥원 온라인 강좌 활성화

-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
- 새로운 언택트 시대 도래, 학습의 다양성 등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평생학습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 시민교양과정, 자격과정, 비학위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강좌 제공

●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및 강좌나르미 활성화

-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운영을 통해 마을평생학습 소식 제공
- 마을 단위의 평생학습 정보 공유 및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도민기자단 운영
- 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강좌나르미 운영
- 학습자가 희망하는 강좌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강좌나르미 확대 운영

(3) 평생교육 고도화

●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 생애주기별 미래학습을 위한 평생학습 바우처 지원
- 도민들의 역량개발 및 미래학습을 위해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바우처 운영

● 차별없는 평생학습사회 실현

- 문해교육센터 활성화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읽기, 쓰기가 어려운 비문해자 해소 및 학습 소외계층을 위한 학습지원제도 마련
-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디어 활용을 어려운 평생학습자를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및 평생학습 미디어 센터 설치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마련
-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애유형별 평생교육기관 거점센터 마련

● 경남평생학습인증제 실현

- 경남 인증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 생애주기별로 학습의 다양성이 존재함에 따라 경남지역의 특화된 평생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경남평생학습인증제 실현

- ※ 기본과정 / 특화과정(전문과정, 심화과정) 운영

- 경남평생학습인증제로 통해 학습-고용이 연계될 수 있는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제10절 체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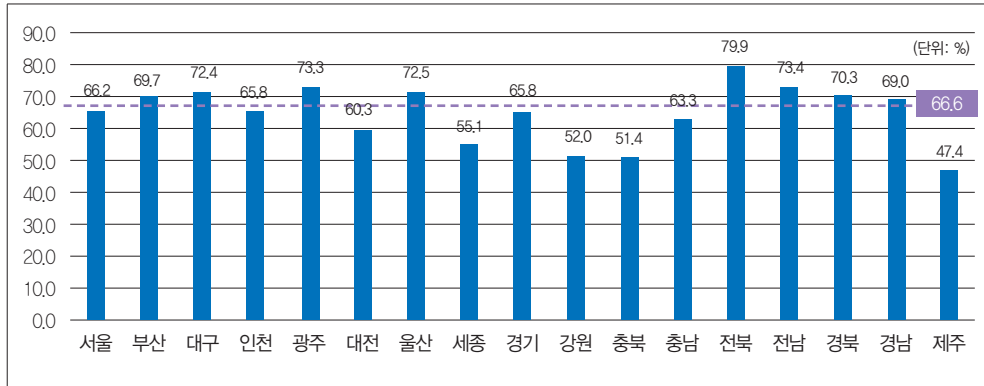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생활체육 참여 현황

- 2019년 경남의 생활체육 참여율은 69.0%로 전국 평균 66.6%보다 높았으며, 전국의 8번째임

<그림 4-5-24>

지역별 생활체육 참여율



주 : 최근 1년간 일주일에 1회 이상(1회 운동 시 30분 이상)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한 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2019년 경남도민의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은 걷기가 38.5%로 가장 높았으며, 보디빌딩(헬스) 17.5%, 등산 16.1%, 수영 8.9%, 체조(맨손체조, 생활체조)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4-5-53>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상위 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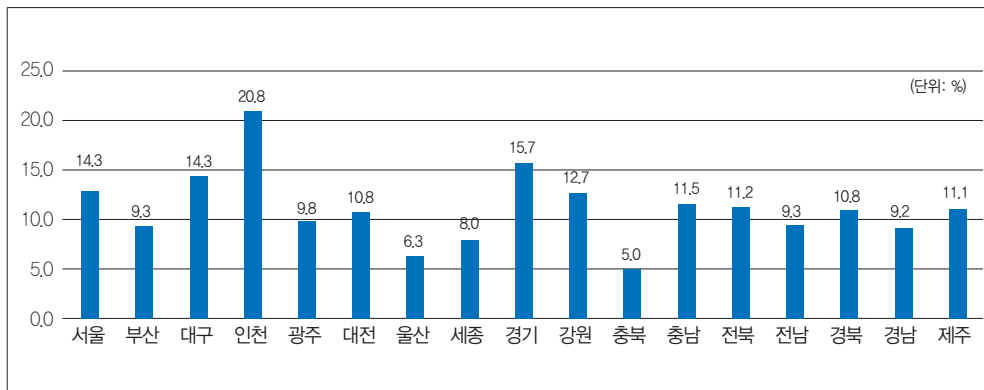
구분	걷기 (조깅, 속보)	보디빌딩 (헬스)	등산	수영	체조 (맨손체조, 생활체조)
참여율	38.5	17.5	16.1	8.9	7.8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1+2+3순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2019년 경남의 체육동호회 가입 비율은 9.2%로 전국 평균 13.0%보다 낮았으며, 전국의 13번째임

<그림 4-5-25>

지역별 체육동호회 가입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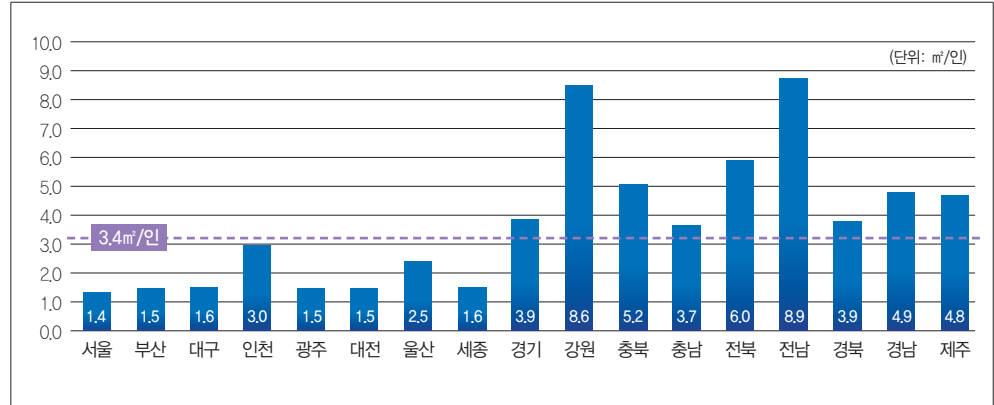
주 : '가입하여 현재 운동하고 있다', '가입은 했지만 현재 활동하고 있지 않다'를 합산한 비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2) 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4.9㎡/인으로 전국 평균 3.4㎡/인보다는 넓었으며, 전국의 5번째임

<그림 4-5-26>

지역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현황



- 경남의 공공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으며, 1개소당 평균 7,269㎡로 전국 평균(6,596㎡)보다 넓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4>

연도별/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구분		(단위 : 개소, ㎡)				
		2013년 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2015년 말 기준	2016년 말 기준	2017년 말 기준
전체	개소	19,398	21,317	22,662	24,303	26,927
	면적	138,294,000	151,117,761	156,083,763	163,932,737	177,614,312
서울	개소	2,760	2,791	2,796	2,859	2,893
	면적	12,380,102	12,780,484	12,846,689	13,055,604	13,443,315
부산	개소	1,049	1,127	1,200	1,250	1,363
	면적	4,498,244	4,716,466	4,838,348	5,086,278	5,202,459
대구	개소	531	558	719	782	791
	면적	2,828,197	3,332,160	3,585,926	3,914,351	3,944,553

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표 4-5-55〉

연도별/지역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m²)

구분		2013년 말 기준	2014년 말 기준	2015년 말 기준	2016년 말 기준	2017년 말 기준
인천	개소	829	979	984	1,020	1,109
	면적	4,990,641	7,291,517	7,460,280	7,688,518	8,872,603
광주	개소	515	625	707	751	742
	면적	1,749,882	1,933,211	2,240,223	2,199,285	2,199,703
대전	개소	401	431	437	488	506
	면적	1,944,142	2,146,864	2,151,542	2,187,372	2,225,222
울산	개소	280	282	285	278	278
	면적	2,826,110	2,889,897	2,918,744	2,900,496	2,900,496
세종	개소	43	46	48	98	98
	면적	314,281	338,878	362,542	434,978	434,978
경기	개소	3,173	3,557	3,677	3,941	4,541
	면적	33,498,508	38,890,856	39,903,692	42,550,722	50,848,019
강원	개소	1,545	1,771	1,931	2,158	2,306
	면적	9,320,425	10,284,202	10,665,466	12,087,538	13,330,469
충북	개소	1,189	1,433	1,617	1,684	1,933
	면적	7,092,217	7,106,191	7,167,555	7,433,470	8,226,973
충남	개소	969	1,005	1,099	1,142	1,409
	면적	6,822,298	7,009,352	7,176,878	7,633,484	7,874,402
전북	개소	991	1,027	1,103	1,138	1,173
	면적	10,469,686	10,686,996	10,893,022	11,160,269	11,157,276
전남	개소	1,333	1,430	1,557	1,813	2,319
	면적	14,008,496	15,009,234	16,245,676	16,665,794	16,831,251
경북	개소	1,727	2,030	2,169	2,402	2,688
	면적	9,375,019	9,397,193	9,493,952	9,814,394	10,413,282
경남	개소	1,750	1,908	2,012	2,170	2,278
	면적	13,313,205	14,413,820	15,324,882	16,227,342	16,558,152
제주	개소	313	317	321	329	500
	면적	2,862,547	2,890,440	2,808,346	2,892,842	3,151,1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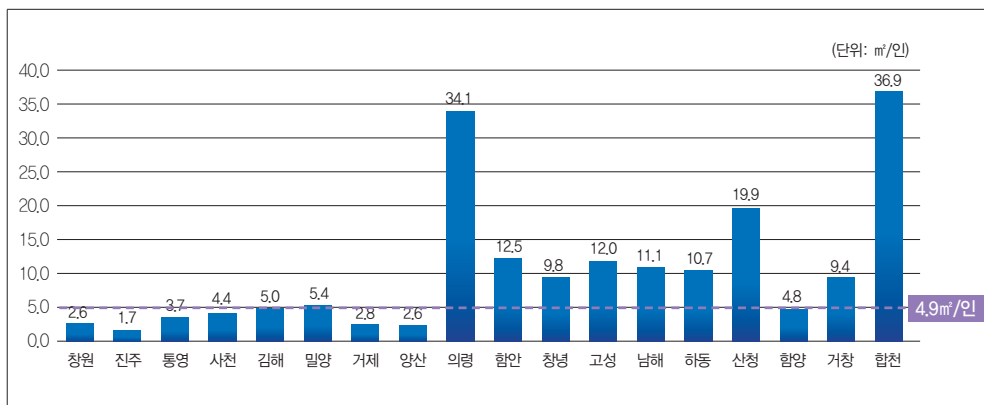
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18개 시군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은 합천군이 36.9m²/인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주시가 1.7m²/인으로 적었음

- 합천의 경우는 축구장 전체 면적이 937,884m²로 공공체육시설 면적의 54%를 차지함

〈그림 4-5-27〉

18개 시군별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표 4-5-56〉

경남 18개 시군별
공공체육시설 현황
(2017년말 기준)

(단위 : 개소, m², m²/인)

구분	개소	면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구분	개소	면적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
창원	337	2,798,364	2.6	함안	59	850,254	12.5
진주	243	596,158	1.7	창녕	58	628,511	9.8
통영	81	499,713	3.7	고성	47	646,665	12.0
사천	181	508,206	4.4	남해	72	493,646	11.1
김해	121	2,637,760	5.0	하동	64	521,961	10.7
밀양	300	587,692	5.4	산청	66	722,120	19.9
거제	153	718,977	2.8	함양	72	191,525	4.8
양산	178	884,831	2.6	거창	52	587,319	9.4
의령	80	949,204	34.1	합천	114	1,735,246	36.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 경남 공공체육시설 중 간이운동장을 제외하면 축구장(162개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개소당 평균 면적은 육상경기장이 75,899m²로 가장 넓었음

(단위 : 개소, m²)

구분	개소	면적	1개소당 평균 면적	구분	개소	면적	1개소당 평균 면적
육상경기장	31	2,352,873	75,899	수영장	24	417,329	17,389
축구장	162	4,676,222	28,866	롤러스케이팅장	18	173,174	9,621
하키장	1	32,725	32,725	사격장	4	105,026	26,257
야구장	30	620,687	20,690	국공장	44	358,968	8,158
사이클경기장	1	50,500	50,500	골프연습장	5	36,339	7,268
테니스장	98	605,630	6,180	조정카누장	1	666	666
씨름장	8	14,421	1,803	요트장	7	103,101	14,729
간이운동장 (마을체육시설)	1,588	2,831,320	1,783	빙상장	3	19,832	6,611
체육관	90	3,445,129	38,279	기타시설	13	56,439	4,341
전천후 게이트볼장	150	657,772	4,385	합계	2,278	16,558,152	7,269

주1 : 체육관은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현황임.

주2 : 간이운동장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3) 스포츠산업 현황

● 사업체 현황

- 경남의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체는 6,736개로 전국의 6.7% 수준이며, 경기(23.3%), 서울(19.6%), 부산(7.0%)에 이어 전국 4위로 나타남

- 스포츠 관련 사업체 42.9%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28)

지역별 사업체 현황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스포츠산업 매출액

- 경남의 스포츠산업 매출액은 3조 1,290억원으로 전국의 4.2% 수준이며, 서울(41.1%), 경기(23.4%), 부산(7.5%)에 이어 전국 4위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매출액의 64.5%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29)

지역별 스포츠산업 매출액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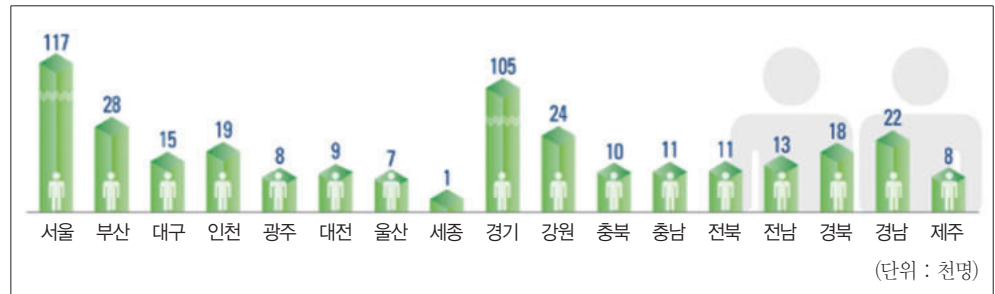
●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

- 경남의 스포츠산업 종사자 수는 22천명으로 전국의 5.2% 수준이며, 서울(27.5%), 경기(24.6%), 부산(6.6%), 강원(5.6%)에 이어 전국 5위로 나타남

- 스포츠산업 종사자의 52.1%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

<그림 4-5-30>

지역별 종사자 수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8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생활체육 인구의 증가

- 2019년 기준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66.6%로 전년 대비 4.4%p 증가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7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생활체육 참여율: 50대 70.8%, 30대·40대 70.3%, 20대 69.2%, 60대 69.0%, 70대 이상 57.8%, 10대 50.1%
- 2019년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은 걷기가 41.6%로 가장 높았으며, 등산 17.3%, 보디빌딩 16.2%, 수영 9.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일상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걷기, 보디빌딩 등에 대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5-58>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구분	걷기 (조깅, 속보)	등산	보디빌딩 (헬스)	수영	요가, 태보, 필라테스
2018년	35.2	21.0	13.9	7.8	7.2
2019년	41.6	17.3	16.2	9.0	7.8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1+2+3순위 기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체육활동의 효과는 정신적 건강 유지가 86.7%로 가장 높았으며, 신체적 건강 유지 84.2%, 일상생활의 도움 67.5%, 의료비 절감 5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민 생활체육 참여율은 고령화 사회 진입, 건강에 대한 인식 확산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 건강에 대한 개념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삶의 질 향상이 체육활동의 주요 목적이 되는 등 앞으로도 이러한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

<표 4-5-59>

생활체육의 효과

구분	정신적 건강 유지	신체적 건강 유지	일상생활의 도움	의료비 절감
생활체육의 효과	86.7	84.2	67.5	55.9

주 :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자 대상.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생활체육조사.

● 스포츠 복지의 중요성 증대

- 최근 스포츠 정책은 단순히 국민화합, 국위선양 등의 가치를 넘어 개인의 스포츠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음(강원연구원, 2018)
- 과거 스포츠 복지는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저소득계층의 유아·청소년,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진돼 왔으나,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체육 지원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민체력인증센터, 공공스포츠클럽 설치 등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경남도 또한 생활체육 교실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대축전, 여성 및 실버축구 생활체육 육성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등 각 계층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복지 정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 2035년 경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30.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⁹⁹⁾,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복지 수요와 건강·육아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2017년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은 1.3조달러(약 1,430조원) 규모로 최근 3년간 연평균 3.5%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판매수입 규모 약 1.4조달러와 비슷한 규모임(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포츠산업의 고용유발계수는 10.7명(전산업 8.5명)으로 높은 고용유발 효과를 가진 일자리 창출 산업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고용 규모는 2017년 기준 42.3만명으로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4.5%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여 투자 및 육성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까지 국내 스포츠산업 시장을 95조원 규모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스포츠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각 지자체 또한 지역에 산재한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한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공하고 있음
- 경남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숙박시설 및 음식점, 관광시설 할인 등 제공
- 경남의 경우, 2019년 동계시즌 기간 2,264개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385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하였음¹⁰⁰⁾
 - 전지훈련단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파급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자체별 국내외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99) 경상남도(2017), 경상남도 시군별 장래인구추계(2015~2035년).

100) 경상남도 보도자료(2019-03-17일), 경남도, 전국 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짝.

- 또한, 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관광산업의 육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선수단,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스포츠관광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4차 산업 융·복합 스포츠 시장의 부상

- 가상·증강현실, 3D 프린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기술과 스포츠 분야의 접목으로 신시장이 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문화체육관광부, 2020)
 -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승마 등 종목 확장에 따른 지속 성장
 - 아디다스 스마트팩토리는 개인 맞춤형 신발을 3D 프린팅을 통해 5시간 만에 완성
 -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시장은 2016~2022년까지 연평균 40.1%의 증가세로 약 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스크린골프, 스크린야구 등과 같은 여가성 콘텐츠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의료, 미디어 등 연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스포츠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2014년 35억달러(약 3조 85백억원)에서 2021년 149억달러(약 16조 39백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체육 및 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로 관련 기술 및 콘텐츠에 대한 시장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 이에 따라, 각 산업과 기술을 융·복합한 스포츠 R&D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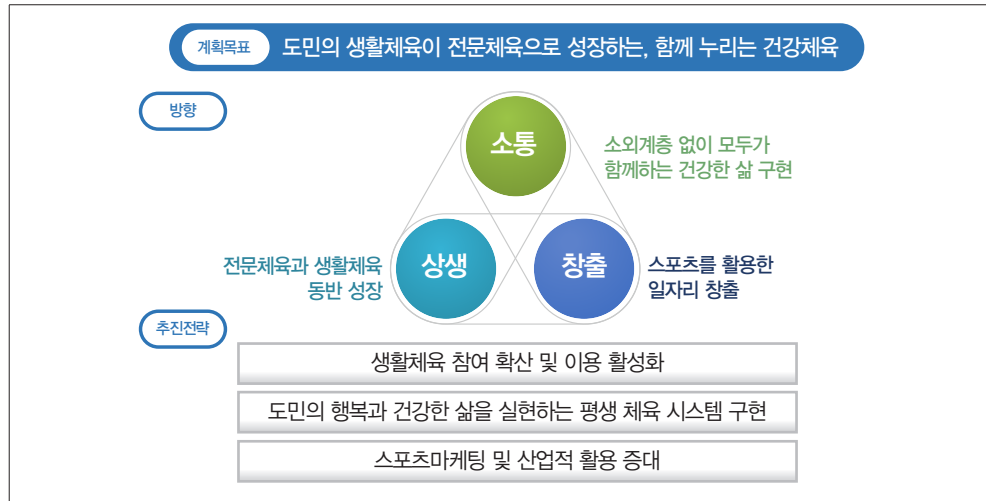
- 2017년 세계 스포츠이벤트 산업 규모는 900억달러(약 103조원)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문화체육관광부, 2019)
- 스포츠이벤트 유치는 타 산업 대비 역사, 자연환경, 문화, 사회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관련 관광객을 효과적으로 유입하여 직접적 지역 경제파급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경남연구원, 2018; 김민철, 2007)
- 또한, 메가 이벤트 유치는 경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브랜드 형성, 사회적 통합 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지역발전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4대 스포츠이벤트인 하계 올림픽, 동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유치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으며, 2024년에도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음
-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광주는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부산은 아시아드주경기장, 사직실내체육관, 아시아드CC 등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2019~2020년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 코리아오픈국제탁구대회, LPGA, 동아시아컵국제축구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음

- 지자체별 스포츠이벤트 유치 경쟁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의 공공체육시설 규모를 보유¹⁰¹⁾하고 있는 경남 또한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그림 4-5-31〉

체육 부문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도민의 생활체육이 전문체육으로 성장하는, 함께 누리는 건강체육**
 -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삶을 구현하기 위한 소통의 생활체육 체계 마련
 -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동반 성장하는 상생 시스템 구축
 -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스포츠 일자리 창출

2) 추진전략

● 체육 부문 핵심지표

〈표 4-5-60〉

체육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생활체육 참여율	69%	75%	80%
인구만명당 공공체육시설	7.7%	10.7%	13.7%

●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이용 활성화

-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 생활체육 참여도 제고

101) 공공체육시설 면적 16,558,152㎡로 전국 3위.

-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를 통해 공공체육서비스 질 향상 및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 체육 시스템 구현

- 3~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체육 프로그램 제공 및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남형 체육(스포츠)복지 체계 구축
- 스마트 체육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스포츠마케팅 및 산업적 활용 증대

-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융·복합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해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경남 스포츠 위상 강화와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도모

4. 추진시책

1) 생활체육 참여 확산 및 이용 활성화

● 일상을 누리는 생활밀착형 체육 공간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

- 마을 단위 생활밀착형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민의 일상적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및 도민 스포츠 향유권 확대
-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 도민 생활체육동호회(스포츠클럽)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도내 4개 지자체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함안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거창군 스포츠클럽 지원 조례)

● 생활체육-전문체육 선순환 체계 구축

- 지역 대학 연계 생활체육지도사 연수기관 선정을 통한 전문가 양성 기반 구축 및 도내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교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등 대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공공스포츠클럽, 체육팀을 연계한 전문체육인 발굴·육성을 통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동반성장 시스템 구축
- ‘지역스포츠과학거점센터’ 유치를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체육인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10개소 운영 중
 - 지원내용 : 학생선수, 일반선수, 공공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회원 등 대상 개인별 운동처방 및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 소속선수 및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

2) 도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실현하는 평생 체육 시스템 구현

● 3~100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 체육 프로그램 제공

- 유아(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청소년 대상 맞춤형 스포츠 활동 강화를 통한 평생 체육 습관 함양
- 청년, 중·장년 대상 직장인 체육활동 지원,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 프로그램(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 노인 거점시설 대상) 운영
- 도내 공공체육시설 할인, 스포츠 관람 할인 등 ‘(가칭)경남 체육주간’ 운영을 통해 도민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의 장 마련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도민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경남형 체육(스포츠) 복지 체계 구축

- 저소득 계층,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농·어촌 지역 등 스포츠 소외계층 대상 ‘(가칭) 경남 찾아가는 체육 버스’ 운영 및 작은 체육관 조성 등 소외계층 체육(스포츠) 향유권 보장
-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및 장애인을 위한 체육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맞춤형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가칭) 경남 도민 생활체육 축제’ 개최를 통한 교류의 장 마련

3) 스포츠 마케팅 및 산업적 활용 증대

● 지역 기반 스포츠 기업 육성 및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 ‘경남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연계한 창업, 사업화 및 제품화, 홍보·마케팅, 해외 진출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 사회적기업 육성
- IoT,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AR·VR을 활용한 가상 스포츠, 스포츠 빅데이터 등 경남 미래 유망 스포츠산업 전략 분야 선정 및 R&D-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대학을 연계한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개설 등을 통한 실무 인재 양성으로 경남 스포츠 신시장 창출 기반 조성

●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 및 메가 스포츠이벤트 유치를 통한 지역 파급효과 극대화

- 경남 방문스포츠팀 유치 지원센터를 연계한 경남형 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웰니스, 역사문화, 해양 레포츠 등 테마별 프로그램 개발
- 재활 운동 및 재활 방지, 멘탈케어 프로그램 등 선수 재활을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경남 전지훈련재활센터’ 구축을 통한 전지훈련단 사계절 유치 시스템 구축
- 아메리카스컵, LPGA 등 분야별 유치 가능한 메가 스포츠이벤트 선정 및 유치 전략 수립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6장

지역자원

- 제1절 수자원
- 제2절 토지이용
- 제3절 에너지·자원

제6장

지역자원

제1절 수자원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 수자원 현황 및 전망

(1) 경상남도 생활용수 피해 및 용수부족량 현황

- 2018년 기준 기상,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 가뭄 예·경보 지역은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 경보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농업용수 가뭄 경보는 밀양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경상남도 내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피해는 2019년 산청군에서 1건, 2018년 양산시에서 총 7건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상수도 미공급지역에서 발생함
- 최근 2년간 가뭄으로 인한 생활용수 피해 인구는 총 935명 발생함

〈표 4-6-1〉
경상남도 생활용수
피해 현황

구분	시·군	수원 및 공급시설			피해내용				
		수도구분	수원구분	시설명 (마을명)	피해기간		피해유형	피해내용	피해인구 (명)
					시작일	종료일			
2019 년	산청군	소규모 급수시설	지하수	당터	2018. 01.01	2019. 04.26	제한급수	격일급수	60
		마을 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가산리 가산	2018. 01.04	2018. 01.04	운반급수	운반급수 8 회	121
		마을 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법거리 창기	2018. 01.04	2018. 01.04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216
		마을 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내포(양 달) 마을	2018. 01.04	2018. 01.04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43
2018 년	양산시	마을 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내포리 선장	2018. 01.04	2018. 01.04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93
		마을 상수도	계곡수	영포리 영포	2018. 01.04	2018. 01.04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161
		마을 상수도	지하수, 계곡수	영포리 어영	2018. 01.04	2018. 01.04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113
		마을 상수도	지하수	서룡리 범서	2018. 01.16	2018. 01.16	제한급수	6시간급수/ 일	128

자료 : 국가가뭄정보분석센터(www.drought.go.kr).

- 경상남도 생공농업용수 부족량 전망에 의하면 합천댐 중권역은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고, 남강댐 중권역은 생공용수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표 4-6-2〉

경남 생·공용수 및 하천유지유량 부족량 전망

구분	생활·공업용수 부족량(백만㎥/년)									
	지역용수 고려전		암반지하수 연공급량	암반지하수 반영		지하수시설 용량 반영 시		물부족량 최종(안)	최대 물부족 발생연도	하천유지 유량 부족량
	부족량	부족일		일공급량 (천㎥/일)	부족량	시설용량 (천㎥/일)	부족량			
합천댐	1.87	85	3.82	10.5	0.98	68.00	-	0.98	1994	2.21
황강	-	-	1.86	5.1	-	33.43	-	-	-	-
낙동창녕	-	-	4.14	11.3	-	81.71	-	-	-	-
남강댐	3.20	75	14.96	41.0	0.95	232.08	-	0.95	1992	-
남강	-	-	18.44	50.5	-	186.34	-	-	-	-
낙동밀양	-	-	13.79	37.8	-	363.69	-	-	-	-
밀양강	-	-	11.52	31.6	-	210.63	-	-	-	-
남해도	0.67	80	4.10	11.2	-	91.94	-	-	-	-
거제도	-	-	6.06	16.6	-	117.79	-	-	-	-
낙동강남해	-	-	31.03	85.0	-	363.36	-	-	-	-

자료 : 제4차 수자원장기종합계획(국토교통부).

(2) 경상남도 홍수 피해 현황

- 2018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남도 우심지역 피해 건수는 총 3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6년 태풍 차바로 인해 674억원의 홍수피해액이 발생함

(단위 : 명, 천원)

〈표 4-6-3〉

경상남도 우심지역 피해액 현황

구분	시·군	이재민	인명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계
합계		50	-	666,600	811,477	878,345	62,422,850	3,122,868	76,671,218
2018년 소계		6	-	3,600	47,180	31,896	3,080,515	359,185	9,291,454
8.26~9.1 호우	함양군	-	-	2,700	-	30,396	3,080,515	8,535	3,122,146
10.4~10.7 태풍 '콩레이'	거제시	6	-	900	47,180	1,500	-	350,650	6,169,308
2017년 소계		-	-	-	-	-	-	-	-
2016년 소계		44	-	663,000	764,297	846,449	62,342,335	2,763,683	67,379,764
	창원시	5	-	264,600	23,098	466,446	4,796,005	361,679	5,911,828
	통영시	4	-	50,400	169,922	451	8,754,556	1,024,639	9,999,968
10.3~10.6 태풍 '차바'	김해시	-	-	42,000	-	26,560	7,296,331	59,042	7,423,933
	거제시	-	-	34,200	357,630	8,574	11,320,420	498,627	12,219,451
	양산시	6	-	235,800	9,199	337,998	27,551,180	32,897	28,167,074
	남해군	29	-	36,000	204,448	6,420	2,623,843	786,799	3,656,510

자료 : 행정안전부(2017~2019), 2018 재해연보; 2017 재해연보; 2016 재해연보.

(3) 낙동강 수질 현황

- 경상남도 대표 수질측정망의 5년(2014~2019) 평균 수질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 경계지점인 대암-1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국가하천(황강, 남강, 밀양강) 가운데 남강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mg/L, m³/s)

〈표 4-6-4〉

5년 평균 경남 대표 수질측정망 (2014~2019)

구분	BOD	COD	총질소 (T-N)	총인 (T-P)	총유기탄소 (TOC)	유량	비고
대암-1	2.5	7.3	3,543	0.049	5.2	189.0	대구-경남 경계
황강5	0.8	3.7	1,849	0.027	2.3	21.8	황강 말단
남강4-1	2.3	5.8	2,260	0.041	3.9	60.1	남강 말단
남지	2.0	6.9	2,608	0.047	3.2	-	남강 합류후
밀양강3	2.3	5.2	2,497	0.040	3.4	19.3	밀양강 말단
삼랑진	2.0	7.0	2,624	0.049	3.3	-	밀양강 합류후
물금	2.0	6.3	2,655	0.039	4.3	268.7	경남-부산 경계

(4) 낙동강 하류구간 녹조 현황

- 경상남도 산하의 다기능보는 합천창녕보와 창녕함안보가 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유해남조류가 대량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합천창녕보에서 2018년 8월 22일 남조류 개체 수 126만cells/mL을 기록함
- 상수원구간(27개 지점)에서는 남조류 개체 수 1,000~10,000cells/mL까지를 관심단계, 10,000~ 1,000,000cells/mL까지를 경계단계, 1,000,000cells/mL 이상을 조류 대발생으로 구분하여 조류경보를 발령함

(단위 : 일)

〈표 4-6-5〉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적용 시 발령일수 변화

구분	등급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6월)
합천 창녕보	관심	28	60	61	80	99	38	3
	경계	49	61	129	51	52	25	18
	경계(친수)	-	5	10	12	14	21	-
창녕 함안보	관심	67	45	48	123	49	83	14
	경계	31	88	135	69	126	42	7
	경계(친수)	-	-	11	-	14	28	-

주 : 관심 1,000~10,000cells/mL, 경계 10,000~100,000cells/mL, 경계(친수구간) 100,000cells/mL 이상
 자료 : 환경부(2019), 4대강 16개보 개방·모니터링 종합 분석 보고서(17.6~19.6)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빈도 및 강도 증대

- 기후변화로 극한 가뭄이 발생하여 15년에는 역대 3위(73년이래)의 최저강수량을 기록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5~7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 중이며, 지역별 강우 편차가 커지면서 국지적인 가뭄이 심해지는 추세

● 지역적 물공급의 안정성과 형평성 취약

- 지속적인 수도사업으로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96.1%(14년)이나, 농어촌 지역 등은 여전히 물이용 취약성 지속
- 1990년대 이후 가뭄 시 3회 이상의 물부족을 경험한 상습 가뭄 피해 지역은 49개 시·군으로 물공급의 안정성과 형평성 부족

●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 변화 및 초과홍수 빈발

- 강수량 증가, 강수일수 감소, 단기 집중호우 증가 등 강우 패턴의 변화

●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홍수피해 잠재성 및 침수피해 증가

- 지속적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침수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취약성 증가
- 기후변화에 따른 수문 특성 변화, 토지이용 고도화, 지하 공간 내수침수, 내수배제 불량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침수위험성이 증가

● 하천환경변화에 따른 수질 악화

- 낙동강 주요 지역 12~13년 평균 수온(8월)이 05~09년 대비 0.4~3.0℃ 증가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홍수로 인한 비점오염물질, 탁수 유입으로 수질 악화 우려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비전

- 도민이 함께 누리는 물걱정 없는 건강한 낙동강

2) 추진전략

- 수자원 부문 핵심지표

〈표 4-6-6〉

수자원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하천유지유량 달성률	78.0%	90.0%	95.0% 이상
수질 BOD(남지지점)	2.0mg/L	2.0mg/L 이하	2.0mg/L 이하
수질 T-P(남지지점)	0.038mg/L	0.035mg/L 이하	0.032mg/L 이하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 농어촌 상수도 확충 및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 관리를 추진 중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확대되고 있으나 도서지역 등 상습가뭄지역이 있음
-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여유량이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한 지역으로 전환·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
-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국지적인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용수 공급 체계 구축 필요

- 홍수에 안전한 경상남도 구축

- 낙동강 등 주요 국가하천에 비해 지류하천(기타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홍수에 취약한 실정
-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따라 도시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음

-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

- 비점오염원은 하천오염부하의 30~40%를 차지하지만, 지속적이고 유량이 적은 저수기, 갈수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적 관리 필요
-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면 증대로 건강한 물순환 구조 훼손 심화, 기후변화는 강우 강도가 강해지는 경향으로 예측되고 있어 비점오염원 유입 저감이 필요함
- 하천수 사용에 대한 인식은 과거 최대한의 가용수량 확보 및 이용에서 자연과 사람이 공유해야 하는 것으로 패러다임 변화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 17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 핵심 가치 및 5대 정책 목표가 발굴되었음

- 현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수립 중이며, 향후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며, 공정·효율·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함

4. 추진시책

- **상습가뭄지역 맞춤형 물공급 미급수지역 상수도 보급 확대**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추진
- **경남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 이후 경상남도 맞춤형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필요
- **낙동강 홍수 방어 능력 제고**
 -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 종합정비
 - 기존 수자원 시설물의 홍수 대응 안정성 강화
 - 도시 홍수피해 방지를 고려한 도시계획 필요
- **건강한 물순환 시스템 구축**
 - 저영향 도시개발 확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홍보
 - 빗물 이용실태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 친환경 물순환 도시 구현을 위한 제도 정비
-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신증설**
 - 경남도내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증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신증설
- **하천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 물순환 선도도시 등 그린 빗물 인프라 조성
 - 저류시설 설치(초기 오염물질 저류)
 - 경남 공익형 직불제
 - 초지, 습지, 수림대 등 조성
 - 우천 시 농어촌 야적퇴비 관리강화
- **하천유지유량 확보**
 - 합천댐 상류 거창2지점 하천유지용수 확보 방안이 필요

제2절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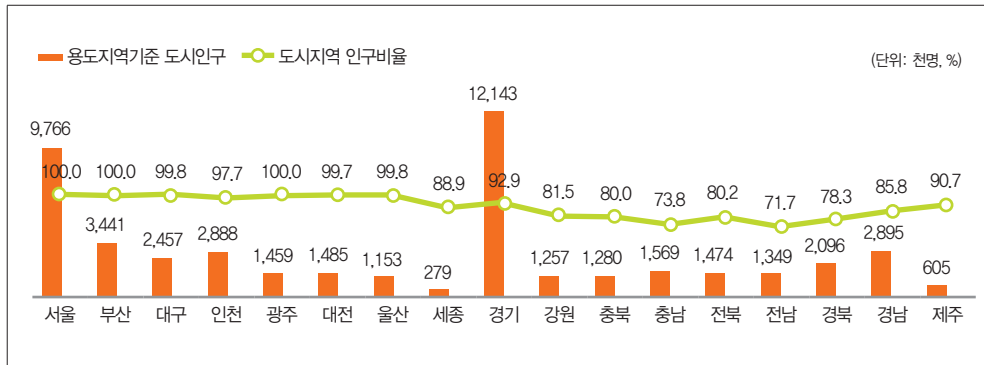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도시화 추세

- 우리나라 도시화율은 1960년 39.1%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5년 90%대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인구 5,182만명 중 4,759만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상남도의 도시화율은 2000년 79.7%에서 2018년 85.8%로 6.1%p 증가하였으며, 전국도 단위 기준 경기도(92.9%), 제주도(90.7%)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6-1〉

전국 시도별
용도지역기준
도시인구 비율(2018년)



자료 : 국토교통부(2018), 도시계획현황통계.

- 2000년대 이후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 저성장 및 도시화 성숙 등으로 신규 토지·이용개발에 대한 수요는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양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관리가 필요함

〈표 4-6-7〉

전국 및 경상남도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단위 : 천명, %)

구분	전체인구		용도지역기준 도시인구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도시지역 인구 비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용도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전국	경남
2000년	47,964	3,109	42,375	2,477	42,055	2,321	88.3	79.7	87.7	74.7
2005년	48,782	3,160	43,959	2,668	43,445	2,323	90.1	84.4	89.1	73.5
2010년	50,515	3,290	45,933	2,780	45,278	2,469	90.9	84.5	89.6	75.0
2015년	51,529	3,365	47,297	2,854	46,698	2,667	91.8	84.8	90.6	79.3
2018년	51,826	3,374	47,596	2,895	47,148	2,668	91.8	85.8	91.0	79.1

주 : 용도지역기준(전국 인구에서 도시지역 내 거주인구 비율), 행정구역기준(전국 인구에서 읍급 이상 거주인구 비율).
자료 : 국토교통부(각연도), 도시계획현황통계.

- 2018년 말 기준 경상남도 시 단위지역의 도시화율은 92.2%, 군 단위지역은 48.2%로 2010년(시 지역 91.3%, 군 지역 47.4%)과 비교하였을 때 시·군간 도시화율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도내 시 단위지역 중 도시화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산시(98.8%), 가장 낮은 곳은 밀양시(64.4%)로 나타나며, 군 단위지역은 거창군(65.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 비해 2018년 말 기준 도시화율이 크게 증가한 지역은 창녕군(10.1%p)이며, 이어서 고성군(7.2%p), 사천시(3.7%p) 순으로 나타남

(단위 : 명, %)

〈표 4-6-8〉
경상남도 시군별
도시지역 인구 현황

구분	전체인구		용도지역기준 도시인구		행정구역기준 도시인구		도시지역 인구 비율			
							용도지역 인구기준		행정구역 인구기준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2010년	2018년
경남	3,290,536	3,373,988	2,780,310	2,894,899	2,469,264	2,668,499	84.5	85.8	75.0	79.1
시단위	2,782,084	2,886,767	2,539,494	2,660,218	2,285,211	2,461,905	91.3	92.2	90.0	92.5
창원시	1,090,181	1,053,601	1,046,197	1,034,636	1,046,197	980,051	96.0	98.2	96.0	93.0
진주시	335,037	345,987	311,549	315,000	270,966	284,697	93.0	91.0	80.9	82.3
통영시	140,297	133,720	104,156	98,953	96,144	80,814	74.2	74.0	68.5	60.4
사천시	114,148	113,888	92,316	96,356	69,844	66,283	80.9	84.6	61.2	58.2
김해시	503,348	533,672	484,917	508,824	341,126	497,325	96.3	95.3	67.8	93.2
밀양시	110,479	106,744	69,847	68,730	66,086	66,665	63.2	64.4	59.8	62.5
거제시	228,355	250,516	174,084	193,200	176,695	199,017	76.2	77.1	77.4	79.4
양산시	260,239	348,639	256,428	344,519	218,153	287,053	98.5	98.8	83.8	82.3
군단위	508,452	487,221	240,816	234,681	184,053	206,594	47.4	48.2	76.4	88.0
의령군	30,162	27,667	13,107	12,603	9,569	9,541	43.5	45.6	31.7	34.5
함안군	67,207	67,025	35,557	36,864	18,371	39,840	52.9	55.0	27.3	59.4
창녕군	61,714	63,396	28,300	35,457	27,918	29,887	45.9	55.9	45.2	47.1
고성군	57,231	53,243	25,453	27,510	25,453	25,313	44.5	51.7	44.5	47.5
남해군	49,328	43,990	13,967	13,215	13,967	13,215	28.3	30.0	28.3	30.0
하동군	51,509	47,533	18,572	16,852	11,366	10,425	36.1	35.5	22.1	21.9
산청군	35,591	35,952	10,677	5,824	6,636	6,956	30.0	16.2	18.7	19.3
함양군	41,197	40,044	25,973	18,961	18,928	18,729	63.1	47.4	46.0	46.8
거창군	63,421	62,455	39,901	40,890	39,901	40,961	62.9	65.5	62.9	65.6
합천군	51,092	45,916	29,309	26,505	11,944	11,727	57.4	57.7	23.4	25.5

자료 : 국토교통부(각연도), 도시계획현황통계.

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018년 말 기준 경상남도 토지면적은 총 10,540km²로 국토면적(100,377km²)의 10.5%를 차지하며, 지목별로는 임야 6,988km²(66.3%), 전·답 1,837km²(17.5%)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급속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전·답 등 농지(-4.8%) 및 임야(-1.3%) 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각종 도시개발사업, 도로 확충사업 등으로 대지(13.9%)와 도로(13.5%) 면적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 천m², %)

〈표 4-6-9〉

전국 및 경상남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추이

구분	2010년		2018년		증감률 (2010년 대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계	100,033,076	100.0	100,377,668	100.0	0.3
	전	7,782,570	7.8	7,609,863	7.6	-2.2
	답	11,834,204	11.8	11,223,354	11.2	-5.2
	임야	64,504,381	64.5	63,710,518	63.5	-1.2
	대지	2,743,527	2.7	3,143,013	3.1	14.6
	도로	2,858,235	2.9	3,306,941	3.3	15.7
	하천	2,833,443	2.8	2,859,567	2.8	0.9
	기타	7,476,716	7.5	8,524,412	8.5	14.0
	계	10,532,726	100.0	10,540,116	100.0	0.1
경남	전	613,782	5.8	595,615	5.7	-3.0
	답	1,315,318	12.5	1,241,519	11.8	-5.6
	임야	7,078,266	67.2	6,988,337	66.3	-1.3
	대지	246,007	2.3	280,267	2.7	13.9
	도로	313,222	3.0	355,541	3.4	13.5
	하천	288,969	2.7	294,921	2.8	2.1
	기타	677,162	6.4	783,916	7.4	15.8

자료 : 국토교통부(각연도), 지적통계연보

- 경상남도 시군별 토지면적은 합천군 983km²(9.3%), 거창군 803km²(7.6%), 밀양시 798km²(7.5%)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통영시 239km²(2.3%), 남해군 357km²(3.4%) 순으로 낮게 나타남
 - 시 단위지역 : 밀양시 798km²(7.5%), 창원시 747km²(7.1%), 진주시 713km²(6.8%) 순
 - 군 단위지역 : 합천군 983km²(9.3%), 거창군 803km²(7.6%), 산청군 794km²(7.5%) 순
- 임야 및 농경지(전·답)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합천군 9.7%(857km²), 거창군 8.2%(725km²), 산청군 8.0%(710km²)이며, 대지 및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은 창원시 13.6%(86km²), 진주시 8.9%(56km²), 김해시 8.3%(53km²) 순으로 나타남

(단위 : 천㎡, %)

〈표 4-6-10〉

경상남도 시군별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분	합계	비율	전	답	임야	대지	도로	하천	기타
경남	10,540,116	100.0	595,615	1,241,519	6,988,337	280,267	355,541	294,921	783,916
창원시	747,920	7.1	28,331	82,697	425,539	48,142	38,250	16,022	108,939
진주시	712,859	6.8	48,167	87,644	415,014	24,867	31,403	26,582	79,182
통영시	239,847	2.3	31,670	15,804	154,743	9,714	10,693	587	16,636
사천시	398,673	3.8	24,704	58,916	228,907	13,088	18,412	7,945	46,701
김해시	463,431	4.4	17,975	71,594	233,667	24,860	27,792	24,304	63,239
밀양시	798,634	7.5	47,019	114,806	515,364	18,583	20,779	32,574	49,509
거제시	402,986	3.8	23,823	39,515	280,871	16,504	16,000	2,649	23,624
양산시	485,564	4.6	11,859	28,721	358,584	16,826	15,323	13,930	40,321
의령군	482,893	4.6	34,560	54,417	330,375	7,933	12,363	18,339	24,906
함안군	416,606	4.0	38,621	75,629	209,615	10,731	17,683	17,688	46,639
창녕군	532,840	5.1	53,190	90,283	283,864	13,671	17,271	26,578	47,983
고성군	517,932	4.9	29,908	79,342	336,971	11,413	17,241	8,226	34,831
남해군	357,534	3.4	30,879	46,139	238,370	10,426	10,519	3,362	17,839
하동군	675,615	6.4	28,338	82,077	487,290	11,170	18,892	15,885	31,963
산청군	794,552	7.5	26,564	68,518	614,662	10,560	20,379	23,506	30,363
함양군	725,454	6.9	34,330	64,636	558,992	9,166	19,069	14,473	24,788
거창군	803,302	7.6	40,883	77,524	606,934	10,237	18,939	14,027	34,758
합천군	983,474	9.3	44,794	103,257	708,575	12,376	24,533	28,244	61,695

주 : 2018년 12월 말 기준.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지적통계연보.

3) 용도지역 지정현황

- 2018년 말 기준 경상남도의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총면적은 11,819km²로 우리나라 국토면적(106,286km²)의 11.1% 차지하며, 2010년 대비 0.9%(106km²)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대비 도시지역(130km²)과 관리지역(126km²) 면적은 증가하였으나 농림지역(-103km²)과 자연환경보전지역(-48km²)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에도 주거·상업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지역 용도의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인구감소, 저성장 지속 등으로 인해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단위 : 천㎡, %)

〈표 4-6-11〉

전국 및 경상남도
용도지역 지정 현황

구분	2010년		2018년		증감률 (2010년 대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계	105,522,005	100.0	106,285,849	100.0	0.7
	도시지역	17,492,203	16.6	17,788,927	16.7	1.7
	관리지역	25,823,783	24.5	27,222,529	25.6	5.4
	농림지역	50,480,820	47.8	49,350,995	46.4	-2.2
	자연환경보전지역	11,725,199	11.1	11,923,398	11.2	1.7
경남	계	11,710,006	100.0	11,815,823	100.0	0.9
	도시지역	1,877,455	16.0	2,007,720	17.0	6.9
	관리지역	2,769,734	23.7	2,895,890	24.5	4.6
	농림지역	5,064,523	43.2	4,961,885	42.0	-2.0
	자연환경보전지역	1,998,294	17.1	1,950,328	16.5	-2.4

자료 : 국토교통부(각연도), 도시계획현황통계

- 도내 도시지역 비중은 시 단위지역(88.0%)이 높은 반면, 관리지역(71.4%) 및 농림지역(69.0%)은 군 단위지역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시(52.1%), 군(47.9%) 비중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시·군 중에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통영시가 676km²(3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천㎡, %)

〈표 4-6-12〉

경상남도 시군별
용도지역 지정 현황

구분	전체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경남	11,815,823	100.0	2,007,720	100.0	2,895,890	100.0	4,961,885	100.0	1,950,328	100.0
시단위	5,147,597	43.5	1,765,298	88.0	827,133	28.5	1,537,979	31.0	1,017,187	52.1
창원시	969,510	8.2	595,334	29.7	96,733	3.3	172,035	3.5	105,408	5.4
진주시	712,840	6.0	275,744	13.7	149,369	5.2	283,947	5.7	3,780	0.2
통영시	848,660	7.2	61,682	3.1	38,967	1.3	71,703	1.4	676,308	34.7
사천시	452,479	3.8	92,095	4.6	124,902	4.3	170,255	3.4	65,227	3.3
김해시	463,329	3.9	267,088	13.3	102,165	3.5	94,076	1.9	-	-
밀양시	799,005	6.8	61,769	3.1	210,876	7.3	490,439	9.9	35,921	1.8
거제시	417,223	3.5	98,610	4.9	84,788	2.9	163,365	3.3	70,460	3.6
양산시	484,551	4.1	312,976	15.6	19,333	0.7	92,159	1.9	60,083	3.1
군단위	6,668,226	56.5	242,422	12.0	2,068,757	71.4	3,423,906	69.0	933,141	47.9
의령군	483,179	4.1	15,831	0.8	145,447	5.0	315,936	6.4	5,965	0.3
함안군	416,765	3.5	39,479	2.0	170,112	5.9	204,077	4.1	3,097	0.2
창녕군	533,097	4.5	49,409	2.5	196,953	6.8	255,950	5.2	30,785	1.6
고성군	667,231	5.7	23,219	1.2	144,723	5.0	304,137	6.1	195,152	10.0
남해군	579,489	5.0	11,801	0.5	136,570	4.7	153,978	3.1	277,140	14.2
하동군	681,350	5.8	17,536	0.8	205,480	7.1	363,679	7.3	94,655	4.9
산청군	794,594	6.7	10,303	0.5	251,907	8.7	411,307	8.3	121,077	6.2
함양군	724,957	6.1	19,391	1.0	232,959	8.0	376,646	7.6	95,961	4.9
거창군	804,144	6.8	31,907	1.5	262,118	9.1	469,415	9.4	40,704	2.1
합천군	983,420	8.3	23,546	1.2	322,488	11.1	568,781	11.5	68,605	3.5

자료 : 국토교통부(2019), 2018년 도시계획현황통계

4) 개발제한구역 현황

- 2000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창원국가산업단지, 경기도 시화산업단지(11.6km²)를 최초로 해제하였으며, 이후에도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및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였음
- 2018년 말 기준 경남도내 분포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458,962천m²로 행정구역 면적의 4.4%에 해당하며, 대부분 동부권(창원시·김해시·양산시·함안군)에 집중되어 있음

(단위 : 천m², %)

〈표 4-6-13〉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현황

구분	㉠ 행정구역 면적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
		당초지정	해제	㉢ 현재지정	
전국	100,191,565	5,397,110	1,556,453	3,840,657	3.8
경남	10,534,944	719,690	260,728	458,962	4.4
창원시	745,320	261,700	12,726	248,974	33.4
김해시	462,810	117,070	10,708	106,362	23.0
진주시	712,945	196,900	196,900	-	-
통영시	239,222	30,000	30,000	-	-
사천시	398,621	6,100	6,100	-	-
양산시	485,350	101,320	4,216	97,104	20.0
함안군	416,874	6,600	78	6,522	1.6

자료 : 국토교통부(2019), 2018년 도시계획현황통계.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미래 트렌드

● 저성장에 따른 토지이용·개발 수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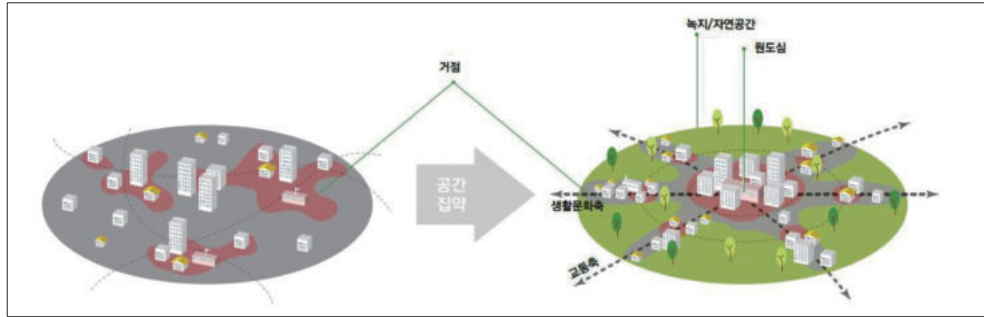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저출생·고령화, 저성장 고착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신규 대규모 개발에 대한 수요는 감소되고 공간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한 계획의 현실화 및 도시의 적절한 개발·관리, 난개발 방지, 집약적 도시공간구조 개편 등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됨

●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복합개발에 대한 수요 증대

- 용도지역 관련 절차의 간소화, 규제 완화 등 자유로운 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와 제도 운영에 관한 권한 위임 및 이양 등의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기술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으로 도시 내 복합적·입체적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4-6-2〉

도시공간 재편과 스마트한 공간 재배치



자료 : 국토교통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대한 요구 증대

- 과거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취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환경, 압축개발, 녹색 인프라 대한 수요 증가, 국민 환경 의식 강화와 개발 관련 갈등 심화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됨
- 기후변화는 에너지 절약적인 도시구조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며,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남 미래변화 전망

●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경쟁력 약화

-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급속한 인구감소로 소멸마을 발생 등 시·군간 불균형 심화가 지속되면서 소외지역 증가, 도시 내부 쇠퇴 문제 등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중소도시의 자생력이 약화되면서 신규 및 대규모 개발수요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 주력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심화

- 도내 주력산업인 기계·조선산업의 침체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산업은 큰 위기를 겪고 있음
- 특히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의 실업증가, 인구 유출, 주변 상권 침체 등으로 도시쇠퇴 및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 등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유희부지 및 기반시설 증가

- 도시쇠퇴 및 시설의 노후화, 신시가지 개발 등의 요인으로 도시 내 유희부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유희부지는 도시 활력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핵심자원으로 정부의 활용정책에 의해 개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균형있고 조화롭게 성장하는,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도시

2) 추진전략

- 토지이용 부문 핵심지표

〈표 4-6-14〉

토지이용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도시지역인구 (콤팩트시티 구현, 인구집중)	290만명	295만명	293만명
개발제한구역 (해제잔여총량+추가수요대응)	458.96km ²	약 20km ² 해제	약 10km ² 해제

(1)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토지이용

- 균형적 도시공간 개발·관리
 - 성장지향형 계획방식에서 인구구조 변화 및 저성장 시대에 적절한 규모로 토지 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 도시계획 수립
- 토지이용의 융·복합화
 - 도시 내부 수요가 높은 단일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중심업무·주거·상업·첨단산업기능 등이 가능한 복합적인 토지이용·개발 유도
- 저성장에 따른 압축적 지역재생 추진
 - 산업·주택·상업·업무공간 공급에 대한 신규 수요는 기성 시가지의 유희부지·공간의 복합적·집약적 활용을 통해 우선 공급하는 등의 도시공간의 압축적 개발을 추진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관리 방안

- 토지이용의 유연화 및 분권화
 - 용도지역과 관련한 내용의 통폐합 및 절차 간소화, 용도지역의 조정 권한 확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개발 유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제도 운용을 도모
-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개발 집중 관리
 - 성장관리방안 수립의 의무화를 통해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 경관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해소
 - 시·군 목표인구의 현실화 등을 통해 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강화

-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시 공공기여 요건 강화, 보전 가치가 낮고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공간 조성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4. 추진시책

1)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토지이용

(1) 균형적 도시공간 개발·관리

- 인구 변화에 대응한 효율적 도시관리 방안

- 기존의 과도한 인구증가를 목표로 한 성장지향형 계획방식에서 벗어나 저성장 시대 부합하는 적절한 규모의 인구예측을 통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필요
- 인구감소, 저성장 고착화 등 지역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은 축소하는 등 도시공간의 집약적·효율적 활용을 유도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개발 추진

- 저성장 기조로 대부분의 지역 산업경제가 침체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지역도 존재함에 따라 시·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방향 설정 시 도시지역·비도시지역 특성과 유형에 맞춘 계획수립 필요

(2) 토지이용의 융·복합화

- 도심 내 복합용지 도입 활성화

- 도시 내부에 수요가 높은 단일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주거, 업무, 상업, 첨단산업 기능 등의 특성이 반영된 복합적·집약적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강화

-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 복합개발 활성화

- 낙후된 도심 기능 회복, 지역거점 육성 등을 위하여 지역의 개발촉진 필요한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활용을 통해 도시적 용도의 점진적 고밀화 추진

(3) 저성장에 따른 압축적 지역재생 추진

- 유희부지의 전략적 활용

- 산업·주택·상업·업무공간 공급에 대한 신규 수요는 기존방식의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성 시가지의 유희부지 및 공간의 복합적 활용을 통해 우선 공급하는 등 도시공간의 압축적 개발을 추진

- 기존 도심의 효율적 재생을 위해 도심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신규 토지 공급은 지양하도록 하며, 구도심과 구시가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저이용·미이용 토지와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재생 추진 등 효과적인 개발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2)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토지이용·관리 강화

(1) 토지이용의 유연화 및 분권화

● 토지이용 규제의 효율화

- 용도지역 지정 및 변경 절차 중복,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기본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용도지역 관련 내용의 통폐합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

●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 제도 운용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허용용도 확대 등 용도지역에 대한 지자체장의 조정 권한 확대를 통한 지역 맞춤형 개발 유도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용도지역 제도 운용을 도모

(2) 성장관리방안을 통한 개발 집중 관리

●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수립 의무화로 기존의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고 자연 경관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능 대상 지역 확대 등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난개발 방지를 위해 미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시·군 목표인구 현실화 및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강화를 통해 토지이용의 계획적인 이용 및 관리 유도(시가화예정용지의 계획적 관리 등)

(3)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시 공공성 강화

- 개발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환수시스템 마련, 공공용지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 강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시 공공성이 미약한 사업은 해제를 불허하는 등 지역 차원의 해제 제도 공공성 강화

● 개발제한구역 내 여가·휴식 공간 조성

- 보전 가치가 다소 낮고 접근성이 높은 구역을 대상으로 도민의 문화, 체육,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을 조성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제3절

에너지·자원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1차 에너지 부문

● 1차 에너지 생산량

- 국내 에너지 생산량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하여 2017년 12월 기준 49,995 KTOE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석탄/무연탄의 생산량은 2007년 이후 연평균 6.3%씩 감소하여 전체 에너지 비중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KTOE, %)

〈표 4-6-15〉

국내 에너지
생산현황
(수입 제외)

구분	석탄/무연탄	LNG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합계	
2007년	생산량 (비중)	1,342 (3.5)	353 (0.9)	1,084 (2.8)	30,731 (80.2)	4,828 (12.6)	38,338 (100.0)
2008년	생산량 (비중)	1,289 (3.2)	236 (0.6)	1,196 (3.0)	32,456 (80.4)	5,198 (12.9)	40,376 (100.0)
2009년	생산량 (비중)	1,171 (2.9)	498 (1.2)	1,213 (3.0)	31,771 (79.2)	5,480 (13.7)	40,133 (100.0)
2010년	생산량 (비중)	969 (2.4)	539 (1.3)	1,391 (3.4)	31,948 (78.1)	6,064 (14.8)	40,912 (100.0)
2011년	생산량 (비중)	969 (2.3)	451 (1.0)	1,684 (3.8)	33,265 (74.2)	6,618 (18.8)	42,987 (100.0)
2012년	생산량 (비중)	942 (2.2)	436 (1.0)	1,615 (3.8)	31,719 (74.2)	8,036 (18.8)	42,748 (100.0)
2013년	생산량 (비중)	817 (2.0)	463 (1.1)	1,771 (4.3)	29,283 (70.9)	8,987 (21.7)	41,321 (100.0)
2014년	생산량 (비중)	787 (1.7)	322 (0.7)	1,650 (3.5)	33,002 (70.6)	10,956 (23.5)	46,716 (100.0)
2015년	생산량 (비중)	794 (1.6)	188 (0.4)	1,223 (2.5)	34,765 (69.8)	12,839 (25.8)	49,809 (100.0)
2016년	생산량 (비중)	777 (1.6)	154 (0.3)	1,400 (2.8)	34,181 (68.2)	13,575 (27.1)	50,087 (100.0)
2017년	생산량 (비중)	702 (1.4)	341 (0.7)	1,490 (3.0)	31,615 (64.4)	15,847 (30.5)	49,995 (100.0)
연평균 증감률		-6.3	-0.3	3.2	0.3	12.6	2.7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 월보, 2019.03.

-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1차 에너지원은 수력과 신·재생에너지이며 2017년 기준 신·재생에너지가 60%, 수력 40%를 차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와 수력은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각각 연평균 14.2%, 6.2%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단위 : KTOE, %)

〈표 4-6-16〉

경상남도
1차 에너지 생산 추이

구분	합계		수력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생산량	비중
2007년	316	100.0	146	46.2	170	53.8
2008년	398	100.0	224	56.3	174	43.7
2009년	416	100.0	233	56.0	183	44.0
2010년	383	100.0	175	45.7	208	54.3
2011년	558	100.0	291	52.2	267	47.8
2012년	593	100.0	281	47.4	312	52.6
2013년	682	100.0	312	45.7	370	54.3
2014년	1,072	100.0	346	32.3	726	67.7
2015년	933	100.0	281	30.1	652	69.9
2016년	904	100.0	297	32.9	607	67.1
2017년	906	100.0	267	29.5	639	70.5
합계	7,161	100.0	2,853	39.8	4,308	60.2
연평균 증가율	11.1	-	6.2	-	14.2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각연도).

● 1차 에너지 공급량

- 2017년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총공급량은 302,065 KTOE이며 2007년 236,678 KTOE과 비교하여 매년 2.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에너지 공급량은 증가하였으나 석유와 원자력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는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공급체계가 점차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등 오염원이 적게 발생하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함

(단위 : KTOE, %)

〈표 4-6-17〉

우리나라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구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236,678	264,053	286,936	293,778	302,065	2.5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석탄	59,653	77,142	85,401	81,499	86,177	3.7
(비중)	(25.2)	(29.2)	(29.8)	(27.7)	(28.5)	
석유	105,718	104,499	109,094	117,605	119,400	1.2
(비중)	(44.7)	(39.6)	(38.0)	(40.0)	(39.5)	
천연가스	34,663	43,008	43,613	45,518	47,536	3.2
(비중)	(14.6)	(16.3)	(15.2)	(15.5)	(15.7)	
수력	1,084	1,391	1,223	1,400	1,490	3.2
(비중)	(0.5)	(0.5)	(0.4)	(0.5)	(0.5)	
원자력	30,731	31,948	34,765	34,181	31,615	0.3
(비중)	(13.0)	(12.1)	(12.1)	(11.6)	(10.5)	
신·재생	4,828	6,064	12,839	13,575	15,847	12.6
(비중)	(2.0)	(2.3)	(4.5)	(4.6)	(5.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경상남도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2017년 19,949 KTOE으로 우리나라 전체 1차 에너지 공급량 대비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연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음
- 원자력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2007년부터 연평균 14.2% 증가하였고 천연가스와 수력도 각각 연평균 7.2%, 6.2%씩 크게 증가하고 있음

〈표 4-6-18〉

경상남도
1차 에너지원별 공급량

(단위 : KTOE, %)

구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비중)	17,416 (100.0)	20,883 (100.0)	20,708 (100.0)	20,818 (100.0)	19,949 (100.0)	1.4
석탄 (비중)	12,047 (69.2)	14,968 (71.7)	14,143 (68.3)	13,998 (67.2)	12,854 (64.4)	0.7
석유 (비중)	4,117 (23.6)	4,323 (20.7)	3,880 (18.7)	4,078 (19.6)	4,309 (21.6)	0.5
천연가스 (비중)	936 (5.4)	1,208 (5.8)	1,753 (8.5)	1,837 (8.8)	1,879 (9.4)	7.2
수력 (비중)	146 (0.8)	175 (0.8)	281 (1.4)	297 (1.4)	267 (1.3)	6.2
신·재생 (비중)	170 (1.0)	208 (1.0)	652 (3.1)	607 (2.9)	639 (3.2)	14.2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2018),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 최종에너지¹⁰²⁾ 부문

●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 2017년 우리나라 최종에너지 총소비량은 233,901 KTOE로 2007년 181,498 KTOE과 대비하여 매년 2.6% 증가하였음
- 경상남도는 2007~2017년 매년 평균 2.3%씩 최종에너지 총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대비 4% 비율에 해당하는 9,297 KTOE을 소비하고 있음
- 에너지원별로 살펴보면, 2017년 현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에너지원은 석유제품으로 46%를 차지하며 전력과 도시가스가 각각 32%, 17%로 뒤를 잇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는 2007년 163 KTOE에서 2017년 351 KTOE로 증가하여 연평균 증가율 8%를 기록하면서 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가스는 특히 2007년 대비 매년 2.6%씩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전체 에너지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가고 있으며 석탄은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102)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 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 에너지를 의미함(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단위 : KTOE, %)

〈표 4-6-19〉

**경상남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량**

구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전국	181,498	194,971	218,006	225,160	233,901	2.6
경남 (비중)	7,451 (100.0)	8,329 (100.0)	8,976 (100.0)	9,023 (100.0)	9,297 (100.0)	2.2
석탄 (비중)	53 (0.7)	34 (0.4)	59 (0.7)	58 (0.6)	49 (0.5)	-0.8
석유제품 ²⁾ (비중)	4,031 (54.1)	4,247 (51.0)	3,868 (43.1)	4,056 (45.0)	4,281 (46.0)	0.6
천연 및 도시가스 (비중)	873 (11.7)	1,115 (13.4)	1,538 (17.1)	1,549 (17.2)	1,583 (17.0)	6.1
전력 (비중)	2,304 (30.9)	2,713 (32.6)	2,913 (32.5)	2,967 (32.9)	2,980 (32.1)	2.6
열에너지 (비중)	28 (0.4)	34 (0.4)	34 (0.4)	37 (0.4)	53 (0.6)	6.6
신·재생에너지 (비중)	163 (2.2)	186 (2.2)	565 (6.3)	357 (4.0)	351 (3.8)	8.0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각연도).

●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량**

- 경상남도의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살펴보면 2017년 현재 가장 많은 소비량이 나타나는 부문은 산업 부문으로 3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2.1%의 증가율을 보임
- 뒤를 이어 수송 부문 최종에너지 소비량이 2017년 현재 2,925 KTOE 으로 3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 부문과 달리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가정·상업 부문은 2017년 기준 2,212 KTOE 수준의 소비량을 보이며 전체 대비 23.8% 수준으로 산업, 수송, 가정·상업 순으로 최종에너지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단위 : KTOE, %)

〈표 4-6-20〉

**경상남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량**

구분	2007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합계 (비중)	7,451 (100.0)	8,329 (100.0)	8,976 (100.0)	9,023 (100.0)	9,297 (100.0)	2.2
산업 (비중)	2,976 (39.9)	3,415 (41.0)	3,689 (41.1)	3,473 (38.5)	3,678 (39.6)	2.1
수송 (비중)	2,331 (31.3)	2,512 (30.2)	2,773 (30.9)	2,892 (32.1)	2,925 (31.5)	2.3
가정·상업 (비중)	1,893 (25.4)	2,135 (25.6)	2,045 (22.8)	2,178 (24.1)	2,212 (23.8)	1.6
공공·기타 (비중)	251 (3.4)	267 (3.2)	469 (5.2)	480 (5.3)	483 (5.2)	6.8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각연도).

103) 원유를 정제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으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등의 연료류와 LNG, LPG 등 가스류, 윤활유, 그리스, 공업용 석유제품(용제, 납사 등), 혼합가공유, 아스팔트, 파라핀 왁스 등 8품목으로 구분.

●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이

- 2007~2017년 우리나라 전체와 경상남도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산출 결과 전체 기간 우리나라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인당 4.03 TOE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경상남도는 평균 2.56 TOE로 나타남
- 인구 증가율이 전국 대비 조금 높은 수준이나 최종에너지 총소비량의 증가 수준이 전국에 비해 낮아 전반적으로 인구 증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에너지 소비량의 증가폭이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경남도내 에너지 사용 관점에서 전반적인 절약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4-6-21〉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변화

구분	전국			경남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TOE)	주민등록 인구(인)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인)	최종에너지 총소비량 (TOE)	주민등록 인구(인)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TOE/인)
2007년	181,498,000	49,268,928	3.68	7,423,000	3,196,953	2.32
2008년	182,490,000	49,540,367	3.68	7,512,000	3,225,255	2.33
2009년	181,491,000	49,773,145	3.65	7,748,000	3,250,176	2.38
2010년	194,971,000	50,515,666	3.86	8,486,000	3,290,536	2.58
2011년	205,772,000	50,734,284	4.06	8,450,000	3,308,765	2.55
2012년	207,497,000	50,948,272	4.07	8,813,000	3,319,314	2.66
2013년	209,366,000	51,141,463	4.09	8,963,000	3,333,820	2.69
2014년	213,201,000	51,327,916	4.15	8,684,000	3,350,257	2.59
2015년	218,006,000	51,529,338	4.23	8,814,000	3,364,702	2.62
2016년	225,160,000	51,696,216	4.36	9,023,000	3,373,871	2.67
2017년	233,901,000	51,778,544	4.52	9,297,000	3,380,404	2.75
연평균 증감률(%)	2.60	0.50	-	2.30	0.60	-
2007~2017년 평균(%)	-	-	4.03	-	-	2.56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각연도);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3) 신·재생에너지 부문

●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RPS 이행을 위한 바이오 혼소량이 증가하여 경남도 전체 바이오 생산량 비중이 2018년 기준 42.2%로 크게 증가한 상태이며 폐기물이 28.3%로 뒤를 잇고 있음
- 태양광은 2018년 기준 19.6%(147,598TOE)로 지난 시점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이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로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더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기준 연료전지 생산량은 134TOE로 매우 미미하나 이 역시 소폭 증가 추세여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음

〈표 4-6-22〉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생산량

(단위 : TOE, %)

구분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기타	합계
2016년 (비율)	3,976 (0.6)	84,722 (12.7)	11,984 (1.8)	59,754 (9.0)	303,223 (45.4)	190,904 (28.6)	12,613 (1.9)	667,176 (100.0)
2017년 (비율)	4,002 (0.6)	117,552 (17.3)	16,905 (2.5)	39,508 (5.8)	272,057 (40.1)	215,103 (31.7)	13,896 (2.0)	679,023 (100.0)
2018년 (비율)	3,963 (0.5)	147,598 (19.6)	16,707 (2.2)	38,482 (5.1)	317,709 (42.2)	213,278 (28.3)	15,884 (2.1)	753,621 (100.0)

주 : 기타항목은 지열, 수열, 연료전지 등이 포함.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2018).

●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 경남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2012년 544GWH 수준에서 2018년 현재 1,655GWH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태양광발전의 경우 2012년 100GWH 수준에서 2018년 685GWH로 연평균 37.8%씩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바이오 에너지 역시 2014년 급격히 발전량이 증가하여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음
- 바이오 및 태양광 중심의 신규 발전 용량이 확대되고 있으며 풍력은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적어 비중이 크지 않은 상태임

〈표 4-6-23〉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 : GWH, %)

구분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폐기물	합계
2012년	100	7	307	97	33	544
2013년	153	7	360	546	36	1,102
2014년	235	26	261	1,243	57	1,822
2015년	334	29	286	1,172	307	2,128
2016년	395	57	283	1,139	46	1,920
2017년	545	79	186	828	41	1,679
2018년	685	78	181	671	40	1,655
연평균 증감률	37.8	49.5	-8.4	38.0	3.3	20.4

주 : 연료전지는 1GWH 미만의 수치로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8년 현재 0.6GWH 수준임.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각연도).

● 경상남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여건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입지갈등 심화
- 태양광·풍력·조력·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공간계획 미흡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자연경관 훼손과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이 지속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에너지 전환 및 자치분권 확대로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발전 패러다임 전환

- 정부의 기존 경제 발전 체제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발전으로 발전 부문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을 발표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기존 약 11% 수준에서 20%로 확대할 것을 발표함
-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해 대규모 발전부지 확보가 이루어져 추가적인 발전원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

● 자치분권 확대와 경남도의 역할

- 현 정부는 중앙 집중화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자치분권 확대와 주민 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투자 하는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에서는 주민 수용성 확대를 위해 민원해결 및 부지 공급 역할을 담당하는 신·재생 개발기구를 지자체별로 설치 및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계통연계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경남도의 주체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

● 에너지신산업¹⁰⁴⁾ 확대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에서 정부는 에너지 수요관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된 에너지 신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온실가스 감축의 압박이 지속되는 현재 감축 여건의 악화, 원전 안전 요구 증대와 송전망 확충 등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공급에 드는 사회적 비용의 급증으로 공급 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원의 간헐적 출력 특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는 계통 안전성 위협 및 전력수급의 불균형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수요관리 용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에너지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것을 발표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104)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수오자원 거래시장, ESS 통합서비스, 전기자동차, 에너지 자립섬, 태양광 대여, 제로 에너지 빌딩,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8대 모델.

2) 화력 발전소 증설 억제 및 노후 발전소 폐쇄

- 국민 건강과 밀접한 봄철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자주 발령되어 다수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이 원인은 중국 등 해외 유입 미세먼지, 석탄화력발전소, 자동차 배기가스(주로 노후 경유차), 공장 등 다양함
-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특정 기간 정지하고 있으며 추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유력한 에너지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3) 수소경제 관심 증가에 따른 활성화 요구 증가

●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

- 기존 탄소경제(탄소자원-석유, 석탄, 가스 등) 중심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뛰어넘어 탈탄소화, 수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고려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을 발표함
 - 2040년까지 수소차 총 620만대 보급, 수소충전소 1,200개소 보급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용 2.1GW 공급 및 2035년부터 수소 터빈 발전 상용화
 - 2040년까지 수소공급량 526만톤/연 달성, 수전해 및 그린수소 활용 등

● 경상남도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수소 산업을 선도하는 청정 경남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현재 수소산업은 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핵심부품 및 완성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며 산업기반이 제조업 중심인 경남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부품 국산화 및 고부가가치 분야 개척이 필요한 시점임
- 수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해 가스 전력화 사업의 조기 정착을 통해 자체적인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수소산업의 기반 구축, 수소산업 기술 국산화, 수소 기업지원 및 인력 양성, 수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이 요구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신·재생에너지/분산 전원 주도 4030 친환경 도시 경남 조성
 -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30% 달성을 통해 기존 석탄에너지 시대에서 친환경에너지 시대로의 전환과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이용 주체로서의 경남 도약

2) 추진전략

● 에너지·자원 부문 핵심지표

〈표 4-6-24〉

에너지·자원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017년 대비) 50% 감축	2단계 목표(2040년) (2017년 대비) 60% 감축
온실가스배출량	84,529천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5%	30%	40%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1개소	2개소	5개소

(1) 신·재생에너지원 다변화 및 주민 수용성 증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기존자원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다양화
 - 태양광, 풍력 등 기존 에너지원 및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증진
 - 직접 소통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추진
 -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공유

(2)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 경남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 실증 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행정서비스 강화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관련 전문적 조직 확대 및 강화
- 신·재생에너지 운영 관리 고도화

(3)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제공

- 도시가스 보급확대

-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심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및 소형저장탱크 보급

4. 추진시책

1) 신·재생에너지원 다변화 및 주민 수용성 증진

(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태양광, 해상풍력 등 기존 자원 활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보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등 주요 사업과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경로당 태양광 보급,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 등 건물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가능성 증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다양화

- 지역별 다양한 환경에 맞춰 보급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존 사업 검증, 신규 사업 검토, 신규 BM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산업 집중된 도시지역, 농업 중심의 농촌지역, 바다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구분되는 해안 및 도서지역 등 다양한 도시 형태가 혼재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의 다변화 요구
- 보급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재생에너지 BM 다양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 태양광, 풍력 등 기존에너지원 및 수소에너지 발전사업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확보

- 수상, 폐도로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산업단지 내 태양광 협동조합 등을 통한 지붕태양광, 지역주도형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확산하고 남해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사업 추진

- 수소 생산기지 설치와 연계하여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 및 기존, 신규 산업단지 내 산업단지 연료전지 분산 전원 보급 지원 추진

(2) 신·재생에너지의 주민 수용성 증진

● 직접 소통확대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인식 제고

- 시민사회와 소통을 확대한 정책 수립을 위해 정기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정기, 비정기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하여 공론화하고 정책 수립 방향성을 도민과 함께 결정
- 신·재생에너지 사업 후보지 검토 시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민원 성격별 전문적인 대응체계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홍보 및 교육 추진

- 신·재생에너지의 친숙도를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경남도에 필요한 것임을 어필할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에너지 체험관을 활용하여 체험학습, 체험캠프 등을 실시

● 사업 추진 시, 주민과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공유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시 발전소로부터 거리에 따른 주민이익 공유를 조례제정을 통해 추진하고 도민 참여 기회 확보
- 발전사 또는 사업자가 발전단지 개발 시 인근 주민과 수익공유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익의 일부를 경남 신·재생 기금으로 조성하고 해당 기금의 운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

2) 신·재생에너지 보급기반 조성

(1) 선순환 산업 생태계 구축

● 경남형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 대기업-중견기업-소기업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구축 및 클러스터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및 실증 센터 구축
- 풍력, 수송용 연료전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관련 산업 인큐베이팅
- 신·재생에너지, ESS, 수소-ESS,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업들을 위한 시험·인증센터 구축 및 기업 유치를 통해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기술 실증 사업 확대

-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기술 사업화를 통한 산업의 기술 역량 확보를 목표로 육상·해상풍력 및 수소에너지 관련 실증 사이트 확보

- 에너지 전환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 및 시스템 통합형 전력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2) 신·재생에너지 행정서비스 강화

●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관련 전문적 조직 확대 및 강화

- 신·재생에너지의 사업 확장에 대응한 전문 조직 구축 및 산하기관의 역할 부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전문성 강화 필요
- 기초지자체 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및 산업 통계를 수집, 가공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고 보고서 발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전문적인 에너지 관련 기관 설립을 통해 경남도 에너지 전담부서와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효율적 에너지 관련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신·재생에너지 운영 관리 고도화

- 매년 경상남도 및 산하기관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문가 교육을 하여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현안과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에너지 정책 관련 교육(전문 기술, 사업성 분석, 에너지 통계 분석, 주민 설득 등 포함)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정책 이행에 대한 제3자 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반영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또는 롤링 진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3) 안정적 에너지 공급 기반 제공

(1) 도시가스 보급 확대

-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서부경남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형평성 도모 필요
-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로 소외지역의 도시가스 조기 공급을 유도하고 서민 에너지복지 수준 향상 도모

(2)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해소

- 군 단위 LPG 배관망 지원을 통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연료비 절감을 유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연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LPG 소형저장 탱크를 보급하고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실현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7장

환경보전·관리

제1절 환경문제·관리

제2절 경관계획

제7장

환경보전·관리

제1절

환경문제·관리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기후변화

● 경상남도 기온변화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 증가와 함께 경상남도 역시 1986~1995년 13.4℃에서 2006~2016년 13.9℃로 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창원, 통영, 거제, 남해 등 해안 도시는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등 내륙 도시에 비해 기온이 높은 편이나 기온 증가폭은 내륙 도시들에 비해 낮았음
 - 내륙도시는 1986년~1995년 12.6℃에서 2006~2016년 기간 13.3℃로 0.7℃ 증가
 - 해안도시는 1986년~1995년 14.4℃에서 2006~2016년 기간 14.6℃로 0.2℃ 증가

(단위 : ℃)

〈표 4-7-1〉

경상남도 평균기온 변화

구분	우리나라	경남	
		내륙도시 (진주, 거창, 합천, 밀양, 산청)	해안도시 (창원, 통영, 거제, 남해)
1986~1995년	12.4	12.6	14.4
1996~2005년	12.8	13.0	14.5
2006~2016년	13.0	13.3	14.6

자료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통계자료.

● 폭염 발생 및 건강 영향

- 1986~2016년까지(약 30년간) 일 최고기온 33℃ 이상을 기록한 경상남도의 평균적인 폭염일수는 12.3일이며 1986년 전체 관측소 합계 70일(평균 7.8일) 이었던 폭염일수는 2016년 현재 250일(평균 27.8일)을 기록하고 있음
- 전체 기간을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1986~1995년의 경우 10.4일에 그쳤으나 1996~2005년 11.2일, 2006~2016년 15일로 증가 추이가 뚜렷함
- 내륙도시와 해안도시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해안도시에 비해 내륙의 도시가 대체로 폭염일수가 약 2배 가까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 내륙도시는 1986~1995년 12.9일에서 2006~2016년 19.8일로 증가
 - 해안도시는 1986~1995년 7.3일에서 2006~2016년 9.0일로 증가

〈표 4-7-2〉

경상남도 폭염일수 변화

(단위 : 일)

구분	우리나라	경남	
		내륙도시 (진주, 거창, 함천, 밀양, 산청)	해안도시 (창원, 통영, 거제, 남해)
1986~1995년	8.3	12.9	7.3
1996~2005년	8.6	15.6	5.8
2006~2016년	11.0	19.8	9.0

자료 :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통계자료.

- 폭염일수와 함께 온열질환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7년까지 총 7,927명의 온열질환자 중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1,027명(13.0%)이었고 뒤를 이어 전남 965명(12.2%) 그리고 경남이 865명으로 10.9%를 차지하고 있음
- 대체로 전남, 경북, 경남 등 남부지방에 속한 비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하는 지역들에서 온열질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경남도 역시 2011년 17명에서 2013년 181명, 2016년 225명 등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냄

〈표 4-7-3〉

경상남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경기	경남	
총계 (비율)	7,927 (100.0)	564 (7.1)	1,027 (13.0)	865 (10.9)	
2011년	계	443	27	58	17
	남	325	24	52	12
	여	118	3	6	5
2012년	계	984	119	126	73
	남	683	78	97	55
	여	301	41	29	18
2013년	계	1,189	52	92	181
	남	824	42	70	129
	여	365	10	22	52
2014년	계	556	39	62	101
	남	426	34	50	80
	여	130	5	12	21
2015년	계	1,056	50	115	127
	남	785	38	92	92
	여	271	12	23	35
2016년	계	2,125	170	357	225
	남	1,578	119	297	164
	여	547	51	60	61
2017년	계	1,574	107	217	141
	남	1,238	82	182	99
	여	336	25	35	42

자료 : 질병관리본부(2017),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

● 경상남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

- 경상남도의 부문별 감축 인벤토리 배출량은 2005년 15,669 천톤CO₂eq.에서 2015년 20,340 천톤CO₂eq.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에너지 부문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수송과 상업 부문은 각각 7% 증가, 2% 감소하였음
- 또한 상대적 배출량이 적은 공공 부문이 전체기간 동안 1% 증가하였고, 가정 부문은 2% 감소하였으며 비에너지부문에서는 폐기물부문의 배출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산정 기간 동안 1% 감소하였음

(단위 : 천톤CO₂eq.)

〈표 4-7-4〉

경상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구분	합계	에너지					비에너지		메모	
		도로수송	상업	공공	가정	농림수산	가축	관리토양	폐기물	토지
2005년	15,669	4,521	3,649	604	2,975	1,044	469	1,046	1,361	-2,082
2006년	16,113	4,848	3,753	622	3,220	1,018	495	976	1,182	-2,576
2007년	16,393	5,078	3,992	669	3,000	1,000	512	1,013	1,129	-4,212
2008년	16,950	5,031	4,124	720	3,250	974	536	967	1,349	-5,835
2009년	17,205	5,066	4,168	750	3,307	974	533	1,094	1,313	-7,239
2010년	17,847	5,371	4,426	767	3,539	1,106	559	970	1,109	-4,065
2011년	17,934	5,343	4,403	771	3,545	1,139	567	979	1,186	-1,849
2012년	18,255	5,648	4,388	794	3,514	1,242	582	944	1,143	-1,847
2013년	18,472	5,893	4,314	794	3,512	1,341	535	903	1,181	-1,837
2014년	19,440	6,861	4,309	840	3,529	1,200	512	936	1,254	-1,855
2015년	20,340	7,383	4,410	902	3,554	1,145	500	860	1,586	-2,157

자료 : 한국환경공단(2017), 경상남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2) 미세먼지

● 경상남도 미세먼지 농도

- 전반적으로 전국 기준 PM₁₀ 농도는 2010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소폭 증감이 이루어지나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전국 평균 PM₁₀ 41 μ g/m³ 수준의 농도를 보임
- 경남의 경우 2004년 57 μ g/m³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였고 2010년 46 μ g/m³에서 2018년 현재 41 μ g/m³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PM_{2.5} 농도는 2015년부터 공개적으로 측정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15~18년) 전국의 연평균 PM_{2.5} 농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2018년도 기준 연평균 농도는 전국 및 서울 25 μ g/m³, 경남 20 μ g/m³의 농도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표 4-7-5〉

경상남도
PM10 / PM2.5
연평균 농도

(단위 : $\mu\text{g}/\text{m}^3$)

구분	환경기준	PM10		환경기준	PM2.5	
		전국	경남		전국	경남
2010년	50	51(49)	46(44)	-	-	-
2011년	50	50(47)	46(44)	-	-	-
2012년	50	45(45)	42(42)	-	-	-
2013년	50	49(48)	47(47)	-	-	-
2014년	50	49(47)	48(47)	-	-	-
2015년	50	48(45)	46(45)	25	26(25)	25(25)
2016년	50	47(46)	45(43)	25	26(26)	25(25)
2017년	50	45(44)	43(42)	25	25(25)	23(23)
2018년	50	41(40)	41(40)	25	23(23)	20(20)

주: () 안의 값은 황사일차 제외 평균값

자료 :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 2016년 경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CO 55,630톤, NOx 102,053톤, SOx 30,914톤, TSP 47,846톤, PM10 14,024톤, PM2.5 5,548톤, VOCs 107,783톤, NH3 25,389톤 임
- 오염물질별 배출원 대분류별 배출량 기여율을 살펴보면, CO는 도로이동오염원과 생물성 연소가 각각 35%씩 차지하고 있으며 NOx의 경우 도로이동오염원이 39%, 에너지산업 연소에서 33%가 배출되고 있음
- PM10 배출은 비산먼지가 64% 차지하며 PM2.5는 비산먼지 26%, 도로 및 비도로 이동오염원과 생물성 연소가 각각 18%씩 차지하여 초미세먼지는 60% 이상이 비산먼지와 도로 위 이동수단에서 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4-7-6〉

경상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 톤/연)

구분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합계	55,630	102,053	30,914	47,846	14,024	5,548	107,783	25,389
제조업 연소	815	2,891	1,016	1,130	666	352	119	39
생산공정	7	760	1,336	78	56	42	10,559	2,946
에너지산업 연소	5,747	33,392	24,003	852	835	674	693	14
도로이동오염원	19,301	39,775	20	1,054	1,054	969	3,625	408
비도로이동오염원	6,930	19,212	2,198	1,078	1,078	989	1,962	12
비산업 연소	2,704	4,695	2,182	100	89	59	147	98
유기용제 사용	-	-	-	-	-	-	77,537	-
에너지수송 및 저장	-	-	-	-	-	-	2,394	-
폐기물처리	133	612	151	19	14	11	2,910	1
농업	-	-	-	-	-	-	-	21,025
기타 면오염원	561	13	-	36	23	21	47	843
비산먼지	-	-	-	41,086	9,017	1,449	-	-
생물성 연소	19,432	702	8	2,412	1,192	982	7,790	1

자료 : 경상남도(2019), 경상남도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수립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기후변화 가속화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전망

- 경상남도가 관리 권한을 갖는 감축인벤토리에 근거한 건물(가정, 상업),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을 하였으며 분야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전망치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경상남도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은 수송(도로), 상업, 가정 부문 등 수송과 건물 부문에서 사용되는 연료 및 전력사용으로 인한 결과이며 공공·기타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적을 것으로 전망됨
- 2030년 경남 관리 권한 영역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값은 21,911 천톤CO₂eq.으로 16년 18,978 천톤CO₂eq.대비 1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건물-가정 부문) 16년 3,605 천톤CO₂eq.에서 30년 4,293 천톤CO₂eq.으로 증가
 - (건물-상업 부문) 16년 4,496 천톤CO₂eq.에서 30년 5,720 천톤CO₂eq.으로 증가
 - (공공·기타 부문) 16년 907 천톤CO₂eq.에서 30년 1,086 천톤CO₂eq.으로 증가
 - (수송(도로) 부문) 16년 7,389 천톤CO₂eq.에서 30년 8,440 천톤CO₂eq.으로 증가
 - (농축산 부문) 16년 1,347 천톤CO₂eq.에서 30년 1,132천톤CO₂eq.으로 감소
 - (폐기물 부문) 16년 1,234 천톤CO₂eq.에서 30년 1,240천톤CO₂eq.으로 소폭 증가

(단위 : 천톤CO₂eq.)

〈표 4-7-7〉

경상남도
온실가스 배출 전망

구분	건물			공공·기타	수송(도로)	농·축산	폐기물	총계
	가정	상업	합계					
2016년	3,605	4,496	8,101	907	7,389	1,347	1,234	18,978
2017년	3,657	4,597	8,254	922	7,379	1,318	1,235	19,107
2018년	3,711	4,703	8,414	936	7,430	1,267	1,235	19,283
2019년	3,767	4,813	8,580	951	7,457	1,228	1,236	19,452
2020년	3,823	4,926	8,749	966	7,540	1,196	1,236	19,688
2021년	3,859	5,007	8,866	978	7,620	1,178	1,237	19,877
2022년	3,895	5,087	8,982	991	7,704	1,170	1,237	20,084
2023년	3,937	5,168	9,105	1,003	7,752	1,163	1,237	20,261
2024년	3,983	5,249	9,232	1,015	7,847	1,157	1,238	20,489
2025년	4,031	5,330	9,361	1,028	7,946	1,153	1,238	20,726
2026년	4,082	5,410	9,492	1,040	8,048	1,145	1,239	20,963
2027년	4,135	5,489	9,624	1,052	8,152	1,143	1,239	21,209
2028년	4,188	5,567	9,755	1,063	8,219	1,138	1,239	21,414
2029년	4,241	5,644	9,885	1,075	8,328	1,134	1,239	21,661
2030년	4,293	5,720	10,013	1,086	8,440	1,132	1,240	21,911

자료 : 경상남도(2018), 2030년 경상남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로드맵.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발생 심화

- 평균기온의 지속적인 상승과 이상기온 발생(폭염, 한파) 등으로 인한 도민 안전도 하락 및 건강 영향 발생(온열질환 등) 가능성 증가
-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증가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생산물 품질 하락 및 가계경제 피해 확대

● 온실가스 감축 노력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극한기상 현상의 산발적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증대되고 국민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OECD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수단 마련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계획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고 기후행동추적(CAT)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변화대응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함에 따라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로드맵」(2018)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감축 관련 정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음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감축 후 배출량 536백만톤 달성
-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 활용을 통한 감축량 제시

2) 미세먼지 문제 지역적 대응 강화

● 미세먼지 대응 기준 강화

- 정부는 2019년 3월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 8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하였으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8개 법률 제·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포함해 학교보건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개정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20.04.03. 시행)에서는 대기관리권역을 기존 현 수도권 지역에서 전국 오염우려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며 경상남도는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고성, 하동 등이 포함되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전환시대를 선도하는 일류 경남 조성**
 - 에너지 전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미래세대로의 전환 등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환경 부문 기본 목표로 설정하여 기후변화대응 선도 지역으로 도약
- **맑고 쾌적한 공기, 건강한 경남**
 - 2024년 초미세먼지 $15\mu\text{g}/\text{m}^3$ 달성을 위하여 산업, 수송, 발전, 농업·생활 부문, 도민건강 보호, 연구협력 강화, 도민 참여 및 교육 등 주요 부문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 경상남도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통한 도민 안전도 및 건강 수준 보전

2) 추진전략

- **환경문제·관리 부문 핵심지표**

〈표 4-7-8〉

환경문제·관리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전기자동차/충전소 보급	4,683대/1,728기	140,000대/6,400기	600,000대/29,000기
RE100 달성기업 수	0개	100개	300개
초미세먼지(PM 2.5)	$19\mu\text{g}/\text{m}^3$ (2019년)	$14\mu\text{g}/\text{m}^3$	$13\mu\text{g}/\text{m}^3$

(1) 감축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절감**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지원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폐기물 감축 및 재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도내 발생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률 증대
 - 폐기물의 재자원화

(2)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산업 부문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및 선박/건설기계 등 관리 강화
 - 농업 부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도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 민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 기반 강화
-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4. 추진시책

1) 감축 수단의 다양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1)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이용 절감

-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융복합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등 주력 사업 추진을 통한 건물 내 사용 전력 절감으로 전력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
 - 농·축산 부문 지열 냉난방 시스템 도입 및 목재펠릿보일러 등의 보급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의 도입으로 전체 사용 에너지를 줄여 난방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의 사용 저감
 -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수상태양광, 농촌태양광 등) 추진을 통한 신규 에너지원 확충
- **에너지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 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냉·난방 시스템 고효율화), 농어촌 주택개량, 옥상녹화 등 건물 전반적 에너지 효율화와 더불어 건물 내부 조명기기 및 사용 전자제품 고효율화 등을 통한 전력 이용량 절감

(2)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확대

●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 지원

- 수송(도로) 부문 친환경 자동차(천연가스 자동차, 전기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이륜차 등)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장려
-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저공해화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확대, LPG 자동차로 교체 지원,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의 정책 시행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기반을 조성(자전거 도로 등)하고 근거 기준 등을 정비하여 단거리-중거리-중장거리-장거리 등 이용 가능 거리 및 권역에 따라 다양한 교통수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마련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과 더불어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 신공항 연결 철도, 도시철도 구간 연장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시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통카드 이용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서비스 미 보급지역 중점적 보급을 통한 시내교통 수송 부담률 증진

(3) 폐기물 감축 및 재처리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 도내 발생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률 증대

- 경남도 관리 권한 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등의 감축으로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재처리 및 재활용 등 다시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 구성
-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하고 가축분뇨 폐기물의 공공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매립, 소각되는 기존 폐기물의 총량을 감축하고 재자원화하여 추가적인 에너지원을 확보

2)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1)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저감

● 산업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강화

-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창원, 김해, 양산, 진주, 하동, 고성 등의 지역의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총량제를 도입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제한하고 저녹스 버너 등을 중소 사업장을 중심으로 보급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 유도

-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존 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체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하고 산업체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체적인 산업체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한도 이내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및 선박/건설기계 등 관리 강화

- 온실가스 감축 부문과 같이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유도, 매연저감장치 장착 지원 등 도로 위 교통수단의 친환경화를 추진
-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도시를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종합검사) 지역을 확대하여 오염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함
- 비도로 부문에서 항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건설기계의 저공해화를 추진하여 일반 자동차 이외에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원을 관리

● 농업 부문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친환경 농업 확대, 기동단속반 운영 등으로 불법 소각 단속 등을 통해 생물성 연소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 친환경 농업 및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공익형 직불제 참여 농가의 화학비료 사용량 의무 준수 등 농경지 화학비료 투입량 관리

(2) 도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 고농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체계 구축

- 2019년 10월 제정한 초미세먼지 발생 시 4단계 위기경보 기준 및 대응체제로 구성된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체계를 구성하여 능동적인 대응 유도
-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산업, 발전, 수송, 농촌 및 생활 등 부문별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대응

● 민감 취약계층 건강 보호 기반 강화

-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민감 계층 생활 및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
- 어린이집과 학교 인근 도시 대기측정망을 확충하여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학교 인근 등 이동측정 차량을 집중적으로 운영
-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밀집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기정화시설과 미세먼지 회피시설 등 지원 제도 마련으로 취약계층 대비책 마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고 마스크 교부 시 미세먼지 대응요령 및 건강수칙 등의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교육 실시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진단 및 개선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체계 구축

(3)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자체 간 협력 체계 구축

● 동남권 대기환경청 설립

- 부산, 울산, 경남은 미세먼지의 동일한 영향권역으로, 독자적인 대응보다 연합하여 공동 대응하는 것이 요구됨
- 동남권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동남권 대기환경청을 신설하고 미세먼지 관리 기본 및 시행계획 추진, 배출원 저감대책 수립, 대기오염물질 관리 계획 등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 동일 영향권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저감 효과의 실효성 확보 필요

제2절

경관계획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관자원의 현황과 특징

● 녹지 경관자원

- 경남의 각 시·군 전역에는 높고 낮은 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경과자원과 함께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중부내륙 내에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의 자연공원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이 조성되어 양호한 경관 형성과 함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있음
- 각 시·군에는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이 위치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시가지의 확장으로 도시 주변 구릉지·산지에 건설되는 적절하지 못한 규모의 공동주택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차폐적인 경관을 형성함

● 수변 경관자원

- 남해안 일대는 고유한 지형, 해안선, 다수의 섬, 산지 등 우수한 경관자원이 복합적으로 위치하고 있음
- 내륙에는 낙동강, 황강, 남강 등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이 전역에 흐르고 있어 주변 녹지자원과 더불어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하천의 범람, 매립, 제방축조 등으로 발달된 습지는 오염원이 적어 생태환경 및 경관이 양호하며 농업용수 공급 및 수변공간으로 활용됨
- 그러나 수제선과 평행하여 입지하는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 인해 위압감을 조성하여 경관축을 훼손하고 있음

● 농·어촌 경관자원

- 경상남도 농·어촌지역은 평야지역과 배후 낮은 산지·구릉지로 형성되어 비교적 안정적이며 개방적인 특성을 보임
- 그러나 농경지 주변의 비닐하우스와 어촌지역의 산업활동의 적재물 등은 경관 저해요소로 작용하며 농·어촌 인근에 건설되는 나홀로 아파트, 공장 등도 전원 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문제가 됨

● 역사·문화 경관자원

- 경상남도 전역에는 국가지정 및 도 지정 문화재는 물론 다양한 역사공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변 자연 경관자원과 함께 양호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폐역, 교량, 건축물 등 근현대 자산이 분포하고 있어 지역의 명소화를 위한 활용 가치가 높음

- 일부 역사·문화 경관자원은 기반시설 부족으로 접근 및 이용이 제한적이고 주변 지역의 불량한 상업시설 등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비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함

● 시가지 경관자원

- 일부 도심부에는 노후 저층건축물, 조립식건축물, 불량주택이 산재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로 주거환경이 열악함
- 자연경관에 인접한 획일적인 공동주택단지는 주변 지역을 시각적, 기능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단조로운 스카이라인으로 특색 없는 시가지 경관을 형성함
-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보행로는 단절시켜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불법 옥외광고물과 가판대 설치로 시가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기반시설 경관자원

- 경상남도 중부내륙 동서 방향으로 남해선, 남북방향으로 경부선, 중부내륙선 등이 통과하고, 전역에 일반국고, 지방도가 시·군과 타지역을 연계하고 있으므로 IC와 진입관문, 관광지 주변 도로의 경관은 계획녹지 조성으로 양호한 경관을 형성함
- 향후 남부내륙고속철도를 비롯해 남해안고속철도, 함양울산고속도로, 국도5호선 등 광역도로망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려 한 상호 연계성 있는 경관관리가 요구됨

〈표 4-7-9〉

유형별 경관자원

구분	경관자원	
녹지경관	산, 휴양림	지리산, 월봉산, 부암산, 가지산, 운문산, 재약산, 황석산 등
	도시공원	석류공원, 남산체육공원, 함주공원, 상림공원 등
수변경관	도서	비산도, 오곡도, 월등도, 초리도, 외도, 지심도 등
	해안, 갯벌	학동몽돌해변, 물미해안, 비진도 산호빛해변, 미토섬 갯벌 등
	강, 하천	낙동강, 섬진강, 남강, 덕천강, 황강, 화포천, 청도천 등
	호소	진양호, 합천호, 월포늪, 오미습지, 화포습지, 삼랑진늪 등
농·어촌경관	농경지, 저수지, 수산시장 등	
역사·문화경관	국가지정	천곡사, 진주향교, 수로왕릉, 진주성, 호미산성, 월광사지, 왕석산성, 범계사
	도지정	밀양향교, 가야진사, 의령미타산성, 함양마안산성, 구음재 등
시가지경관	구시가지, 신시가지, 산업단지, 상업지역, 랜드마크, 공공건축물 등	
기반시설경관	도로	경부선, 부산신항선 등
	철도	KTX(경부선, 경진선), 부산도시철도2호선, 부산김해경전철 등
	교량	진주교, 양산구름다리, 이월교, 낙동강교 등

2) 경관계획 관련 정책 동향

● 경관법 개정

- 중앙정부에서는 경관행정의 실효성과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관법이 여러 차례 개정하여 경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2014년 경관법의 전면개정에서는 경관심의 등을 통한 경관관리의 체계화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관리 대상으로 건축물뿐 아니라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까지 경관심의회 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중요해짐

● 경관관리 역량 강화 유도

- 국토교통부는 국가 차원에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국토 경관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국가와 국민이 공유해야 할 가치와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국토경관헌장(2017년)’을 제정하였음
- 2015년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유의 역사·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 최근 서울시, 전주시 등 지자체에서는 전승 가치가 있는 근·현대 유·무형유산을 미래유산으로 정의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함. 이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경관 보존·관리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음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경관 가치 인식 변화

● 도시경관에 대한 인식

-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쾌적한 환경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질 높은 경관 형성에 대한 기대가 커짐
- 우수한 건축물, 가로, 광장 등 경관자원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서 인식되면서 경관의 사회적·경제적인 중요성을 증가할 것임
- 그러나 일반 국민 수준에서 경관관리의 실천 개념이 부재하고, 경관 관련 정보 수집, 경관관리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 쉽지 않으므로, 다양한 경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요가 발생할 것임

● 농촌 경관에 대한 인식

- 소득 수준 향상과 귀농·귀촌 인구 및 도농 교류 증가로 쾌적한 농촌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면서 경관·생태자원을 증진하여 매력적인 공간 창출이 필요함
- OECD 농업환경지표, EU농촌개발정책 등 선진국의 농촌지역 개발정책에서도 농촌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 최근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각종 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농촌지역은 경관 변화가 우려되므로 농촌 경관에 대한 관리가 요구됨

2) 경관행정 강화

● 경관계획의 수립

- 경상남도는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8개 시·군을 포함하는 남해안 경관기본계획과 11개 시·군을 포함하는 중부내륙권 경관기본계획을 2011년 수립하였음
- 8개 시 지역 전부에서는 경관법에 근거한 경관조례에 따라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의령군, 고성군 등 4개 군 지역에서는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음
- 뉴딜사업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경관협정 체결하는 지자체도 증가하고 있음

● 관련 정책 전개

-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2016년 전부개정)으로 가로경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틀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2019년 제정)에서는 공공공간, 공공건축, 공공시설물 등 생활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경남도 차원의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군 전역의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관적 가치증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또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정착을 통해 공공건축·공간환경을 조성하여 발전적인 도시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경관자원의 보전·관리·형성

- 내륙지역은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간직한 지리산, 덕유산, 낙동강, 남강 등 우수한 경관자원의 보전해야 하며, 남해안 지역은 기존의 내륙지역 및 도시지역에 대한 경관계획을 넘어서, 해안지역의 도로, 항만, 공장, 위락시설, 공동주택 및 농어촌 주택 등 해안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보전관리 경관계획이 필요함
- 시가지 지역은 가로경관, 야간경관, 마을가꾸기 등 유형에 따른 경관설계지침을 마련하고,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위해경관 정비 등 관리계획 제시 필요함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관계획

- 특색 있는 지역경관 창출과 지속적인 지역경관관리를 위해서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경관보전 및 관리 형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의 경관관리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지원 강화가 요구됨
- 경관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적용,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대상과 전략, 경관관리 조직의 구성, 단계별 계획 등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함

2) 추진전략

● 경관계획 부문 핵심지표

〈표 4-7-10〉

경관계획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경관관련용도지구 면적 (경관지구, 고도지구, 보호지구)	41,559,433㎡	50,000,000㎡	60,000,000㎡
산림보호구역 내 경관보호구역 면적*	1,195ha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 전국 감소 추세

(1) 권역별 관리 방향

- 경상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관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인 계획 집행을 위한 경관권역 설정이 필요함
- 인접해 있는 경관자원 및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공간, 시각적인 형태가 동일한 경관영역에 대한 통일감을 형성해야 함

● 동부 도시산업권역 :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해 주거지와 상업지를 정비하고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창출을 유도함

● 서부 도시산업권역 : 진주시, 사천시, 함안군

- 산재된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테마가 있는 경관을 형성하고,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함

● 생태자연권역 :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산청군, 하동군

- 산과 강을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생태관광자원화를 유도함

● 해양문화권역 : 통영시, 거제시, 남해군, 고성군

- 수려한 자연과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해안가 불법건축물과 가로 정비를 통해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을 육성함

4. 추진시책

1) 도시경관계획 추진시책

● 경관계획의 지정 및 관리

- 도시경관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경관지구,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기에 어려운 지역은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관리를 계획적으로 유도
- 경남도 경관계획의 경우 경관유형별, 경관요소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계획 방향을 제시
 - 경관 유형 : 시가지경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 경관 요소 :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야간경관
- 시·군 경관계획은 경관권역,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경관가이드라인 수립에 덧붙여 그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조례 등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
- 특정 경관계획은 경관권역계획, 경관축계획, 경관거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방안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특히 경관계획의 입체적 성격을 강조하여 중경이나 근경에서 고려해야 하는 계획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준까지 상세한 지침을 제시
- 시군 특성에 맞게 시군 조례를 통해 차별화하고 구체화를 유도해야 하며, 조례로 가능한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경관사업과 연계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유도

●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강화

- 경관행정의 총괄적인 기획 및 협의·조정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경관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하여 지자체 내·외부의 조직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
- 관할구역 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내용은 상위지방자치단체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하며, 실제 경관을 관리하는 지자체 간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 경관관리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며,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광역지자체가 관리
- 지역사회의 합의도출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상향식으로 추진되도록 주민 역량 강화 필요

● 경관협정 활성화 방안 마련

- 경관협정은 “토지소유자 등이 전원의 합의로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¹⁰⁵⁾으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형성하는데 있어, 법적 규제를 통한 피동적인 관리방식보다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자기 지역의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¹⁰⁶⁾

- 지역마다 여건과 주민역량이 다르므로 주민 주체의 경관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및 방안 마련 필요
-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려는 행정이나 전문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 행정,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단계적 역할과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정

● 경관심의체계의 이해

- 경관심의를 수립·작성되는 경관계획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계획관리 측면에서 중요
- 특히 심의대상이 되는 사업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넓은 면적의 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공공건축물 등으로 경관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
- 경관심의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계획이 경관계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통해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유도

2) 농어촌경관계획 추진시책

● 농어촌경관관리체계 강화

- 경상남도는 비도시지역이 약 73.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형, 주요 생산자원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촌 경관이 존재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경관에 대한 관심증가로 경남지역 농어촌경관관리체계에 대한 재고 필요

● 농어촌경관관리 실행전략

- 실행력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적, 유도적, 사업적 수단간 연계 강화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역 등의 시행 시 주민협약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으로 인정하는 등 조례 개선

105) 「경관법」제19조제1항.

106) 국가법령정보센터, 경관법 : 제정·개정 이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79116&ancYd=20070517&ancNo=08478&efYd=20071118&nwJoYnl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검색일: 2020.03.05.).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8장

안전·방재

제1절 안전·방재

제8장

안전·방재

제1절 안전·방재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상남도 재난 피해 현황

(1) 자연재난 피해 현황

● 태풍 및 호우 피해 취약

-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재난 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태풍 피해가 전체 피해액에 약 66%를 차지하고 호우피해가 약 33% 차지
- 경남은 국내 태풍 발생 시 주요 이동 경로에 놓이므로 태풍 피해 취약
- 여름철 집중 강우에 따른 경남 연안 지역 저지대, 농경지 등의 호우 피해 취약
- 대설, 지진, 풍랑 등으로 인한 피해는 미약하나 향후 대형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 대비 필요

〈표 4-8-1〉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자연재난
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합계	1,398,754	32,607,679	69,418	71,129,742	3,474,948	108,680,541
태풍	1,353,014	2,151,887	-	68,339,116	-	71,844,017
호우	45,740	30,379,385	69,418	2,773,826	3,464,558	36,732,927
대설	-	76,407	-	-	-	76,407
강풍	-	-	-	-	-	-
지진	-	-	-	16,800	600	17,400
풍랑	-	-	-	-	9,790	9,790

(단위 : 천원)

주 : 피해액은 당해연도 가격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2017), 2017 재해연보

(2) 사회재난 피해 현황

● 도로교통사고 및 화재에 취약

- 최근 5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사회재난 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사고가 약 65%, 화재가 약 19% 차지
- 인구 밀집도가 높은 창원, 진주 등의 대도시 중심으로 도로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음
- 해난사고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표 4-8-2〉

최근 5년간 경상남도
사회재난 발생 원인별
피해 현황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합계
합계	20,398	19,406	20,872	20,082	18,628	99,386
화재	3,416	3,622	3,960	3,756	4,117	18,871
산불	35	32	23	10	62	162
붕괴	8	62	59	37	19	185
폭발	9	-	3	2	1	15
도로교통사고	13,615	13,288	13,516	12,339	11,579	64,337
환경오염	29	-	15	10	3	57
유·도선	3	-	5	3	-	11
해난	129	-	322	349	416	1,216
기타사고	3,154	2,402	2,969	3,576	2,431	14,532

자료 : 통계청

2) 경상남도 안전 수준

(1) 전국 비교 지역안전지수 현황

● 타 도와 비교 시 전반적으로 지역안전 수준 양호

- 경남은 지역안전지수 교통,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분야에서 최근 3년간 2등급 기록
-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2019년도 화재 분야의 지역안전지수 저조

〈표 4-8-3〉

전국 도 단위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분	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17	'18	'19
경기	1	1	1	2	1	1	3	4	4	1	1	1	1	1	1	1	1	1
강원	3	3	3	5	4	3	4	4	3	3	3	4	4	4	4	3	4	5
충북	2	2	2	3	5	3	4	3	4	3	3	3	3	3	3	3	3	3
충남	4	3	4	3	3	3	3	3	3	4	4	4	4	5	5	3	3	3
전북	3	4	3	4	3	4	1	2	2	2	2	2	3	4	3	4	3	3
전남	5	5	5	4	4	4	2	1	2	4	4	3	5	3	2	4	4	4
경북	4	4	4	2	3	2	2	2	1	3	3	3	3	3	3	5	5	4
경남	2	2	2	3	2	5	3	3	3	2	2	2	2	2	2	2	2	2
제주	3	3	3	1	2	2	5	5	5	5	5	5	2	2	4	2	2	2

자료 : 행정안전부

(2) 경남 시군 지역안전지수 현황(2019년 기준)

● 교통사고 : (양호) 창원, 김해, 거제, 창녕, 남해, 거창

- 해당 지자체 지역안전지수 교통사고 분야 2등급 기록

● 화재 : (우수) 창원, (양호) 진주

- 창원시 지역안전지수 화재 분야 1등급, 진주시 2등급 기록

● 범죄 : (우수) 사천, 밀양, (양호) 양산, 의령, 창녕, 남해, 하동, 산청, 함양, 합천

- 우수지역 지역안전지수 범죄 분야 1등급, 양호지역 2등급 기록

- **생활안전** : (우수) 창원, (양호) 진주, 김해, 양산, 창녕, 고성, 거창
 - 우수지역 지역안전지수 생활안전 분야 1등급, 양호지역 2등급 기록
- **자살** : (양호) 함안, 고성, 하동, 거창
 - 함안군, 고성군, 하동군, 거창군 지역안전지수 자살 분야 2등급 기록
- **감염병** : (우수) 거제, (양호) 김해, 양산, 함안
 - 거제시 지역안전지수 감염병 분야 1등급,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 2등급 기록

(단위 : 등급)

〈표 4-8-4〉

경상남도 2019년도
지역안전지수 현황

구분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창원시	2	1	3	1	3	3
진주시	3	2	4	2	3	3
통영시	3	3	3	4	3	4
사천시	4	3	1	4	3	5
김해시	2	4	4	2	3	2
밀양시	4	5	1	4	4	5
거제시	2	3	3	3	3	1
양산시	3	3	2	2	3	2
의령군	5	3	2	3	4	3
함안군	4	3	3	3	2	2
창녕군	2	3	2	2	3	5
고성군	5	5	3	2	2	3
남해군	2	3	2	4	4	4
하동군	3	3	2	4	2	3
산청군	4	4	2	5	3	3
함양군	4	3	2	3	5	4
거창군	2	3	4	2	2	4
합천군	3	3	2	4	4	4

자료 : 행정안전부.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재난의 미래 트렌드 및 경남의 미래 기후변화 위험성

- **재난 유형의 다양화**
 -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시민불안감 증가
 - 지진, 화학사고, 가뭄 등의 재난 유형이 다양화되고 발생 가능성의 예측이 어려워짐에 따라 재난에 대한 시민 불안감 가중

〈그림 4-8-1〉

재난 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위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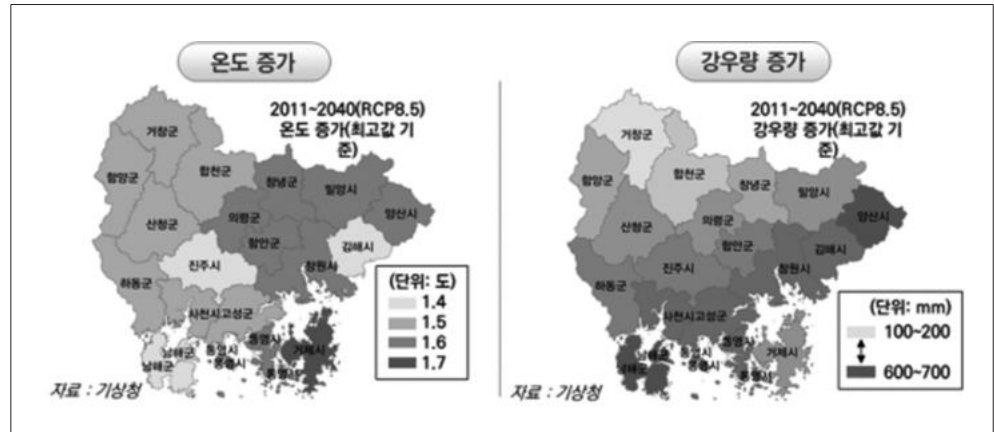


● 기후변화 위험성 증가(RCP 8.5, 2011~204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 RCP 8.5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준, 2040년까지 경남지역의 온도가 약 1.4~1.7도 증가하고 강우량이 100~700mm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커짐
 - 온도 변화로 인해 경남 전역 온열질환 급증(보건 분야, 농작물 변화(농어업 분야))
 - 경남 동부, 남해안 지역의 강우량 변화에 따른 재해 규모 증가 예상

<그림 4-8-2>

경남지역 온도 및 강우량 증가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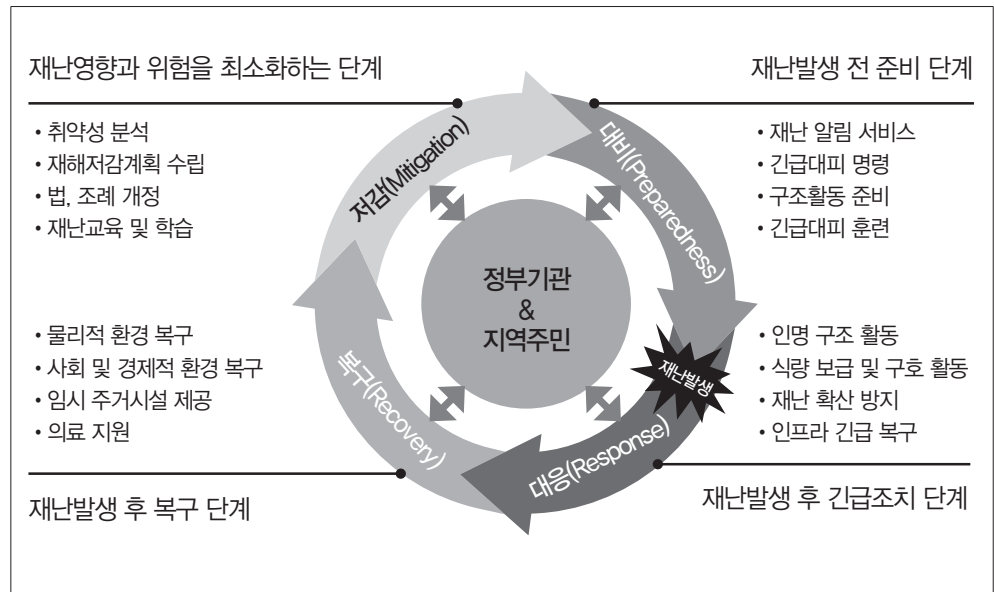
2) 선진 재난정책의 경향

● 재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과거 재난대응, 복구 중심의 정책에서 저감 및 대비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
 - (시사점) 취약성 분석 및 다양한 재난에 대한 저감계획 수립 필요

<그림 4-8-3>

재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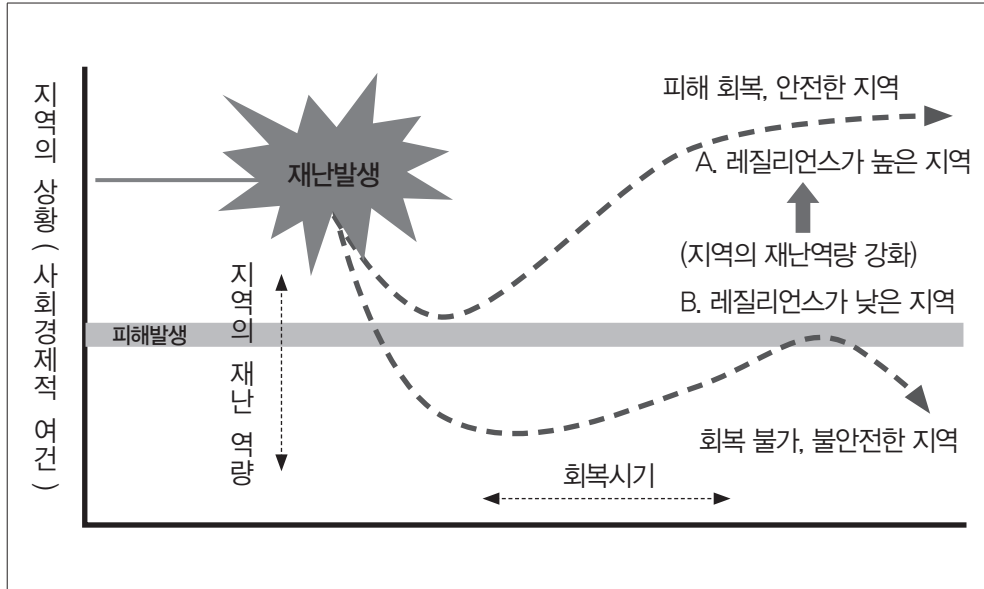


● 레질리언스 강화

- 지역의 재난역량을 강화하여 재난 발생 시 빠른 회복과 피해 최소화
- (시사점)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그램 필요

<그림 4-8-4>

레질리언스 강화
그래프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기본 방향

- 경상남도 레질리언스 향상을 통한 저감, 대비, 복구, 대응 전 주기 역량 강화

● 목표

-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경남” 실현

2) 추진전략

● 안전·방재 부문 핵심지표

<표 4-8-5>

안전·방재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7등급	(평균) 2등급	(전 분야) 1등급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2,218명	20% 저감	40% 저감
소방 골든타임률	65.3%	67.5%	70%

● 재난에 취약한 요인 파악 및 개선을 통해 예방적 도시방재계획 수립

- (추진전략) 재난 취약성 분석 및 저감계획 수립
- 지역의 위험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재난 취약성 분석

- 재난 취약성에 따른 저감계획 수립으로 재난발생 가능성 및 피해 저감
- 도시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도시방재계획 수립

● **민관 안전 역량 강화를 통해 레질리언스 강화**

- (추진전략) 부문별 안전 역량 진단 및 강화 방안 마련
- 지역의 안전 역량 진단을 통해 레질리언스 강화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민관협력 안전강화체계 구축
- 반복적인 재난에 대해 대비 및 대응 역량 강화

● **광역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

- (추진전략)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자원의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 광역재난관리를 통해 대형재난 및 신종재난의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
- 안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안전기술력 강화

〈그림 4-8-5〉

경상남도 안전 및 방재계획 목표



4. 추진시책

1) 주요 전략별 추진시책

● 취약성 평가 및 저감계획 수립

• 재난 요인별 취약성 평가

- 경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난 유형 파악
- 재난 유형별 영향을 받는 취약인자 분석
-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의 위험도 분석

• 재난 요인별 취약성 지도 구축

- 앞서 제시한 취약성 평가를 통해 지역별·재난 유형별 취약성 지도를 구축하여 지역의 위험 지역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취약성 지도는 행정, 연구 분야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시 지역주민에 공개하여 위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저감계획 수립 및 반영

- 취약성 평가 결과를 활용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과 같이 법정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확보하도록 함

〈그림 4-8-6〉

취약성 평가 및
저감계획 수립 방안



● 지역의 안전역량 강화

• 지역의 재난안전 역량 평가 및 분석

- 취약성 분석과 더불어 지역의 방재 역량 분석을 통해 보완해야 할 분야를 도출하여 행·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 특히 안전 역량 분석은 지역 단위(마을 단위)로 수립하여 지역 현황에 맞도록 공간적 범위 설정이 중요함
- 안전 역량 분석 분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지표를 도출하고 지역에 맞는 분야를 최종 선정함

• 행·재정적 지원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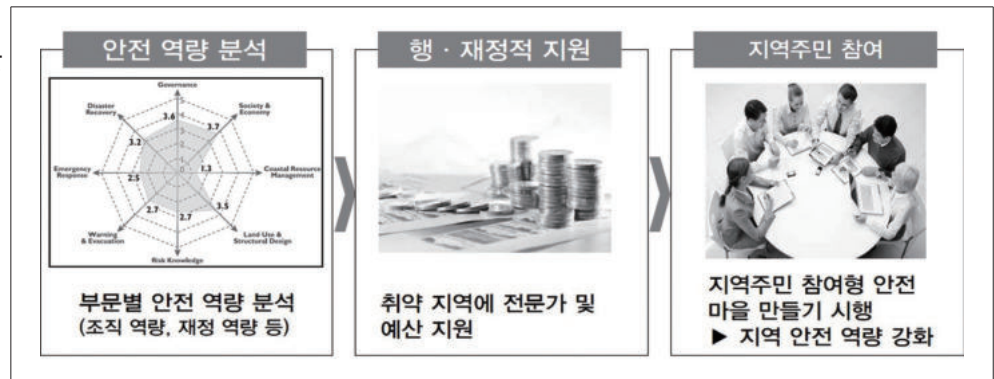
- 안전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지역의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역량 수준이 낮은 분야를 도출하여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전략 수립 필요
- 지역의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을 비롯하여 전문가의 컨설팅 및 지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역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시행

- 안전 역량 분석과 행·재정적 지원이 행정적 역할이라면 실제 재난 시 대피를 수행해야 하는 주체인 지역주민의 참여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
- 행·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참여형 안전 마을 만들기를 권장하도록 함

〈그림 4-8-7〉

지역 안전역량 강화 방안



● 광역재난 공동대응체계 구축

- 재난의 전 주기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의 전 주기를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재난안전의 종합적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는 단기, 중장기계획 수립
 - 광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재난의 신속 대응 방안 마련
- 광역재난의 효과적 관리체계 구축(동남권역, 영남권역, 남중권역 등)
 - 원전 및 화학사고, 국가산업단지 재난 등의 대형 사회재난 공동 관리 방안 마련
 - 산불, 폭염, 홍수 등의 자연재난 공동 관리 방안 마련
 - 소방 및 의료 공동 자원관리 및 대응, 광역피난 및 구호소 운영 체계 마련

〈그림 4-8-8〉

동남권
광역재난관리체계
구축 예시



자료 : 부산연구원 · 울산연구원 · 경남연구원(2021),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2) 재난 주기별 추진시책

(1) 저감(Mitigation)

● 취약성 분석(회복탄력성 평가)

- 경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해 재난 유형별, 지역별 취약성 평가
 - 취약성 파악을 위한 재난유형 선정(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 재난유형은 피해가 높은 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함
 - 경상남도 지역별(시·군 단위), 재난유형별 취약성 및 역량 지표 선정 및 부분별 평가
 - 경상남도 지역별(시·군 단위) 평가 결과 시스템 구축(지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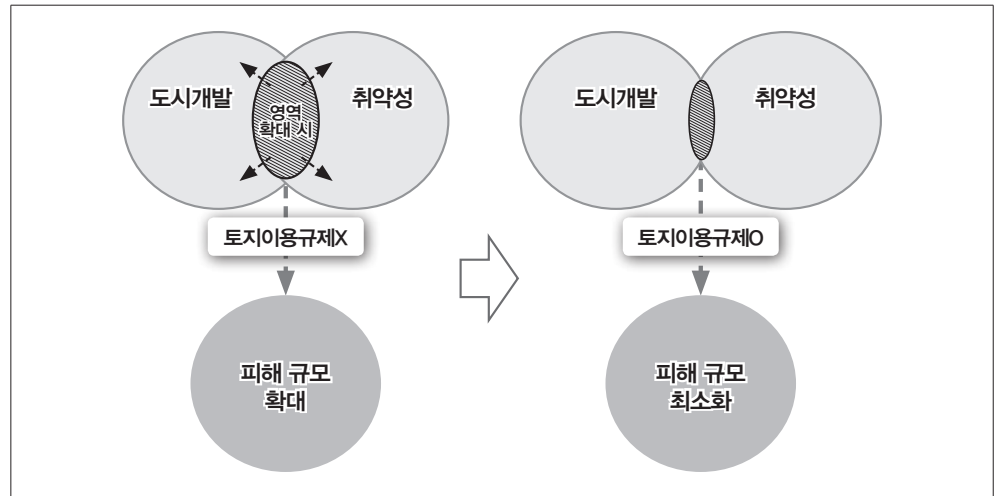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 도시의 위험지역에 도시개발을 억제하여 위험성을 최소화할 방안 필요
 - 경상남도 지역별 취약성 및 역량 평가 시스템 활용 방안 마련
 - 경상남도 도종합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상위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
 - 또한 도시·군 기본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공간계획 분야를 통합하여 연계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

- 도시·군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심의 시 심의위원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그림 4-8-9>

취약성 분석 결과와 도시계획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성



● 조례 개정 및 규제 강화(건축행위 허가 등)

- 경남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조례 개정
 - 자연재난 관련 조례 개정 : 지역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대피소 활용 및 안내에 관한 사항, 각종 재난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등
 - 사회재난 관련 조례 개정 : 교통안전, 화재 예방, 화학물질 안전 등

<그림 4-8-10>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관련 조례 개정 예시

자연재난 관련 조례 개정	사회재난 관련 조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 (자연재난 부문) ▶ 지역의 위험도 평가에 관한 사항 ▶ 대피소 활용 및 안내에 관한 사항 ▶ 각종 재난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연재난 피해 복구비용 지원 관련 ▶ 지진 관련 건축 규제 강화 조례 (지진 안전표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정 (사회재난 부문) ▶ 교통안전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 (어린이 통학로, 보행자 안전 등) ▶ 화재 예방에 관한 건축 조례 개정 ▶ 사업장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교육 의무화 등) ▶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사항

(2) 준비(Preparedness)

● 재난 시나리오 구축

- 훈련, 재난안전교육 등에 활용하고 재난대응 시스템 마련을 위한 재난 시나리오 구축
 - 경상남도 재난유형별 시나리오 제작
 - 경상남도 민방위 훈련 및 교육에 반영
 -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시나리오 피드백

● 주민참여형 방재마을 만들기

-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위험인지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 문제 인식부터 실천 방안 수립까지 과정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지도 제작을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재난안전교육

- 기관 내 안전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교육 결과를 풀뿌리로 내릴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기관 내 안전관리자 및 핵심 지역주민(Key Person) 선정
- 핵심 관리자의 주기적인 교육 및 학습 방안 마련
- 핵심 관리자가 기관 및 지역주민을 교육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3) 대응(Response)

● 매뉴얼 점검 및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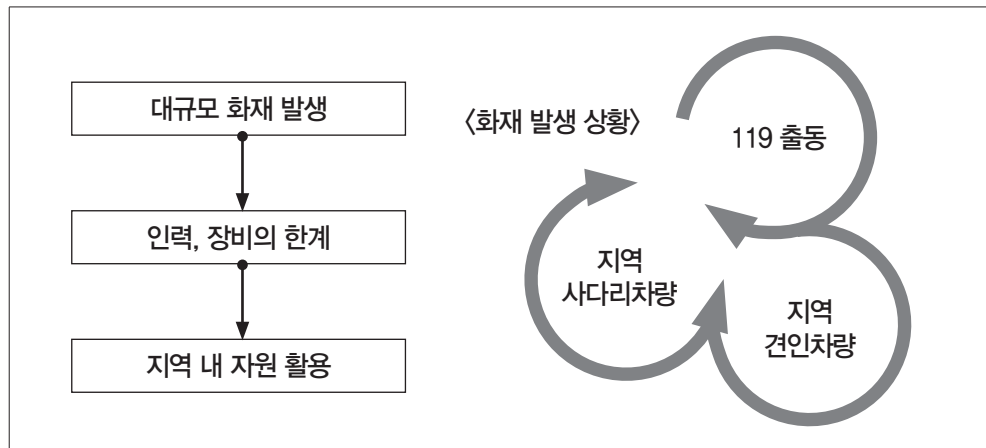
- 지역주민이 재난 발생 시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실용성 높은 매뉴얼 제작
- 경남도의 재난 관련 매뉴얼 현황 및 실태 조사
- 경남도 재난 관련 매뉴얼 수정
- 지역주민 안전 매뉴얼 배포

● 민관 재난대응체계 구축

-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여 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시스템 구축
- 경남도내 자원 파악(공공 및 민간자원 등)
-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및 민간 협력 시스템 구축
- 민관 합동 소방 훈련 실시, 재난 시나리오 가정 훈련 실시

<그림 4-8-11>

화재 발생시 민관 재난대응체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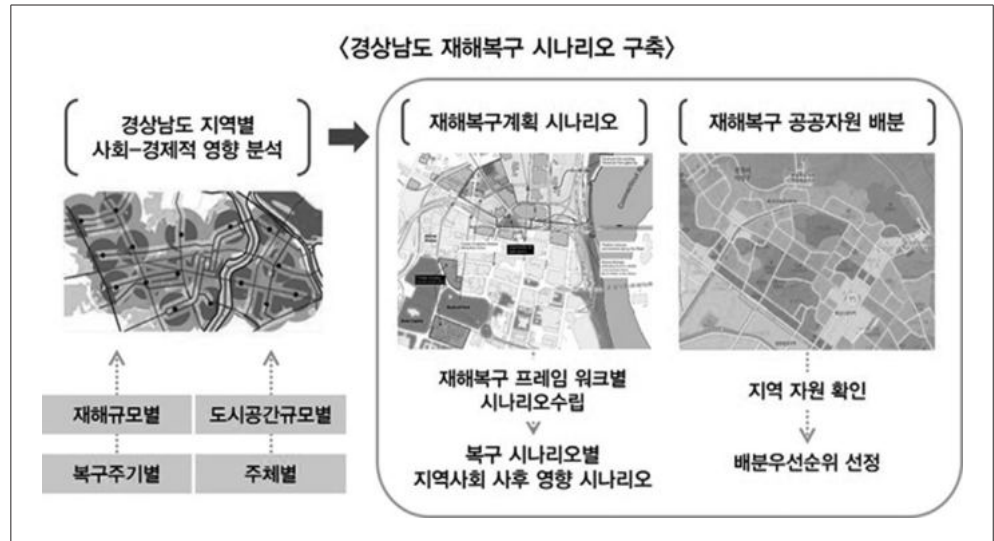
(4) 복구(Recovery)

● 다양한 복구 시나리오 구축

- 재난 복구 시 다음 재난으로부터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전 복구 시나리오 구축
 -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 경제적 영향평가 모델 개발
 - 재해복구계획 시나리오 및 복구 지원 시스템 개발

〈그림 4-8-12〉

경상남도 재해복구 시나리오 구축 예시



● 방재형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재난 피해가 잦은 곳 또는 재난 피해 후 복구가 미흡한 지역을 선정하여 방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 경상남도 방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체계 마련
 -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며 재난 피해에 대한 복구가 필요한 사업지역 선정
 - 방재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
 - 도시재생 사업 신청 및 사업 수행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9장

남북외교

제1절 남북외교

제9장

남북외교

제1절

남북외교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경남의 남북교류협력 현황

(1) 개요

● 현황

-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은 2005년에 태동함
 - 2005년 4월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되고 2006년부터 매년 1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되면서 경남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에 필요한 풀뿌리 민간단체, 제도, 재정 등 사업 추진기반이 마련됨
- 2006년부터 사업 본격화
 - 2006년 1월 경상남도과 북측 민화협의 합의서가 개성에서 체결됨
 - 장교리 협동농장 개발지원, 통일딸기사업 추진, 장교리 소학교 건립 등 농업 분야 남북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장교리 협동농장은 평양 강남군에서 최우수 생산성을 달성함
 - 2007년 4월 도지사를 포함한 97명의 도민대표단이 장교리 소학교 현장과 '통일딸기'가 탄생한 장교리 협동농장 시찰을 위해 김해공항에서 평양행 직항기로 방북 교류함

〈표 4-9-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실적

구분	기간	주요 내용
평양 강남군 장교리	2006~2008년	○ 장교리 협동농장 : 3,210백만원(기금 2,119, 민간 104, 성금 987) - 통일딸기(115), 벼농사, 농기계, 남새온실 등(1,917) - 소학교 건축(987), 도민 대표단 방문(191)
평양 삼석구역	2008년	○ 삼석국영농장 : 154백만원(기금 154) - 통일딸기(22), 거창사과단지 3ha 44백주(132)
평양 락량구역	2008년	○ 어린이 공우유공장건립 : 1,014백만원(정부 503, 민간 511) - 부지 1,980㎡, 건평 400㎡ - 일일생산량 : 공우유 37천개, 두부 12천개
평양 순안구역	2009~2012년	○ 천동국영농장 : 484백만원(기금 476, 민간 8) - 통일딸기(173), 농기계·남새온실 등(238), 과수원 조성(73)
인도지원 등 기타	-	○ 1,452백만원(정부 115, 기금 874, 민간 463) - 통일벼종자 생산(199), 산림복구(417), 가정주택 건립(260), 병원환경개선·의약품보내기 등(190) - 사업모니터링(363), 학술토론회(23)

자료 : 경상남도 내부자료.

2)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 설립

(1) 개요

● 설립취지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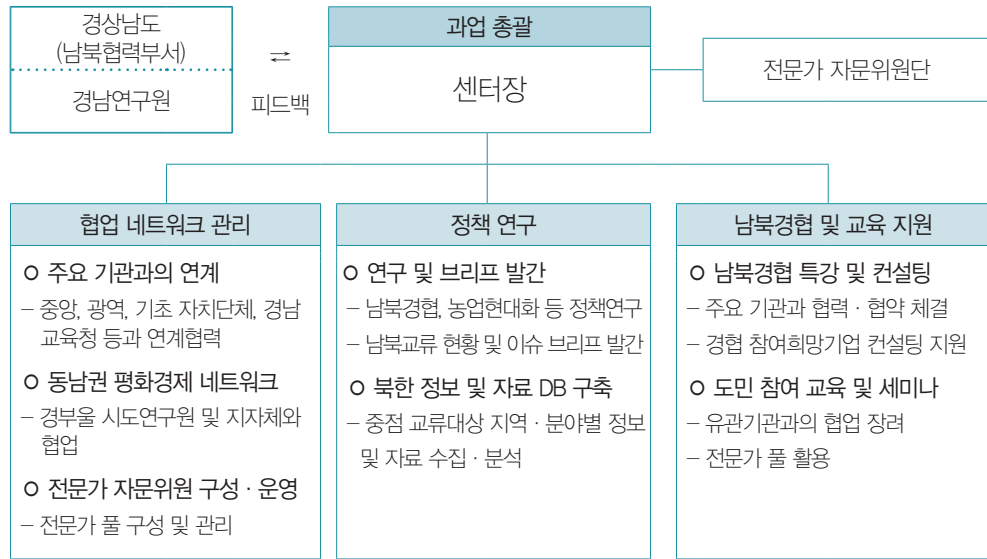
- 경상남도는 민선7기 2018년에 남북교류협력조례를 새로 개정하여 2015년 폐지됐던 남북교류협력기금 조항을 부활시키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문위원회와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2019. 7. 22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남북교류 전문연구기관인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를 설치함
- ‘남북교류협력 연구센터’는 경남의 장점과 북측의 자원을 결합한 지속가능한 협력사업의 발굴과 정책연구, 통일부 등 중앙부처와 통일연구원 및 시도연구원 간 연구협력, 시군과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민들이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전문연구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취지로 설치
- 연구센터 현황
 - (추진근거)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5조(위탁관리)
 - (운영방법) 공기관 대행(경남연구원 위탁 운영)
 - (위탁기간) 2019. 5. ~ 2020. 12. 31.
 - (운영인력) 총 3명(연구위원 2명, 운영인력 1명)

(2) 기능 및 운영 체제

● 주요 기능

- 정책연구 : 정책연구보고서 및 정책브리프 작성, 정책현안 대응 등
- 네트워크 구축 : 중앙부처, 시·군 및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위원회 정책자문 : 남북교류협력위(전문위원회 포함) 정책 자문
- 분야별 포럼 및 남북경협 지원 : 평화·통일포럼 운영, 남북경협 아카데미 개설, 남북경협 컨설팅 및 분야별 북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등

● 운영 체계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북한 및 한반도 국제정세 트렌드

(1) 북한의 국가 전략

●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길'

- 제7기 제5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이하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제시
 - 미국 태도의 이중성 속에서 일반적으로 자주권과 국가안전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기가 압축된 '슬로건'
 - 미국과의 '교착상태'가 장기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 군사적(핵)억제력 및 내부적 힘 강화를 통해 응집력을 키우겠다는 전략
- 북미대화 지속가능성
 - 북미 관계를 '교착상태의 장기성'으로 표현함으로써 미국의 대북한 입장에 따라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핵무기(핵무력)'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음
 - 장기적 안전이 담보되기 전까지 '(새로운)전략무기'의 지속적 개발 의사를 피력했으며,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철회' 전까지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선 대북제재(단계적 또는 부분적) 해제조치, 후 비핵화 협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2)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 미국-이란 충돌

-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은 중동 질서와 핵비확산체제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파병 문제는 물론 외교안보정책 결정체계의 재정비가 필요
-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핵능력 고도화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으로서는 미군의 군사작전이 준 충격이 겹쳐 '핵 포기 대 제재 완화' 수준의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임
- 한국은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함에 있어 미국-이란 충돌이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고 가능성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2) 남북외교 관련 경남 미래 전망

(1) 전망 개요

● 남북관계의 현실을 반영한 지자체 남북교류

- 현 단계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은 남북 미북 관계의 경색국면과 대북제재의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북한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제재 국면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제재 면제 사업과 북한의 경제성장정책에 부합하면서 북한이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양국정상이 합의했으나 아직 논의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사업에 집중

(2) 경남 교류사업의 확대 가능성

● 북한 농촌현대화 사업

- 북한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거·교육·보건의로 등 농촌 인프라 개선을 동시에 실현하는 군(郡) 단위 종합개발협력사업에 관한 관심이 높음
- 북한은 과거 남북 간에 진행된 리(里) 단위 농업개발협력 사례보다 규모가 있으며, 축산업과 과수업 등을 연계한 자급자족형 복합영농 및 과학농법에 기반을 둔 선진적 남북협력모델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남도는 2018년 11월 경남통일농업협력회를 창구로 북한 민화협과 과거 진행한 농업협력사업을 성과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1개 군(郡)을 대상으로 농업협력사업을 확대기로 합의

● **북한 광물자원 연계 소재·부품사업**

- 북한은 세계 10위권의 광물자원을 보유(석탄, 마그네사이트, 철광석, 희토류 등)
- 소재·부품산업은 경남 제조업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전문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음
- 경상남도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주도 협력사업을 추진 중
- 경제사절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70개 이상으로 다수임
- 남북교류협력 상황에 따라 경남 경제인 방북 계획 추진

● **윤이상 테마 남북음악 교류**

- 평양의 윤이상 음악당, 윤이상 음악연구소, 윤이상 관현악단, 경남 통영의 통영국제음악당, 윤이상 콩쿠르, 통영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 교류의 잠재성 높음
- 남북음악교류 준비위원회(통영국제음악재단)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가능성 높음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 **남북외교 부문 핵심지표**

〈표 4-9-2〉
남북외교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0억	150억	300억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 기초지자체	7개	13개	18개
남북교류사업 규모	0억원	100억원	500억원

(1)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2.0’

① 지자체 중심의 남북교류협력

● **취지**

- 경상남도는 과거의 남북교류협력 성과를 계승하면서도 과거에 비해 진전된 제도구축 성과, 지자체 전반의 남북교류협력 추진 추세,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구조 변화 가능성 등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남북교류협력 2.0’ 구상을 계획 중임
- ‘남북교류협력 2.0’은 정부의 ‘분권형 대북정책’과 연계한 지방정부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 견지, 민관협치와 광역-시군 거버넌스, 전문가 네트워크 협업체계 및 도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기본원칙하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인 사업 추진 로드맵이 기초하여 진행될 것임

② 주요 내용

● 지자체 단독사업 추진

- 지자체의 독자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불가능했던 과거에는 전문 NGO와의 협치가 필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의 단독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협치 패러다임이 변화됨
-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당사자 지위를 획득하게 된 정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경상남도는 공공성·책임성·전문성을 제고하며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중심축 역할을 직접 수행할 예정임

● 중앙-지방의 효과적인 분업

- 지자체들의 유사·중복사업 과잉으로 중앙정부 및 북한당국과의 효율적 정책조정체계 필요성이 제기됨
- 중앙정부, 광역 지자체, 시군 지자체와의 다층적 기능 분업체계에 대비한 전담부서 확대개편 등 정책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광역 지자체와의 중복 사업을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연계
-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대응, 경남의 시군 지자체와의 정책협의, 신규 사업 발굴·추진, 민관협력 업무 등 새로운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

● 경남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추진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안)이 제시한 분야별 사업들을 정책우선순위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따른 실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단계적 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 주요 내용
 - 산업연계 기반 조성 : 북한 광물자원 연계 부품·소재산업 발전,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 농수산 분야 교류협력 : 북한 농촌 현대화 사업 지원
 - 지역특화 사회문화 콘텐츠 교류 : 윤이상 테마 남북음악 교류
 - 통일기반 조성 : 남북 교류협력 플랫폼 조성

4. 추진시책¹⁰⁷⁾

1) 경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창출

(1) 추진방안

● 목표

-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기본원칙

- 한반도 평화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된 노력
- 경남의 이익 증진과 남북의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협력 강화
- 경남도민 각계각층의 공감과 참여 속에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

● 5대 기본방향

-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프로세스와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구현
- 대북제재 해제상황에 상응하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계획, 구상, 추진하며 경제, 농수산, 사회문화 3개 영역에서 '경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창출
- 경남이 보유한 스마트 경제·산업 인프라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 및 노동력을 교류하는 경제 협력 전략 추진
- 남북교류협력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조성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인 내부 추진체계 구축
- 경남과 북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에서 종합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냄으로써 남북 주민의 상호이해 증진 및 발전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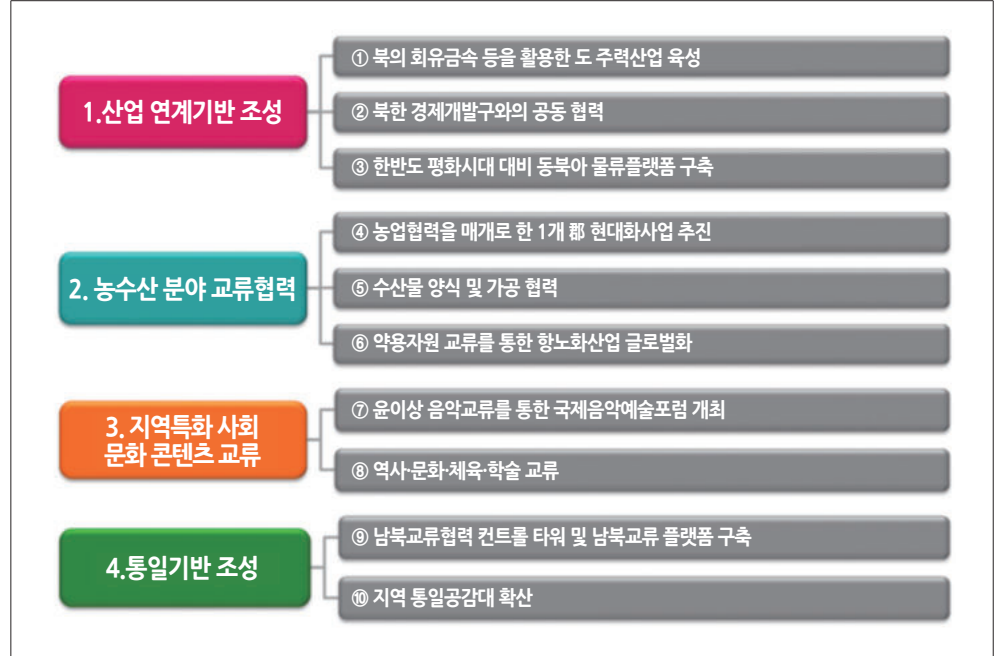
107)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2020 운영계획 참조.

(2) 사업 내용

● 4대 분야, 10개 사업

〈그림 4-9-1〉

'경남형 남북교류협력 모델' 분야 및 사업 내용



2) 북한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남북 산업연계

(1) 배경 및 개요

● 배경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2013년부터 총 22개의 '중소규모 지역밀착형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여 육성·관리하고 있음
-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 4대 분야 10개 사업 중 '산업 연계기반 조성 - 북한 경제개발구와의 공동협력'은 북한 경제개발구 중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경남 기업의 개발사업 진출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사업 개요

- 북한의 '청진 경제개발구'는 인근에 위치한 최대 철강기지인 김책제철연합기업소를 활용하여 금속제품 가공·생산과 동해안 최대 항만인 청진항을 이용한 중계수송 및 대외무역기지로 개발할 계획임

【청진 경제개발구】

- 지역 :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 면적 : 5.4km²
- 개발금액 : 2억 달러
- 유치 희망산업 : 금속가공, 기계제작, 전자제품생산, 건재생산, 중계수송, 대외무역

- 경남 제조업 중 단순 조립·가공 등 인건비 문제로 경쟁력이 저하되어 해외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 진출/협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청진항 항만 인프라 및 해상 운송업 등을 추진
- 청진 경제개발구는 프로그래밍·과학기술 서비스·희유금속 활용·노후선박 해체·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의 분야에서 경남의 산업적 조건과 환동해권을 통한 협력이 입지 조건에서 유리함
 - 산업연계에서는 금속가공(김책제철 원료 활용), 선박 수리부품 공급 등 협력 추진
 - 청진항 항만설비 항만·전력 인프라 SOC 관련 PF 프로젝트에 참여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부산/경남-일본-동남아 등을 잇는 해상운송업(중계무역) 관련 기업의 진출

(2) 추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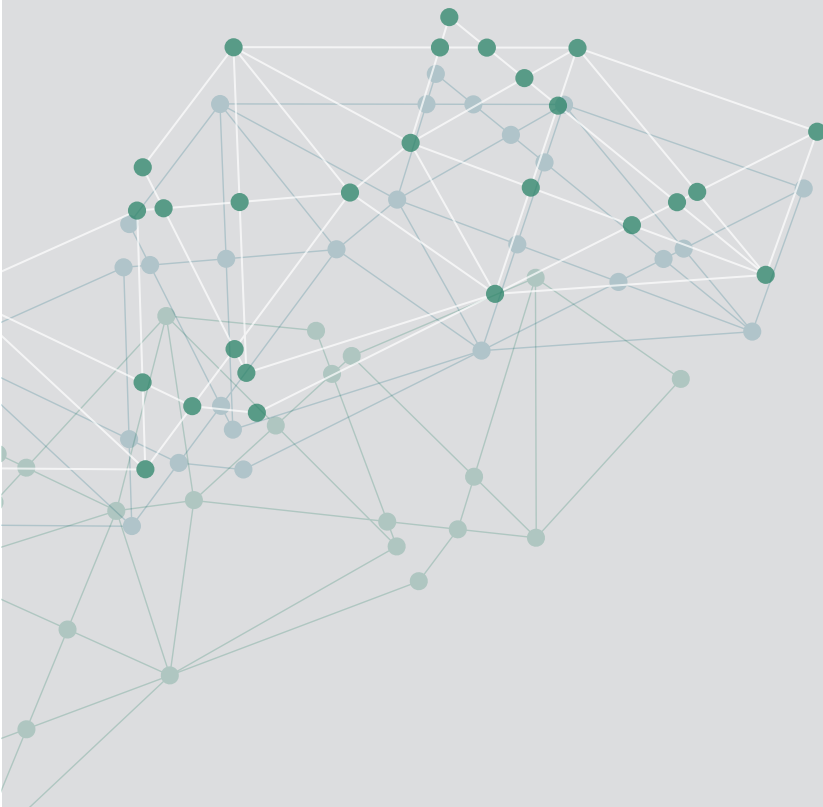
● 조건 : 한반도 및 남북관계의 안정화

- 우리 기업이 북한 경제개발구에 투자 및 진출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불안 요소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됨
- 대외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프로세스가 진전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 남북경협을 둘러싼 비경제적 제약조건의 해소
- 대내적으로 기업 유치, 자금조달, 재산권 보호 등 제반 측면에서 북한이 법제도 조건을 완비하고 상호 간 권리와 의무를 보장

● 사업 추진 준비 내용

- 남북경협 추진의 대내외 여건 분석
- 북한의 산업정책 및 남북경협 실수요 파악
 - 경제개발구의 시장성·교통인프라·산업 여건 등 평가지표에 의한 입지분석
 - 청진항 항만설비 항만·전력 인프라 SOC 관련 PF 프로젝트에 참여
- 진출에 유리한 산업·업종 분야 선정 및 업종·분야별 남북협력 방안
- 경남 내부(자체)적 추진방안(TF 등 거버넌스 구축, 경험기업 네트워크 형성, 경제시찰단 구성 등) 등 남북경협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책 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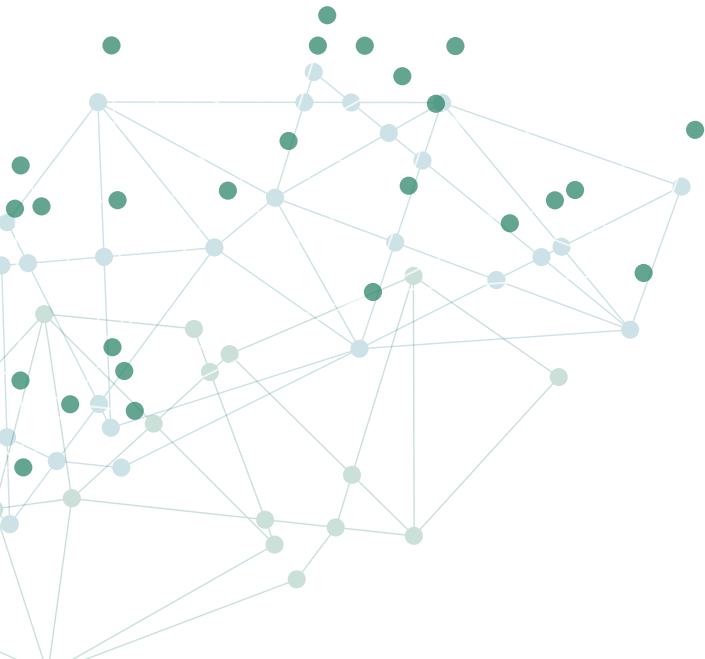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5편

계획의 집행 및 관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행정계획

제1장

행정계획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행정구역 현황

- 경상남도의 행정구역은 8개 시, 10개 군, 21개 읍, 175개 면, 112개 동(348개 법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체 인구는 2018년 기준 약 338만여명이며, 전체 인구밀도는 320명임
- 행정구역 중 인구밀도 1,000명 이상인 곳은 창원시(1,409명)와 김해시(1,152명)(시 평균 671명), 반대로 50명도 안 되는 곳은 합천군(47명), 산청군(45명)(군 평균 8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 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시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어야 함

(단위 : 명, km², 개)

〈표 5-1-1〉

경상남도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구분	인구	면적	인구밀도	계	읍	면	동	법정동
경남	3,373,988	10,540.12	320	308	21	175	112	348
창원시	1,053,601	747.92	1,409	58	2	6	50	194
진주시	345,987	712.86	485	30	1	15	14	33
통영시	133,720	239.85	558	15	1	6	8	17
사천시	113,888	398.67	286	14	1	7	6	27
김해시	533,672	463.43	1,152	19	1	6	12	34
밀양시	106,744	798.63	134	16	2	9	5	8
거제시	250,516	402.99	622	18		9	9	14
양산시	348,639	485.56	718	13	1	4	8	21
의령군	27,667	482.89	57	13	1	12		
함안군	67,025	416.61	161	10	2	8		
창녕군	63,396	532.84	119	14	2	12		
고성군	53,243	517.93	103	14	1	13		
남해군	43,990	357.53	123	10	1	9		
하동군	47,533	675.61	70	13	1	12		
산청군	35,952	794.55	45	11	1	10		
함양군	40,044	725.45	55	11	1	10		
거창군	62,455	803.30	78	12	1	11		
합천군	45,916	983.47	47	17		16		

자료 :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8.12.31.)

2) 공무원 현황

-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은 도 본청 공무원 정원 5,364명, 시·군 공무원 정원 19,904명으로, 4급 이상 공무원은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순으로 많으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양산시, 거제시 순으로 많음
- 경상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김해시(306명), 양산시(288명), 거제시(229명) 순으로 많고, 의령군(47명), 합천군(61명), 산청군(62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시와 군 지역 간 동일 단위 및 교차 비교 결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격차가 있으므로 지역주민 간 행정(공무원)의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대응을 위한 조정이 필요함

(단위 : 명)

〈표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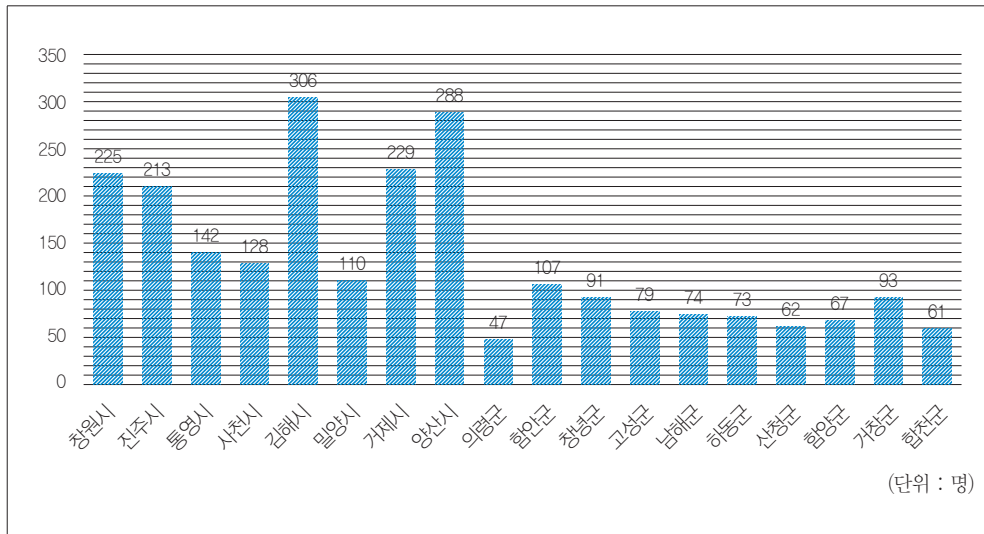
경상남도 및 시·군
공무원 직종별
정원 현황

구분	합계	정무직	고위공무원	일반직									전문 경력관	지도 도직	연구 직	별정 직	교육 직	소방 직	
				소계	3 급 이 상	3 · 4 급	4 급	4 · 5 급	5 급	6 급	7 급 이 하								
합계	25,268	19	3	20,473	22	10	180	29	1,321	5,262	13,618	1	23	7	479	288	50	72	3,796
경남	5,364	1	3	1,943	14	2	78		337	656	841	1	12	2	30	211	22	72	3,082
시군계	19,904	18	-	18,530	8	8	102	29	984	4,606	12,777		11	5	449	77	28	-	714
창원시	4,684	1		3,827	1	7	18	8	202	911	2,674		4	2	32	17	5		802
진주시	1,623	1		1,577	1		10		81	374	1,109		2		38	4	3		
통영시	948	1		920	1		7		51	217	643		1		23	2	2		
사천시	905	1		874	1		7		48	229	589				29	1	-		
김해시	1,741	1		1,706	1	1	15		79	402	1,208				25	7	2		
밀양시	971	1		945	1		6		47	251	639		1		20	3	2		
거제시	1,163	1		1,128	1		9		62	289	767				27	5	2		
양산시	1,203	1		1,170	1	12	12		63	279	814		1		21	10	1		
의령군	612	1		590			1	3	35	144	407				18	2	1		
함안군	634	1		607			1	3	32	164	406		1		23	2	1		
창녕군	762	1		736			1	3	37	182	512				21	4	1		
고성군	676	1		646			1	3	38	163	440		1		24	4	1		
남해군	607	1		581			3		33	143	401		1		23	1	1		
하동군	683	1		652			3	1	37	159	452				25	2	3		
산청군	600	1		573			2	2	30	149	390				24	1	1		
함양군	634	1		605			1	2	33	174	393		1	1	24	4	-		
거창군	679	1		647			1	3	35	177	431				25	5	1		
합천군	779	1		747			4	1	41	199	502				27	3	1		

주 : 국가공무원 6명 포함.
 자료 : 행정안전부(2019)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2018. 12. 31.)

〈그림 5-1-1〉

경상남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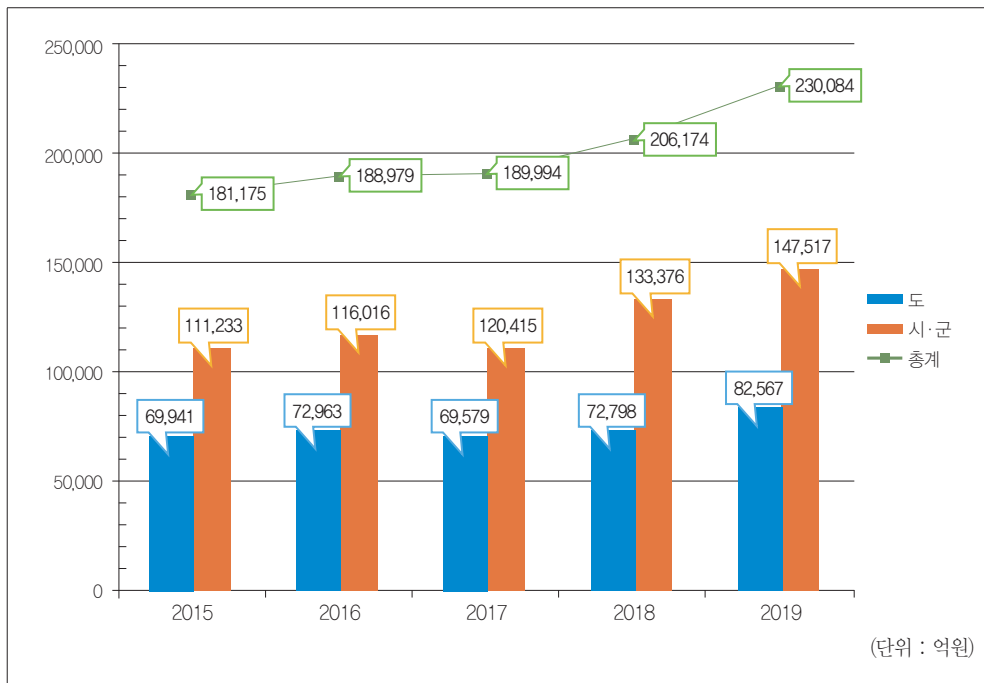
자료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공개데이터 근거 작성(2018.12.31. 기준).

3) 예산 현황

- 경상남도 총예산은 지난 5년간(2015~2019년) 연평균 약 5.25%씩 꾸준히 증가하여왔으며, 도, 시와 군 지역 모두 소폭 증가하여왔음. 2019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변화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음

〈그림 5-1-2〉

경상남도 예산 규모



자료 : 경상남도청 홈페이지 공개데이터 근거 작성(2018.12.31. 기준).

4) 거버넌스 현황

● 주민참여

-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 주민참여를 실현하고자 대표적으로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주도형 사업을 64건(1,888백만원)과 도민주도형 생활밀착형 사업 49건(5,602.3백만원)을 선정,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음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위촉직) 중 80% 이상을 도민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위원 활동 범위를 제안 및 선정, 모니터링으로 확대하고, 참여예산 연구회(자문단)를 운영, 주요 사업(1억원 이상 도자체사업) 우선순위 조정기능을 도입하였음

● 주민자치

-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2014년 3월 설립,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원 184명으로 구성됨. 시군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 20개, 면 173개, 동 112개로 총 305개가 운영 중이며, 위원은 총 6,759명임
- 읍면동별 위원회가 설치(김해시 제외 : 3곳 미설치), 시군협의회는 9곳 구성 중임(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 제3차 회의자료(2018.12.31. 기준)
- 경상남도 주민자치센터의 경우 총 288개(읍 20개, 면 156개, 동 156개) 설치되었으며, 프로그램은 2,301개 운영 중으로 전국 광역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행정안전부, 2019 행정안전통계연보)
- 주민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정책(사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창구 등 주민참여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중앙, 타 지자체 등 기관 간 협치

- 집행부와 도의회 간 도정 운영을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분기별 상임위를 운영, 소통 채널을 구축, 상시 운영함으로써 도정 주요 핵심사업 등을 위해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앙정부 소속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와 중앙정부 소속기관 간 협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 운영 추진 중임
-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동남권 공동협력기구를 구성, 교통, 경제, 안전, 환경 문제 등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또한 전남과의 협약 및 전남, 부산과 남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중임
- 실질적 협력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력, 광역권, 도-시군, 시군 간 협력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2. 미래 트렌드 및 경남 미래변화 전망

1) 정부 혁신 패러다임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

- 기존 양적 성장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해 나타난 양극화, 불평등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효율성과 효과성 외에 민주성, 형평성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자 정부 혁신 패러다임으로서의 전환을 추진 중임
-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평가를 비롯하여 사회적 가치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재정사업과 공공조달 지원 및 평가, 성과관리, 공무원 채용과 승진 등에서 실현하도록 하고 있음

2)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과 주민 주권 확립

● 국가발전전략으로서 지방분권체제로의 전환

- 산업화 시대 중앙집권적 국가에서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 지역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로드맵 및 추진계획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사무, 재정, 조직 및 인사 부문의 분권과 중앙과 지방, 지방-지방 간 협력에 관한 목표와 과제를 수립,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주민 주권 구현

-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주민 주권 구현 목표로 자치분권 로드맵 및 추진계획에서 주민 주권 구현 과제를 강조하고, 정책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목표와 과제를 수립·추진 중임
-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등 주민참여3법 제정을 추진하고, 주민자치회의 공공서비스 및 시설 위·수탁, 예산, 자치규약 제정 등 실질적 역할 및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내 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3)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과 협치 행정

● 정책의 전 과정, 영역에 있어 협치 실현

-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화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발생하여 행정 주도를 통한 해결이 어려워졌기에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지속시키고, 공공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숙의 기반의 참여제도를 도입 운영하고자 함

- 민관협치와 부처-기관 간, 중앙-지방, 지방-지방 간, 행정부-입법부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구현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행정

- 정책 기초자료로써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여 헬스케어, AI, 클라우드 등 스마트 시티의 핵심 기술 적용을 넘어 수요자 맞춤 정책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고 있음

●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을 통한 플랫폼 정부 구현

- 행정과 시민들의 정보 공유를 통해 집단지성을 구축하여 정책 결정 및 집행, 평가 등 전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빅데이터 허브 및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사회적 가치 실현 통한 공공성 복원

- 민주성, 형평성과 같은 핵심 가치 실현을 통해 공공이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자치와 협치를 통한 주민 주권 구현

- 자치분권의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의 궁극적 가치이자 목적인 주민 주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행정과 주민 간 관계는 물론 지자체 간, 기관 간 협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속의 기반 방식을 통한 가치 정립 등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플랫폼 정부 통한 사회문제 해결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행정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정책의 전 과정에 주민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2) 추진전략

● 행정계획 부문 핵심지표

〈표 5-1-3〉
행정계획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주민참여예산제	130억	500억	1,000억
주민자치회 실시	15.6%	50%	100%

● 사회적 가치 실현 행정체계 구축

- 정책의제 설정부터 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인권, 안전, 복지, 노동 영역을 비롯하여 정책영역별 사회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
- 행정 내부운영에 있어 채용과 승진, 교육 훈련 등 인사관리와 목표 및 평가 등 성과관리 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자치분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제고

- 자치권이 보장되도록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함

● 협치 행정 구축

- 숙의 방식을 기반으로 한 민관협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함
- 중앙정부, 타 지자체, 행정부와 의회 간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 정책 전 주기 적용 가능한 데이터 구축 및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여 수요자 맞춤형 정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활용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하여 다양한 정책을 설계, 실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플랫폼 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4. 추진시책

1) 사회적 가치 중심 행정혁신

(1) 정책 과정 내 사회적 가치 실현

● 정책 과정 내 주민참여 확대

- 도정 비전 수립, 정책의제 설정,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행정과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나누는 협치를 실행
- 협치 관련 조직(기구), 제도,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 및 문화 확산 필요

● 주민 주도형 평가

- 정책모니터링, 만족도, 평가 등 도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주민들이 평가의 주체가 되어 평가를 설계단계부터 추진

(2)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내부관리

● 사회적 가치 성과관리

-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사회적 가치 실현 과제 외에 전 영역에 걸쳐 정책효과가 평가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추진과제 간 인과성을 평가

2) 주민자치 활성화

(1) 정책 과정 내 권한 확대

●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권한 확대

- 주민자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등을 부여, 행정서비스와 마을사업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

(2) 읍면동 행정혁신

● 읍면동의 역할 변화

-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지방행정기관인 읍면동이 센터 등 공간적 기능 전환을 넘어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3) 협치 행정

(1) 지자체 간 협치

● 도내 행정단위 간 협치

- 광역단체인 도와 기초단체인 시·군, 읍면동 단위 행정기관 간 협치가 중요, 협치를 위한 기능 및 사무 배분, 협약과 자원 공동활용을 위한 제도 등 필요

● 타 지자체와의 협치

- 광역적 수행이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분야를 확대하고, 기능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제도 등 수립

4) 데이터 기반 플랫폼 정부 구축

(1) 데이터 구축

● 영역별/주기별 적용 가능한 데이터 구축

-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전략을 우선으로 수립, 정책영역별/주기별 적용 가능한 데이터를 구축, 데이터 구축과 전략의 상호반영을 통한 추진

●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 관리, 보안, 정책문제 등을 다루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2) 데이터 활용

● 행정서비스 설계 시 반영

- 행정이 정책사업 및 서비스의 최초 설계 및 수정 시 데이터에 기반한 피드백을 통해 추진

● 주민 주도의 정책설계

- 주민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기 용이한 플랫폼을 구축,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행정에 기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재정계획

제2장

재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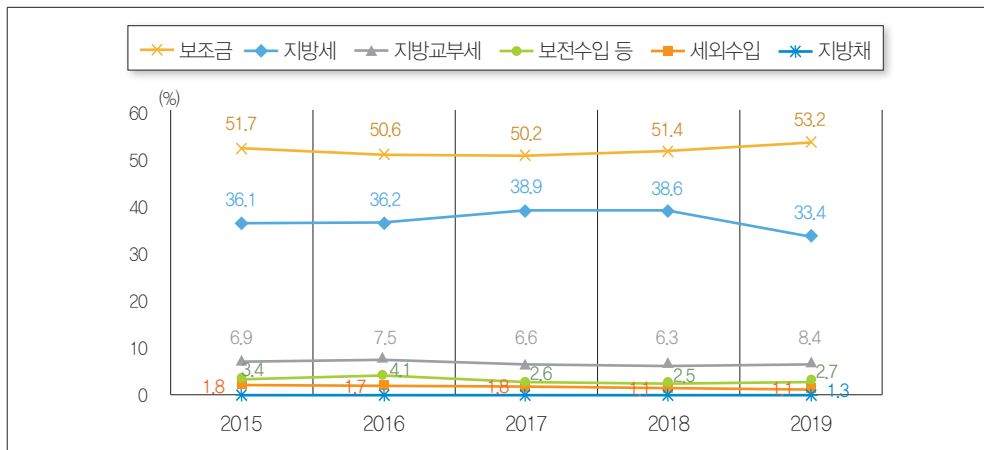
1. 현황 및 여건 분석

1) 세입 구조

- 경상남도 세입 총액은 분석 기간 연 5.8%의 성장세를 보이나, 자체 재원인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고, 의존 재원인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비중이 커지고 있음
- 지방세는 취득세 등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관련 세제 구조로 인해 최근 2019년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세입의 불안정성을 보임

〈그림 5-2-1〉

경상남도 항목별 세입 비중 추이



자료 : 경상남도 재정공시(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표 5-2-1〉

경상남도 세입 구조 현황

구분	금액					연평균 증가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전년 대비 증가율)	5,994,222 (-)	6,208,198 (3.6)	6,462,903 (4.1)	6,642,114 (2.8)	7,516,354 (13.2)	5.8
지방세 (전년 대비 증가율)	2,165,120 (-)	2,249,433 (3.9)	2,515,371 (11.8)	2,562,763 (1.9)	2,511,407 (-2.0)	3.8
세외수입 (전년 대비 증가율)	110,407 (-)	102,763 (-6.9)	113,047 (10.0)	75,754 (-33)	79,709 (5.2)	-7.8
지방교부세 (전년 대비 증가율)	415,500 (-)	463,196 (11.5)	425,702 (-8.1)	420,169 (-1.3)	631,121 (50.2)	11.0
보조금 (전년 대비 증가율)	3,101,502 (-)	3,141,373 (1.3)	3,243,411 (3.2)	3,416,532 (5.3)	3,994,999 (16.9)	6.5
지방채 (전년 대비 증가율)	-	-	-	-	100,000 (-)	-
보전수입 등 (전년 대비 증가율)	201,693 (-)	251,432 (24.7)	165,373 (-34.2)	166,897 (0.9)	199,117 (19.3)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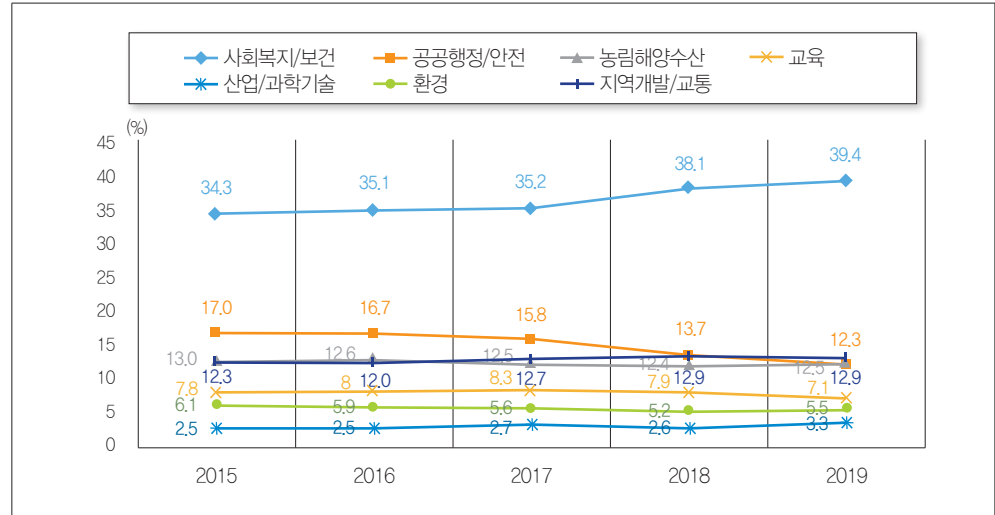
자료 : 경상남도 재정공시(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2) 세출 구조

- 경상남도 세출 총액은 분석 기간 연 5.8%의 증가세를 보이며,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공공행정·안전 분야 지출이 감소하여 재정의 효율성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를 위한 산업·과학기술, 지역개발·교통 분야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5-2-2〉

경상남도 분야별
세출 비중 추이



자료 : 경상남도 재정공시(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표 5-2-2〉

경상남도 세출 구조
현황

구분	금액					연평균 증가율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총계 (전년 대비 증가율)	5,994,224 (-)	6,208,198 (3.6)	6,462,903 (4.1)	6,642,114 (2.8)	7,516,355 (13.2)	5.8
사회복지/보건 (전년 대비 증가율)	2,055,864 (-)	2,178,434 (6.0)	2,275,653 (4.5)	2,532,519 (11.3)	2,959,028 (16.8)	9.5
공공행정/안전 (전년 대비 증가율)	1,018,897 (-)	1,039,504 (2.0)	1,023,772 (-1.5)	911,091 (-11.0)	923,857 (1.4)	-2.4
농림해양수산 (전년 대비 증가율)	776,655 (-)	782,306 (0.7)	806,441 (3.1)	826,078 (2.4)	938,139 (13.6)	4.8
지역개발/교통 (전년 대비 증가율)	738,868 (-)	747,507 (1.2)	821,456 (9.9)	858,180 (4.5)	970,502 (13.1)	7.1
교육 (전년 대비 증가율)	470,335 (-)	495,685 (5.4)	533,524 (7.6)	523,413 (-1.9)	534,939 (2.2)	3.3
환경 (전년 대비 증가율)	365,821 (-)	367,256 (0.4)	365,040 (-0.6)	346,297 (-5.1)	416,070 (20.1)	3.3
산업/과학기술 (전년 대비 증가율)	149,562 (-)	154,860 (3.5)	172,145 (11.2)	174,960 (1.6)	248,872 (42.2)	13.6
예비비/기타 (전년 대비 증가율)	418,222 (-)	442,646 (5.8)	464,872 (5.0)	469,576 (1.0)	524,948 (11.8)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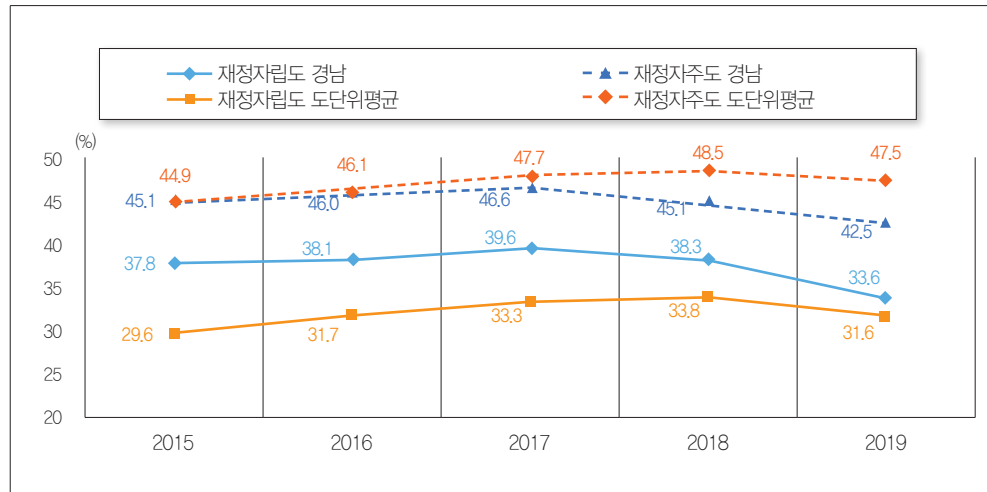
자료 : 경상남도 재정공시(일반회계 당초예산 총계 기준).

3) 재정 자율성

- 경상남도 재정자립도¹⁾는 경남본청 33.6%로 전국 도 단위 평균(31.6%)²⁾를 상회하나, 최근 들어 지방세 비중 감소와 의존 재원 비중 증가로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는 추세임
- 도내 기초지자체 역시 시 단위 평균 34.1%, 군 단위 평균 17.7%로 전국 동종단체 평균(시 단위 36.8%, 군 단위 18.3%)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임
- 경상남도 재정자주도³⁾는 경남본청 42.5%로 전국 도 단위 평균(47.5%)에 비해 낮고⁴⁾ 역시 최근 지방세 비중 감소 등으로 재정 자율성이 악화하고 있음
- 도내 기초지자체는 시 단위 평균 63.4%, 군 단위 평균 65.6%로 전국 동종단체 평균(시 단위 64.9%, 군 단위 65.3%)에 근접함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자율재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재정 자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음

〈그림 5-2-3〉

경남의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추이



주 : 각연도, 각 도 분청 당초예산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 경상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상당한 편차를 보이며, 농촌지역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으로 이러한 재정 격차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

1)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자체수입/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계산함.
 2)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57.4%인 경기본청을 제외할 경우 전국 도 단위 평균은 28.4%로 경남본청의 재정자립도는 동종단체보다 상대적으로는 양호한 수준임.
 3) 재정자주도란 재정자립도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자주재원(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을 추가한 지표로서 “(자체수입+자주재원)/자치단체 예산 규모”로 계산함.
 4) 경남은 예산 규모 대비 자주재원 비중이 8.9%이나, 경기도를 제외한 도 단위 평균은 19.0%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이 예산 규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어 재정자주도가 낮음.

〈표 5-2-3〉

경상남도 시군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단위 : 백만원, %)

구분	자체수입 (A)	자주자원 (B)	예산 규모 (C)	재정자립도 (A/C×100)	재정자주도 ((A+B)/C)×100	
경남본청	2,395,263	631,121	7,121,383	33.6	42.5	
창원시	926,249	584,200	2,371,464	39.1	63.7	
진주시	409,783	400,000	1,164,986	35.2	69.5	
통영시	98,000	209,535	523,078	18.7	58.8	
사천시	139,577	242,500	617,694	22.6	61.9	
김해시	514,498	256,500	1,288,520	39.9	59.8	
밀양시	114,755	292,000	623,002	18.4	65.3	
거제시	202,872	183,200	625,600	32.4	61.7	
양산시	396,140	247,600	1,008,855	39.3	63.8	
의령군	49,845	159,626	311,442	16.0	67.3	
함안군	102,079	162,110	401,548	25.4	65.8	
창녕군	84,568	210,407	458,511	18.4	64.3	
고성군	77,340	197,514	433,949	17.8	63.3	
남해군	73,495	182,640	413,397	17.8	62.0	
하동군	56,871	232,300	448,453	12.7	64.5	
산청군	62,813	210,725	419,508	15.0	65.2	
함양군	77,688	233,553	455,128	17.1	68.4	
거창군	118,709	215,000	483,088	24.6	69.1	
합천군	62,144	260,368	489,880	12.7	65.8	
총괄	경남	5,962,689	5,110,899	19,659,486	30.3	56.3
합계	시 단위	2,801,874	2,415,535	8,223,199	34.1	63.4
	군 단위	765,552	2,064,243	4,314,904	17.7	65.6

주 : 2019년 당초예산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2. 중장기 재정 추계

1) 추계 방법

● 중장기 재정추계 방법

- 중장기 재정추계는 재정편성의 기초가 되는 장래 재정의 세입과 세출을 예측·전망하는 것으로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출과 재원조달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임
- 계량적 기법에 의한 지방재정의 장기 전망은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를 바탕으로 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증가율 기준 적용, 시계열 회귀분석 모형, 지수평활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증가율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가장 손쉽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재정전망이 가능하나, 분석 기간과 기준연도 설정에 따라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최근 기준연도의 이상치(outlier) 발생 등에 따른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
- 시계열 회귀모형은 AR, ARIMA, VAR 등 시계열 계량모형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변수와 연계한 적합성 높은 전망이 가능하나, 분야별 적정 모형의 선정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추가적인 독립변수와 과거기간에 대한 자료의 가용성이 높을 때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관측치를 기중평균하여 예측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가장 손쉽게 신뢰할 수 있는 전망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
- 본 계획에서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장기 추계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수평활법을 적용하여 세입, 세출을 추계하되, 각 전망 항목의 추세성 여부에 따라 단순지수평활법과 홀트(Holt, 1957)의 추세지수평활법을 구분하여 적용함
- 추계기간은 2021~204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세입 항목별 세입액과 분야별 세출액을 추정함
-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된 2008년 이후부터 결산 통계가 작성된 가장 최근 시점인 2018년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수치를 사용함
- 세입의 경우 2014년 이전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분류하던 것을 2014년부터 지방채 항목과 분리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항목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는데, 재정추계에서는 지방채를 제외한 이월금, 예치금 회수 등과 같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제외하고 분석함

● 과거 추세

-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해 과거 2008~2018년 세입 항목별 과거 추세를 검토한 결과 세입 총계는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일부 항목에서는 점진적 감소 추세와 함께 일시적으로 불규칙한 변동성을 보이기도 함
- 특히, 세외수입과 지방채 항목은 최근 약 10년간 전반적으로 매우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이에 대한 미래 전망은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함

- 지방채의 경우 2020~2024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지역개발채권 발행 예상액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보조금 이월금 등 시기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재정추계 측면에서는 시기별 오차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세입 추계 항목에서 제외함

〈그림 5-2-4〉

경상남도 세입 항목별
과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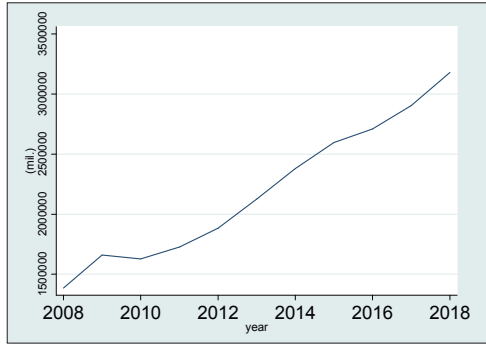


주 : 각연도, 결산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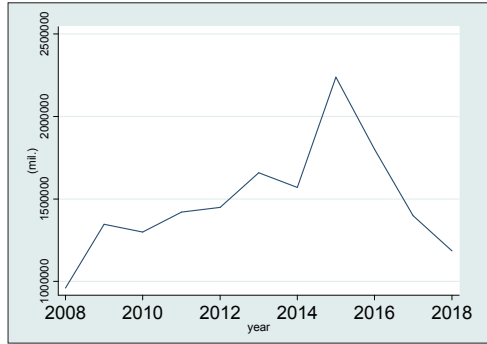
- 과거 2008~2018년 세출 항목별 과거 추세를 검토한 결과 분야별 재정지출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행정/안전, 지역개발/교통, 환경 분야 등에서는 불규칙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개발/교통, 환경 분야의 경우 감소세를 보인 것처럼 나타났으나, 최근 2019~2020년 예산 수치를 고려하면 역시 장기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임

〈그림 5-2-5〉

경상남도 세출 분야별
과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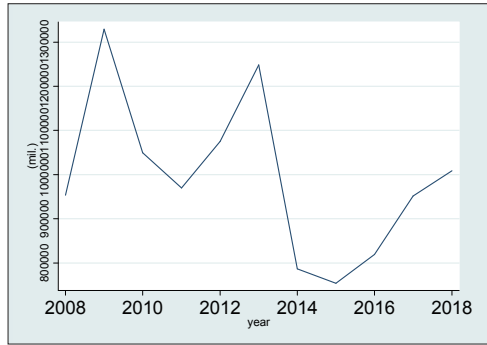
사회복지/보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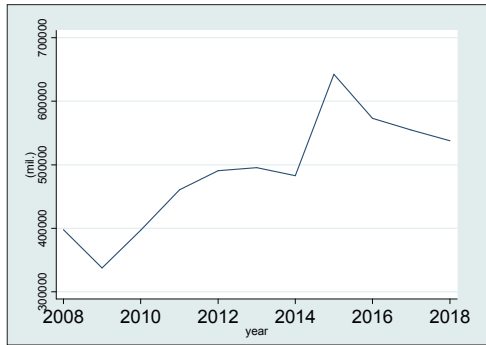
공공행정/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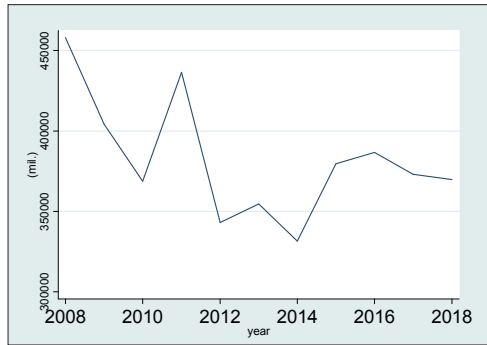
농림해양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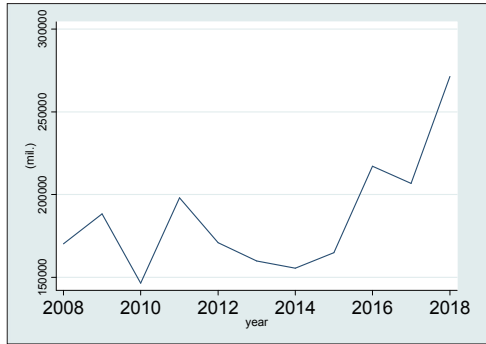
지역개발/교통



교육



환경



산업/과학기술



예비비/기타

주 : 각연도, 결산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

● 추계방법의 적용

- 2021~2040 경상남도 중장기 재정추계를 위한 과거 추세와 미래 전망 및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과거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평활법을 적용하여 미래 전망치를 추정하였으며, 최종 추계에는 최근의 경상남도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기초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9~2020년 예산 기준 세입, 세출 금액도 포함하여 추정함

〈표 5-2-4〉
경상남도 재정의
과거 추세 및
미래 전망과 추계방법

구분	과거 추세 (2008~2018년)	미래 전망 (2021~2040년)	추계방법	
세입	지방세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세외수입	점진적 감소	일정 유지	단순 지수평활법
	지방교부세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보조금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지방채	점진적 감소	일정 유지	지방채 관리계획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불규칙 증감	전망 제외	전망 제외
	세입 총계	대체로 증가	일정 증가	전망치 합계
세출	사회복지/보건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공공행정/안전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농림해양수산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지역개발/교통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교육	대체로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환경	불규칙 증감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산업/과학기술	대체로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예비비/기타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추세 지수평활법
	세출 총계	점진적 증가	일정 증가	전망치 합계

주 : 세입 항목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망에서 제외함.
자료 : 연구진 작성.

2) 예측 및 전망

● 총괄

- 장기 지방재정 추계는 2008~2018년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추세와 경상남도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세입, 세출 항목별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함
 - 추계방법은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면서도 미래 전망의 오차가 크지 않은 지수평활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각 항목에 따라 추세 반영 여부를 구분하여 적용함
 - 최종 추계에는 최근의 경상남도 세입 전망과 예산편성 기초를 반영할 수 있도록 2019~2020년 예산 기준 세입, 세출 금액도 포함하여 추정함
- 경상남도 세입 규모 현황은 2020년 예산 기준 9조 4,747억원으로 이 중 재정추계에 포함하지 않은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 3,509억원을 제외하면 9조 1,237억원임
- 경상남도 세입 규모 추정 결과 2021년 세입 총액은 9조 1,837억원, 2030년 12조 1,080억원, 2040년 15조 3,571억원으로 2021~2040년 기간 연평균 2.7% 증가율을 보이거나 점차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남도 세출 규모 추정 결과 2021년 세출 총액은 9조 6,608억원, 2030년 12조 4,335억원, 2040년 15조 5,520억원으로 2021~2040년 기간 연평균 2.54% 증가율을 보이거나 점차 증가율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세입 전망에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제외하였음을 고려할 때 세입, 세출의 차이가 크지 않아 대체로 건전한 재정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그러나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이양사업 증가,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 사회보장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고려한 지방세제 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세입 전망

- 지방세 중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은 부동산 경기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 조정 가능성이 있으나, 지방소비세 레저세 등은 경제성장 및 소득증대와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따라 지방세 증가세는 점차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
- 세외수입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거나, 일시적 변동을 제외하고는 현 수준에서 대체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지방분권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방이양 사업의 증가 등에 따라 현재와 같은 점진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지방채는 대규모 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중기지방 재정계획 상의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함

〈표 5-2-5〉

경상남도 중장기
세입 규모 전망

(단위 : 십억원, %)

구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총세입	
						금액	증가율
2021년	3,120	159	732	5,083	90	9,184	-
2022년	3,245	159	753	5,262	90	9,509	3.5
2023년	3,370	159	773	5,441	90	9,834	3.4
2024년	3,495	159	794	5,620	90	10,159	3.3
2025년	3,620	159	815	5,800	90	10,483	3.2
2026년	3,745	159	836	5,979	90	10,808	3.1
2027년	3,870	159	856	6,158	90	11,133	3.0
2028년	3,995	159	877	6,337	90	11,458	2.9
2029년	4,119	159	898	6,517	90	11,783	2.8
2030년	4,244	159	919	6,696	90	12,108	2.8
2031년	4,369	159	939	6,875	90	12,433	2.7
2032년	4,494	159	960	7,054	90	12,758	2.6
2033년	4,619	159	981	7,233	90	13,083	2.5
2034년	4,744	159	1,002	7,413	90	13,408	2.5
2035년	4,869	159	1,022	7,592	90	13,733	2.4
2036년	4,994	159	1,043	7,771	90	14,057	2.4
2037년	5,119	159	1,064	7,950	90	14,382	2.3
2038년	5,244	159	1,085	8,130	90	14,707	2.3
2039년	5,369	159	1,105	8,309	90	15,032	2.2
2040년	5,494	159	1,126	8,488	90	15,357	2.2

주 :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평활법을 적용하여 추정함, 세입 항목 중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제외함.
자료 : 세입 항목별 추정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 세출 전망

- 점차 선진국형 사회로 발전해 감에 따라 사회보장이 확대되고,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여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의 증가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 산업경쟁력 제고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과학기술,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 지출도 지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공공행정/안전, 환경, 농림해양수산, 지역개발/교통 등에 대한 재정지출도 장기추세와 유사한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점진적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단위 : 십억원, %)

〈표 5-2-6〉

경상남도 중장기
세출규모 전망

구분	사회복지/ 보건	공공행정/ 안전	농림해양 수산	지역개발/ 교통	교육	환경	산업/ 과학기술	예비비/ 기타	세출 총계	
									금액	증가율
2021년	4,454	1,281	964	1,057	636	542	249	480	9,661	-
2022년	4,666	1,291	983	1,073	653	549	255	496	9,967	3.2
2023년	4,879	1,302	1,003	1,090	671	556	262	512	10,274	3.1
2024년	5,091	1,313	1,023	1,107	689	563	268	528	10,582	3.0
2025년	5,304	1,324	1,042	1,125	707	570	275	544	10,889	2.9
2026년	5,516	1,334	1,062	1,142	724	578	281	559	11,198	2.8
2027년	5,729	1,345	1,081	1,160	742	585	288	575	11,506	2.8
2028년	5,941	1,356	1,101	1,178	760	593	294	591	11,815	2.7
2029년	6,154	1,366	1,120	1,197	778	601	300	607	12,124	2.6
2030년	6,366	1,377	1,140	1,216	796	609	307	623	12,434	2.6
2031년	6,579	1,388	1,160	1,235	813	617	313	639	12,744	2.5
2032년	6,791	1,399	1,179	1,254	831	625	320	655	13,054	2.4
2033년	7,004	1,409	1,199	1,274	849	633	326	671	13,365	2.4
2034년	7,216	1,420	1,218	1,294	867	641	333	687	13,676	2.3
2035년	7,429	1,431	1,238	1,314	885	649	339	703	13,987	2.3
2036년	7,641	1,442	1,257	1,334	902	658	346	719	14,300	2.2
2037년	7,854	1,452	1,277	1,355	920	666	352	735	14,612	2.2
2038년	8,066	1,463	1,297	1,376	938	675	359	751	14,925	2.1
2039년	8,279	1,474	1,316	1,398	956	684	365	767	15,238	2.1
2040년	8,491	1,484	1,336	1,420	973	693	371	783	15,552	2.1

주 :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지수평활법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 세입 항목별 추정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 작성.

3. 계획목표 및 추진전략

1) 계획목표

● 지방분권 시대를 위한 재정 분권 실현

-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 재정 분권을 실현하고, 세출 구조의 효율성 및 효과성 강화

2) 추진전략

● 재정계획 부문 핵심지표

〈표 5-2-7〉

재정계획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예산 규모	9.4조원	14조원	18조원
재정자립도	33.9%	40%	50%

주 : 2021년 실제 예산안을 반영하여 목표 수치를 보정함

●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 재정 분권 실현

-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분권 강화
-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제 개편
- 세입 확충 기반 강화 및 신규 제도 도입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 해소
- 재정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자원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안정적 자원조달

-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자원조달방식의 다각화
- 주요 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자원조달

4. 추진시책

(1) 제도개선을 통한 안정적 재정 분권 실현

-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 분권 강화
 - 국가 대 지방자치단체 사무 비율 7:3으로 지방의 자치권 부족 해소 필요
 -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9)’에 따라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 예정
 -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분권 동시 추진을 통한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세제 개편
 -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6:24로 지방의 재정 자율성 미흡 해소 필요
 - 자치분권 및 지방이양 사업 확대에 따라 중앙에 편중된 세원의 조정 및 지방이양
 -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등 지방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 세입 확충 기반 강화 및 신규 제도 도입
 - 지방세 新세원 발굴 및 지방세 비과세 감면을 관리
 - 지방세제·세정 개선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를 제고 등 지방세입 확충기반 강화
 - 고향사랑 기부제 등 지방재정 보완을 위한 신규 제도 도입

(2)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운영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 해소
 - 국고보조사업 대응 지방비 지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필요
 -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 체계 개선을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
 -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 사전 평가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 효율화
 -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자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
- 재정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체계 강화로 재정계획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심사 기능 강화를 통한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
 - 각종 보조사업 및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환류를 통한 재정 투자의 효과성 제고
 -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계획성 제고를 통한 재정 신뢰성 확대

● **도내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도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차등 보조율 적용
- 시군별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지원 배분 조정
- 지역발전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제고

(3) 재원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안정적 재원조달

● **민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재원조달방식의 다각화**

- ‘민자사업 포괄주의’, ‘BTO-BTL 복합형’ 도입 등에 따라 민자사업 추진 활성화
- ‘민자사업 포괄주의’, ‘BTO-BTL 복합형’ 도입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 개선 추세
- 민자사업 총괄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등 도내 전문기관 활용하여 민자사업 적정성 평가 및 추진 확대

● **주요 계획과 재정계획의 연계·통합 운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 주요 법정계획 및 정책계획과 중기재정계획의 연계성 강화로 사업 추진 안정성 담보
- 중기재정계획과 투자심사, 성과예산제가 연계된 예산 평가·관리체계 확립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3장

투자·재원조달

제3장

투자·재원조달

1. 투자계획의 개요

● 투자사업비 규모 전망

-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을 토대로 2021~2040년 기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액을 추정함
- 추정된 총 투자액은 263조 9,660억원 정도임

● 부문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 및 생활환경 부문이 115조 8,280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교통물류 등이 포함된 사회기반 부문이 72조 8,790억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30조 5,260억원의 순으로 추산됨

(단위 : 십억원)

〈표 5-3-1〉

경상남도 종합계획
부문별 투자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기반	복지 및 생활환경	농림 해양수산	환경
총계	263,966	13,076	6,892	10,143	72,879	115,828	30,526	14,622
2020년	9,704	517	298	368	2,633	4,195	1,157	537
2021년	9,988	513	279	376	2,762	4,335	1,168	554
2022년	10,156	513	287	399	2,786	4,458	1,138	574
2023년	10,535	527	293	415	2,903	4,629	1,179	589
2024년	11,118	549	287	427	3,071	4,881	1,289	615
2025년	11,441	565	296	439	3,160	5,022	1,326	633
2026년	11,761	581	304	451	3,248	5,163	1,363	651
2027년	12,090	597	313	464	3,339	5,307	1,401	669
2028년	12,417	613	321	477	3,429	5,451	1,439	687
2029년	12,740	629	329	489	3,518	5,592	1,477	705
2030년	13,071	646	338	502	3,610	5,738	1,515	723
2031년	13,397	662	346	514	3,700	5,881	1,553	741
2032년	13,719	678	355	526	3,789	6,022	1,590	759
2033년	14,048	694	363	539	3,880	6,167	1,628	777
2034년	14,371	710	372	552	3,969	6,309	1,666	795
2035년	14,702	726	380	564	4,060	6,454	1,704	813
2036년	15,025	742	389	577	4,150	6,596	1,742	831
2037년	15,356	759	397	589	4,241	6,741	1,780	849
2038년	15,678	774	405	602	4,330	6,882	1,817	867
2039년	16,008	791	414	614	4,421	7,027	1,855	886
2040년	16,344	807	423	627	4,514	7,174	1,894	904

자료 : 2020~2024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함.

● **자원별 투자계획**

- 주체별 분담내역을 살펴보면 사업 전체로는 국비가 136조 8,49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비 120조 6,780억원, 기금 등 기타가 6조 4,390억원 순으로 추산됨
- 부문별로 주체별 분담내역은 복지 및 생활환경, 농림해양수산, 환경 부문에서는 국비 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으나 지역개발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기반 부문에서는 지방비 투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추산됨

(단위 : 십억원)

〈표 5-3-2〉

경상남도 종합계획
자원별 투자사업비
내역

구분	사업비	2021~ 2025년	2026~ 2030년	2031~ 2035년	2036~ 2040년	계획기간 사업비
합계		53,238	62,078	70,238	78,411	263,965
	국비	27,273	32,280	36,523	40,773	136,849
	지방비	24,659	28,286	32,004	35,729	120,678
	기타	1,306	1,512	1,711	1,910	6,439
지역개발		2,667	3,066	3,470	3,873	13,076
	국비	929	1,050	1,188	1,326	4,493
	지방비	1,665	1,933	2,187	2,441	8,226
	기타	73	84	95	106	358
산업경제		1,443	1,605	1,816	2,027	6,891
	국비	455	552	625	698	2,330
	지방비	948	1,016	1,150	1,284	4,398
	기타	40	37	41	46	164
문화관광		2,055	2,382	2,696	3,009	10,142
	국비	723	834	944	1,054	3,555
	지방비	1,034	1,200	1,357	1,515	5,106
	기타	299	348	394	440	1,481
사회기반		14,682	17,144	19,398	21,655	72,879
	국비	1,888	2,402	2,718	3,034	10,042
	지방비	12,779	14,724	16,659	18,598	62,760
	기타	14	18	21	23	76
복지 및 생활환경		23,325	27,250	30,832	34,420	115,827
	국비	17,337	20,356	23,032	25,712	86,437
	지방비	5,305	6,102	6,904	7,707	26,018
	기타	683	792	897	1,001	3,373
농림해양수산		6,101	7,196	8,141	9,089	30,527
	국비	3,447	4,163	4,711	5,259	17,580
	지방비	2,456	2,800	3,168	3,537	11,961
	기타	198	232	262	293	985
환경		2,965	3,434	3,885	4,338	14,622
	국비	2,493	2,922	3,306	3,691	12,412
	지방비	472	512	579	647	2,210
	기타	0.1	0.1	0.1	0.2	0.5

자료 : 2020~2024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함.

2. 투자사업의 자원조달 계획

1) 추진방향

(1) 신사업 시행 및 운영을 통한 경남 경제 회복

- **신규 사업의 적극 발굴 및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시스템 구축**
 - 경상남도의 사업별 추진 및 소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사업 발굴
 - 사업 추진 주체별 기존 추진사업 현황 파악 및 필요시 간이타당성 검토를 통한 전략사업 기획 및 발굴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및 국비확보 사업의 통과 비율 증가로 도정 목표 달성**
 - 사업개발→계획→예비타당성조사→국비확보→관리의 체계화
 - 개발 초기 단계부터 사업화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사업계획을 수립
 - 정부 예타 대응의 전문화 및 시행단계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효과 실현
- **경남도민의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완전히 새로운 경남 실현**

(2) 경남지역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한계 극복

- **민간투자자본을 활용하여 시급성이 높은 사업의 조속한 추진**
 -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을 적합한 사업시설에 적용하여 추진
-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자금 재조달 등을 통한 재정 절감 추진**

2) 추진전략

● 투자·자원조달 부문 핵심지표

〈표 5-3-3〉

투자·자원조달 부문
핵심지표

구분	현재 수준	1단계 목표(2030년)	2단계 목표(2040년)
투자사업 사후관리 실적	-	총 투자사업의 20%	총 투자사업의 40%
민자사업 관리 실적	-	총 민자사업의 20%	총 민자사업의 40%

(1) 신사업 개발 및 국비확보의 가속화·체계화

● 제4차 경상남도 종합계획의 핵심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 10+1 핵심전략의 세부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마련
- 10+1 핵심전략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정부 예산 편성과 연계,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경제혁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 일자리사업,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 혁신성장사업, R&D·인프라 융복합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 신규 사업의 발굴 확대함
- 제조업 혁신 등 도정 4개년계획 이행에 필요한 투자예산을 확보함

●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

- 사업 개발부터 관리까지 시스템 체계화함
 - 사업 개발~계획~예비타당성조사~국비확보~관리의 체계화
 -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경상남도가 경남연구원 및 경남TP를 활용하여 사업화 및 타당성 검증을 통한 사업계획 수립
 -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의 전문화 및 시행단계의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효과 실현
 - KDI 및 조세재정연구원(SOC 인프라 분야 예타기관) 대응
 - KISTEP(R&D 분야 예타기관) 대응

(2) 투자사업 추진의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실시

● 국비사업 및 도비보조사업 사후평가를 통한 합리적 자원 배분 추진

- 국고보조사업,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업목표치 달성, 투자자원대비 파급효과, 공익성 및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결과 점검
 - 기존 지방보조사업 평가 등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도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추진
 - 시군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추진
- 저성과, 불요불급, 유사 중복 등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성과제고 방안 마련 권고 및 세출예산 조정
 - 경남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의 객관적·전문적 평가로 사업의 건전성 제고

●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및 자원 배분으로 효율성 제고

-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 검토
- 자원 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제고

(3)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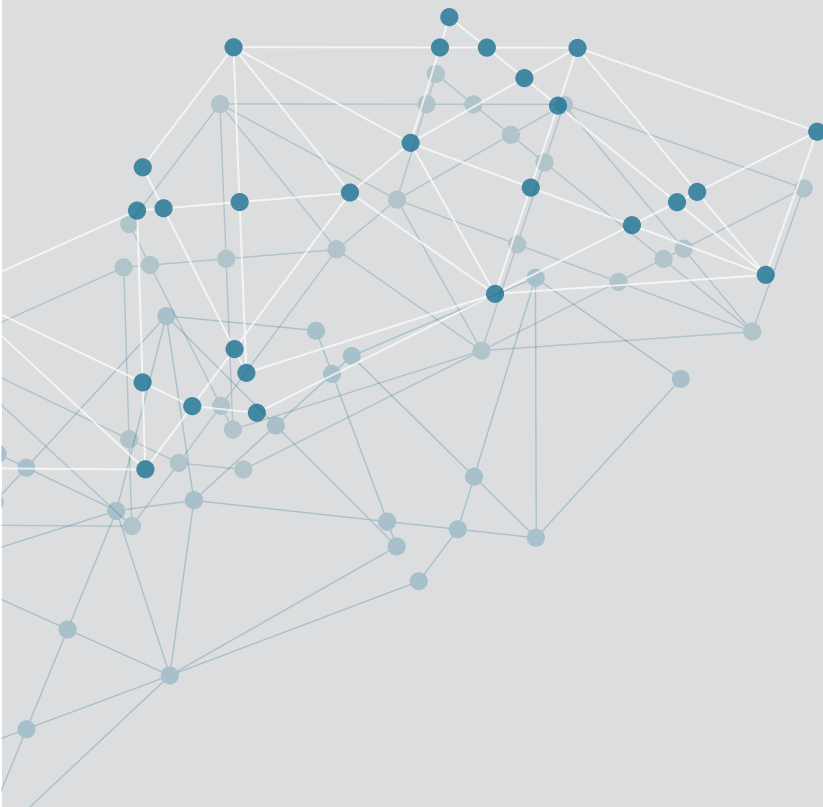
● 경상남도 재정예산의 한계 극복을 위한 경남지역의 민간투자사업 발굴 적극적으로 추진

- 관광시설 및 환경시설 등의 추진을 위해 수익형(BTO) 방식의 민간자본 유치를 고려함
 - 운영수입보장제도가 폐지되었으므로 사업 발굴이 가능함
- 경남지역에 복지시설 공급을 위해 기초적 사회기반시설의 적정 비중을 임대형(BTL) 방식으로 추진함
 - 정부(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정책에 부합함
 - 부대사업 및 부속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함
- 수익형 방식을 재구조화한 사업의 재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자금 재조달 및 사업방식 변경 등의 추진을 고려할 수 있음

●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전문성 활용

- 민간투자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여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사업 검증 및 지원기관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임
- 경남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의 규모를 확대하고, 센터가 경상남도 지역 모든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사업성 검증 업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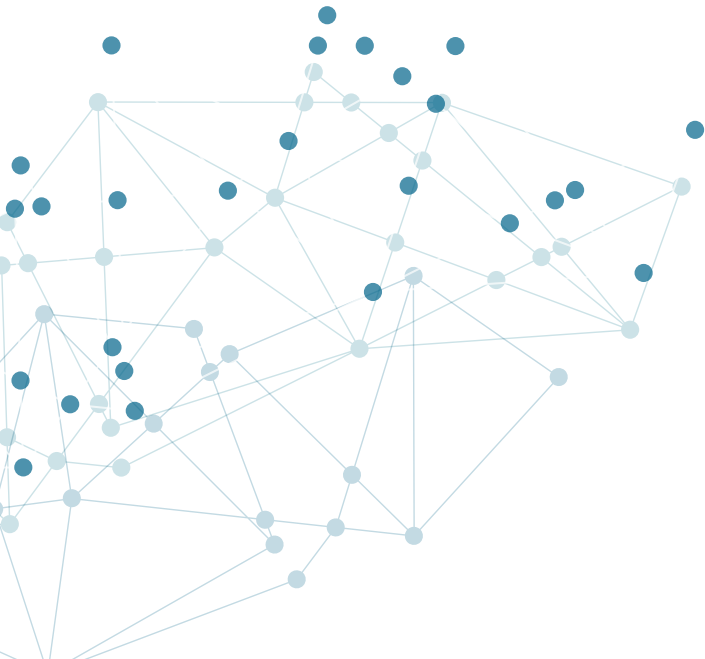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6편

사·군 발전 방향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1장

서북부권

제1절 합천군

제2절 산청군

제3절 함양군

제4절 거창군

제1장

서북부권

제1절 합천군

1. 비전 :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2. 기본목표

- 소통하는 공감행정
- 활력있는 지역경제
- 다시찾는 문화관광
- 함께하는 나눔복지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 육성**
 -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
 - 합천 복합문화센터 건립, 합천 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 인프라 구축
 - 초고령·농업도시 특성에 맞는 문화 환경 조성 및 육성
 - 세계 속의 합천 문화유산 발굴 및 육성
 - 성산토성, 옥전고분군, 삼가고분군 등의 사적지정과 종합정비
 -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이후 팔만대장경과의 연계를 통한 세계 공통의 문화 자원으로 육성
 -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
 - 영상테마파크, 청와대 세트장 등 기존의 관광자원 콘텐츠 강화
 - 황매산, 해인사, 황강 등 지속가능한 자연친화적 관광 육성
 - 국보테마파크, 기록문화 테마공원 등 권역별 균형 있는 관광정책 추진
 - 군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보장
 - 합천 다목적 체육관 건립, 면 단위 체육센터 신축 등 체육 인프라 보강
 -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년층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 보충 등
- **경쟁력 있는 부자 농촌 실현**
 -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
 - 공공비축미 매입가에 따른 부족분 지원,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 운영 등 흔들림 없는 영농활동을 위한 지원책 마련
 - 새로운 영농기법 전파, 신기술 사용 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스마트 농업'체계 구축

-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新산업 도전

- 난 산업, 지역 농산물 활용 가공품 개발, 향노화 산업 등 추진
- 기후변화 예측을 통한 새로운 소득 작물 재배 지원 등

- 세계화·개방화가 심화되는 시장 환경 대비

- 지역 생산 농·특산물 경쟁력 제고 방안 강구
- 수송수단 발달에 따른 새롭고 효율적인 유통지원 체계 구축
- 새로운 질병 발생 및 전염병 확산에 대비한 연구, 대비책 마련

- 안전하고 희망이 넘치는 합천

- 생활 주변 불편하고 위험한 요소 제거

- 도시계획도로 확충, 주차장 확보, 빈집 정비 등
-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농촌 환경 정비 추진

-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환경기반 조성

-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확보
- 생활·영농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 선제적 재난 대비와 범죄예방으로 안전한 합천 실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지속 추진
- HW(CCTV 통합관제센터 등)와 SW(지역네트워크 구성 등)의 결합을 통한 군민의 안전 적극 보호

- 안정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 시행
-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확대

- 군민 모두가 행복한 맞춤형 복지 구현

- 합천형 의료·복지모델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의료 취약 분야 보완책 마련(소아과, 산부인과 설치 등)
- 아동복지 기금, 교육발전 기금, 안심서비스 앱 등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 추진 등

- 지역사회 복지 공동체 조성

- 합천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구축
- 복지·보건 원스톱 돌봄 및 전달 체계 조성

- 합천군이 기르고, 합천군에 정착하는 인재 양성

- 지역 교육 환경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인프라 구축(남명학습관 등)
- 해외연수, 각종 직업 체험 등 창의적이고 열려있는 학습 환경 조성

● 체계적 투자로 미래를 여는 인프라 구축

- 혁신적인 신사업 추진을 통한 합천의 미래 개척
 - 4차 산업의 발달과 인구감소, 고령화 등 복합적인 미래 환경에 대비하고 흔들림 없이 도약하는 합천군 건설을 위한 신사업 추진(남부내륙 중심도시 건설, 청정에너지 융복합 발전단지 조성 등)
- 광역교통망을 통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체계 구축
 - 남부내륙고속철도 합천역사 건립과 더불어 달빛내륙철도 개설,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순천~합천~현풍 구간과 군북~해인사 구간
 - 고속도로 건설 등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함으로써 산업, 관광, 교통복지 전 분야의 성장 도모
- 합천의 투자 요소 강화
 - 교통, 입지, 인재 등 투자 시 고려되는 요인들의 강화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재원의 투자를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

4. 연계·협력 사업 과제 발굴

● 남부내륙철도 역사 건립 지자체 역세권 공동 개발

- 합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의 역사가 서로 연계되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역세권 공동 개발 필요
 - 예) 5개 지자체 농·특산물 공동판매, 합천~거제 구간 특별할인 탑승권 판매 등

● 함안 군북~합천 해인사 고속국도 건설

- 제2차 고속국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군과 협력 필요
 - L=50km, 약 2조원

● 함양~합천 간 휴게소 콘텐츠 개발(함양~합천~울산 간 고속도로 관련)

- 특색 있는 콘텐츠와 지역 고유의 먹거리 개발 및 판매로 단순히 운행 중 쉬어 가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휴게소 육성

● 합천-산청 황매산 철쭉제 공동 개최

-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인력과 예산의 절약을 위해 철쭉제 공동 개최 필요

제2절 산청군

1. 비전 : 한방향노화산업의 메카, 힐링 관광의 중심지 산청

2. 기본목표

- 지역경제 활력 사업 역점 추진으로 서민경기 활성화
- 소득증대와 전원도시의 꿈이 이루어지는 농업 농촌 건설
- 차별화된 관광자원과 문화콘텐츠 개발로 관광 산청 시대 구현
- 대상별 선도적 맞춤형 체감복지로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
- 지리산과 남북부 산청경제축 연결 투자유치 및 균형개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한방향노화산업을 선도하는 제1의 한방도시

- 전략약초 육성으로 한방향노화사업 기반 구축
 - 지역별 기후조건 및 토질에 적합한 전략약초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 대표약초 육성 및 약초농업기반 고도화로 약초산업 경쟁력 강화
- 미래 신성장 동력 한방향노화산업 집중 육성
 - 특화자원 약초를 기반으로 생산, 가공, 유통 및 한방약초 6차 융·복합화 산업 추진
 - 한방약초산업특구 기반시설사업 추진
 - 한방향노화 일반산업단지 기업 유치 및 한방향노화 기업 육성
 - 한방약초 수출 확대·베이스캠프 구축 및 한방약선음식 활성화 등 한방약초산업의 세계화
- 한방향노화 웰니스산업 메카로 조성
 - 한방테마파크인 동의보감촌을 연계한 한방향노화 웰니스관광클러스터 구축
 - 케이블카,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휴양림 확장 등 웰니스관광 인프라 확충
 - 제2회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및 한방약초축제 개최로 한방향노화산업과 관광사업의 연계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힐링도시 구현

- 우수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산청 관광벨트 구축

- 조식, 문익점, 광종석 등 우리나라 정신문화를 정립한 우수 선현들의 역사문화관광사업 육성
-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지리산과 황매산, 경호강, 남사예담촌 등 산청 전 지역을 잇는 산청 관광벨트 구축
- 우수한 관광자원·웰니스 힐링 프로그램, 지역 농·특산품을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테마 관광상품 개발

●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 활력 도모

- 관광시설의 고급화, 가족 중심의 수요층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체류 기간의 연장 및 사계절 머무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조성
- 지역소득과 연계하고 이벤트 및 홍보를 통한 관광 발전 기반 구축
- 대규모 전략적 거점 관광지 개발 및 복합 레저시설 도입

● 생활체육 및 스포츠 산업 활성화로 지역관광산업 견인

- 공공체육시설 보급 및 장애인 저소득층 체육활동 확대 지원
- 적극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스포츠 산업 활성화

(3) 첨단 스마트 농업으로 풍요로운 농촌 건설

● 농촌환경보전 및 소득증대를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원격제어 첨단 농업 소득작물 개발 및 투자 확대
- 다양한 친환경농법 및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증가
- 자생력 있는 친환경농업 농가 육성과 산청 친환경 청정 농산물 이미지 확산

● 신 소득원 발굴 및 미래농업기술 보급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

- FTA, 기후변화 등 농업농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신재배기술 보급
- 지역 특산 작물에 맞는 스마트 농업 육성사업 발굴 및 확대
- 산림을 활용한 사업 발굴 및 육성으로 임산소득 향상
- 산청흑돼지 생산·가공·판매 등 융·복합화를 통한 지역대표 먹거리산업 육성
- 미래농업을 선도해나갈 핵심인력 육성 및 농업인 서비스 강화

- 농·특산물의 다양한 유통 수출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 농·특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종 지원강화 및 판로 다변화로 농가 소득 증대

(4)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 개발

- 자연환경, 입지적 특성, 교통망을 고려한 권역별 균형발전 도모

- 권역별 발전계획을 설정하여 중점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 도모
- 국도, 지방도 및 마을 연결 생활권 도로 확충으로 지역 간 균형개발 및 교통 불편 해소
- 밤머리재 터널 공사 조기 완공에 따른 지리산권 접근성 개선으로 산청 남부~북부 동일 경제권 가속화 추진

- 도시재생뉴딜 및 정주환경 개선

-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및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재구축으로 정주환경 개선
- 전원주택지 기반시설 지원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 촉진

- 기후변화 대응 대책 수립 및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신·재생에너지원 발굴 및 보급, 친환경 차 보급 확대

(5)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 조성

- 재난 대책 및 사전 예방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산청 구현

- 자연재난 취약시설의 근원적 예방대책 추진 및 재난대응체계 강화

-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저출생·고령화의 심화 및 인구 관외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비한 산청형 인구정책 종합대책 추진

- 군민과 함께 하는 복지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자립 지원, 노인·아동·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여성친화 사회조성 및 여성 역량 강화, 다문화 사회통합 환경 조성
- 교통약자를 위한 브라보 한방택시 확대 운영, 버스 노선 확충 등 교통복지 실현

-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 보건 서비스 제공 및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 도모

4. 연계 · 협력사업 과제발굴

(1) 산청-진주 상생발전 사업 추진

- **경호강 100리길 자전거 도로 연결 사업**

- 경호강을 매개체로 산청군과 진주시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여 관광, 상호 교류 등 상생발전 발판 마련

- **덕천강 어도 개보수 사업**

- 진양호 상류 수계인 덕천강의 토속어류 이동로를 확보하여 생태계 회복에 기여

- **축제 · 관광 등 교류협력 사업**

- 축제 · 관광 등 분야에서 인적 · 물적 교류협력 사업

제3절

함양군

1. 비전 : 산삼의 고장, 불로장생 엑스포 도시 함양

2. 기본목표

- 미래를 선도하는 향노화 산업도시
- 농·산촌의 창조적 부가가치 창출도시
-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행복도시
- 머물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엑스포 개최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산삼·향노화 도시로 자리매김

- 산삼·향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향노화 식품 특화단지 기업체 유치로 통한 생산기반 조성
 -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 R&D 시스템 육성
 - 지역 대학 및 연구소와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
- 엑스포 인프라 및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시설을 통한 치료·휴양 시스템 구축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산양삼 원료 제품 고도화 및 유통판매 강화

(2) 지역경제 활성화 클러스터 구축

- 친환경 자동차산업 고도화 및 부품산업 산업단지 조성
 - 수동면 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생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부품 관련 산업 유치
 - 수소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단지 확대 조성
-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한 대규모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
 - 3개 고속도로 교차점이고, 대도시와의 광역접근성 우위를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물류단지 구축

(3)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 남부내륙철도 대전-진주 간 노선 구축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전~진주(거제)간 노선 반영 노력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의 대구~광주선과 연계 추진을 통해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권 +자형 철도망 구축

● **인구감소 및 구조 변화 대응 거점 공간 재편을 통한 녹지공간 최대 확충**

- 전선지중화, 가로수 관리사업 등을 통해 상림공원 - 읍시내권 - 하림공원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마트 공간 재배치(대관림 프로젝트)

● **지역별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공간체계 구축**

- 북부자연휴양권, 중부생활경제권, 남부지리산관광권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지역 맞춤형 인프라 개발

● **세대와 연령을 고려한 공간계획 설계**

- 유아·청소년 문화시설 확충, 1인 세대 및 신혼부부 주거공간 확대, 고령자 특성 반영 공간계획 수립

(4) 군민 중심, 군민 지향의 행복복지 및 글로벌 인재 육성

● **하나부터 열까지 맞춤형 복지 실현**

- 생애주기별 복지지원 체계 확립 및 영유아 지원 확대
- 복합문화도서관, 어린이드림센터 등 아동·청소년 인프라 구축
- 인구감소와 노령화에 대한 경로당 급식도우미, 버스 도우미 등 노인복지 확대 추진

●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 발굴·육성 지원프로그램 확충**

- 초·중학생 어학연수 지원 및 교육복지 지원

(5) 인구 유입 기반시설 확충

● **인구 유입 기반시설 확충 및 정착유도 프로그램 개발**

- 귀농·귀촌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유치 지원
- 도시 청·장년층 유입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농촌 유토피아 모델 개발
- 산양삼 welcome 농장조성으로 도시민의 웰빙 산양삼 체험 및 도시민 귀향 유도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입 유도

(6) 지역 생산물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미래 농촌 기반 구축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가공, 유통,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 추진**

● 차별화된 품목 육성과 브랜드 개발을 통한 웰빙 트렌드 시장 선점 및 기후변화 대비 신소득 틈새 작물 개발

- 함양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브랜드화 사업으로 명품 브랜드 육성

(7) 지역 문화유산 계승과 자연자원의 전략적 개발

● 체류형 문화관광기반 구축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남계서원을 비롯한 서원, 누각, 정자, 개평한옥마을 등 유교·양반문화유산을 통한 역사문화관광 이미지 구축
- 지리산, 덕유산, 상림, 오도재 단풍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향노화산업과 역사문화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시스템 구축
- 지리산 케이블카(산청군), 지리산 소금길(하동군) 등 지리산 인근 타 지자체와 연계하는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8) 생활체육 증진과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 함양스포츠 파크 조성으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연령별 맞춤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력 육성
-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전국 단위 대회 유치
- 접근성, 훈련시설, 기후 등의 우위를 통한 전지훈련 유치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지리산 소금길¹⁾ 복원사업(함양군-하동군)

● 사업개요

- 위 치 : 지리산 벽소령(지방도 1023호선)
- 구 간 :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벽소령↔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20.4km
(함양 7.5km, 하동 12.5km, 터널 0.4km)
- 사업비 : 670억원 정도
- 추진형태 : 함양군, 하동군 연계협력사업
- 사업내용 : 함양 마천~하동 의신간 도로 개설 및 전망대 설치 등

1) 소금길의 유래(솔트루트) :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인 함양에 하동의 화개장터에서 소금을 비롯한 해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해 보부상들이 이용하던 옛길(하동 화개장터와 함양 마천 간 최단거리).

● 추진사항

- 벽소령 지방도 1023호선 숲길 활성화 건의(함양군→경남도) 2013. 10. 11.
- 지리산 소금길 복원 하동-함양 연계협력사업 협의(하동군청) 2013. 10. 11.
- 하동, 함양, 국립공원 실무자 회의(지리산사무소) 2013. 10. 11.
- 소금길 복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하동, 함양, 지리산국립공원) 2013. 12. 18.
- 지방도 1023호선 미개설구간 사업 건의(하동군→경남도) 2016. 3월
-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 확정 2018. 7. 1.
- 도로노선 승격 관련 의견제출(지방도 1023호) 2019. 7. 11.
- 경상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노선(등급)조정 의견제출 2019. 7. 29.
- 서부경남 시군간 연계 및 협력사업 자료 제출 2019. 10. 29.

제4절 거창군

1. 비전 : 더 큰 거창도약, 군민 행복시대

2. 기본목표

- 군민공감 소통화합
- 부농실현 농촌경제
- 미래명품 교육도시
- 품격있는 문화관광
- 희망나눔 복지증진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광역교통망 연계 서부경남 중심도시 도약

- 향노화 힐링 서북부 거점 도시 기반 구축
- 승강기밸리 중심 지역경제 성장거점 구축
-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달빛내륙철도 연계 광역교통 수단 도입
- 달빛내륙철도 거창역 설치를 통한 영호남 인적·물류 교류 촉진
- 한들교 연계 남부우회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발굴
- 전략적 기업 유치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확보
-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 4차 산업 및 신성장산업 중심 맞춤형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지역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2) 향노화 힐링 중심의 관광·문화·체육 활성화

- 향노화 산업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테마형 휴양지구 개발
- 향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 5대(동·서·남·북·중부권) 권역별 문화·관광자원 활용방안 수립
- 산악관광벨트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힐링 체험 인프라 구축 등 산림관광 육성
- 거창국제연극제, 거창한마당대축제 등 지역축제 활성화
- 문화도시 조성 등 문화예술 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 가야문화 역사유적 발굴 등 지역 문화자원 보존 및 관광상품 개발
- 제2스포츠파크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3) 미래를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농업

- 안정적 농가 수익 창출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 작물 개발
-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산
- 지역 주력 작물 6차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3無 농업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특화 등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구제역·AI·ASF 등 재난형 가축 질병 청정화 및 선제적 방역체계 구축

(4) 편안한 삶, 안전하고 건강한 정주 여건 조성

- 귀농·귀촌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구증가 정책 수립
- 청년·신혼부부 정착유도 지원 정책 및 인구 감소 대응 정책 추진
- IOT,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주거환경 조성
- 거창형 푸드플랜 확립 등 건강한 먹거리 지역순환체계 구축
- 승강기안전기술원과 연계한 승강기안전체험관 조성
- 재난·재해의 사전 진단과 범죄예방 대응책 강화
- 신종 감염병 출현 등 지역사회 확산 방지 대응체계 구축

(5)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도시 조성

- 거창군 복합교육센터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 확충
- 지역대학 연계 맞춤형 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
- 창의 인재 육성 및 교육력 향상 계획 수립
-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기반 마련 등 평생학습 활성화

(6) 모두를 위한 사회, 함께 누리는 복지 구현

-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최적 복지 인프라 구축
-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생 방안 마련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네트워크 구축
- 다문화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대책 마련
- 경남 서북권 거점 공공병원 개소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7) 삶의 질을 높이는 친환경 기반 조성

-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물관리
- 옹곡 생태하천 복원 등 청정 수질 환경보전 대책 마련
- 자원순환 활성화로 친환경도시 기반 조성
- 거창의 공기, 물, 자연경관 등 청정 환경 홍보 강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
-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배후 관광인프라 조성

- 거창 단지봉 산림복지지구 조성으로 덕유산~가야산을 연계한 산악관광벨트 조성
-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확장
- 가조온천 개발, 힐링 맛집골목 조성
- 거창군 가북면 ~ 합천군 가야면 지방도 개통
- 덕유산 ~ 가야산 연계 산악관광벨트 스토리텔링북 제작 및 트레킹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가야문화 역사 유적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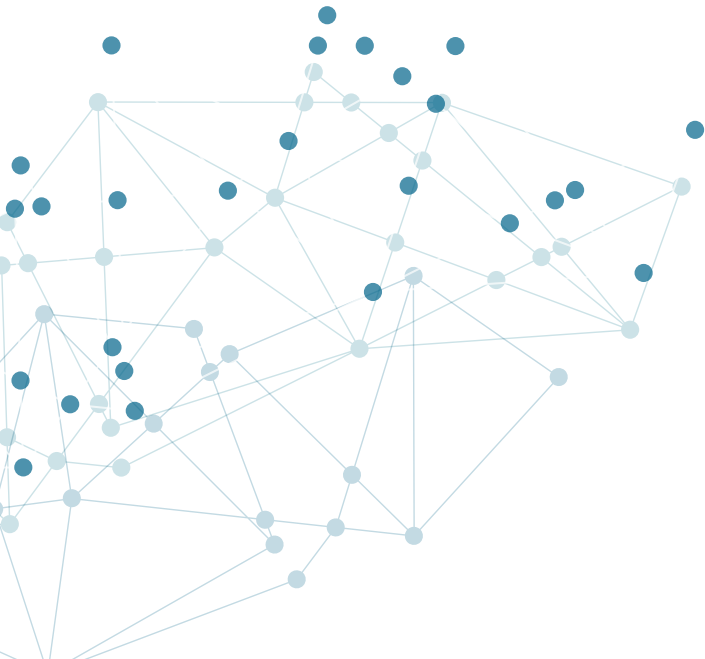
(2) 향노화 웰니스관광 권역별 특화 추진

- 산청 동의보감촌 중심 한방 의료관광 사업 개발
- 함양 산양삼 등 약초 활용한 관광 특화사업 추진
- 합천 해인사, 황매산 휴체험지구 중심 명상을 테마로 한 특화사업 개발
- 거창 가조온천과 오미자 등 약용작물을 활용한 피부·미용 등 뷰티를 테마로 한 사업 개발
- 약선음식, 사찰음식 등 지역 특성을 활용한 권역별 향노화 웰니스먹거리 개발

(3) 한방 웰니스관광 교통 네트워크 구축

- 4개군(거창·함양·산청·합천) 향노화 웰니스관광거점을 연결할 관광버스 도입
-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달빛내륙철도 연계 향노화 웰니스관광열차 도입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2장

서부권

제1절 진주시

제2절 사천시

제3절 남해군

제4절 하동군

제2장

서부권

제1절

진주시

1. 비전 : 대한민국 남중부의 100만 생활권 중심도시, 시민이 행복한 부강한 진주

2. 기본목표

- 공감 · 소통하는 열린 시정
-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 일자리가 풍부한 경제도시
- 골고루 잘사는 행복도시
- 남강이 특별한 문화도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한반도의 남중부 중심도시로서의 도시체계 구축

-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한반도 남중부의 교통 - 물류 허브 도시 구축
 -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 KTX) 구축으로 광역철도망의 남북축 형성
 - 경전선 광역 전철망 완성으로 광역철도망의 동서축 형성
- 사통팔달의 지역 간 및 간선 도로망 확충
 - 국도 3호와 33호선 분리를 통한 교통량 분산과 교통체증 해소
 - 내동~정촌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을 통한 서부지역 교통체증 해소
 - 문산~집현 외곽 순환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내 교통난 해소
 - 문산~금산, 대곡~진주, 문산~금곡, 정촌~사천 간선도로 확장 및 건설
- 신진주 역세권 개발
 - 대규모 주차시설 조성 및 역세권을 경유하는 지간선 순환버스 확대
 - 진주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 추진으로 현대적인 광역 터미널 조성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으로 광역 물류 인프라 구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강소도시 조성

- 복합혁신센터 및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혁신도시 이전으로 혁신도시 시존 2 도약

● 생활인프라의 광역화

- 진주·사천 광역환승(시내·시외버스)할인제 추진

● 기성 시가지(원도심)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지 활성화

- 진주의 역사와 문화, 정신이 녹아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특화된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2)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변화 대응

● 농업(1차 산업)의 내연(內延) 심화

- 농업기술센터 건립, 농업기술원 이전,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산물
- 공동 브랜드 육성, 첨단 농업기술 보급 등 농업경쟁력 강화
-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등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신선 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 기후대응 작물 연구 및 시범 생산단지 조성, 스마트 팜 시범단지 조성, 농촌 융·복합 산업 인프라 구축

● 지역 특화산업의 내연(內延) 심화

- 실크박물관 건립, 실크 신소재 및 제품 개발

● 지속가능한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치창조 R&D 혁신 생태계 조성

-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기능 연계를 통한 항공 부품·소재산업 클러스터 구축
-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연구소기업 집적화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 기능 강화
- 우주부품시험센터,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센터, 항공우주 연구단지,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구축

● **첨단산업의 스마트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한 외연(外延) 확장**

- 항공우주산업 성장벨트 구축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항공산업단지 및 정촌일반산업단지, 뿌리일반산업단지, 상평일반산업단지, 사천의 항공국가 산업단지, MRO 일반산업단지, 고성군의 무인기 종합타운을 연결하는 항공우주산업 성장벨트 구축
- 진주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청년창업 플랫폼 형성
- 바이오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바이오산업진흥원 기능 확대

(3)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진주형 문화관광 생태계 조성

● **원더풀 남강 프로젝트 : 진주 역사의 상징인 남강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인프라 구축 → 진주 역사와 문화의 단면을 만끽하는 관광 모델**

- 진주성(축석루, 중영·선화당 복원) ~ 진주대첩광장 ~ 남강수상레포츠센터 ~ 남강변 중형 다목적 문화센터 ~ 소망진산 유등테마공원 ~ 비거 테마공원

● **구진주역 부지 재생 프로젝트 : 청년들이 즐겨 찾는 여행 환경 조성**

- 구진주역사를 리모델링하여 전시관, 미술관으로 조성하고, 차량정비고·전차대를 연계한 문화타운(복합문화공간)을 조성
- 초현대적인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및 신축
- 젊은 예술인들의 공방과 카페를 스토리로 하는 소망의 거리 조성

● **진양호 르네상스 : 가족 단위 여행객의 친환경 레저·힐링 공간 조성**

- 복합 전망타워, 모노레일, 호반 둘레길 등 조성으로 모험과 여유를 동시에 누리는 즐거운 여행 환경 조성

● **진주 정신 및 선대의 우수한 문화예술 계승발전을 위한 콘텐츠 개발**

-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민속예술 분야 콘텐츠 발굴 및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 개천예술제 및 진주남강유등축제 고도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콘텐츠 개발
- 정부 지정 문화도시 추진 및 진주역사관 건립으로 진주의 시대정신 향유

(4)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구현

●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비봉 체육공원 조성 등 권역별 인프라 확충
-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진주시민축구단 창단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

● 촘촘한 재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 신종 질병 위협 증가에 대응한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및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통·재난·CCTV를 통합한 스마트 도시관제센터 구축

●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 추진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 365일 24시간 보육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이동식) 장난감 은행 등
- 교육의 공공성 강화 : 교육예산 확대, 미래세대 행복기금, 권역별 도서관 건립,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청소년수련관·능력개발원 기능 확대 및 내실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 복지 인프라 확충 및 노인 일자리 확대

● 공공병원 유치 및 의료서비스 개선, 지역특화형 의료 인프라 체계 구축

(5)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기반 조성

-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
- 수경시설 확대, 생태공원 및 도시 숲 조성, 친환경 자전거도로, 영천강 둘레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친환경 인프라 확대

●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

- 공공건축가 제도를 활성화하여 통합적 도시경관관리체계 구축

●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환경 기반시설 확충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진주—산청 상생발전 사업 추진

-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 : 2018.10.18.
- 진양호 상류 지역 공동정화 활동
- 경호강 100리길 자전거도로 개설
- 덕천강 어도 개보수(6개소) 작업 추진
- 양 시군 체육회 MOU를 체결하여 생활체육 친선교류대회 추진
- 양 시군 주요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
- 축제 및 관광, 교통, 교육 등 상생발전 분야 지속적 확대를 위해 상생발전 실무협의회 수시 개최

(2) 진주—사천 상생발전 사업 추진

- 코로나19 동일 생활권 공동방역 : 인천공항 입국자 편의 버스 제공
- 광역자전거도로 개설 : 정촌면(강주연못) ~ 사천읍(자영고)
- 광역환승(시내·시외버스)할인제 추진
- 축제·관광 등 상호 교류협력(축제 공동 홍보, 관광명소 연계 프로그램 개발)
-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JS앙트십 개최 : 경제인 42명(진주 32, 사천 10)
-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및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제2절 사천시

1. 비전 : 시민이 행복한 인구 20만 강소도시 건설

2. 기본목표

- 기반시설 집적화를 통한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 건설
- 사천바다케이블카 중심의 해양관광 거점 도시 건설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세계적 항공우주산업도시 건설

① 항공MRO산업 육성

● 배경 및 필요성

- 항공기 운용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일반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항공기의 수명 연장, 용도 변경 등을 위한 항공기 정비(MRO)수요 급증
-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항공기 정비 시장 급속 확대 전망

〈항공MRO산업 시장규모〉

- 해외시장 : 2015년 671억 달러에서 2025년 1,005억 달러로 연평균 4.1% 성장 예상
- 국내시장 : 2016년 2.9조원(민수 1.9, 군수 1)에서 2025년 4.3조원(민수 2.6, 군수 1.66)으로 연평균 5.1% 성장 예상

● 추진전략

- 용당(항공MRO)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배후 지원시설 및 연관 산업 집중 육성
- 일차적으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MRO 수요 지속 흡수
- 중장기적으로 군용기 MRO 수요의 민간이양 추진 및 항공기 기체 개조 능력 확보
-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앵커 기업으로 타 관련 기업 지속 유치

● 기대효과

- 연구개발 · 생산 · MRO가 집적화된 명실상부한 종합 항공산업단지 구축
- 다수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 확보

② 항공우주산업 집적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마련

● 배경 및 필요성

- 항공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으로써 앞으로도 세계시장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전자·통신·기계 등의 첨단 제조산업이면서 지식·노동 집약산업으로 다수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임
-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세계 시장 비중은 아직 미흡한 수준(시장 점유율 0.7%)으로 기술력 강화와 함께 산업 집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필요

● 추진전략

-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송포일반산업단지, 항공우주산업지원 다목적 복합단지 등의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조기 조성
- 국내 유력 항공업체들의 지속적인 유치와 항공산업 R&D 기능의 획기적 확충
- 글로벌 아웃소싱이 확대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발맞추어 지역 항공 부품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및 항공 비즈니스 강화 ⇒ 지역 업체들의 국제 공급망(Supply Chain) 안정 진입
- KAI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위성) 분야 중점 육성·지원(현재 우주 분야 연 매출 1,000억원 규모가 2035년 1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연구개발, 생산, 교육·훈련, 비즈니스 등이 지역 내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산업 여건 조성

● 기대효과

- G7 항공산업 국가로 성장하는 국내 최대의 거점 도시로 발전
- 항공우주산업 주력기업인 KAI와 지역 부품업체의 동반성장
-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2)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 거점 도시 완성

① 매력과 경쟁력이 있는 해양관광 거점 도시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사천바다케이블카를 통해 지역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
- 케이블카 개통 이후 연간 120만명의 이용객이 방문하였으나, 이와 연계할 관광상품 부족
- 지속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 필요

● 추진전략

-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 : 각산 일원의 편백림을 활용한 자연휴양림 조성으로 시민 및 관광객의 힐링공간 제공
- 초양도 아쿠아리움 건립 :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중간 기착지인 초양도에 전국 5번째 규모의 아쿠아리움 건립
-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 한려해상 국립공원 내 4개 섬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설치하고 각각의 섬에 공원자원을 활용한 전시 및 체험시설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 유치
- 각산 관광조형물 조성 : 각산 정상부 일원에 대형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내부에 전망대, 전시·체험시설,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천바다케이블카 이후의 관광객 유치자원으로 활용
- 해안 둘레길 조성, 경관 조명사업, 포토존 및 각종 조형물 설치 등으로 사천바다케이블카 주변을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로 조성
- 실안관광지 내 호텔 유치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
- 도시재생사업, 여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관광 상품화

● 기대효과

- 남해안권 최고의 해양관광 거점 도시로 부상
- 관광상품 간 연계를 통한 체류형 관광여건 조성 및 관광 사천 브랜드 구축
- 관광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연계·협력사업 과제 발굴

(1) 지방도 1016호선 확·포장

● 필요성

-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이용한 관광객 및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
-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여건 조성으로 남해안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 : 사천시 향촌동 ~ 고성군 상리면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20년 ~ 2025년 / 1,200억원
- 사업량 : 지방도 1016호선 확·포장(L=15.5km(사천시 8.3km, 고성군 7.2km), B=10m→20m)
- 연계·협력기관 : 경상남도, 사천시, 고성군

(2)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연계 자전거 도로망 구축으로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지역 간 상호교류 증진 도모

● 사업개요

- 위치 : 사천시 사천읍(경남 자영고) ~ 진주시 정촌면(강주연못)
- 사업기간 및 사업비 : 2020년 ~ 2023년 / 20억원
- 사업량 : 사천~진주 광역 자전거도로 조성 L=6km(사천시 4km, 진주시 2km)
- 연계·협력기관 : 사천시, 진주시(향후 고성, 통영, 거제 등 권역으로 연계 추진)

제3절 남해군

1. 비전 : 남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청정 해양힐링도시

2. 기본목표

- 글로벌 해양 신도시
- 지역민이 행복한 보물섬
- 지속가능한 힐링랜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휴양과 힐링의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조성

- 숲과 바다가 함께하는 힐링 1번지 조성
 - 남해군이 가진 천혜의 관광자원이 남해 바다와 깨끗한 공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힐링 관광지로 조성
 - 대한민국 1%를 공략하는 맞춤형 전략으로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역관광의 명품화와 고부가가치화 추진

- 기존의 구축된 관광인프라와 신규 조성되는 관광시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으로 관광의 명품화 추진
- 관광산업과 지역 1차 산업 간의 연계 강화로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지역 주민 소득 증가

●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조

- 남해군이 가진 지역문화와 마을의 다양한 이야기를 결합하여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조하고, 유배문학의 성지로서 대외적 이미지 개선 추구
- 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문화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

(2) 일자리 만드는 산업경제 육성으로 농어가 육성

● 신소득작물 보급 및 경쟁력 강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작물 발굴 및 보급, 가공 및 관광과 연계된 6차 산업화, 남해군 특산물의 명품화 등을 추진하여 남해군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

● 귀농·귀촌 및 농촌 활력

- 낙후된 농어촌 주거 및 생활환경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살고 싶은 남해를 만듦과 동시에 이를 통해 도시민들의 남해로의 귀촌·귀농 유도

(3) 남해군민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공간의 형성

● 발전하는 남해

- 정부 정책 및 도시재생 및 여촌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남해군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및 도시체계구축
- 도시관리 및 개발에 IT기술 도입을 통하여 더욱 효율적인 도시관리 기반 구축
- 재해위험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방지시설을 확충

● 살고 싶은 남해

- 글로벌 빌리지 조성을 통한 젊은 층 인구 유입 추진
- 노년층이 많은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농촌지역 주거 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귀농·귀촌자들을 위한 개발 정책 마련

● 미래 지속성장 기반 조성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산업 단지 기반 조성으로 산업경제의 심장부 육성
- 미래 선도형 신산업의 발굴

● 관광객 소비산업 육성

- 지역 내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부 관광객 유치 및 소비 유입 활성화

(4) 미래 기후환경 변화 적응을 통한 녹색성장 도시 구축

● 선제적 관리를 통한 환경 선진도시 만들기

- 폐기물 관리의 선진화와 도시 숲 가꾸기 사업, 생태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청정바다 가꾸기를 통한 환경 선진도시 구축

●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청정 남해 도약

- 해양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제로 및 자립화 사업 발굴로 청정 남해 구축

(5)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평생 맞춤형 복지

●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 거점의료기관 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 Health-care 원격진료, SMART-TV 돌봄서비스 등 건강한 치유도시 추진

● 평생 누리는 교육·문화

-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과 다문화가정 사회통합과 취약계층 복지인프라 확대.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 구축, 청소년 역량증진 사업 등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남해 복지

- 100세 시대에 맞는 평생학습체계 구축과 청소년 역량증진 및 건강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발굴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역사성과 지역성을 내포한 남해대교의 가치 재조명과 국내 유일의 교량을 활용한 창의적 관광자원 육성
 - 스릴 관광자원 개발
 - 남해대교~노량대교 연결 트래킹 로드 개발
 - 교량 양안 경관개선 등 관광자원 개발

제4절 하동군

1. 비전 :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100년 미래 경제 창출

2. 기본목표

- 활력 있는 경제
- 다시 찾는 관광
- 부자 되는 농업
- 감동 있는 복지
- 꿈을 여는 교육
- 공존하는 환경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알프스 하동 100년 경제 창출 기반 구축

- 맞춤형 투자유치, 명품 휴양레저단지 건설
 - 융복합 산업단지 조성(갈사, 대송), 글로벌 레저단지 건설(두우)
-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하동, 사회적경제 토대 마련
 - 기업 인프라 지원으로 기업환경 개선
- 발길 닿는 곳마다 테마가 되는 도시
 - 상상도서관, 상상인문학길, 다목적광장, 하모니철교, 하모니파크
 - 영호남 화합 인도교, 폐철도 공원화 사업
- 해수면과 내수면의 균형발전
 - 매력적인 어촌공간 조성, 내수면 관광 활성화
-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스마트 하동 조성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 지능형 ICT 타운 탄소 없는 별천지 마을 조성
 - 제조업 혁신을 주도할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조성
 - 하동송림~신기 21세기 인공지능 AI 하동숲 조성
-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
 - 읍면 균형발전으로 농촌발전거점 육성

- 하동 스포츠 파크 조성, 군민체육센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 신호등 없는 도시 완성, 교통망 확충으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
- 도심지 주차장 조성

(2) 함께 누리고,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조성

● 지역경제를 살리는 관광도시 조성

- 산림휴양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 슬로시티 인프라 확대 및 국제 슬로시티 협력 강화
- 체험 어드벤처와 자연 숲이 공존하는 금오산 관광벨트 구축
- 횡천~하동간 레일 MTB 조성

● 하동만의 최고 콘텐츠 개발

- 정기룡 장군 역사 인물 재조명, 고운 최치원 유적 체계적인 관리
- 매력관광 한류 콘텐츠 발굴
- 차별화되고 품격있는 글로벌 축제 육성

● 세계차 엑스포 성공 개최 및 스파 힐링케어 관광 선도

-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최
- 다인박물관 건립, 야생차 웰니스케어센터 조성
- 힐링 관광 다원, 다향길 조성, 녹차정원 조성

● 새로운 테마관광으로 고부가가치 접목

- 아자방지 국가 문화재 승격
- 하동 숲 조성, 동정호 지방정원 조성
- 옥종 정수지구 관광휴양단지 조성
- 구재봉 자연휴양림 활성화, 옥종 편백 치유의 숲 조성

(3) 경쟁력 있는 소득 중심의 명품 농업 육성

● **청정 이미지를 앞세운 하동브랜드 가치 향상**

-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품목 확대
- 하동녹차 글로벌 브랜드 강화
- 재첩잡이 손틀어업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 경쟁력 있는 신소득 작물 육성
- 축산업 경쟁력 강화
- 내수판매 확대

● **지속가능한 농정 전환 모색**

-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
- 성공 귀농, 행복 귀촌 조성
- 농업인의 소득증가와 경영안정을 위한 포용적 교육 강화

● **미래 행복 가치를 창조하는 농업**

- 친환경농업 확산, 미래 첨단농업 육성, 농업생산기반 경쟁력 제고

(4) 희망과 행복이 가득, 함께 잘 사는 복지 하동

● **보건, 의료, 먹거리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보건기관 기능 보강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확립, 치매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조성

● **주민참여 및 군민 질병 부담 경감**

-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보건의료 제공

● **섬김 있는 복지 공간 조성**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 시니어클럽 설치, 어르신센터 운영,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 **모두가 함께 어울리는 하나 되는 세상**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

● 소외 없는 행복한 공감 복지

- 농어촌버스 광역 BIS 구축, 행복택시 확대, 교통약자 콜택시 확대
- 하동 호국공원 조성사업, 화개전투학도병 추모공원 조성사업
- 초고령화에 대응한 스마트홈 구축

(5)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배우는 교육도시

● 함께 배우며 꿈을 이루어가는 교육도시

-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활성화
- 평생학습, 군민자치대학, 정보화 교육 지속 추진
-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사업 확대

(6)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무인약취관리시스템 설치

● 세계적인 지역 생태관광 명소 조성

- 탄소 없는 마을 기능 강화
- 하동군 생물자원 보전시설 조성
- 북천천 꽃천지 생태공원 조성
- 청정 공기캔 상품 개발

●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

●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공공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노후 하수관로 정비
- 하수도시설 확충 민간투자사업 추진

- 100년을 내다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

- 해안가 저지대 개선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하천재해 예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4. 연계 · 협력사업 과제발굴

(1) 영호남 네트워크 강화(남도2대교 건설)

- 광양~하동간 남도2대교 건설

- 제2 남도대교 건설을 통해 영호남을 잇는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아름다운 섬진강변 자연문화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

- 하모니파크 ICT 타워 조성

- 생활공간 속의 스마트미디어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ICT 기술과 융합된 방송, 통신, 광고, 유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쌍방향 소통 및 고객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소비자 니즈에 따른 맞춤형 광고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상권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3장

동북부권

제1절 김해시

제2절 밀양시

제3절 양산시

제4절 의령군

제5절 창녕군

제3장

동북부권

제1절 김해시

1. 비전 : 가야건국 2천년 세계도시 김해

2. 기본목표

- 일자리 경제도시
- 희망 복지도시
- 가야문화 교육도시
- 친환경 미래도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역동적인 경제도시 건설

- 좋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전략 산업 인프라 확충, 우량기업 유치 및 대규모 특화 산업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창업 생태계 조성, 직업훈련 및 맞춤형 인력 양성
- 지역특화산업 본격 육성으로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 의생명·의료기기 분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 의생명클러스터 구축
 -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 스마트공장 확산 등 제조업 혁신
- 시민 중심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스마트시티 구현
 -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도입
- 소상공인 성장 기반 조성, 골목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도자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 김해사랑상품권 확대, 차별화 전략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2) 가야역사문화권 중심도시 위상 강화

- **가야사복원을 통한 '가야왕도 김해' 정체성 확립**
 -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봉황동 유적 확대 정비, 가야고분군 정비
 -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국립 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 **명품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
 - 볼거리·즐길거리가 풍부한 관광인프라 확충, 도시형 국제 슬로시티 구현
 -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개발
- **문화산업 육성으로 고품격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경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건립, 특화박물관 건립으로 박물관도시 조성
 - 가야문화축제와 분청도자축제의 세계화 추진,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확대

(3) 안전한 울타리 속 따뜻한 복지 구현

- **촘촘한 안전 그물망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
 - 국제안전도시 공인,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한 도시 안전도 향상
 - 지진, 폭염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종합대책 수립
- **출생에서 노년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복지 실현**
 - 세대별 맞춤형 복지 지원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차별과 소외가 없는 선진형 복지체계 구축**
 - 장애인, 교통약자,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 모두가 만족하는 복지 실현
- **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시민 생활 밀착형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치매 예방사업 활성화
 -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로 생명 존중 환경 조성

(4)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조성

- 자연생태 보전 및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
 - 화포천 생태계 복원을 통한 습지 보전 가치 제고
 -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 도시공원 및 휴양림 조성
-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 체제 강화
 - 친환경 자동차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차단숲 조성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필(必)환경 패러다임 변화 대응
-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관리로 물복지 서비스 강화
 - 체계적이고 과학적 물수요 관리를 통한 스마트워터시스템 구축
 -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 주력

(5) 고르게 잘 사는 지역 균형개발

- 동-서 불균형 해소를 통한 동반성장
 - 안동재개발,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낙후된 동부권 개발 가속화
 -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 미래지향적인 명품복합도시 조성
 - 주거 환경 개선을 기반으로 한 복합 특화단지 조성
 - 스포츠·레저 시설 확충, 동북아 물류 R&D 조성
- 구도심에 활력을 넣을 도시재생사업 추진
 - (목표) 삶의 질 제고,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 원도심, 무계, 삼방, 진영 등 낙후된 구도심 위주 도시재생

(6) 경남·부산의 “도로·교통의 중심지”로 도약

- 부산, 창원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및 지역 연결 간선 도로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물류·교통중심지 구축

- 교통 혼잡지역 개선 및 주민 숙원해소로 지역 환경 개선, 사람 중심의 편리하고 쾌적한 도로와 도심지 내 주차장 조성으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경전철 운행과 재정부담 완화, 시내버스 노선 및 운영체계 개선, ITS 구축사업(VMS) 등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마련
- 장유여객터미널 건립, 부전마산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7) 고부가 첨단 농업 육성으로 미래 생명 산업 선도

- 농업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축산환경 개선
 - 하수처리수 농업용수 재이용사업, 배수 개선,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등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사 악취 저감대책 추진(축사 현대화)
- 고소득 특화 농업 육성 및 친환경 농업 활성화
 - 김해 푸드플랜 구축으로 시민 안심 먹거리 제공, 농가소득 증대
 - 스마트팜 생산기반, 신소득 작물 다양화, 지역 전략작목 육성
 - 화훼산업 육성,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 매력적인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중심지활성화,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속 추진
 - 농촌 주거환경 개선(빈집정비, 주택개량사업)

(8) 미래형 인재를 만드는 미래교육도시 지향

-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차원 높은 교육환경 조성
 - 무상급식 전면 시행, 무상 교복 등 교육비 절감
 -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운영으로 희망의 사다리 마련
- 책 읽는 문화 확산, 대한민국 책 수도 조성
 - 김해 독서대전 개최, 작은 도서관 활성화, 독서프로그램 강화
- 시민 평생교육 확대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체육 기반 시설 확충으로 시민 건강 증진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지방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2020년도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하천 스마트홍수관리 시스템을 도내 지방하천에도 확대 도입 추진(경남 선도지구 : 김해시, 진주시)

(2) 동북아 물류 R&D 조성사업

- 스마트 물류시설, 물류 R&D 설치, 지원기능시설 등(김해시 화목동, 부산시 강서구 일원)

(3) 광역도로망 확충을 통한 동남권 물류·교통중심지 구축

- 창원~김해간(비음산터널) 민간투자사업
- 김해~부산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 삼방~부산 화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
- 생림~한림 고속도로 건설공사
- 부산신항선 고속철도화(김해 KTX역 신설 사업)

(4)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인도기념공원 조성사업
- 낙동강변 가야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
- 김해 생림~밀양 삼랑진 연계사업

제2절 밀양시

1. 비전 : 시민이 행복한 힘찬 미래도시 밀양

2. 기본목표

- 균형발전 도시
- 기업퍼스트 나노도시
- 스마트 6차 농업 수도
- 청정 영남알프스 관광매력도시
- 청년 친화도시
- 열린 시민행복도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영남권 산업·물류·관광의 광역 도시기반 구축

- 경남 동·서·울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 거점 도시 건설
 - 산업물류·농산물 유통의 거점 도시 건설
 - 산업시설·입지 증가에 따른 물동량 처리역량 강화
 - 부·울·경 고속도로망 기반 도농 간 광역 스마트 농업 네트워크 강화
- 영남권 스마트나노 혁신밸리 산업화 확산
 - 경남 중심 나노산업의 유연한 광역권 형성
 -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동남권 메가시티와 연계한 스마트나노 혁신밸리 구축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영남권 생태관광벨트 구축
 - 지역특화자원인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지역(밀양, 양산, 울산)을 연계한 생태보전, 산악관광 등 영남권 생태문화관광 메카 조성
 - 경남 5대 광역권 + 영남알프스 생태관광벨트

(2) 새로운 100년을 위한 미래 첨단 경제도시 건설

- 나노기술 혁신으로 지속 성장을 견인하는 NANO 선도도시 조성
 - 미래를 선도하는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 실현
 -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는 나노기술로 미래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
 - 나노융합 스마트 그린 국가산단과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연계한 스마트나노 혁신밸리 조성
 - 대한민국 대표 나노융합산업 메카도시로 지속성장 가능한 토대 마련

● **친환경·스마트·6차 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림·축산업의 고도화**

- 스마트팜, 6차 산업과 나노산업을 연계한 농업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
- 친환경·스마트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

● **기업·청년 친화 산업환경 조성 및 신산업 육성**

-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조건 조성
- 사람 중심의 문화·교육·주거·상업 개선을 통한 근로자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신산업 육성과 각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양성

●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시대 준비**

-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사회 전반 확산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고효율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 그린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 등) 보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인프라(급속·완속충전기) 확충 등
-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인 수소경제 활성화

(3) 창의적인 인재 육성과 일하는 환경 조성

● **지역·산업 맞춤형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

- 지역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직업과 유망기술 일자리 정책 강화
- 산업·직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근로 환경 개선 및 역량 강화
- 스마트, 나노 인력 육성을 통한 미래 전문 인력 확보

● **촉촉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건강한 성장 기반 마련**

- 자발적인 노동 유연성 및 안정성 확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로 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

-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주체 간 파트너십 강화
- 배움의 기회가 열려 있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조성
- 평생학습 DB 구축 및 고령화 사회 대응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4) 맞춤형 인구정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구도심 도시재생으로 정주 여건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귀농·귀촌 등 차별화된 인구 유입과 관계인구 증대 정책 마련
- 다양성이 인정되는 포용적 지역사회 구축
- 평등과 공정을 토대로 한 사회체계 확립
- 청년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 밀양 건설(성장기반, 참여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

(5) 청정 영남알프스, 문화관광 매력도시 조성

- K-웰니스관광클러스터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산업 연계협력 강화
- 차별화된 생태체험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생태관광 허브도시 조성
 - 영남알프스 생태·습지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관광 유도
 - 백두대간 국민휴양 산악관광벨트와 고산습지 및 우포늪 등 경남지역 습지들과 연계
-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 르네상스 시대 건설
 -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도시문화생태계 조성
 - 밀양다움이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 및 아리랑 문화도시 조성
 - 지역밀착형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자생력 강화
-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상권 활력
 -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견인
 - 밀양사랑상품권, 밀양물산 소비운동 등 활성화로 지역 내 소비 확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 육성
 - 밀양아리랑시장을 문화·관광·특산품 등과 연계한 다양성 관광상품 개발

(6)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

- 스마트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을 통한 도시안전망 강화
 - 범죄·화재 예방과 각종 재난·재해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축

- **스마트 시티를 통한 지역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
 - 스마트 시티 첨단 기반 인프라 구축,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및 정보제공
 - 스마트 농촌으로 돈 버는, 찾아오는, 살기 좋은 농촌 환경 조성
 - 스마트 관광 인프라 구축과 서비스 개발 확대
- **스마트화로 비대면 소통 서비스 강화**
 - 비대면 소통 시스템, 교육·복지 솔루션, 원격의료서비스 구축

(7) 스마트 6차 농업으로 미래농업을 선도

- **스마트 6차 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 스마트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농업의 거점 조성
 - 6차 산업화로 농촌경제 활성화 및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으로 지역 내 정착 유도**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귀농·귀촌인 단계별 정착지원
-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 농촌마을의 공동체·자율성 회복을 위한 자원기반 마련

(8)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

- **생태 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로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
 - 훼손된 도시생태축 복원을 통한 생태도시 환경 구축
-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으로 기후변화 대응**
 -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반 사회 조성 및 맑고 아름다운 밀양 구축
 - 유해환경 대응력 강화로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 **맑은 물공급과 수질 환경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 깨끗하고 풍부한 수자원 확보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 환경 인프라 그린뉴딜로 전환
- 가뭄·집중호우 대비 위기대응 공조 체계 강화

(9) 소통과 조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

-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 구현
- 주민들의 시정정책 참여 저변 확대

● 주요 정책 추진과정 공개를 통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안티코삼랑 시간여행 공원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4년(3년간) ※ 1단계 교량 안전정비
- 위 치 : 삼랑진읍 삼랑리 472-123 일원, 구삼랑진교 및 구삼랑철교 일원
- 총사업비 : 1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방안 :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김해시와 연계사업)

● 사업내용

구분	주요 내용
안티코삼랑 정류장 조성 (15억원)	• 김해낙동강레일바이크 회차지점에 매표소, 식당, 카페 조성(1동×100㎡, 1동×150㎡)
근대문화촌 테마파크 조성 (50억원)	• 근대주택 건축물 조성(8동×50㎡) • 중앙 광장 조성(4,600㎡)
선셋 전망대 조성 (20억원)	• 전망대 및 무인카페 등 편의시설 조성(400㎡, 2층)
삼랑진교량 경관정비 (12억원)	• 교량 안전진단 및 정비 • 1평 십터/포토존 조성 • 야간조명 설치로 경관 명소화(602m × 4.3m)
푸른밤 노는 강, 선셋 프로그램 (3억원)	• 브릿지 요가(댄스)교실, 웨딩 등 이벤트 행사 • 야간조명쇼, 플라마켓(농산물), 셰프의 다리요리(죽쇼) • 한밤의 음악, 노을이 아름다운 사진 공모전 등

제3절

양산시

1. 비전 :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에이스 참 시티(ACE Charm City) 「동남권의 중심, 양산!」

2. 기본목표

- 활기찬 경제
- 따뜻한 공동체
- 건강한 생태
- 균형 있는 동반성장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안전하고 편리한 안전도시

- 스마트한 안전도시 지능형 관리망 구축
 - 통합안전 시스템 구축(컨트롤타워 구축)
 - 지능형 통합관제 스마트 플랫폼 구축
-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 부산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 경부선 횡단보도 육교 설치 조성 사업
 - 국지도 60호선 2단계 구간 도로 개설
 - 광역 경전철 계획
 - 제2양산대교(양산C~유산동) 건설
 - 양산종합운동장 복합환승센터 개발
 - 지방도 1028호선(상삼~내석) 확장
 - 공영화물주차장 확충
 - 화제리~원리간 직선도로 건설
- 환경변화 대응체계 강화 및 저해 저감 도시환경 조성
 - 기후변화 대비 대응체계 구축
 - 재해 저감 도시기반시설 도입 사업
- 사각 없는 복지 실현
 - 여성친화도시 정책 사업 추진
 - 복지공동체 조성
 - 창업/일자리 지원 “양산크리에티브 팩토리” 운영
 - 응상권 종합의료시설 유치

(2) 자연과 조화되는 건강녹색도시

- 국제적인 건강도시 구축
 - 건강도시 프로젝트 추진 확산

● 에너지 자립 · 저탄소 도시 만들기

- 신 · 재생 및 저탄소 도시기반조성 사업(원동풍력발전, 에너지Free마을, 태양광발전 확대)
- 신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태양광, 풍력)
- 효율적 자원 순환 사업(우수 재활용, 강변여과수 개발, 웅상하수처리시설 확충)

● Green 인프라 구축 및 확대

- 녹지네트워크 구축 사업
- 생태 숲 및 습지 공원 조성
- 생활 속의 녹지 만들기 사업

● 활기찬 도시환경 조성

- 양산 미래도시 경관 디자인 사업
-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 및 교통문화 확산
- 산업지구 배후 주거단지 정비사업
- 원도심 재생 창조문화공간 만들기 사업(북부동)

(3) 신성장 첨단산업기반의 경제활력도시

● 경쟁력 있는 미래 신성장산업 기반 조성

- 양산 에이스테크노벨리 조성 사업(항노화산업특화지구, 첨단융복합미래신성장산업지구, 신규산업단지)
-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 첨단 영농단지 및 특화사업 추진

● 기업 · 일자리 지원 인프라 조성

- 테크노비즈타운 건립 및 운영
- 양산 산업디자인진흥원 설립
- 양산CD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 추진
- 소기업 공동 물류창고 조성

● 창의적인 관광 · 레저 기반 조성

- 삼량 낙동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 패밀리 골프 테마파크 조성
- 하북권 종합관광 개발사업
- 물금광산 동굴 테마공원 조성
- 의료관광벨트 조성 사업
- 원동 풍력 바람공원 조성
- 자전거 레저관광 인프라 조성
- 유스호스텔 및 비즈니스호텔 건립
- 세계 전통사원 테마파크 조성

(4) 문화·복지·교육 공동체 중심의 일류시민도시

● 문화 융성을 위한 인프라 확대

- 통도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물금 증산리 왜성 복원 정비사업
- 신기리 산성/법기리 요지 복원 정비사업
- 양산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 실현

- 양산 평생학습관 건립
- 이웃사촌 행복교실 프로젝트
- 취약지역 학교시설 복합화
- 취약계층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사업
- 지역 현장 체험학습장 확충 및 지원사업
- 우수 인재 명문고교 육성 사업
- 수요자 중심의 교육지원체계 구축
- 야간 직업평생교육 “반딧불 평생학습교실”전개

(5) 동반성장 하는 균형도시

●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

- 사송신도시 조성
- 스마트시티 기반 대중교통 정보시스템 구축
- 면 소재지 마을 재생 사업
- 원동면 지방상수도 공급

●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 추진

- 상북면(산업단지 조성, 지방도 1028호선 연결, 산업단지 배후 임대주택 공급)
- 하북면(스포츠파크, 세계 종교사원 테마파크, 용연 아토피테라피 케어타운)
- 원동면(특화작물 마케팅 지원 및 명품 브랜딩 사업, 귀농 정착 영농단지 조성, 딸기·미나리·매실 등 원동특화작물 산업 특구)
- 동면(법기 아토피테라피 케어타운, 사송신도시 조성)
- 웅상(산업단지 조성, 골프 테마파크,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물금역~한림정역 낙동강 관광열차 운행

● 필요성

- 차량으로 이동이 어려운 물금~한림을 기차를 통한 연계로 관광 활성화
- 인접 시·군간 공동추진을 통해 관광 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낙동강변으로 운행하는 물금역~한림정역 구간에 관광열차 운행
- 기차를 통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정차역 : 물금역, 원동역, 삼랑진역, 낙동강역, 한림정역
- 운행 기간 : 3~6월 및 9~11월(관광 성수기)
- 운행 방법
 - 낙동강 경치를 관람하여 기차로 이동 및 각 역에 하차 후 1~2시간 자율관광 또는 각 역에 배치된 관광해설사의 안내를 받으며 관광
 - 해당 기간 내 관광열차 티켓 발권→해당일 무궁화호 열차 무제한 이용권
 - 각 역에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이동수단(자전거 등 대여) 확보
 - 지자체별 역 주변 관광지 조성 및 정비

양산 비전의 핵심 가치(ACE Charm)

핵심 가치	내 용
A(Adminstration)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자치행정
C(Creative)	창조적인 관광 레저 기반 확충
E(Environment)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 자연친화 환경 조성
C(Comfortable)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H(High quality)	고품격 문화예술 체육 환경 조성
A(Amalgamation)	경쟁력 있는 신성장산업 융합기반 확충
R(Regeneration)	균형발전을 위한 재생
M(Movement)	문화복지교육 지역공동체 운동 확산

제4절 의령군

1. 비전 : 함께 여는 의령의 청춘시대

2. 기본목표

- 소통과 섬김의 청렴 행정
- 도약하는 지역경제
- 농민이 더 잘사는 선진농업
- 차별 없는 따뜻한 복지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살고 싶은 희망 농촌 건설

- 편리한 교통망 구축
 - 국도 20호선 4차로 확장,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 행정력 집중
 -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교통 연계, 위험도로 개선,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등 교통환경 개선 강화
- 생동감 있는 산업기반 조성
 - 산업·물류단지 조성, 향노화 산업 육성 및 지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도시가스 공급 기반 확대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 골프장 확장사업(9홀→18홀)을 통한 고용 창출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2) 역사와 자연이 공존하는 문화 관광도시 조성

- 문화 인프라 구축
 - 의령 흥의장군축제를 전국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 백산 안희제 생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및 관광자원화
- 관광 인프라 구축
 - 천혜의 경관과 자연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 및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관광시설·상품개발 추진, 의병 관광자원 발굴, 역사·인물 탐방 관광 육성
 - 우수마을 축제·계절별 축제 개발 및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전승

- 문화재 보수정비를 통한 원형 보존 및 후대 전승
- 가야유적 조사·연구로 의령의 가치 재조명

(3)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안전한 지역 환경 조성

- 재난 예·경보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상황전파로 재해 사전대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 도시계획도로 확충,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도시경관과 조화로운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 환경오염 예방으로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

- 미세먼지 저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취약계층 지붕 개량사업 추진
- 생활폐기물 상습 불법투기 지역 감시카메라 설치 등 생활 쓰레기 감량화 추진

● 깨끗한 물자원 관리

-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읍면별 균등한 우수율 및 맑은 물공급 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관리 추진

(4) 다함께 행복한 따뜻한 복지 구현

● 의령형 의료·복지 모델 구축

-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하여 복지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추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유도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추진으로 사각지대 해소,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경쟁력과 건강함을 갖춘 노인복지 강화, 여성·장애인 복지 강화,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환경과 건전 성장 도모

(5) 희망과 창의를 넘치는 교육환경 조성

● 교육기반 구축 및 운영

- 미래사회 변화의 선제 대응을 위한 체험형 미래교육 테마파크 조성
- 행복학습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인재 육성

- **지역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운영**

-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미활동, 특기·적성, 직업 교육 등 자기계발 기회 제공
-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평생교육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기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사업

- 의령·함안·창녕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통한 남부내륙권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3개 군의 상생발전 도모

제5절 창녕군

1. 비전 : 더 큰 번영 모두가 행복한 창녕

2. 기본목표

- 당당한 군민의 창녕
- 생태와 문화의 수도
- 활력이 넘치는 경제
- 신뢰와 희망의 교육
- 섬김과 정성의 복지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창녕 농가 1억 소득 시대 구현

- 미래를 향한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
 - 창녕군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 창녕군 축산물 유통센터 개장으로 지역생산 우수 농·축산물의 원활한 공급관리 기능 수행
 -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소비계층 확충 및 농가소득 증대
 -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으로 고유자원을 활용한 선순환 경제 육성
 - 축종별 시설 현대화 및 장비 자동화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창녕 구현
- 특화산업 및 수출 품목 개발로 소득원 확보
 - 창녕 양파 6차 산업화 및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지역특화산업 고도화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 유통 활성화 구축

(2) 영남권 최고의 생태·문화·관광·휴양도시 창녕

-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생태도시 실현
 - 우포따오기 야생 방사, 서식지 조성으로 우포따오기를 통한 지역 브랜드 각인과 청정 환경 이미지 부각
 - 우포잡자리나라, 우포늪생태체험장, 우포생태촌 등 우포늪과 연계한 생태관광 기반 활용 및 우포늪의 가치 인식 제고
 - 경상남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원 유치, 창원대학교와 생태관광 활성화 협약,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건강한 생태도시 실현

● **역사·문화의 체계적 관리와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으로 지역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 비화가야 알리기 프로젝트, 비화가야사 재조명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창녕 실현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문화예술 대중화 및 활성화를 통해 품격 높은 문화도시 건설

● **머물고 싶고 설렘이 가득한 관광 창녕 조성**

- 스포츠마케팅, 부곡온천 힐링 둘레길 조성, 야간경관 조성 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부곡온천관광특구 조성
- 화왕산군립공원, 도시공원, 화왕산 치유의 숲 조성 등 지속가능한 자연 친화적인 산림관광 생태계 조성
- 창녕낙동강유채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봄꽃축제로 육성하여 생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개발,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 **생활 속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체육시설 확충**

- 군민밀착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군민 만족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수요 충족 및 군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
- 남지국민체육센터 건립, 생활밀착형 수영장 확충 및 영화관 건립으로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3) 자영업이 흥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도시 창녕

● **산업입지 경쟁력 강화 및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서비스 확대**

-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된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
- 계획입지로 공장 집적화를 통한 성장기반 구축 및 공업용지 부족난 해소
- 경남형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미래 자동차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

● **안정적 일자리 확충 및 맞춤형 취업 지원**

- 농촌희망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등 모두가 행복한 창녕형 일자리사업 추진
- 청년농업인 육성, 청년 스마트 일자리 발굴 지원 등 청년 창업 기회 확대

● **살맛 나고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및 서민 생활 안정 도모**

-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사업,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 구도심권 상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창녕사랑상품권 발행과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 공급 확대로 서민 생활 안정

(4) 전국 으뜸 교육·복지 도시 창녕

● **다양한 교육지원으로 교육 수준과 경쟁력 강화**

- 영어마을 위탁운영, 원어민 강사 배치지원,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 창녕외국어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교육도시 구현
- 군민 모두가 언제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으로 다양한 주민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실현

●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밝고 건강한 성장지원**

- 다함께 돌봄 또바기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하고 쾌적한 성장환경 조성
- 청소년 전용공간,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및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 기반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 양성

● **존중과 포용으로 행복 창녕 구현**

-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실현
-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 및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생활 안정 도모
- 예방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군민 건강수명 증대

(5)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도시 창녕

● **군민 모두가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한 행복주택사업 등 군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군민 모두의 행복과 군정 발전 도모

● **선진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 강화**

- 선제대응 시스템 확충, 범군민 재난안전캠페인 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창녕 구현

●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도시재생 및 주거 복지, 생활환경개선으로 군민의 삶의 질 제고
- 농촌중심지 생활 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여 정주서비스 기능 충족, 농촌지역 중심 거점 공간으로 육성

4. 연계·협력사업 과제 발굴

(1) 남부내륙철도 개통과 연계한 생태·문화관광의 경쟁력 강화

● **낙동강 역사문화루트 조성**

- 경남의 핵심 교통로인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루트 조성
- 창녕 낙동강 생태정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우포늪과 더불어 대표
- 관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시군 상생발전 도모

● **경상남도 생태관광 클러스터 조성**

- 남부내륙철도를 통하여 수도권 및 전국 각지로부터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합천권역(합천·거창·함양·산청·창녕) 광역연계로 생태관광 경쟁력 구축
- 의령·함안·창녕 합강권역 관광벨트 구축으로 남부내륙권 광역관광 중심축을 구성하여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2) 북부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도모

●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

- 시도 경계 지역의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창녕군 북부권 관광시설 확충으로 외부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새로운 여가 공간 창출
- 지역자원의 적극적 활용하고 인접 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추진

(3) 국가산단과 연계한 교통·산업 중심지로 도약

● 대구산업선 철도 창녕 연장 및 창원산업선 신설

- 창원산업선(대구-창녕-창원)을 신설하여 경상남도 순환철도망 구축으로 남부내륙고속축과 창원축 연계한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산업철도 연장과 연계한 대합역세권을 개발하여 도심첨단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인구증가와 북부지역 거점 형성

● 대합권역 산업단지 조성 및 인프라 구축

- 산업집적 및 연계를 통한 투자 활성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칠원~현풍간 고속도로 6차선 확장

- 교통 수요대비 광역교통망의 지속적 확충 및 교통수단 인프라 구축
-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국도24호선(창녕~합천~거창) 4차로 확·포장공사

- 서부경남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으로 인접 지자체 동반 경제 활성화 기여

G Y E O N G S A N G N A M D O



제4장

동부권

제1절 창원시

제2절 통영시

제3절 거제시

제4절 함안군

제5절 고성군

제4장

동부권

제1절 창원시

1. 비전 : 경계 없는 하나의 도시 창원

2. 기본목표

- 미래의 밑천이 두둑한 도시
- 평범한 시민의 특별한 도시
- 함께 성장하는 국제적 도시
- 모두 닦고 싶은 기회의 도시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로 든든한 경제

- 스마트기술혁신과 창원 전통제조업의 고도화
 - I-Road(혁신의 길) 프로젝트 추진, ICT·기계 융복합산업 체제 구축
- 방위, 수소, 항공 부품 등 창원 新성장산업 육성
 - 친환경 수소산업특별시 위상 강화, 방위·항공 부품산업 인프라 고도화
- 주력산업 연관 생산 서비스산업 육성
 - 4차 산업혁명 연관산업 생태계 조성(시 등) + 강소연구개발 특구 조성
- 고부가가치 창원 서비스산업 활성화
 - 창원 MICE 산업 육성, 체류형 관광산업 기반 구축
- 1차 산업 → 6차 산업 전환
 - ICT 융합 스마트팜(농업+어업)추진, 로컬푸드 육성 플랫폼 구축

(2) 세계와 소통하며 경쟁하는 해양·물류

- 창원 해양항만 인프라의 기능 강화
 - 신항, 마산항, 진해항 기능 재배치, 海맑은 마산만 만들기 프로젝트

- **창원 항만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 Again 동북아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추진(3대 전략 + 16개 정책과제)
- **창원 新해양산업의 전략적 유치와 선도항만관리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보**
 - 창원 마니라베이 조성(Changwon Marina Bay),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

(3) 하나로 이어주는 빠르고 편리한 교통망 구축

- **경제성·효율성을 높이는 시민 교통수단의 다양화 추진**
 - 창원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 **생태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수단 활성화**
 - 녹색교통수단(수소차, 전기차) 보급 확산 및 인프라 확충
- **S-BRT, 철도망 연계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S-BRT) 구축 및 운영 효율화, 스마트 교통체계 확충

(4) 아름다운 수목과 푸른 바다로 가꾼 생태·환경

- **안전하고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
 - 도시오염원 관리 강화 추진, 시민이 믿고 마시는 먹는 물관리 강화
- **미세먼지·기후변화 대응 시스템 고도화**
 - 미세먼지 저감 사업 확대, 창원형 기후변화 적응 정책 추진
- **해양·육상 생태계의 체계적 관리와 이용**
 - 생태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순환체계 확립, 깨끗한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5) 평생을 책임지는 안정된 주거인프라

- **골고루 잘사는 외곽지역개발**
 -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도심 외곽권 발전종합계획 추진
- **시민수요에 부응하는 주거 다양성의 회복**
 - 삶이 녹아드는 주거공간 디자인의 다양화, 실용적인 사회주택 공급기반 조성

- 주거환경 정비 및 주거 안정성 확보, 커뮤니티 주도의 포용 주거복지 실현
- 역사와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재생 : 근대건축물 보존 및 지역 관광자원화

(6) 배움과 나눔, 함께 누리고 즐기는 시민문화

- 인구 100만 대도시의 브랜드 제고
- 미래형 의료보건 시스템 구축 및 인상적 문화창조력 강화
- 지역혁신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 평생학습 프로그램 특성화,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 공생·공감의 행복공동체 형성
 - 공공과 민간을 이어주는 사회적경제 혁신플랫폼 구축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BACK TO THE 가야(가야문화권 형성 - 관광자원화 + 광역관광교통체계 구축)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고대 가야 시대의 우수한 문화(철기+토기문화) 계승 발전 기반 마련 필요
 - 남해안 관광벨트와 비교해 상대적 낙후된 내륙권 관광자원 균형 개발 → 지자체별 산재한 가야문화유적 연계 → 광역관광권 구상
- 추진방향
 - 창원-김해-함안(동부권 우선 시범 추진) → 경남 전역(권역 구분)으로 확대
 - 지자체별 특화콘텐츠 적용 + 광역 시티투어버스 연결(매개체)로 하나의 관광권 형성

● 추진 계획

• 지자체별 특화콘텐츠 적용

김 해	창 원	함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김해박물관 가야테마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드라마세트장 국립 가야 문화재 연구소 산업·노동·역사박물관 조성 예정('24년 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야리 고분군(국가사적) 성산산성, 안곡산성 2020 아라가야 유적에 대한 조사연구 추진(166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 교육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체험 중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드라마세트장 내 가야 시대 선박 체험시설 VR, 영상 콘텐츠 체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적지 체험 중심

● 가야문화권 광역관광교통체계 구축

■ 창원+김해+함안의 주요 교통 결절점(공항, 터미널, 역 + 관광지) 연계 광역 시티투어버스 운영
 ↳ 추진체계 : 총괄(경남관광재단), 지자체 : 창원(창원관광협의회) 등

(2) 함께하는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²⁾ 확대 추진(창원 대산면 - 김해 진영읍)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공동 생활권에 있는 지자체 간의 관할과 경계를 넘어서는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제공
 → 지역 간 상생협력 강화 + 지역 주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및 계획(대산면 제동리 - 진영읍 진영리)

① 주민복지시설 조성 - 지역 경계 부근	② 대중교통 이용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산면-고령화+진영읍-영유아보육)+문화향유 → 경로+보육+문화 복합 SOC 시설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25호선 지연 순환 마을버스 유치 • 택시 시외할증 요금 폐지 등

2) [창원시-함안군 사례] 행안부 공간통합 시설공유형 협업 공모사업 최우수 선정('19. 6.)

제2절 통영시

1. 비전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2. 기본목표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 남해안 시대 개막에 따른 한려수도의 가치 증대, 한려수도에서 발전적 중심성 회복, 통영만의 Blue Ocean 전략 개발(통영의 중심성 회복은 통영의 풍요로운 문화에서 시작), 한국의 대표적 해양레저·문화관광도시 조성
- 계획 공간 스케일별 목표
 - 도시경제 활성화와 도시공간 개편(Local Scale)
 - 문화가 있는 한려수도의 중심(National Scale)
 - 동북아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관광레저도시(Global Scale)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도시발전 : 신성장동력 발굴로 도시 지속가능성 회복

- 수산자원의 품질개선과 유통구조 혁신 등으로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레저산업과 결합하여 수산업의 고도화 추진
 -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바다목장 사업 추진,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가두리양식어장 현대화·자동화, 마을어장 6차 산업화 추진으로 100년 해양산업 기반 조성
 -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 저장·판매·가공시설 확충 및 현대화, 어업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식품 거점 단지 조성, ICT 기반 스마트 해양수산 인프라 구축, 통영바다 브랜드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유통경로 다변화를 통해 수산업 고부가가치화
 - 해양레저선박의 제조·수리, 판매·전시, 보관 등 기능하는 해양레저 클러스터 조성, 신규 마리나항 및 역마리나 네트워크 등 해양레저산업 인프라 구축, 국제 규모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유치로 해양레저시장 선도 등 해양레저산업 연계형 지역 산업 추진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해양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수산업과 함께 도시발전의 중심축으로 세움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해양관광 테마 개발로 한려수도 관광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도남관광지 관광휴양단지 조성 추진
 - 자연환경, 기후, 해안입지 조건을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 레포츠관광, 어촌체험관광, 섬

관광, 통영 음식문화 관광 상품화 등 핵심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서비스 기능 강화로 차별화된 체류형 관광 요소 강화

- 문화재 보전 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역사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통제영 거리 조성, 문화예술기업 육성,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한산도, 한산대첩을 재조명하고 연계한 콘텐츠 개발로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 12공방 전통공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공예인력 역량 강화 및 전통공예산업 육성, 옷칠·나전칠기·음악·연극·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과 섬 프로젝트를 연계한 범예술적 통영 국제트리엔날레 추진
- 음악·문화산업의 기획·생산·유통·소비·공연·전시·교육 등을 집적화한 음악·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다양한 음악 공연 프로그램과 세계 음악창의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위상 강화

(2) 도시관리 : 친환경 생태 및 건강도시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제고

- 안정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산업단지 조성,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등 도시 자생력 강화를 통한 주민 자족 기반 구축
-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을 통한 미래형 교통환경 조성과 주차장 확충으로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교통 운영시스템의 체계화로 차량 운행환경 개선
-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도화 사업 추진 및 다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충, 해양사고 및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해양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확대,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통한 시민 안전도시 구현
- 사회적 약자 맞춤형 종합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관리체계 구축, 지역특화교육 강화, 장애인특수학교 및 노인 전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공공체육·문화시설 확충 및 시설개선, 도심 속 녹지공간 확충으로 시민 맞춤형 건강도시 조성
- 도서지역 광역 상수도 공급을 통한 급수체계 구축 및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 지정해역 위생관리 등 환경·생태 수용 능력의 증대
- 화석연료 사용 억제 및 탄소 저감 체계 구축, 탄소배출 없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배출 저감 도시 실현
-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경관정비사업,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판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시경관 개선 및 도시 정체성 회복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기반의 시정 운영, 주민주도형 특성화 사업을 통한 주민자치 역량 강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시정 운영

(3) 도시공간 : 지역 균형개발로 조화로운 도시공간 구축

- **자원개발의 균등화를 통한 공간 균형개발로 더불어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기반 구축, 자원 간 연계와 공간 기능 특성화로 상생과 공존의 도시공간 조성, 도시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도시공간계획 추진**
 - 내륙권역 : 산업단지 조성, 국도 77호선 확장, 남부내륙고속철도 통영역세권 개발, KTX 통영역사와 연계한 대형 주차장 조성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무질서한 도시 확장 방지를 위한 계획적인 관리
 - 도심권역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도시 중심 기능 회복, 강구안 친수시설, 남망산 디지털파크, 해저터널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머무르는 관광거점 조성, 통제영 및 충렬사, 12공방 전수·체험공간 등 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정체성 회복, 관광 분산화·전역화를 위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대중교통 개편과 순환도로망 구축
 - 미륵도권역 : 봉평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 해양레저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해양레저·휴양·체험관광 인프라 강화, 역마리나 네트워크 구축, 루지, 스탠포드호텔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신성장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상품 개발, 도남관광지~골프장과 연계하는 도남유원지 신설, 산양스포츠파크를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사계절 전지훈련 메카 육성
 - 해양권역 :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등 도서지역 정주기능 강화, 어촌뉴딜 300사업으로 어촌마을 혁신성장 및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마을어장 6차 산업화 지원을 위한 수산물 생산·가공·판매·관광 융합 어촌마을 조성, 섬 고유의 어메니티를 활용한 섬별 테마관광산업 육성, 육지~도서 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륙·연도교 건설, 해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마련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더불어 발전하는 지역균형개발로 지속가능 성장기반 조성

- **남부내륙고속철도 기반 균형개발로 지역거점 도시 도약**
 -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로 지역혁신성장 주도
 -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사업(복선만대로 건설, 대형주차장 건립 등) 추진으로 지역균형개발 상승효과 극대화
- **광역생활·경제권 구축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 남해안권 통행시간 단축에 따라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화로 생활·경제 공동체 조성
 - 도시재생 및 어촌뉴딜사업 추진 등 도시 자생력 강화로 생활·경제권 광역화 확대

(2)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경제성장 주도

● 지역 주력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산업 육성

- 안정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투자유치 촉진 및 강화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
- 수산식품 거점단지 및 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해양산업 고도화
- 스마트양식, 스마트팜, 농어업 6차 산업화를 통한 농수산업 스마트화

● 신산업 육성 기반 및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조성

- 수소차 보급 확대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통한 수소 경제 선도
- 청년정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 신규고용 일자리 창출로 인적자원 확보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협업·혁신을 통한 인적·물적 통합지원체계 구축

(3) 지역연계형 문화관광산업 추진으로 문화관광 Hub 도시 조성

● 지역별 특화된 관광 요소 융합을 통한 관광산업 고부가가치화

- 권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강화를 통한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 체계적 추진
- 관광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관광협업센터 구축
- 생활권 단축 및 관광 루트 다각화를 통한 지역연계 문화관광상품 개발

● 국제·전국 단위 정책사업 추진 및 각종 대회·행사 유치를 통한 연계·협력 추진

- 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 관련 전략적·핵심적 관광 연계사업 발굴로 글로벌 관광생태계 조성
- 3개 시·군(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관광 등 연계·협력사업 발굴 추진 강화
- 국제·전국 규모 해양레저스포츠대회 및 체육행사 유치, 국제트리엔날레 개최 등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

(4) 상생과 포용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 범지역적·범공간적 생태환경 조성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추모공원 현대화 사업 등 공간통합 및 시설공유형 협업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편의 제공
- 해상안전 시스템 구축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 구성 확대로 해상사고 및 해양오염 시 IC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공동 대응으로 안전하고 청정한 해역 조성

제3절 거제시

1. 비전 : 새로운 시대, 미래를 꿈꾸는 평화 경제 도시 거제

2. 기본목표

- 스마트, 신·재생, 그린뉴딜 등 거제형 메가 뉴딜사업 추진
- 지역 기반 산업·경제 및 관광 활성화 등 산업 생태계 전환
- 시민 안전 및 복지 강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실현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블루오션 경제 뉴딜]

- 미래 산업 기반확충을 위한 광역 인프라 구축
 -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교통·물류 인프라 조성
 - 동남권 신공항 및 남부내륙철도 연계 산업 생태계 조성
- 국가 R&D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신성장 사업 육성
 - ICT 기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 추진
 - 지역자원을 활용한 해양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
 - 클린에너지 및 스마트 로컬 에너지 생산 인프라 구축
-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지역 기반 산업 육성
 - 공공일자리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질적 성장
 - 기업하기 좋은 조건 조성
 - 조선산업 위기 극복 및 도약
 - 소상공인을 위한 내수 경제 활성화
 - 전통 기반산업 생산체계 고도화 및 활성화

(2) 관광산업 다각화와 새로운 발돋움 [블루투어 관광 뉴딜]

-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확대 및 프로모션 다양화
 - 비대면 스마트 관광 서비스 기술 개발 및 보급
 - 매력 있는 관광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모션 다양화

● **포스트 코로나, 신관광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 기술기반형 ICT 관광 서비스 체계 구축
- 융복합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및 인프라 시설 건립
- 진해만권 통합관광벨트 조성

● **관광상품 다양화 및 치유형(웰니스)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 섬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기반 조성
- 지역 고유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평화(안보)관광 기반 조성
- 힐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림·생태 관광 기반 조성
- 즐기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 관광 기반 조성
- 미래지향적 관광산업 웰니스관광 육성

(3) 생활환경 재창조로 삶의 질 향상 [블루시티 도시 뉴딜]

● **ICT 기술 기반의 거제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안전 시스템의 변화
- 거제형 스마트 안전 시스템 구축
-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CPTED) 도시 구축
-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안심하는 도시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점검으로 위험요인 발굴 및 해소

● **정주 인프라 투자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도시재생 사업을 통한 뉴딜 도시 준비
-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체계 최적화 실현
- 100세 시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스마트케어 안심 복지체계 구축

● **시민주도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참여 행정 실현**

- 시민 편익 향상 및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SOC 중점 추진
- 시민 사회 참여 촉진 및 주민참여 정책 플랫폼 구축

- 청년 활력 제고와 사회·경제 참여 촉진
- 시민 중심 적극 행정 구현 및 정책 공유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남해안 지역 연계 관광시설 구축 및 관광사업 개발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자치단체 업무의 광역성으로 단독처리 곤란, 인적·물적자원 부족, 중복투자가 예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협력 분야 : 지역 간 공동 관심사에 대한 연계 관광 기반시설 확충, 연구용역, 박람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설명회 등

● 추진방향 및 전략

- 관광은 지역에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켜 숙박업, 음식점, 소매업 등을 활성화할 뿐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취업유발계수(*14, 한은/산업연구원) : 제조업 8.8, 서비스업 17.3, 관광산업 18.9

- 섬·해안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 개발 : 거제, 통영, 고성, 남해

● 세부 추진계획

- 남해안 일주관광 활성화 등 통합·연계형 지역발전 촉진
- 남해안 섬의 테마형 개발 및 연안 크루즈 사업 활성화

제4절 함안군

1. 비전 : 역사와 미래가 함께하는, GO 품격 함안

2. 기본목표

- 행복한 사람
- 유쾌한 문화
- 넉넉한 경제
- 편안한 공간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첨단산업화 추진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 첨단산업화 유도를 통한 관내 산업구조 개선
 - 산업단지의 AI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구축 및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산업으로의 업종전환 유도를 통한 미래 산업 체질 개선
 - 스마트 센서 응용산업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신성장산업 분야 육성·지원
 - 스마트공장 성공사례 노하우 전수·지원·컨설팅 지원
 - 천연가스복합발전소 등 공공 에너지 발전설비 유치 노력
- 신성장산업 전문 인력 육성 인프라 구축
 - 신성장산업 관련 스타트업 지원 및 창업 혁신타운 조성
 - 산업 클러스터 운영 및 지역혁신기관(대학, 연구소)과의 응용기술 R&D 추진을 통한 인력 육성 기반구축
 - 신성장산업 전문연구기관 유치 및 설립
 -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을 통해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산업 생태계 조성

(2) 농림축산업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농업용 로봇·자동화 분야 기반조성지원사업
 - 스마트팜을 위한 로봇·자동화 기반조성
 - 농작업 자동화 및 로봇화 R&D 및 관련 기업을 육성지원
 - 농업용 로봇 융합센터·테스트 베드 구축을 통해 로봇 보급사업 추진
- 스마트팜 보급 및 확대 지원사업

- 스마트팜 구축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진행 및 시설지원 추진
- 성공사례 공유 ·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술교육 지원 등 스마트팜 보급 노력

(3) 머물고 싶은 함안, 체류형 관광도시를 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여건 마련

● 문화 · 관광 복합단지 조성

- 아라가야 복원사업의 배후단지로 숙박 및 문화체험 보완 역할 수행
- 도시개발 사업 또는 토지 공공 매각 공모 등을 통한 관광 숙박시설 및 종합 의료시설 유치, 종합 도서관 설치 추진

● 말이산고분군 주변 '아라가야테마파크' 조성

- 세계 유네스코 등재 추진 중인 말이산고분군 주축 아라가야 유적 및 기타 역사자원 복원 · 정비와 아라가야 체험단지, 빛의 거리 조성 등 관광자원화를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주민소득과 함안군의 미래 관광 활로 개척 도모

● 관광네트워크 및 인프라 구축

- 멀티플렉스 조성, 걷고 싶은 길 10선 선정, 둘레길 조성, 관광지 안내판 설치, 주차장 확보, 시설보수, 관광시설 간 교통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향상 등 관광 인프라 조성

(4) 문화 · 교육환경 개선

● 군민의 문화 ·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아라가야 연계 복합문화관 조성, 체육시설 정비, 승마체험학교 조성 등을 통해 문화체험 및 체력단련 기회 제공

● 대도시와의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성화 교육환경 조성

- 전문화된 특화교육기관 유치 노력, 연령별 · 계층별 적성과 진로에 맞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창조적 지역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 군민역량 강화 도모
- 외국인을 위한 전문 교육 및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5) 도시 및 마을의 주거환경 개선

● 양질의 신규 주거공간 제공

- 행복주택 적극 유치 노력, 역세권 주변 신규 주거단지 조성 등 양질의 주거공간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

● 안전하고 쾌적한 함안 만들기

- 시가지 전선 지중화 사업, 공동주택단지 불량 공용시설물 보수사업 등 주거생활 환경정비 사업 지속적 추진
- 축산 악취 100% 제거 목표 달성을 위한 축산 악취 저감 시설 지원

(6)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함안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

- 경제적·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정책 숲 가꾸기, 숲길 조성 사업 추진
- 가로변 녹지관리 사업,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가로경관 향상
- 친환경이동수단 보급 사업(수소연료·전기차·전동킥보드) 추진
-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
- 수열 냉난방 및 재생열 하이브리드 시스템 연구개발 추진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추진

● 부족한 도심지 내 공원 확충을 통한 녹색 쉼터(도시 숲) 조성

- 유휴지 활용 생활환경 숲 조성, 전통마을 숲 복원, 역사문화테마공원 등 신규 공원 및 녹지 확보
- 입곡군립공원, 연꽃테마공원, 약양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의 지속적 관리
- 산업단지 등 정원이 부족한 곳에 실내정원(스마트가든볼) 설치

● 산림보존 시스템 구축

- 산림경영관리와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인 임도를 활용한 숲과 사람이 공존하는 테마림도 운영
- 자체 자동 산불방지 시스템 구축 및 화재 신속 대처 및 진압을 위한 드론 운영팀 구성
-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보호시설 설치

(7)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증대
 - 함안형(경상남도 군 모형) 복지 기준선 개발·적용
 - 복지제도 서비스 맵과 같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제도 접근성 향상
 - 육아 친화 인프라 구축 등 함안형 육아 친화 공동체 조성
 - 아동·청소년·다문화 아동 집중 힐링 프로그램 및 지원체계 구축
 - 출산/돌봄/의료/보육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한 아이 키우기 편한 함안 조성
- 취약계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돌봄 사회서비스 인큐베이팅, 취약계층 청년을 위한 일자리사업, 장애인 부모 협동조합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마련

(8) 누비기 편한 함안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

- 인근 대도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광역도로망 개선
 - 인접 대도시인 창원과 진주를 연결하는 노선 확충 및 정비
 - 통행 불편 및 교통혼잡 저감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추진
 - 함안군 남북 간선축, 동서 간선축, 내부 순환축 구축
- 광역환승체계 구축
 - KTX 함안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함안버스터미널과 통합하는 환승센터 설치
 - 대구산업선 연장 확정시 칠서산업단지 주변 지역 통합역사 유치 노력
 - 함안~창원간 버스노선 개편을 통한 BRT 환승노선 확보
 - 군북생활권, 가야생활권, 칠원생활권에 BTR 노선 기종점을 위한 환승시설 또는 터미널 설치

4. 연계·협력사업 과제발굴

(1) 남부내륙고속철도 연계 군북역·함안역 역세권 개발

- 경전선 KTX 역세권 신규 주거단지 조성

- 경상남도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하여 침체되어있는 함안·군북역세권 주거지 조성을 통해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첨단화에 따른 인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

(2) 역사자원 발굴 및 육성을 통한 글로벌 관광 거점 도시 조성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인 가야 말리산고분군 연계 관광 아이템 개발

- 말리산고분군 주축 아라가야 테마파크, 탐방로, 전시관 등 ‘아라가야 역사유적지구’ 조성을 통하여 유교문화 계승 발전 및 함안군의 미래 관광 활로 개척

(3) 세계 속의 스마트시티 함안 건설

● 관내 신규 주거단지 조성 시 최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주거단지 조성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적극 활용
- 5G/클라우드 기반 및 비대면 서비스 구축으로 사람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와 헬스케어 중점 주거단지 조성

● 국제스마트시티연합(UTA)에 가입 제안을 통해 참여 합의서 제출 추진

(4) 함안 국도 국지도 제5차 5개년 계획

● 신규 간선도로 개설 및 기존 간선도로 개선을 통한 인접 대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광역도로망 구축

- 2025년 목표로 가야~계티구간 국도30호선 우회로(L=5.3km) 신설, 칠원 무기~창원북면구간(L=8.4km) 4차로 신설 등 총 6건의 간선도로 개설 및 확장을 통한 광역도로망 구축

제5절 고성군

1. 비전 : 새로운 도약과 희망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

2. 기본목표

- 찾아오는 고성
- 살기 좋은 고성
- 풍요로운 고성

3. 발전 방향 및 추진전략

(1) 고성 미래 100년 기틀, 신성장 동력 확보 구축

- 남부해안권 연결지역으로서의 중심 역할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 인프라 구축, 맞춤형 교통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혜택 확대
- 경남 서부권 개발 및 남부내륙철도 구축에 대응한 체계적인 관광·산업 기반시설 및 수용태세 구축
- 청정 해양공간과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특화 산단 육성으로 미래대응 강화
-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신성장동력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관광산업·농업 등 산업의 다양화를 모색하고 이에 준하는 주거환경 및 문화·교육·의료 등 지원시설 확충

(2) 스마트 디지털 산업을 통한 항공과 조선해양산업의 新거점으로 도약

- 정부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이자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산업 기반 인프라 구축 및 육성
- 선박 노후화와 IMO(국제해사기구)의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선박수리 개조 수요 증가에 따른 선박수리 개조산업 클러스터 구축
- 선박 연료의 배출규제 강화로 친환경 연료 대체 전망에 따른 LNG 벙커링 신규시장 선점 및 클러스터 구축
-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기자재 생산, 특수선박 건조 등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으로 침체된 조선해양산업 경기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추진으로 저탄소 녹색 고성 조성

(3) 살맛 나고 경쟁력 있는 농산어촌 조성

-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양식, 스마트 축산을 통한 환경오염 최소화, 생산비 절감, 기능성 지역특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 신소득작물 재배기술 정립 및 선도, 농수산자원 활용을 통한 6차 산업화
- 농수축산물의 산지 유통 활성화 및 시장개척, 로컬 푸드시스템 구축, 관광지와 연계한 마케팅, 생산과 유통조직 규모화로 시장교섭력 강화, 수출 잠재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 소상공인·농업인에 대한 쇼핑몰 등을 통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으로 상생발전 도모

(4) 군민과 문화가 함께하는 체류형 문화·관광·체육도시 구현

- 건강·해양레저 중심 해양 웰니스산업 인프라 조성, 체류형 휴양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재 복원·정비사업 추진,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 공룡 테마의 Up-grade, 상괭이(소형 돌고래, 국제적 멸종 위기종)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란만 해역의 해양환경보전, 생태 관광자원 연계 및 지역특화 브랜드 개발을 통한 관광 활성화
- 친환경적인 하천 관리, 녹색공원 및 생태관광지 활용 등을 통한 고성의 녹색 자연과 전통 자원을 활용한 녹색 생태계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전국 및 세계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수요기반 맞춤형 스포츠시설 조성

(5)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

- 녹색공간 확대 등 자연 생태 구축 및 생태 환경적 산림자원 관리
- 역사와 추억, 자연이 하나 되는 생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친수공간 확보, 기후 등 환경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환경 관리체계 구축
-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및 시설물 정비와 친환경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환경 교통 시스템 구축
- 폐기물 및 오염물질 등 환경위해요인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재난위험지구의 구조적 및 비구조적 환경 관리체계 구축

(6)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교육·복지도시 구현

- 고성형 커뮤니티케어, 치매 특화산업, 중점 의료기관 육성, 인공지능 AI 보건소 등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 복지서비스 지원,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안심 보육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의 사회 통합기반 조성, 저출생 지원 확대 등 여성·가족친화 지역 환경 구축

- 청소년의 진로개발과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복합적 서비스 공간 확보 및 운영,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적자원개발 기반 확충
-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제공, 주민편의 증진과 생동감 있는 학습 환경 조성

(7) 지역 공동체 상생발전과 자치역량 강화

- 인구 유입 또는 정착을 위한 지원 서비스 확대 및 창구 일원화
- 경제성, 지리적 여건 등 입지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공공청사 배치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및 공간계획에 기반한 삶의 조화와 주민의 접근성 편의를 도모한 공간 확보
- 주민참여 확대, 소통 통로 활성화, 공공정보 적극 개방 및 공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발 및 지역 문제 해결
- 공공시설 무료와이파이 등을 통한 제로 에너지화 추진으로 주민 행복 배가 추진

4. 연계 · 협력사업

(1) 가야 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광 활성화

- 추진목표
 - 가야 유적 세계유산 등재로 문화재적 가치 향상
- 대 상 : 7개 고분군(경남 5, 경북 1, 전북 1)
 - 고성 송학동, 김해 대성동, 함안 말이산, 고령 지산동, 창녕 교동과 송현동, 합천 옥전,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 협력상황
 - 경상남도 5개 지자체(고성군, 김해시,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등재 추진
 - 전국 10개 지자체 가야 고분군 공동 등재 추진 MOU 체결(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고성군, 김해시, 함안군, 합천군, 창녕군, 고령군, 남원시)
- 향후계획
 - 가야 고분군 지자체(김해, 함안, 고성, 합천, 창녕) 협력 대응
 - 리플렛, 홍보부스, 홍보 영상물 등 홍보를 위한 공동디자인 제작 활용
 - 지역별 고분군의 특색을 담은 공동디자인 개발

- 세계유산 등재 연계 관광 상품화
 - 가야사 유적탐험과 연계한 내·외국인 탐방코스 및 투어버스 운영
 - 지역의 특색에 맞춘 맞춤형 패키지 여행상품 운영
- 지역별 특색 있는 가야 축제 운영
 - 관광 루트에 맞추어 계절별 특색 있는 고분테마 축제 개최

(2)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사업

● 추진목표

-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사 설치 예정지 주변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 대 상

- 5개 시·군(진주, 통영, 거제, 고성, 합천)

● 협력상황

- 시군별 개발 여건에 부합하는 특색 있는 개발사업 발굴·추진
- 경상남도, 5개 시·군 협정을 통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향후계획

- 남부내륙고속철도 역세권개발 실무협의회 개최
- 종합계약 방식으로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 지역별 특색 있는 개발사업 발굴 및 지역발전전략 설정
 - 역세권개발 기본계획 수립
- 지역별 특색 있는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
 - 관광, 지역개발, 교통 등

참여연구진 및 기획·행정지원

부문	세부 분야	연구진
연구단장		홍재우 원장
연구총괄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실무책임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비전 및 목표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전략 계획	공간구조 전략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박진호 박사(시군협력센터장) 이보람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미래 지향 혁신사회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남종석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박철민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장연주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공동체 기반 포용사회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하민지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김유현 박사(경영전략실장) 이연상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함께 누리는 균형사회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이문호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생명 존중 안전사회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농업(농산촌)	이문호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 연구위원)
부문별 계획	어업(어촌)	채동렬 박사(지속가능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지역산업	남종석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
	과학기술	박철민 박사(혁신성장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산업단지	마상열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민생경제	김유현 박사(경영전략실장)
	일자리	장연주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관광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문화	변철희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교통망	송기욱 박사(연구전략실장) 김근욱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항만·물류	박병주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장)
	스마트·정보인프라	박진호 박사(시군협력센터장) 김영순 박사(前, 경남연구원 전문위원)

부문	세부 분야	연구진
부문별 계획	주거	박진호 박사(시군협력센터장)
	도시재생	박진호 박사(시군협력센터장)
	스마트시티	박진호 박사(시군협력센터장)
	상하수도	이용곤 박사(지속가능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보건의료	이연상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사회복지	이연상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장)
	인구정책	심인선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여성가족	이혜진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교육	심인선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체육	김태영 박사(미래전략본부장)
	수자원	이용곤 박사(지속가능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토지이용	마상열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에너지·자원	박진호 박사(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환경문제·관리	박진호 박사(지속가능환경연구실장)
	경관계획	이보람 박사(스마트도시교통연구실 연구위원)
안전·방재	하경준 박사(연구전략부장)	
남북외교	이관후 박사(前,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계획의 집행 및 관리	행정계획	하민지 박사(포용협력사회연구실 연구위원)
	재정계획	박찬열 박사(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연구위원)
	투자·재원조달	김기수 박사(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정창용 박사(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 연구위원)

기획 및 행정지원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 장재혁 정책기획관
- 허 훈 정책개발담당 사무관
- 백종호 정책개발담당 주무관

